

발 간 등 록 번 호

12-1073500-000025-01

2020 연구보고서

접경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육성 및 남북교류 협력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or
Balanced Development of
Border Area



제 출 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접경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육성 및 남북교류 협력방안 연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2월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노 규 성

<목 차>

I. 연구의 개요 ____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9
1.1 연구의 배경	3	2.1 연구 범위	9
1.2 연구의 목적	7	2.2 연구 방법	9
		2.3 추진 경위	10
		2.4 기타	11

II. 접경 지역 특화 산업 기초조사 ____ 13

1. 접경 지역 일반 현황	15	3. 접경 지역 관련 정책·사업 현황	89
1.1 자연·지리 현황	15	3.1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및 추진사업	89
1.2 인문·사회 현황	25	3.2 지자체 차원의 정책 및 추진사업	99
2. 접경 지역 산업 현황	51	4. 접경 지역 군특회계	132
2.1 사업체 현황	51	4.1 연도별 군특회계 규모	132
2.2 종사자 현황	60	4.2 접경 지역 군특회계 분석	133
2.3 연구개발 역량 및 조직 현황	68	5. 접경 지역 균형 발전 시사점	134
2.4 산업구조	76	5.1 접경 지역 기본 현황 분석 결과 요약	134
		5.2 접경 지역 균형 발전 시사점	145

III. 접경 지역 중점육성 특화 산업 도출 ____ 149

1. 스마트 6차산업 분야	151	2.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분야	219
1.1 특화 산업 후보 도출 및 선정 방법	151	2.1 개요	219
1.2 STEEP PLUS 분석	156	2.2 접경 지역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특화 산업 후보(안)	221
1.3 특화 산업 평가 및 선정	161	2.3 접경 지역 제조업 현황 및 기초자료 분석	239
1.4 스마트 6차산업분야 세부사업 추진 방안	172	2.4 접경 지역 시·군의 제조업 현황 및 육성정책	263
1.5 지방 이전 추천 대상의 수도권 공공 기관	213	2.5 워킹그룹 자문회의	279
		2.6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분야 특화 산업 세부사업 추진 방안	280

<목 차>

3.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분야	338	4. 미래 관광 산업 분야	412
3.1 연구개요	338	4.1 개요	412
3.2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환경분석	340	4.2 접경 지역 관광 산업 현황 분석	417
3.3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인터뷰/간담회 ..	365	4.3 관광 분야 특화 산업 도출	433
3.4 정부/지자체 섬유패션 관련 사업추진 현황	370	4.4 접경 지역 관광 분야 특화 산업 실행 방안	439
3.5 특화 산업/사업 선정 및 전략	375		
3.6 특화사업 추진 계획	380		
3.7 남북협력 사업 방안	403		
3.8 결론 및 정책제언	409		

IV. 특화 산업 연계 남북교류 협력사업 ____ 491

1. 남북교류 협력 현황	493	3. 특화 산업 연계 남북교류 협력 단계별 추진 방안	516
1.1 남북교류 협력의 개관	493	3.1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516
1.2 남북교류 협력 관련 법제	498	3.2 스마트 6차산업	529
2. 북한 수용성 분석	502	3.3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541
2.1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정책	502	3.4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547
2.2 북한의 경제개발구	508	3.5 미래 관광 산업	555
2.3 북한 투자 유망 분야와 북한의 수요 ..	513		

V. 접경 지역 법·제도 규제 개선방안 ____ 565

1. 접경 지역 규제현황	567	3. 접경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607
1.1 개요	567	3.1 필요성	607
1.2 접경 지역 규제 관련 상위 법령 검토 ..	577	3.2 기본방향	607
2. 특화 산업별 예상 규제	595	3.3 특화 산업 적용 핵심규제 개선방안 ..	610
2.1 스마트 6차산업 예상 규제	596	3.4 특화 산업별 규제 개선방안	621
2.2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예상 규제 ..	598		
2.3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예상 규제 ..	601		
2.4 미래 관광 산업 예상 규제	602		

<목 차>

Ⅵ. 접경 지역 시·군별 특화 산업 ____ 635

1. 개요	637	2.5 파주시	670
1.1 접경 지역 특화 산업의		2.6 양주시	676
분야별 세부추진사업	637	2.7 포천시	686
1.2 접경 지역 특화 산업의		2.8 동두천시	694
시·군별 세부추진사업	639	2.9 연천군	697
2. 시·군별 특화 산업		2.10 춘천시	703
역점 추진사업(안)	641	2.11 화천군	707
2.1 옹진군	641	2.12 철원군	712
2.2 강화군	648	2.13 인제군	716
2.3 김포시	658	2.14 양구군	720
2.4 고양시	665	2.15 고성군	726

Ⅶ. 결론 ____ 731

1. 연구결과	733	2.6 접경 지역 6대 핵심추진 특화사업	
2. 연구결과 제언	740	제언	744
2.1 TOWS 분석	740	2.7 특화 산업 연계 남북교류 협력사업	
2.2 TOWS 분석 기반 대응 전략	740	활성화 방안	752
2.3 추진 전략	741	2.8 접경 지역 법·제도 규제 개선방안	755
2.4 비전 설정	741	3. 연구의 한계	758
2.5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	742		

참고문헌 ____ 759

<표 차례>

<표 I -1> 정부의 접경 지역 관련 정책	5
--------------------------	---

<표 II -1> 접경 지역 면적 현황	16
<표 II -2> 접경 지역 토지이용 현황	18
<표 II -3> 접경 지역 국토 환경성 평가 결과	19
<표 II -4> 접경 지역 도로 현황	21
<표 II -5> 접경 지역 도로 포장률	22
<표 II -6> 접경 지역 광역·도시교통체계 현황	23
<표 II -7> 접경 지역 인구 현황	27
<표 II -8> 접경 지역 생산가능 인구 현황	30
<표 II -9> 접경 지역 고령 인구비율	32
<표 II -10> 접경 지역 GRDP 현황	35
<표 II -11> 접경 지역 재정자립도	38
<표 II -12> 지역발전지수 구성지표	40
<표 II -13> 시·군 지역발전지수 진단결과	42
<표 II -14> 균형 발전지표 구성	46
<표 II -15> 접경 지역 균형 발전지표 진단결과	47
<표 II -16> 접경 지역 사업체 수 현황	53
<표 II -17> 접경 지역 규모별 사업체 수 현황	56
<표 II -18> 접경 지역 종사자 현황	62
<표 II -19> 접경 지역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현황	65
<표 II -20> 시·도 접경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	69

<표 II -21> 시·도 접경 지역 연구개발 수행조직 현황	73
<표 II -22> 시·군 접경 지역 대학교 및 기업부설 연구조직 현황	75
<표 II -23> 접경 지역 산업별 GRDP 현황	84
<표 II -24> GRDP 기준 접경 지역별 상위산업과 비교우위	87
<표 II -25> 접경 지역 발전종합계획 투자 규모 변경	96
<표 II -26> 접경 지역 발전종합계획 전략별·시·도별 투자계획	96
<표 II -27> 인천시 접경 지역 생활권 발전전략과 세부내용	104
<표 II -28> 경기 북부 거점도시별 발전 방향과 주요 전략	109
<표 II -29> 경기 북부 권역별 산업특화전략	111
<표 II -30> 강원도 접경 지역 발전 방향	123
<표 II -31> 지자체 접경지 관련 중점추진사업	129
<표 II -32> 연도별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	132
<표 II -33> 접경 지역 군특회계 규모	132

<표 III -1> 경기도 접경 지역의 업종별 집적도 (제조업, 정보통신업)	226
<표 III -2>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특화 산업 및 사업 후보 검토 리스트	228
<표 III -3> 특화 산업 후보(안) 및 세부실행사업	230
<표 III -4>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특화 산업 우선순위 평가항목 및 분석 내용	231
<표 III -5>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특화 산업 후보(안) 우선순위 평가	232
<표 III -6>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특화 산업 혁신역량 평가항목 및 분석 내용	232
<표 III -7>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특화 산업 후보(안) 혁신역량 평가	233
<표 III -8>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분야 특화 산업 요약	234

<표 III -9> 시·군별 제조업 사업체 현황 (2017년 기준)	240
<표 III -10> 시·군별 제조업 종사자 현황 (2017년 기준)	241
<표 III -11> 시·군별 제조업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241
<표 III -12> 접경 지역 시·군별 제조업 현황 (종사자 기준)	242
<표 III -13> 경기도 접경 지역 시·군별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	243
<표 III -14> 시·군별 전산업 대비 업종별 종사자 수 비중	244
<표 III -15> 종사자 수 기준으로 본 시·군별 제조업의 주요산업 현황	245
<표 III -16> 제조업 외 산업 현황	245

<표 차례>

<표 III-17> 접경 지역 산업단지 현황 —————	246	<표 III-39> 경기 북부 접경 지역 시·군 인구 추이 —	353
<표 III-18> 접경 지역 농공단지 현황 —————	246	<표 III-40> 섬유 가공 염색업종 노동실태 현황 —	357
<표 III-19>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예시) ———	251	<표 III-41> 지역혁신역량 평가항목 및 내용 ———	361
<표 III-20> 주요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추진 방향 —	251	<표 III-42> 정부/지자체 섬유패션 관련 정책 ———	370
<표 III-21> 첨단소재부품 세부업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266	<표 III-43> 특화 산업/사업 선정이유 및 역량 ———	379
<표 III-22> 지능형 기계 세부업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267	<표 III-44> 챌린지 센터 구성안 —————	388
<표 III-23> 전기자동차 세부업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268	<표 III-45> 미래 관광 산업 분야 STEEP + 분석 내용 —————	414
<표 III-24>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워킹그룹 자문회의 요약 —————	280	<표 III-46> 연도별 대한민국 관광수지 —————	419
<표 III-25> 국내 만화산업 현황 —————	282	<표 III-47> 접경 지역 시·군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수 —————	420
<표 III-26> 세계 극장 애니메이션산업 규모 및 전망 (2013~2022) —————	285	<표 III-48> 접경 지역 관광지별 관광객 수 ———	420
<표 III-27>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지원사업 예산 현황 —————	286	<표 III-49> 접경 지역 도시교통체계 —————	422
<표 III-28> 방송영상물제작업 매출액 현황 ———	288	<표 III-50> 접경 지역 주요 역사 자원 현황 ———	424
<표 III-29>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제조업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292	<표 III-51> 접경 지역 시·도별 문화자원 현황 ———	425
<표 III-30> 역대 정부의 신성장 동력 산업 변화 —	293	<표 III-52> 접경 지역 농촌 마을 현황 —————	426
<표 III-31> 국내 중소형 전기상용차 개발·생산 현황 —————	294	<표 III-53> 접경 지역 관광 사업체 현황 ———	427
<표 III-32> 국내 전체 드론 제조 시장규모 및 전망 —————	299	<표 III-54> 접경 지역 내 관광 명소 현황 ———	428
<표 III-33> 소재·부품·장비 對日 교역 추이 ———	326	<표 III-55> 접경 지역 여행상품 —————	429
<표 III-34> 전력자원체계 분류표 —————	334	<표 III-56> 접경 지역 축제 —————	430
<표 III-35> 방산 중소기업의 GVC 주요 지원 필요분야 —————	336	<표 III-57> 지역특산물 현황 —————	432
<표 III-36> 섬유 패션 산업 업체 수, 고용, 생산 현황 —————	341	<표 III-58> 접경 지역 관광 분야 2대 산업 ———	436
<표 III-37> 섬유패션 업체 현황 —————	341	<표 III-59> 접경 지역 관광 분야 2대 산업 ———	436
<표 III-38> Fast fashion 의류업체 기획시스템 비교 —————	348	<표 III-60> 지리산 방문의 주요 관광지와 주요축제 및 7품 7미 —————	442
		<표 III-61>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현황 ———	447
		<표 III-62> 통일거점센터 운영방식 비교 ———	448
		<표 III-63> 유형별 웰니스 관광 —————	462
		<표 III-64> 요양병원 인력 기준 —————	471
		<표 III-65> 요양병원 증가 현황 —————	471
		<표 III-66> 노인요양시설 증가 현황 —————	472
		<표 III-67> 2019년 내수면 마리아 최종 후보지 선정 내역 —————	485

<표 IV-1> 남북교류 협력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 —————	496	<표 IV-5> 2012~2013년 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 산업 관련 기사 —————	506
<표 IV-2> 지방자치단체 주요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사례 —————	497	<표 IV-6> 북한 경제개발구별 투자 희망액 및 유치 희망업종 —————	510
<표 IV-3> 지방자치단체별 남북교류 협력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501	<표 IV-7> 북한 경제개발 구법의 주요 내용 ———	512
<표 IV-4> 광역시도별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	501	<표 IV-8> 북한의 지역별 산업배치(안) —————	515
		<표 IV-9> 북한 신년사 수산 관련 내용 —————	530

<표 차례>

〈표 IV-10〉 농수산식품산업 남북교류 협력 3단계 로드맵	539
〈표 IV-11〉 제조업 남북교류 협력 3단계 로드맵	546
〈표 IV-12〉 섬유 패션 산업 남북교류 협력 3단계 로드맵	553

〈표 IV-13〉 생태·해양 관광 산업의 남북교류 협력 3단계 로드맵	562
---	-----

〈표 V-1〉 접경 지역 토지이용 용도별 규제현황	570
〈표 V-2〉 전국 주한미군 공여 구역 현황	573
〈표 V-3〉 국방개혁 2.0 추진과제 현황	574
〈표 V-4〉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내용	578
〈표 V-5〉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별 규제현황	580
〈표 V-6〉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581
〈표 V-7〉 수도권 공장입지 행위 제한 현황	593
〈표 V-8〉 접경 지역 특화 산업별 예상 규제 종합	595
〈표 V-9〉 웅진군 중첩규제 현황	597

〈표 V-10〉 웅진군 규제현황	598
〈표 V-11〉 제조업 특화 산업 접경 지역 시·군의 토지규제현황	600
〈표 V-12〉 접경 지역 15개 시·군 군사 관련 규제 지정 현황	604
〈표 V-13〉 관광 분야 특화 산업 주요 규제 분야별 규제내용	606
〈표 V-14〉 반환 공여 구역 지원 관련 특별법 비교	618
〈표 V-15〉 양구군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632

〈표 VI-1〉 분야별 특화 산업의 세부추진사업	638
〈표 VI-2〉 접경 지역 시·군별 특화 산업	639
〈표 VI-3〉 남북호시무역산업단지 사업 예산	653
〈표 VI-4〉 김포시 상용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660
〈표 VI-5〉 김포시 제조업 상위 10개 주력업종	664
〈표 VI-6〉 김포시 ICT 융복합 로봇·공장자동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664
〈표 VI-7〉 방송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666
〈표 VI-8〉 AI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668
〈표 VI-9〉 반력동물 6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672
〈표 VI-10〉 만화/애니메이션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674
〈표 VI-11〉 K-뷰티 테크노파크 건립사업 예산	683
〈표 VI-12〉 드론 클러스터 조성사업	690
〈표 VI-13〉 가구 디자인/마케팅 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산	692

〈표 VI-14〉 동두천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696
〈표 VI-15〉 군 구매요구서와 시중품 사양서 비교	699
〈표 VI-16〉 연천-철원-화천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700
〈표 VI-17〉 군 구매요구서와 시중품 사양서 비교	709
〈표 VI-18〉 연천-철원-화천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710
〈표 VI-19〉 군 구매요구서와 시중품 사양서 비교	714
〈표 VI-20〉 연천-철원-화천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716
〈표 VI-21〉 군 구매요구서와 시중품 사양서 비교	722
〈표 VI-22〉 양구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724
〈표 VI-23〉 고성 해양바이오 벤처창업 보육센터 건립사업 예산	730

〈표 VII-1〉 접경 지역 시군별 특화사업	735
--------------------------	-----

〈표 VII-2〉 접경 지역 6대 핵심추진 특화사업	744
------------------------------	-----

<그림 차례>

<그림 I-1> 북한 경제특구·개발구 현황 ————— 6

<그림 I-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3개 경제벨트 — 6

<그림 II-1> 접경 지역 일원의 지형 구분 ————— 15

<그림 II-2> 접경 지역 범위 및 면적 ————— 17

<그림 II-3> 접경 지역 일원의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 ————— 20

<그림 II-4> 접경 지역 철도 및 고속도로 현황 — 20

<그림 II-5> 접경 지역 인구변화 추이 ————— 26

<그림 II-6> 접경 지역 고령 인구비율 추이 — 33

<그림 II-7> 접경 지역 GRDP 성장 추이 ————— 36

<그림 II-8> 접경 지역 재정자립도 비교 ————— 39

<그림 II-9> 생활 서비스지수 접경 지역 분포변화 — 44

<그림 II-10> 삶의 여유 공간지수 접경 지역
분포변화 ————— 44

<그림 II-11> 시·군 접경 지역 소멸 위험지수 현황 — 49

<그림 II-12> 접경 지역 사업체 수 변화 추이 — 53

<그림 II-13> 접경 지역 규모별 사업체 수 구성비 — 58

<그림 II-14> 접경 지역 종사자 수 변화 추이 — 63

<그림 II-15> 접경 지역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구성비 ————— 67

<그림 II-16>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와
지역 소득수준에 따른 시·도 접경 지역 유형 — 71

<그림 II-17> 대륙연결형·개방형 국토 구상 — 94

<그림 II-18> 인천광역시 8대 전략산업 — 100

<그림 II-19> 인천시 공간구조 발전축 — 103

<그림 II-20> 경기 북부 권역별 발전 방향 — 109

<그림 II-21> 경기 북부 지역산업 육성방안 — 111

<그림 II-22> 강원도 미래 권역별 산업입지 — 117

<그림 II-23> 강원도 DMZ·접경 지역권
주요 사업구상도 ————— 123

<그림 II-24> 지자체 접경 지역 관련
이슈산업 정리 ————— 131

<그림 II-25> 접경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반한
교류 협력 활성화 단계 ————— 146

<그림 III-1> 접경 지역 스마트 6차산업분야
육성 전략 구상도 ————— 151

<그림 III-2> STEEP PLUS 활용 특화 산업 및
사업 선정절차도 ————— 155

<그림 III-3> 접경 지역 특화작물 배치도 — 159

<그림 III-4> 상주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례 — 184

<그림 III-5> 구례 자연 드림파크 — 187

<그림 III-6> 자연드림 친환경 채소단지 — 187

<그림 III-7> 완주로컬푸드 가공센터 — 188

<그림 III-8>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특화 산업
후보(안) 도출 프로세스 ————— 221

<그림 III-9> 접경 지역 제조업 분포 — 222

<그림 III-10> 접경 지역 제조업 종사자 현황 — 222

<그림 III-11> 접경 지역 제조업 사업체 현황 — 223

<그림 III-12> 경기도 접경 지역 제조업
벤처기업 현황 ————— 224

<그림 III-13> 경기도 접경 지역 제조업체
연구소 현황 ————— 225

<그림 III-14> 경기도 접경 지역 제조업체
특허출원/등록 현황 ————— 225

<그림 III-15> 경기도 접경 지역의 업종별 집적도
(제조업, 정보통신업) ————— 227

<그림 III-16> STEEP PLUS & 혁신역량 평가
종합 ————— 234

<그림 III-17> 정부 신산업 정책 흐름 — 249

<그림 III-18> 12대 신산업 분야 — 250

<그림 III-19> 김포시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 — 264

<그림 III-20> 김포시 5대 대표산업 — 265

<그림 III-21> 김포시 5대 대표산업 경쟁력 — 265

<그림 III-22> 첨단소재부품 세부업종
경쟁력 수준 분석 ————— 266

<그림 III-23> 지능형 기계 세부업종
경쟁력 수준 분석 ————— 267

<그림 III-24> 전기자동차 세부업종
경쟁력 수준 분석 ————— 268

<그림 III-25> 고양시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 — 269

<그림 III-26> 파주시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 — 271

<그림 III-27> 양주시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 — 273

<그림 III-28> 포천시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 — 275

<그림 III-29> 동두천시 주요 제조업 종사자 수 — 277

<그림 차례>

<그림 III-30> 춘천시 주요 제조업 종사자 수	278	<그림 III-67>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사례	350
<그림 III-31> 소양강댐 수열 에너지 발생 개념도	279	<그림 III-68>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UN 패션업계 현장	351
<그림 III-32> 세계 만화산업 규모 및 성장률 (2013~2022)	281	<그림 III-69> G7 Fashion Pact	351
<그림 III-33> 4차 산업혁명과 산업의 변화	291	<그림 III-70> 지속 가능 패션의 주요 목표	352
<그림 III-34> 국내 시판 전기버스 브랜드	296	<그림 III-71> 2017년 경기도 노령인구 비율	353
<그림 III-35> 드론의 용도별 분류	296	<그림 III-72> 세계 유일의 단납기 니트원단 공급시스템	355
<그림 III-36> 글로벌 드론 시장 성장 전망	298	<그림 III-73> 섬유 패션 산업 비중	357
<그림 III-37>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산업 시장	299	<그림 III-74> 섬유 패션 산업 발전비전	371
<그림 III-38> 바이오산업체의 소재지별 분포	301	<그림 III-75> 경기도 섬유산업 비전	373
<그림 III-39> 롯데월드타워 수열 에너지 활용사례	302	<그림 III-76> 특화 산업/사업 선정 모형	375
<그림 III-40> 스마트공장의 수준별 단계	304	<그림 III-77> 혁신클러스터 단계별 추진내용	382
<그림 III-41> 스마트공장화 제조혁신	305	<그림 III-78> 글로벌 섬유 가죽패션산업 특구계획	383
<그림 III-42> 지역별 이모빌리티 산업 동향	309	<그림 III-79> 경기 북부 섬유 패션 산업 발전계획	383
<그림 III-43> 소양강댐 수자원 활용방안	311	<그림 III-80> 한반도 섬유패션 시장	386
<그림 III-44> 소양강댐 수열 에너지 발생 현황	312	<그림 III-81> 챌린지 센터 구성안	388
<그림 III-45>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전망	312	<그림 III-82> 혁신공장 단계별 추진내용	391
<그림 III-46> 국내 데이터 센터 분포현황	313	<그림 III-83> 신소재 개발·연구 지원사업 단계별 추진내용	395
<그림 III-47>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 추진 현황	313	<그림 III-84> 재생 PET 플레이크 생산 시스템	398
<그림 III-48> 안산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	315	<그림 III-85> 재생 PET 칩 생산 시스템	398
<그림 III-49> 업종별 자체 조달 수준	327	<그림 III-86> PET병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률	399
<그림 III-50> 목재 가구 제조업 매출액 추이	330	<그림 III-87> 재활용 쓰레기 감축 목표	399
<그림 III-51> 방위산업 생산, 수출, 고용 현황	335	<그림 III-88> 환편기 자동 실연결장치 및 회전속도 증대사업	401
<그림 III-52> 섬유패션 특화 산업 도출모형	338	<그림 III-89> 가죽상품화지원센터 부지	402
<그림 III-53> 섬유·의류·신발산업 지역별 현황	342	<그림 III-90>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 벨트 주요 프로젝트	404
<그림 III-54> 섬유 패션 산업(5인 이상) 부족 인원 및 인력 부족률 추이	342	<그림 III-91> 경의축 및 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방향	405
<그림 III-55> 섬유패션 산업 연령별 종사자 비중	343	<그림 III-92>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남북협력 발전 모형	406
<그림 III-56> 섬유 소재 주요 국가별 기술 수준 비교	344	<그림 III-93> 관광 산업 분야 특화 산업 도출모형	413
<그림 III-57> 한국 섬유 패션 산업의 발전 방향	344	<그림 III-94> 시·도 대비 접경 지역 1일 여객통행량	417
<그림 III-58> 섬유 패션 산업 주요 국가별 해외투자 추이	345	<그림 III-95> 시·도 대비 접경 지역 인구 1인당 여객통행량	418
<그림 III-59> 종사자 규모별 업체 수 추이	346	<그림 III-96> 접경 지역별 인구 1인당 여객통행량	418
<그림 III-60>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수 추이	346	<그림 III-97> 운송회사를 통한 배낭 운송서비스	444
<그림 III-61> 국내설비투자 추이	346	<그림 III-98> 호버크래프트	474
<그림 III-62> 해외투자 추이	346	<그림 III-99> 설악-금강 국제관광 자유 지대 구상도	477
<그림 III-63> 섬유 패션 산업 침체 악순환	346	<그림 III-100> 홍성군 천수만 해상 낚시체험공원	487
<그림 III-64>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인력 보유현황	347		
<그림 III-65>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인력 채용계획	347		
<그림 III-66> 주요 슈퍼 섬유 현황	349		

<그림 차례>

〈그림 IV-1〉 남북교류 협력의 패러다임 변화 — 495	〈그림 IV-8〉 접경 지역 남북교류 협력 단계별 추진과제 — 524
〈그림 IV-2〉 남북한 경제지표 비교 — 502	〈그림 IV-9〉 남북협력 비즈니스 모형의 형태와 해당 사례 — 525
〈그림 IV-3〉 남북한 국내총생산·국민총소득(명목) 비교 — 503	〈그림 IV-10〉 북한과 중국 간 호시무역구 설치 지역 — 527
〈그림 IV-4〉 북한의 27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509	〈그림 IV-11〉 남북 해상 접경 지역 호시무역 — 528
〈그림 IV-5〉 접경 지역 경쟁력 기반의 남북교류 협력 목표 — 517	〈그림 IV-12〉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감도(예시) — 532
〈그림 IV-6〉 접경 지역 남북교류 광역협의회 구상 — 520	〈그림 IV-13〉 마합도(우뭇가사리 군락지) — 533
〈그림 IV-7〉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모형도 — 521	〈그림 IV-14〉 강령 국제녹색 시범구 — 534
	〈그림 IV-15〉 남북협력을 통한 해조류 산업 기대 효과 — 541
•	
〈그림 V-1〉 접경 지역과 국경 개방 수준 — 567	〈그림 V-6〉 제조업 특화 산업 접경 지역 중복규제 현황 — 601
〈그림 V-2〉 접경 지역, 민간인통제선,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법적 도식도 — 568	〈그림 V-7〉 관광 분야 특화 산업 규제 관련 토지이용규제 현황 — 605
〈그림 V-3〉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구분 — 572	〈그림 V-8〉 규제 샌드박스 유형별 내용과 절차 — 611
〈그림 V-4〉 군사규제 지정 범위 — 584	〈그림 V-9〉 4차 산업혁명의 특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방향성 — 612
〈그림 V-5〉 제조업 특화 산업 주요 대상 지역의 규제 적용 현황 — 599	
•	
〈그림 VI-1〉 강화군 지역특산물 16종 — 649	〈그림 VI-4〉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감도 — 671
〈그림 VI-2〉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 경제벨트 — 651	〈그림 VI-5〉 양주시의 농특산물 44종 — 677
〈그림 VI-3〉 서해평화고속도로 구상도 — 652	〈그림 VI-6〉 연천군의 농특산물 25종 — 697
•	
〈그림 VII-1〉 접경 지역 권역별 특화 산업 — 734	〈그림 VII-3〉 접경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균형 발전 장기 비전 체계도 — 742
〈그림 VII-2〉 접경 지역 특화 산업 — 735	

I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 접경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시책 필요

-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15개 접경 지역 시·군은 수도권에서 근접하고, 산업·생태 환경적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및 체계적인 산업정책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낙후
-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의 본격 진행, 국방 2.0 개혁정책으로 인한 환경변화 등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경 지역 특화 산업 육성 필요성이 큼



● 남북평화교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실질적인 접경 지역 발전 전략 도출

-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남북경제 협력과 접경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2017), ‘평화경제특구’ 추진(2018), ‘남북접경위원회’ 제안(2019) 등 지속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 비전과 추진 정책에 맞춘 접경 지역의 산업적 구상의 구체화와 비전의 방향성 정립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정부는 접경 지역 발전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2011년 접경 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및 접경 지역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국내외 정세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법 개정 및 변경 계획을 수립. 2019년 2월 변경된 접경 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 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을 내세워 ‘지역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2가지를 중점적으로 변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맞춤형 산업발전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고, 이를 산업적 시각에서 접경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남북교류 협력 방안을 집중적이고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함.
- 본 연구와 기존 접경 지역 및 남북교류 관련 연구와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음. 첫째,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남북평화교류 비전과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뒷받침하고자하는 방향성은 동일함.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남북교류와 접경 지역 전체에 중점을 두어 다소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본 연구는 분권화 시대에 발맞추어 접경 지역 전체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산업발전전략까지 꼼꼼히 다루고자 함. 두 번째, 기존의 연구 및 정책들은 정부 부처 중심으로 접근하여 지자체의 실정이 섬세하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연구기간 동안 긴밀하게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생생한 수요를 반영해보고자 함. 결과적으로 접경 지역의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남북교류 협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내실있고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보탬이 되고자 함.

〈표 I -1〉 정부의 접경 지역 관련 정책

	주요 내용
한반도 신경제 (베를린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7. 6일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천명 과거 추진했던, 또는 추진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남북협력사업에 재차 추진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철도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 공동체로 발전
통일경제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8. 15일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통일경제특구' 조성 제기 통일경제특구 법안 접경 지역 6명 의원 대표 발의, 국회 심사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강원도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 지역, 중소기업의 획기적 발전 기회 - 전국적으로 약 9조 원의 생산유발, 약 7만 명의 고용 창출효과 기대(경기연구원)
남북접경위원회 (오슬로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6. 12일 대통령은 오슬로포럼기조연설에서 '남북접경위원회' 설치 제안 평화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를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설치된 ‘접경위원회’ 협력 좋은 사례” ◦ (화재, 홍수, 산사태나 전염병, 병충해, 수자원 오염 문제에 공동 대처)
접경 지역발전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접경 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 2019. 2월에 '접경 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 2030년까지 13.2조 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년간('11~'18년) 2.8조 원 투자 - 4대 전략, 10대 과제 추진 계획 -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 생활 SOC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 - 균형 발전 기반 구축 -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 자료: 1) 청와대 홈페이지(<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57>)

2) 머니투데이, 2018.08.19.

3) 아주경제, 2019.06.12.

4) 행안부, 접경 지역발전종합계획(2011), 접경 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2019.1.23.)

●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남한의 평화경제특구 연계 방안 모색

- 북한은 27개 경제개발구를 지정
- 기존 5개 + 김정은 시대('13년~현재) 22개 지정
- 남북접경 지역권
 - 서쪽 개성-강령 축: 제조업, 친환경 농수산업, 에너지
 - 동쪽 금강산-원산(원산, 갈마, 현동) - 신평 축: 관광, 제조업 등

〈그림 1-1〉 북한 경제특구·개발구 현황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뉴시스 보도자료 재인용)

●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3개 경제벨트에 접경 지역 포함

- 환서해경제벨트는 인천, 강화, 김포, 고양, 파주 등이 포함되며, 환동해경제벨트에 고성, 접경 지역 경제벨트에는 15개 접경 지역 시·군 모두가 해당됨

〈그림 1-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3개 경제벨트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뉴시스 보도자료 재인용)

● **접경 지역 균형 발전 공동연구위원회 발족**

- 접경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 3개 광역지자체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이상 경기도), 춘천·철원·화천·양주·인제·고성(이상 강원도), 용진·강화(이상 인천광역시) 등 접경 지역 15개 기초지자체,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 강원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접경 지역 균형 발전 공동연구위원회’가 공식 출범함(’19.4.26)

1.2 연구의 목적

● **접경 지역의 지역 불균형 해소**

- 접경 지역은 군사적·환경적·지리적 요인 등에 의한 과도한 규제와 취약한 인프라로 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가 타지역에 비해 어려운 여건임



● 국가 균형 발전의 3대 가치 실현에 필요한 접경 지역 특화 산업육성방안 수립

- 본 연구는 분권, 혁신, 포용 등 국가 균형 발전 3대 가치 실현을 위한 접경 지역 특화 산업발굴 및 육성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함
 - 접경 지역 특화 산업육성방안 수립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공간)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등 국가 균형 발전 3대 전략의 지역산업 혁신 전략 실현과도 관련됨
- 본 연구는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현안 도출 및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 접경 지역 주요 현안은 산업 육성, 남북교류 협력, 법 제도적 규제 및 기타 지역별 현안으로 나누어지며, 각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수립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구분	주요 현안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 발굴육성 ◦ 정부의 산업정책, 균형 발전정책에 따른 특화 산업 발굴 ◦ 국내외 경제·산업환경변화를 반영한 미래산업 발굴
남북교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 활성화가 전제조건 ◦ 평화경제 특구법 등 관련 법 제정 필요 ◦ 접경 지역 시·군의 중복성문제 <p>* 평화경제특구 포천/연천/철원, 파주, 김포, 고성 추진 계획 수립</p>
법 제도적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옹진군 지역을 제외한 접경 지역 시·군은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지역 ◦ 대부분의 접경 지역 시·군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대상 지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천, 양구, 화천, 인제, 고성 등 낙후지역과 양주, 동두천, 포천, 고양, 일산, 김포 등 산업도시 지역의 차별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지역별 맞춤형 특화 산업육성방안 수립 필요

2 연구 범위 및 방법

2.1 연구 범위

- 본 연구는 특화 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수립, 발굴된 특화 산업과 연계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방안 수립, 접경 지역 특화 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사항 검토 등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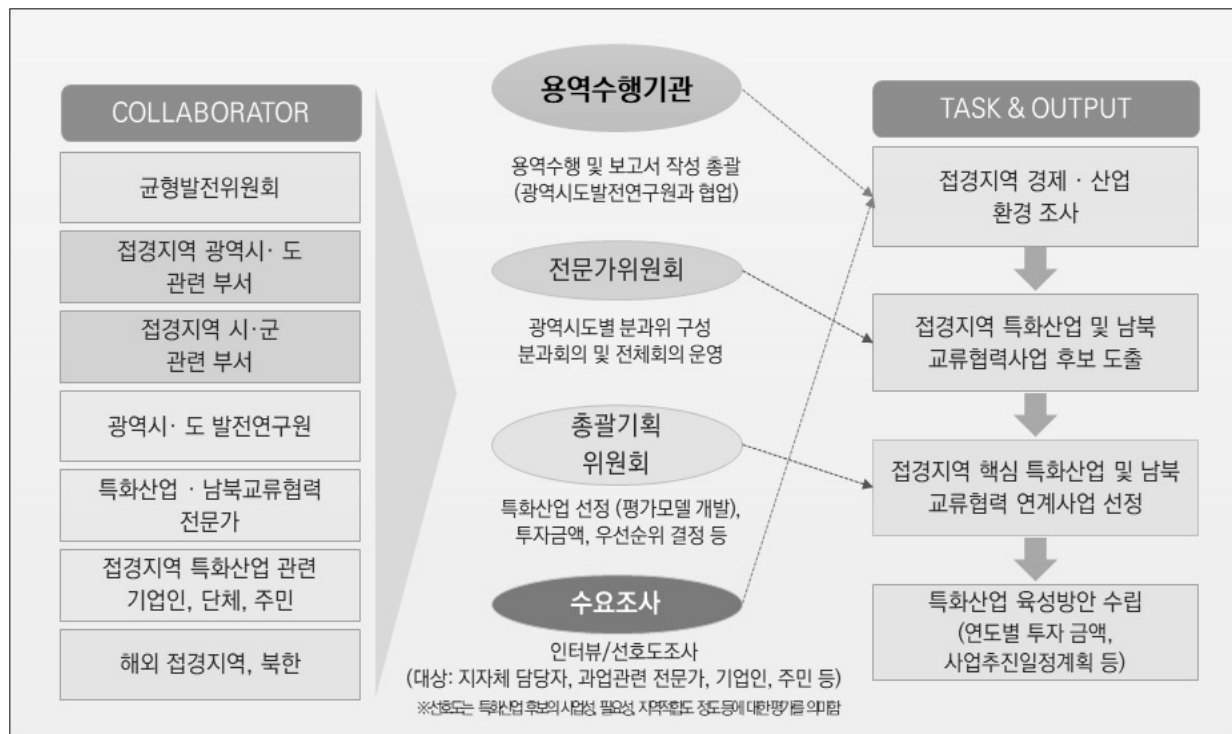
* 본연구의 주제는 접경 지역 특화 산업 육성방안 수립이지만, 접경 지역의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북한 관련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연구 범위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분야를 포함하였음.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현을 전제로 하여 연구한 결과임. 또한, 법 제도적 사항에 관한 연구도 접경 지역 개발추진에서 중요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 범위에 포함하였음을 밝혀 둠.

- 특화 산업 발굴 및 산업육성방안 수립
 - 향후 접경 지역 지자체의 예산사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접경 지역 특화 산업 후보를 도출하고, 도출된 산업의 육성방안을 수립
- 접경 지역특화 산업 연계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방안 수립
 - 남북교류 협력 사업 후보도출 및 추진 방안 수립
- 접경 지역 특화 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사항
 - 군사 보호구역, 환경보전지역, 수도권 정비법 등 관련 규제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 접경 지역 균형 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 확산
 - 본 연구추진에 필요한 소통 확산을 위하여 지역주민간담회, 전문가 포럼, 워킹그룹 운영 및 언론홍보 등

2.2 연구 방법

- 국내외 관련 정보 수집 분석
 - 본 연구에 필요한 심층 분석 및 통계 자료를 수집, 분석함
 - 접경 지역 인문·사회·지리 및 산업 관련 통계
 - 접경 지역 산업 육성 관련 계획
 - 국내외 접경 지역 특화 산업 관련 현황
-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조사
 - 접경 지역 특화 산업, 남북교류 협력, 법 제도적 규제 관련 전문가

- 접경 지역 3개 광역시·도 및 15개 시·군 지자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의원
- 접경 지역 기업인, 주민대표 등 현장 주민간담회



● 전문가 포럼 및 워킹그룹

- 남북교류 협력 전문가, 각 산업 분야별 전문가 및 시·도, 시·군 담당자가 참여한 워크숍 및 포럼을 개최하여 연구 방향 및 방법, 접경지 특화 산업 육성방안, 남북교류 협력방안, 접경 지역 규제 완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해외 접경 지역 현장 조사

- 중국 단둥시 정부, 현지 기업인, 한인상인회 면담
- 단둥 신개발구, 단둥 항 방문

2.3 추진 경위

- 2019.04.08. 접경 지역 균형 발전 광역지자체 공동연구 업무협약
- 2019.04.26. 접경 지역 균형 발전 공동연구위원회 발대식
- 2019.05.14. 인천광역시 접경 지역 산업경제혁신 현장 간담회
- 2019.05.17. 경기도 접경 지역 산업경제혁신 현장 간담회

- 2019.05.20. 경기도 접경 지역 산업경제혁신 현장 간담회
- 2019.06.24. 접경 지역 9개 대학 총장 간담회
- 2019.06.25. 접경 지역 양주시 기업인 현장 간담회
- 2019.08.08. 접경 지역 균형 발전 공동연구 착수회 및 워크숍
- 2019.08.30. 접경 지역 남북교류 협력방안 현장 간담회
- 2019.11.20. 시·도 담당자 중간점검 회의
- 2019.11.28. 접경 지역 남북교류 협력방안 현장 토론회
- 2019.12.19. 중간보고회
- 2020.01.15. 중국-북한 접경 지역 단동 현장 방문
- 2020.01.21. 시·도 담당자 최종점검 회의
- 2020.02.13. 최종보고회

2.4 기타

● 본 연구와 관련 회의 및 포럼 활동 총 52회 진행

- 기간: 10개월(2019년 5월 ~ 2020년 2월)
- 연구진: 10명
- 연구 관련 활동: 52회

Title	Number
1. 접경지 15개 시·군 간담회	6
2. 시·도, 시·군 회의	5
3. 포럼 운영	3
4. 현장방문	14
5.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	7
6. 해외조사	1
7. 공동연구팀 회의	16
합계	52

Ⅱ

접경 지역 특화 산업 기초조사

1. 접경 지역 일반 현황
2. 접경 지역 산업 현황
3. 접경 지역 관련 정책·사업 현황
4. 접경 지역 군특회계
5. 요약 및 시사점

II

접경 지역 특화 산업 기초조사

1 접경 지역 일반 현황

1.1 자연·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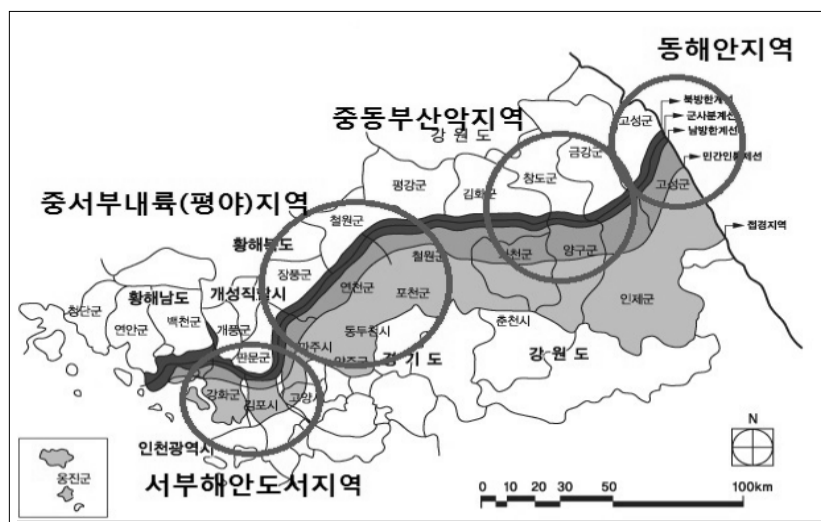
가. 토지 및 자연·생태 현황

● 접경 지역 지형과 면적

+ 접경 지역 지형

- 접경 지역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은 급경사, 서쪽은 완경사인 비대칭적인 지형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접경 지역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은 급경사, 서쪽은 완경사인 비대칭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음. 동부지역은 해안까지 산맥이 뻗어있으며 편치볼(분지) 지형이 존재함. 중부지역은 한탄강을 중심으로 북서부는 평야 지역, 남동부는 산지로 구분됨. 서부지역은 표고 100m 내외의 서해안 연안, 비옥한 충적토, 간석지, 갯벌, 해양평야 등으로 이루어짐

〈그림 II-1〉 접경 지역 일원의 지형 구분



※ 자료: DMZ 총람 -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통일연구원(2011)

-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고성군, 인제군, 화천군 등에는 표고 1,000~1,700m의 산지가 이어져 있음. 산지는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져 철원군, 화천군에 이르면 준산지와 표고 400m 이하의 구릉지가 펼쳐짐. 파주시, 김포시, 강화군을 거쳐 서해에 이르면서 평야 지대와 하구저습지 등 평지지형을 형성함
- 태백산맥의 동쪽으로는 급경사가 이어지며 동해안에 접어들면서 해안선을 따라 남북으로 뻗은 좁은 평야를 형성함. 한반도의 지질을 남북으로 양분하는 추가령 구조곡도 접경 지역을 지나는데, 연천군과 파주시를 지나면서 완만한 구릉지를 형성해 남과 북을 연결하는 통로 구실을 함

+ 접경 지역 면적

- 접경 지역 면적의 60% 이상을 강원도 6개 시·군이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인제군으로 강원도에 포함됨
- 접경 지역의 총면적은 8,097km²이며,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강원도 64%, 경기도 30%, 인천시 6% 순임
- 접경 지역 면적의 60% 이상을 강원도 6개 시·군이 차지하고 있음. 강원도 면적의 1/3가량이 접경 지역에 해당함. 접경 지역 1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인제군으로 강원도에 포함됨

〈표 II-1〉 접경 지역 면적 현황

(단위: 개, km²)

시·군별	읍·면·동		면적	
	전체	대상	전체	대상
강화군	1읍12면	1읍12면	410.83	410.83
옹진군	7면	4면	163.92	86.62
고양시	2구35동	3동	267.31	57.76
김포시	1읍5면4동	1읍4면	276.59	217.61
동두천시	7동	4동	95.66	91.93
양주시	1읍4면6동	1읍4면	309.77	224.02
파주시	2동5읍9면	4읍9면	682.6	631.27
포천시	1읍11면2동	6면	827.09	493.81
연천군	2읍8면	2읍8면	696.33	696.33
춘천시	1읍9면15동	2면	1,116.35	367.55
고성군	2읍 4면	2읍 4면	664.15	664.15
양구군	1읍 4면	1읍 4면	700.68	700.68

시·군별	읍·면·동		면적	
	전체	대상	전체	대상
인제군	1읍 5면	1읍 5면	1,646.33	1,646.33
철원군	4읍 7면	4읍 7면	898.82	898.82
화천군	1읍 4면	1읍 4면	909.46	909.46
합계	182	98	9,665.89	8,097.17

※ 자료: 접경 지역 현황, 통일부(2013)

〈그림 II-2〉 접경 지역 범위 및 면적



※ 자료: 접경 지역 관련 통계, 행정안전부(2013)

● 접경 지역 토지이용 현황

+ 토지 피복¹⁾

-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은 산림, 초지, 농경지, 습지 순으로 토지 피복이 이루어져 있음
 -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의 지표면은 산림 75.5%, 초지 20.3%, 농경지 2.8%, 습지 1.1%, 기타 0.3%로 이루어져 있음
 - 접경 지역 중 김포시, 강화군, 고양시, 파주시 등은 시가지화 건조지역의 축에 포함되어 있음. 시가지화 건조지역의 면적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신도시 개발지역의 도시 팽창으로 인해 증가율이 높음

1) 토지 피복(ground coverage): 지표면의 분포상황

+ 토지 지목별 현황

- 접경 지역에서는 임야, 농경지, 기타토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임야 비중 상위지역에는 인제군과 화천군, 농경지 비중 상위지역에는 강화군과 김포시, 공장용지 비중 상위지역에는 김포시와 양주시가 포함됨
 - 김포시를 제외한 전 접경 지역에서 임야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김포시는 농경지의 비중이 31%로 가장 높고, 기타 토지 30%, 임야 24% 순으로 나타남
 - 대다수 접경 지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경지임. 고양시, 동두천시, 춘천시, 인제군, 화천군은 기타토지의 비중이 농경지보다 높게 나타남
 - 산간지역인 강원도는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82%로 전국 평균인 64%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남. 인제군은 임야 비중이 89%, 화천군은 84%, 고성군은 83%로 강원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냄
 - 농경지 비중이 전국 평균인 18.7%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은 강화군 39%, 김포시 31%, 파주시 27%, 철원군 23%, 고양시 22%, 연천군 19% 순임. 공장용지의 비중이 전국 평균인 1.0%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은 김포시 6.5%, 양주시 3.5%, 파주시 2.5%, 포천시 2.2%, 고양시 1.2%, 동두천시 1.1% 순임

〈표 II -2〉 접경 지역 토지이용 현황

(단위: km², %)

구 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농경지		과수원		임야		기타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강화군	16.1	3.9	1.1	0.3	1.1	0.3	161.2	39.2	0.3	0.1	177.6	43.2	54.0	13.1
용진군	4.0	2.3	0.0	0.0	0.3	0.2	28.5	16.5	0.6	0.3	121.5	70.3	17.9	10.4
고양시	33.6	12.5	3.1	1.2	2.4	0.9	59.2	22.1	0.7	0.3	84.5	31.5	84.4	31.5
김포시	22.3	8.1	17.9	6.5	1.4	0.5	85.4	30.9	1.8	0.6	65.5	23.7	82.2	29.7
동두천시	5.2	5.5	1.1	1.1	0.6	0.6	9.3	9.8	0.1	0.1	63.8	66.7	15.6	16.3
양주시	16.5	5.3	11.0	3.5	1.2	0.4	57.7	18.6	0.4	0.1	175.2	56.5	48.3	15.6
파주시	31.7	4.7	17.0	2.5	1.6	0.2	182.7	27.1	0.6	0.1	304.0	45.2	135.6	20.1
포천시	20.0	2.4	17.8	2.2	2.0	0.2	136.3	16.5	0.4	0.1	556.7	67.3	93.5	11.3
연천군	8.9	1.3	1.7	0.2	0.5	0.1	131.1	19.4	0.1	0.0	409.7	60.6	124.4	18.4
춘천시	20.9	1.9	2.0	0.2	3.1	0.3	99.1	8.9	2.0	0.2	839.5	75.2	149.8	13.4
고성군	6.2	0.9	0.4	0.1	0.6	0.1	55.6	8.4	0.2	0.0	547.8	82.9	50.1	7.6
양구군	4.0	0.6	0.3	0.0	0.4	0.1	73.0	11.0	0.2	0.0	530.1	80.1	53.7	8.1
인제군	6.9	0.4	0.3	0.0	0.6	0.0	69.1	4.2	0.2	0.0	1,471.3	89.4	96.9	5.9
철원군	8.5	1.0	0.7	0.1	0.5	0.1	207.4	23.3	0.4	0.0	598.0	67.2	73.9	8.3
화천군	4.9	0.5	0.2	0.0	0.4	0.0	59.0	6.5	0.4	0.0	767.1	84.4	76.9	8.5

※ 자료: 통계청(2018)

● 접경 지역 자연·생태 현황

+ 생태적 가치 및 생태계 현황

- 접경 지역은 인위적인 간섭이 배제된 생태계를 보전하고 있어 생태·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임
 - 접경 지역은 과거 60여 년간 인위적인 간섭이 배제된 생태계를 보전하고 있음. 한반도 자연 생태계의 전형인 산림 생태계와 연안의 습지 생태계가 만나는 지역이며 백두대간과도 이어져 있어 생태·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임
 - 동부지역은 우수한 산림 생태계와 독특한 습지 생태계가 발달되어 있음. 중부지역은 세계적인 희귀 조류의 월동지이며, 서부지역은 습지와 갯벌이 발달하여 높은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음
 - 접경 지역에서는 남방계 및 북방계 생물의 교류가 이루어지며, 세계 유일의 온대지역 천이 과정 관찰지임. 희귀 동식물의 안정적인 서식처이기도 함
 - 자연적 또는 군사적 목적에 의해 주기적인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은 훼손되었으나 초본식물의 성장이 촉진되어 다양한 초식동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음. 야생동식물 2,700여 종을 포함하여 멸종 및 보호 야생동식물 70여 종이 발견됨

+ 생태등급 및 보전 현황

- 접경 지역 전체의 86%가량이 보전에 적합한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접경 지역 일대에 환경·생태적 보전지역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
 - 접경 지역 일대에는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 보호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등 환경·생태적 보전지역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
 - 접경 지역의 22%가량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자연등급 1등급에 해당하여 개발이 제한되어 있음. 강원도 인제군에 1등급 지역의 52%가량이 분포하고 있음
 - 접경 지역의 국토 환경성 평가 결과 1등급 지가 68.5%, 2등급 지가 17.2%로 총 85.7%의 토지가 보전에 적합한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완충 지역인 3등급 지역은 6.6%로 환경 보전 상태가 양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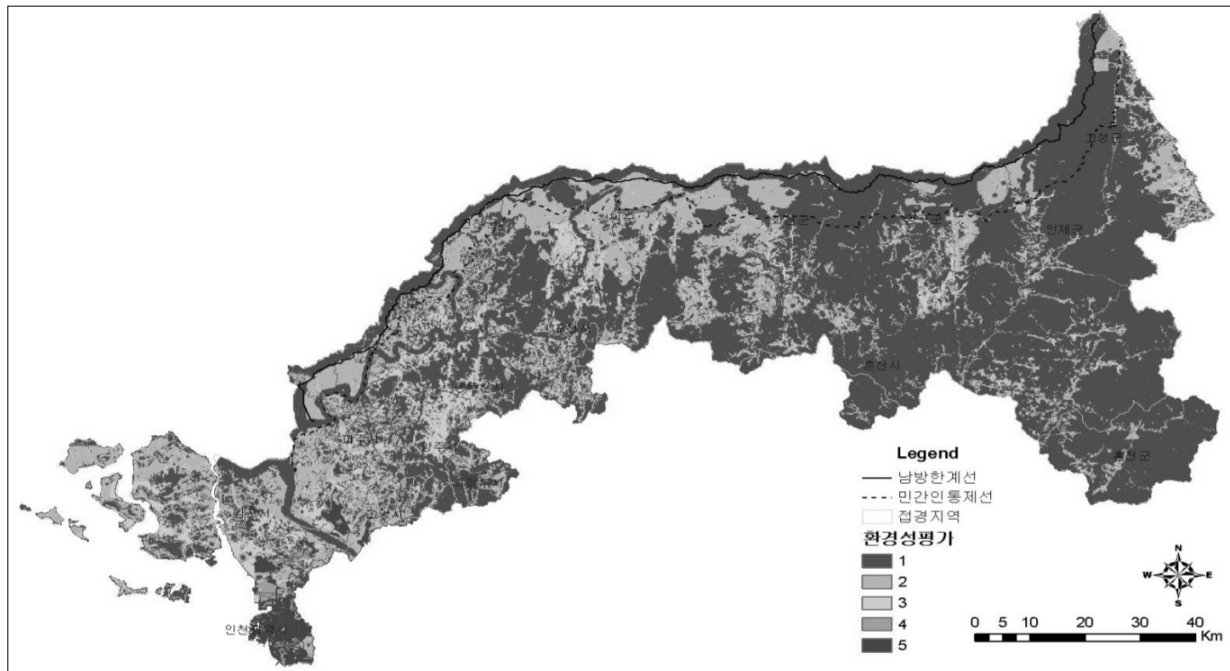
〈표 II-3〉 접경 지역 국토 환경성 평가 결과

(단위: km²,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타		계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5,500	68.51	1,383.7	17.22	533.3	6.64	179.4	2.23	326.4	4.06	107.4	1.34	8,035.2	100

※ 자료: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환경부(2009)

〈그림 II -3〉 접경 지역 일원의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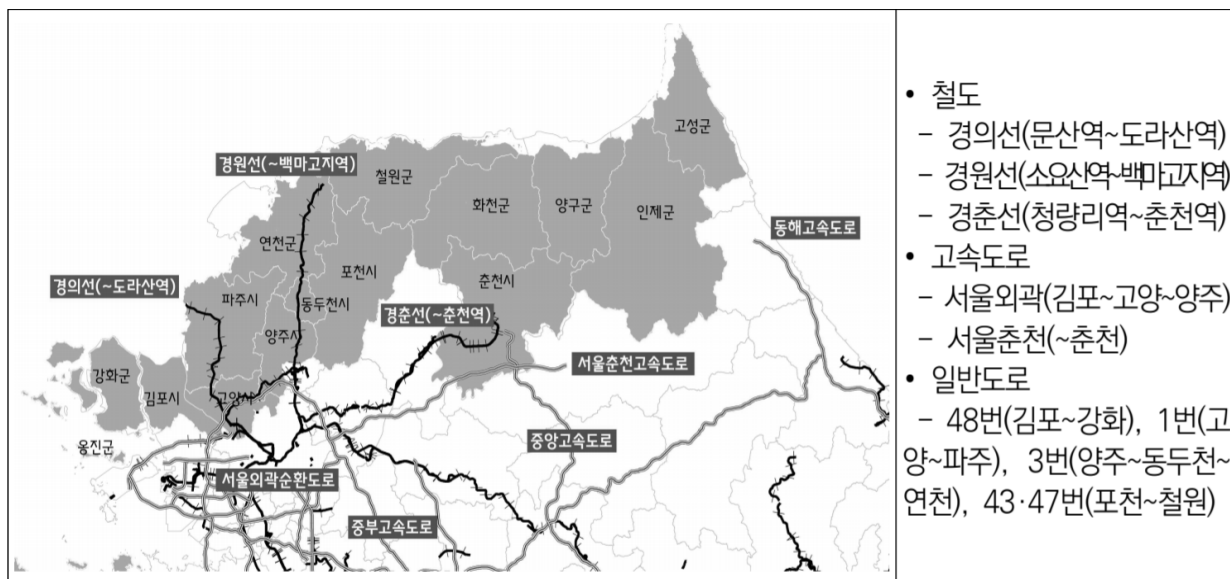


※ 주: 1) 보전지역: 민북지역 1·2등급 지와 접경 지역 및 DMZ 일원 유역 1등급지
 2) 개발 가능지역: 보전지역 외의 지역(3~5등급지)
 자료: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환경부(2009)

나. 교통 현황

- 접경 지역 교통 인프라 현황
- + 접경 지역 도로·철도 현황

〈그림 II -4〉 접경 지역 철도 및 고속도로 현황



※ 자료: 접경 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2016)

- 접경 지역은 고속도로 및 국도 기반이 열악하여 도로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철도 구간이 단절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복원이 요구됨
 - 접경 지역 15개 시·군의 도로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고속도로의 기반 및 기능이 열악한 실정임
 -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총 도로 연장에서 국도 연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도로시설의 개선·확충이 요구됨
 - 철도는 경의선, 경원선, 동해북부선, 내 금강산선 등이 단절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복원이 필요함

〈표 II -4〉 접경 지역 도로 현황

(단위: km²)

구분	고속국도		일반국도					
	계	포장	계	포장	미포장			
강화군			18,456	18,456				
옹진군								
김포시	14,050	14,050	24,460	24,460				
동두천시			14,194	14,194				
고양시	16,090	16,090	54,250	54,250				
파주시			86,383	86,383				
양주시	10,600	10,600	21,350	21,350				
연천군			57,558	57,558				
포천시	21,480	21,480	134,446	134,446				
춘천시	39,460	36,460	121,196	121,196				
철원군			116,261	106,308	9,953			
화천군			75,640	75,640				
양구군			68,920	60,120	8,800			
인제군	34,200	34,200	134,703	134,703				
고성군			82,681	82,681				
구분	지방도				시·군도			
	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강화군	16,222	16,222			276,175	192,234	81,941	
옹진군					193,000	166,640	2,410	23,950
김포시	101,475	45,822		55,653	71,850	71,850		
동두천시	20,839	17,109		3,730	168,898	127,058		41,840
고양시	103,529	90,729		12,800	634,978	626,208		8,770
파주시	148,390	143,390	1,000	4,000	223,234	171,684	7,640	43,910
양주시	121,518	118,718	2,800		140,900	97,200	2,100	41,600
연천군	157,066	106,466	20,600	30,000	102,300	59,900	42,400	
포천시	149,292	132,162	2,800	14,330	182,850	123,550	59,300	
춘천시	80,868	74,768		6,100	354,513	326,243	28,270	177
철원군	70,419	70,419		210,700	104,000	106,700		

구분	지방도				시·군도			
	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화천군	136,453	125,153	8,100	3,200	190,530	124,090	66,440	
양구군	64,470	62,610	1,860		187,890	125,770	62,120	
인제군	129,703	110,703	7,400	11,600	217,700	134,880	5,000	77,820
고성군	29,120	8,176	15,944	5,000	274,600	191,600	83,000	

※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 현황 조서(2019)

+ 접경 지역 도로 포장률

- 강원도 시·군 접경 지역 대다수, 경기도 연천군과 포천시, 인천시 강화군은 도로 포장률이 전국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 정비가 필요함
 - 전국 평균 도로 포장률은 93.2%임. 경기도와 인천시의 도로 포장률은 각각 98.1%, 97.4%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강원도는 88.4%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음
 - 김포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등 경기도 신도시 지역은 도로포장이 완비되어 있음. 반면 고성군, 양구군, 철원군 등 강원도 산간지역과 경기도 연천군은 도로 포장률이 80% 미만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 정비가 요구됨

〈표 II -5〉 접경 지역 도로 포장률

(단위: %)

행정구역별	2016	2017	2018
인천시	96.18	96.48	97.40
강화군	72.86	76.99	77.51
옹진군	83.99	83.99	98.57
경기도	97.73	98.13	98.11
고양시	100.00	100.00	100.00
김포시	100.00	100.00	100.00
동두천시	78.52	100.00	100.00
양주시	99.19	98.63	98.63
파주시	98.20	98.23	95.80
포천시	86.37	86.94	87.01
연천군	77.30	78.14	78.04
강원도	86.20	87.56	88.43
춘천시	95.06	96.78	96.79
고성군	58.15	74.06	74.06
양구군	80.20	80.52	77.35
인제군	96.84	97.10	97.10
철원군	70.64	70.64	70.64
화천군	81.35	81.34	81.34
전국	92.43	92.81	93.23

※ 자료: 통계청(2018)

▶ 접경 지역 광역·도시 교통체계 현황

- 접경 지역은 광역도로망이 부족하고 신교통수단의 확충이 미약하며 지형적 제약, 군부대, 민통선의 영향으로 도로가 단절되어 있어 접근성 및 지역 간 연계성이 떨어짐
 - 인천시는 도시철도 서비스가 취약하며 동서 간 도로망에 비해 남북 간 도로망이 부족함. 강화군과 옹진군은 교통 편리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며 도서 지역을 연결하는 수상교통체계가 미흡함
 - 경기도 고양시는 생산·상업·업무기능이 부족하여 서울권 통근율이 높게 나타남. 김포시는 교통 수요에 비해 도로시설이 부족하고, 동두천시는 미군 부대 및 산악지형의 영향으로 도로가 단절되어 있음. 양주시는 경원선 복선전철사업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국도 3호선 중심의 편중된 발전으로 교통 혼재가 발생함. 파주시는 경의선을 중심으로 동측 도로망 발달이 미흡하고 군사시설물로 인해 도로의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포천시는 철도 등 신교통수단 확충이 미흡하고 광역도로망이 부족함. 연천군은 도로 사정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동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이 없음
 - 강원도 춘천시는 경춘선이 도심 서측을 통과하며, 철도이용객은 감소하고 화물수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고성군은 지역 간 도로가 남북축 위주로만 형성되어 있음. 양구군과 인제군은 국도를 중심으로 육로가 연결되어 있고 소양호를 사이에 두고 물길이 연결되어 있음. 철원군은 지형적 제약과 민통선의 영향으로 광역교통망 체계의 연계성이 미약하여 접근성이 떨어짐

〈표 II -6〉 접경 지역 광역·도시교통체계 현황

구분	광역 및 도시교통체계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 여건변화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속적 인구유입으로 인해 광역교통체계가 변경됨 ◦ 도시규모에 비해 철도망이 미흡하며 신도시 등의 도시철도 서비스가 취약 ◦ 동서 간 도로망에 비하여 남북 간 도로망이 부족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 저해 ◦ 도서 지역을 연결하는 수상교통체계 미흡과 낮은 편리성·접근성
고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산신도시 건설 이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일산과 화정중심으로 이원화된 시가지 형성 ◦ 행정구역의 51.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시가지 확장 불가 ◦ 생산·상업·업무기능 부재로 서울권의 통근율이 높음
김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수요에 비해 도로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간선도로망체계에 비해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도시내 보조간선 및 분산도로가 약한 실정 ◦ 낮은 도로율과 체계성이 결여된 가로시설 구조로 인하여 교통 혼잡이 심각함

구 분	광역 및 도시교통체계
동두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들이 주변에 입지하여 주변지역을 연결 및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기능 수행 ◦ 경원선 철도는 동두천시의 지역적 연계성을 악화시켜 도시미관의 저해요소 및 소음공해 유발 요인으로 작용 ◦ 미군부대와 산악지형 및 미개설 도로구간으로 인해 도로가 단절됨
양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으로 경기 북부의 교통중심지 역할을 수행 ◦ 경원선 복선전철사업으로 인한 연평균 이용객 증가 ◦ 국도 3호선 중심의 발전으로 인한 편중된 교통혼재 발생 ◦ 4개 생활권에 대한 연계교통망 미흡
파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순응형, 자연 발생형 가로망체계를 형성 ◦ 경의선을 중심으로 서측에 비해 동측의 도로망 발달 미흡 ◦ 군사시설물로 인한 도로계획 및 연속성 확보 어려움 ◦ 버스노선의 광역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필요한 환승 및 불편 발생 ◦ 경의선 복선철도만이 서울시 및 고양시 방면의 유·출입 교통 수요를 담당함
포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국도들로 인해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결절점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자연발생적 가로망으로 인한 비효율적 교통류가 발생해 통행속도 저하 및 통행시간가중 ◦ 철도 등 신교통수단의 확충 미흡 ◦ 부족한 광역도로망으로 인해 일부 지역 간 간선도로에 광역교통 수요 집중
연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이라는 배후시장을 가지고 있으나 도로 사정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 지속적인 군 훈련 등으로 인해 지역 내 도로가 훼손됨 ◦ 남북측 위주의 도로개발로 접경 지역 동·서 연결 광역도로망 전무
춘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동북측에 위치하여 동서로 수도권과 강원 북부지역을 연결하고 남측으로 강원 남부지역과 연계되는 지리적 위치에 입지 ◦ 철도의 경우 청량리~춘천을 연결하는 경춘선이 도심 서측을 통과하고 있음 ◦ 철도이용객 연평균증가율이 -3.05%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화물수송의 경우 2.76%의 증가율을 보임
고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군의 지역 간 도로는 국도 7호선이 남북축을, 국도 46호선, 지방도 56호선이 각 남북축을 형성
양구군 인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면과 서화면이 접해 있고, 31번 국도와 46번 국도를 중심으로 육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물길로는 소양호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음 ◦ 남북한 군사분계선에 인접해 있는 양구군과 인제군은 접경 지역으로서의 경제·사회·문화적 연계성을 지님
철원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교통망은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시가지교통망체계는 선형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주흐름은 남북방향으로 이루어짐 ◦ 일부지역의 지형적 제약과 민통선으로 인해 광역교통망 체계의 상호 연계성이 미약 ◦ 인근지역 및 내부지역 간 접근성 제약으로 인해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교류 부족과 균형적인 지역발전 저해

※ 자료: 접경 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2016)

1.2 인문·사회 현황

가. 인구 현황

● 인구 규모와 비중

+ 접경 지역 인구수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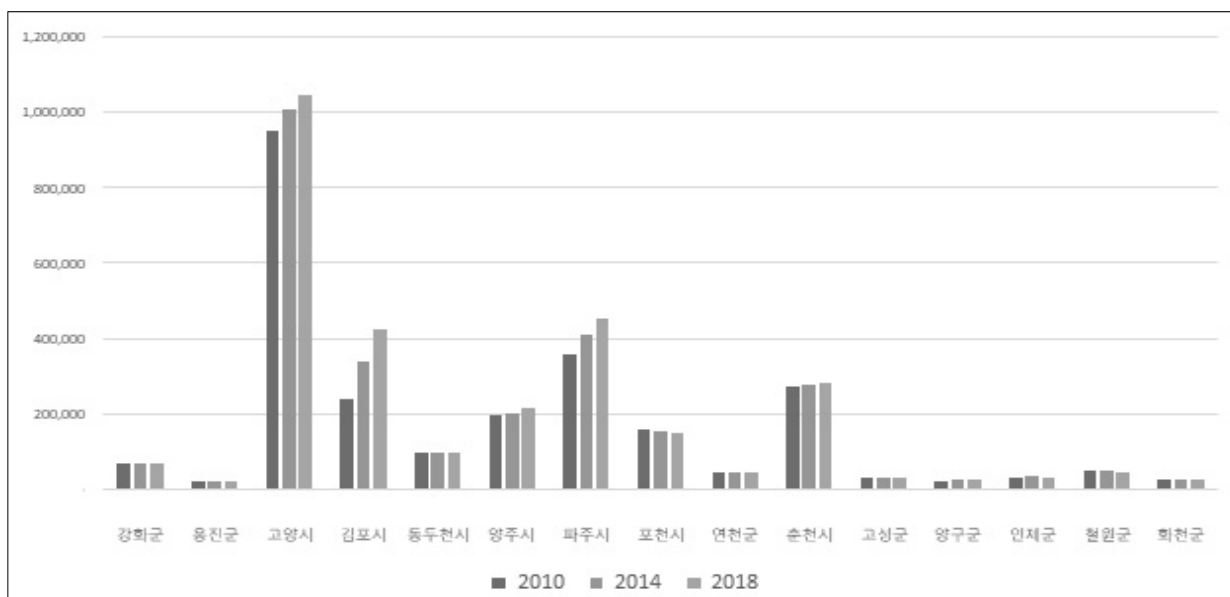
- 시·도별 접경 지역 인구 규모는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순이고, 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접경 지역 인구 비중은 강원도, 경기도, 인천시 순으로 나타남
 - 접경 지역 총인구수는 2018년 기준 295만 명으로 전국인구 대비 5.7%를 차지함. 이는 인천시 전체인구 295만 명, 경상북도 전체인구 268만 명과 비슷한 규모임
 - 시·도별 접경 지역 인구 규모는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순으로 나타남. 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접경 지역 인구 비중은 강원도, 경기도, 인천시 순으로 나타남
- 인천시 전체인구 중 접경 지역 인구는 9만 명으로 3.0%를 차지하며, 강화군 인구가 옹진군 인구의 3배 이상 규모임
 - 인천시 전체인구 295만 명 중 접경 지역 인구는 9만 명으로 3.0%를 차지함
 - 강화군 인구가 약 7만 명으로 옹진군 인구의 3배 이상 규모임
- 경기도 전체인구 중 접경 지역 인구는 243만 명으로 18.6%를 차지하며, 고양시 인구가 경기도 접경 지역 인구의 43%를 차지함
 - 경기도 전체인구 1,308만 명 중 접경 지역 인구는 243만 명으로 18.6%를 차지함. 인구 규모는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 인구가 104만 명으로 경기도 접경 지역 인구의 43.0%를 차지함. 여기에 파주시 45만 명, 김포시 42만 명을 합치면 경기도 접경 지역 인구의 약 80%가 3개 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 강원도 전체인구 중 접경 지역 인구는 44만 명으로 28.2%를 차지하며, 춘천시 인구가 강원도 접경 지역 인구의 64%를 차지함
 - 강원도 전체인구 154만 명 중 접경 지역 인구는 44만 명으로 28.2%를 차지함. 인구 규모는 춘천시, 철원군, 인제군, 고성군, 화천군, 양구군 순으로 나타남
 - 춘천시 인구가 28만 명으로 강원도 접경 지역 인구의 64.4%를 차지함. 춘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인구수 2~4만 명가량의 소규모 인구분포를 보임

+ 접경 지역 시·군 간 인구 규모 격차

- 시·군 접경 지역 인구 규모 상위 3개 지역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로 모두 경기도에 해당함
 -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역으로 파주시 45만 명, 김포시 42만 명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를 보임
 - 뒤이어 춘천시 28만 명, 양주시 22만 명, 포천시 15만 명으로 인구수 10만 명 이상의 접경 지역 시·군은 총 6곳임. 춘천시를 제외한 상위 5개 시·군이 경기도에 해당함
- 인구 규모 하위 4개 지역은 인구수 3만 명 미만으로 인천시 및 강원도의 도서·산간지역에 해당함
 - 인천시 옹진군 2.1만 명, 강원도 양구군 2.3만 명, 화천군 2.5만 명, 고성군 2.8만 명 순임
- 인구 규모 상위 6개 지역에 접경 지역 전체인구의 87%가 밀집되어 있음. 신도시 개발지역 및 지방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편중되어 접경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함
 - 접경 지역 전체인구의 35.4%가 고양시 1개 지역에 편중됨. 고양시 인구는 104만 명으로 접경 지역 인구 규모 상위 3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시·군 인구수를 모두 합친 103만 명에 이르는 규모임
 - 인구 규모 상위 3개 지역인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인구수를 합치면 접경 지역 전체인구의 65.0%를 차지함. 여기에 춘천시, 양주시, 포천시까지 포함하여 인구 규모 10만 명 이상인 상위 6개 지역 인구수를 합치면 접경 지역 전체인구의 86.9%를 차지하게 됨
 - 인구 규모 하위 4개 지역인 옹진군, 양구군, 화천군, 고성군 인구수 합계는 접경 지역 전체인구의 3.3%에 불과함. 인구 규모 10만 명 미만인 9개 지역 인구수 합계는 39만 명으로 김포시나 파주시 1개 지역 인구수에도 미치지 못함

〈그림 II-5〉 접경 지역 인구변화 추이

(단위: %)



※ 주: 주민등록인구 기준(외국인 제외)
 자료: 통계청(해당연도)

〈표 II-7〉 접경 지역 인구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0	비중	2014	비중	2018	비중	연평균 증감률
인천시	2,758,296	100	2,902,608	100	2,954,642	100	0.86
강화군	67,104	2.43	67,118	2.31	68,896	2.33	0.33
옹진군	18,739	0.68	20,703	0.71	21,036	0.71	1.46
경기도	11,786,622	100	12,357,830	100	13,077,153	100	1.31
고양시	950,115	8.06	1,006,154	8.14	1,044,189	7.98	1.19
김포시	238,339	2.02	340,310	2.75	423,170	3.24	7.44
동두천시	95,653	0.81	97,595	0.79	96,226	0.74	0.07
양주시	196,706	1.67	202,072	1.64	216,951	1.66	1.23
파주시	355,632	3.02	411,348	3.33	451,848	3.46	3.04
포천시	158,658	1.35	155,798	1.26	150,676	1.15	-0.64
연천군	45,177	0.38	45,363	0.37	44,633	0.34	-0.15
강원도	1,529,818	100	1,544,442	100	1,543,052	100	0.11
춘천시	269,950	17.65	275,791	17.86	280,640	18.19	0.49
고성군	30,112	1.97	30,269	1.96	28,144	1.82	-0.84
양구군	21,843	1.43	23,888	1.55	23,408	1.52	0.87
인제군	31,842	2.08	32,475	2.10	32,136	2.08	0.11
철원군	48,928	3.20	47,590	3.08	46,413	3.01	-0.66
화천군	24,364	1.59	27,143	1.76	25,084	1.63	0.36
전국	50,515,666	100	51,327,916	100	51,826,059	100	0.32
접경 지역 전체	2,553,162	5.05	2,783,617	5.42	2,953,450	5.70	1.84

※ 주: 주민등록인구 기준(외국인 제외)

자료: 통계청(해당연도)

● 인구 성장률

+ 전국 대비 시·도 접경 지역 인구 성장률

- 경기도와 인천시는 인구 성장률 최상위 지역에 해당함
 - 2010~2018년 전국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0.32%임. 동기간 경기도와 인천시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각각 1.31%와 0.86%로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신도시 개발의 영향 및 지역적 특수성이 큰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면 인구 성장률 면에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함
 - 이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등의 광역지자체에서 인구감소율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 인구 공동화 및 도심 외곽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접 지역 효과로 판단됨

- 강원도는 인구 성장률 최하위 지역에 해당함
 - 강원도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0.11%로 전국 평균보다 낮음
 - 강원도는 인구감소율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도심지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등의 광역지자체를 제외하면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와 함께 인구 성장률 최하위 지역에 해당함

+ 접경 지역 시·군 간 인구 성장 격차

- 강화군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인천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옹진군은 전체 평균을 상회하나 인구변동 규모상으로는 비슷한 수준임
 - 강화군의 2010~2018년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0.33%로 인천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옹진군은 1.46%로 전체 평균을 상회함
 - 인구수 2만 명가량의 옹진군은 인구 규모가 작아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증가인구는 2천여 명으로 강화도와 비슷한 수준의 인구변동이 발생함
- 경기도 전체 및 전국 연평균 인구 성장률을 상회하는 지역은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이고, 이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 및 전국 연평균 인구 성장률을 상회하는 지역은 김포시 7.44%, 파주시 3.04%, 양주시 1.23%, 고양시 1.19% 순이고, 이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동두천시 0.07%, 연천군 -0.15%, 포천시 -0.64%임
 - 1기 신도시(고양), 2기 신도시(김포, 파주, 양주) 택지개발로 해당 지역 인구증가 및 도시화가 진행됨
 - 2010~2018년간 김포시 인구는 약 18만 명 증가했는데, 이는 인천시 전체 인구증가 규모인 19만 명에 이르는 수준임
 - 고양시는 인구 규모가 커서 성장률이 낮게 나타났지만, 실제 증가 규모는 9.4만 명에 달함. 파주시·도 동기간 9.6만 명의 인구가 증가함
 - 2010~2018년간 동두천시 인구는 570여 명 증가에 그침. 연천군은 540여 명 감소, 포천시는 8천 명가량이 감소함. 이는 전체 접경 지역 중 가장 큰 인구감소 규모임
- 전국 연평균 인구 성장률을 상회하는 지역은 양구군, 춘천시, 화천군 순이나 양구군과 화천군은 인구증가 규모가 미미하고 춘천시는 규모가 큼. 강원도 전체 평균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 지역은 철원군, 고성군이며 인구감소 규모도 큰 편에 속함
 - 전국 연평균 인구 성장률을 상회하는 지역은 양구군 0.87%, 춘천시 0.49%, 화천군 0.36%

순이고, 강원도 전체 평균과 같은 지역은 인제군 0.11%, 이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철원군 -0.66%, 고성군 -0.84%임

- 양구군과 화천군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인구 성장률이 나타났지만,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이다 보니 실제 증가인구는 2010~2018년간 각각 1,500여 명, 700여 명으로 성장 규모가 작은 편임
- 2010~2018년간 강원도 전체 인구증가 규모는 1.3만여 명, 춘천시 인구증가 규모는 1만여 명임. 강원도 전체 인구변동이 정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비교적 수도권에 인접하며 지방거점 도시에 해당하는 춘천시의 인구증가 기여도가 높게 나타남
- 8천여 명이 감소한 경기도 포천시에 이어 인구감소 규모가 큰 지역은 2.5천여 명이 감소한 철원군, 2천여 명이 감소한 고성군임
-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 및 지방거점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접경 지역에서 인구 정체 또는 감소 추세가 나타남
 - 2010~2018년간 접경 지역 전체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1.84%로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임. 그러나 서울시에 인접하여 신도시로 우선 개발된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를 제외하면 0.08%로 급감하여 정체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임
 - 2010년 경기도 김포시 인구는 24만 명으로 강원도 춘천시 인구 27만 명의 88% 수준이었음. 그러나 신도시 개발 종료 시점 이후인 2018년 김포시 인구는 42만 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춘천시 인구는 28만 명으로 정체되어 1.5배 격차가 발생하게 됨
 - 강원도는 춘천시를 제외한 접경 지역 모든 지역이 인천시의 도서 지역보다도 인구 성장세가 작거나 정체되어 있음
 - 서울시와 연계한 거점도시 개발, 균형 발전을 위한 집중개발 지원 여부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별 인구 성장률 및 성장 규모 격차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인구 구조

+ 생산가능 인구 규모와 비율

- 시·도 접경 지역 중 수도권에 해당하는 인천시와 경기도의 생산가능 인구는 규모와 비율 면에서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강원도는 하위권을 차지함
 - 2016년 기준 총인구 대비 15~64세 생산가능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 73.2%임. 울산시의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76.1%로 가장 높고,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경기도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함
 - 전라남도의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66.5%로 가장 낮고,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세종

- 시, 강원도 순으로 하위권을 차지함
- 전국의 생산가능 인구 규모는 약 3천 8백만 명임. 이중 경기도 9백만 명, 서울시 7백만 명으로 전체 생산가능 인구의 45%가량이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여기에 생산가능 인구 2백만 명 이상을 보유한 부산시, 경상남도, 인천시를 더하면 전체 생산가능 인구의 64%가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두 도심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남
 - 강원도의 생산가능 인구는 1백만 명가량으로 대전시, 광주시와 비슷한 규모이며, 광주시, 울산시, 제주도, 세종시와 더불어 생산가능 인구 규모 면에서도 하위권을 차지함
 - 고양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 접경 지역의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위 6개 지역에 접경 지역 전체 생산가능 인구의 87%가 편중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고양시의 생산가능 인구 비율은 75.2%로 경기도 전체 평균 74.4%, 전국 평균 73.2%를 상회함. 고양시를 제외한 모든 접경 지역의 생산가능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강화군과 옹진군의 생산가능 인구 비율은 각각 62.4%, 70.1%로 인천시 전체 평균인 75.3%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경기도 접경 지역은 고양시를 제외한 전 지역, 강원도 접경 지역은 춘천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해당 광역지자체의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접경 지역 전체 생산가능 인구는 2백만 명가량으로 인천시 전체 생산가능 인구 수와 비슷한 규모임. 이중 고양시 78만 명, 파주시 31만 명으로 접경 지역 전체 생산가능 인구의 52%가량이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여기에 생산가능 인구 20만 명 이상인 김포시와 춘천시, 10만 명 이상인 양주시와 포천시를 더하면 접경 지역 전체 생산가능 인구의 87%가 상위 6개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남
 - 2010~2016년간 전국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감소세로 전환됨. 접경 지역 중에서 강화군, 연천군, 김포시, 동두천시, 고성군 순으로 생산가능 인구 비율의 감소율이 크게 나타남

〈표 II-8〉 접경 지역 생산가능 인구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0		2013		2016		연평균 증감률
	생산가능 인구수	비율	생산가능 인구수	비율	생산가능 인구수	비율	
인천시	2,075,221	75.24	2,169,346	75.33	2,215,131	75.27	0.01
강화군	43,921	65.45	42,374	63.50	42,421	62.37	-0.80
옹진군	13,018	69.47	14,571	70.40	14,956	70.05	0.14
경기도	8,670,883	73.57	9,053,840	74.00	9,456,456	74.36	0.18

구 분	2010		2013		2016		연평균 증감률
	생산가능 인구수	비율	생산가능 인구수	비율	생산가능 인구수	비율	
고양시	697,897	73.45	737,512	74.45	781,375	75.16	0.38
김포시	171,399	71.91	224,333	71.83	259,207	71.32	-0.14
동두천시	67,553	70.62	68,483	70.20	68,922	70.13	-0.12
양주시	139,959	71.15	141,664	71.14	147,071	71.56	0.10
파주시	251,741	70.79	285,236	71.00	307,922	71.48	0.16
포천시	114,011	71.86	112,859	72.07	112,119	72.45	0.14
연천군	30,499	67.51	30,438	66.74	30,592	66.64	-0.22
강원도	1,069,776	69.93	1,081,639	70.13	1,094,345	70.57	0.15
춘천시	190,799	70.68	194,708	70.94	201,514	71.79	0.26
고성군	20,550	68.25	20,789	68.39	20,476	67.99	-0.06
양구군	14,755	67.55	16,306	69.11	16,882	70.31	0.67
인제군	21,683	68.10	22,411	68.92	22,907	70.01	0.46
철원군	33,379	68.22	31,934	67.27	32,967	68.66	0.11
화천군	16,295	66.88	16,846	67.17	18,290	69.64	0.68
전국	36,989,342	73.22	37,446,927	73.22	37,829,697	73.18	-0.01
접경 지역 전체	1,827,459	71.58	1,960,464	71.96	2,077,621	72.40	0.19

※ 주: 1) 생산가능 인구비율(%) = (15~64세 인구수 ÷ 총인구수) × 100

2) 연평균증감률: 생산가능 인구비율의 연평균증감률 산정

자료: 통계청(해당연도)

+ 고령 인구 비율

- 전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시·도 접경 지역 중 경기도와 인천시는 고령화 지역, 강원도는 고령지역으로 분류됨
 -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 분류함. 2018년 기준 전국 고령 인구비율은 14.8%로 고령사회에 진입함
 - 전국 17개 시·도 중 고령 인구비율이 7% 미만인 지역은 한 곳도 없으며, 14% 미만인 고령화 지역은 총 6곳임. 세종시의 고령 인구비율이 9.3%로 가장 낮고 뒤이어 울산시,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순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냄
 - 강원도 고령 인구비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전라북도, 경상북도와 함께 초고령 지역 진입을 앞두고 있음. 전라남도는 고령 인구비율 21.9%로 유일하게 초고령 지역에 진입함
- 시·군 접경 지역 중 초고령 지역 6곳, 고령지역 6곳, 고령화 지역 3곳으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접경 지역의 고령 인구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며, 수도권에서

멀고 도서 산간지역에 해당할 경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경향을 보임

- 2018년 기준 인천시 전체 고령 인구비율은 12.3%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반면, 접경 지역인 강화군은 30.7%, 옹진군은 23.6%로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며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됨
- 경기도 접경 지역 중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의 고령 인구비율은 각각 11.5%, 12.1%, 12.8%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11.9%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는 고령 인구비율 14% 이상으로 고령지역, 연천군은 23.8%로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됨
- 강원도 접경 지역 6개 시·군 모두 고령 인구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함. 춘천시만 고령 인구비율 16.2%로 강원도 전체 평균인 18.8%보다 낮음. 양구군과 인제군은 강원도 전체 평균과 비슷한 18%대이며, 화천군, 철원군, 고성군은 고령 인구비율 20% 이상으로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됨
-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4곳을 제외한 모든 접경 지역의 고령 인구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함. 대다수 접경 지역의 고령 인구비율이 18%대에 진입하여 초고령 지역 진입을 앞두고 있음
- 이미 초고령 지역에 진입한 곳은 6개 군으로 고령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 강화군은 30.7%에 달함. 뒤이어 강원도 고성군, 경기도 연천군, 인천시 옹진군,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화천군 순으로 비율이 높음
- DMZ와의 거리가 가깝고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며 도서 산간지역에 해당할 경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표 II-9〉 접경 지역 고령 인구 비율

(단위: %)

구 분	2010	2014	2018	연평균증감률	지역특성구분
인천시	8.62	10.26	12.27	4.51	고령화지역
강화군	23.86	27.92	30.70	3.20	초고령 지역
옹진군	19.32	20.78	23.60	2.53	초고령 지역
경기도	8.67	10.15	11.87	4.00	고령화지역
고양시	9.00	10.35	12.12	3.79	고령화지역
김포시	10.13	10.49	11.47	1.57	고령화지역
동두천시	12.98	15.36	18.39	4.45	고령지역
양주시	10.15	12.18	14.34	4.41	고령지역
파주시	10.81	11.67	12.81	2.14	고령화지역
포천시	12.74	14.94	17.46	4.02	고령지역
연천군	19.49	21.80	23.77	2.51	초고령 지역

구 분	2010	2014	2018	연평균증감률	지역특성구분
강원도	14.81	16.57	18.75	2.99	고령지역
춘천시	13.11	14.64	16.22	2.70	고령지역
고성군	20.74	22.76	26.35	3.04	초고령 지역
양구군	17.20	16.96	18.47	0.89	고령지역
인제군	16.04	17.05	18.71	1.94	고령지역
철원군	16.28	18.70	20.39	2.85	초고령 지역
화천군	18.08	17.65	20.19	1.39	초고령 지역
전국	10.90	12.70	14.76	3.86	고령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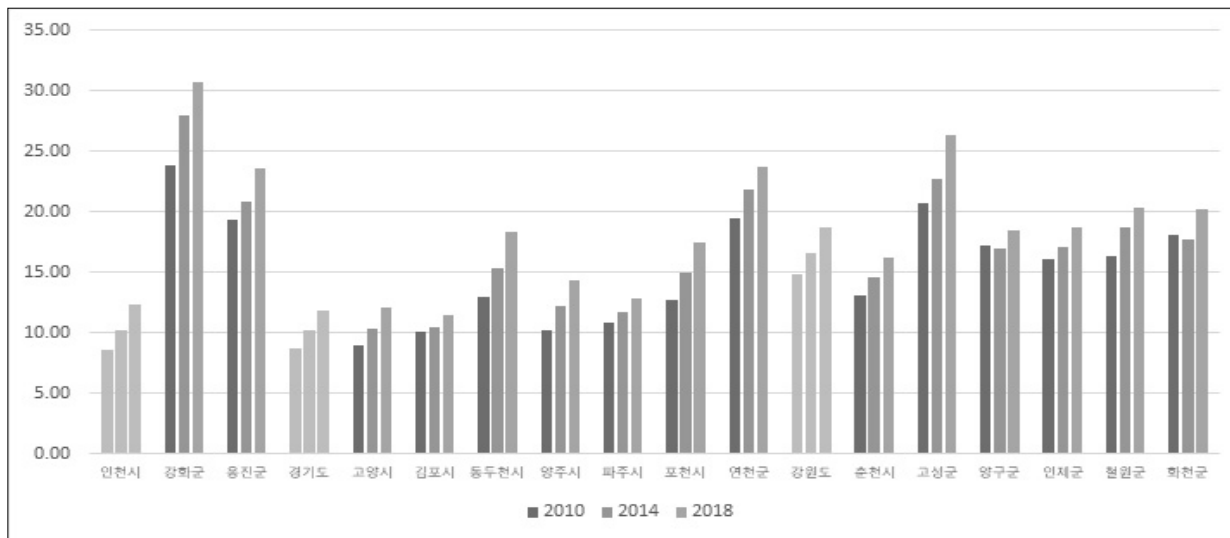
※ 주: 1) 고령 인구비율(%)=(65세 이상 인구수÷전체인구수)×100

2) 지역 특성 구분: 2018년 기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지역, 14% 이상일 때 고령지역, 20% 이상일 때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

자료: 통계청(해당연도)

〈그림 II-6〉 접경 지역 고령 인구비율 추이

(단위: %)



※ 주: 고령 인구비율(%)=(65세 이상 인구수÷전체인구수)×100

자료: 통계청

나. 지역내총생산(GRDP) 현황

● GRDP 규모와 비중

+ 시·도 접경 지역 GRDP 규모와 비중

- GRDP 규모 측면에서 경기도는 최상위, 인천시는 중위권, 강원도는 하위권을 차지함
 - 2016년 기준 전국 GRDP는 1,642조 원 규모임. 이중 경기도 373조 원, 서울시 359조 원으로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5%에 달함

- GRDP 규모 상위 5개 지역인 경기도, 서울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가 전국 GRDP의 64%를 차지하고 있음. 2010년 기준 GRDP 규모 2위였던 경기도는 2016년 기준 선두로 올라섬.
- 인천시 GRDP는 81조 원 규모로 50조 원 이상 90조 원 미만의 중위권 지역에 포함됨. 중위권에서 선두를 차지한 부산시의 전국 대비 GRDP 비중이 2010년 5.04%에서 2016년 4.95%로 하락한 반면, 인천시는 4.80%에서 4.92%로 상승하며 중위권 3위에서 2위로 올라섬.
- 강원도는 GRDP 42조 원 규모로 50조 원 미만의 하위권 지역에 포함됨. 2010년과 2016년간 하위지역 내 순위변동은 없으나 대구시, 전라북도, 대전시, 광주시의 경우 전국 대비 GRDP 비중이 하락 또는 정체된 반면, 강원도와 제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함

+ 시·군 접경 지역 GRDP 규모와 비중

- GRDP 규모 측면에서 경기도 접경 지역은 중상위권, 강원도 접경 지역은 중하위권, 인천시 접경 지역은 하위권에 해당함
 - 2016년 기준 15개 시·군 접경 지역 전체 GRDP는 70조 원 규모임. 이는 전국 GRDP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울산시 GRDP 72조 원, 전라남도 GRDP 69조 원과 비슷한 규모임
 - GRDP 규모 최상위 지역인 고양시와 파주시의 GRDP는 각각 19조 원, 15조 원으로 제주도 GRDP 17조 원과 비슷한 수준임. 중상위권에 속하는 GRDP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 지역은 4곳으로 김포시, 춘천시, 양주시, 포천시 순임
 - GRDP 규모 1조 원 미만인 최하위 3개 지역은 고성군 9,500억 원, 양구군 8,700억 원, 용진군 4,300억 원이며, 그 외 6개 지역의 GRDP는 1조 원 이상 2조 원 미만 규모임
 - 경기도는 연천군을 제외한 접경 지역 전 지역이 GRDP 중상위권에 해당함. 강원도는 춘천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GRDP 중하위권에 포함되고, 인천시는 강화군, 옹진군 모두 GRDP 하위권에 포함됨
- GRDP 규모 상위 6개 시·군이 접경 지역 전체 GRDP의 85%를 차지함
 - 2016년 기준 접경 지역 15개 시·군이 3개 광역지자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1%임. 인천시는 접경 지역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로 미미하고, 경기도는 14.9%, 강원도는 29.9%에 달함
 - 15개 시·군 전체 GRDP에서 상위 3개 시·군인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의 GRDP가 차지하는 비중이 61%에 달함. GRDP 5조 원 규모 이상인 상위 6개 시·군 GRDP는 접경 지역 전체 GRDP의 85%를 차지함
 - GRDP 규모 상위 2개 시·군인 고양시, 파주시를 제외하면 3개 광역지자체 GRDP에서 접경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인 7%대로 떨어짐. 김포시, 춘천시, 양주시, 포천시를 포함한 상위 6개 시·군을 제외하면 GRDP 비중이 2%대로 현저히 낮아짐.

- 경기도 신도시 4개 지역의 경제 활동 규모가 전체 접경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접경 지역 GRDP 규모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임
 - 2010년과 2016년간 접경 지역 전체 GRDP에서 각 지역 GRDP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4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GRDP 비중이 감소함
 - 접경 지역 GRDP 규모 최상위 지역인 고양시와 최하위 지역인 용진군 간 GRDP 규모 차이가 2010년 30배에서 2016년에는 45배로 상승함
 - 경기도 신도시 개발지역의 경제 활동 규모가 전체 접경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음. 서울시 인접 지역 및 지방거점 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접경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 규모가 영세하며,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경제 활동 기여도가 미미한 상황임

〈표 II-10〉 접경 지역 GRDP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0	비중	2013	비중	2016	비중	연평균 실질성장률
인천시	60,708,051	100	64,654,180	100	80,859,230	100	2.45
강화군	1,636,411	2.70	1,637,797	2.53	1,072,860	1.33	-8.78
용진군	425,125	0.70	316,173	0.49	429,594	0.53	-2.35
경기도	266,562,114	100	313,670,611	100	373,329,042	100	4.19
고양시	13,365,406	5.01	15,597,906	4.97	19,369,926	5.19	4.29
김포시	5,355,699	2.01	6,680,934	2.13	8,529,117	2.28	6.77
동두천시	1,251,399	0.47	1,436,392	0.46	1,647,846	0.44	2.46
양주시	3,650,864	1.37	4,368,940	1.39	5,254,577	1.41	4.81
파주시	10,015,411	3.76	12,517,614	3.99	14,733,776	3.95	5.75
포천시	3,665,776	1.38	4,221,208	1.35	5,134,676	1.38	4.26
연천군	974,550	0.37	980,171	0.31	1,071,485	0.29	-0.65
강원도	30,628,086	100	35,357,498	100	41,738,165	100	2.94
춘천시	4,722,131	15.42	5,445,167	15.40	6,484,502	15.54	3.32
고성군	702,478	2.29	808,845	2.29	951,171	2.28	2.61
양구군	653,922	2.14	790,278	2.24	867,428	2.08	2.21
인제군	1,028,470	3.36	1,216,570	3.44	1,381,148	3.31	2.54
철원군	1,148,487	3.75	1,399,342	3.96	1,592,046	3.81	3.20
화천군	900,797	2.94	1,106,003	3.13	1,211,752	2.90	2.19
전국	1,265,146,117	100	1,430,254,931	100	1,641,957,177	100	2.94
접경 지역 전체	49,496,926	3.91	58,523,340	4.09	69,731,904	4.25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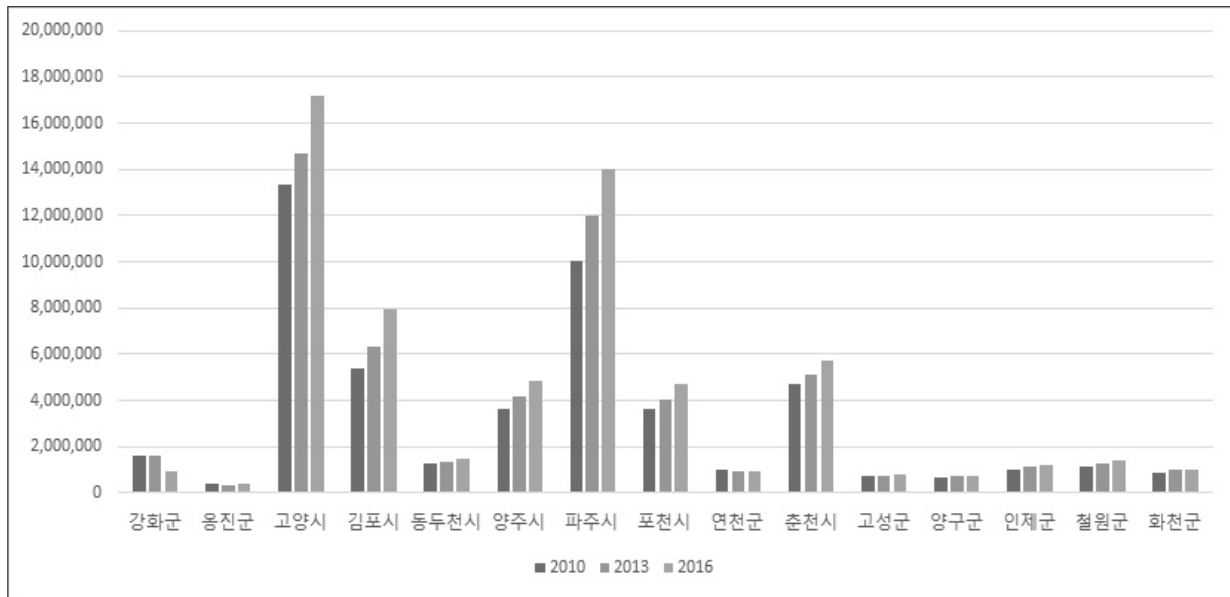
※ 주: 1) GRDP 규모와 비중 - 해당연도 가격으로 산정한 명목 GRDP 기준, 시·도·시·군간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2010년 기준 조정안으로 산정

2) GRDP 연평균 실질성장률 - 2010년 기준연도 가격으로 산정한 실질 GRDP 기준

자료: 통계청(해당연도)

〈그림 II-7〉 접경 지역 GRDP 성장 추이

(단위: 백만 원, %)



※ 주: 2010년 기준연도 가격으로 산정한 실질 GRDP 기준

자료: 통계청

● GRDP 성장률

+ 시·군 접경 지역 연평균 GRDP 성장률

- 시·군 접경 지역 중 전국 연평균 GR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지역은 6곳, 감소율이 나타나는 지역은 3곳임
 - 2010~2016년간 물가 상승요인을 제외한 실질 GRDP로 산정한 전국 연평균 GRDP 성장률은 2.94%임. 경기도 전체 연평균 GRDP 성장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4.19%이고, 강원도는 전국 평균과 같은 2.94%, 인천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2.45%를 나타냄
 - 15개 시·군 접경 지역 중에서 전국 연평균 GR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4개 지역과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2개 지역임
 - 그 외 접경 지역의 경우 2%대의 연평균 GRDP 성장률을 나타냄. 감소율을 나타낸 곳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시 용진군과 강화군 3개 지역임. 특히 강화군의 경우 -8.78%로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신도시로 개발된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접경 지역에 자생적인 지역 경제 성장요인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집중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연평균 GRDP 성장률 상위 3개 지역인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는 각각 6.77%, 5.75%, 4.81%로 높은 성장세를 보임. 3곳 모두 2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임
 - 철원군을 비롯한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등의 연평균 GRDP 성장률이 2~3%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군부대가 창출하고 있는 부가가치의 영향으로 판단됨. 국방개혁으로 해당 부문의 창출 가치가 감소할 경우 지역 경제 성장률이 하락세로 돌아설 위험 있음

- 연평균 GRDP 감소율이 나타나고 있는 연천군, 용진군, 강화군 등의 접경 지역에는 지역 경제를 이끌만한 산업 및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임
- 신도시 개발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된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접경 지역의 경우 자생적인 지역 경제 성장요인이 부족함. 지역 경제 성장세의 정체 및 하락 위험에서 벗어나고 접경 지역 간 성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 간 연계, 거점 지역화, 산업특화 등 집중개발 방안이 요구됨

다. 재정자립 현황

+ 접경 지역 재정자립도

+ 시·도 접경 지역 재정자립도

- 경기도와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60% 이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강원도는 30%를 넘지 못해 최하위권을 차지함
 - 2019년 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은 51.4%로 2011~2019년간 연평균 -0.12% 하락률을 나타냄
 -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를 비롯한 7개 시·도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지역은 대전시, 광주시를 포함하여 10개 시·도임
 - 2019년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68.4%, 인천시는 64.6%로 각각 3, 4위를 차지함. 강원도는 28.6%로 30%를 넘지 못한 전라북도, 전라남도과 더불어 최하위권을 차지함

+ 시·군 접경 지역 재정자립도

- 시·군 접경 지역 재정자립도는 전 지역에서 50% 미만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 2019년 시·군 접경 지역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 지역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51.4%에 미치지 못함
 - 시·군 접경 지역 재정자립도 상위 3개 지역은 파주시 46.4%, 김포시 46.2%, 고양시 45.6%임. 해당 3개 지역은 2011년 기준 재정자립도 50% 이상을 달성했던 곳으로 2011~2019년간 연평균 -1.9~1.5% 내외의 하락률을 나타냄
 - 경기도 접경 지역 중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낸 곳은 연천군 20.5%임. 인천시 접경 지역은 강화군 19.2%, 용진군 12.7%로 모두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냄

- 강원도는 춘천시 26.9%를 제외한 전지역이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냄. 접경 지역 전 지역 중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낸 곳 역시 철원군 12.0%로 강원도 접경 지역에 해당함
- 도시화가 진행된 소수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접경 지역에 인구, 사업체, 대규모 산업단지 부족으로 자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낙후도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도시화가 진행된 소수지역을 제외한 접경 지역 전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음. 이는 인구, 사업체, 대규모 공단이나 산업단지 등의 부족으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기초지자체의 상황을 반영함
 -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악화는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예산 부족, 지역 특화 산업 추진을 위한 투자제약으로 이어져 지역낙후도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인구와 사업체 유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산업발굴 및 개발지원이 필요함

〈표 II-11〉 접경 지역 재정자립도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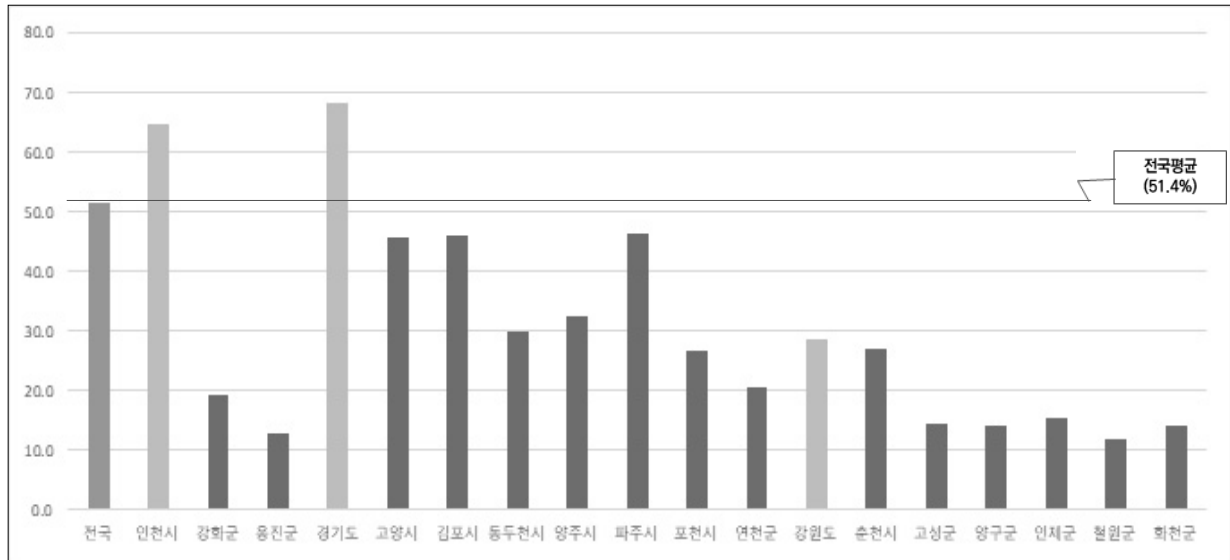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연평균 증감률
인천시	69.3	67.3	64.4	65.4	64.6	-0.87
강화군	13.2	12.9	14.9	16.2	19.2	4.80
옹진군	21.1	14.3	20.2	17.7	12.7	-6.15
경기도	72.5	71.6	66.6	70.1	68.4	-0.73
고양시	53.2	54.7	48.8	53.8	45.6	-1.91
김포시	54.0	53.5	52.6	51.9	46.2	-1.93
동두천시	27.0	19.6	18.5	31.7	30.0	1.33
양주시	37.6	31.8	34.5	38.1	32.5	-1.81
파주시	52.4	46.3	44.0	42.5	46.4	-1.51
포천시	32.1	29.5	28.2	31.8	26.8	-2.23
연천군	27.6	22.5	24.5	23.5	20.5	-3.65
강원도	27.5	26.6	25.9	29.1	28.6	0.49
춘천시	29.5	27.9	26.0	28.7	26.9	-1.15
고성군	13.8	11.8	13.4	14.9	14.3	0.45
양구군	13.7	15.2	17.0	17.5	14.1	0.36
인제군	13.9	11.1	11.5	12.0	15.3	1.21
철원군	10.4	10.7	12.1	12.8	12.0	1.80
화천군	12.9	11.8	12.1	13.7	14.0	1.03
전국	51.9	51.1	50.6	53.7	51.4	-0.12

※ 주 1: 세입과목개편 전 재정자립도
 자료: 통계청(해당연도)

〈그림 II-8〉 접경 지역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주: 세입과목개편 전 재정자립도

자료: 통계청(2019)

라. 지역발전 현황

● 지역발전지수로 살펴본 접경 지역 현황

+ 지수 개요

- ‘지역발전지수’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진단지표로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 터로서의 발전 정도를 진단함
 - 한국농업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지역발전지수(Regional Development Index)는 특별시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15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함
 - 시·군별 발전 정도, 잠재역량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군의 상대적인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발전정책의 목표설정과 성과측정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임
 - 시·군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 터로 개념화하고 각 영역의 발전 정도를 생활 서비스지수, 지역 경제력지수, 삶의 여유 공간지수, 주민 활력 지수 4개 부문 21개 지표로 진단함

〈표 II-12〉 지역발전지수 구성지표

부문		지표
삶터:	기초생활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주택 비율: 준공 28년 초과 주택 비율 식수 보급 및 하수처리 현대화: 상하수도 보급률
	교육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교육 기반: 1km²당 학교 수(초·중·고) 사교육 기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보건·복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서비스 질: 인구 천 명당 의료인 수 의료시설기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아동복지기반: 영유아(6세 미만) 천 명당 보육 시설 수 노인복지기반: 1km²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일터: 지역 경제력	산업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체 기반: 총사업체 수 경제 활동력: 지난 5년간 연평균 사업체 증감률 고용기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총 일자리 수 비율(사업체 종사자 수 + 농업종사자 수)
	주민소득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수준: 1인당 지방소득세
	지자체 재정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기반: 재정자립도
	지자체 경제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총생산(GRDP)
삶터: 삶의 여유 공간	녹색 휴양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 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공원)
	녹지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확보율: 녹지율(녹지: 임야, 염전,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문화휴양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시설: 문화기반시설 수(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체육시설: 인구 천 명당 마을 체육시설 수(마을 체육시설: 체육공원, 고수부지, 마을 공터, 아파트 단지, 약수터, 등산로, 도시공원, 기타)
공동체의 터: 주민 활력	인구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증가율: 연평균 인구 증가율(06~13년)
	인구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율: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
	인구 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출생률: 연앙인구 천 명 대비 출생자 비율

※ 자료: 2018 지역발전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12)

+ 2018년 진단결과

- 생활 서비스지수 순위: 접경 지역 중에서 상위 50개 시·군에 포함된 지역은 고양시, 동두천시, 춘천시, 양주시, 김포시, 파주시 순임
 - 생활 서비스지수 상위지역에는 경기도 시·군이 가장 많이 포함됨. 비수도권의 경우 춘천시와 같은 지방 중심도시들이 상위를 차지함
 - 원활한 생활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인구 규모가 크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유리함. 따라서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적은 군지역의 경우 생활 서비스 공급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나타남

- 접경 지역 중에서 생활 서비스지수 상위 50개 시·군에 포함된 지역은 고양시 12위, 동두천시 15위, 춘천시 26위, 양주시 32위, 김포시 44위, 파주시 48위 총 6곳임
- 2016년 순위와 비교했을 때, 고양시는 11위에서 1계단 하락, 동두천시는 16위에서 1계단 상승, 춘천시는 25위에서 1계단 하락, 양주시는 30위에서 2계단 하락, 김포시는 39위에서 5계단 하락, 파주시는 52위에서 4계단 상승함
- 지역 경제력지수 순위: 접경 지역 중에서 상위 50개 시·군에 포함된 지역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순으로 모두 경기도에 해당함
 - 지역 경제력지수 상위지역은 주로 서울과 부산 두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음. 수도권 남부와 수도권의 확장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한 충청권 북부지역에서도 경제력지수가 높게 나타남. 혁신도시와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경우 경제 상황이 개선되며 상위권에 진입하는 경향을 보임
 - 접경 지역 중에서 지역 경제력지수 상위 50개 시·군에 포함된 지역은 고양시 18위, 김포시 19위, 파주시 21위, 포천시 44위 총 4곳으로 모두 경기도에 해당함
 - 2016년 순위와 비교했을 때, 고양시는 26위에서 8계단 상승, 김포시는 18위에서 1계단 하락, 파주시는 28위에서 7계단 상승, 포천시는 44위로 동일함
- 삶의 여유 공간지수 순위: 접경 지역 중에서 상위 50개 시·군에 포함된 지역은 인제군,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순으로 모두 강원도에 해당함
 - 삶의 여유 공간지수 상위지역에는 쾌적한 자연환경과 문화 여가시설이 많은 지역이 포함됨. 산간지역, 다도해 지역, 수도권 중에서도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들이 상위권에 분포하여 다른 3개 지수 상위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 접경 지역 중에서 삶의 여유 공간지수 상위 50개 시·군에 포함된 지역은 모두 강원도에 해당함. 인제군 18위, 춘천시 21위, 화천군 22위, 양구군 31위, 고성군 40위로 총 5곳임
 - 2016년 순위와 비교했을 때, 인제군 18위, 춘천시 21위로 동일하고, 화천군은 23위에서 1계단 상승, 양구군은 31위로 동일, 고성군은 38위에서 2계단 하락함
- 주민 활력 지수 순위: 접경 지역 중에서 상위 50개 시·군에 포함된 지역은 서울에 인접한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와 군부대의 영향이 큰 인제군, 양구군임
 - 주민 활력 지수 상위지역은 대도시 인접 지역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임. 지역 경제력지수 상위 지역과 유사한 분포를 보여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인구 유입과 연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접경 지역 중에서 주민 활력 지수 상위 50개 시·군에 포함된 지역은 경기도 4곳, 강원도 2곳임. 김포시 5위, 파주시 19위, 인제군 29위, 고양시 35위, 양구군 37위, 양주시 42위

- 순임. 인제군과 양구군은 군지역으로 군부대 및 군인 가족의 영향이 큼
- 2016년 순위와 비교했을 때, 김포시는 2위에서 3계단 하락, 파주시는 14위에서 5계단 하락, 인제군은 28위에서 1계단 하락, 고양시는 31위에서 4계단 하락, 양구군은 35위에서 2계단 하락, 양주시는 46위에서 4계단 상승함
 - 종합지수 순위: 접경 지역 중에서 상위 50개 시·군에 포함된 지역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춘천시 순으로 서울 인접 지역 및 지방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상위권 시·군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임
 - 지역발전지수를 종합한 결과 수도권, 대도시권 시·군, 지방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상위권 시·군이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냄. 지역 경제력 상승, 수도권 및 광역시 확장에 따른 인접 지역 경제성장, 신도시 개발, 재건축,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 등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파악됨
 - 생활 서비스, 지역 경제력, 주민 활력 3개 부문 지수는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경제성장 및 활성화의 영향으로 농촌 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진단을 받음. 반면 삶의 여유 공간지수는 자연환경이 보전된 농촌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양호한 진단을 받음
 - 접경 지역 중에서 종합지수 상위 50개 시·군에 포함된 지역은 고양시 16위, 김포시 21위, 파주시 26위, 춘천시 43위 총 4곳임. 경기도 3개 지역이 삶의 여유 공간지수를 제외한 3개 부문에서 상위 50개 시·군에 포함된 반면, 강원도 춘천시는 생활 서비스지수와 삶의 여유 공간 2개 부분에서만 50위권에 포함됨
 - 2016년 순위와 비교했을 때, 고양시는 18위에서 2계단 상승, 김포시는 14위에서 7계단 하락, 파주시는 25위에서 1계단 하락, 춘천시는 45위에서 2계단 상승함

〈표 II-13〉 시·군 지역발전지수 진단결과

상위 50위 포함 접경 지역		종합 지수 순위		생활 서비스 지수 순위		지역 경제력 지수 순위		삶의 여유 공간 지수 순위		주민 활력 지수 순위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경 기 도	고양시	18	16	11	12	26	18			31	35
	김포시	14	21	39	44	18	19			2	5
	동두천시			16	15						
	양주시			30	32					46	42
	파주시	25	26	52	48	28	21			14	19
	포천시					44	44				
	연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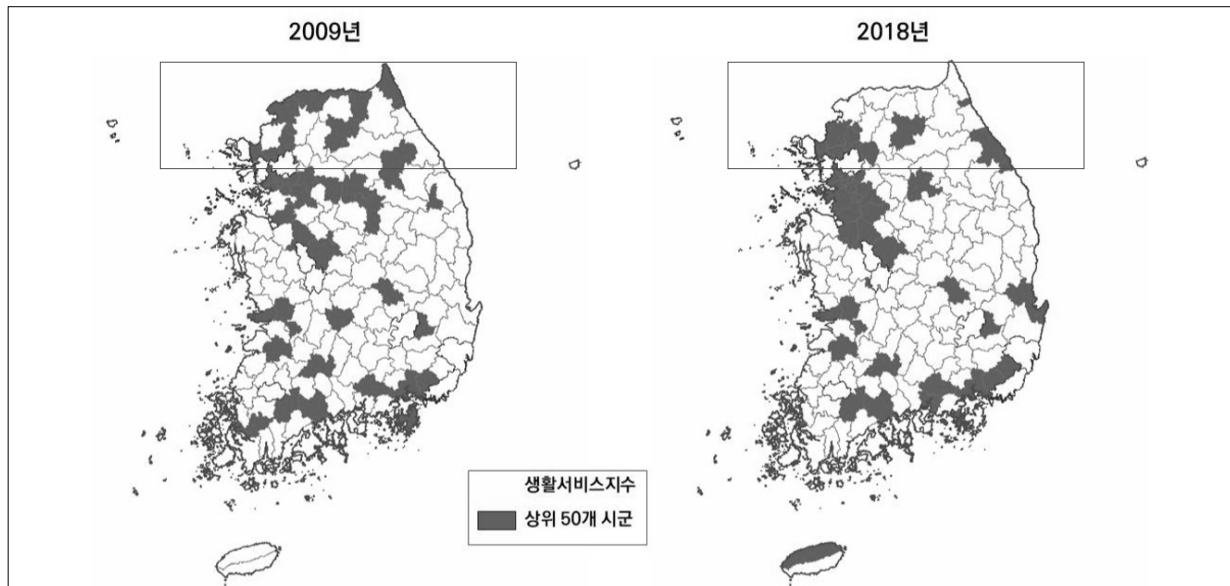
상위 50위 포함 접경 지역		종합 지수 순위		생활 서비스 지수 순위		지역 경제력 지수 순위		삶의 여유 공간 지수 순위		주민 활력 지수 순위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강 원 도	춘천시	45	43	25	26			21	21		
	고성군							38	40		
	양구군							31	31	35	37
	인제군							18	18	28	29
	철원군										
	화천군							23	22		

※ 자료: 2018 지역발전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12)

+ 2009~2018년 10년간 진단결과 변화

- 10년간 생활 서비스지수 진단결과 변화: 10년 전에는 상위권에 경기도 및 강원도 접경 지역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10년 후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다수 접경 지역이 제외됨
 - 2009년 지수 집계 이래 생활 서비스 지수의 상위 50개 지역에는 수도권, 대도시권 시·군, 지방 중심도시가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됨
 - 2009년에는 생활 서비스지수 상위 50개 지역에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 지역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음. 그러나 2018년에는 경기도에서 파주시가 50위권으로 진입하고 연천군은 제외됐으며, 강원도는 춘천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제외됨
 - 생활 서비스지수 향상에는 노후주택 정비, 상하수도 확충, 교육 및 의료시설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침.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는 공공자금뿐만 아니라 민간재원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못함
 - 경기도 접경 지역 중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과 강원도 접경 지역의 경우 도시개발을 통한 생활기반 확충, 인구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혜택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소외되어 접경 지역 간 양극화 역시 심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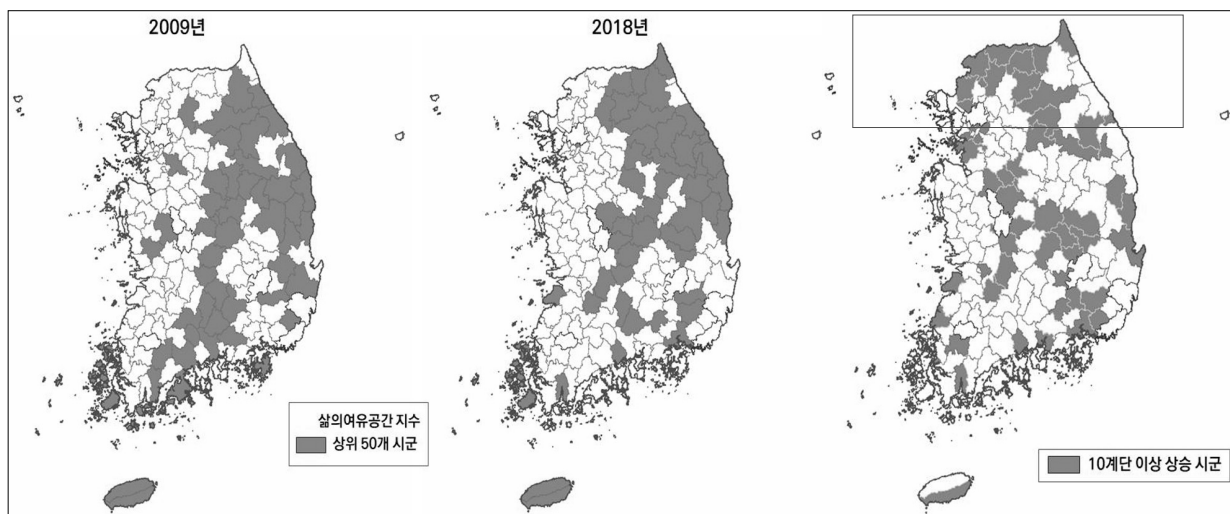
〈그림 II-9〉 생활 서비스지수 접경 지역 분포변화



※ 자료: 2018 지역발전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12)

- 10년간 지역 경제력지수 진단결과 변화: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접경 지역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접경 지역 전 지역이 상위권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10년간 그대로 유지됨
 - 2009년 지수 집계 이래로 상위권 시·군은 수도권, 그와 인접한 충청권, 동남권 산업지대에 분포하는 패턴을 유지해옴. 사업체, 일자리, 소득, 재정자립도 등으로 진단되는 지역 경제력 수준은 시·군의 입지여건과 높은 연관성을 지님
 - 2009년에도 서울시에 인접한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포천시 등 경기도 접경 지역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접경 지역 전 지역이 지역 경제력지수 상위권에 포함되지 못함. 이러한 경향은 10년 후인 2018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그림 II-10〉 삶의 여유 공간지수 접경 지역 분포변화



※ 자료: 2018 지역발전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12)

- 10년간 삶의 여유 공간지수 진단결과 변화: 10년간 생활 서비스지수 및 지역 경제력지수의 동반 상승 없이 해당 지수의 순위만 빠르게 상승한 접경 지역이 다수 등장함. 이는 도시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소외된 접경 지역의 현실을 보여줌
 - 삶의 여유 공간지수 상위권 지역에 농촌 지역이 다수 분포하는 경향은 2009년 이래 2018년 까지 지속되고 있음. 백두대간 지역을 중심으로 상위지역이 분포하는 패턴을 나타냄
 - 2009년에는 삶의 여유 공간지수 상위 50개 지역에 접경 지역 중 인제군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8년에는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접경 지역 모든 지역이 50위권에 포함됨. 특히 2009~2018년 10년간 삶의 여유 공간지수가 10계단 이상 빠르게 상승한 시·군에 경기도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등 대다수 접경 지역이 포함됨
 - 삶의 여유 공간지수는 도시공원, 녹지율, 문화시설, 마을 체육시설 등으로 진단됨. 고양시처럼 인구 규모가 큰 도시나 춘천시 같은 지방거점 도시의 경우 문화 여가 기반을 확충하는데 유리한 여건이라 삶의 여유 공간지수가 상승할 수 있음
 - 반면 양구군처럼 작은 인구 대비 도시공원 면적이나 녹지율이 높아서 순위가 상승하는 경우도 포함됨. 2009~2018년 10년간 생활 서비스지수나 지역 경제력지수의 동반 상승 없이 삶의 여유 공간지수 순위만 빠르게 상승한 접경 지역이 다수 등장한 것은 자연보전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도시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소외되어온 접경 지역의 현실을 보여줌
- 10년간 주민 활력 지수 진단결과 변화: 신도시로 개발된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접경 지역이 10년간 상위권에 진입하지 못한 채 정체 상태를 나타냄
 - 인구증가율, 고령화율, 조출생률 등 인구 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된 주민 활력 지수는 2009년 이후부터 수도권, 대도시권 시·군, 지방거점 도시, 충청권 일부 시·군이 상위권에 포함되는 양상을 유지해옴
 - 접경 지역의 경우 2009년에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역과 지방거점 도시인 춘천시가 주민 활력 지수 상위 50개 지역에 포함됨. 그러나 2018년에는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춘천시가 제외되고, 군부대의 영향이 큰 양구군과 인제군이 50위권에 진입함. 그 외 다른 지역은 10년간 상위권에 진입하지 못한 채 정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 10년간 종합지수 진단결과 변화: 상위권에 포함된 접경 지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경기도 소수지역을 제외한 접경 지역 전반에 지역발전 정체 또는 쇠퇴 현상이 나타남
 - 4개 부문 지수를 종합한 결과 전체적으로 수도권, 대도시권 시·군, 지방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상위권 시·군이 분포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음. 연도별로는 상위권 지역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는데, 2009년에는 수도권, 남동권, 강원권 일부에 상위지역이 분포한 반면 2018년에

는 전남 지역에서 상위권 시·군이 등장하는 경향을 보임

- 접경 지역의 경우 2009년에는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5개 지역과 강원도 춘천시 1개 지역으로 총 6곳이 상위 50개 지역에 포함됨. 그러나 2018년에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춘천시 4개 지역만 50위권을 유지함. 2009~2018년 10년간 10계단 이상 상승한 지역에도 파주시와 양구군 2곳만 포함됨
- 2009~2018년 10년간 생활 서비스, 지역 경제력, 삶의 여유 공간, 주민 활력으로 측정한 지역발전도 종합진단 결과, 신도시 개발의 혜택을 받은 경기도 소수지역을 제외한 접경 지역 전반에 정체 또는 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균형 발전지표로 살펴본 접경 지역 현황

+ 지표 개요

- ‘균형 발전지표’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발전수준을 객관지표와 주관지표로 종합진단하여 지역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 정책에 활용함
- 2019년 처음 발표된 균형 발전지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하에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발전수준을 객관적, 주관적으로 종합 진단하여 지역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됨
- 지역 간 발전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핵심지표와 다양한 생활여건을 반영한 부문 지표로 구성됨. 핵심지표에는 인구지표인 4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경제지표인 3개년 평균 재정자립도가 포함됨. 부문 지표에는 객관지표로 주거, 교통, 산업, 일자리, 문화지표가 적용되고 주관지표로 삶의 만족도 지표가 적용됨

〈표 II-14〉 균형 발전지표 구성

구분	부문	지표
핵심 지표	인구	◦ 연평균 인구증감률(1975~2015)
	경제	◦ 재정자립도 3개년(2015~2017) 평균
객관 지표	주거	◦ 노후주택비율, 빈집비율,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교통	◦ 도로포장율, 고속도로 IC 접근성, 고속·고속화 철도 접근성, 주차장 서비스권역(0.75km) 내 인구비율
	산업·일자리	◦ 최근 3개년 사업체 수 증감률(2015~2017년), 최근 3개년 종사자 수 증감률(2015~2017년), 지식기반산업집적도 3개년 평균(2015~2017), 상용 근로자 비중, 특허 건수, 연구개발인력당 연구개발비
	교육	◦ 유아(0~5세) 천 명당 보육 시설 수, 학령인구 천 명당 학교 수(초중고), 어린이집 서비스권역 내 영유아 인구비율,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

구분	부문	지표
	문화·여가	◦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천 명당 객석 수, 인구 십만 명당 예술 활동 건수,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안전	◦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119안전센터 1개당 담당 주민 수, 소방서 접근성, 경찰서 접근성
	환경	◦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면적, 녹지율, 1㎢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활공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보건·복지	◦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비율,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비 중,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내 노인 인구비율,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주관 지표	종합	◦ 현재 행복도, 지역 생활만족도
	주거	◦ 주거상태에 만족, 기초생활여건에 만족
	교통	◦ 대중교통 및 주차장 이용 편리
	산업·일자리	◦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음, 노력한 만큼 소득 창출
	교육	◦ 초중고생에게 좋은 학교 교육 여건, 어른들에게도 교육기회 충분, 보육 시설 충분
	문화·여가	◦ 문화/체육활동시설 접근이 편리, 문화/체육활동시설/프로그램 수준에 만족
	안전	◦ 자연재해 및 재난 등에 대한 예방과 대비책 충분, 밤거리 안전, 사회 안전체계 충분
	환경	◦ 소음, 악취,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서비스 등 만족, 자연환경에 만족,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 피해가 적음
	보건·복지	◦ 병/의원/약국 이용이 쉬움,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가 충분
	시민 참여·공동체	◦ 도움을 청할 이웃이 있음, 마을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

※ 자료: 2019 균형 발전지표, 국가 균형 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 2019년 진단결과

〈표 II-15〉 접경 지역 균형 발전지표 진단결과

구분		상위 25%	중위	하위 25%
광역 지자체	전체	4곳	9곳	4곳
	접경 지역	경기도(1위) 인천시(3위)		강원도(15위)
기초 지자체	전체	40곳	79곳	40곳
	접경 지역	경기(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파주시)	강원(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화천군) 경기(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인천(강화군, 옹진군)	

※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 광역지자체 순위: 경기도와 인천시는 균형 발전 상위 25%에, 강원도는 하위 25%에 포함됨
 - 전국 광역지자체 균형 발전지표 진단결과 균형 발전 상위 25%는 경기도, 울산시, 인천시, 서울시 순으로 집계됨. 하위 25%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순임
 - 수도권에 해당하는 광역 접경 지역인 경기도, 인천시와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접경 지역인 강원도 간 발전 격차가 나타남
- 기초지자체 순위: 경기도 신도시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접경 지역이 중위권에 포함되고, 지방거점 도시도 수도권 개발도시보다 발전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을 보여줌. 이는 수도권 중심의 극점사회와 지방쇠퇴 경향이 반영된 결과임
 - 광역지자체와 자치구를 제외한 159개 기초지자체의 균형 발전지표 진단결과 상위 10%인 16곳 모두 경기도 시가 차지함. 여기에는 접경 지역인 고양시와 김포시가 포함됨
 - 상위 25%인 40곳 중 경기도가 24곳을 차지함. 여기에는 양주시와 파주시가 추가로 포함됨. 하위 25%에 경기도 기초지자체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음
 - 경기도 4개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접경 지역 모두 중위 79곳에 포함됨. 경기도 내에서도 신도시 개발 여부에 따라 발전수준에 격차가 나타나고, 접경 지역 내에서도 수도권 접근성 및 입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함. 춘천시와 같은 지방거점 도시도 수도권 개발도시에 비하면 발전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임
 - 균형 발전지표에서 나타난 지역 간 격차는 수도권 중심의 극점사회와 지방쇠퇴를 보여주고 있으며, 접경 지역에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있음

● 지방소멸 위험지수로 살펴본 접경 지역 현황

+ 지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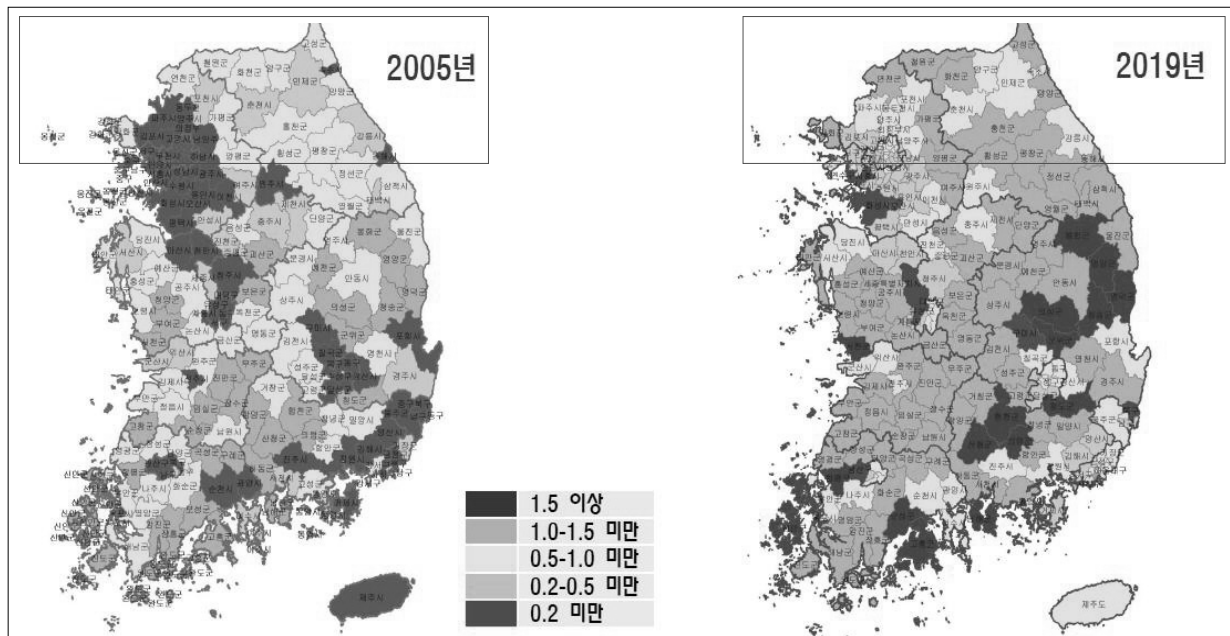
-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지역공동체의 세대 불균형과 미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수임
 -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지역공동체의 세대 불균형과 미래 지속 가능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비율로 산출함
 - 저위험(1.5 이상), 보통(1.0~1.5 미만), 주의(0.5~1.0 미만), 위험진입(0.2~0.5 미만), 고위험(0.2 미만)의 5등급으로 구분됨. 인구 재생산 주기를 고려할 때, 지수가 0.5 미만일 경우 해당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붕괴하고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한다는 의미를 지님

+ 2019년 진단결과

- 소멸 위험지수 진단결과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고, 강원도는 ‘주의’ 단계로 ‘위험진입’ 단계 직전에 놓여있음

-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평균지수는 0.84로 ‘주의’ 단계임. 비수도권의 모든 ‘도’ 지역에서 소멸 위험지수가 1 미만으로 나타남
- 전국 17개 시·군 중에서 소멸 위험지수 1 이상인 지역은 7곳으로 세종시, 경기도, 울산시, 인천시,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 순임. 상위권에 포함된 경기도와 인천시의 소멸 위험지수는 각각 1.09와 1.05로 ‘보통’ 단계에 해당함
- 강원도는 전라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과 함께 하위 4개 지역에 포함됨. 강원도의 소멸 위험지수는 0.54로 ‘주의’ 단계에 해당하며 ‘위험진입’ 직전 단계에 있음

〈그림 II-11〉 시·군 접경 지역 소멸 위험지수 현황



※ 자료: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자료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9)

- 15개 시·군 접경 지역 대다수가 소멸 위험지수 ‘주의 및 위험진입’ 단계에 해당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능 저하가 우려됨
- 2019년 10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은 97곳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함. 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곳, 2018년 89곳으로 매해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 15개 시·군 접경 지역의 경우 2005년에는 ‘저위험’ 단계 5곳, ‘보통’ 단계 3곳, ‘주의’ 단계 7곳이었음. 그러나 2019년에는 ‘보통’ 단계가 2곳에 불과하고 ‘주의’ 단계가 7곳, ‘위험진입’ 단계가 6곳으로 대폭 증가함
- 인구 규모가 큰 고양시와 인구증가율이 높은 김포시만 소멸 위험지수 ‘보통’ 단계에 해당함.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은 ‘주의’ 단계에 해당함. 도서

산간지역이며 DMZ에 인접한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고성군은 ‘위험진입’ 단계에 들어섬.

- 지방소멸은 교육 소멸, 1인 가구와 빈집의 증가, 지방재정의 악화, 일자리 감소를 불러오고, 이로 인한 인구유출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발생함. 15개 시·군 접경 지역 대다수가 소멸 위험지수 ‘주의 및 위험진입’ 단계에 해당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기능 저하가 우려됨

2 접경 지역 산업 현황

2.1 사업체 현황

가. 사업체 현황

● 시·도 접경 지역 현황

+ 시·도 접경 지역 사업체 수와 비중

- 사업체 수로 경기도는 전국 1위, 인천시는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성장률로 5위, 강원도는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성장률로 12위를 차지함
 - 2017년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202만 개로 2009년 151만 개 기록 이후 2009~2017년간 연평균 3.71%의 증가율을 나타냄
 - 사업체 수 최상위 2개 시·군은 경기도 49만 개, 서울시 45만 개로 두 지역의 사업체 수가 전국의 47%를 차지함. 2009년에 사업체 수 34만 개로 36만 개인 서울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경기도는 2017년 1위로 올라섬
 - 3, 4위를 차지한 부산시의 사업체 수는 14만 개, 경상남도는 13만 개로 최상위 2개 시·도 사업체 수 대비 1/3 수준을 나타냄. 사업체 수 10만 개 이상을 보유한 상위 4개 시·도에 전국 사업체의 60%가 집중되어 있음. 서울과 부산 두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권 편중 현상이 사업체 분포에서도 드러남
 - 인천시의 사업체 수는 9.7만 개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9.6만 개와 비슷한 수준임. 2009년도 대구시 7.6만 개에 이어 7.1만 개로 6위를 차지했던 인천시는 2009~2017년간 연평균 3.91%의 증가율로 성장해 2017년 5위로 올라섬
 - 강원도는 사업체 수 6만 개 미만의 하위권 지역에 포함됨. 충청북도 5.9만 명, 대전시 5.6만 명과 비슷한 수준임. 2009년 사업체 수 4.6만 개로 11위를 차지했던 강원도는 2009~2017년간 2.96%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며 2017년 12위로 순위가 하락함

● 시·군 접경 지역 현황

+ 시·군 접경 지역 사업체 수와 비중

- 접경 지역 사업체 수는 전국 대비 5.7%를 차지하며, 광역지자체별로 인천시에서는 2.4%, 경기도에서는 19.6%, 강원도에서는 25.7%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15개 시·군 접경 지역의 사업체 수는 11만 개로 전국 사업체 수의 5.7%를 차지함. 이는 사업체 수 9.7만 개로 전국 5위를 차지한 인천시, 12.6만 개로 전국 4위를 차지한 경상남도의 중간 수준임
- 2009년 15개 시·군 접경 지역의 사업체 수는 7.7만 개로 당시 전국 5위를 차지한 대구시 7.6만 개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2009~2017년간 시·군 접경 지역 사업체 수 연평균 증가율은 4.94%로 전국 평균인 3.71%보다 높게 나타남
- 2017년 인천시 전체 사업체 수에서 접경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2009년 2.7%에 비해 감소함. 경기도는 2009년 18.7%에서 2017년 19.6%로 다소 증가했고, 강원도는 25.2%에서 25.7%로 비슷한 비중을 나타냄
- 사업체 수 상위 3개 시·군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순으로 모두 경기도에 속하며 성장률도 전국 평균 대비 현저하게 높아, 해당 지역 편중 현상이 2009년 59%에서 2017년 63%로 심화되는 추세임
 - 2017년 기준 시·군 접경 지역의 사업체 수 상위 3개 지역은 모두 경기도에 해당함. 고양시의 사업체 수는 3.8만 개로 접경 지역 전체 사업체 수의 33%를 차지함. 김포시 1.8만 개, 파주시 1.7만 개로 상위 3개 지역에 접경 지역 전체 사업체의 64%가 집중되어 있음. 여기에 강원도 춘천시의 사업체 수 1만 개를 더하면 73%가 4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상위 4개 시·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의 사업체 수 합계는 3.1만 개로 고양시 1개 지역의 사업체 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사업체 수 1천 개 이상 2천 개 미만인 시·군은 강화군, 연천군, 철원군, 고성군, 인제군 5곳임. 1천 개도 안 되는 시·군은 양구군, 화천군, 용진군 3곳임
 - 사업체 수 2천 개 이상의 중상위권에 포함된 시·군은 강원도 춘천시를 제외하고 모두 경기도에 해당함. 2천 개 미만의 중하위권에 포함된 시·군은 경기도 연천군을 제외하고 모두 인천시와 강원도에 해당함
 - 사업체 수 상위권 지역 중 강원도 춘천시만 2009~2017년간 연평균 증가율 3.48%로 전국 평균인 3.71% 대비 낮은 수준을 나타냄.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등 경기도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모두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사업체 수 중하위권 지역 중 동두천시, 강화군, 연천군은 2009~2017년간 연평균 증가율 1.7%, 철원군 2.38%로 전국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사업체 수로 하위권에 속하는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등 군지역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 측면에서는 4~5%대로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냄
 - 2009년과 2017년간 15개 접경 지역의 사업체 수 순위에는 변동이 없음. 그러나 사업체 수 상위 3개 지역 편중 현상은 2009년 59%에서 2017년 63%로, 상위 4개 지역 편중 현상은 69%에서 73%로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표 II-16〉 접경 지역 사업체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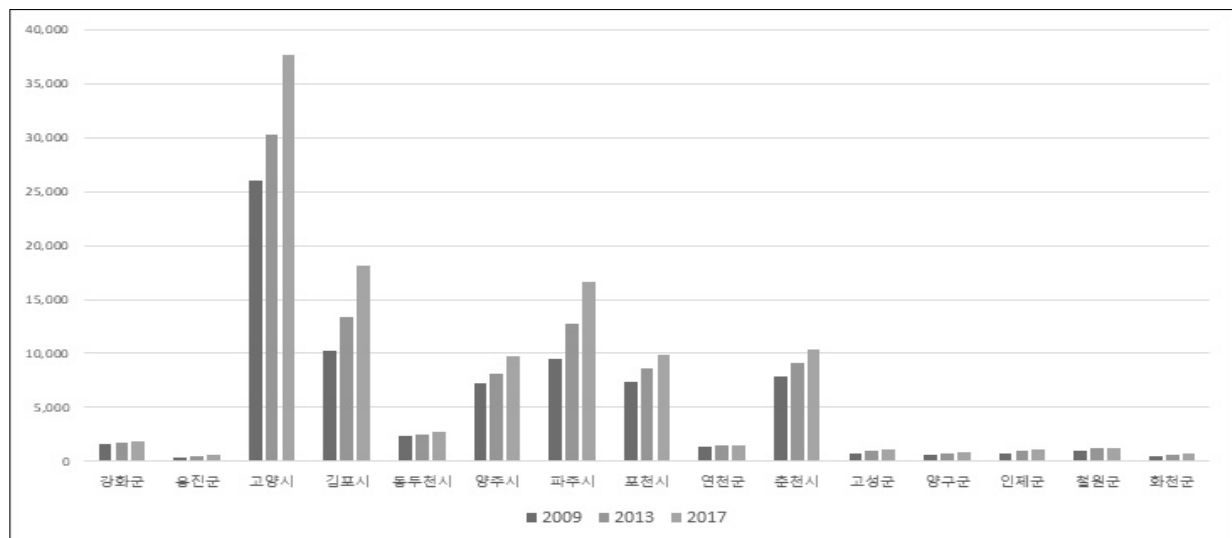
(단위: 개, %)

구 분	2009	비중	2013	비중	2017	비중	연평균 증감률
인천시	71,359	100	82,558	100	96,985	100	3.91
강화군	1,577	2.21	1,711	2.07	1,806	1.86	1.71
옹진군	384	0.54	463	0.56	552	0.57	4.64
경기도	343,356	100	414,125	100	492,066	100	4.60
고양시	26,043	7.58	30,313	7.32	37,631	7.65	4.71
김포시	10,235	2.98	13,356	3.23	18,167	3.69	7.44
동두천시	2,393	0.70	2,444	0.59	2,744	0.56	1.73
양주시	7,246	2.11	8,160	1.97	9,754	1.98	3.79
파주시	9,487	2.76	12,806	3.09	16,573	3.37	7.22
포천시	7,347	2.14	8,609	2.08	9,901	2.01	3.80
연천군	1,290	0.38	1,415	0.34	1,477	0.30	1.71
강원도	45,715	100	52,959	100	59,771	100	3.41
춘천시	7,903	17.29	9,084	17.15	10,394	17.39	3.48
고성군	786	1.72	939	1.77	1,094	1.83	4.22
양구군	542	1.19	675	1.27	796	1.33	4.92
인제군	779	1.70	966	1.82	1,081	1.81	4.18
철원군	1,032	2.26	1,257	2.37	1,246	2.08	2.38
화천군	492	1.08	604	1.14	780	1.30	5.93
전국	1,507,158	100	1,752,503	100	2,017,707	100	3.71
접경 지역 전체	77,536	5.14	92,802	5.30	113,996	5.65	4.94

※ 주: 사업체 수는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 실태 현황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II-12〉 접경 지역 사업체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 주: 사업체 수는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 실태 현황 기준
자료: 통계청

나. 규모별 사업체 현황

● 시·도 접경 지역 현황

+ 시·도 접경 지역 규모별 사업체 수와 구성비

- 수도권인 인천시와 경기도는 영세업체의 비중이 작고 대규모 업체의 증가율이 높은 반면,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는 강원도는 영세업체의 비중이 높고 대규모 업체의 증가가 저조한 상황임
 - 2017년 전국 202만 개 사업체 중 종사자 수 1~4인 규모의 사업체가 125만 개로 전체의 62.1%를 차지함. 5~9인 규모의 사업체 46만 개 22.9%를 포함하면 10인 미만 사업체가 85%를 차지하고 있음. 10~299인 사업체는 14.8%, 300인 이상 사업체는 0.17%를 차지함. 2009~2017년간 5~9인 규모 사업체의 연평균 증가율이 4.94%로 가장 높았고, 1~4인 규모 사업체의 증가율이 3.35%로 가장 낮았음
 - 인천시는 1~4인 규모 사업체가 60%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5~9인 규모 사업체는 24.1%로 전국 평균보다 높음. 10인 미만 사업체가 84.1%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10~299인 사업체는 15.7%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0.15%로 전국 평균보다 낮음. 그러나 2009~2017년간 300인 이상 사업체가 91개에서 143개로 증가해 연평균 5.8%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이 중 1,000인 이상 사업체는 2009년 8개에서 2017년 24개로 3배가량 증가함
 - 경기도는 1~4인 규모 사업체가 59.3%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5~9인 규모 사업체는 25.2%로 전국 평균보다 높음. 10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의 84.5%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과 비슷함. 10~299인 사업체는 15.3%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0.12%로 전국 평균보다 낮음. 2009~2017년간 5~9인 규모 사업체가 6.12%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300인 이상 사업체도 5.84%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전국 300인 이상 사업체 3,434개 중 17.4%인 597개, 1,000인 이상 사업체 579개 중 14.9%인 86개가 경기도에 있음
 - 강원도는 1~4인 규모 사업체가 64.9%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5~9인 규모 사업체가 21.5%로 전국 평균보다 낮음. 1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의 86.3%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10~299인 사업체는 13.6%, 300인 이상 사업체는 0.1%로 전국 평균보다 낮음. 2009~2017년간 300인 이상 사업체가 5.31%의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으나 59개로 인천시 대기업을 40%, 경기도 대기업을 10% 수준임. 1,0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2009년에는 인천시와 유사한 7개였으나 2017년에는 인천시의 절반도 안 되는 10개에 불과함
- 수도권에 해당하는 인천시와 경기도의 경우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1~4인 규모의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체 비중이 작고, 5~9인, 10~299인의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이 높은 편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반면,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는 강원도의 경우 전국 대비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 비중만 높게 나타나고 그 이상 규모의 사업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 특히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수적인 측면, 증가속도 측면에서 인천시, 경기도에 비해 저조하거나 정체된 상황임

● 시·군 접경 지역 현황

+ 시·군 접경 지역 규모별 사업체 수와 구성비

- 용진군, 양구군, 화천군 등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 산간지역에서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수도권에 위치하며 산업단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영세사업체의 비중이 작게 나타남
 - 2017년 기준 15개 시·군 접경 지역 중에서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인천시와 강원도 접경 지역 전체와 경기도 연천군 1곳으로 총 9곳임. 전국 평균보다 영세사업체 비중이 낮은 지역은 6곳으로 모두 경기도에 해당함
 - 1~4인 사업체 비중이 높은 3개 지역은 용진군 72.6%, 양구군 69.4%, 화천군 69.0%로 전국 평균인 62.1%, 인천시 전체 평균 60.0%, 경기도 전체 평균 59.3%보다 구성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남.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 산간지역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작고 영세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1~4인 사업체 비중이 낮은 3개 지역은 포천시 53.7%, 김포시 54.4%, 파주시 54.8%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59.3%보다도 구성비가 낮게 나타남. 수도권에 위치하며 산업단지를 보유한 경우 영세사업체의 구성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1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높은 3개 지역도 용진군, 화천군, 양구군으로 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높은 지역과 같으며 90%의 높은 구성비를 나타냄. 비중이 낮은 3개 지역 역시 파주시, 포천시, 김포시로 같으며 82% 내외의 낮은 구성비를 나타냄
- 파주시, 포천시, 김포시 등 신도시 개발 및 산업단지 유치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10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의 대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파주시를 제외한 접경 지역 전 지역의 대규모 사업체 증가 추세가 정체된 상황임
 - 2017년 기준 10~299인 사업체 비중은 10인 미만 사업체 비중과 정반대로 나타남. 10~299인 사업체 비중이 높은 3개 지역은 1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낮은 지역과 같음. 파주시 17.3%, 포천시 17.2%, 김포시 16.9%로 전국 평균 14.8%, 경기도 전체 평균 15.3%, 인천시 전체 평균 15.7%보다 구성비가 높게 나타남
 - 10~299인 사업체 비중이 낮은 3개 지역은 1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높은 지역과 같음. 용진군 9.2%, 화천군 9.9%, 양구군 10.9%로 구성비가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게 나타남

- 2009년 10~299인 사업체 비중 4위였던 인제군이 2017년에는 9위로 하락하고 인제군에 이어 5위를 차지했던 포천시는 2위로 올라섬. 신도시 개발 및 산업단지 유치 효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혜택을 받은 지역과 받지 못한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
- 2009~2017년간 접경 지역 15개 시·군 중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를 보유한 지역은 8곳뿐임. 2017년 기준 고양시 25개, 파주시 17개, 춘천시 11개, 김포시 4개, 동두천시 2개, 포천시 2개, 용진군 1개, 양주시 1개 순임. 1,000인 이상 사업체는 고양시 5개, 파주시 2개, 춘천시 1개로 3개 지역에만 있음
- 2009년 300인 이상 사업체 8개에서 2017년 17개로 2배 이상 증가한 파주시를 제외하고 접경 지역 모든 지역의 대규모 사업체 증가 추세는 정체된 상황임. 2009~2017년간 대규모 사업체의 진입이 전무한 강화군, 연천군,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화천군의 경우 대부분 도서 산간 지역으로 집중개발 대상 지역이 아니므로 향후에도 대기업의 진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표 II-17〉 접경 지역 규모별 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09	구성비	2013	구성비	2017	구성비	연평균 증감률
인천시	1~4인	44,119	61.83	50,409	61.06	58,232	60.04	3.53
	5~9인	15,714	22.02	18,666	22.61	23,358	24.08	5.08
	10~299인	11,435	16.02	13,370	16.19	15,252	15.73	3.67
	300인 이상	91	0.13	113	0.14	143	0.15	5.81
강화군	1~4인	1,089	69.06	1,211	70.78	1,235	68.38	1.59
	5~9인	290	18.39	283	16.54	325	18.00	1.43
	10~299인	198	12.56	217	12.68	246	13.62	2.75
	300인 이상	0	0	0	0	0	0	0
용진군	1~4인	309	80.47	352	76.03	401	72.64	3.31
	5~9인	50	13.02	70	15.12	99	17.93	8.91
	10~299인	24	6.25	40	8.64	51	9.24	9.88
	300인 이상	1	0.26	1	0.22	1	0.18	0
경기도	1~4인	211,759	61.67	252,473	60.97	291,851	59.31	4.09
	5~9인	77,204	22.49	96,422	23.28	124,132	25.23	6.12
	10~299인	54,014	15.73	64,736	15.63	75,486	15.34	4.27
	300인 이상	379	0.11	494	0.12	597	0.12	5.84
고양시	1~4인	16,516	63.42	19,264	63.55	23,235	61.74	4.36
	5~9인	5,858	22.49	7,046	23.24	9,372	24.90	6.05
	10~299인	3,646	14.00	3,982	13.14	4,999	13.28	4.02
	300인 이상	23	0.09	21	0.07	25	0.07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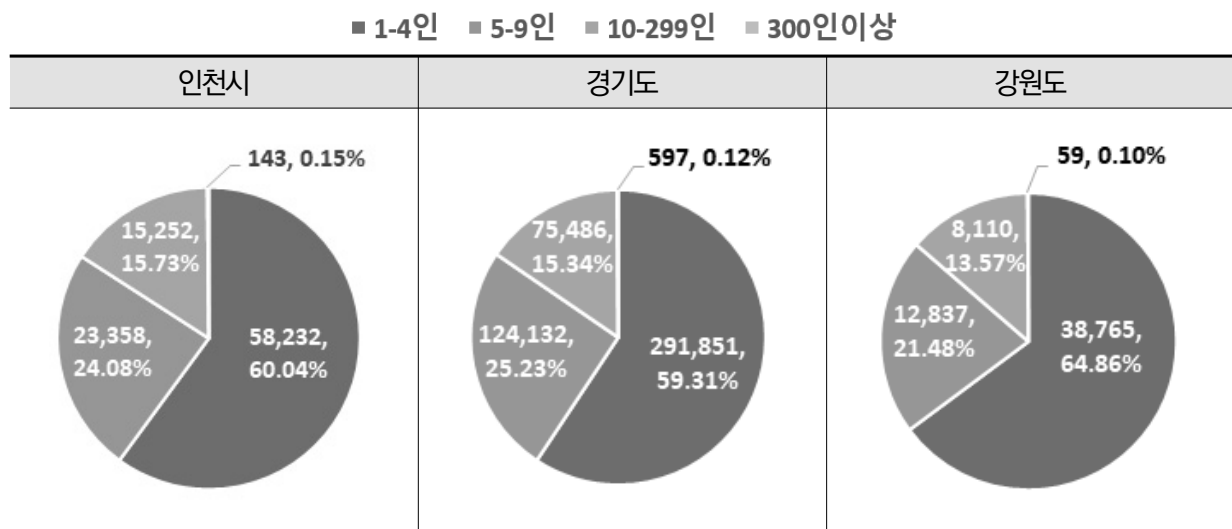
구 분		2009	구성비	2013	구성비	2017	구성비	연평균 증감률
김포시	1~4인	5,316	51.94	7,170	53.68	9,891	54.44	8.07
	5~9인	2,864	27.98	3,764	28.18	5,206	28.66	7.76
	10~299인	2,051	20.04	2,416	18.09	3,066	16.88	5.15
	300인 이상	4	0.04	6	0.04	4	0.02	0
동두천시	1~4인	1,571	65.65	1,520	62.19	1,679	61.19	0.83
	5~9인	524	21.90	585	23.94	653	23.80	2.79
	10~299인	296	12.37	336	13.75	410	14.94	4.16
	300인 이상	2	0.08	3	0.12	2	0.07	0
양주시	1~4인	4,356	60.12	4,838	59.29	5,602	57.43	3.19
	5~9인	1,564	21.58	1,946	23.85	2,534	25.98	6.22
	10~299인	1,323	18.26	1,373	16.83	1,617	16.58	2.54
	300인 이상	3	0.04	3	0.04	1	0.01	-12.83
파주시	1~4인	5,430	57.24	7,331	57.25	9,084	54.81	6.64
	5~9인	2,236	23.57	3,178	24.82	4,598	27.74	9.43
	10~299인	1,813	19.11	2,285	17.84	2,874	17.34	5.93
	300인 이상	8	0.08	12	0.09	17	0.10	9.88
포천시	1~4인	4,202	57.19	4,780	55.52	5,314	53.67	2.98
	5~9인	1,980	26.95	2,388	27.74	2,885	29.14	4.82
	10~299인	1,164	15.84	1,439	16.72	1,700	17.17	4.85
	300인 이상	1	0.01	2	0.02	2	0.02	9.05
연천군	1~4인	873	67.67	962	67.99	944	63.91	0.98
	5~9인	258	20.00	268	18.94	301	20.38	1.95
	10~299인	159	12.33	185	13.07	232	15.71	4.84
	300인 이상	0	0	0	0	0	0	0
강원도	1~4인	30,798	67.37	35,250	66.56	38,765	64.86	2.92
	5~9인	8,723	19.08	10,452	19.74	12,837	21.48	4.95
	10~299인	6,155	13.46	7,209	13.61	8,110	13.57	3.51
	300인 이상	39	0.09	48	0.09	59	0.10	5.31
춘천시	1~4인	5,183	65.58	5,900	64.95	6,546	62.98	2.96
	5~9인	1,604	20.30	1,904	20.96	2,362	22.72	4.96
	10~299인	1,108	14.02	1,269	13.97	1,475	14.19	3.64
	300인 이상	8	0.10	11	0.12	11	0.11	4.06
고성군	1~4인	544	69.21	661	70.39	733	67.00	3.80
	5~9인	137	17.43	154	16.40	231	21.12	6.75
	10~299인	105	13.36	124	13.21	130	11.88	2.71
	300인 이상	0	0	0	0	0	0	0
양구군	1~4인	372	68.63	459	68.00	552	69.35	5.06
	5~9인	90	16.61	128	18.96	157	19.72	7.20
	10~299인	80	14.76	88	13.04	87	10.93	1.05
	300인 이상	0	0	0	0	0	0	0

구 분		2009	구성비	2013	구성비	2017	구성비	연평균 증감률
인제군	1~4인	507	65.08	643	66.56	684	63.27	3.81
	5~9인	146	18.74	175	18.12	251	23.22	7.01
	10~299인	126	16.17	148	15.32	146	13.51	1.86
	300인 이상	0	0	0	0	0	0	0
철원군	1~4인	719	69.67	840	66.83	812	65.17	1.53
	5~9인	184	17.83	269	21.40	267	21.43	4.76
	10~299인	129	12.50	148	11.77	167	13.40	3.28
	300인 이상	0	0	0	0	0	0	0
화천군	1~4인	331	67.28	402	66.56	538	68.97	6.26
	5~9인	118	23.98	122	20.20	165	21.15	4.28
	10~299인	43	8.74	80	13.25	77	9.87	7.55
	300인 이상	0	0	0	0	0	0	0
전국	1~4인	963,366	63.92	1,107,398	63.19	1,253,681	62.13	3.35
	5~9인	313,960	20.83	379,332	21.65	461,609	22.88	4.94
	10~299인	227,349	15.08	262,867	15.00	298,983	14.82	3.48
	300인 이상	2,483	0.16	2,906	0.17	3,434	0.17	4.14
접경 지역 전체	1~4인	47,318	61.03	56,333	60.70	67,250	58.99	4.49
	5~9인	17,903	23.09	22,280	24.01	29,406	25.80	6.40
	10~299인	12,265	15.82	14,130	15.23	17,277	15.16	4.38
	300인 이상	50	0.06	59	0.06	63	0.06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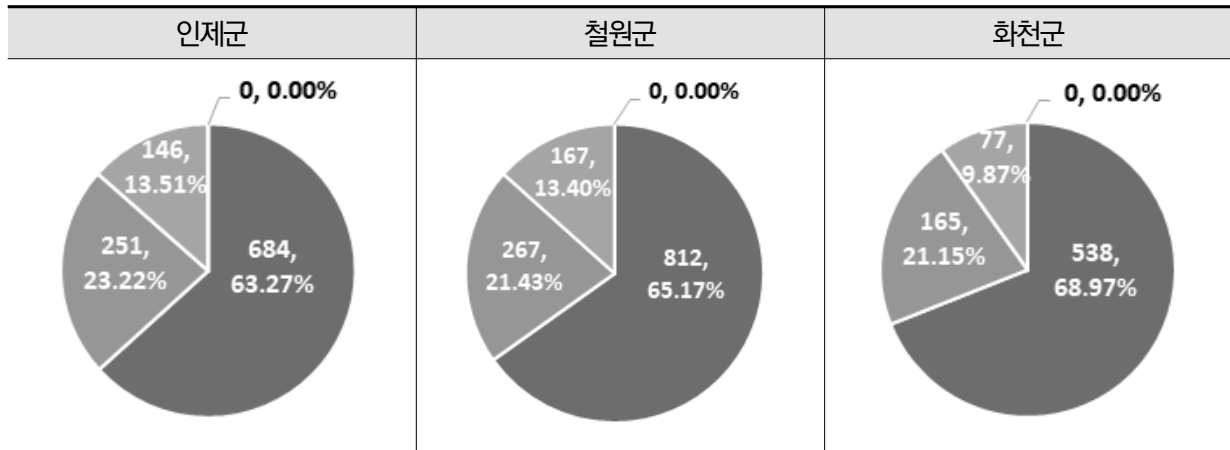
※ 주: 사업체 수는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II-13〉 접경 지역 규모별 사업체 수 구성비

(단위: 개, %)







※ 주: 사업체 수는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기준
 자료: 통계청(2017)

2.2 종사자 현황

가. 종사자 현황

● 시·도 접경 지역 현황

+ 시·도 접경 지역 종사자 수와 비중

- 경기도는 종사자 수 전국 2위로 최상위권, 인천시는 6위로 중상위권, 강원도는 15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함
 - 2017년 기준 전국 총종사자 수는 약 1천 8백만 명임. 2009년 1천 3백만 명을 기록한 이래 연평균 3.8%의 증가율을 나타냄
 - 종사자 수 4백만 명 이상인 최상위 2개 시·도는 서울시와 경기도임. 두 지역에 전체 종사자의 49%가 집중되어 있음. 종사자 수 1백만 명 이상인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포함할 경우 상위 4개 지역에 전체 종사자의 61%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인천시는 종사자 수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의 중위권 7개 시·도 중 상위를 차지함. 6위를 차지한 인천시의 종사자 수는 84만 명으로 5위인 경상북도와 비슷한 규모임
 - 강원도는 종사자 수 50만 명 미만인 하위권 6개 시·도 중에서도 하위에 해당함. 강원도의 종사자 수는 44만 명으로 울산시와 비슷한 규모임. 면적과 인구 규모가 작고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하면 강원도가 종사자 수 최하위 시·도에 해당함
 - 2009년과 2017년간 시·도 종사자 수 순위변동은 거의 없음. 다만 수도권 확장과 혁신도시 입지의 영향을 받은 충청북도와 전라남도의 종사자 수 증가로 두 지역의 순위는 1계단씩 상승함. 그로 인해 전라북도가 2계단 하락하며 중위에서 중하위로 밀려남
- 서울과 부산 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권에 종사자가 밀집되어 있으며 접경 지역 시·도인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에는 비슷한 등위의 시·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가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냄

- 종사자 편중도는 사업체 편중도와 유사한 수치를 보임. 상위 2개 시·도인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국 사업체 및 종사자의 50%가량이,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포함한 상위 4개 시·도에 60%가량이 밀집되어 있음. 서울과 부산 두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권이 활성화되어 있음
- 사업체 수로 1위인 경기도가 종사자 수로는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경기도보다 서울시에 대규모 사업체들이 더 많이 분포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체 수로 5위인 인천시가 종사자 수로는 6위를 기록하고, 12위인 강원도가 15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비슷한 등위의 시·도 지역에 비해 인천시, 강원도에 분포한 사업체들의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것으로 판단됨

● 시·군 접경 지역 현황

+ 시·군 접경 지역 종사자 수와 비중

- 시·군 접경 지역 종사자 수는 전국 대비 4.8%를 차지하며, 광역지자체별로 인천시에서는 1.8%, 경기도에서는 17.4%, 강원도에서는 24.6%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15개 시·군 접경 지역의 총종사자 수는 86만 명으로 전국 총종사자의 4.8%를 차지함. 이는 종사자 수 84만 명 규모의 경상북도, 인천시와 비슷한 수준임
 - 2009년 15개 시·군 접경 지역의 총종사자 수는 57만 명으로 당시 종사자 수 63만 명을 기록한 경상북도, 61만 명의 인천시보다 작은 규모였음. 2009~2017년간 시·군 접경 지역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5.25%로 전국 평균 3.8%, 경상북도 3.7%, 인천시 4.08%보다 높게 나타남
 - 2017년 인천시 전체 종사자 수에서 접경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하며 2009년 대비 거의 변동 없음. 경기도는 2009년 16.6%에서 2017년 17.4%로 다소 증가했고, 강원도는 24.6% 내외로 비슷한 비중을 유지함
 - 사업체 수 비중에 비해 종사자 수 비중이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시·군 접경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의 규모가 전국 또는 해당 광역지자체의 타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됨
- 종사자 수 상위 3개 시·군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로 모두 경기도에 해당하며 사업체 수 상위 3개 시·군과 동일함. 해당 지역 편중 현상도 2009년 61%에서 2017년 65%로 심화되는 추세임
 - 2017년 기준 종사자 수 10만 명 이상을 기록한 상위 3개 시·군은 고양시 26만 명, 파주시 16만 명, 김포시 13만 명으로 모두 경기도에 해당함. 3곳에 접경 지역 전체 종사자의 65%가

분포되어 있음

- 4위를 차지한 강원도 춘천시의 종사자 수는 7만 명대로 5, 6위를 차지한 경기도 포천시, 양주시와 비슷한 규모임. 3위 김포시와 4위 춘천시와의 격차는 2009년 1.36배에서 2017년 1.7배로 벌어지고 있는 추세임
- 종사자 수 2만 명 이상의 중상위권 시·군은 강원도 춘천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경기도에 해당함. 2만 명 미만의 중하위권 시·군은 경기도 연천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강원도와 인천시에 해당함
- 2009년과 2017년간 15개 시·군 접경 지역의 종사자 수 순위는 2개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게 나타남. 2009년 6위를 차지했던 포천시가 2017년 5위로, 2009년 12위였던 고성군이 2017년 11위로 1계단씩 상승함
- 15개 시·군 접경 지역의 종사자 수 순위와 사업체 수 순위는 2, 3위를 제외하고 동일하게 나타남. 사업체 수 2위인 김포시가 종사자 수로는 3위를 기록하고, 사업체 수 3위인 파주시가 종사자 수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김포시보다 파주시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체들이 분포된 것으로 판단됨

〈표 II-18〉 접경 지역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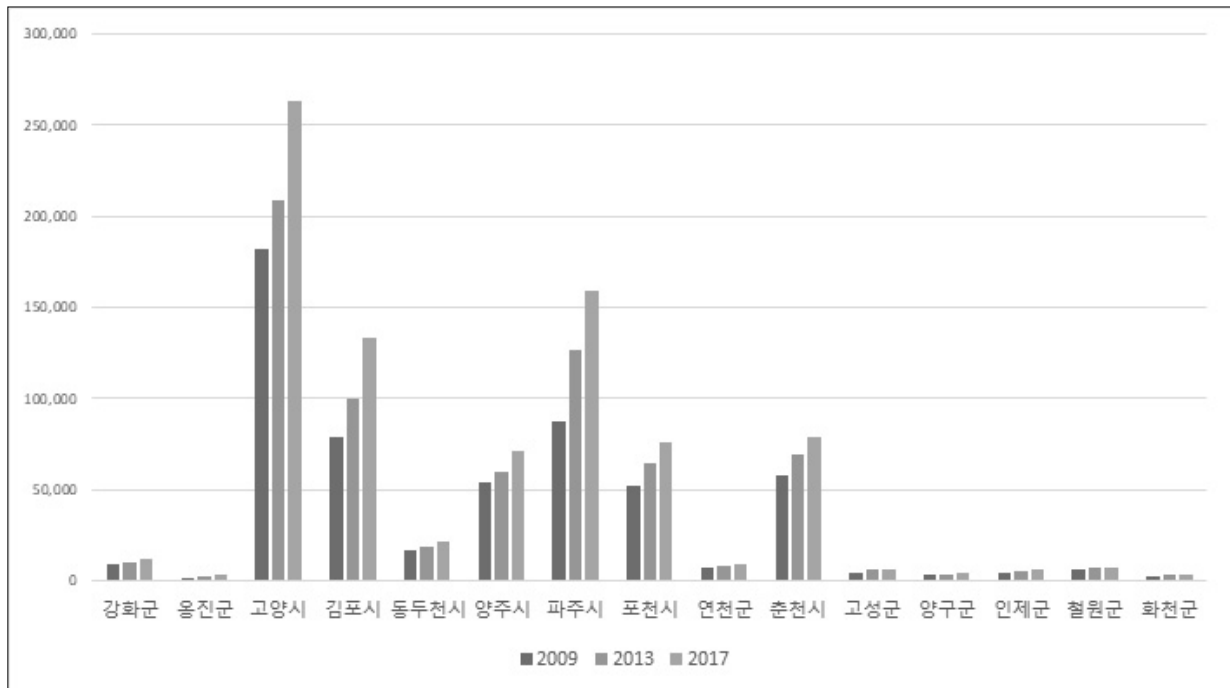
구 분	2009	비중	2013	비중	2017	비중	연평균 증감률
인천시	611,957	100	709,216	100	842,534	100	4.08
강화군	9,256	1.51	10,187	1.44	11,601	1.38	2.86
옹진군	1,915	0.31	2,816	0.40	3,546	0.42	8.01
경기도	2,886,301	100	3,535,862	100	4,212,790	100	4.84
고양시	181,818	6.30	208,625	5.90	263,355	6.25	4.74
김포시	79,176	2.74	100,245	2.84	133,349	3.17	6.73
동두천시	16,446	0.57	18,580	0.53	21,489	0.51	3.40
양주시	53,766	1.86	59,522	1.68	71,195	1.69	3.57
파주시	87,047	3.02	126,827	3.59	159,215	3.78	7.84
포천시	52,050	1.80	64,890	1.84	76,130	1.81	4.87
연천군	7,545	0.26	8,229	0.23	9,382	0.22	2.76
강원도	321,270	100	377,616	100	436,367	100	3.90
춘천시	58,098	18.08	68,948	18.26	78,592	18.01	3.85
고성군	4,823	1.50	5,910	1.57	6,740	1.54	4.27
양구군	3,654	1.14	3,594	0.95	4,009	0.92	1.17
인제군	4,862	1.51	5,458	1.45	6,347	1.45	3.39

구 분	2009	비중	2013	비중	2017	비중	연평균 증감률
철원군	5,876	1.83	7,309	1.94	7,605	1.74	3.28
화천군	2,299	0.72	3,281	0.87	3,889	0.89	6.79
전국	13,162,507	100	15,339,865	100	17,736,224	100	3.80
접경 지역 전체	568,631	4.32	694,421	4.53	856,444	4.83	5.25

※ 주: 종사자 수는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 실태 현황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II-14〉 접경 지역 종사자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 주: 종사자 수는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기준
자료: 통계청

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현황

● 시·도 접경 지역 현황

+ 시·도 접경 지역 종사상 지위별²⁾ 종사자 수와 구성비

- 인천시와 경기도는 전국 평균 대비 상용 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강원도는 임시·일용근로자와 무급가족·기타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2017년 기준 전국 상용 근로자는 1,264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71.3%를 차지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262만 명으로 14.8%,

2) 종사상 지위(Status of workers):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이나 지위 상태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는 122만 명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음. 여기에 7.1%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125만 명을 더하면 10명 중 3명꼴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인천시 상용 근로자는 61만 명으로 72.8%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고, 경기도는 299만 명으로 71.1%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과 비슷함. 강원도는 28만 명으로 63.9%를 차지하여 상용 근로자 비중이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음
- 자영업자는 강원도 3.6만 명으로 8.4%, 경기도 32만 명으로 7.5%, 인천시 6.3만 명으로 7.45%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인 7.1% 대비 구성비가 높게 나타남
-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는 강원도 12만 명으로 27.7%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인 21.7%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냄. 경기도는 90만 명으로 21.5%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과 비슷하고 인천시는 17만 명으로 19.7%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대비 낮은 구성비를 보임

● 시·군 접경 지역 현황

+ 시·군 접경 지역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와 구성비

- 상용 근로자 구성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 접경 지역은 11곳이며, 하위권 5개 지역은 모두 강원도에 해당함
 - 2017년 15개 시·군 접경 지역 중 상용 근로자 비중 상위 3개 지역은 파주시 12만 명 78.2%, 김포시 10만 명 75.6%, 포천시 5.6만 명 73.1%임. 이는 전국 평균 및 3개 시·도 접경 지역 평균보다 높은 비중임. 해당 3개 지역은 신도시 개발 및 산업단지 유치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10인 이상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 대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난 지역과 일치함
 - 15개 시·군 접경 지역 전체 상용 근로자 구성비는 69.7%로 전국 평균인 71.3%에 미치지 못함.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11개 시·군 중 하위권 5곳이 모두 강원도에 해당함. 화천군이 55.4%로 가장 낮은 상용 근로자 구성비를 보였고, 인제군 55.7%, 양구군 55.9%, 고성군 60.1%, 철원군 60.2% 순으로 현저히 낮은 비중을 나타냄
 - 상용 근로자 비중에서 하위권을 차지한 강원도 5개 시·군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자영업자 비중에서는 지역 간 약간의 순위변동만 있을 뿐 5개 시·군 그대로 상위권을 차지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가 부족하여 도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해야 하는 강원도의 상황을 알 수 있음
- 수도권 신도시와 산업단지 입지 지역에 해당하는 경기도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접경 지역에는 임시·일용직, 무급직,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비중이 높아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2009년 상용 근로자 비중 상위 5개 지역을 살펴보면 파주시 73.0%, 용진군 71.8%, 김포시 68.8%, 강화군 67.9%, 화천군 66.8%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접경 지역이 골고루 분포해 있었음
- 2009~2017년간 파주시, 김포시 등 경기도 접경 지역의 상용 근로자 수는 연평균 8%대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반면, 동기간 동안 용진군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연평균 14.2%,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가 11.5%로 급격히 증가하고, 화천군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연평균 18.5%, 자영업자가 6.3%로 늘어나면서 두 지역의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함
- 수도권 신도시와 산업단지 입지 지역에 해당하는 경기도 일부 접경 지역에는 규모 있는 사업체들이 다수 위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도서 산간 및 군지역이라는 입지적 취약성으로 인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체들이 다수 위치한 대다수 접경 지역의 경우 임시직, 일용직, 무급직,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비중이 높아 일자리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임

〈표 II-19〉 접경 지역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9	구성비	2013	구성비	2017	구성비	연평균 증감률
인천시	상용 근로자	438,316	71.63	514,054	72.48	613,446	72.81	4.29
	임시 및 일용근로자	77,879	12.73	91,723	12.93	109,895	13.04	4.40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46,058	7.53	48,801	6.88	56,391	6.69	2.56
	자영업자	49,704	8.12	54,638	7.70	62,802	7.45	2.97
강화군	상용 근로자	6,280	67.85	7,120	69.89	8,331	71.81	3.60
	임시 및 일용근로자	1,202	12.99	1,413	13.87	1,329	11.46	1.26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728	7.87	666	6.54	943	8.13	3.29
	자영업자	1,046	11.30	988	9.70	998	8.60	-0.59
용진군	상용 근로자	1,374	71.75	1,842	65.41	2,442	68.87	7.45
	임시 및 일용근로자	213	11.12	583	20.70	615	17.34	14.17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76	3.97	122	4.33	182	5.13	11.53
	자영업자	252	13.16	269	9.55	307	8.66	2.50
경기도	상용 근로자	1,883,233	65.25	2,459,674	69.56	2,993,215	71.05	5.96
	임시 및 일용근로자	543,926	18.85	570,471	16.13	631,323	14.99	1.88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215,785	7.48	230,759	6.53	272,452	6.47	2.96
	자영업자	243,357	8.43	274,958	7.78	315,800	7.50	3.31
고양시	상용 근로자	105,730	58.15	132,800	63.65	168,412	63.95	5.99
	임시 및 일용근로자	36,717	20.19	35,840	17.18	49,457	18.78	3.79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20,545	11.30	19,513	9.35	21,508	8.17	0.57
	자영업자	18,826	10.35	20,472	9.81	23,978	9.10	3.07
김포시	상용 근로자	54,477	68.80	74,854	74.67	100,806	75.60	8.00
	임시 및 일용근로자	13,006	16.43	11,710	11.68	15,356	11.52	2.10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4,655	5.88	4,933	4.92	5,720	4.29	2.61
	자영업자	7,038	8.89	8,748	8.73	11,467	8.60	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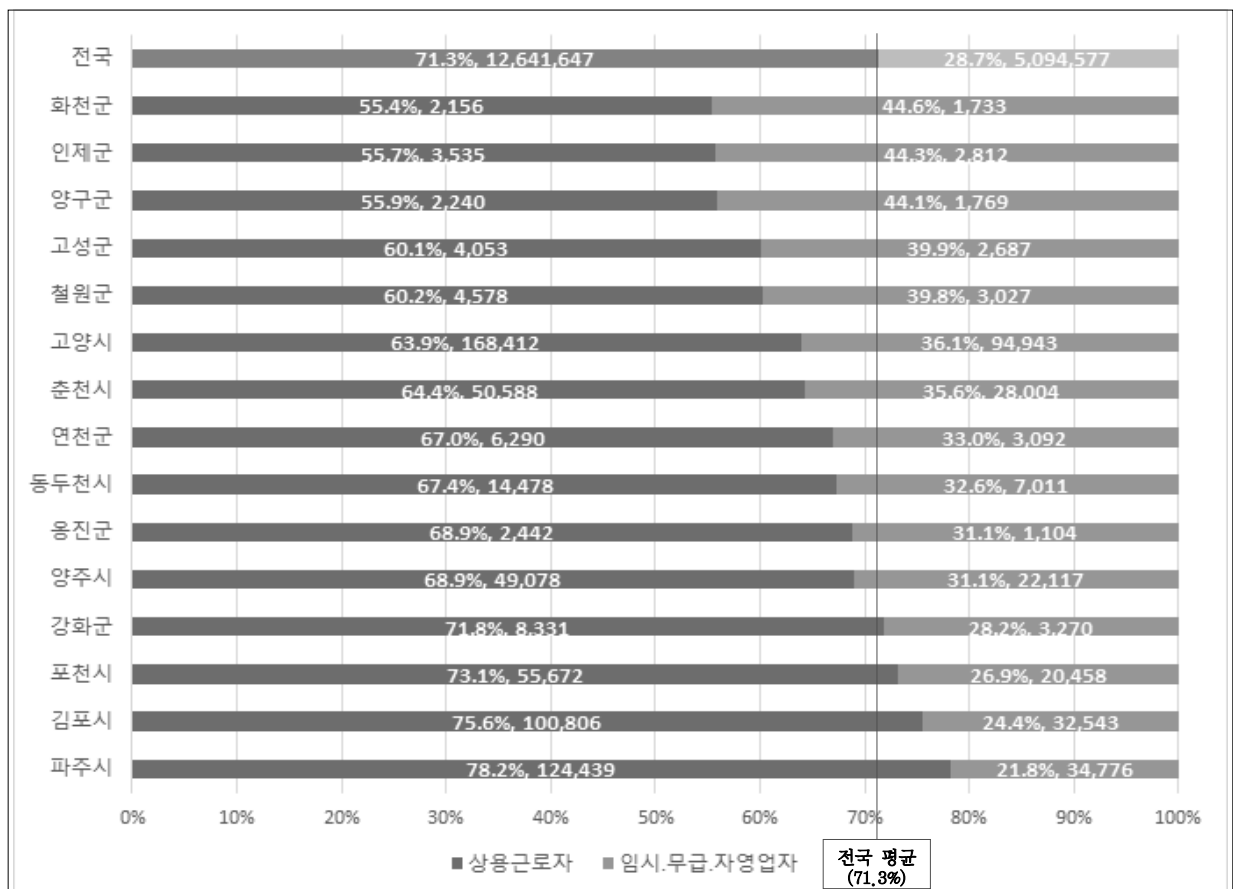
구 분		2009	구성비	2013	구성비	2017	구성비	연평균 증감률
동두천시	상용 근로자	8,806	53.54	12,184	65.58	14,478	67.37	6.41
	임시 및 일용근로자	4,106	24.97	2,995	16.12	3,397	15.81	-2.34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1,742	10.59	1,678	9.03	1,688	7.86	-0.39
	자영업자	1,792	10.90	1,723	9.27	1,926	8.96	0.91
양주시	상용 근로자	33,108	61.58	39,871	66.99	49,078	68.93	5.04
	임시 및 일용근로자	12,364	23.00	11,308	19.00	12,115	17.02	-0.25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2,906	5.40	2,631	4.42	3,470	4.87	2.24
	자영업자	5,388	10.02	5,712	9.60	6,532	9.17	2.44
파주시	상용 근로자	63,523	72.98	98,743	77.86	124,439	78.16	8.77
	임시 및 일용근로자	13,115	15.07	14,541	11.47	17,533	11.01	3.70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3,853	4.43	5,185	4.09	6,706	4.21	7.17
	자영업자	6,556	7.53	8,358	6.59	10,537	6.62	6.11
포천시	상용 근로자	33,350	64.07	45,216	69.68	55,672	73.13	6.61
	임시 및 일용근로자	9,656	18.55	9,884	15.23	8,783	11.54	-1.18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3,466	6.66	3,545	5.46	4,881	6.41	4.37
	자영업자	5,578	10.72	6,245	9.62	6,794	8.92	2.50
연천군	상용 근로자	3,919	51.94	5,249	63.79	6,290	67.04	6.09
	임시 및 일용근로자	1,947	25.81	1,502	18.25	1,503	16.02	-3.18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785	10.40	584	7.10	739	7.88	-0.75
	자영업자	894	11.85	894	10.86	850	9.06	-0.63
강원도	상용 근로자	198,871	61.90	234,122	62.00	278,857	63.90	4.32
	임시 및 일용근로자	57,436	17.88	71,027	18.81	76,983	17.64	3.73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33,955	10.57	39,041	10.34	44,057	10.10	3.31
	자영업자	31,008	9.65	33,426	8.85	36,470	8.36	2.05
춘천시	상용 근로자	35,962	61.90	42,954	62.30	50,588	64.37	4.36
	임시 및 일용근로자	9,728	16.74	11,675	16.93	12,902	16.42	3.59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6,914	11.90	8,326	12.08	8,536	10.86	2.67
	자영업자	5,494	9.46	5,993	8.69	6,566	8.35	2.25
고성군	상용 근로자	2,629	54.51	3,685	62.35	4,053	60.13	5.56
	임시 및 일용근로자	1,140	23.64	1,145	19.37	1,497	22.21	3.46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551	11.42	530	8.97	556	8.25	0.11
	자영업자	503	10.43	550	9.31	634	9.41	2.94
양구군	상용 근로자	1,655	45.29	1,894	52.70	2,240	55.87	3.86
	임시 및 일용근로자	1,610	44.06	1,023	28.46	937	23.37	-6.54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87	2.38	305	8.49	398	9.93	20.93
	자영업자	302	8.26	372	10.35	434	10.83	4.64
인제군	상용 근로자	2,311	47.53	2,911	53.33	3,535	55.70	5.46
	임시 및 일용근로자	1,319	27.13	1,334	24.44	1,606	25.30	2.49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750	15.43	631	11.56	615	9.69	-2.45
	자영업자	482	9.91	582	10.66	591	9.31	2.58
철원군	상용 근로자	3,188	54.25	4,059	55.53	4,578	60.20	4.63
	임시 및 일용근로자	1,472	25.05	1,433	19.61	1,531	20.13	0.49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535	9.10	999	13.67	765	10.06	4.57
	자영업자	681	11.59	818	11.19	731	9.61	0.89

구 분		2009	구성비	2013	구성비	2017	구성비	연평균 증감률
화천군	상용 근로자	1,536	66.81	1,949	59.40	2,156	55.44	4.33
	임시 및 일용근로자	252	10.96	810	24.69	979	25.17	18.49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263	11.44	244	7.44	349	8.97	3.60
	자영업자	248	10.79	278	8.47	405	10.41	6.32
전국	상용 근로자	9,125,795	69.33	10,999,183	71.70	12,641,647	71.28	4.16
	임시 및 일용근로자	2,018,011	15.33	2,209,687	14.40	2,622,861	14.79	3.33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995,856	7.57	1,015,199	6.62	1,218,045	6.87	2.55
	자영업자	1,022,845	7.77	1,115,796	7.27	1,253,671	7.07	2.58
접경 지역 전체	상용 근로자	357,848	62.93	475,331	68.45	597,098	69.72	6.61
	임시 및 일용근로자	107,847	18.97	107,196	15.44	129,540	15.13	2.32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47,856	8.42	49,892	7.18	57,056	6.66	2.22
	자영업자	55,080	9.69	62,002	8.93	72,750	8.49	3.54

※ 주: 종사자 수는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II-15〉 접경 지역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구성비

(단위: 명, %)



※ 주: 종사자 수는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기준
자료: 통계청(2017)

2.3 연구개발 역량 및 조직 현황

가. 연구개발 역량 현황

●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로 살펴본 접경 지역 현황

+ 평가 개요

-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는 지역이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산출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측면에서 평가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발표하는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 II)’는 지역이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과 개선을 통해 최종단계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임
 - 평가 대상 지역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세종시를 충남에 포함한 16개 지역임. 과학기술혁신 수준에 대한 지역 간 비교를 통해 각 지역의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과학기술혁신을 고도화하는 데 활용함
 - 국가혁신체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근간으로 OECD 회원국 대상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 II,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를 지역평가에 적합하게 일부 보완하여 평가를 진행함. 자원 투입에서 최종 경제적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13개 항목, 31개 지표로 구성함

+ 시·도 접경 지역 2018년 평가 결과

-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경기도는 최상위, 인천시는 중하위권, 강원도는 하위권을 차지함
 - 2018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16개 지자체 중 경기도가 1위를 달성하며 5년 연속 최상위를 차지함. 서울시, 대전시와 함께 상위권을 형성함
 - 인천시는 전년 대비 3계단 하락해 10위를 차지하며 전라남도, 충청북도와 함께 중하위권을 형성함
 - 강원도는 전년 대비 2계단 하락해 14위를 차지하며 경상남도, 제주시와 함께 하위권을 형성함
- 경기도는 연구개발 투자, 사업화 활동, 인적·지적자원과 관련된 ‘활동’ 및 ‘자원’ 부문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인천시와 강원도는 해당 부문 기여도가 낮게 나타남

- 경기도는 평가의 5대 부문 중 연구개발 투자 및 창업·사업화 활동과 관련된 ‘활동’ 부문과 인적 자원 및 조직, 지식자원과 관련된 ‘자원’ 부문 기여도가 각각 32.1%와 26.0%로 높게 나타남. 반면 지원제도 활용 및 인프라, 교육·문화와 관련된 ‘환경’ 부문과 산학연·민관·국제 협력과 관련된 ‘네트워크’ 부문의 비중은 각각 11.8%와 12.1%로 낮은 편임
- 인천시는 경기도와 반대로 ‘네트워크’와 ‘환경’ 부문 기여도가 각각 33.7%와 27.0%로 높게 나타남. ‘자원’과 ‘활동’ 부문 비중은 각각 10.0%와 14.3%로 낮은 수치를 보임
- 강원도는 ‘네트워크’ 부문과 경제적 성과 및 지식 창출과 관련된 ‘성과’ 부문의 기여도가 각각 33.3%와 31.7%로 높게 나타남.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활동’과 ‘자원’ 부문 비중이 작게 나타나는데 각각 3.9%와 6.5%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임

〈표 II-20〉 시·도 접경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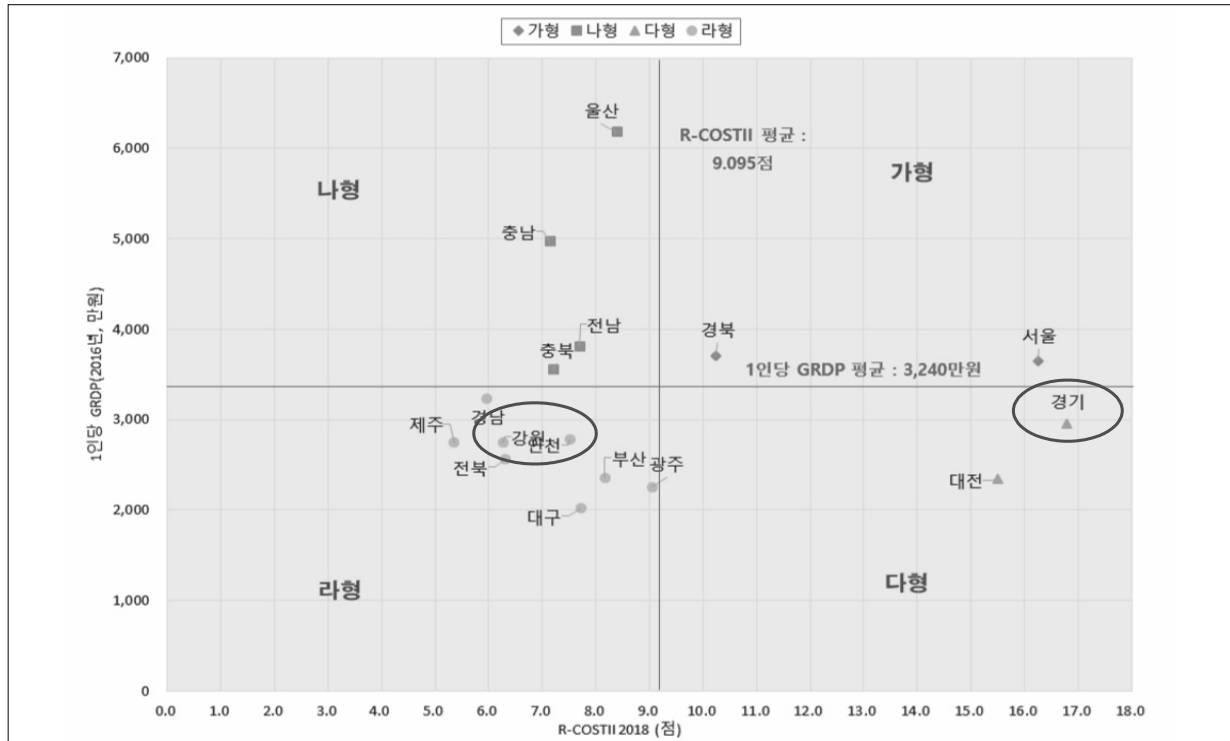
구분		지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지표 값	순위	지표 값	순위	지표 값	순위
자 원	인적 자원	◦ 총 연구원 수(명)	19,635	5	172,583	1	6,668	14
		◦ 인구 만 명당 연구원 수(명)	67.2	7	134.7	2	43.8	13
		◦ 동일 연령대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 졸업생 비중(%)	0.018	15	0.013	16	0.040	9
	조직	◦ 연구개발 수행조직서(개)	2,469	3	15,180	1	541	14
		◦ 국내 특허등록 기관 수(개)	897	4	5,803	1	402	13
		◦ 국내순위 30위 이내 대학 수 비중(%)	2.4	9	7.3	2	4.9	4
		◦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수(개)	70	4	485	1	14	14
	지식 자원	◦ 최근 5년간 과학기술논문 수(편)	7,215	9	31,539	2	6,210	12
		◦ 최근 5년간 국내 특허등록 수(건)	18,750	5	125,784	2	6,536	13
활 동	연구 개발 투자	◦ 연구개발 투자액(억 원)	25,482	6	384,625	1	4,503	15
		◦ GR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액 비중(%)	2.96	4	8.85	2	0.94	14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 투자액(백만 원)	130	6	223	1	68	16
		◦ 총부가가치 대비 기업연구개발 투자액 비중(%)	2.63	4	9.15	1	0.39	15
		◦ GRDP 대비 정부 연구개발사업비 비중(%)	0.54	14	0.64	11	0.64	12
	창업/ 사업화 활동	◦ 대학 기술이전 대상 수(건)	92	14	944	2	130	13
		◦ 정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수(건)	625	15	4,534	1	1,191	11
		◦ 신규 기술혁신중소기업 수(개)	77	3	444	1	28	11
네 트 워 크	산학연 협력	◦ 연구원 1인당 산학연 협력 과학기술논문 수(편)	0.034	14	0.018	16	0.087	2
		◦ 연구원 1인당 산학연 협력 국내 특허등록 수(건)	0.0143	15	0.0107	16	0.0240	5
		◦ 전체 정부 연구개발사업비 중 산학연 협력비 중(%)	37.1	3	41.0	2	25.0	14
	기업 간/ 정부 간 협력	◦ 전체 정부 연구개발사업비 중 기업 간 협력비 중(%)	2.9	12	4.6	3	2.1	14
		◦ 전체 정부 연구개발사업비 대비 지자체 대응 투자비 중(%)	1.3	12	0.5	15	4.3	4
	국제 협력	◦ 전체 정부 연구개발사업비 중 해외 협력비 중(%)	3.6	2	2.8	7	0.7	13
		◦ 연구원 1인당 해외 협력 과학기술논문 수(편)	0.014	12	0.006	16	0.035	3
		◦ 연구원 1인당 해외 협력 국내 특허등록 수(건)	0.00158	1	0.00065	4	0.00060	5

구분		지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지표 값	순위	지표 값	순위	지표 값	순위
환경	지원 제도	◦ 자금지원활용(서비스/제조업 평균)(%)	21.40	12	25.20	9	19.26	15
		◦ 조세 지원활용(서비스/제조업 평균)(%)	19.89	12	18.09	9	18.95	15
		◦ 인력지원활용(서비스/제조업 평균)(%)	20.70	12	20.87	9	20.07	15
	인프라	◦ 인터넷 이용률(%)	89.0	11	90.3	8	83.1	16
		◦ 직원의 업무상 컴퓨터 이용률(%)	84.5	14	80.3	16	87.9	7
		◦ 국가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서(점)	71	13	432	3	16	15
	교육/문화	◦ 중고교원 수 대비 이공계 교원수비 중(%)	23.4	3	21.5	15	22.6	11
		◦ 중고생 수 대비 이공계 교원수비 중(%)	1.76	11	1.58	15	1.97	3
		◦ 창의 과학 교실 강좌 수(개)	95	7	118	4	55	9
성과	경제적 성과	◦ 인구 1인당 총부가가치(백만 원)	25.4	10	27.2	8	25.4	9
		◦ 정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액(억 원)	84.2	6	699.2	1	26.5	15
		◦ 제조업 총부가가치 대비 하이테크 산업 부가가치 비중(%)	15.3	6	48.0	1	10.2	9
	지식 창출	◦ 연간 과학기술논문 수(편)	1,579	8	6,633	2	1,345	12
		◦ 연간 국내 특허등록 수(건)	3,400	7	24,820	2	1,459	14
		◦ 연간 R&D 투자 대비 과학기술논문 수(편/십억 원)	0.62	11	0.17	16	2.99	1
		◦ 연간 R&D 투자 대비 국내 특허등록 수(건/십억 원)	1.33	12	0.65	16	3.24	1
		◦ 연구원 1인당 과학기술논문 수(편)	0.080	13	0.038	16	0.202	2
		◦ 5년 주기별 논문당 평균 피인용 수(건)	5.10	10	5.98	5	4.72	13

※ 자료: 2018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12)

- 경기도는 현재 지역 소득수준은 낮으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 인천시와 강원도는 현재 지역 소득수준도 낮고 과학기술혁신역량도 낮아 미래 성장세가 침체할 지역으로 전망됨
-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와 지역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 결과 경기도는 ‘다형’, 인천시와 강원도는 ‘라형’에 포함됨
- 경기도는 1인당 GRDP는 전체 평균보다 낮으나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가 평균보다 높은 ‘다형’으로 분류됨. 현재의 지역 소득은 다른 지역 대비 낮은 수준이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인천시와 강원도는 1인당 GRDP와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은 ‘라형’으로 분류됨. 현재 평균 소득수준이 낮으며, 과학기술혁신역량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미래 성장세가 침체 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1-16〉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와 지역 소득수준에 따른 시·도 접경 지역 유형



※ 자료: 2018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12)

나. 연구개발 조직 현황

시·도 접경 지역 연구개발 수행조직 현황

+ 연구개발조직 수와 비중

- 전국 연구개발 수행조직의 35%가 밀집해 있는 경기도가 1위 차지, 5%가 위치한 인천시가 3위 차지, 1%에 불과한 강원도는 최하위권을 차지함
 - 2017년 기준 전국의 연구개발 수행조직은 4.4만 개로 2009년 1.6만 개를 기록한 이래 연평균 12.9%의 증가율로 성장함
 - 2017년 경기도의 연구개발 수행조직은 1.5만 개로 전국 1위를 달성함. 2009년 5천 개를 기록한 이래 연평균 15%의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30%에서 2017년 35%로 높아짐.
 - 여기에 2위를 차지한 서울시를 포함하면 수도권에 있는 연구개발 수행조직 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59%에 달하게 됨. 이는 2009년 55%에서 늘어난 수치임. 연구개발 면에서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3위를 차지한 인천시의 연구개발 수행조직 수는 2.5천 개로 경기도의 1/6 수준임. 전국에서 5%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조직 수와 비슷한 규모임. 2009년에는

경상남도에 이어 4위를 차지했으나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보이며 1계단 올라섬

- 강원도의 연구개발 수행조직 수는 541개로 17개 시·군 중 14위를 차지함. 인구 규모와 면적이 작은 울산시, 세종시, 제주시를 제외하면 최하위에 해당함.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대에 불과하며 연평균 증가율 11%로 전국 평균인 13%에 못 미침

+ 연구개발 수행 주체별 수와 비중

- 경기도와 인천시는 기업체 연구개발조직의 비중이 높은 반면, 강원도는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교 연구개발조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2017년 전국의 연구개발조직 수를 수행 주체별로 살펴보면 정부 투자기관과 민간기업이 포함된 기업체 연구개발조직이 4.3만 개로 97.8%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중에서도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조직은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행 주체로 2009년 1.6만 개에서 2017년 4.2만 개로 늘어나 13.3%의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임. 국공립기관, 정부 및 지자체 출연 기관, 비영리기관, 병원이 포함된 공공연구기관은 569개로 1.3%, 국공립 및 사립대학 연구개발조직은 410개로 0.9%를 차지하고 있음
 - 경기도의 기업체 연구개발조직은 1.5만 개로 99.1%를 차지하고 있음. 이중 정부 투자기관 6곳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기업에 해당하며, 2009~2017년간 민간기업 연구개발조직의 연평균 증가율은 15.3%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대학교 연구개발조직은 77개로 0.5%, 공공연구기관은 64개로 0.4%를 차지함
 - 인천시의 연구개발조직 중 기업체는 2.4천 개로 98.74%, 대학교는 16개로 0.65%, 공공연구기관은 15개로 0.61%를 차지함. 강원도의 기업체 연구개발조직은 493개로 91.1%, 공공연구기관은 30개로 5.6%, 대학교는 18개로 3.3%를 차지함
 - 경기도와 인천시의 기업체 연구개발조직 비중은 각각 99.1%와 98.7%로 전국 평균인 97.8%보다 높은 반면, 강원도는 91.1%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침. 경기도와 인천시의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교 연구개발조직 비중은 전국 평균인 1.3%, 0.9%보다 낮은 반면, 강원도는 각각 5.6%, 3.3%로 전국 평균보다 높음
 - 강원도의 기업체 연구개발조직 수는 인천시의 1/5에 불과하지만,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교 연구개발조직 수는 1.5배 더 많음. 경기도와 인천시는 대학교 연구개발조직 중 국공립 비중이 7.8%, 18.8%로 낮은 반면, 강원도는 38.9%로 높게 나타남
- 연구개발조직 수에서 인천시는 경기도의 1/6, 강원도는 경기도의 1/30 수준으로 연구개발 역량 및 기반 약화로 지역산업 고도화에 실패할 경우 지역 경제 침체가 고착화될 우려 있음
 - 인천시는 수도권에 해당하지만, 연구개발조직 측면에서 경기도의 1/6, 서울시의 1/4 수준에 불과함. 인천시의 경제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쇠퇴 원인 중 하나로 제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부족을 꼽을 수 있음. 진화되는 신기술을 흡수하지 못해 단순가공조립업종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는 지역 경제의 성장 정체로 이어질 수 있음

- 강원도에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주로 위치해 있어 연구개발 역량이 낮은 상황임. 연구개발 수행 주체도 대부분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이 중심이 되어 산업화로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님. 연구개발 역량 및 기반 약화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실패할 경우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져 일자리 부족, 인구감소 및 주거환경 쇠퇴,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

〈표 II-21〉 시·도 접경 지역 연구개발 수행조직 현황

(단위: 개, %)

구분		인천시					경기도				
		2009	2013	2017	2017 비중	연평균 증감률	2009	2013	2017	2017 비중	연평균 증감률
공공 연구 기관	소계	10	13	15	0.61	5.20	56	64	64	0.42	1.68
	국공립	4	4	6	40.00	5.20	16	12	11	17.19	-4.58
	정부 출연	2	2	2	13.33	0.00	12	15	12	18.75	0.00
	지방자치단체출연	1	1	-	-	-	3	5	2	3.13	-4.94
	기타 비영리	3	6	7	46.67	11.17	24	27	35	54.69	4.83
	국공립병원	-	-	-	-	-	-	1	1	1.56	-
	사립병원	-	-	-	-	-	1	4	3	4.69	14.72
대학	소계	9	11	16	0.65	7.46	72	76	77	0.51	0.84
	국공립	2	2	3	18.75	5.20	4	5	6	7.79	5.20
	사립	7	9	13	81.25	8.05	68	71	71	92.21	0.54
기업체	소계	908	1,524	2,438	98.74	13.14	4,829	9,029	15,039	99.07	15.26
	정부 투자기관	1	4	3	0.12	14.72	9	9	6	0.04	-4.94
	민간기업	907	1,520	2,435	99.88	13.14	4,820	9,020	15,033	99.96	15.28
합계		927	1,548	2,469	100	13.03	4,957	9,169	15,180	100	15.02
구분		강원도					전국				
		2009	2013	2017	2017 비중	연평균 증감률	2009	2013	2017	2017 비중	연평균 증감률
공공 연구 기관	소계	15	22	30	5.55	9.05	378	478	569	1.31	5.25
	국공립	9	9	10	33.33	1.33	114	111	127	22.32	1.36
	정부 출연	2	3	7	23.33	16.95	103	128	160	28.12	5.66
	지방자치단체출연	1	1	5	16.67	22.28	19	30	45	7.91	11.38
	기타 비영리	2	7	6	20.00	14.72	125	177	203	35.68	6.25
	국공립병원	1	1	1	3.33	0.00	9	13	15	2.64	6.59
	사립병원	-	1	1	3.33	-	8	19	19	3.34	11.42

구분		인천시					경기도				
		2009	2013	2017	2017 비중	연평균 증감률	2009	2013	2017	2017 비중	연평균 증감률
대학	소계	16	17	18	3.33	1.48	391	414	410	0.94	0.59
	국공립	5	5	7	38.89	4.30	70	82	89	21.71	3.05
	사립	11	12	11	61.11	0.00	321	332	321	78.29	0.00
기업체	소계	202	336	493	91.13	11.80	15,728	26,697	42,531	97.75	13.24
	정부 투자기관	-	-	2	0.41	-	30	44	49	0.12	6.32
	민간기업	202	336	491	99.59	11.74	15,698	26,653	42,482	99.88	13.25
합계		233	375	541	100	11.10	16,497	27,589	43,510	100	12.89

※ 주: 연구개발 수행조직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활동 조사」 기준
 자료: 통계청(해당연도)

● 시·군 접경 지역 연구개발 수행조직 현황

+ 대학교 수와 비중

- 시·군 접경 지역에 있는 대학교 수는 16개에 불과하여 대학기반 연구개발 역량이 취약한 상황임
 - 시·군 접경 지역에 있는 대학교 수는 2009년 18개에서 2017년 16개로 감소함. 2009~2017년 간 강화군과 포천시에서 각각 1곳씩 감소한 결과임
 - 대학교가 가장 많이 위치한 접경 지역은 강원도의 거점도시인 춘천시로 5곳이 있음. 그러나 고성군의 1곳을 제외하면 강원도의 다른 접경 지역에는 대학교가 없음. 인천시 접경 지역 중에서는 강화군에만 1개 대학이 있음
 - 경기도 접경 지역의 경우 고양시, 김포시, 포천시에 각각 2곳,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에 각각 1곳 등 총 9개의 대학교가 있음. 이는 경기도 전체 대학교 수의 15% 비중을 차지함
 - 접경 지역에 있는 대학교 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불과함. 인구가 적고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웅진군, 연천군, 강원도의 군지역 등에는 대학교가 없음. 지방거점 도시인 춘천시를 제외한 접경 지역 전역이 대학기반 연구개발 역량이 취약한 상황임

+ 기업부설 연구개발조직 수와 비중

- 경기도 신도시 5개 지역의 기업부설 연구개발조직 수가 접경 지역 전체의 91%를 차지하여 접경 지역 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
 - 시·군 접경 지역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수는 3.8천 개로 전국의 5.9%를 차지함. 2010년 1.2천 개를 기록한 이래 연평균 18%의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함. 그 결과 인천시 전체 기업부설 연구개발조직 수인 3.6천 개를 넘어섬
 - 이는 기업부설 연구개발조직 수 상위권을 차지한 경기도 5개 신도시의 성장세 영향임. 김포

- 시 1.1천 개, 고양시 9백 개, 파주시 7.5백 개로 상위 3개 지역이 접경 지역 기업부설 연구개발조직 수의 72%를 차지함. 여기에 포천시 4백 개, 양주시 3.3백 개를 더하면 5개 지역이 접경 지역 전체의 91.3%를 차지하게 됨
- 상위 3개 지역인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의 경우 2010년에는 강원도 전체 기업부설 연구개발조직 수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연평균 17~20%의 증가율을 보인 결과 2017년에는 강원도를 넘어섬
 - 6위를 차지한 춘천시의 193개를 포함하면 접경 지역 6개 지역의 기업부설 연구개발조직 수가 접경 지역 전체의 97%를 차지하게 됨. 그러나 춘천시의 경우 경기도 5개 지역과는 달리 2010~2017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0%대로 낮음. 그 결과 최상위 지역인 김포시와의 차이가 2010년 3.7배에서 2017년 5.7배로 벌어짐. 2010년에는 5위인 양주시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1.7배 차이로 벌어짐
 - 상위 6개 지역을 제외한 9개 접경 지역 시·군의 경우 기업부설 연구개발조직 수가 50개 미만임. 해당 지역들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사업체 수가 적고, 중소 또는 영세기업 위주로 있어 연구개발 역량이 현저히 떨어짐. 신도시 개발지 및 산업단지가 위치한 경기도 일부 접경 지역과의 연구개발 역량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전국 및 광역지자체와 비교 시 접경 지역 전반적으로 기업기반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 경기도 접경 지역에 기업부설 연구개발조직 수 상위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경기도 전체에서 접경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 불과함
 - 강원도 접경 지역의 경우 거점도시인 춘천시가 차지하는 비중 26.7%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불과하며, 인천시 접경 지역은 1.3% 수준임
 - 전국 또는 해당 광역지자체 전체와 비교했을 때 접경 지역 전반적으로 기업기반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표 II-22〉 시·군 접경 지역 대학교 및 기업부설 연구조직 현황

(단위: 개, %)

구 분	대학교 수					기업부설 연구조직 수				
	2009	2013	2017	2017 비중	연평균 증감률	2010	2013	2017	2017 비중	연평균 증감률
인천시	9	7	7	100	-3.53	1,634	2,188	3,601	100	11.95
강화군	2	1	1	14.29	-9.43	4	12	42	1.17	39.92
옹진군	-	-	-	-	-	-	1	3	0.08	31.61
경기도	62	62	60	100	-0.47	9,897	14,336	22,441	100	12.41
고양시	2	2	2	3.33	0	256	478	902	4.02	19.71
김포시	2	2	2	3.33	0	345	543	1,102	4.91	18.05

동두천시	1	1	1	1.67	0	10	28	47	0.21	24.74
양주시	1	1	1	1.67	0	100	212	327	1.46	18.44
파주시	1	1	1	1.67	0	250	412	746	3.32	16.90
포천시	3	3	2	3.33	-5.63	129	224	409	1.82	17.92
연천군	-	-	-	-	-	7	11	19	0.08	15.33
강원도	18	18	18	100	0	356	470	724	100	10.67
춘천시	5	5	5	27.78	0	93	148	193	26.66	10.99
고성군	1	1	1	5.56	0	3	3	9	1.24	16.99
양구군	-	-	-	-	-	-	2	2	0.28	0
인제군	-	-	-	-	-	2	3	4	0.55	10.41
철원군	-	-	-	-	-	5	7	12	1.66	13.32
화천군	-	-	-	-	-	3	1	1	0.14	-14.52
전국	345	340	339	100	-0.25	29,582	41,622	64,480	100	11.77
접경 지역 전체	18	17	16	4.72	-1.67	1,207	2,085	3,818	5.92	17.88

※ 주: 1) 대학교 수는 통계청 지역 통계총괄과 산정 기준

2) 기업부설 연구조직 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합산 기준

자료: 통계청(해당연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해당연도)

2.4 산업구조

가. 인천시 접경 지역 산업구조

● 산업 분포현황

+ GRDP 기준 상위 산업과 하위산업

- 인천시 GRDP 상위산업은 제조업, 운수·창고업, 부동산업 순이며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농림어업이 하위권을 차지함
 - 2016년 GRDP 기준 인천시 상위 3개 산업은 20.9조 원으로 27.2%를 차지한 제조업, 8.8조 원으로 11.5%를 차지한 운수·창고업, 6.3조 원으로 8.2%를 차지한 부동산업 순임. 뒤이어 사업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5조 원 이상으로 상위권을 차지함
 - 숙박·음식점업과 정보통신업이 각각 1.9조 원, 1.4조 원으로 하위권을 차지했으며, 농림어업과 광업이 각각 2,400억 원, 1,500억 원 규모에 불과하여 인천시 전체 산업 중 최하위를 차지함
- 강화군 GRDP 상위산업은 제조업, 농림어업, 공공·국방 행정 순이며 사업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사업이 하위권을 차지함
 - 2016년 GRDP 기준 강화군 상위 3개 산업은 1,631억 원으로 16.5%를 차지한 제조업, 1,331억 원으로 13.5%를 차지한 농림어업, 1,239억 원으로 12.5%를 차지한 공공·국방 행정 순

임. 해당 3개 산업이 강화군 전체 산업의 42.5%를 차지하고 있음

- 상위 3개 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들은 모두 GRDP 900억 원 미만임. 하위권을 차지한 사업 서비스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사업은 강화군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에도 미치지 못함
- 용진군 GRDP 상위산업은 공공·국방 행정, 건설업, 농림어업 순이며 문화·기타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이 하위권을 차지함
 - 2016년 GRDP 기준 용진군 상위 3개 산업은 896억 원으로 22.5%를 차지한 공공·국방 행정, 891억 원으로 22.4%를 차지한 건설업, 666억 원으로 16.7%를 차지한 농림어업 순임. 해당 3개 산업이 용진군 전체 산업의 61.0%를 차지하고 있음
 - 용진군에는 GRDP 900억 원 이상 되는 산업이 부재함. 전반적인 산업 규모가 작으며 문화·기타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이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산업 비중 현황

+ 전국 및 광역 대비 비교우위

- 인천시는 전국순위와 유사하게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이 상위, 숙박·음식점업과 농림어업이 하위산업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순위와 다르게 운수창고업이 상위, 정보통신업이 하위산업에 포함되어 있음
 - 2016년 전국 산업별 GRDP 순위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460조 원으로 28.8%를 차지하며 1위, 사업서비스업이 150조 원으로 9.4%를 차지하며 2위, 도·소매업이 130조 원으로 8.2%, 부동산업이 129조 원으로 8.1%를 차지하며 각각 3, 4위에 오름. 숙박·음식점업은 40조 원으로 2.5%, 전기·가스·수도사업은 34조 원으로 2.1%, 농림어업은 32조 원으로 2.0%, 광업은 2.6조 원으로 0.2%를 차지하며 하위권에 포함됨
 - 인천시는 전국순위와 비슷하게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이 GRDP 상위산업을 차지함. 하위산업도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광업으로 전국순위와 유사하게 나타남
 - 다만 전국에서는 중하위권에 있는 운수·창고업이 인천시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는 중위권에 위치한 정보통신업이 인천시에서는 하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차이점을 보임
- 강화군과 용진군은 전국 및 인천시와 반대로 농림어업이 상위, 사업서비스업이 하위산업을 차지하며, 공공·국방산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이 영세하여 도서 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를 나타냄
 - 강화군과 용진군은 전국 및 인천시와 반대로 농림어업이 상위산업을 차지하고, 사업서비스

업이 하위산업을 차지하여 도서 지역의 산업 특성을 나타냄. 농림어업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강화군 13.5%, 옹진군 16.7%로 인천시 0.3%, 전국 2.0%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음

- 강화군과 옹진군 모두 공공·국방 행정의 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인천시 5.7%, 전국 6.4%와 비교했을 때 강화군 12.5%, 옹진군 22.5%로 2~3배 높은 비중을 보여 접경 지역의 특성과 더불어 공공산업 의존도가 높은 열악한 지역산업 구조를 나타냄
- 강화군의 경우 제조업이 GRDP 비중 16.5%로 1위를 차지했으나 인천시 27.2%, 전국 28.8% 대비 비교우위가 떨어짐. GRDP 규모상으로도 인천시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영세한 수준을 나타냄

나. 경기도 접경 지역 산업구조

● 산업 분포현황

+ GRDP 기준 상위산업과 하위산업

- 경기도 GRDP 상위산업은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업 순이며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농림어업이 하위권을 차지함
 - 2016년 GRDP 기준 경기도 상위 3개 산업은 136조 원으로 36.1%를 차지한 제조업, 41조 원으로 10.9%를 차지한 사업서비스업, 32조 원으로 8.4%를 차지한 부동산업 순임. 도·소매업이 25조 원으로 6.7%, 건설업이 24조 원으로 6.4%를 차지하며 뒤를 이음
 - 경기도에서는 10조 원 미만의 산업이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숙박·음식점업이 8조 원으로 2.2%, 전기·가스·수도사업이 5조 원으로 1.3%, 농림어업이 3조 원으로 0.9%, 광업이 0.3조 원으로 0.1%를 차지하며 하위권을 형성함
- 고양시 GRDP 상위산업은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건설업 순이며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농림어업이 하위권을 차지함
 - 2016년 GRDP 기준 고양시 상위 3개 산업은 3조 원으로 17.0%를 차지한 부동산·임대업, 2조 원으로 11.4%를 차지한 도·소매업, 1.6조 원으로 8.8%를 차지한 건설업 순임
 - 고양시는 최상위권과 최하위권 산업을 제외한 대다수 산업의 GRDP가 1조 원 내외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숙박·음식점업이 6,400억 원, 전기·가스·수도사업이 3,900억 원, 농림어업이 216억 원으로 최하위권에 위치함
- 김포시 GRDP 상위산업은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순이며 농림어업, 정보통신업, 전기·가스·수도사업이 하위권을 차지함

- 2016년 GRDP 기준 김포시 상위 3개 산업은 3조 원으로 42.4%를 차지한 제조업, 7,000억 원으로 9.0%를 차지한 부동산·임대업, 6,600억 원으로 8.4%를 차지한 도·소매업 순임. 최상위 산업인 제조업이 지역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그 외 산업들의 규모는 1조 원에 미치지 못함
- 1,600억 원의 농림어업, 1,400억 원의 정보통신업, 1,300억 원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GRDP 2천억 원 미만의 산업들이 하위권에 위치함
- 동두천시 GRDP 상위산업은 제조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사업순이며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농림어업이 하위권을 차지함
 - 2016년 GRDP 기준 동두천시 상위 3개 산업은 2,300억 원으로 14.9%를 차지한 제조업, 1,700억 원으로 11.1%를 차지한 보건·복지서비스업, 1,500억 원으로 9.5%를 차지한 전기·가스·수도사업순임
 - 동두천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GRDP 2천억 원 규모에 미치지 못함. 하위권에는 580억 원의 정보통신업, 270억 원의 사업서비스업, 140억 원의 농림어업이 위치함
- 양주시 GRDP 상위산업은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순이며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광업이 하위권을 차지함
 - 2016년 GRDP 기준 양주시 상위 3개 산업은 1.8조 원으로 37.7%를 차지한 제조업, 3,800억 원으로 8.0%를 차지한 도·소매업, 3,600억 원으로 7.5%를 차지한 부동산·임대업 순임. 최상위 1개 산업이 지역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상위 3개 산업이 지역생산의 53.2%를 차지하고 있음
 - 양주시는 상위 4개 산업을 제외한 대다수 산업이 GRDP 1~2천억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1천억 원에 못 미치는 하위 3개 산업에는 890억 원의 금융·보험업, 830억 원의 전기·가스·수도사업, 220억 원의 광업이 포함됨
- 파주시 GRDP 상위산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임대업 순이며 금융·보험업, 농림어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광업이 하위권을 차지함
 - 2016년 GRDP 기준 파주시 상위 3개 산업은 7조 원으로 52.1%를 차지한 제조업, 1조 원으로 7.6%를 차지한 정보통신업, 8,200억 원으로 6.1%를 차지한 부동산·임대업 순임. GRDP 규모 최상위 산업인 제조업이 지역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1조 원 이상을 달성한 상위 2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함
 - 파주시의 대다수 산업은 3~5천억 원 내외의 GRDP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하위권 산업은 지역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으로 2,500억 원의 금융·보험업, 2,100억 원의 농림어업, 1,400억 원의 전기·가스·수도사업, 90억 원의 광업이 해당함
- 포천시 GRDP 상위산업은 제조업, 농림어업, 도·소매업 순이며 전기·가스·수도사업, 광업,

정보통신업이 하위권을 차지함

- 2016년 GRDP 기준 포천시 상위 3개 산업은 1.6조 원으로 34.5%를 차지한 제조업, 4,500억 원으로 9.5%를 차지한 농림어업, 3,800억 원으로 8.1%를 차지한 도·소매업 순임. 상위 3개 산업이 지역생산의 52.1%를 차지하고 있음
- 포천시의 대다수 산업은 1~2천억 원 내외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1,100억 원의 전기·가스·수도사업, 810억 원의 광업, 770억 원의 정보통신업이 최하위권을 차지함
- 연천군 GRDP 상위산업은 공공·국방 행정, 건설업, 제조업 순이며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광업이 하위권을 차지함
- 2016년 GRDP 기준 연천군 상위 3개 산업은 1,900억 원으로 18.6%를 차지한 공공·국방 행정, 1,200억 원으로 11.7%를 차지한 건설업, 1,100억 원으로 11.4%를 차지한 제조업 순임
- 연천군에서 GRDP 규모 1천억 원 이상은 상위 3개 산업뿐임. 200억 원의 운수업, 170억 원의 사업서비스업, 96억 원의 광업이 최하위권을 차지함

● 산업 비중 현황

+ 전국 및 광역 대비 비교우위

- 경기도 GRDP 상·하위 산업군은 전국과 동일한 분포를 나타내며 중위권 산업군에서 공공·국방 행정, 금융·보험업은 전국 대비 낮은 순위,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은 높은 순위를 차지함
- 경기도의 GRDP 상위 4개 산업은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순으로 3, 4위 간 순위변동을 제외하면 전국 상위 4개 산업과 동일함. 하위 4개 산업도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농림어업, 광업으로 전국과 동일하게 분포함
- GRDP 중위권 산업의 경우 경기도와 전국순위 간에 다소 차이점이 나타남. 공공·국방 행정, 금융·보험업은 전국순위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에서 2~3계단 낮은 순위에 위치함. 반면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은 전국 대비 경기도에서 1~2계단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김포시와 양주시는 제조업, 파주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포천시는 제조업과 농림어업, 고양시는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업, 동두천시는 보건·복지서비스업, 연천군은 공공·국방 행정에서 전국 대비 비교우위를 지님
- 제조업은 고양시를 제외한 경기도 접경 지역 6개 시·군에서 GRDP 상위 3개 산업에 포함됨. 그 중 연천군을 제외한 5개 시·군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음. 김포시,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의 경우 제조업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음.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제조업은 GRDP 비중이 경기도 및 전국 평균

- 대비 작아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임을 알 수 있음
- 전국 및 경기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서비스업은 접경 지역 7개 시·군의 상위 3개 산업에 포함되지 않음. 고양시에서 GRDP 비중 8.1%로 4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접경 지역에서는 비중 2% 내외로 하위권에 위치함
 - 전국 및 경기도에서 3~4위를 차지한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업은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파주시 4개 시·군에서 상위 4개 산업에 포함됨. 그러나 이 중에서 전국 및 경기도 대비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은 고양시뿐임
 - 전국 및 경기도에서 하위 4개 산업에 포함된 전기·가스·수도사업과 농림어업이 각각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상위 3개 산업에 포함됨. 두 산업은 전국 및 경기도 평균과 비교했을 때 GRDP 비중이 높아 해당 지역에서는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음
 - 파주시는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서비스업이 포함된 정보통신업의 GRDP 비중이 2위를 차지하여 출판 관련 사업체가 다수 입지한 지역 특색을 나타냄. 해당 산업은 전국 및 경기도 대비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음. 연천군은 다른 경기도 접경 지역과 다르게 공공·국방 행정의 GRDP 비중이 1위를 차지하여 지역 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다. 강원도 접경 지역 산업구조

● 산업 분포현황

+ GRDP 기준 상위산업과 하위산업

- 강원도 GRDP 상위산업은 공공·국방 행정, 제조업, 건설업 순이며 광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정보통신업이 하위권을 차지함
 - 2016년 GRDP 기준 강원도 상위 3개 산업은 8.5조 원으로 21.2%를 차지한 공공·국방 행정, 4.1조 원으로 10.3%를 차지한 제조업, 4조 원으로 10.0%를 차지한 건설업 순임. 교육서비스업이 3조 원대, 부동산·임대업과 농림어업이 2조 원대로 뒤를 이음
 - GRDP 1조 원에 못 미치는 하위 3개 산업은 광업 9,300억 원, 전기·가스·수도사업 8,700억 원, 정보통신업 8,500억 원으로 각각 2%대의 비중을 나타냄
- 춘천시 GRDP 상위산업은 공공·국방 행정,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순이며 정보통신업, 농림어업, 광업이 하위권을 차지함
 - 2016년 GRDP 기준 춘천시 상위 3개 산업은 1.2조 원으로 19.8%를 차지한 공공·국방 행정, 7,300억 원으로 12.1%를 차지한 교육서비스업, 5,100억 원으로 8.4%를 차지한 건설업 순임. 부동산·임대업과 보건·복지서비스업이 4천억 원대로 뒤를 이음

- 춘천시에는 공공·국방 행정을 제외하고 1조 원이 넘는 산업이 없음. 대다수 산업은 GRDP 2~3천억 원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하위 3개 산업에는 2,200억 원의 정보통신업, 1,300억 원의 농림어업, 620억 원의 광업이 포함됨
- 고성군 GRDP 상위산업은 공공·국방 행정,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순이며 광업, 운수업, 정보통신업이 하위권을 차지함
 - 2016년 GRDP 기준 고성군 상위 3개 산업은 3,900억 원으로 44.1%를 차지한 공공·국방 행정, 760억 원으로 8.6%를 차지한 건설업, 750억 원으로 8.4%를 차지한 교육서비스업 순임. 숙박·음식점업과 농림어업이 630억 원대로 7%대를 차지하며 뒤를 이음
 - 고성군에는 공공·국방 행정을 제외하고 GRDP 1천억 원을 넘는 산업이 없으며, 공공·국방 행정이 지역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GRDP 1백억 원에 못 미치는 하위 3개 산업에는 97억 원의 광업, 87억 원의 운수업, 37억 원의 정보통신업이 포함됨
- 양구군 GRDP 상위산업은 공공·국방 행정, 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 순이며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운수업, 광업이 하위권을 차지함
 - 2016년 GRDP 기준 양구군 상위 3개 산업은 4,700억 원으로 58.1%를 차지한 공공·국방 행정, 780억 원으로 9.5%를 차지한 농림어업, 530억 원으로 6.5%를 차지한 교육서비스업 순임.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이 각각 490억 원, 250억 원으로 뒤를 이음
 - 양구군에는 공공·국방 행정을 제외하고 GRDP 1천억 원이 넘는 산업이 없으며, 공공·국방 행정의 지역생산 비중이 60%에 육박함. 대다수 산업이 GRDP 1백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1백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산업은 지역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임. 정보통신업 62억 원, 사업서비스업 61억 원, 운수업 58억 원, 광업 49억 원으로 하위권을 차지함
- 인제군 GRDP 상위산업은 공공·국방 행정, 건설업, 농림어업 순이며 정보통신업, 운수업, 광업이 하위권을 차지함
 - 2016년 GRDP 기준 인제군 상위 3개 산업은 7,200억 원으로 55.4%를 차지한 공공·국방 행정, 1,500억 원으로 12.0%를 차지한 건설업, 770억 원으로 5.9%를 차지한 농림어업 순임. 630억 원의 교육서비스업이 4.9%를 차지하며 뒤를 이음. 인제군에는 공공·국방행정과 건설업을 제외하고 GRDP 1천억 원이 넘는 산업이 부재함. 상위 2개 산업이 지역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함
 - 상위 4개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은 대다수 GRDP 1~4백억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하위 3개 산업은 1백억 원에 못 미침. 정보통신업 80억 원, 운수업 77억 원, 광업 52억 원으로 하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지역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내외임
- 철원군 GRDP 상위산업은 공공·국방 행정, 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 순이며 사업서비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이 하위권을 차지함

- 2016년 GRDP 기준 철원군 상위 3개 산업은 7,800억 원으로 52.6%를 차지한 공공·국방 행정, 2,200억 원으로 14.6%를 차지한 농림어업, 790억 원으로 5.3%를 차지한 교육서비스업 순임. 철원군에는 공공·국방행정과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GRDP 1천억 원 이상인 산업이 부재함. 해당 2개 산업이 지역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함
- 철원군의 대다수 산업은 GRDP 2~5백억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하위 3개 산업은 160억 원의 사업서비스업, 130억 원의 운수업, 92억 원의 정보통신업으로 각각 지역생산의 1%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 화천군 GRDP 상위산업은 공공·국방 행정, 건설업, 농림어업 순이며 정보통신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이 하위권을 차지함
 - 2016년 GRDP 기준 화천군 상위 3개 산업은 7,900억 원으로 69.3%를 차지한 공공·국방 행정, 640억 원으로 5.6%를 차지한 건설업, 560억 원으로 4.9%를 차지한 농림어업 순임. 교육서비스업이 500억 원으로 4.4%를 차지하며 상위권에 포함됨. 공공·국방 행정을 제외하고 GRDP 1천억 원 이상인 사업이 부재하며, 해당 1개 산업이 지역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함
 - 화천군의 대다수 산업은 GRDP 1~3백억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GRDP 1백억 원에 못 미치는 하위 3개 산업은 93억 원의 정보통신업, 59억 원의 운수업, 50억 원의 사업서비스업으로 각각 지역생산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음
- 산업 비중 현황
 - + 전국 및 광역 대비 비교우위
 - 전국에서 중위권을 차지한 공공·국방 행정이 강원도에서는 최상위 산업이며,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한 사업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은 강원도에서 중위권에 머무름
 - 강원도의 GRDP 산업 순위는 전국과 다른 분포를 나타냄. 전국에서는 중위권에 위치하며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국방 행정이 강원도에서는 GRDP 비중 21.2%로 1위를 차지함.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산업구조를 나타냄
 - 전국에서 28.8%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한 제조업은 강원도에서 2위를 차지했으나 GRDP 비중이 10.3%에 불과하여 전국 대비 비교우위가 떨어짐. 강원도에서 3위를 차지한 건설업은 10.0%의 비중을 차지하여 전국 5.7% 대비 비교우위를 지님.
 - 전국에서 GRDP 2~3위를 차지한 사업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은 강원도에서 중위권에 머무름. 전국에서 하위 2개 산업에 포함된 농림어업은 강원도에서 중상위권, 하위 4개 산업에 포함된 숙박·음식점업은 강원도에서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강원도 접경 지역 6개 시·군의 GRDP 상위산업에는 전국 평균 상위산업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공공·국방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한 농림어업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 산업으로 나타남
 - 강원도 접경 지역 6개 시·군 모두 공공·국방 행정이 GRDP 1위 산업을 차지함. 춘천시 최소 20%에서 화천군 최대 70%까지 평균 5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국 6.4%, 강원도 21.2% 대비 비교우위를 지님. 인구가 적고 입지한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며 산간 지역인 강원도 접경 지역 전역이 공공산업 및 군부대 의존도가 높은 열악한 산업구조를 보임
 - 전국에서 GRDP 상위 3개 산업에 포함된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이 강원도 접경 지역 6개 시·군의 상위 3개 산업에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음. 6개 시·군에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중위권에, 사업서비스업은 하위권에 위치함
 - 전국에서 중위권에 포함된 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 최하위권에 포함된 농림어업이 강원도 접경 지역 6개 시·군에서는 GRDP 상위 3개 산업에 포함됨. 건설업은 양구군과 철원군을 제외한 4개 시·군에, 교육서비스업은 인제군과 화천군을 제외한 4개 시·군에, 농림어업은 춘천시와 고성군을 제외한 4개 군에 포함되어 있음
 - 공공·국방 행정을 제외한 다른 산업들을 전국 및 광역 GRDP 비중과 비교했을 때, 춘천시는 교육서비스업,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은 농림어업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 산업으로 나타남

〈표 II-23〉 접경 지역 산업별 GRDP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인천시				경기도					
	강화군		옹진군		고양시		김포시		동두천시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농림어업	133,071	13.5	66,571	16.7	21,576	0.1	164,396	2.1	14,453	0.9
광업	4,863	0.5	42	0.0	0	0.0	454	0.0	0	0.0
제조업	163,054	16.5	10,618	2.7	994,699	5.5	3,311,965	42.4	228,290	14.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498	0.3	12,094	3.0	393,848	2.2	132,386	1.7	145,439	9.5
건설업	83,740	8.5	89,098	22.4	1,592,630	8.8	437,284	5.6	86,738	5.7
도매 및 소매업	52,329	5.3	9,616	2.4	2,068,977	11.4	655,515	8.4	122,087	8.0
운수업	24,401	2.5	7,194	1.8	861,143	4.8	293,159	3.7	68,584	4.5
숙박 및 음식점업	50,261	5.1	19,163	4.8	639,130	3.5	212,090	2.7	69,545	4.5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9,730	2.0	9,720	2.4	1,286,012	7.1	143,673	1.8	57,620	3.8
금융 및 보험업	41,168	4.2	5,762	1.4	969,280	5.4	231,769	3.0	102,609	6.7

구 분	인천시				경기도					
	강화군		옹진군		고양시		김포시		동두천시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	89,816	9.1	33,899	8.5	3,073,955	17.0	703,920	9.0	133,583	8.7
사업서비스업	6,266	0.6	4,140	1.0	1,474,979	8.1	198,838	2.5	26,902	1.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23,872	12.5	89,588	22.5	1,122,630	6.2	348,320	4.5	131,991	8.6
교육서비스업	86,489	8.7	19,497	4.9	1,312,958	7.3	415,950	5.3	99,166	6.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6,978	6.8	15,028	3.8	1,335,637	7.4	346,217	4.4	169,538	11.1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39,974	4.0	6,605	1.7	952,490	5.3	223,726	2.9	73,264	4.8
총부가가치 (기초가격)	988,510	100	398,635	100	18,099,945	100	7,819,662	100	1,529,808	100
순생산물세	84,350		30,959		1,269,981		709,454		118,038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1,072,860		429,594		19,369,926		8,529,117		1,647,846	
구 분	경기도								강원도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춘천시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농림어업	257,673	5.3	213,020	1.6	446,301	9.5	41,203	4.1	130,631	2.2
광업	21,953	0.5	8,985	0.1	81,382	1.7	9,553	1.0	62,249	1.0
제조업	1,818,874	37.7	6,998,551	52.1	1,630,090	34.5	113,764	11.4	368,955	6.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2,521	1.7	138,051	1.0	107,878	2.3	73,913	7.4	239,135	4.0
건설업	331,240	6.9	492,147	3.7	296,761	6.3	116,819	11.7	507,368	8.4
도매 및 소매업	384,059	8.0	716,713	5.3	380,520	8.1	62,091	6.2	331,428	5.5
운수업	156,629	3.2	468,515	3.5	158,198	3.4	19,805	2.0	297,781	4.9
숙박 및 음식점업	126,422	2.6	265,474	2.0	162,810	3.4	35,014	3.5	223,822	3.7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7,147	3.5	1,024,248	7.6	76,845	1.6	81,105	8.1	217,808	3.6
금융 및 보험업	89,392	1.9	245,914	1.8	176,812	3.7	43,478	4.4	263,747	4.4
부동산업 및 임대업	363,851	7.5	822,833	6.1	174,924	3.7	55,345	5.6	454,874	7.6
사업서비스업	149,301	3.1	366,440	2.7	119,647	2.5	16,581	1.7	288,227	4.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61,302	5.4	491,862	3.7	296,848	6.3	185,499	18.6	1,190,852	19.8
교육서비스업	227,512	4.7	462,638	3.4	221,448	4.7	45,320	4.6	730,569	12.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11,119	4.4	406,645	3.0	191,047	4.0	54,174	5.4	398,338	6.6

구 분	경기도								강원도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춘천시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76,724	3.7	311,848	2.3	198,610	4.2	42,239	4.2	316,809	5.3
총부가가치 (기초가격)	4,825,719	100	13,433,885	100	4,720,120	100	995,905	100	6,022,592	100
순생산물세	428,859		1,299,891		414,556		75,580		461,910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5,254,577		14,733,776		5,134,676		1,071,485		6,484,502	
구 분	강원도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화천군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농림어업	63,051	7.1	77,578	9.5	76,807	5.9	216,631	14.6	55,569	4.9
광업	9,707	1.1	4,854	0.6	5,151	0.4	335	0.0	0	0.0
제조업	32,962	3.7	18,558	2.3	24,961	1.9	49,279	3.3	18,532	1.6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4,871	1.7	11,294	1.4	18,443	1.4	22,392	1.5	24,859	2.2
건설업	76,074	8.6	48,568	6.0	154,791	12.0	59,365	4.0	63,931	5.6
도매 및 소매업	25,369	2.9	18,472	2.3	34,981	2.7	43,093	2.9	18,537	1.6
운수업	8,682	1.0	5,840	0.7	7,737	0.6	13,298	0.9	5,870	0.5
숙박 및 음식점업	63,597	7.2	18,338	2.3	34,568	2.7	31,445	2.1	18,948	1.7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667	0.4	6,232	0.8	7,950	0.6	9,190	0.6	9,320	0.8
금융 및 보험업	17,089	1.9	13,304	1.6	22,219	1.7	26,851	1.8	11,446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34,529	3.9	24,854	3.1	40,602	3.1	47,166	3.2	30,679	2.7
사업서비스업	11,870	1.3	6,149	0.8	16,151	1.2	15,646	1.1	5,025	0.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90,716	44.1	473,588	58.1	715,705	55.4	782,492	52.6	790,206	69.3
교육서비스업	74,848	8.4	53,160	6.5	63,035	4.9	79,196	5.3	49,883	4.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8,196	2.1	16,490	2.0	25,327	2.0	40,444	2.7	17,353	1.5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41,753	4.7	17,362	2.1	43,852	3.4	50,638	3.4	19,447	1.7
총부가가치 (기초가격)	886,982	100	814,640	100	1,292,279	100	1,487,462	100	1,139,606	100
순생산물세	64,190		52,788		88,869		104,584		72,147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951,171		867,428		1,381,148		1,592,046		1,211,752	

※ 주: 당해년도 가격으로 산정한 명목 GRDP 기준

자료: 경제 활동별 지역내총생산, 통계청(2016)

〈표 II-24〉 GRDP 기준 접경 지역별 상위산업과 비교우위

(백만 원, %)

구 분	GRDP 상위 3개 산업	GRDP	GRDP 비중	전국 평균 비중	해당 광역 지자체 평균 비중	비교 우위 (전국)	비교 우위 (광역)
전국	제조업	459,392,294	28.8	-	-	-	-
	사업서비스업	149,264,266	9.4	-	-	-	-
	도매 및 소매업	130,152,992	8.2	-	-	-	-
인천시	제조업	20,905,556	27.2	28.8	-	▽	-
	운수 및 창고업	8,833,944	11.5	3.6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6,267,287	8.2	8.1	-	≡	-
강화군	제조업	163,054	16.5	28.8	27.2	▽	▽
	농림어업	133,071	13.5	2.0	0.3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23,872	12.5	6.4	5.7	▲	▲
옹진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9,588	22.5	6.4	5.7	▲	▲
	건설업	89,098	22.4	5.7	6.1	▲	▲
	농림어업	66,571	16.7	2.0	0.3	▲	▲
경기도	제조업	136,022,024	36.1	28.8	-	▲	-
	사업서비스업	41,020,831	10.9	9.4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31,506,795	8.4	8.1	-	≡	-
고양시	부동산업 및 임대업	3,073,955	17.0	8.1	8.4	▲	▲
	도매 및 소매업	2,068,977	11.4	8.2	6.7	▲	▲
	건설업	1,592,630	8.8	5.7	6.4	▲	▲
김포시	제조업	3,311,965	42.4	28.8	36.1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703,920	9.0	8.1	8.4	≡	≡
	도매 및 소매업	655,515	8.4	8.2	6.7	≡	▲
동두천시	제조업	228,290	14.9	28.8	36.1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9,538	11.1	4.3	3.8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45,439	9.5	2.1	1.3	▲	▲
양주시	제조업	1,818,874	37.7	28.8	36.1	▲	▲
	도매 및 소매업	384,059	8.0	8.2	6.7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363,851	7.5	8.1	8.4	≡	≡
파주시	제조업	6,998,551	52.1	28.8	36.1	▲	▲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24,248	7.6	4.8	4.3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822,833	6.1	8.1	8.4	▽	▽
포천시	제조업	1,630,090	34.5	28.8	36.1	▲	▽
	농림어업	446,301	9.5	2.0	0.9	▲	▲
	도매 및 소매업	380,520	8.1	8.2	6.7	≡	≡
연천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85,499	18.6	6.4	4.6	▲	▲
	건설업	116,819	11.7	5.7	6.4	▲	▲
	제조업	113,764	11.4	28.8	36.1	▽	▽

구 분	GRDP 상위 3개 산업	GRDP	GRDP 비중	전국 평균 비중	해당 광역 지자체 평균 비중	비교 우위 (전국)	비교 우위 (광역)
강원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503,900	21.2	6.4	-	▲	-
	제조업	4,106,755	10.3	28.8	-	▽	-
	건설업	3,985,876	10.0	5.7	-	▲	-
춘천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190,852	19.8	6.4	21.2	▲	≒
	교육서비스업	730,569	12.1	5.3	8.4	▲	▲
	건설업	507,368	8.4	5.7	10.0	▲	▽
고성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90,716	44.1	6.4	21.2	▲	▲
	건설업	76,074	8.6	5.7	10.0	▲	≒
	교육서비스업	74,848	8.4	5.3	8.4	▲	≒
양구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73,588	58.1	6.4	21.2	▲	▲
	농림어업	77,578	9.5	2.0	5.4	▲	▲
	교육서비스업	53,160	6.5	5.3	8.4	≒	▽
인제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15,705	55.4	6.4	21.2	▲	▲
	건설업	154,791	12.0	5.7	10.0	▲	▲
	농림어업	76,807	5.9	2.0	5.4	▲	≒
철원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82,492	52.6	6.4	21.2	▲	▲
	농림어업	216,631	14.6	2.0	5.4	▲	▲
	교육서비스업	79,196	5.3	5.3	8.4	≒	▽
화천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90,206	69.3	6.4	21.2	▲	▲
	건설업	63,931	5.6	5.7	10.0	≒	▽
	농림어업	55,569	4.9	2.0	5.4	▲	≒

※ 주: 비교우위 표기 기준은 전국/해당 광역지자체 평균 비중 대비 접경 지역 비중 차이 1.5% 이상(▲), ±1.5% 미만(≒), 1.5% 이하(▽)
 자료: 경제 활동별 지역내총생산, 통계청(2016)

3 접경 지역 관련 정책·사업 현황

3.1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및 추진사업

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제3차, 2018~2022)

● 비전과 목표

+ 비전: 평화 공존, 공동번영

- 평화와 경제 협력이 선순환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촉진하고자 함
 - 평화 공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 간 상호인정 및 평화로운 공존,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과정으로서의 평화통일’ 지향
 - 공동번영: 남북 경제의 복원을 통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남북 경제통합의 기반 마련, 경제 협력의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및 국제사회로 확장

+ 3대 목표

-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목표로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을 제시함
 -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제도적 보장 추구
 - 지속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 다양한 분야의 대화와 교류 협력 활성화, ‘통일 국민협약’으로 통일문제·남북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남북 기본협정(남북관계 측면)’과 ‘한반도 평화협정(국제적 측면)’ 체결로 남북관계의 제도적 지속성 보장
 -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충 및 북한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호혜적 방식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여 남북 간 ‘하나의 시장’ 및 경제 공동체 기반 형성, 한반도 신경제구상·신북방정책·신남방 정책을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실행

●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 5개년 계획

- 남북 간 ‘한반도 신경제구상’ 협의를 통해 추진 전략 수립 및 이행

- 환동해·환서해·접경 지역 3대 벨트별 입지, 산업, 인프라 등 특성을 고려한 발전전략 기획
-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제도적 협력, 생산요소·기술교류 등 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하나의 시장’ 형성 촉진
- 남북 공동의 이익과 북한의 수요를 고려하여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협의·실천사항 추진
- ‘한반도 신경경제구상’ 틀 내에서 남북경협의 단계적 재개
 - 북핵 문제 진전, 남북의 수요와 장단점을 고려하여 경협 사업 발굴 및 단계적 확대 모색
 - (철도·도로) 남북연결 구간 및 북측 구간 현대화를 통해 환서해·환동해 경제벨트 형성 촉진
 - (산림) 한반도 전역의 녹화를 위한 산림복구 및 보호 사업 중점추진
 - (산업단지)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을 재개하여 남북 호혜적 발전에 기여하는 거점으로 육성
 - (관광·물류) 여건 조성 시 금강산·개성 관광 등 기존 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물류 축 연결 및 인근 관광자원 결합을 통해 관광 협력의 단계적 확대 모색
 - (법·제도) 안정적인 경협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남북 경제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 병행
- 주요 국가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
 -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 참여와 협력을 통해 남북경협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 중국·러시아·몽골·아세안 등 주요 국가 개발정책과 연계된 전략적 협력 추진
 - 유관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민관협력(1.5트랙)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으로 발전
- 각계각층 의견수렴 및 민관협력에 기반한 추진체계 구축
 - 지자체·경제단체·기업·NGO·전문가와 소통·협업을 통해 ‘열린 구상’으로 관리
 - 정부 내 전담조직 설치, 유관기관·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운영
 - 지속 가능한 남북 간 협력, 우리 기업의 안정적 경제 활동과 투자보장을 위한 남북 간 협의 채널 구축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나. 국토종합계획(제5차, 2020~2040)

● 국토발전 비전과 전략

+ 비전과 목표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수립함
 - 다양한 세대·계층·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포용 국가 기반 마련, 좋은 일자리와 안전하고 매력적인 정주 환경으로 글로벌 경쟁력 있는 지속 가능한 국토 조성

- 삶의 질, 건강 등 국민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주거·생활·도시 등 다양한 국토 공간에 구현, 품격있는 국토 경관 조성 및 산지·해양·토지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행복한 삶터 구현
-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함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균형국토 조성, 지역 간 연대와 자율적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균형 발전 추진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국토: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 대응과 생태 네트워크 강화, 국토 자원 및 경관 관리로 국토매력도 제고,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지능형 국토관리체계 구축, 네트워크 효율화와 고속서비스로 전국 평균 2시간 및 대도시권 30분대 연결
 -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지역산업 생태계 회복력 제고, 문화·관광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제고, 3대 경제벨트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행, 대륙연결형 국토 골격 형성, 유럽까지 이어지는 교통·물류 기반 조성

+ 국토발전 6대 추진 전략

-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 (수도권) 지방과 상생발전, 교통·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수도권 내 균형 발전, 질적 성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방대도시권) 인근 지역과 경제·사회·문화를 연계하여 중추 거점기능 강화, 주변 지역 간 광역·순환형 인프라 구축
 - (중소도시권) 혁신도시·새만금·행복 도시 등 균형 발전거점 조성, 중소도시 연계형 도시권 육성
 - (농산어촌) 생활 서비스 집약화 등 정주 여건 개선, 매력 제고를 통한 유입·체류 인구 확대, 낙후·위기 지역 지원 내실화
-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산업혁신) 기존산업 혁신과 미래 신산업의 지역 연계로 혁신성장공간 확충,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미래형 복합산업 공간 조성 및 노후 산업단지 재생
 - (문화·관광)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공간 창출 및 주변 관광자원 연계, 쇠퇴 관광지·시설의 문화적 재생을 통한 지역 활력 거점화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인구변화 대응) 인구 감소에 대응한 도시 적정개발 및 집약적 공간구조 개편,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비한 사회통합형 생활공간 조성 및 생활 SOC 질적 확충

- (복지·안전) 생애 단계·소득수준별 주거복지 강화, 주거 안전망 구축 및 미래형 주거 서비스 확대, 통합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지능형 국토 방재기반 조성
-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 (환경 친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분산 등 기후변화 대응 국토환경 조성, 국토생태 축보전·복구, 도시 내 녹색 인프라 확충, 오염·방치공간 재생
 - (매력도 제고) 해양·산지·에너지 등 국토자원 미래가치 창출, 디자인 개선을 통한 경관품격 제고, 통합적 도시경관 관리 및 일상생활 경관 향상
-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 (교통) 간선망 효율화로 전국 2시간대 연결, 주요 거점 30분대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자율주행차·개인 이동수단·하이퍼루프 대비 미래형 교통체계 개편 검토,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교통 이용 플랫폼 통합
 - (스마트화) 신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기존도시의 스마트화, 토지·지하 공간·교통 등 국토정보 통합을 통한 가상국토 플랫폼 구축
-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 (한반도 신경제구상) 남북협력 통한 경제 공동체 형성,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 국가로 발전,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 (한반도-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설립, 대륙연결형 교통망 구축, 신북방·신남방정책 및 도시개발모델 수출 등 교류 협력 선도
-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 +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반 조성
 -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이행과 경제 협력 추진
 - 평화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 경제통일 기반을 조성하여 동북아 평화경제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는 평화경제 실현 목표
 - (환동해 에너지·자원 벨트) 러시아와의 에너지(가스·석탄) 협력, 단천특구 광물자원(아연·마그네사이트) 공동개발을 매개로 동해 측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남(영동권)·북(동부권)·중국(길림·흑룡강·연해주)의 발전적 협력 축 개발
 - (환서해 물류·산업 벨트) 풍부한 인구와 산업시설 등 기존 인프라, 서울-평양을 잇는 서해 측의 지리적 인접성, 남·북·중 교역 규모와 상호보완적 무역구조, 중국의 일대일로 진전에 따른 복합물류 혁신을 활용하여 물류·산업 특화개발
 - (접경 지역 평화 벨트) DMZ의 생태 환경적 특성을 활용하여 관광지구로 개발하고, 접경 지

역을 산업단지로, 한강하구를 공동관리·이용의 장으로 조성하여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정착을 견인

- (하나의 시장 협력)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물리적·제도적 공간을 하나로 형성해 나감으로써 상품·생산요소·기술교류의 촉진과 협력을 통해 3대 벨트 기반 조성 및 생활 공동체 구현
-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협력 과제의 지속적 추진
 -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틀 내에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 확대
 - (기반 확충) 지역별 수요·특성·역량 고려한 지자체 교류·협력사업 지원, 통행·통신·통관 개선, 지식재산권·산업표준·경제통계 협력, 북한 인력 역량개발
 - (남북공동 특구 조성) 산업협력수요·경제발전전략·기반시설 고려한 공동특구 개발, 관광·농수산·물류·에너지 등 분야별 협력사업과 배후 인프라 구축 병행
 - (하천·산림·보건 협력)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 협력 강화, 한반도 산림녹화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산림협력, 전염성 질병 대비 방역·보건·의료협력
 - 남북 교통인프라 연결 및 현대화
 - (철도·도로) 한반도 서해지역(서울~개성~평양~신의주)과 북·중·러 접경 지역(중국 동북부~극동 러시아)의 철도·도로 기능 정상화 모색, 철도 남북연결과 북한 간선 철도망 성능 복원, 경의선·동해선의 기존 도로 개보수 및 신설을 통한 남북연결, 동아시아 및 북한 동부·극동 러시아 도로 연계 검토
 - (항공·항만)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합 항공망 협력 모색, 북한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하역 장비 교체 및 신규 선석 건설 검토
- 남북 접경 지역의 평화적 공동 이용 및 관리·개발
 - (평화지대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지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 관련 국제기구 유치,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 (생태·역사문화·평화 관광벨트) 단기적으로 하천·산림·도로 등 실질적 협력 확대, 중장기적으로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을 잇는 광역관광벨트 구축

〈그림 II-17〉 대륙연결형·개방형 국토 구상



※ 자료: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대한민국정부(2019)

+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 국가로 위상 강화

- 대륙연결형 교통·물류 통합네트워크 구축
 - (대륙 연결) 한반도 남북철도를 유라시아대륙 횡단 국제수송노선인 중국·몽골·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협력, 도로·항공·물류·철도 인프라 복합활용으로 유라시아 주요국과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 생활권) 초고속열차, 하이프루프를 이용하여 서울·부산 등 주요 대도시와 동북아 주요 도시(단둥·선양·베이징·블라디보스토크) 간 1일 생활권 형성
- 한반도-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동북아시아 공동번영과 역내 다자 평화 안보체제 확립을 위해 동아시아철도 인프라 사업과 관련 경제 협력사업(경제특구·물류·관광·자원·에너지개발)을 논의하는 국가 간 협의체 실현
 - (아·태-유럽 복합물류 회랑) 아태지역·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의 물리적·제도적 연결, 유라시아 대륙철도 노선 운영 및 복합교통물류체계 완성을 위해 기술 표준화 및 환적·통관개선 등 운영방안 협의
- 초 국경 경제 협력 추진으로 동북아 경제 협력체제 구축
 - (대륙-해양경제) 한반도·유라시아대륙·동남아국가를 잇는 대륙-해양경제 창조,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인도와의 관계 강화, 신북방정책으로 남북과 유라시아·중국·러시아가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 협력 강화
 - (동북아 경제 협력) 한·중·일 FTA를 통한 시장개방과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 주도,

유라시아 경제연합과의 FTA 체결로 산업협력 증진

다. 접경 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 2019 변경기준)

● 추진개요 및 변경내용

+ 추진 배경 및 기존성과

- 낙후된 접경 지역의 주민 복지향상과 신성장 동력 창출 도모하고자 함
 -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주민 복지향상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수립된 법정계획
- 계획 수립 이래 8년 동안 2.8조 원을 접경 지역에 투자하여 지역발전을 지원함
 -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한 이래, 2011~2018년간 2.8조 원을 투자하여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 확충 등 접경 지역 발전에 기여함

+ 2019년 변경 추진 방향

-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함
 - 2019년 변경계획에는 남북관계 진전, 국가 균형 발전 확대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한 주민밀착형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당초 계획된 사업 중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함
- 변경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2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중 강원도가 44%, 경기도가 27%, 인천시가 19%, 광역사업이 10%를 차지함
 - 기존 165개 사업, 18.8조 원 대비 60개 사업 증가, 5.6조 원 감소한 225개 사업, 13.2조 원으로 투자 규모 변경을 결정함
 - 강원도에 134개 사업, 5.9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44%가 투자될 전망이다. 경기도에는 38개 사업, 3.5조 원으로 27%, 인천시에는 27개 사업, 2.5조 원으로 19%, 광역사업에는 26개 사업, 1.3조 원으로 10%가 투자될 계획임
- 접경 지역을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4대 전략 및 10대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에 39%, 균형 발전 기반 구축에 25%, 생태·평화관광 활성화에 23%, 정주 여건 개선에 13%를 투자할 계획임
 -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108개 사업, 3조 원
 - 세계적인 도보 여행길 조성을 통한 글로벌 관광 명소화(16개 사업, 3,900억 원), 독특하고 매력 있는

- 관광자원개발(66개 사업, 2.2조 원), 자연·생태 보전 및 체험·교육공간 조성(26개 사업, 3,800억 원)
- 생활 SOC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 42개 사업, 1.7조 원
 - ▶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20개 사업, 7,700억 원),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22개 사업, 9,600억 원)
 - 균형 발전 기반 구축: 54개 사업, 3.4조 원
 - ▶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발굴(27개 사업, 1.4조 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 제고(8개 사업, 900억 원), 산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쟁력 강화(19개 사업, 1.9조 원)
 -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21개 사업, 5.1조 원
 - ▶ 접경 지역 도로 교통망 확충(10개 사업, 2.1조 원), 경제·문화 교류 협력 촉진(11개 사업, 3조 원)

〈표 II-25〉 접경 지역 발전종합계획 투자 규모 변경

(단위: 건, 억 원)

구분	기존					변경				
	사업수	계	국비	지방비	민자	사업수	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165	188,442 (100%)	54,099 (29%)	14,380 (7%)	119,963 (64%)	225	132,249 (100%)	54,099 (41%)	22,384 (17%)	55,766 (42%)
완료	36	25,055	5,901	2,326	16,828	36	25,055	5,901	2,326	16,828
계속추진	62	71,389	26,782	8,220	36,387	62	70,682	33,939	12,780	23,963
제외대상	67	91,998	21,416	3,834	66,748	-	-	-	-	-
신규추가	-	-	-	-	-	127	36,512	14,259	7,278	14,975

※ 자료: 접경 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행정안전부(2019)

〈표 II-26〉 접경 지역 발전종합계획 전략별·시·도별 투자계획

(단위: 건, 억 원)

전략명	사업수	계	국비	지방	민자	시·도명	사업수	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225	132,249 (100%)	54,099 (41%)	22,384 (17%)	55,766 (42%)	합계	225	132,249 (100%)	54,099 (41%)	22,384 (17%)	55,766 (42%)
생태· 평화관광 활성화	108	30,204 (23%)	9,867	5,697	14,640	광역시	26	13,281 (10%)	9,116	3,890	276
생활 SOC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	42	17,355 (13%)	9,651	7,518	186	인천시	27	25,227 (19%)	4,318	2,192	18,717
균형 발전 기반 구축	54	33,517 (25%)	8,596	4,511	20,410	경기도	38	35,171 (27%)	17,982	4,792	12,397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21	51,173 (39%)	25,985	4,658	20,530	강원도	134	58,570 (44%)	22,683	11,510	24,376

※ 자료: 접경 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행정안전부(2019)

● 전략별 주요 사업

+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 세계적인 도보 여행길 조성을 통한 글로벌 관광 명소화
 - (광역) 통일을 여는 길: 분단·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 인근에 강화~고성까지 456km의 걷는 길을 조성하고 거점센터 10개소를 마련하여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
 - (연천·포천·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자연·생태문화가 잘 보존된 한탄강권역에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접경 지역 대표 생태체험공간 조성
 - (인제) 내린천 트레킹 길: 내린천 변을 따라 30km의 걷는 길을 조성하고 전망대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백두대간 트레일 거점으로 육성
- 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안보 자원을 활용하여 매력있는 관광자원 개발
 - (양구) 편치불 하늘길: 지형·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양구 편치불 지역을 감상할 수 있는 곤돌라 1.2km, 전망대, 편의시설 조성
 - (철원) 삼부연폭포 명소화: 검재정선의 산수화로 유명한 삼부연폭포 주변 정비, 쉼터와 포토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 명소화
 - (인제) 폐막사 활용 병영체험공간: 2020 국방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폐 군사시설을 활용하여 서바이벌 게임존, 실사격 체험존 등 병영체험센터 조성
-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자연·생태를 보전하고 체험·교육공간 조성
 - (광역) 동서 지질공원 네트워크: DMZ 지질명소의 유형별(협곡·폭포·단층), 생태자원별(조류·어류·포유류) 체험·교육코스 개발
 - (강화) 갯벌 생태복원: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서해안 갯벌을 복원하고 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
 - (파주) 생태복원 및 생태천이 프로그램: 임진각 일원의 우수한 습지를 복원하여 DMZ 식물박물관, 생태모니터링센터 등 체험공간·프로그램 운영

+ 생활 SOC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

-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 (10개 지자체)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 인구, 접근성 등 생활권을 기준으로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거점에 복합커뮤니티센터 10개소 조성
 - (강화) 폐교 활용 문화 재생: 문화 소외지역에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소규모 공연장, 휴게시설, 공원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 (동두천) 소리 이름 마당: 동두천 록 페스티벌과 연계한 공연 기회 제공, 시민 관람·체험·연습공

간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강화·옹진·김포·파주·양구·인제) 소규모 LPG 저장시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 저장시설 및 공급관 설치
 - (옹진·양구·인제)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 상수도 취약지구에 물탱크·배관 400여 개 설치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 (화천) 육지의 섬 연결로: 평화의 댐 인근마을 비포장도로 포장 및 낙석 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 균형 발전 기반 구축

- 지역 고유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발굴·유치
 - (고성)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클러스터: 기업·지원센터·대학·연구단지 집적화를 통해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고양) 스마트 플라워시티: 10만 평 규모의 화훼산업 복합지원센터 및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지역 화훼산업 활성화
 - (양구) 백자마을: 마을 빈집, 유희 군부대 부지 등에 지역 특화자원인 백토를 활용할 수 있는 예술 공방, 자작 나무숲을 조성하여 지역 활력 제고
- 유희공간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쇠락한 지역 활력 제고
 - (고양) 내일 꿈 제작소: 청년 거버넌스 공간, 공유카페, 동아리방, 강의실, 컨설팅 룸 등 창업·창작공간 지원
 - (포천) 포동이 청년 일자리 창작소: 일자리 창작소, 어린이 수영장, 문화시설 등 청년 창업 생태 환경 조성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지원
 - (화천) 군 장병 젊음의 거리: 군장병·면회객·가족을 위한 먹거리 단지, 편의시설 등 특화거리 조성
- 산업·물류단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 (화천·양구·인제) 군남 농축산물 물류거점: 접경 지역 농축산물의 공동출하로 유통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
 - (고양·파주) 고양-광탄 간 국지도 확장: 차량정체 구간의 도로 확충을 통한 주변 4천여 개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기업 경쟁력 확보
 - (양구) 철도역사 주변 도시기반시설 확충: 동서 고속철도 양구역사 주변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 열악한 접경 지역의 동서 및 남북 도로 교통망 확충
 - (웅진·강화)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 영종도~신도~강화도를 연결하는 연도교를 구축하여 접근성 개선 및 통일 대비 기반시설 확충
 - (철원) 남북도로 교통망 복원: 기존 남북 연결도로인 국도 3호선, 43호선, 5호선을 복원하여 남북 교류 여건 조성
 - (강화) 교동 평화도로: 교동도 내 주요 간선도로를 확장·포장하여 인천공항과 해주·개성지역을 연결하는 교두보 마련
- 경제 협력 및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경제·문화 교류 협력 촉진
 - (파주) 산업형 교류발전지구: 300만 평의 남북 협력단지·기술교류단지 조성
 - (철원) 물류·에너지형 특화발전지구: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30만 평의 물류기지 및 100만 평의 산업단지 조성
 - (양구) 민통선 북방마을 복원: 전 세계적으로 희소한 민통선 북방지역 ‘민북마을’을 복원하고 영상실·전시실·교육장 등 역사·문화공간 조성

3.2 지자체 차원의 정책 및 추진사업

가. 2030 인천시 도시기본계획(2015~2030)

● 정책 방향성

+ 도시 미래상

- 인천시는 2030년 미래 비전을 ‘사람 중심의 국제·문화·관광도시’로 제시함
 - 인천시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제·문화·관광도시 인천’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주택, 안전·환경,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통·물류, 복지·의료, 교육의 7대 분야별 중점전략을 수립함

+ 접경 지역 개발 연관 분야 정책목표 및 중점전략

- 산업·경제 분야: 공항, 해양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진흥과 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및 육성정책 추진,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 다양한 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 노후 산업단지의 스마트혁신산업단지 개편,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대규모 유통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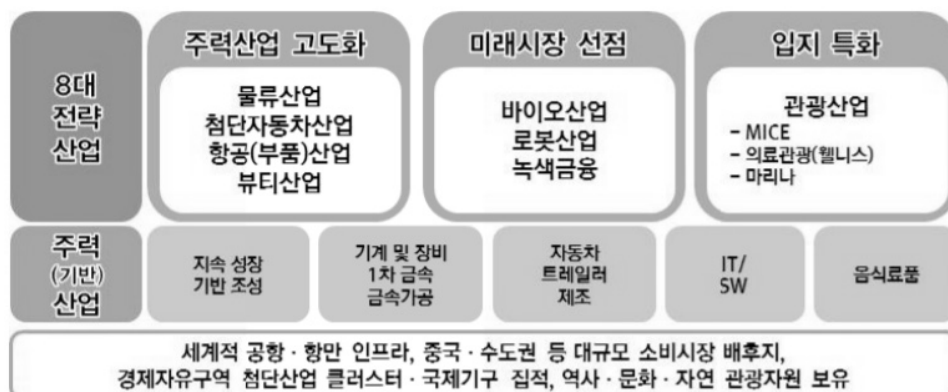
- 문화·관광 분야: 인천 고유의 문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
 - 풍부한 섬을 활용한 명품 섬·가고 싶은 섬 만들기,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국제 수준의 해양관광도시 조성, 수도권매립지의 시민 여가 공간 조성,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문화거점 형성, 특화 거리 및 인천형 테마 마을 조성, 공공디자인 혁신을 통한 인천 브랜드 업그레이드,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추진,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 교통·물류 분야: 지속 가능한 교통·물류체계를 갖춘 세계적인 해양도시
 - 인천항만 등 해양물류 시설의 세계화, 인천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시설의 효율적 운영,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입체 복합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 지역 활성화, 공항 물류체계의 강화 및 지원, 해양관광도시다운 합리적 토지이용, 도서 지역 접근 체계 확충

● 산업전략 및 주요 실행계획

+ 산업전략

- 인천시는 물류, 첨단자동차, 항공(부품), 뷰티, 바이오, 로봇, 녹색 금융, 관광의 8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자 함
 - 인천시는 지경학적 경쟁력과 잠재력, 강점 주력산업, 미래 트렌드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8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육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공항, 항만 등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과 수도권의 배후지로서 역사, 문화, 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병존하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 산업 및 연계산업(기계, 장비, 금속)이 발달하고 다양한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클러스터 및 국제기구 등이 집적되어 있음

〈그림 II-18〉 인천광역시 8대 전략산업



※ 자료: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인천광역시(2015)

+ 주요 실행계획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산업단지 조성
 - 인천 도시첨단산업단지(신활력 거점화), 서운 일반산업단지(전자통신·전기), 강화 일반산업단지(기업 유출 방지 및 일자리 창출), 별말 일반산업단지(환경친화적 상업물류단지), 청라IHP도시첨단산업단지(자동차부품·소재, R&D 중심 친환경적 하이테크 산업시설), 서부 자원순환특화단지(지역발생 폐기물 자원 순환 시스템)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항공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인천공항~구도심 산업단지 연계
 - 자동차·부품산업 융합클러스터: 자동차·부품산업의 IT융합으로 고부가가치화
 - 지능형 로봇 산업 메카·허브 도시: 로봇과 제조·자동차·의료·해양·교육 등 타 산업 융합 비즈니스모델 발굴
- 마리나 제조 및 선박수리 등 관련 산업 육성
 - 마리나 산업: 인천의 해양자원을 마리나 시설과 연계하여 마리나 관광·복합 해양레저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동력화(왕산, 송도, 경인항, 덕적도, 인천항)
 - 선박 수리 산업: 인천항의 위상에 부합하는 최첨단 선박 수리시설 인프라 구축
- 노후 산업단지의 스마트혁신 산업단지 개편
 - 스마트·친환경 기반 구축, 입주기업 연구·혁신역량 강화, 노후단지 리모델링,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대규모 유통단지 조성
 - 신규 개발지 및 기존 시가지 내 대규모 유통단지: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송도 코스트코·이랜드복합시설·현대 프리미엄아울렛·롯데몰, 영종 대형유통시설, 구월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 롯데 타운 등
-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 송도국제도시: 바이오산업(국제병원·바이오산업·연구시설이 집적된 바이오 프런트), 첨단 R&D 분야(산·학·연 집적된 융합기술형 산업혁신 클러스터), MICE 산업(컨벤시아 2단계 구축, MICE 복합지구 조성, 국제기구 연계한 글로벌 컨벤션 특화)
 - 영종지구: 항공 물류 산업(고부가가치 항공 물류 산업 지원, 항공 관련 교육기관·정비·연구시설 집적된 클러스터), 국제업무 분야(IBC 1~2단계 조성을 통한 업무·컨벤션 분야 신규수요 창출)
 - 청라국제도시: 로봇 산업(로봇 R&D 산업·연구단지, 로봇 테마파크), 첨단부품 소재 R&D 분야(청라IHP도시첨단산업단지·한국GM부지 중심 연구·생산단지)

- 해양·수변 관광자원 활용 및 국제 수준의 해양관광도시 조성
 - 해안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레저 인프라 확충: 송도, 영종, 경인아라뱃길, 인천내항 연계
 - 마리나 관광 활성화 및 아라뱃길 수변 관광·레저 중심화: 송도권역, 영종권역, 용유권역, 정서진권역, 내항권역, 남항권역
 -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집적화, 인천국제공항 주변 문화·관광화, 환경친화적 힐링단지 및 신공항 배후지원단지,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 조성, 수도권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 공간구조 및 생활권 구분에 따른 접경 지역 개발 방향

+ 공간구조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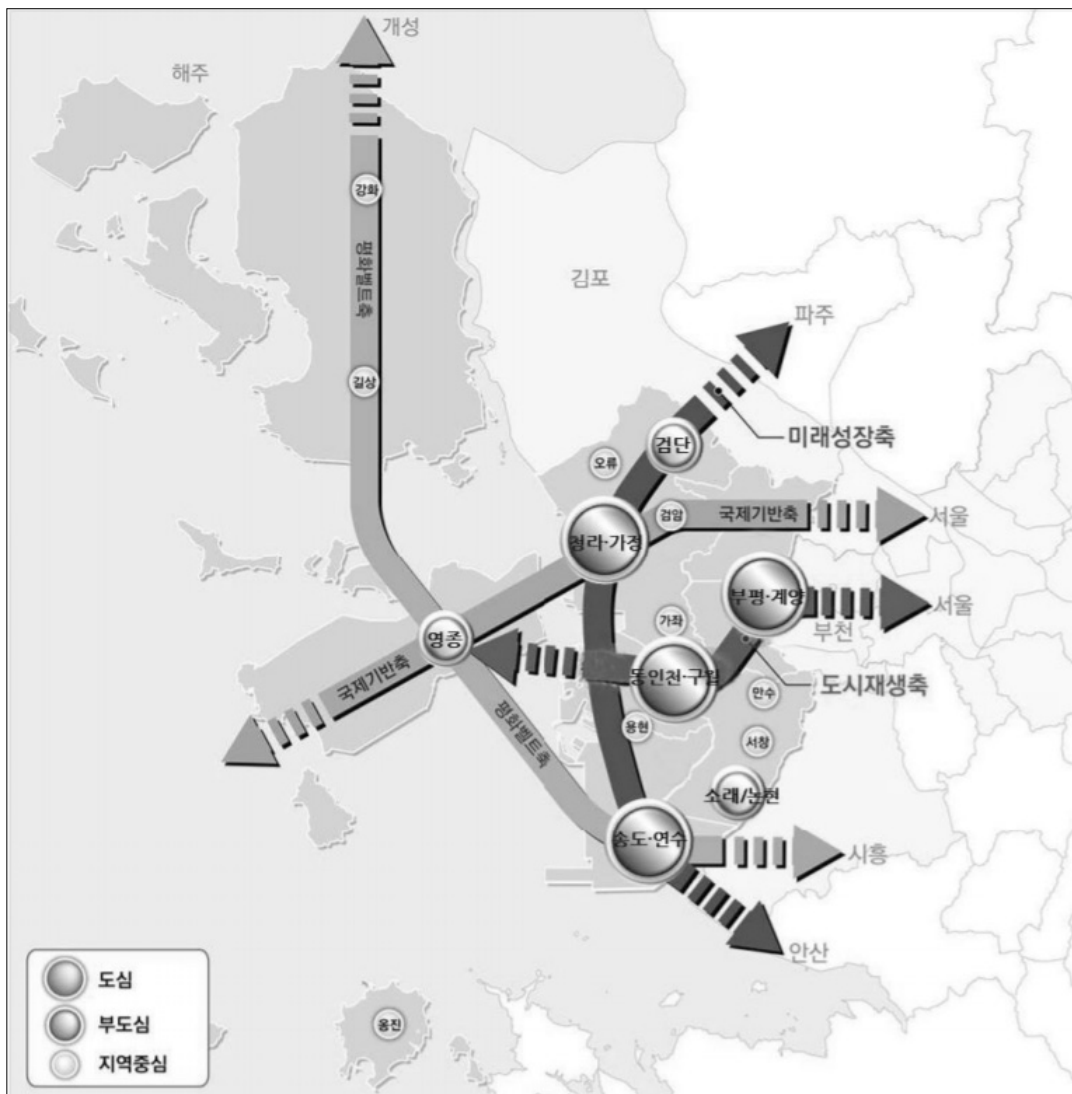
- 인천시의 4도심, 3부도심, 9지역중심, 4개 발전축 공간구조 체계 하에서 접경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9지역중심 및 평화 벨트축에 해당함
 - 인천시는 도시의 공간구조를 4도심, 3부도심, 9지역 중심 체계로 구분하고, 도시재생축, 미래성장축, 국제기반축, 평화 벨트 축의 4개 발전 축을 설정함. 접경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9지역중심 및 평화 벨트 축에 해당함
 - 4도심: 도심 기능 차별화 및 상호연계로 중추 기능 강화, 원도심 재생 및 신도시 발전 통해 균형 발전 도모(동인천+구월, 청라+가정, 부평+계양, 송도+연수)
 - 3부도심: 글로벌 도시 발전을 위한 지원기능 육성(영종, 소래·논현, 검단)
 - 9지역중심: 역세권 중심으로 지역별 자족발전 가능성 확보(강화, 길상, 오류, 검암, 가좌, 용현, 만수, 서창, 옹진)
 - 4개 발전 축: 도시재생 축(영종-동인천-구월-부평-부천-서울), 미래성장 축(일산-검단-청라-동인천-송도-안산), 국제기반 축(영종-청라-검암-계양-서울), 평화 벨트 축(개성-강화-길상-영종-송도-안산)

+ 생활권에 따른 접경 지역 개발 방향

- 인천시의 7개 생활권 중 강화 생활권은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도시 조성, 옹진생활권은 섬을 활용한 휴양·레저 관광 육성·개발 방향성을 설정함
 - 인천시는 중부, 남부, 서북, 동북, 영종, 강화, 옹진의 7개 생활권을 설정하고, 권역별 특성과 잠재적 요소를 활용하여 자족성을 확보한 공간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강화군과 옹진군은 접경 지역인 동시에 도시중심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인천시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미래형 주력산업 개발 대상 지역에서

- 는 대부분 제외된 상황임. 대신 평화, 해양, 도서, 역사·문화, 생태환경, 농어촌 관련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산업 활성화 중심으로 개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강화생활권: 강화지역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창조·융합 관광도시 조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관광 가치 재창조
 - 용진생활권: 도서 해안 지역의 자연자원을 기초로 지속 가능한 섬 휴양·관광 육성, 도서 지역 간 수상교통 연계 강화를 통한 접근성 제고, 정주 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자족성 강화

〈그림 II-19〉 인천시 공간구조 발전축



※ 자료: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인천광역시(2015)

〈표 II-27〉 인천시 접경 지역 생활권 발전 전략과 세부 내용

구 분	발전 전략	세부 내용
강화 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역사·문화자원의 관광 자원화 강화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 경제 및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인돌역사문화, 교동 역사문화관광지 등 테마 마을 조성으로 소득 기반 창출: 신흥민마을(교동면), 강화 산성 서문안마을, 온천테마 마을(삼산면), 귀농인 마을 등 휴양·레저 관광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 이용 레저스포츠단지, 삼산 복합휴양단지(온천), 화도 해변 관광지, 길상 레저단지 지역특화 산업 발굴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화 식문화 예술단지, 서도 에코 아일랜드 등 남북경협 등 통일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화 일반산업단지, 교동 평화산업단지, 강화~해주 간 고속도로 건설 지역 및 광역교통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철도 2호선 연장(강화·김포), 서부 광역간선도로 및 광역철도 건설(영종~강화), 삼산~김포 간 도로 건설
옹진 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을 활용한 특화 관광 육성 도서 지역 접근체계 강화 도서 간 네트워크 발전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화된 휴양·레저 관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흥 십리포 휴양단지, 영흥 장경리 휴양단지, 서포리 관광지, 덕적 그린아일랜드, 두무진 관광자원 활성화, 백령 솔개공구 관광단지, 대청도 관광자원 개발 수상교통 네트워크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 간 수상교통 노선 다양화, 여객선 운항 횟수 확대, 아라뱃길을 활용한 수상교통 확충, 덕적도 중심의 지역교통망 강화 도서 간 연륙교 및 연도교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단기): 모도~장봉도, 소이작~대이작~승봉, 덕적~소아도, 불음~아차~주문도 2단계(장기): 대연평~소연평도, 덕적~굴업도, 덕적~문갑도

※ 자료: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인천광역시(2015)

● 접경 지역 대상 분야별 세부사업

+ 농축산업 분야

● 권역별 농업발전 특화방안

- 강화권역: 역사·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친환경농업, 강화 첨단농업 육성 및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식품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농공상 육성, 약쑥특구 및 청정 축산업 육성
- 옹진권역: 쾌적한 섬의 정취와 연계한 농촌관광 활성화, 도서 지역 관광농촌 육성 및 민박

지원, 농촌체험마을 및 축제 지원, 명품 가공농산물 생산 육성

- 지역특산물 육성 및 브랜드화
 - 강화군 지역특산물: 순무, 인삼, 섬쌀, 사자발약쑥, 속노랑고구마 등
 - 옹진군 지역특산물: 쌀, 약쑥, 곰취 등

+ 수산업 분야

- 수산자원 회복 및 안정적 어업기반 조성
 - 수산종묘 육성 및 방류, 인위적 서식장 조성(바다 목장화 사업, 인공어초 투하, 해조장 조성 등), 자율관리어업 추진, 양식장 인증제 도입
 -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강구, 근로 여건 개선, 주 어획물 대상(강화 새우젓, 백령·대청도 까나리 등) 조업 여건 개선
- 지역특산물 명품화 및 다기능 어항 모델 개발
 - 지역특산 수산물(꽃게, 새우젓, 까나리, 바지락, 김, 뱀장어 등) 브랜드 구축 및 가공산업 발굴육성
 - 관광, 어항, 풍력단지, 마리나 등이 결합된 다기능 복합어항 개발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물류경쟁력 강화
 -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 소매시장, 물류센터, 냉동·냉장 시설 등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추진과 연계한 Seafood Landmark 육성으로 전국 체인망 구축
 - 도서 지역 수산유통 공동물류 지원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권역별 공동작업장, 냉동·냉장 시설, 물류 공동센터 등 공동물류 운영으로 유통시스템 선진화(연평권역, 백령·다청권역, 덕적·자월권역 공동물류 지원하는 옹진수산물 물류공동센터 설치)
-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 사업으로 어촌지역 수익 다변화
 - 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그린투어 민박마을 조성, 갯벌체험 등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 산업·경제 분야

- 강화 일반산업단지 확대
 - 김포 양촌, 항공, 귀전, 통진 등 김포산업단지와 서구 검단산업단지 등에 입지한 3천여 개의 기업 등과 연계하여 검단-김포-강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산업 벨트 형성
 - 향후 서해~해주 간 도로, 영종~강화~개성 간 도로 등 광역도로망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교동 평화산업단지 및 개성공단과 연계된 남북경제 협력의 교두보 역할 기대

+ 문화·관광 분야

- 섬 특화 테마 관광 사업 중 ‘평화의 섬(Peace Zone)’: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 평화·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접경 지역 섬 탐방: 제1연평해전 평화 기원 등대 언덕 조성 사업 연계, 군부대 견학 및 NLL 탐방 등 평화·안보 체험 프로그램
 - ‘백령도 성지순례’ 관광 상품과 연계한 관광탐방코스 개발
- 강화군, 옹진군 도서 지역 중심의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 강화도서 지역 역사·예술 기반 관광 융합형 창조도시 조성: 강화읍 재창조사업, 강화 남단 녹색관광회랑사업, 강화 ‘역사와 세계유산’ 역사·문화·관광 거점조성 등
 - 강화·옹진 섬 중심 해양관광 활성화: 서해 섬 지역 문화·생태 콘텐츠 집약한 문화 공간 건립, 섬 항구 중심으로 스토리와 예술 연계한 항구거리 조성, 도서 지역 주민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생태관광 클러스터 육성: 청정해역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 도서 지역 특성 및 환경 영향을 고려한 계획수립, 자연생태관광 활성화 및 생태탐방로 조성
- 특화 거리 및 인천형 테마 마을 조성사업 중 강화군, 옹진군 대상사업
 - 강화읍 특화 거리: 전통시장(강화중앙시장)과 연계한 특화 거리, 가로경관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비
 - 강화산성 서문안마을 ‘역사·문화, 화문석’ 테마화: 왕골(화문석)문화관·체험관 및 게스트하우스, 화문석 만들기·직물체험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
 - 강화군 교동면 신탄민 마을 ‘통일’ 테마화: 신탄민의 역사와 피난 생활의 애환을 기억하는 평화 마을 조성, 통일 체험 학습장 조성 및 인근 화개산·유적지 연계 프로그램 구상
 - 강화군 삼산면 온천 마을 ‘온천’ 테마화: 온천수를 활용하여 보양 기능 갖춘 보양 온천관광 테마 마을 조성, 온천자원·해양자원·신에너지자원을 연계한 복합테마 마을 조성, 스파빌리지·콘도 등 숙박 시설 확충 및 온천수 연구센터 건립
 - 옹진군 덕적도 에코 아일랜드 ‘신재생에너지’ 테마화: 태양마을·바람마을·바이오마을·조류마을 조성 및 지능형 전력망 구축, 관광·청소년수련시설 조성

+ 교통·물류 분야

- 도서 지역 간 수상교통체계 활성화로 접근체계 확충
 - 백령도·연평도·자월도·덕적도 등 도서 지역 간 수상교통 노선 다양화, 여객선 운항 횟수 확대, 중간 선착장 및 터미널 추가

- 도서 지역 간 연도교 및 연륙교 연결
 - 본도와 부속도서 간 연륙교·연도교 구상으로 연륙화 실현, 도서 지역 간 연도교 연결로 지상 교통수단 이동, 섬들을 이동하며 각각의 관광자원 활성화

나.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계획(2016~2025)

● 정책 방향성

+ 비전 및 목표

- 경기도는 미래 통일 한국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발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북부 발전 전략을 추진함
 - 경기도는 미래 통일 한국시대를 대비한 경기 북부의 발전전략을 사전에 준비하고 경기 남북 간 지역 발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해당 계획에서 경기 북부의 비전을 ‘한반도 번영의 중핵지대’로 설정하고, 5대 목표로 수도권과의 융복합 신성장 거점, 도농 상생의 품격 있는 공동체, 생태환경과 문화관광의 보고, 균형 발전과 대륙연계를 위한 교통 인프라, 통일과 번영을 준비하는 평화·협력의 공간으로 제시함³⁾

+ 접경 지역 개발 연관 분야 정책 목표 및 중점 전략

- 산업·경제 분야
 - 환경·디자인 주도의 고용 친화 경제,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의 산업·경제
- 농업·농촌 분야
 -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선진 농업 육성, 도농 상생의 건강한 농촌 공동체 형성
- 환경·관광·문화 분야
 - 한반도 생태·평화의 중심, 친환경 청정지역, 기존 보유 자원의 자산화를 통한 관광·문화 지역 경쟁력 강화, 한류 문화 관광 거점 마련 등 관광 국제화 및 통일 한국시대 대비
- 교통·남북관계 분야
 -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조성 및 녹색교통의 메카, 통일 대비 선도적 SOC 구축, 남북교류와 협력의 전진기지, 한반도 통일시대의 중핵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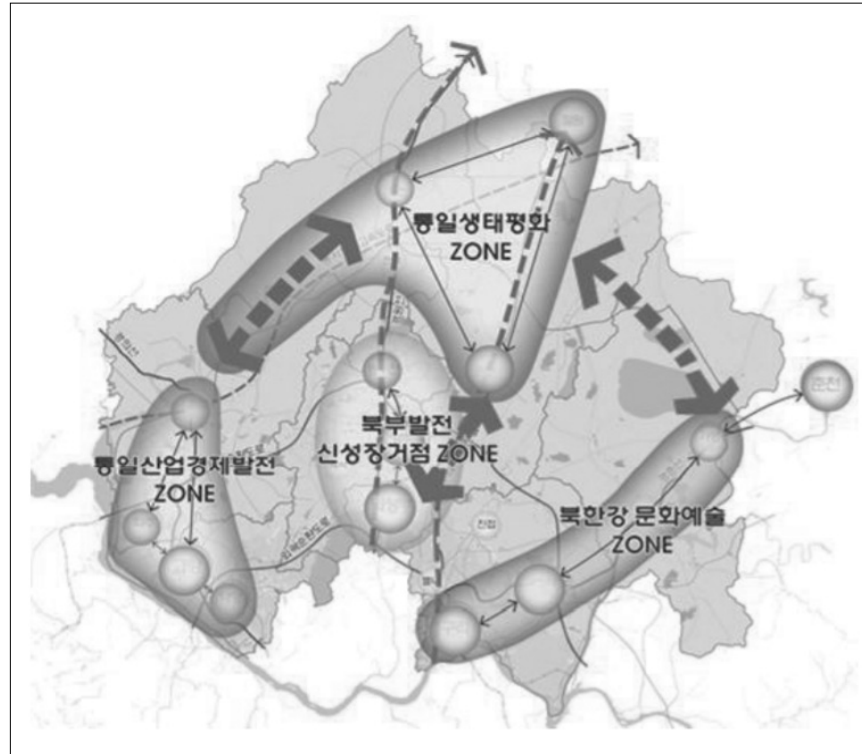
3) 계획 수립 이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4.27 판문점 선언 등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변화하며 경기 북부의 역할이 한반도 정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민선7기 경기 북부 발전 방향(2018~2022)’에서 경기 북부의 비전을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중심’으로 일부 수정함

● 공간 구조 및 생활권 구분에 따른 접경 지역 개발 방향

+ 경기 북부 발전 방향

- 경기 북부의 신성장축을 설정하고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하여 권역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광역 인프라 구축, 공간 구조 변화를 고려한 신성장축 설정, 거점 도시 중심의 생활권 형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경기 북부를 중부, 서부, 북부, 동부 권역으로 나누어 발전 방향을 제시함
- 중부권역: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중심의 ‘북부발전 신성장거점 ZONE’
 - 국도 3호선, 경원선, 신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등에 따른 접근성 개선
 - 패션, 섬유, 가구, 디자인 등 지역 특화 산업 기반의 융복합 신성장 거점지
 -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등 개발 가용지의 체계적 활용을 통한 도시 활성화
- 서부권역: 고양시, 파주시 중심의 ‘통일산업경제 발전 ZONE’
 - 자유로, 경의선,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등에 따른 접근성 증진
 - 파주희망 프로젝트, 고양 JDS지구 등 대규모 신산업 및 경제거점 형성
 - 향후 남북교류시대, 경의선 연결로 인한 남북협력 산업의 거점지
- 북부권역: 포천시, 연천군 중심으로 강원도 철원과 연계한 ‘통일생태평화 ZONE’
 - 임진강, 한탄강으로 연결되는 생태관광 거점지 형성
 - 향후 남북교류시대, 경원선 연결로 인한 남북 및 대륙 물류의 거점지
 - 선사유적, 안보관광자원 등 역사문화자원 연계를 통한 관광 거점지 육성
- 동부권역: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중심으로 강원도 춘천까지 연계한 ‘북한강 문화예술 ZONE’
 - 가평 문화예술도시, 남양주 슬로라이프시티,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등 기존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 구리시, 남양주시 중심의 신성장 거점 형성

〈그림 II-20〉 경기 북부 권역별 발전 방향



※ 자료: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계획, 경기연구원(2015)

〈표 II-28〉 경기 북부 거점도시별 발전 방향과 주요 전략

지역	발전 방향	주요 전략
고양시	방송·영상·문화산업 중심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 일산 중심생활권: 방송, 영상, 한류월드, 킨텍스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 기능 강화, 향후 JDS지구 개발 대비 체계적 도시관리 고양 덕양생활권: 도시개발에 의한 시가지 확장의 계획적 관리,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도시자족성 제고
동두천시	신산업 성장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미군반환공여지의 계획적 복합개발: 캠프 케이시, 호비 등을 신도심 및 성장 거점으로 조성 신성장 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산업단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 복합단지 개발 등
양주시	종합 복지 네트워크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개발, 기성시가지 도시재생 및 정비: 양주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도시확장 및 정주생활권 형성 중부권역 종합복지 거점 형성: 종합복지타운 조성 등 복지 인프라 확충
파주시	통일산업경제 발전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주 남부생활권(금촌, 운정): 신도시, 행정 및 업무 중심도시로 파주시 성장의 핵으로 육성 파주 북부생활권(문산): 자연, 역사, 안보관광의 집중 투자로 경기 북부 관광 거점화 파주 신중심생활권(파주, 월롱): 대학, 산업, 주거가 복합된 자족형 도시 건설

지 역	발전 방향	주요 전략
포천시	친환경 디자인 융합산업 육성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천 중심생활권: 생활 서비스 중심 도시기능 강화 및 정비, 개발압력에 대비한 계획적 도시관리방안 마련 ◦ 포천북부 양문생활권: 산업단지 집적에 의한 시가지 확장의 계획적 관리, 디자인 융합산업 전환을 통한 친환경 산업 단지화 도모
연천군	통일생태교육 및 생태문화관광 중심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및 사업을 연계하여 생태문화관광 중심지로 육성 ◦ 통일교육특구 지정을 통한 통일생태교육 중심 거점으로 육성 ◦ 연천생활권: 행정, 업무, 생활 서비스 중심 도시로 육성 ◦ 전곡생활권: 지역정체성 지닌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 자료: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계획, 경기연구원(2015)

● 산업 전략 및 주요 실행 계획

+ 산업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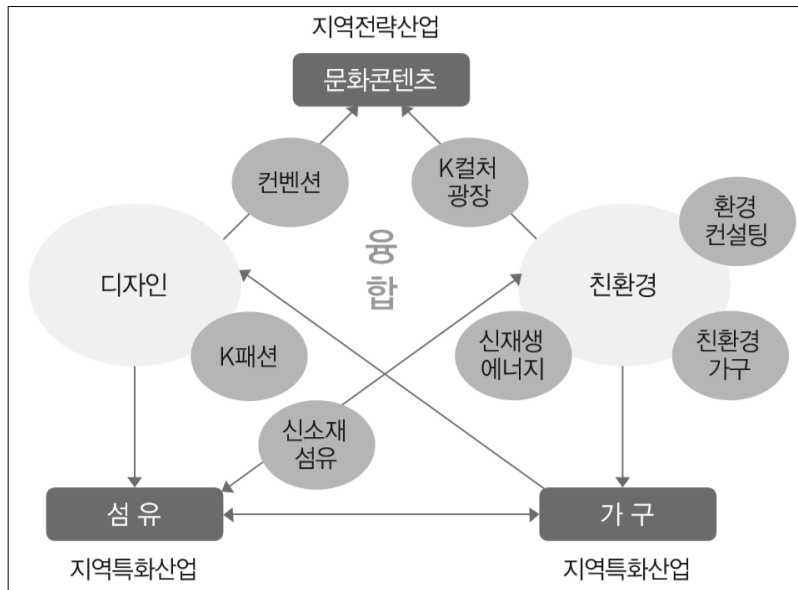
- 경기 남부지역과 차별화된 중소기업 협력 기반의 성장 패러다임 구축
 - 경기 남부지역이 대기업 주도의 수출지향 전략으로 고성장을 구가하는 반면 경기 북부는 중소기업의 협력에 고용 친화형 성장전략 추구
- 연구개발, 문화 콘텐츠,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고차 전문서비스업 육성
 -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에 연구개발, 문화 콘텐츠,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고차 전문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북부지역 혁신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
- 산업단지 등 산업인프라 조기 구축 및 기업 유치 인센티브 마련
 -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등 산업입지 수요가 확대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입지 공급 확대 및 기업 유치 인센티브 마련
- 제조업 중심의 지원에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전환
 - 제조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식인력 양성, 지역소프트파워, 서비스산업 육성 등으로 전환

+ 주요 실행계획

- 신성장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테크노밸리, 친환경 거점산업단지 조성
 - 경기 북부 권역별 잠재력을 고려하여 전략산업을 특성화하고 중심지에 테크노밸리 조성
 -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 산업단지, 벤처창업센터 등 신산업 입지공간 확대
- 섬유, 가구, 디자인, 문화 콘텐츠를 경기 북부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 섬유, 가구 등 전통산업과 디자인, 신소재와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 복합유통, 문화 콘텐츠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K-컬처육성)

- 친환경 디자인 융복합으로 산업구조 혁신
 - 특화 산업 친환경 인증센터(가구, 의류, 장난감 등), 디자이너 스쿨, 융복합기술개발 및 실용화 프로그램, 지역기술혁신체계 구축 등 산업구조 고도화
 - 친환경 도시 지역 이미지 전환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물 산업, 환경엔지니어링 산업 등 신성장 동력 발굴

〈그림 II-21〉 경기 북부 지역산업 육성방안



※ 자료: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계획, 경기연구원(2015)

〈표 II-29〉 경기 북부 권역별 산업특화전략

권역	특화업종	추진근거	비고
고양·파주권	문화 콘텐츠 방송영상정보기기 및 부품·소재	◦ 한류월드, 북시티 등 문화 콘텐츠산업 기집적 ◦ 국립암센터, 동국대고양캠퍼스 등으로 의료기기산업 발전 ◦ LG디스플레이 입지로 관련 산업 클러스터 기형성	단순생산기능 넘어 연구개발 및 벤처기업 유치 필요
의정부·포천·양주권	섬유, 가구디자인 신소재 및 응용	◦ 섬유, 의류, 가구산업 집적도 및 특화도 국내최고수준 ◦ 섬유와 가구는 친환경 신소재, 디자인과 결합한 고부가가치 제고에 주력 ◦ 파주 LCD클러스터에서 파생된 기업이 양주 일대로 이전 추세	산업입지 수요촉진 위해 기반시설 설치 지원 필요
구리·남양주권	IT정보기기 정보서비스 게임 및 소프트웨어	◦ 서울 강남 접근성이 높아 IT 관련 산업 이전 추세 ◦ 구리시, 남양주시는 고양시, 성남시에 필적하는 첨단산업 집 적지 성장 가능성 높음 ◦ 구리, 남양주 신도시 거주민 대다수는 강남, 잠실 직장예 근거 를 둠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개통(2017년) 지하철8호선 연장(2022년)

※ 자료: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계획, 경기연구원(2015)

● 접경 지역 대상 분야별 세부 사업

+ 산업·경제 분야

- 고양-파주시, 구리-남양주시, 의정부-양주시 등 권역별 테크노밸리 조성
 - 고양-파주시는 문화 콘텐츠 및 전자정보기기, 구리-남양주시는 IT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의정부-양주시는 디자인 및 신소재를 특화 육성
- 경기 북부 친환경 거점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 경기 북부에서 계획입지 비율이 현저히 낮으면서 산업입지 수요가 높은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거점산업단지 조성
 - 포천시 신평·양문, 파주시 문발1, 의정부시 용현 등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산업폐자원, 폐수, 폐열에너지가 순환되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생태산업단지로 전환시키고 에너지 신산업단지를 조성
- 경기 북부 성장 모멘텀 창출을 위한 친환경·디자인 융합 기반 조성
 - 경기 북부는 섬유와 가구 산업을 중심으로 디자인과 한류를 결합해 디자인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K-디자인 빌리지 프로젝트 추진 중
 - 섬유, 가구, 염색, 피혁 등 영세한 전통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창출을 위해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디자인센터 설치, 3D프린팅 특화센터 및 특화 산업 친환경 인증지원체계 구축, 친환경 융복합 지역협력연구센터 설치 등 친환경·디자인 융합 기반 조성
- 경기 북부 특화 산업인 섬유·가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화 확대
 - 국제 섬유전시회 참가 및 해외물류센터 운영, 양주시(섬유센터), 포천시(K-디자인 빌리지), 김준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국가 섬유산업 진흥을 위한 디자인특구 지정
 - B2B에서 B2C를 지향하는 가구복합물류센터 조성, 전시컨벤션 및 해외 마케팅 강화, 가구복합물류센터와 연계하여 생산·유통·체험관광·전시가 포함된 테마파크형 가구클러스터 조성, 가구전문학교 운영
- 경기 북부 특화 융복합 연구개발 및 기술창업 지원
 - 섬유·가구 산업과 첨단기술과의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R&D 지원사업 추진, 경기 북부 과학기술 및 R&D 전담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북부센터 설치, 경기 북부 기술창업 지원체계 구축(유관기관 협업,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공동작업장 조성, 기술창업 펀드, 창업자 커뮤니티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점포 공실률이 높은 구도심 상권에 명장·명품산업 특화지구 육성
 - 명장(장인), 본가(원조집) 제작 상품의 명품화, 고급화, 차별화로 지역 명소화
 - 미군기지 이전으로 쇠퇴 중인 동두천시 보산역 일대 상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이국적

쇼핑문화거리 콘셉트로 상권재생, 가족 관련 전문매장 창업지원으로 특화쇼핑거리 조성, 이동·음식·문화체험 등 비쇼핑분야 지출유발 요소 조합

+ 교통 분야

- 남북한을 연결하는 접경 지역 철도 연결사업의 적극 대응
 - 중앙정부에서 백마고지~군사분계선 간 단선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철원 월정리까지 연장하는 계획 중 동두천시(동두천역)~연천군(연천역) 해당
 - 경의중앙선 문산~도라산 간 전철화를 통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과 도라산 평화공원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접경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
- 개성공간 지원 물류단지 조성 및 복합단지로 개발
 - 남북관계 개선시 증가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한 물류시설이 경기 북부에 필요
 - 개성공단 지원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경기 북부 거점 물류시설로 활용
 - 개성공단 생산제품 및 북한 농산물 판매단지,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단지, 입주기업 비즈니스센터, R&D단지, 홍보센터 기능 부여하여 개성공단의 판매망 다각화에 기여하는 복합단지로 개발

+ 도시·지역개발 분야

-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 고양시 대곡 역세권 개발사업: 문화 콘텐츠, 물류·유통, 문화예술교육 산업 시설을 도입하여 문화예술 선순환 도시 건설 계획
 - 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양주시청 일원에 Y-Dream 타운을 조성하여 교육, 문화, 주거시설이 도입된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건설 계획
 - 연천군 연천 역세권 개발사업: 연천역 중심으로 도시가 단절되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주거·교육·산업·문화 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종합 개발을 추진하여 통일 대비 역 중심의 생활문화공간 조성 계획
- 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개발사업 추진
 - 반환된 공여지는 체육공원 및 주민센터, 근린공원, 광역행정타운 건립, 교육연구 시설 등으로 활용 계획
 - 동두천시: 유통·상업단지, 공원, 주거 시설 등으로 개발 계획
 - 파주시: 공여지에 교육연구·도시개발·산업단지개발 계획, 공여지 주변 지역에 '파주 희망 프로젝트' 계획(파주역 연계 교통 접근성 개선 및 역세권 활성화, 자연친화적 도시조성, 농업

관련 산업유치, 자연환경 활용한 건강휴양단지 조성, 공공·외국인투자·미래성장동력 산업 유치)

+ 문화·관광 분야

- 경기 북부 문화·관광 자원 연계를 통해 문화가 흐르는 강변 조성
 - (연천~포천~강원 철원) 한탄강 ‘푸르른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한탄강 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군간 공동 마케팅 추진 및 관광 상품 공동 개발
 - (가평~강원 춘천) 북한강 수륙양용버스 도입 사업: 신개념 교통수단 도입으로 방문객 이동 편의성 도모 및 고급 관광 교통수단 욕구 충족
- 지역 대표·유희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 정체성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
 -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구리) 조선 왕릉 ‘역사 속 한걸음’ 트레킹 기획 및 역사 문화 관광 권 조성 사업 추진
 - (포천) 스파 테라피 지구 조성사업: 포천 일대 온천 지구 재생 및 기능 확대
 - (고양~서울, 연천) 유네스코 세계 유산 잠정 목록 등재 추진사업: 북한 산성과 연천 전곡리 유적의 역사, 문화적 가치 재발굴 및 세계적 수준으로 보존
 - 팜핑(Farm Stay+Camping) 브랜드 개발 및 선도사업: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역 특산물 홍보, 침체된 농업사업 활성화
 - (양주) 광백 수변 문화관광 쉼터 조성사업: 낙후된 주변환경 정화 및 재생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생태문화여가 공간 마련
- 접경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및 통일미래 국제도시 대비
 - (연천, 포천, 파주, 의정부) 안보관광 인프라 및 프로그램 강화사업: 안보·통일 한마음 국제 협력 축제, 안보관광 해설사 양성, DMZ 관광트레일 개발 등 평화와 화합을 의미하는 이미지 조성
 - (파주) 남북 육로관광 대비 접경 지역 면세점 사업: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내국인 면세점을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인 출경장까지 확대하여 남북관광 활성화
 - (고양, 의정부) 한류 관광거점 조성사업: 한류 거점 조성을 통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 체류형 관광객 전환, 지역분산 효과 기대
 - (파주) 관광특구 지정사업: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 인프라 개선 및 관광 진흥 도모

+ 환경 분야

- 임진강~한탄강 권역 평화 생명 벨트 조성

- DMZ~임진강~한강하구 권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비전 수립
- DMZ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DMZ 일원을 대상으로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을 우선 추진, 기 조성된 평화누리길(김포시 대명항~연천군 신탄리역)을 활용하여 숙박·식사·체험이 가능한 통합 프로그램 구성
-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 지정: 추가령 구조곡, 한탄강·임진강을 따라 형성된 주상절리, 재인폭포, 양원리 식물화석 산지, 자살 바위 등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질 명소를 설정하고, 중기적으로 강원도와 연계하여 세계지질공원으로 확대 인증하며 장기적으로 북한 오리산까지 연장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단기적으로 DMZ 일원 내 소규모 거점으로 환경협력, 문화교류, 생물 다양성 확보 등 소규모 실용 사업 발굴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점을 확대하여 임진강~한탄강 평화 생명 벨트를 구축하여 남북한 협력사업 확대
- 민통선 주변 훼손 산지 복원사업: 민북지역 산지의 훼손 실태를 파악하여 산림 복원 대상지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를 회복하고 주변 산림과의 조화 달성
- 산림복지휴양 벨트 조성
 - 복합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숙박·야영 등 주거시설구 외에 건강증진센터 등 편의시설구, 산림치유·교육·체험·레포츠·문화 등 산림휴양구를 도입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 연천군, 가평군 등 기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범 사업 실시
-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 연천군 내 청산대전산업단지 부지를 활용해 폐자원 통합처리센터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전력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 건설
 -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전력 생산, 발전 스팀은 건조 열량(목질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시설 및 하수슬러지 고형 연료화 시설)과 가열 열량(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소화조)으로 사용, 스팀과 온수는 인근의 열소요 시설인 아스팔트콘크리트공장·식품공장·군부대 등에 판매하여 부가수익 창출

+ 농업·농촌 분야

- DMZ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
 - DMZ 지역의 기후·토양에 적합한 블루베리, 사과 등 농업특화단지 조성: 연천군 주도로 우수품종·재배기술·가공품 개발 및 보급, 우수품종 중심 가공단지 구축

- DMZ 특화체험사업 브랜드화: 특화품목 생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등급 선정 및 브랜드화 추진, DMZ 특화품목 및 자연환경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대북 농업지원 및 경기 북부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R&D단지 구축
 - 북한 및 경기 북부 지역 기후에 적합한 고품질 종자와 선진 영농기술의 개발·보급을 전담하는 대규모 농업지원 R&D단지 구축
 - 북한의 기후 조건과 가장 유사한 연천군 일대에 대규모 종묘단지와 양묘단지를 함께 조성하여 북한의 농업 및 녹화사업 지원
- 대북 축산지원 및 DMZ 축산체험센터 구축
 - 친환경 축산지원센터 구축: 통일 대비 우수종축 지원기반 마련 및 경기 북부 지역 축산업 발전 선도
 - 축분자원화시설 구축: 퇴액비 생산 및 에너지 자원화 시설 구축, 대북 유기질 비료 공급 기반 구축
 - DMZ 축산체험센터 구축: DMZ 내 동식물 등 자연 자원 보호 센터 구축, 축산·DMZ자연자원·안보관광을 연계한 체험 관광 및 치유 캠프 운영

+ 남북 관계 분야

- 북한지역 교류거점 확보 및 접경 지역·DMZ 기반 협력사업 추진
 - ‘옛 경기도’ 등 북한지역 교류거점 확보: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등 분단 이전 경기도의 행정구역이었던 북한지역과 교류 협력 사업을 전개하여 경기도 남북교류의 북한 내 거점 확보
 - 접경 지역 남북 상생 협력체계 구축: 말라리아 공동방역,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 한강하구 공동개발 등 협력 시, 남북 양측에 이익이 되는 사업 개발
 - DMZ 보존과 활용: DMZ 생태·환경·역사·문화 공동조사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중앙정부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경기도 지역 포함되도록 노력
-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 경기 북부 인프라 구상 및 설계
 - 통일 경제특구 유치: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고양시 등 경기도 지역이 통일 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건설 및 통일 한국시대 ‘한반도 메가 리전(Korean Mega Region)’ 구축 준비: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장기적 구상으로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조성방안 제안, 한반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메가 리전’을 구축하고 경기 북부를 핵심지역으로 육성

다. 강원 비전 2040(2017~2040)

〈그림 II-22〉 강원도 미래 권역별 산업입지



※ 자료: 강원 비전 2040, 강원연구원(2017)

● 정책 방향성

+ 기간별 비전 설정

- 강원도는 2040년 비전을 ‘자연과 사람의 미래, Login 강원’으로 제시함
 - 2020년 비전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를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미래성장 기반 마련
 - 2030년 비전 ‘힐빙도시 실현’: 2020년 미래성장을 기반으로 청정, 여유, 건강, 쾌적함이 있는 힐빙도시(힐링+웰빙) 실현
 - 2040년 비전 ‘자연과 사람의 미래, Login 강원’: 청정한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가치를 공유하고 누구나 오고 싶은 열린 강원을 창조

+ 접경 지역 개발 연관 분야 정책목표 및 중점전략

- Well-Come: 국내외 연결성이 강력한 열린 공간
 - 고속도로, 고속화 철도에 이어 KTX, 항공, 크루즈 접근성 확보와 통일이라는 기회 요인을 바탕으로 관광·기업·자본·인재·물류 유입 확대
 - 고도화된 교통·물류 인프라와 네트워크형 공간, 통일 인프라 구축과 동북아 협력 확대, 강원도가 주도하는 신 관광시장 생태계, 세계 수준의 관광·레저 인프라

- Dream-Works: 일하고 투자하고 싶은 신산업지대
 - 국가 선도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지역별 특화 산업, 미래형 농도(農道)를 접목하여 신산업지대로 자리매김
 - 빅데이터 중심의 거점 인프라 조성,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별 특화발전 전략, 미래 신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체계 구축, 강원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거점산업의 고도화, 산업별 R&D 클러스터 조성 및 역량 강화, 강원도 농수산업 첨단화, 융복합 농림수산업 고도화, 차세대 미래농업인력 양성

● 산업전략 및 주요 실행계획

+ 산업전략

-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응하여 공유와 포용성장의 강원경제시스템 구축
 - 강원도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별 중소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데이터의 저장과 빅데이터 분석을 새로운 기업지원 인프라로 제공함으로써 일하고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자리매김
-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관광, 푸드테크, e-Mobility,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강원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표산업으로 집중 육성
 - 강원경제시스템을 기반으로 2040년 삶의 질의 척도인 건강, 여유, 여가와 연관된 산업을 강원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표산업으로 집중 육성
- 대표산업은 지역 내 첨단 보건 서비스 제공, 전기차 중심의 이동수단, 강원도 관광 경쟁력 제고, 미래 농도 구현, 먹거리 산업으로 연계
 - 대표산업은 지역 내에서 첨단 보건 서비스 제공, 전기차 중심의 이동수단, 강원도 관광의 경쟁력 제고, 대한민국 미래 농도 구현, 시·군별 먹거리 산업으로 연계되어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속 가능한 경제생태계 구현

+ 주요 실행계획

- 시·군별 특화 산업을 스마트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육성
 - 강원도 특화 산업 구성: 농수산자원 연계산업(커피, 황태 등), 산림자원 연계산업(한지, 힐링우드 등), 광물자원 연계산업(춘천연옥, 스톤아트 등)
 - 시·군별 라이프스타일 산업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기술을 추가하고 지역거점 라이프스타일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O2O산업으로 육성
- 시·군간 연계를 통한 특화 산업벨트 조성

- 신소재·비철산업 클러스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강릉, 동해)을 중심으로 신소재·비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과 에너지·자원벨트로 확장
- 차세대 콘텐츠 산업 육성: 지역별 차별화된 콘텐츠를 ICT와 연계하여 차세대 콘텐츠 산업으로 육성
- 해양심층수산업 벨트 조성: 고성의 해양심층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육성
- 폐광지역 지원체계 구축과 폐특회계 신설: 강원도 폐광지역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폐특회계 신설
- 미래 대표 신산업(디지털 헬스케어, 이모빌리티) 육성 및 인프라 조성
 - 국가선도 AI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도 전략산업이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 거점산업으로 육성
 - e-mobility 생산·수출 거점화 벨트 조성: 소형 이모빌리티 산업의 국내 생산 및 수출 거점지 조성
 - 미래 대표 신산업 인프라 조성: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응급 지원 시스템 구축, 이모빌리티 생산·수출 인증지원센터 설립, 스마트카-디지털헬스 융합 R&BD 사업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역별 특화 신산업 육성
 - (영월) 산림 드론 클러스터: 영월을 중심으로 강원도에 특화된 산림드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육성
 - (춘천) 레고 랜드 연계 스마트 토이 산업: 춘천 지역에 IoT, 빅데이터, 전통완구 산업이 접목된 스마트토이 산업 육성
 - (인제, 원주, 횡성)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인제 스피디움과 연계한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육성
 - (강릉, 원주) 3D 프린팅 활용 맞춤형 의료기기 생산: 특화된 3D 프린팅 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재활 의료기기 생산 및 집적화
 - (삼척, 강릉) 강원도형 수소산업: 신재생에너지와 산업자원(LNG기지)을 연계한 수소 생산·활용 미래에너지산업 육성
 - (철원) 소재독립, 현무암 섬유산업: 철원 현무암을 이용한 경쟁력 있는 바잘트 섬유개발 및 응용제품산업 육성
 - (양구 외) 고령토의 첨단소재화: 양구 등 도내 11개 광산에 소재한 카올린(고령토)을 의료, 화장품 등 첨단 소재화

- 강원도 거점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고도화
 - (의료기기)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 의료기기 산업을 IoT·빅데이터 헬스케어 산업으로 고도화
 - (바이오 활성소재) 항체신약 개발을 통한 바이오 항체 산업 육성: 핵심 항체기술 및 항체치료제 개발을 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화
 - (신소재) 경석 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육성: 폐광지역 내 석탄폐석(경석)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 (플라즈마 나노소재) 맞춤형 나노소재 제품개발 인프라 조성: 기업 맞춤형 나노소재 제품개발을 통한 민간연구소·기업 유치
 - (바이오식품) 청정 식품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강원도 특화 청정 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구축
- G-푸드테크 생태계 구축
 - 강원도 농수산업을 생산-가공-유통-소비자 연계까지 첨단화하는 푸드테크 산업으로 전환하는 생태계 구축
 -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팜·스마트축산 실증단지: 강원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팜·스마트축산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강원도 전체로 확산
 - 스마트 피쉬팜 실증사업: 강원도 양식업을 피쉬팜으로 전환하는 실증사업 추진 및 확산
 - 산지거점유통센터의 스마트화: 산지거점유통센터의 스마트화를 통해 소비자 수요예측 및 출하 시기 예측 지원
 - 환동해 첨단 수산물류 허브 구축: 동해안 수산물 물류기지의 첨단화 및 수출 기지화 추진
- 농림수산업 고도화를 통한 미래 신소득산업 육성
 - 기후변화 연계 고소득 과수산업: 과수 최적지 급부상에 따른 신품종 발굴 및 생산 시설·단지의 첨단화
 - 동물복지형 강원축산 선진화: 사육기반, 운송·유통체계, 도축 방법 개선을 통한 동물복지형 강원축산 육성
 - 신성장 축산업: 말산업, 동물복지산업을 신성장 축산업으로 육성
 - 곤충산업: 미래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성장산업인 곤충산업에 대한 선제적 생산 인프라 구축과 대표 푸드테크 산업으로 육성
 - 연어양식 복합산업단지 및 강원 마린하베스트: 연어 양식화 성공을 바탕으로 거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 집적화 및 강원도형 마린하베스트 기업 육성
 - 지역별 특화양식 산업화단지: 참치, 코끼리 조개, 붉은 대게, 해삼, 문어 등 동해안 특화 수산

양식 산업화단지를 조성하여 육성

-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

- 4차 산업혁명 기반 개인 맞춤형 관광플랫폼 구축: 수요요구형 관광상품 개발, 자연과 지역산업 융복합을 통한 관광시장 발굴 및 자원 활용 고도화
- 스마트관광 인프라: 관광상품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 도입, VR·AR 콘텐츠 제작 등 융합 관광산업 육성, 5G 활용 IoT Street 등을 활용하여 강원도 전역에 첨단 인프라 조성, 휴양과 헬스케어 결합된 U-Health 컨버전스 리조트 벨트 조성
- 스마트관광 체험 기회 확대: ‘미리 가보는 강원도’ 가상체험관 조성 및 이벤트 개최, 3D프린터를 활용하여 관광기념품을 만드는 ‘나만의 추억만들기 체험관’ 조성

- 자연자본주의 관광생태계 구축

- 청정 자연기반 국민여가지대: 고도화되는 도시환경에서 벗어나 자연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환경 및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웰니스 중심 산림치유관광: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예방의학 개념을 도입한 산림치유 관광 육성
- 스포츠 의료관광: 청정 자연환경에서 개인 건강상태에 맞춰 제공할 수 있는 의료관광 상품 개발

- 세계 수준의 관광·레저 인프라 조성

- DMZ·동해안 국제 관광자유지대 조성: 강원도만의 독특한 관광브랜드 공간으로서 차별화된 의미가 있는 DMZ와 동해안이 되도록 관광 트렌드 변화 대응
- DMZ 평화생태로드: 철새탐방로 및 전망대, 파서탕 생태체험 관광지, 원통역사 테마거리 조성
- 국제 수준의 해양관광지대 조성: ‘REAL DMZ’ 이미지를 강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DMZ 생태 관광벨트로 명소화, 속초·동해 크루즈 관광여건 확대, 해양레저관광 고도화를 위해 인공서핑장인 N-Land 서프파크 조성하여 대표지역 위상 확보, 해양로프웨이 건설로 동해안의 계절성 극복

- 산악환경 활용고도화 및 웰니스 관광 육성

- 힐빙(Heal-being) 산악관광지 조성: 강원도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찾는 외부인에게는 힐링, 지역주민은 웰빙할 수 있는 산악관광지 조성
- 융복합 산악관광지 조성: 매봉산 산악관광지(백두대간 연계, 스마트헬스케어·디지털 디톡스 등 테마도입), 대관령 국제 산악관광명소(목장·백두대간·올림픽개최지 연계), 두루웰숲속 문화촌(목재문화체험장·숲속문화촌 시설연계)

- 자연치유 관광벨트 구축: 철원 인제 하추 치유의 숲 조성(산림치유·예방의학적 기능 활용), 화천 만산령 치유의 숲 조성(치유센터·치유숲길·명상공간)
- 글로벌 도시관광 명소발굴 및 브랜드화
 - 글로벌 도시관광 브랜드 구축: 강원도 소규모 숙박 시설인 등 브랜드 런칭, 로컬푸드 중심 지역관광 먹거리 서비스 강화,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지역 여행업 육성, 국내외 개별여행객 대상 철도관광 서비스 혁신
 - 젊은 관광 상품 발굴·육성: 감성 어메니티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 융복합을 통한 아트 투어리즘 확대, 강원도 야간 관광 10선 육성, 청년 중심의 Young&Smart MICE 산업 육성
 - 스마트 로컬 에너지 생태계 구축
 -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단지 조성, 백두대간 산림자원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태양광 발전 인프라 조성, 도암댐 수력 발전 재개 및 지역의 자연유출수 이용한 소수력 발전, 해양 에너지 실증연구센터 건립
 - 저탄소경영: 청정화력발전 평가인증센터 및 산업단지 조성, 강원도 탄소자원화 기술R&D센터 건립, 삼척그린파워발전소의 미활용 온배수를 활용한 CO빌리지 조성, 강원도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발굴 및 기업연계

● 권역 구분에 따른 접경 지역 개발 방향

+ 권역별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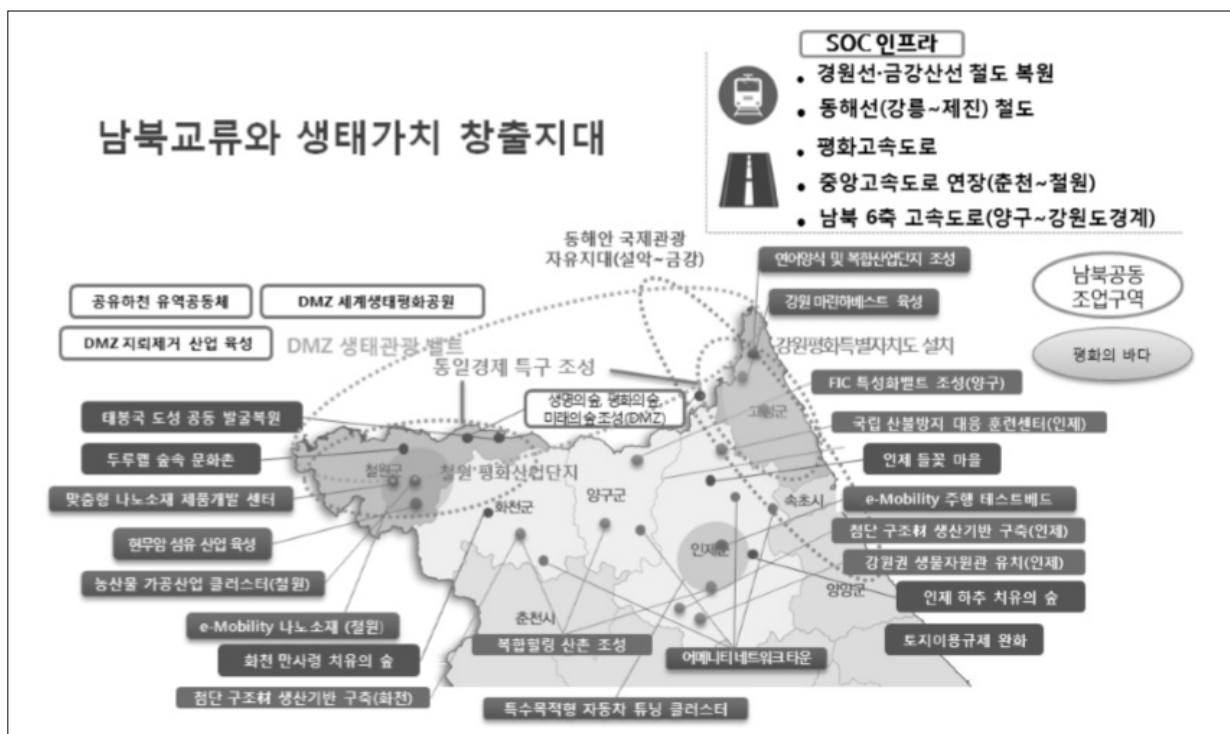
- 강원도 4개 권역 중 접경 지역인 춘천시는 영서지역권, 고성군은 DMZ·접경 지역권과 동해안 지역권,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은 DMZ·접경 지역권에 해당함
 - 영서지역권(춘천·원주·홍천·횡성·평창): 신성장 동력 창출의 허브
 - 동해안지역권(강릉·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글로벌 진·출입의 전진기지
 - DMZ·접경 지역권(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남북교류와 생태가치 창출지대
 - 강원남부지역권(태백·삼척·영월·정선): 산림, 에너지, 관광의 신성장 거점
 - 강원도는 접경 지역과 관련하여 경제, 생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DMZ와 백두대간,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려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표 II-30〉 강원도 접경 지역 발전 방향

지 역	발전 방향
춘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강원도의 모든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빅데이터 산업 기반 중점 육성 ◦ 도시형 스마트 인프라 조성 ◦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볼거리 제공하는 문화·예술산업 진흥 ◦ 도내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한 취업·창업지원체계 구축 추진
고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선(강릉~제진) 철도를 조기 완공하여 남북통합과 북방경제 시대를 대비한 육로 확보 ◦ 노르웨이기업 마린하베스트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내 연어양식단지와 관련 기업 육성 추진 ◦ 동해안과 DMZ 관광자원을 고도화하고 수산양식산업 활성화와 함께 남북 교류 협력의 중심으로 도약
양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6축 고속도로와 동서고속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교통 편의성 확보 ◦ 지역 농산품의 6차산업화와 함께 아름다운 경관 자원 고도화를 통해 소득원 다양화 및 부가가치 창출 도모
인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역 내 강점인 자동차 산업을 미래 산업과 연계하여 고도화 ◦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자연 자원의 보존·관리를 통해 다양한 동식물과 생태계 체험, 자연 휴양형 시설이 함께 갖춰진 복합힐링 공간으로 조성
철원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나노소재 산업과 현무암 섬유산업을 중점 육성 ◦ 개성공단의 역개념인 철원평화산단을 조성하여 통일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돋움 ◦ 농산품의 6차산업화와 함께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도시민들에게 휴양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
화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소재산업 기반과 치유형 산촌지대를 조성하여 산림자원의 활용도 향상 ◦ 동서고속철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축제·관광 산업 고도화

※ 자료: 강원 비전 2040, 강원연구원(2017)

〈그림 II-23〉 강원도 DMZ·접경 지역권 주요 사업구상도



※ 자료: 강원 비전 2040, 강원연구원(2017)

● 접경 지역 대상 분야별 세부사업

+ 통일·북방 분야

- 분야별 대북교류 협력 다양화
 - 동해안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통일대비 북한 관광 다양화를 위해 북한의 원산~금강산관광지대와 연계한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 강원도 스포츠 교류 협력: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정기적인 스포츠 교류 추진
 -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개성공단 역개념의 산업단지를 한반도 X축의 중심이자 교통의 요충지인 철원에 조성
 - 북한 동해안 소재자원의 공동개발 협력: 북한 동해안의 광물자원 공동이용 및 에너지 협력의 정협 추진
 - 북강원도 산림복원 교류 협력: 북강원도의 산림자원조성지원을 통한 산림복원
- DMZ 자원의 남북한 공동이용 및 관리
 - 태봉국 도성의 공동발굴·복원: DMZ에 남아있는 역사유적을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문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 고취와 교류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 정립
 - 동해 평화의 바다 조성: 해수온도 상승과 중국의 남획으로 줄어든 동해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남북한 어민의 민생을 위한 실질적 사례로 추진
- 남북 강원 교류 협력 거버넌스 구축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남북일제(南北一制)의 평화 특구를 지정·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구축하여 남북 광역경제권 형성
 - 남북접경 지역 공유하천 유역공동체 설립: 국제공유하천의 협력패러다임 개념을 적용하여 남북공유하천의 새로운 협력모델 구축
- 통일대비 남북 강원 통합기반 구축
 - 통일 관련 산·학·연 협력체 구성 및 운영: 남북 강원도의 통합과 한반도 통일 및 통일한국의 담론 주도과 아젠다 발굴
 - 북강원도 DB구축과 남북 강원도 지식공유: 남북 강원도의 동질성 회복과 공동개발 및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 평화도시·평화문화 연구: 평화지역으로서 국제평화도시 네트워크 구축과 학제간 융복합의 평화문화 연구 추진
- 접경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
 - 통일경제특구 조성 및 운영: 낙후한 접경 지역 내 경제·산업 기반의 구축을 위해 철원평화산

단과 고성북방교류산단을 통일경제특구로 조성하여 운영

- 토지이용규제 완화: 통일대비 접경 지역의 미래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

+ 관광·레저 분야

- DMZ 평화생태로드
 - 철새 탐방로 및 전망대: 다양한 철새와 두루미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생태자원 학습 및 교육공간으로 특화
 - 파서탕 생태체험 관광지: 증가하는 레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련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 주민소득 증대로 낙후된 지역발전 견인
 - 원통 역사 테마거리 조성: 야생화를 활용한 생태탐방 명소화를 추진하여 우리꽃묘 생산·판매지, 가구별 오픈정원 조성을 통한 지역밀착형 6차산업 추진
- 힐빙(Heal-being) 산악관광지 조성
 - 철원 두루웰 숲속문화촌: 목재문화체험장, 숲속문화촌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테마형 산림 휴양·체험단지 조성
 - 인제 하추 치유의 숲 조성: 산림의 치유·예방의학적 기능을 활용한 대국민 산림치유지대 조성
 - 화천 만산령 치유의 숲 조성: 치유센터, 치유숲길, 명상공간 등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공간 조성

+ 산림 분야

- 산림자원 활용 고도화
 - (인제) 산림 웰니스 문화의 산림복지 거점 조성: 낮은 비용으로 지속적인 웰니스 향노화 생활·소비가 가능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제, 홍천, 동해 등지에 기반시설을 갖추어 개인의 취향 수용 및 고령화사회 웰니스 문화 활동공간으로 활용
 - (양구) FIC 거점지구 조성: 양구 편치불, 백두대간 지역, 동해안 일원, 대관령 등지에 식물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웰니스 향노화 생활과 소비의 미래거점으로 육성
 - (화천, 인제) 첨단구조재 생산여건 구축: 산림 내 방치되고 있는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가공을 통해 숲의 갱신,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목재산업 육성

라. 지자체 접경 지역 관련 중점추진사업 종합

● 지자체 접경 지역 관련 중점추진사업

+ 인천시 권역별·지역별 중점추진사업

- 인천시 접경 지역과 관련된 전략·기반산업은 관광 및 음식료품 가공산업이며, 도서 지역 특성상 수산업과 해양생태관광이 권역 단위 중점추진사업으로 수립되어 있음
 - 인천시는 물류, 첨단기술, 지식기반, 관광 산업을 광역지자체 단위의 전략산업으로, 이의 기반이 되는 기계·장비, 금속, 제조·가공, IT·SW, 음식료품 산업을 기반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이 중에서 접경 지역인 강화군, 옹진군과 관련된 전략·기반산업은 관광 및 음식료품 가공산업임
 - 접경 지역 두 시·군 모두 도서 지역으로 수산업과 해양생태관광이 권역 단위 중점추진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음. 수산업에는 종묘 육성, 지역수산물 특화, 관광·어항·풍력·마리나가 결합된 복합어항 개발, 인공서식장 조성, 어촌체험마을 운영 등의 실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해양생태관광에는 섬을 활용한 생태·문화체험, 탐방로, 항구거리 관련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인천시 접경 지역의 지역 단위 중점추진사업에는 역사·문화·자연·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6차산업 및 평화·안보·남북경협 연계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인천시 접경 지역의 지역 단위 중점추진사업에는 역사·문화자원과 자연·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농어촌 지역 특성상 첨단농업, 식품가공 등 6차산업화 계획과 접경 지역 특성상 평화·안보·남북경협 관련 사업이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됨
 - 강화군의 중점추진사업에는 고인돌·화문석·강화산성, 송마·온천·해변 등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첨단농업, 식품가공, 농촌테마 마을 등 농축산업 선진화 사업과 남북경협을 위한 강화·교동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옹진군은 섬을 활용한 휴양·레저 관광과 접경 지역 특성을 살린 평화·안보관광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수립함. 섬을 연계한 농촌체험, 축제개최, 가공농산물 판매 등 농어촌 수익증대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

+ 경기도 권역별·지역별 중점추진사업

- 경기도 전략산업 중 지식기반산업은 고양-파주-김포 권역, 섬유·가구·디자인·신소재 산업은 포천-양주 권역과 관련이 있으며, 동두천시와 연천군에는 산업·관광 관련 인프라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경기도 북부의 전략산업에는 섬유, 가구, 디자인, 신소재, 복합유통, 지식기반 산업이 포함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산업·물류·R&D 단지, 인증·지원·교육 센터 등 각종 기반·산업시설 조성을 광역 단위 중점추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음
- 이 중에서 문화 콘텐츠, 방송·영상·정보기기 등 지식기반 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은 고양·파주 권역과 관련있음. 김포시는 파주시와 연계한 지식기반 산업과 항공·IT첨단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섬유·의류, 가구, 디자인, 신소재는 포천·양주 권역의 중점추진사업에 해당함. 동두천시에는 미군반환공여지 복합개발과 더불어 산업·복합단지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이, 연천군에는 관광 인프라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경기도 접경 지역 시·군 내에서 도심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첨단IT·섬유·가구·신소재·디자인 관련 전략산업이 추진되고, DMZ인근·자연보전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역사문화·안보 관광 산업이 추진되고 있음
 - 경기도 접경 지역은 시·군 내에서도 도시화 및 산업단지 입지가 이루어진 지역과 자연이 보전된 지역이 혼재되어 있음. 이에 따라 도심지 및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첨단IT·섬유·가구·신소재·디자인과 관련된 전략산업이 추진되고, DMZ 인근 및 자연이 보전된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역사문화·안보 관광 산업이 추진되고 있음
 - 고양시의 지역 단위 중점추진사업에는 방송·영상, 문화 콘텐츠, 물류·유통, 한류·역사문화 관광이 포함되어 있음. 파주시는 서울에서 가까운 남부는 행정·업무, 중심부는 대학·산업·주거, DMZ에 가까운 북부는 자연·역사·안보관광 위주로 개발하고자 함. 김포시는 항공·첨단IT·영상산업과 물류·유통단지 조성을 주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농복합도시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생태·휴양 및 역사문화·안보 관광을 중점추진사업에 포함하고 있음
 - 포천시는 디자인 융합산업과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중점추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한탄강과 온천을 활용한 자연·휴양관광 및 접경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화·안보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양주시는 섬유센터 조성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역세권개발·복지거점화·정주 환경 등 생활권 조성사업과 역사문화 관광 사업을 중점추진사업에 포함하고 있음
 - 동두천시는 미군반환공여지를 쇼핑문화거리, 유통·상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중점추진사업에 포함하고 있으며, 접근성 개선을 위한 철도연결 계획도 수립하고 있음. 연천군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철도연결 및 역세권 개발이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생태·문화관광, 산림복지휴양벨트 조성,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 광역지자체 차원의 개발사업 유치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강원도 권역별·지역별 중점추진사업

- 강원도 접경 지역과 관련된 전략산업은 스마트관광 및 푸드테크산업이며, 남북교류 협력과 관광·레저사업이 권역 단위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이모빌리티, 스마트관광, 푸드테크 산업을 광역지자체 단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지역 보유자원 및 특성에 적합한 거점산업군을 선정하여 지역별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중에서 강원도 접경 지역과 연관성 있는 산업은 스마트관광 및 푸드테크 산업임
 - 강원도 접경 지역 권역 단위 중점추진사업에는 남북교류 협력 및 관광·레저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는 광물·에너지자원협력, 동해어족·산림보호협력, 유적발굴·역사문화연구, DMZ·동해안관광지대 및 통일경제특구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관광·레저 사업에는 DMZ평화생태로드, 산림휴양·치유공간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강원도 접경 지역의 지역 단위 중점추진사업에는 산림을 활용한 휴양·관광 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지역 광물·목재·농산물 가공산업과 남북경협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강원도 접경 지역의 지역 단위 중점추진사업에는 산림을 활용한 휴양·관광 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농·산촌 지역 특성상 광물·목재·농산물 가공산업과 접경 지역 특성상 남북경협 관련 사업이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됨
 - 춘천시는 강원도의 거점도시로 도시형 스마트인프라, 빅데이터, 스마트토이 등 첨단산업과 문화·예술산업, 거점대학 기반 취창업 인프라 조성이 지역 단위 중점추진사업으로 수립되어 있음. 인제군의 중점추진사업에는 자동차, 친환경에너지 산업과 자연·생태체험, 복합힐링공간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철원군은 나노소재산업, 현무암섬유산업, 철원평화산업단지, 지역농산물 6차산업, 휴양지 조성사업을 중점추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음. 양구군은 고령토첨단소재산업, 지역농산물 6차산업, 산림관광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함
 - 화천군의 중점추진사업에는 첨단목재산업, 산림휴양·관광 산업이 포함되어 있음. 고성군은 남북교류 협력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목표 하에 북방경제육로화, 동해안·DMZ관광, 연어양식단지 조성을 중점추진사업으로 계획함

● 지자체 접경 지역 관련 이슈 산업 정리

+ 접경 지역 관련 이슈 산업 순위

- 접경 지역 관련 사업 계획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휴양·레저·관광 산업, 기반시설조성사업, 농림어업·식품가공산업 순이며, 제조·소재·에너지산업과 지식기

반·첨단산업은 경기도 및 강원도 일부 지역에만 해당함

- 지자체에서 수립한 접경 지역 관련 계획을 검토한 결과 휴양·레저·관광 산업과 관련된 사업 계획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주제별로는 역사·문화·DMZ·평화관광, 휴양·레저·마리나관광, 자연·생태·농어촌체험관광 순으로 나타남
-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업은 기반시설 구축·개발 관련 사업임. 산업·복합단지 개발, 물류·유통시설 구축,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취창업·복지지원체계 마련,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지역산업 활성화 및 정주 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 내용이 다수를 차지함
-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산업은 농림어업·식품가공 산업임. 접경 지역 대부분이 농산촌에 해당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농산물 6차산업화와 관련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강화군, 옹진군, 고성군 등 도서·해안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종묘, 양식장, 수산물류허브화 등 수산업 관련 사업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함
- 제조·소재·에너지 산업은 경기도 및 강원도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산업이다 보니 다른 산업에 비해 사업계획 비중이 낮게 나타남.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계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파주시를 거점으로 하는 부품·소재, 자동차 관련 사업계획과 포천시와 양주시를 거점으로 하는 섬유·가구·디자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접경 지역과 관련된 사업계획에는 지식기반·첨단 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음. 신도시 개발 지역이며 대단위 산업단지가 입지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 경기도 일부 지역과 지방 거점 도시인 강원도 춘천시에만 관련 사업계획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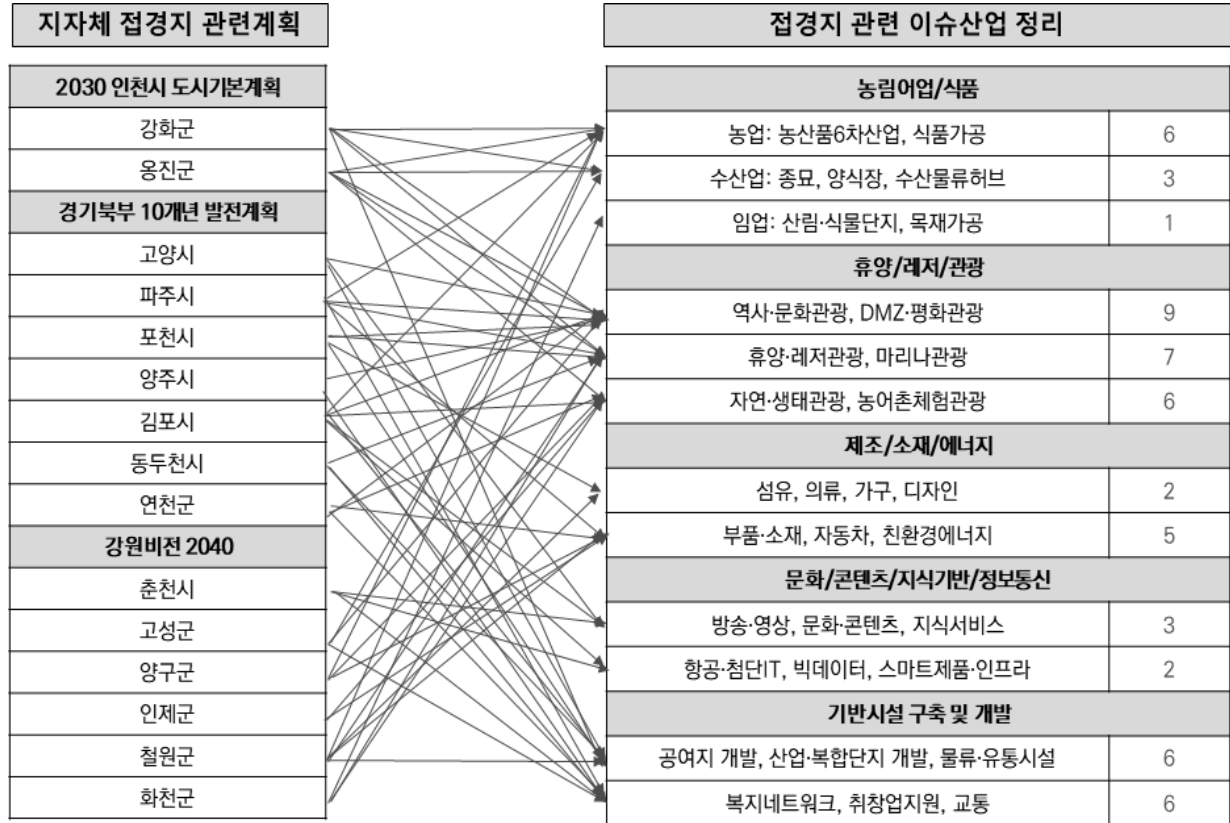
〈표 II-31〉 지자체 접경지 관련 중점추진사업

구 분	광역지자체 전략산업	
	권역 단위 중점추진사업	지역 단위 중점추진사업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산업: 물류, 첨단자동차, 항공(부품), 뷰티, 바이오, 로봇, 녹색금융, 관광(MICE/의료/마리나) ◦ 기반산업: 기계/장비, 1차금속, 금속가공,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 IT/SW, 음식료품 	
강화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 수산종묘육성, 인공서식장, 지역수산물특화, 복합어항(관광/어항/풍력/마리나),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어촌체험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관광: 고인돌/화문석/신흥민/강화산성/귀농인 ◦ 휴양·레저관광: 승마/온천/해변 ◦ 농축산업: 농촌테마 마을, 첨단농업, 식품가공, 약썩특구, 청정축산업 ◦ 남북경협: 강화일반산업단지, 교동평화산업단지
옹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태관광: 섬문화/생태체험, 항구거리, 생태탐방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휴양·레저관광: 해변관광/휴양단지/청정에너지마을 ◦ 역사·문화관광: 평화의섬/안보체험/성지순례 ◦ 농축산업: 섬연계 농촌관광/체험/축제/가공농산물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산업(북부): 섬유, 가구, 디자인, 신소재, 복합유통, 문화 콘텐츠 ◦ 기반산업: 테크노밸리, 친환경산업단지, 물류단지, 벤처창업센터, 친환경인증센터(가구/의료/장난감), 디자이너스쿨, 신재생에너지/물/환경엔지니어링, DMZ농촌체험관광, 농업R&D단지, 축산지원센터 	

구 분	광역지자체 전략산업	
	권역 단위 중점추진사업	지역 단위 중점추진사업
고양시		◦ 방송/영상, 문화 콘텐츠, 한류관광거점, 물류·유통, 역사 문화 트레킹
파주시	◦ 지식기반산업, 문화 콘텐츠, 방송영상정보기기, 부품/소재	◦ 통일산업경제거점: 행정/업무(남부), 자연/역사/안보관광(북부), 대학/산업/주거복합(중심부) ◦ 역세권개발, 농업관련 산업유치, 건강휴양단지, 역사문화 트레킹, 접경 지역 면세점, 관광특구
포천시		◦ 디자인 융합산업, 친환경 산업단지, 한탄강 문화관광, 스파테라피지구, 안보관광
양주시	◦ 섬유, 의류, 가구, 친환경 신소재, 디자인	◦ 섬유센터, 역세권/정주생활권, 종합복지 네트워크 거점, 역사문화 트레킹, 수변 문화관광
김포시	◦ 지식기반산업, 항공/IT첨단산업	◦ 항공/첨단IT/영상산업, 생태/휴양/역사문화/안보관광, 물류/유통단지, 농촌체험/관광/가공
동두천시	◦ 미군반환공여지 복합개발, 국가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복합단지	◦ 명장(가족)공방, 쇼핑문화거리, 유통/상업단지, 철도연결
연천군	◦ 통일생태교육, 생태문화관광, 역사문화/안보관광	◦ 철도연결, 역세권개발, 한탄강 문화관광, 산림복지휴양벨트, 친환경 에너지타운
강원도	◦ 전략산업: 디지털헬스케어, 이모빌리티, 스마트관광(IT신기술연계/산림치유관광/DMZ생태관광/해양레저/문화예술관광), 푸드테크(스마트팜/산지거점유통센터/환동해수산물류허브/동물복지축산/곤충산업/연어양식단지) ◦ 지역/거점산업: 농수산(커피/황태), 산림(한지/힐링우드), 광물(춘천연옥/스톤아트), 신소재/비철, ICT차세대콘텐츠, 해양심층수, 폐광지역육성, 자동차튜닝, 수소산업(신재생에너지/LNG기지), 의료기기, 바이오 활성 소재, 세라믹원료산업, 플라스마나노소재, 바이오식품	
춘천시	◦ 남북교류 협력: DMZ/동해안 국제관광자유지대, 북한광물자원/에너지협력, 북강원도 산림복원, DMZ역사유적발굴, 동해어족보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평화도시/문화연구, 통일경제특구 ◦ 관광/레저: DMZ평화생태로드(철새/계곡/야생화/정원), 산림휴양/치유/체험공간, 고령화사회 웰니스문화공간, 식물산업단지, 목재가공산업	◦ 빅데이터, 도시형 스마트인프라, 문화/예술산업, 거점대학 취창업지원체계, 레고랜드 연계 스마트토이산업
고성군		◦ 북방경제육로, 연어양식단지, 동해안/DMZ관광, 남북교류 협력 중심지
양구군		◦ 지역농산물 6차산업, 산림관광, 고령도첨단소재산업
인제군		◦ 자동차산업, 친환경에너지산업, 생태체험, 자연휴양시설, 복합힐링공간
철원군		◦ 나노소재산업, 현무암섬유산업, 철원평화산업단지, 농산물 6차산업, 도시민 휴양지
화천군		◦ 첨단목재산업, 치유형 산촌지대, 지역축제/관광 산업

※ 자료: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인천광역시(2015),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계획, 경기연구원(2015), 2020년 김포도시기본계획 변경, 김포시(2015), 강원 비전 2040, 강원연구원(2017)

〈그림 II-24〉 지자체 접경 지역 관련 이슈산업 정리



※ 자료: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인천광역시(2015),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계획, 경기연구원(2015), 2020년 김포도시기본계획 변경, 김포시(2015), 강원 비전 2040, 강원연구원(2017)

4

접경 지역 균특회계

4.1 연도별 균특회계 규모

〈표 II-32〉 연도별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10,338,940	9,973,926	9,462,271	9,889,905	10,748,531
지원계정	5,368,589	4,918,356	4,728,768	4,203,522	4,760,211
자율계정	소계	4,498,064	4,590,081	4,304,873	5,548,288
	시도	2,808,074	2,862,799	2,914,059	3,720,106
	시군구	1,689,990	1,727,282	1,390,814	1,828,182
세종계정	102,218	103,694	102,649	100,428	103,496
제주계정	370,069	361,795	325,981	321,852	336,536

※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표 II-34〉 접경 지역 균특회계 규모

(단위: 백만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계정	자율계정	계	지원계정	자율계정	계	지원계정	자율계정	계
총계		62,290	340,190	402,479	62,900	298,807	361,708	103,896	269,796	373,692
인천	웅진	925	20,295	21,220	31	24,326	24,357	888	20,066	20,953
	강화	2,315	63,649	65,963	5,018	16,492	21,510	7,928	12,413	20,341
	소계	3,240	83,944	87,183	5,049	40,818	45,867	8,816	32,478	41,294
경기	고양	5,487	20,639	26,126	10,910	7,841	18,752	20,627	6,751	27,378
	파주	5,945	18,932	24,877	5,974	13,573	19,547	5,960	10,959	16,919
	김포	1,260	13,142	14,403	1,858	16,529	18,387	8,693	8,444	17,137
	양주	2,218	22,248	24,466	1,577	14,754	16,331	3,393	7,618	11,011
	포천	6,640	12,618	19,258	855	17,595	18,450	6,396	10,687	17,083
	동두천	1,455	6,467	7,922	1,455	5,984	7,439	649	11,995	12,643
	연천	5,942	14,614	20,556	3,415	26,327	29,742	7,010	22,238	29,247
	소계	28,947	108,661	137,608	26,044	102,603	128,648	52,728	78,692	131,420
강원	철원	12,217	22,848	35,065	10,061	23,894	33,955	14,267	28,093	42,360
	화천	1,710	21,487	23,197	3,809	21,100	24,909	8,424	23,013	31,437
	춘천	1,748	21,936	23,684	981	33,068	34,049	9,134	23,042	32,175
	양구	4,051	20,904	24,956	4,798	25,150	29,948	2,352	29,090	31,442
	인제	5,909	30,734	36,643	5,034	28,011	33,045	5,777	30,768	36,545
	고성	4,468	29,676	34,144	7,124	24,164	31,288	2,398	24,621	27,019
	소계	30,103	147,585	177,688	31,807	155,387	187,194	42,352	158,627	200,979

※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2 접경 지역 군특회계 분석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접경 지역 군특회계 규모는 3조 6,000억~4조 원을 유지
 - 이 가운데 자율 계정은 2조 6,000억~3조 4,000억 원 규모였으며, 지원 계정은 6,000억~1조 원 규모
 - 접경 지역에 포함된 광역시를 기준으로 보면, 인천광역시는 2017년에 870억 원 규모에서 2018년부터 400억 원대로 감소
 - 경기도는 지난 3년 간 매년 1,200억~1,300억 원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강원도 지역은 2017년 1,700억 원에서 2019년에는 2,000억 원 정도로 증가
- 경기도 지역에서는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연천, 동두천 7개 지자체가 해당되며 이 가운데 파주, 김포, 양주, 포천, 연천지역은 2018년에 비해 2019년 예산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동두천, 고양지역은 증가하였음
 - 이 기간 동안 특히 고양지역의 예산 증가가 두드러진데 2018년 187억 원에서 2019년 273억 원으로 86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 접경 지역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임
 - 경기도에서는 동두천 지역의 예산 규모가 가장 작아 대부분 80억 원에 못 미쳤으며, 2019년에만 126억 원 정도로 증가하였음
- 강원도는 2017년 341억 원에서 2019년 270억 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고성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 자치단체들은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철원지역은 2018년까지 큰 변동이 없다가 2019년에 지원 계정이 339억 원에서 423억 원으로 84억 원 가량 증가하면서 전체 접경 지역 중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임
 - 화천과 양구지역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음
- 인천광역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해당되는데 이 지역들은 2017년 871억 원에서 2019년에는 412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 옹진군은 해당 기간 꾸준히 200억 원대의 예산 규모를 기록한 반면, 강화군은 2017년에 659억 원으로 전체 접경 지역 중 가장 큰 예산 규모를 보이다가 2018년에 215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또 다시 203억 원으로 축소되는 기록을 보였음

5.1 접경 지역 기본 현황 분석 결과 요약

가. 접경 지역 일반 현황

+ 자연·지리 현황

- 접경 지역 토지에서는 임야, 농경지, 기타 토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산간 지역인 강원도 시·군 접경 지역은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임
 - 임야 비중 상위 지역에는 인제군과 화천군, 농경지 비중 상위지역에는 강화군과 김포시, 공장용지 비중 상위 지역에는 김포시와 양주시가 포함됨
- 접경 지역 전체의 86% 가량이 보전에 적합한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접경 지역 일대에 환경·생태적 보전지역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
 - 접경 지역 일대에는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 보호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천연기념물 지정 지역 등 환경·생태적 보전 지역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
 - 접경 지역의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1등급지가 68.5%, 2등급지가 17.2%로 총85.7%의 토지가 보전에 적합한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접경 지역은 광역도로망이 부족하고 신교통수단의 확충이 미약하며 도로가 단절되어 있어 접근성 및 지역 간 연계성이 떨어짐
 - 접경 지역은 고속도로 및 국도 기반이 열악하여 도로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철도 구간이 단절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복원이 요구됨
 - 접경 지역은 광역 도로망이 부족하고 신교통수단의 확충이 미약하며 지형적 제약, 군부대, 민통선의 영향으로 도로가 단절되어 있어 접근성 및 지역 간 연계성이 떨어짐

+ 인구 현황

- 시·도 접경 지역 중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인구규모와 구조 측면에서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비수도권인 강원도는 하위권을 차지함
 - 시·도 접경 지역 측면에서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인구 규모 및 성장률, 생산 가능 인구 규모 및 비율, 낮은 고령 인구 비율 측면에서 전국 상위권을 차지함. 그러나 비수도권인 강원도는 해당 부문에서 모두 하위권을 차지함

- 시·군 접경 지역 중 신도시 개발지역 및 지방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편중되어 접경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 양극화가 발생함. 인구 성장률 측면에서도 수도권 신도시 개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접경 지역에서 인구 정체 또는 감소 추세가 나타남
 - 시·군 접경 지역 인구 규모 상위 지역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춘천시, 양주시, 포천시 순으로 대부분 경기도에 해당함. 하위 지역은 인천시와 강원도의 도서 산간 지역으로 인구수 3만명에도 미치지 못함
 - 인구 규모 상위 3곳에 접경 지역 전체 인구의 65%, 상위 6곳에 87%가 밀집되어 있음. 신도시 개발 지역 및 지방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편중되어 접경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 양극화가 발생함
 - 인구 성장률 상위 지역인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4개 지역을 제외하면 접경 지역 평균 0.11%로 정체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임. 인구 성장률 측면에서도 수도권 신도시 개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접경 지역에서 인구 정체 또는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고양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 접경 지역의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지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군 접경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함.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도서 산간 지역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화됨
 - 고양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 접경 지역의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음. 생산가능 인구 규모 상위지역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춘천시, 양주시, 포천시 순으로 상위 2곳에 접경 지역 전체 생산가능 인구의 52%, 상위 6곳에 87%가 편중되어 있음
 -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군 접경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함. 고령화지역 3곳, 고령지역 6곳, 초고령 지역 6곳으로 분류되었으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도서 산간 지역에 해당할 경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 GRDP 현황

- 시·도 접경 지역 GRDP 규모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상위, 인천시는 중위권, 강원도는 하위권을 차지함. GRDP 규모 측면에서 경기도 시·군 접경 지역은 중상위권, 강원도 시·군 접경 지역은 중하위권, 인천시 시·군 접경 지역은 하위권으로 분류됨
 - 시·도 접경 지역 GRDP 규모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상위, 인천시는 중위권, 강원도는 하위권을 차지함. GRDP 실질성장률 측면에서 경기도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강원도는 전국 평균과 유사하며 인천시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 15개 시·군 접경 지역 GRDP가 3개 시·도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임. 인천시는

2%로 미미하고 경기도는 15%, 강원도는 30%에 달함. GRDP 규모 측면에서 경기도 시·군 접경 지역은 중상위권, 강원도 시·군 접경 지역은 중하위권, 인천시 시·군 접경 지역은 하위권으로 분류됨

- 경기도 신도시 개발지역의 경제 활동 규모가 전체 접경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으며, 접경 지역 GRDP 규모 상하위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임
 - 시·군 접경 지역 GRDP 규모 상위지역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춘천시, 양주시, 포천시 순임. 상위 3곳이 접경 지역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 상위 6곳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경제규모의 양극화가 발생함
 - 경기도 신도시 개발지역의 경제 활동 규모가 전체 접경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으며, 접경 지역 GRDP 규모 상하위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임. 서울시 인접 지역 및 지방 거점 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접경 지역은 경제 활동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며, 도서 산간 지역의 경제 활동 기여도는 미미함
- 신도시로 개발된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접경 지역에 자생적인 지역 경제 성장요인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역 경제 성장세의 정체 및 하락 위험에 처해있음
 - GRDP 실질성장률 측면에서도 신도시 개발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는 5~7%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연천군, 용진군, 강화군은 성장률이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2~3%대를 유지하고 있는 철원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은 국방개혁으로 군부대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감소할 경우 지역 경제 성장률이 하락세로 돌아설 위험이 존재함
 - 신도시로 개발된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접경 지역에 자생적인 지역 경제 성장요인이 부족한 상황임. 지역 경제 성장세의 정체 및 하락 위험에서 벗어나고 접경 지역 간 성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 간 연계, 거점지역화, 산업특화 등 집중개발방안이 요구됨

+ 재정자립도 현황

- 시·도 접경 지역 재정자립도에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강원도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함
 - 시·도 접경 지역 재정자립도의 경우 경기도와 인천시는 60%이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강원도는 30%를 넘지 못해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함
- 시·군 접경 지역 전지역에서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대다수 접경 지역에서 인구, 사업체, 대규모 산업단지의 부족으로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낙후도를 심화시키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 시·군 접경 지역 전지역에서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도시화가 진행된 소수지역을 제외한 접경 지역 전 지역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음. 재정자립도 상위 3곳은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로 46% 수준이며, 연천군은 21%로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임. 인천시 시·군 접경 지역은 모두 20%미만, 강원도 시·군 접경 지역은 춘천시 27%를 제외한 전지역이 20%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냄. 접경 지역 전체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낸 곳은 철원군으로 12%에 불과함

- 대다수 접경 지역에서 인구, 사업체, 대규모 산업단지의 부족으로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악화는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예산 부족, 지역 특화 산업 투자제약으로 이어져 지역낙후도를 심화시키는 악순환 초래할 위험이 있음. 인구와 사업체 유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기반 산업발굴 및 개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지역발전도 현황

- 기초지자체의 발전정도를 진단하는 지역발전지수 종합진단 결과 상위권에 포함된 접경 지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소수지역을 제외한 접경 지역 전반에 지역발전 정체 또는 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기초지자체의 발전정도를 진단하는 지역발전지수에서 생활 서비스부문 상위 50개 시·군에 포함된 접경 지역은 고양시, 동두천시, 춘천시, 양주시, 김포시, 파주시임. 원활한 생활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인구 규모와 밀도가 높은 지역이 유리하다 보니 경기도 시·군이 가장 많이 포함됨. 면적은 넓으나 인구는 적은 군지역의 경우 생활 서비스 공급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남. 10년전에는 생활 서비스부문 상위권에 경기도 및 강원도 접경 지역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10년후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대다수 접경 지역이 제외됨
- 지역 경제력부문 상위지역은 주로 서울과 부산 두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음. 접경 지역 중 상위 50개 시·군에 포함된 지역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로 모두 경기도에 해당함.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접경 지역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접경 지역 전 지역이 지역 경제력부문 상위권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10년간 그대로 유지됨
- 삶의 여유공간부문에서는 산간지역, 다도해지역, 수도권 중에서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들이 상위권에 분포하여 다른 3개 부문의 상위지역과 다른 양상을 보임. 접경 지역 중에서 상위 50개 시·군에 포함된 지역은 인제군,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순으로 모두 강원도에 해당함. 10년간 생활 서비스부문 및 지역 경제력부문의 동반 상승없이 삶의 여유공간부문의 순위만 빠르게 상승한 접경 지역이 다수 등장함. 이는 도시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소외된 접경 지역의 현실을 보여줌.
- 주민활력부문 상위지역은 대도시 인접 지역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임. 접경 지역 중에서 상위

50개 시·군에 포함된 지역은 서울에 인접한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와 군부대의 영향이 큰 인제군, 양구군임. 신도시로 개발된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접경 지역이 10년간 주민활력부문 상위권에 진입하지 못한 채 정체 상태를 나타냄

- 지역발전지수 종합순위에서는 서울인접 지역 및 지방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상위권 시·군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임. 접경 지역 중에서 종합순위 상위 50개 시·군에 포함된 지역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춘천시임. 10년간 종합지수 진단결과 상위권에 포함된 접경 지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경기도 소수지역을 제외한 접경 지역 전반에 지역발전 정체 또는 쇠퇴 현상이 나타남
-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발전수준을 종합진단하는 균형 발전지표 진단 결과 신도시로 개발된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접경 지역이 중위권에 머물러 수도권 중심의 극점사회와 지방 쇠퇴 경향을 보여줌
 -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발전수준을 종합진단하는 균형 발전지표 진단 결과 시·도 접경 지역 중 수도권인 경기도, 인천시는 균형 발전 상위 25%에, 비수도권인 강원도는 하위 25%에 포함되어 발전 격차가 나타남
 - 시·군 접경 지역 중 경기도 신도시 개발지역인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파주시 4곳을 제외한 모든 접경 지역이 중위권에 포함됨. 춘천시 같은 지방 거점 도시·도 수도권 개발도시에 비해 발전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을 보여줌. 이는 수도권 중심의 극점사회와 지방 쇠퇴 경향이 반영된 결과임
- 지역공동체의 세대 불균형과 미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방소멸 위험지수 진단 결과 시·군 접경 지역 대다수가 소멸 위험 지수 ‘주의 및 위험진입’ 단계에 해당하여 접경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기능 저하가 우려됨
 - 지역 공동체의 세대 불균형과 미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방 소멸 위험 지수 진단 결과 시·도 접경 지역 중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고, 강원도는 ‘주의’ 단계로 ‘위험진입’ 단계 직전에 놓여있음
 - 시·군 접경 지역에서는 인구 규모가 큰 고양시와 인구증가율이 높은 김포시만 ‘보통’ 단계에 해당함. ‘주의’ 단계가 7곳, ‘위험진입’ 단계가 6곳으로 14년 전에 비해 지방 소멸 우려 지역이 대폭 증가함. 도서 산간 지역이며 DMZ에 인접한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고성군은 ‘위험진입’ 단계에 해당함
 - 지방 소멸 현상은 교육소멸, 1인 가구와 빈집의 증가, 지방 재정의 악화, 일자리 감소를 불러오고, 이로 인해 인구 유출이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야기함 15개 시·군 접경 지역 대다수가 소멸 위험 지수 ‘주의 및 위험진입’ 단계에 해당하여 접경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기능 저하가 우려됨

나. 접경 지역 산업 현황

+ 사업체 현황

- 시·도 접경 지역 사업체 수에서 경기도는 전국 1위, 인천시는 5위, 강원도는 12위를 차지함.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는 영세업체의 비중이 낮고 대규모 업체의 증가율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인 강원도는 영세업체의 비중이 높고 대규모 업체의 증가가 저조함
- 시·도 접경 지역 사업체 수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1위, 인천시는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5위, 강원도는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성장률을 보이며 12위를 차지함
- 접경 지역 전체 사업체 수는 전국 대비 5.7%를 차지함. 시·도 접경 지역별로 인천시에서는 2.4%, 경기도에서는 19.6%, 강원도에서는 25.7%를 차지하고 있음
- 규모별 사업체 현황에서 수도권인 인천시와 경기도는 영세업체의 비중이 낮고 대규모 업체의 증가율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인 강원도는 영세업체의 비중이 높고 대규모 업체의 증가가 저조한 상황임
- 시·군 접경 지역 사업체 수 상위 3곳은 모두 경기도이며 성장률도 높아 사업체 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임. 서울에 인접하며 산업단지를 보유한 지역에서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 산간 지역에서는 영세 사업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접경 지역 전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체 증가 추세가 정체되어 있음
- 시·군 접경 지역 사업체 수 상위 3곳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순으로 모두 경기도에 속하며, 사업체 수 성장률도 전국 평균 대비 현저하게 높아 해당지역 편중 현상이 2009년 59%에서 2017년 63%로 심화되는 추세임
- 용진군, 양구군, 화천군 등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 산간 지역에서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수도권에 위치하며 산업단지를 보유한 지역에서는 영세 사업체의 비중이 낮게 나타남
- 파주시, 포천시, 김포시 등 신도시 개발 및 산업단지 유치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10인 이상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 대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대규모 사업체 증가 추세 면에서는 파주시를 제외한 접경 지역 전 지역에서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09~2017년간 대규모 사업체의 진입이 전무한 강화군, 연천군,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화천군의 경우 대부분 도서 산간 지역으로 집중 개발 대상 지역이 아니므로 향후에도 대기업의 진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신도시 개발 및 산업단지 유치 효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혜택을 받은 지역과 받지 못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종사자 현황

- 시·도 접경 지역 종사자 수에서 경기도는 최상위권, 인천시는 중상위권, 강원도는 최하위권을 차지함. 경기도와 인천시는 상용 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강원도는 임시·일용근로자와 무급가족·기타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시·도 접경 지역 종사자 수에서 경기도는 전국 2위로 최상위권, 인천시는 6위로 중상위권, 강원도는 15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함. 서울과 부산 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권에 종사자가 밀집되어 있으며,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에는 비슷한 등위의 시·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가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냄
 - 시·군 접경 지역 종사자 수는 전국 대비 4.8%를 차지함. 시·도 접경 지역별로 인천시에서는 1.8%, 경기도에서는 17.4%, 강원도에서는 24.6%를 차지하고 있음
 -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현황에서 인천시와 경기도는 전국 평균 대비 상용 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강원도는 임시·일용근로자와 무급가족·기타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시·군 접경 지역 종사자 수 상위 3곳도 모두 경기도이며 종사자 편중 현상도 심화되는 추세임. 수도권 신도시 및 산업단지 입지 지역에 해당하는 경기도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접경 지역에는 임시·일용·무급·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높아 일자리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임
 - 시·군 접경 지역 중에서 종사자 수 상위 3곳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로 모두 경기도에 해당하며, 사업체 수 상위 3개 시·군과 동일하게 나타남. 해당 지역 편중 현상도 2009년 61%에서 2017년 65%로 심화되는 추세임
 - 상용 근로자 구성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 접경 지역은 11곳이며, 하위권 5개 지역은 모두 강원도에 해당함
 - 수도권 신도시와 산업단지 입지 지역에 해당하는 경기도 일부 접경 지역에는 규모 있는 사업체들이 다수 위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도서 산간 및 군지역이라는 입지적 취약성으로 인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체들이 다수 위치한 대다수 접경 지역의 경우 임시직, 일용직, 무급직,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비중이 높아 일자리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임

+ 연구개발 현황

- 지역이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성과를 산출하는 능력을 진단하는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평가 결과 경기도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인천시와 강원도는 미래 성장세가 침체될 지역으로 전망됨
 - 지역이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산출하는 능력을 진단하는 과학기술혁

신역량지수 평가 결과 시·도 접경 지역 중 경기도는 전국 최상위, 인천시는 중하위권, 강원도는 하위권을 차지함

- 경기도는 연구개발 투자, 사업화활동, 인적·지적자원과 관련된 ‘활동’ 및 ‘자원’ 부문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인천시와 강원도는 해당 부문 기여도가 낮게 나타남
- 경기도는 현재 지역 소득수준은 낮으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인천시와 강원도는 현재 지역 소득수준도 낮고 과학기술혁신역량도 낮아 미래 성장세가 침체될 지역으로 전망됨
- 연구개발조직 수에서 인천시는 경기도의 1/6, 강원도는 경기도의 1/30 수준으로 연구개발 역량 및 기반 약화로 지역산업 고도화에 실패할 경우 지역 경제 침체가 고착화될 우려 있음
 - 연구개발조직 수에서 전국 연구개발조직의 35%가 밀집해 있는 경기도가 1위 차지, 5%가 위치해 있는 인천시는 3위 차지, 1%에 불과한 강원도는 최하위권을 차지함. 경기도와 인천시는 기업체 연구개발조직의 비중이 높은 반면, 강원도는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교 연구개발조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인천시는 수도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조직 수에서 경기도의 1/6, 서울시의 1/4 수준에 불과함. 인천시의 경제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쇠퇴 원인 중 하나로 제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부족을 꼽을 수 있음. 진화되는 신기술을 흡수하지 못해 단순가공조립업종에서 탈피하지 못할 경우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는 지역 경제의 성장정체로 이어질 수 있음.
 - 강원도에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주로 위치해 있어 연구개발 역량이 낮은 상황임. 연구개발 수행주체도 대부분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이 중심이 되어 산업화로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님. 연구개발 역량 및 기반 약화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실패할 경우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져 일자리 부족, 인구감소 및 주거환경 쇠퇴,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음
- 전국 및 해당 광역지자체 전체와 비교했을 때 접경 지역 전반적으로 대학 및 기업기반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 시·군 접경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수는 16개이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에 불과하여 대학기반 연구개발 역량이 취약한 상황임
 - 경기도 신도시 및 산업단지가 위치한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의 기업부설 연구개발조직 수가 접경 지역 전체의 91%를 차지하여 기업 기반 연구개발 역량의 편중 현상이 심각함. 대다수 시·군 접경 지역은 사업체 수가 적고, 중소 또는 영세업 위주로 위치해 있어 연구개발 역량이 현저히 떨어짐.
 - 경기도 접경 지역에 기업부설 연구개발조직 수 상위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

기도 전체에서 접경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 불과함. 강원도는 거점도시인 춘천시를 제외하면 3.9%, 인천시는 1.3%로 미미함. 전국 및 해당 광역지자체 전체와 비교했을 때 접경 지역 전반적으로 기업기반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 산업구조 현황

- 강화군과 옹진군은 농림어업이 상위, 사업서비스업이 하위산업을 차지하며 공공·국방산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이 영세함
 - GRDP를 기준으로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인천시는 전국순위와 유사하게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이 상위, 숙박·음식점업과 농림어업이 하위산업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순위와 다르게 운수창고업이 상위, 정보통신업이 하위산업에 포함되어 있음
 - 강화군과 옹진군은 전국 및 인천시 GRDP 순위와 반대로 농림어업이 상위, 사업서비스업이 하위산업을 차지하며, 공공·국방산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이 영세하여 도서 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를 나타냄
- 김포시와 양주시는 제조업, 파주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포천시는 제조업과 농림어업, 고양시는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업, 동두천시는 보건·복지서비스업, 연천군은 공공·국방행정에서 전국 대비 비교우위를 지님
 - 경기도 GRDP 상·하위 산업군은 전국과 동일한 분포를 나타내며 중위권 산업군에서 공공·국방행정, 금융·보험업은 전국 대비 낮은 순위,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은 높은 순위를 차지함
 - GRDP를 기준으로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김포시와 양주시는 제조업, 파주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포천시는 제조업과 농림어업, 고양시는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업, 동두천시는 보건·복지서비스업, 연천군은 공공·국방행정에서 전국 대비 비교우위를 지님. 연천군은 다른 경기도 접경 지역과 다르게 공공·국방행정의 GRDP 비중이 1위를 차지하여 지역 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강원도 6개 시·군 접경 지역 모두 공공·국방행정이 GRDP 1위 산업을 차지하고 있으며, 춘천시는 교육서비스업,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은 농림어업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 산업으로 나타남
 - GRDP를 기준으로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중위권을 차지한 공공·국방행정이 강원도에서는 최상위 산업이며,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한 사업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은 강원도에서 중위권에 머물름
 - 강원도 시·군 접경 지역의 GRDP 상위산업에는 전국 평균 상위산업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국에서 중위권에 포함된 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 최하위권에 포함된 농림어업이

상위산업을 차지함. 6개 시·군 모두에서 공공·국방행정이 GRDP 1위 산업을 차지하고 있으며, 춘천시는 교육서비스업,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은 농림어업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 산업으로 나타남

다. 접경 지역 관련정책·사업 현황

+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사업

- 남북 관계 발전 기본 계획에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틀 내에서 남북이 상생하는 경험 사업을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제사회 및 주요 국가 개발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나갈 계획을 제시함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는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북한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호혜적 방식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남북간 ‘하나의 시장’ 및 경제 공동체 기반을 형성하고,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제시함
 -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틀 내에서 남북 수요 및 장단점을 고려하여 남북이 상생하는 경험 사업을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여기에는 환서해·환동해 경제벨트 형성 추진을 위한 철도·도로 연계, 산림복구·보호사업의 중점추진, 개성공단 등 산업단지 조성,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통한 물류 축 연결 및 관광 협력 확대 모색, 안정적인 경험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이 포함됨
 -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중국·러시아·몽골·아세안 등 주요 국가 개발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유관기관·기업·NGO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 협력에 기반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국토종합계획에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한반도-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구상에 기초하여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함
 - 국토종합계획에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한반도-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구상에 기초하여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 남북간 ‘하나의 시장’ 협력을 통해 환동해 에너지·자원 벨트, 환서해 물류·산업 벨트, 접경 지역 평화 벨트의 3대 벨트 기반 조성 및 생활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함
 - 여기에는 지자체 단위의 교류 협력사업 지원, 남북 공동 특구 조성 등 기반확충계획, 하천·산림·보건 협력을 강화해나가며 관광·농수산·물류·에너지 등 분야별 협력사업을 모색하는 계획, 철도·도로 확충 및 항공·항만 협력계획, DMZ 국제평화지대 및 생태·역사문화·평화관광벨트 조성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더 나아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국가로서 한반도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대륙과의 연결, 동북아 1일 생활권 구상,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복합교통물류체계 등 초국경 경제 협력을 통해 한반도-유라시아대륙-동남아국가를 잇는 대륙-해양경제를 창조하고 동북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대륙연결형·개방형 국토 구상을 제시함
- 접경 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접경 지역을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균형 발전 기반 구축,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의 4대 전략, 225개 사업에 13.2조원을 투입할 계획임
- 접경 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 지역의 주민복지 향상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2조원을 투입할 계획임. 접경 지역을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4대 전략인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에 39%, 균형 발전 기반 구축에 25%, 생태·평화관광 활성화에 23%, 정주 여건 개선에 13%를 투자할 계획임. 지역별로는 강원도에 44%, 경기도에 27%, 인천시에 19%, 광역사업에 10%가 투자됨
- 생태·평화관광 활성화에는 도보 여행길 조성, 자연생태 체험·교육공간 구축, 지역별 역사·문화·안보자원을 활용한 관광 사업 등이 포함됨. 정주 여건 개선에는 주민 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 가스·도로·배관 등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 등이 포함됨. 균형 발전 기반 구축에는 해양수·화훼·백토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산업단지 조성,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 물류·도로·철도역사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이 포함됨.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에는 도로 확충, 남북교류를 위한 기술·물류단지 및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이 포함됨

+ 지자체 차원의 정책·사업

- 접경 지역 관련 지자체 사업계획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휴양·레저·관광 산업, 기반시설조성사업, 농림어업·식품가공산업 순이며, 제조·소재·에너지산업과 지식기반·첨단산업은 경기도 및 강원도 일부 지역에 해당함
- 인천시 접경 지역과 관련된 전략·기반산업은 관광 및 음식료품 가공산업이며, 도서 지역 특성상 수산업과 해양생태관광이 권역 단위 중점추진사업으로 수립되어 있음. 인천시 접경 지역의 지역 단위 중점추진사업에는 역사·문화·자연·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6차산업 및 평화·안보·남북경협 연계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경기도 전략산업 중 지식기반산업은 고양-파주-김포 권역, 섬유·가구·디자인·신소재 산업은 포천-양주 권역과 관련이 있으며, 동두천시와 연천군에는 산업·관광 관련 인프라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경기도 접경 지역 시·군 내에서 도심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첨단IT·섬유·가구·신소재·디자인 관련 전략산업이 추진되고, DMZ 인근·자연보전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역사문화·안보 관광 산업이 추진되고 있음

- 강원도 접경 지역과 관련된 전략산업은 스마트관광 및 푸드테크산업이며, 남북교류 협력과 관광·레저사업이 권역 단위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강원도 접경 지역의 지역 단위 중점추진사업에는 산림을 활용한 휴양·관광 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지역 광물·목재·농산물 가공산업과 남북경협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5.2 접경 지역 균형 발전 시사점

가. 남북 경제 공동체 관점의 접경 지역 경쟁력 강화

+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기초한 경제성과 창출사업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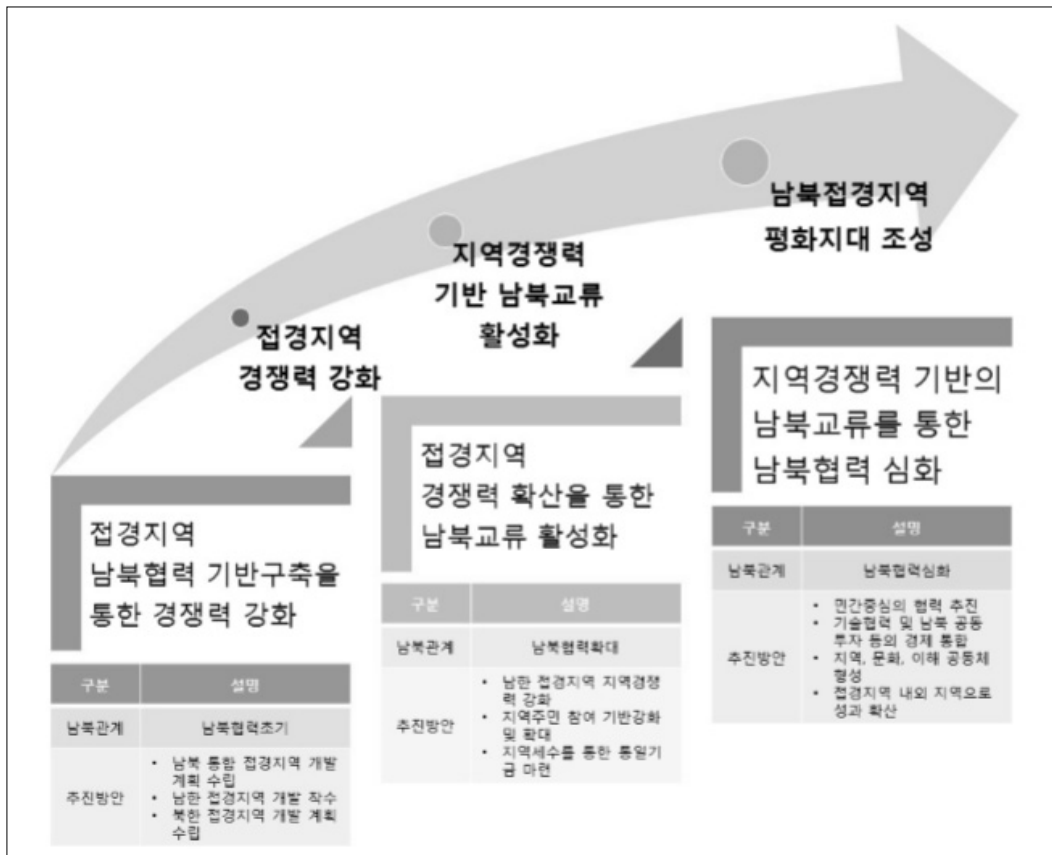
- 한반도 신경제 창출을 위한 초광역 협력벨트 측면에서 접경 지역의 거시적 역할과 특성을 고려하고, 접경 지역에 특화된 산업육성 및 경제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중앙정부에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틀 내에서 남북이 상생하는 경협 사업을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평화·문화교류 및 하천·산림·보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하나의 시장’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남북공동특구 마련, 도로·철도 연결, DMZ 보존 및 공동이용방안 마련, 관광활성화 모색, 접경 지역 개발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기반 조성 중심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질적인 달성을 위해 다음 단계로 요청되는 것은 남북을 연결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산업 분야 사업추진임. 이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달성되고, 향후 통일된 한반도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남북 경제 공동체 구상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음. 따라서 기존 남북 평화·문화·사회 교류 및 협력 인프라 조성사업과 더불어 경제·산업 분야의 성과창출 사업 모색이 병행될 필요 있음
- 접경 지역 개발 역시 낙후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조성과 더불어 경제·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춘 사업개발이 요구됨. 접경 지역은 남북 경제 공동체 구상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한반도 신경제 창출을 위한 초광역 협력벨트 측면에서 접경 지역의 거시적인 역할과 특성을 고려하고, 접경 지역에 특화된 산업육성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경쟁력 향상 및 남북 공동이익 도모 필요

- 남북 접경 지역을 평화지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민간이 주체가 되어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임

- 중앙정부에서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단계별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접경 지역 개발 계획 역시 지자체 및 민간이 주체가 되어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단계로 나아갈 필요 있음
- 남북 접경 지역을 평화지대로 조성하는 데는 중앙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 접근보다 지자체 주도의 지역 기반 공동체 관점의 접근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낙후된 접경 지역을 집중 개발하여 지역 경쟁력부터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확보된 지역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며 민간이 중심이 되는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면 지역 기반의 사회·문화·경제 공동체 형성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음

〈그림 II-25〉 접경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반한 교류 협력 활성화 단계



※ 자료: 강민조 외, 통일대비 남북접경 지역 국토이용 구상: 남북협력 추진과제 중심으로, 국토연구원(2017)

나. 균형 발전 관점의 접경 지역 특화 산업 육성

+ 접경 지역 경쟁력 향상을 통한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 필요

- 한반도 균형 발전 및 남북 경제 공동체 관점에서 낙후된 접경 지역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차원의 정책지원 및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접경 지역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시·군 접경 지역이 전국 또는 해당 광역지자체 평균 대비 인구, 일자리, 지역산업구조, 생산력, 재정자립도, 연구개발 역량 등에서 취약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로 인해 미래 성장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향후 집중적인 개발지원 및 규제완화 없이 현재의 낙후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지역투자 부족, 산업구조 고도화 실패, 지역 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 지역생산 감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그동안 접경 지역은 남북 관계를 고려한 평화 및 교류 관점의 제한된 개발과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 기회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남북통일 이후에도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통과 지대로 전략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안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이 경제 공동체로 연결될 경우 접경 지역이 보유한 경쟁력이 한반도 경제성장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잠재되어 있음. 따라서 한반도 균형 발전 및 남북 경제 공동체 관점에서 낙후된 접경 지역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차원의 정책지원 및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접경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권역별 특화 산업 육성 필요

- 접경 지역에는 낙후 지역과 도시화 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지역이 보유한 자원, 산업화 역량,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한 개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접경 지역에는 낙후 지역과 도시화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 간 성장세에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음. 접경 지역 시·군이 처한 여건 및 발전 단계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한 개발 방안이 요구됨
 -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등 신도시 개발 지역 및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 지역은 다른 접경 지역 시·군에 비해 인적·물적자본 및 산업화 역량이 높은 편임. 이런 지역에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다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및 R&D 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중장기적으로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접경 지역 시·군은 도서 산간 지역 및 군지역에 해당하며 인적·물적자본 및 산업화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이런 지역에는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시급함.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정부 차원의 투자지원, 거점지역 육성, 지자체 간 연계 및 협력 방안이 요구됨
 - 대다수 접경 지역은 산업화가 늦추어진 대신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있어 관광 자원이 풍부함.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별 중복개발 방지 및 관광

효과 증진을 위해 지역 간 연계·통합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전략이 필요함

-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해당 산업의 지역 적합도 및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별·권역별 특화 산업을 도출하고, 단계별 육성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접경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요구됨. 이러한 투자·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 경제 공동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사업 전략과 연계성을 높일 필요 있음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및 사업계획 중에서 접경 지역 산업 활성화와 연관된 산업 분야에는 관광 산업, 농수산 및 6차산업, 제조·소재·에너지산업, 섬유·가구·디자인산업, 지식기반·첨단IT산업과 더불어 산업단지·물류·교통·R&D지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포함됨
 - 이중에서 관광 산업, 6차산업, 기반시설 조성사업처럼 대다수 접경 지역에 해당하는 산업도 있고, 제조산업, 섬유·디자인산업, 지식기반·첨단IT산업처럼 특정 시·군 또는 광역권에 해당하는 산업도 있음.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해당 산업의 지역 적합도 및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권역별 특화 산업을 도출하고, 단계별 육성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Ⅲ

접경 지역 중점육성 특화 산업 도출

1. 스마트 6차산업 분야
2.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분야
3.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분야
4. 미래관광 분야

Ⅲ 접경 지역 중점육성 특화 산업*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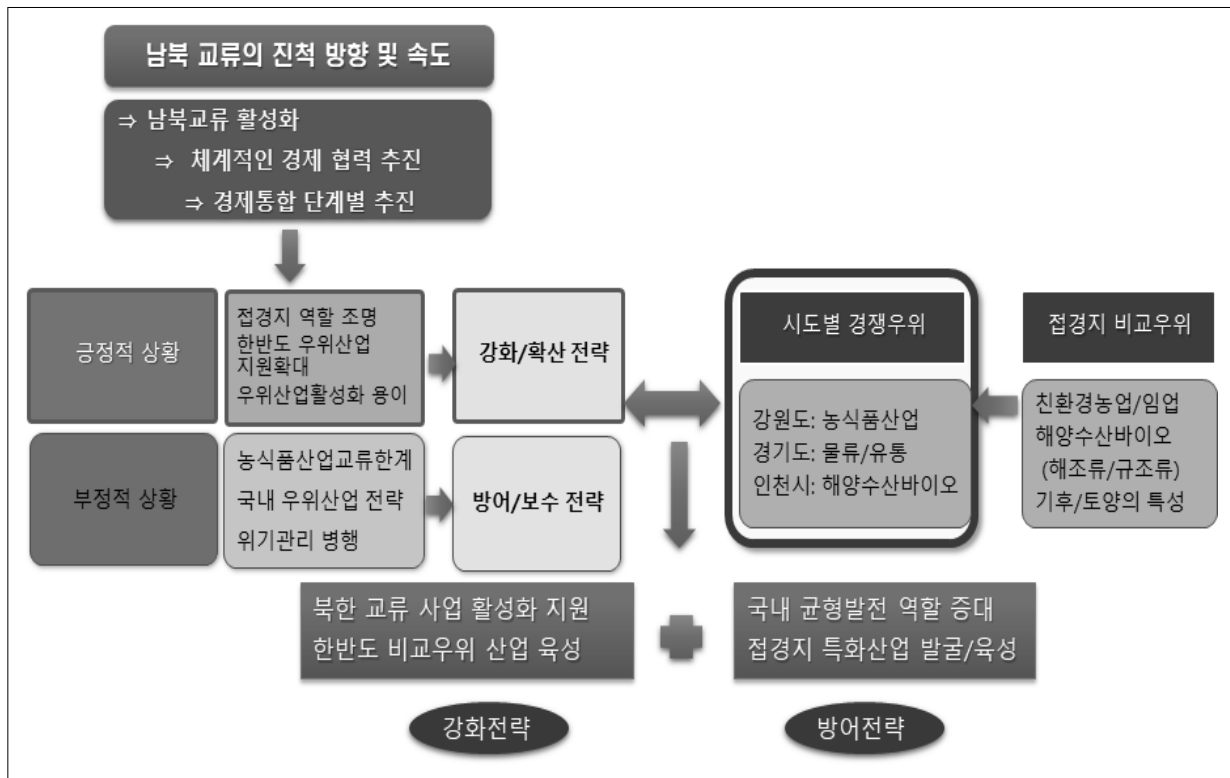
* 접경 지역 특화 산업은 앞 장에서의 접경 지역 산업구조 및 접경지 관련 정책·사업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크게 ① 스마트 6차산업분야, ② 제조업분야, ③ 섬유패션분야, ④ 관광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접경지 특화 산업을 도출하고, 도출된 산업별 유망사업을 제안함

1 스마트 6차산업 분야

1.1 특화 산업 후보 도출 및 선정 방법

● 배경

〈그림 Ⅲ-1〉 접경 지역 스마트 6차산업분야 육성 전략 구상도



- 15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접경 지역의 지역별 대표산업을 선정하고 구성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 및 남북교류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접경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선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접경 지역 특화 대표산업을 분석하며, 나아가 접경 지역 전체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함
-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균형, 접경 지역 지역 간 균형, 국가적 차원의 균형 및 남북교류의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반 연구 방법을 활용함
- 남북교류의 변화 속도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긍정적 상황을 가정한 강화전략으로 한반도 우위산업 지원확대, 접경 지역 역할 조명 전략이며, 또한, 부정적 상황 대비로는 국내 우위산업 전략 등 방어전략을 고려함
- 접경 지역 비교우위 및 시·군별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특화 산업 발굴 및 육성

● 방법

+ STEEP PLUS 분석

- STEEP PLUS 분석 개요
 -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미래예측에 가장 많이 활용되며 거시환경 분석에 사용되는 STEEP 분석에 본 사업적 특성의 3요소(실현 가능성, 지속성, 파급성)를 부가한 STEEP PLUS 분석을 개발함
 - 이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강원도(6개 시·군), 경기도(7개 시·군), 인천(2개 군)의 지역별 분석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대표 분야와 특화 산업을 제안함
- STEEP 분석 정리
 - STEEP 분석은 거시적인 외부환경 변화와 트렌드에 대해 폭넓게 직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함
 -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분석의 범위, 시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요 변화요인 및 위험요소에 대한 충분한 파악 및 사전 준비가 필요함
- Society(사회)
 - 사회의 특징과 트렌드 분석은 인구변화, 문화적 가치, 관습, 교육, 소비자 행동 등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포함
 - 분석의 내용은 고령화 사회진입, 출산율 감소, 1인 가구 증가, 세계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이 있음
- Technology(기술)
 - 기술분야는 미래 기술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므로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줌
 - 4IR, 인공지능, 로봇,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 재료, 교통 등의 기술발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요소임

- 수학, 물리, 화학과 같은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 전망을 분석하여 판단의 기준으로 함
- Economy(경제)
 - 경제성장, 생산, 고용, 임금, 인플레이션, 재정정책, 빈부격차 등 국가경제 및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함
 - 자원 배분 및 사용 관련 제반 활동을 포함하여 분석함
 - 경제성장 둔화, 취업률 감소, 저금리, 낮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대상으로 감안함
- Environment(환경)
 - 자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며, 환경과 관련된 트렌드 변화를 감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미세먼지, 환경오염, 토양, 물부족, 산림훼손, 바다환경, 생물변화 공해, 쓰레기 등의 환경적 요소를 분석의 기준으로 함
- Politics/Legal(정치/법규)
 - 정부의 역할, 정치적 환경 및 법적 환경에 관한 현황과 트렌드 반영
 - 규제, 제도, 법률, 규칙, 선거, 정권변화, 국제관계 등에 관한 변화를 전망하고 분석함
 - 남북관계, 지자체 정책 등 조직이나 개인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전망하고 분석함

+ PLUS 3 요소

- STEEP 분석 이외에 접경 지역의 특성상 추가적인 요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STEEP PLUS라 하고 3개 요소에 대한 정의 및 영역을 명시하고자 함
- 실현 가능성(Feasibility)
 - 선정하고자 하는 산업 혹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고자 함
 - 물리적, 제도적, 재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
 - 특히, 남북교류의 관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집중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지속성(Sustainability)
 -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 여부를 평가함
 - 외부의 요인에 의해 지속성이 단절될 수 있다거나 미진할 경우를 분석하여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함
- 파급효과(Spread Effect)
 - 타산업 혹은 타 영역으로의 파급효과 규모나 강도도 특화 산업 선정의 판단기준에 필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

- 일반적으로 타 산업으로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확산되는 경우 이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선정의 판단기준을 삼을 수 있음

● 지역혁신역량 분석

+ 지역혁신역량 분석 개요

- 미시 환경분석에 활용되는 지역혁신역량 분석은 지역단위별 해당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종종 사용되고 있음
- 접경 지역 시·군별 특화사업 대상으로 적용하여 평가에 활용하고자 함
- 단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정책혁신역량, 산업혁신역량, 지역혁신역량 등 3개 역량 분야별로 구성됨

+ 접경 지역 특화 산업 평가용 지역혁신역량 분석

- 접경 지역 특화 산업을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내용을 접경 지역 맞춤형으로 개선하였음
- 접경 지역 맞춤형으로 평화경제체제구축, 민관 거버넌스 구축, 공정경쟁 및 지역 균형 발전, 미래성장동력확보, 혁신성장 산업 기반, 지역특화 요소 경쟁력, 지역혁신 생태계 등 7개 역량항목에 준하여 평가함

+ 접경 지역 지역혁신역량 분석 내용 체계도

분야	역량항목	분석내용
정책혁신 역량	평화경제체제 구축	평화경제체제 정책과 부합도, 평화경제체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
	민관 거버넌스 구축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및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력 주민의 혁신정책 수용성
	공정경쟁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지원사업의 공정성, 지역균형발전에 기여도
산업혁신 역량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접경지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 정부의 신성장산업 부합도
	혁신성장 산업 기반	현재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 미래 경쟁우위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가능성
지역혁신 역량	지역특화 요소 경쟁력	지역보유자원 역량 적합도(입지여건, 도로, 산업기반, 대학/인적자원 등)
	지역혁신 생태계	지식산업 테크노밸리, 산업 클러스터 벤처·중소기업 지원센터 혁신성장 산업 관련 지원 민간·공공기관

● 특화 산업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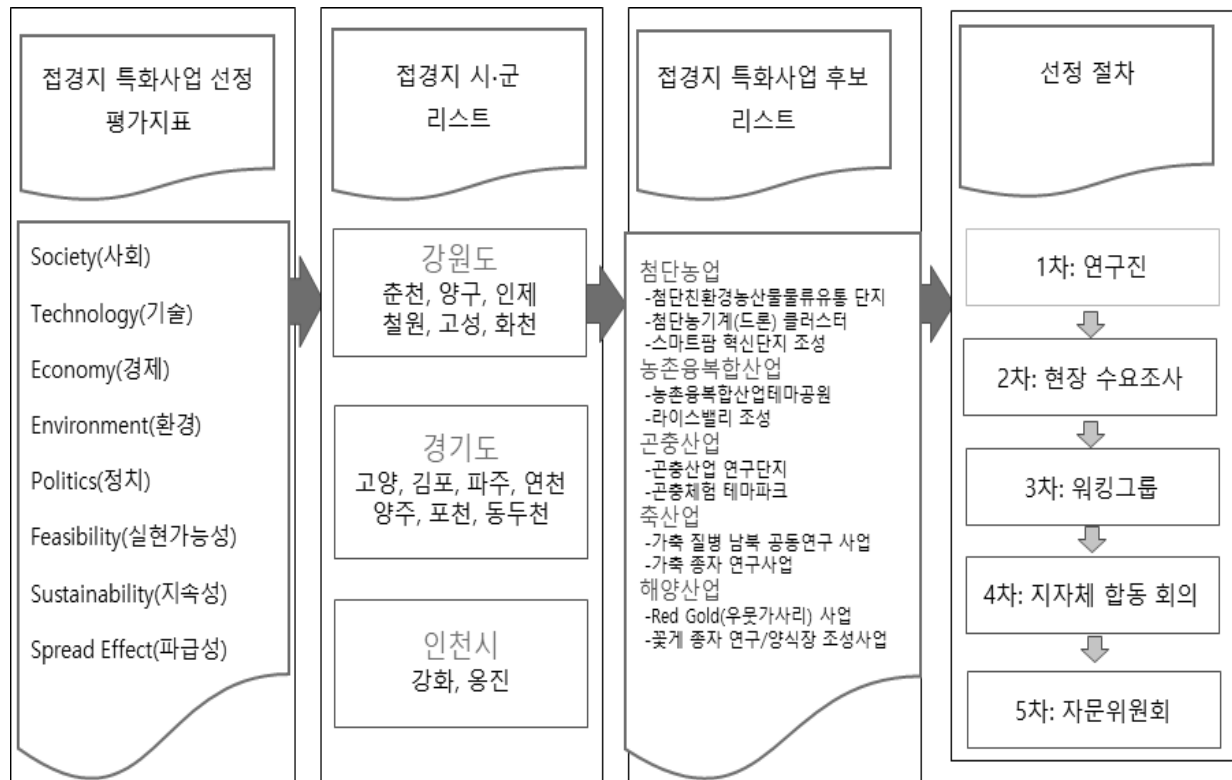
+ 특화 산업 선정절차 개요

- 대상: 15개 접경 지역 시·군
- 방법: 자료 수집 및 분석, STEEP PLUS 평가, 시·군 행정 담당자 의견수렴, 전문가 그룹 선정평가, 혁신역량 평가

+ 선정 절차

- ① 스마트 6차산업분야의 특화 산업 적합도 평가: STEEP PLUS 분석
- ② 접경 지역 특화 산업 후보군 선정: 자료수집, 현장의견수렴
- ③ 후보군의 산업별 분석: 자료수집, 전문가 자문
- ④ 후보군 대상 특화사업 선정: 전문가 그룹 STEEP PLUS 평가
- ⑤ 후보군 대상 특화사업의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지역혁신역량 평가
- ⑥ 우선순위별 특화사업 최종선정

〈그림 Ⅲ-2〉 STEEP PLUS 활용 특화 산업 및 사업 선정 절차도



1.2 STEEP PLUS 분석

가. STEEP PLUS 분석 범위 및 내용

● 분석 범위

+ 분석의 개요

- 제1차산업인 농축수산업 및 그와 연계된 식품산업이 접경 지역의 대분류 특화 산업분야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자 함
- 스마트 6차산업분야가 접경 지역의 특화 산업분야로 선정되면, 그 안에서 다음 세부분류의 특화 산업 및 사업을 선정하고자 함

+ STEEP PLUS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적 범위

- 강원도(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고성군, 화천군)
- 경기도(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
- 인천시(강화군, 옹진군)

● 산업적 범위(스마트 6차산업 분야)

- 1차산업: 농업, 축산업, 임업, 해양수산업
- 2차산업: 식품(농업, 축산업, 임업, 해양수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식품)
- 3차산업: 체험, 관광서비스, 물류유통

● 분석 내용

STEEP PLUS	분석 내용	평가
사회 (Soci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수급 및 미래 먹거리 관점에서 인도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 ◦ 북한이 가장 절실한 분야(식량문제)이며 단기에 가시적 효과 가능 	○
기술 (Techn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개량 연구 및 첨단시스템 공동 연구를 통한 1차 산업의 생산성 제고 ◦ 식량난을 극복한 기술의 역사가 있으며, 통일 후를 염두에 둔 중요한 산업 	△
경제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에서 그 비중은 낮으나, 강원도 인천 지역의 비교우위 및 전략 산업 ◦ 수급조절에 따른 가격 안정 및 소득 안정과 연계 가능 ◦ 북한 비교우위 식재료 관련 연구 및 활용은 한반도 농업발전과 세계화 기여 	○
환경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비에 역할 가능 ◦ 북한의 접경 지역(주요 농업)의 환경조건이 유사함으로 접경지연구 중요 ◦ AI, 아프리카열병 등 축산부문에 남북공동대처 및 상생 전략 필요 	○

STEEP PLUS	분석 내용	평가
정치/정책 (Poli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정책적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은 중요한 사안 ◦ 남북교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산업이며, 정치적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실현 가능성 (Feasi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며, 북한이 절실한 산업으로 북한의 니즈에 의해 실현 가능성이 높음(사례: 우뚝가사리의 남북공동연구 등) 	○
지속성 (Sustain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의 가시적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분야 ◦ 북한주민 생활에 직결되므로 협력이 증진되면, 다시 후퇴하기 어려운 여건 	△
파급효과 (Spread Eff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경제적 파급효과 및 남북교류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 ◦ 정주영 소떼방문(1998) 이후로 급격히 진척된 남북관계의 사례 ◦ [금강산 관광협약(1998) → 남북정상회담(2000) → 개성공단 건립 합의(2000) → 이후, 10여 년간 남북교류의 비약적인 발전] ◦ 북한 체제의 경제개발에 가장 가시화될 수 있는 산업(중국, 베트남 사례) 	○

- 사회(S)
 - 식량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며,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가장 절실한 분야**가 스마트 6차산업 분야이므로 남북교류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 북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식량 문제 해결**임
 - 단기에 **가시적 효과**를 보일 수 있음
- 기술(T)
 - 농업 기술, 축산 기술, 식품 기술 등은 **한국의 장점**이며, **식량난을 극복한 역사**가 있고, 생산성에서 남한이 월등함
 - 가용 경작지가 좁은 북한의 입장에서 **종자 개량 및 연구를 통한 1차산업의 생산성 문제**는 민생과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
 - **통일 후를 염두에 둔, 혹은 남북교류를 위한, 북한 실정에 대한 접경 지역 기반 구축**에는 1차산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한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앞서지만, 북한이 가장 절실한 부분은 **식량난**이기 때문
- 경제(E)
 - 한국에서 1차산업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필수적인 전략산업으로 식량자립과 동시에 **수급조절에 따른 가격안정**을 통한 종사자 소득안정은 중요한 요소
 - 쌀과 같은 한국 내 잉여 농수산물의 경우 북한과의 교류는 국내 가격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북한 비교우위 식재료 생산에 대한 연구 및 활용**은 한국 농업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환경(E)
 - 기후변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북한의 대비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음
 - 접경 지역 지역의 환경 조건이 북한의 접경 지역 부근과 유사하므로 북한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접경 지역에서 연구가 집중** 이루어져야 함
 - 축산부문의 AI, 아프리카 열병 등의 **공동 대처가 상생하는 전략**이므로 이에 대한 교류 협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할 것임
- 정치/법규(P)
 - 1차산업 및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남북 교류를 위한 정치적 배려와 법규 완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보임
- 실현 가능성(F, Feasibility)
 - 한국이 환경적 기술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북한이 절실한 분야이므로 북한의 니즈에 의해 실현 가능성이 높음
 - 우뚝가사리의 남북공동연구 사례
- 지속성(ST, Sustainability)
 - 단기의 가시적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산업 분야
- 파급효과(SE, Spread Effect)
 - 남북 교류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
 - 정주영 소떼방문(1998) 이후로 급격히 진척된 남북관계의 사례
 - 금강산 관광 → 남북정상회담(2000) → 개성공단 건립 합의(2000) → 그 후 10여년간 남북 교류의 비약적인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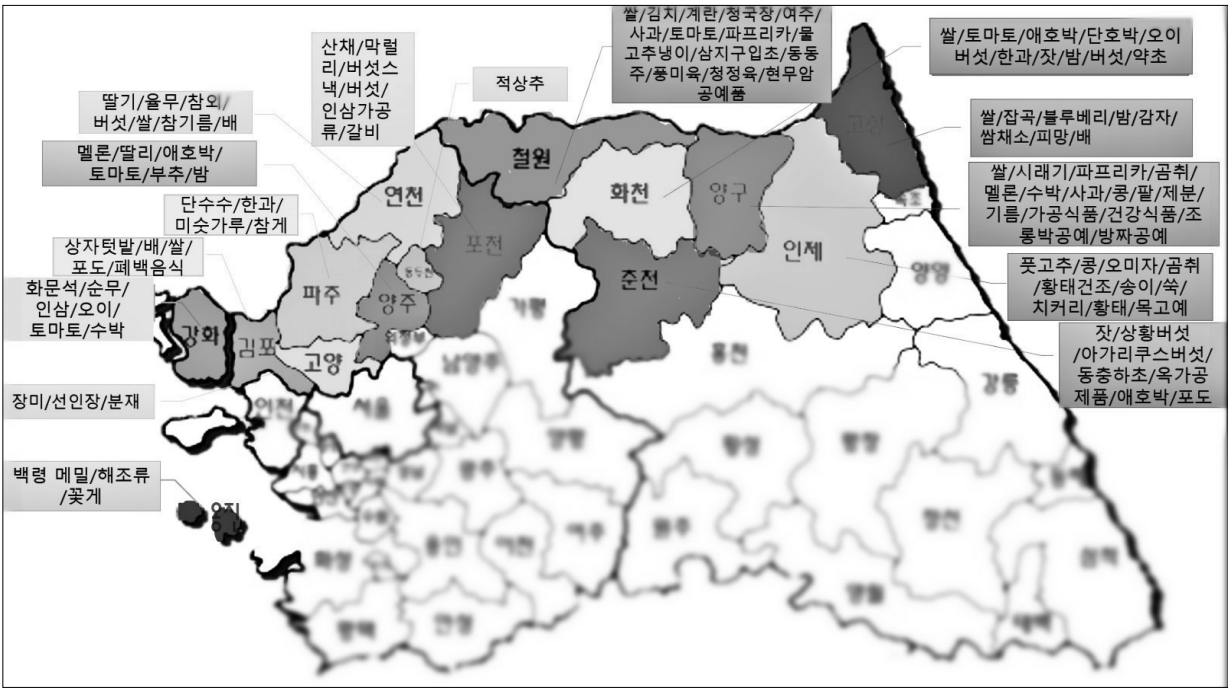
● 시사점

- 결론적으로 STEEP PLUS 분석을 토대로 판단할 때, 스마트 6차산업 분야는 접경 지역 산업 육성 및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산업으로 판단됨
- 1차산업 및 식품분야는 글로벌 경쟁력으로 볼 때는 국제적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나, 남북관계에서는 비교우위도 있으며,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산업이므로 본 연구의 핵심분야로 분석하고자 함
- 1차산업 남북교류는 국민 실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며, 이는 나비효과를 통해 전체 산업적 경제적 정치적 남북교류에 파급효과를 줄 것임

나. 스마트 6차산업 특화 산업분야 선정

- 특화 산업 선정을 위한 사전활동
 - + 후보군 발굴을 위한 정보수집
 - 온라인 검색/자료조사

〈그림 III-3〉 접경 지역 특화작물 배치도



- + 발표 자료 수집 분석
 - 세미나, 논문/연구보고서
-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일정	대상 지역	참석자	비고
2019년 9월 17일~30일	강원도	강원연구원, 강원도청, 6개 시·군 담당자	행정현장 의견수렴
	경기도	경기도청	
	전체	한국식품연구원	지원기관
	전체	전남대 정○○ 교수(친환경농산물 전문가)	전문가
10월 10일(목)	강원도	강원연구원, 강원도청 4명	지역전문가 의견수렴
10월 11일(금)	경기도	경기도청 2명	
10월 24일(목)	인천시	갯내 글로벌캠퍼스 총장 외	
11월 13일(수)	전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방문	지원기관

일정	대상 지역	참석자	비고
11월 20일(수)	전체	지자체 합동회의(중간점검)	행정현장
11월 23일(토)	전체	접경 지역 혁신 포럼(20여 명)	전문가그룹
11월 28일(목)	인천시	서해 5도 스마트 해양산업육성	세미나
12월 19일(목)	인천시	중간보고(접경 지역 시·군 행정담당자 48명)	의견수렴
2020년 02월 13일(목)	전체	최종보고(접경 지역 시·군 행정담당자 30여 명)	최종

● 특화 산업 후보군 선정 결과

특화 산업 후보	선정이유	역량 보유/미흡	세부사업(지원방안)
첨단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친환경 장점 활용 ◦ 군대/학교 단체 급식 수요 조달 ◦ 첨단유통시스템 구축 필요 ◦ 농업부문 4IR 접목 등 첨단화 필요 ◦ 지식기반형 미래농업 기술혁신 연구 단지 조성 요구됨 ◦ 한반도 농업 교류로 비교우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단지 부재 ◦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요함 ◦ 농산물 공판장 및 상시거래 체계 구축 미흡 ◦ 농업과학기술 적용 요구됨 ◦ 지역 맞춤형 드론농업 개발 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첨단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 ② 첨단농기계(드론) 클러스터 ③ 스마트팜혁신단지
농촌 융복합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융복합화(농업+관광) ◦ 오대쌀산업 네트워크 구축 ◦ 로컬푸드체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대쌀이미지/역량 보유 ◦ 귀농단지, 농업관광 미흡 ◦ 쌀 가공식품의 다양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농촌융복합테마공원 ⑤ 라이스 밸리 조성
곤충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5대 융복합프로젝트 ◦ 미래의 먹거리 산업 ◦ 곤충 사육에 유리한 친환경 ◦ 곤충활용 반려동물사료산업 선점 ◦ 곤충 활용 관광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충 사육, 이용식품, 의약품소재 등의 역량 집중 가능 ◦ 곤충에 대한 인식 미흡 ◦ 미래먹거리 식용곤충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곤충산업 테마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충산업 연구단지 - 곤충체험 테마파크
축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공동대처 ◦ 가축 종자 남북공동연구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으로부터 아프리카열병 침투에 속수무책 경험 ◦ 가축종자 공동연구체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가축 종자/질병 공동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종자 개량 연구 - 가축질병 퇴치 연구
해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뚝가사리 한천 시장 수급문제 및 남북한 포항 글로벌협력연구 움직임 ◦ 웅진군 꽃게 종자연구 지역 특성화 ◦ 해조류 육상양식장 시스템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웅진군-마라도 해조류 평화 벨트 역량 구축 추진 중 ◦ 남북한 해산물 공동 양식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⑧ 해조류(RedGold) 사업 ⑨ 꽃게 종자연구/ 양식장

● 특화 산업 세부사업 평가 매트릭스

단위사업명	S	T	E	E	P	R	ST	SE	계
① 첨단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									
② 첨단농기계(드론) 클러스터									
③ 스마트팜 혁신단지									
④ 농촌융복합산업 테마공원									
⑤ 라이스밸리 조성									
⑥ 곤충산업 테마파크									
⑦ 가축 종자/질병 연구사업									
⑧ 해조류(Red Gold) 사업									
⑨ 꽃게 종자연구/양식장 조성									

※ 평가항목 당 ○ 2점, △ 1점, × 0점으로 평가하고 합계 순으로 선정 여부 결정

1.3 특화 산업 평가 및 선정

가. 세부사업 평가(STEEP PLUS 분석)의 개요

● 접경 지역 시·군 현장 전문가 그룹에 의한 평가·분석

- 일시: 2019년 11월 20일
- 장소: 강원도의회
- 참석자: 강원도, 경기도, 인천시 지역 전문가 등 20명
- 조사 응답자: 11명/18명(응답률 61.1%)
- 방법: 특화사업 후보군 9개에 대한 사전 설명 후, 현장 전문가 평가

- 참가자 명단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 시도 회의 참석대상자

연번	기관명	부서명	직 위(급)	성 명	연락처	비고
1	균형위	대외협력국	대외협력담당관	한경구		
2	"	"	행정5급	조현서		
3	인천시	도서지원과	도서정책담당	전상배	010-2016-5122	접경지
4		"	주무관	박정식	010-9695-1707	
5		남북교류협력담당관	평화교류담당	김태일	010-4075-1898	남북교류
6		"	주무관	박서현	010-6736-1058	
7		산업진흥과	구조고도화팀	조상욱	010-9271-2373	지역산업
8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	접경지개발팀장	정재관	010-9704-6409	접경지
9		"	주무관	정회원	010-4728-9952	
10		평화기반조성과	남북교류협력팀장	전 철	010-3333-8747	남북교류
11		"	주무관	이재운	010-9455-8850	
12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정승호	010-2974-4874	섬유산업
13	강원도	총괄기획과	평화지역총괄	김용환	033-249-3945	접경지
14		"	주무관	김수현	033-249-2283	
15		남북교류과	교류협력담당	김상범	033-249-3095	남북교류
16		"	주무관	윤현주	033-249-3096	
17		전략산업과	성장동력담당	김주선	033-249-2159	지역산업
18		"	주무관	김수철	033-249-3483	
19		균형발전과	지역협력담당	백승만	033-249-2297	균형발전
20		"	선임연구원	서재완	033-249-2287	

나. 스마트 6차산업 세부사업 후보군 평가 결과

2019.11.20

구 분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기타		합계	순위
	①	②	③	④	⑤	①	①	②	③	①	②		
① 첨단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	8	7	3	6	1	5	5	1	2	3	2	43	③
② 첨단농기계(드론) 클러스터	3	4	9	7	3	4	1	2	2	8	6	49	⑥
③ 스마트팜 혁신단지	5	7	4	7	6	5	1	2	2	1	3	43	③
④ 농촌융복합산업 테마공원	8	7	8	2	6	5	1	2	2	8	4	53	⑧
⑤ 라이스밸리 조성	4	2	7	3	6	9	1	7	2	4	6	51	⑦
⑥ 곤충산업 테마파크	9	4	6	9	3	5	8	9	2	7	6	68	⑨
⑦ 가축 종자/질병 연구사업	7	1	5	1	6	1	8	5	1	4	6	45	⑤
⑧ 해조류(Red Gold) 사업	1	2	1	4	3	2	5	8	2	2	1	31	①
⑨ 꽃게 종자연구/양식장 조성	2	4	2	4	2	2	5	6	2	4	5	38	②

추가 세부사업 추천

(1) 다시마 양식장 조성	(추천) 백령도에서 종자 전국보급	(2)	(추천배경)
----------------	--------------------	-----	--------

의견/건의 사항

① 인천은 수산, 관광 산업 추가 필요: 뱃길복원 및 민간선박운항, 웅진에 해상파시, 어로 한계선 조정확대, 서해 5도 어장 확대 어민 수익확대

※ 평가항목 당 ○ 2점, △ 1점, × 0점으로 평가하고 합계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현장 전문가 그룹의 거시분석에 의한 4대 특화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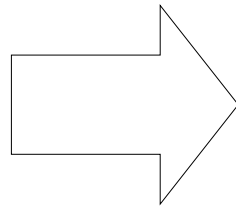
○ Red Gold 사업, 꽃게 종자연구/양식장 조성, 스마트팜 혁신단지, 첨단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

다. 접경 지역 스마트 6차산업분야 특화 산업 및 대표산업

● 개요

- 접경 지역 특화 산업 도출의 첫 단계로 5개 특화 산업의 9개 특화사업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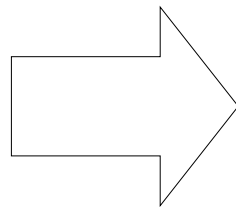
① 첨단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
② 첨단농기계(드론) 클러스터
③ 스마트팜 혁신단지
④ 농촌융복합산업 테마공원
⑤ 라이스밸리 조성
⑥ 곤충산업 테마파크
⑦ 가축 종자/질병 연구사업
⑧ 해조류(Red Gold) 사업
⑨ 꽃게 종자연구/양식장 조성



5개 특화 산업
9개 특화 사업
선정

- 접경 지역 특화 산업 도출의 두 번째 단계로 9개 특화사업 후보군 대상으로 거시적 관점의 STEEP PLUS 분석을 통해 대표사업 후보군 4개로 압축함

① 해조류(Gold Red) 사업
② 꽃게 종자연구/양식장 조성
③ 첨단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
④ 스마트팜 혁신단지



4개 대표사업
후보군

- 접경 지역 특화 산업 도출의 세 번째 단계로 미시적 분석인 혁신역량 분석을 적용하고자 함
- 분석의 대상은 STEEP PLUS의 거시적 분석으로 4개 특화사업을 선정한 후, 미시적 분석을 통하여 2개의 특화사업으로 최종 도출하고자 함

라. 혁신역량 분석

● 혁신역량 분석 개요

- 미시적 분석으로 혁신역량 분석 틀을 제안함
- 혁신역량은 정책혁신역량, 산업혁신역량 및 지역혁신역량의 분야로 구성되고, 역량항목으로 평화경제체제구축,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7개 역량 항목으로 구성됨

● 혁신역량 분석 구성

- 혁신역량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석됨

분야	역량항목	분석내용
정책혁신 역량	평화경제체제 구축	평화경제체제 정책과 부합도, 평화경제체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
	민관 거버넌스 구축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및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력 주민의 혁신정책 수용성
	공정경쟁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지원사업의 공정성, 지역균형발전에 기여도
산업혁신 역량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접경지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 정부의 신성장산업 부합도
	혁신성장 산업 기반	현재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 미래 경쟁우위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가능성
지역혁신 역량	지역특화 요소 경쟁력	지역보유자원 역량 적합도(입지여건, 도로, 산업기반, 대학/인적자원 등)
	지역혁신 생태계	지식산업 테크노밸리, 산업 클러스터 벤처·중소기업 지원센터 혁신성장 산업 관련 지원 민간·공공기관

- 거시분석에서 선정된 4개 특화 산업에 대해 혁신역량 분석을 실시함
 - 해조류(Red Gold) 사업
 - 꽃게 종자연구/양식장 조성
 - 첨단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
 - 스마트팜 혁신단지

마. 거시분석(STEEP PLUS) Top 4에 대한 혁신역량 분석

- 해조류(Red Gold) 사업(평점 19/21)
- 평점은 상 3점, 중 2점, 하 1점으로 평가하여 합산함

	분야	분석내용	평가		
			상	중	하
지역 혁신 역량	정책 역량	新 평화 경제 체제 기여 가능성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력	○		
		공정 경쟁 및 지역 균형 발전 실현	○		
	산업 역량	혁신 성장 동력 구현 가능성	○		
		분야별 산업 기반 구축 정도		○	
	지역 역량	지역 특화 요소 경쟁력	○		
		지역 인적 자원 활용 가능성		○	

● 꽃게 종자연구/양식장 조성사업(평점 16/21)

- 평점은 상 3점, 중 2점, 하 1점으로 평가하여 합산함

	분야	분석내용	평가		
			상	중	하
지역 혁신 역량	정책 역량	新 평화 경제 체제 기여 가능성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력		○	
		공정 경쟁 및 지역 균형 발전 실현	○		
	산업 역량	혁신 성장 동력 구현 가능성		○	
		분야별 산업 기반 구축 정도		○	
	지역 역량	지역 특화 요소 경쟁력	○		
		지역 인적 자원 활용 가능성		○	

● 스마트팜 혁신단지(평점 15/21)

– 평점은 상 3점, 중 2점, 하 1점으로 평가하여 합산함

	분야	분석내용	평가		
			상	중	하
지역 혁신 역량	정책 역량	新 평화 경제 체제 기여 가능성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력		○	
		공정 경쟁 및 지역 균형 발전 실현		○	
	산업 역량	혁신 성장 동력 구현 가능성	○		
		분야별 산업 기반 구축 정도		○	
	지역 역량	지역 특화 요소 경쟁력		○	
		지역 인적 자원 활용 가능성		○	

● 첨단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평점 18/21)

– 평점은 상 3점, 중 2점, 하 1점으로 평가하여 합산함

	분야	분석내용	평가		
			상	중	하
지역 혁신 역량	정책 역량	新 평화 경제 체제 기여 가능성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력	○		
		공정 경쟁 및 지역 균형 발전 실현	○		
	산업 역량	혁신 성장 동력 구현 가능성		○	
		분야별 산업 기반 구축 정도		○	
	지역 역량	지역 특화 요소 경쟁력	○		
		지역 인적 자원 활용 가능성	○		

바. 스마트 6차산업 3대 대표사업

● 3대 특화사업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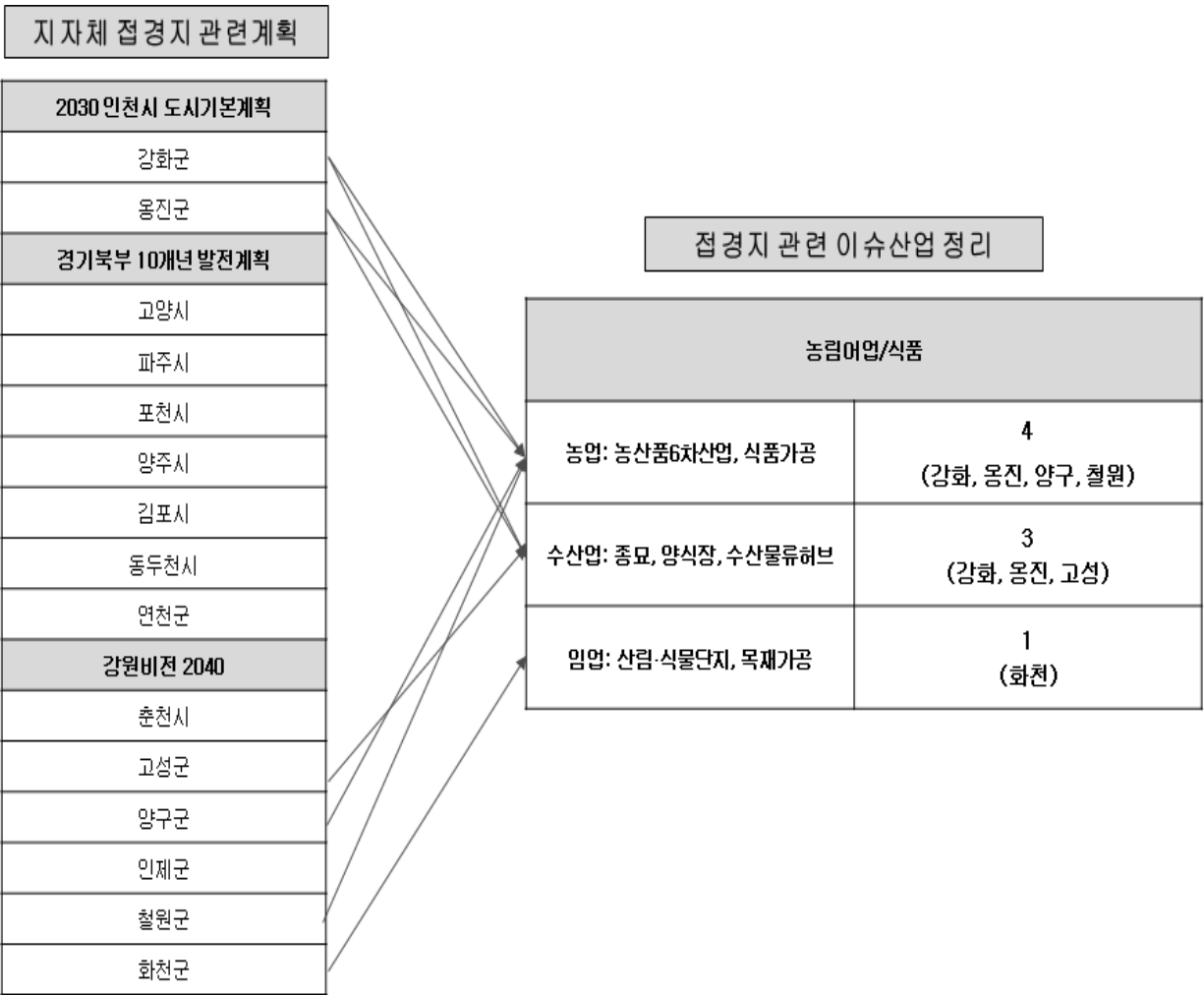
-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에서 적합성을 확보하며 국내 균형 발전 및 남북협력 가능성 높은 사업
- 최종 3개 특화 산업에 대하여 선정이유, 역량 보유 현황 및 지원방안을 정리함

특화 산업 후보	선정이유	역량 보유 현황	지원방안
해조류 (Red Gold)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소재산업 기반 다양한 가공산업 확산 ◦ 남북협력사업으로 국제경쟁력 확보 가능 ◦ 다국적(14개국) 협력체계로 연 구개발준비 ◦ 민산관학연의 혁신적 개발사업 화 가능성 ◦ 가시적 효과, 파급효과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 인적 자원 역량 보유 ◦ 북: 우수한 소재자원 보유 ◦ 남북협력의 시너지 효과 ◦ 글로벌 관심/인적 자원 지원 ◦ 민산관학연 혁신역량 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공동 해양글로벌 프로젝트 ◦ 혁신적 기술플랫폼 구축 ◦ 한반도 해조류 평화 벨트 구축 ◦ 육상공동 양식장 조성 ◦ 가공 산업단지 조성 지원
첨단 친환경 농산물 물류 유통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균형 발전 차원 지역형 친 환경 농업 활성화 필수 ◦ 친환경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 ◦ 단체(군대)를 위한 유통체계 ◦ 북한 최대 관심사 식량에 대한 협력/교류 ◦ 북한 친환경 소재에 대한 연구 필요 ◦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문 축적된 기술/연구 ◦ 북한과 유사한 토양, 기후로 인 한 북한 연구 여건 ◦ 농업부문 접경지 유통거점 역할 ◦ 지역특화 작물 및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물류유통체계 개선 ◦ 먹거리 단체(군납)유통 체계 ◦ 친환경농산물 상시거래 체계 ◦ 남북농산물 교류 지원 지원 ◦ 북한의 유사 단지 조성 지원
스마트팜 혁신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군 GRDP 중 농어업 비중 13.5%(약 1,330억 원) ◦ 인력 문제로 시설농업 접목 및 확대 필요 ◦ 시설재배에 적합한 다양한 특 산물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군의 다양한 농특산물 보 유(16종) ◦ 스마트팜 적합품목: 토마토, 고 추, 오이, 고구마, 인삼, 백도라 지, 순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단지 기반 조성 ◦ 보육/교육: 교육형 실습농장, 경영형 실습농장 ◦ 생산유통: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 APC ◦ 기술혁신: 공공실증구역, 자율 실증구역, 전시체험센터 등

사. 스마트 6차산업 분야의 지역적 배치

● 지자체 관련 계획의 검토

- 접경 지역 지자체의 농림어업식품 관련 계획을 검토하면, 강화군 및 옹진군은 농업과 수산업에 이슈산업이 집중되어 있음
-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는 농림어업/식품 관련 이슈산업이 없음
- 강원도는 고성군 수산업, 양구군 및 철원군 농업, 화천군 임업이 관련 이슈산업으로 정리됨



● 9개 특화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배치(안)

● 접경지 특화사업, ◎ 광역지자체 특화사업, ○ 특화사업 후보군(지자체 특화사업)

특화 산업(대상지 후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강화	옹진	김포	고양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대상지 선정 근거
① 첨단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 - 친환경농산물, 산지 물류 - 시설구축 필요 - 고려대상지: 화천, 양구 • 유기농천국 브랜드 화천 • 친환경농산물 생산 우위 양구 • 군철수지역 활용검토 (화천 27사단, 양구 2사단) - 일반농산물 물류유통단지 • 고려대상지: 김포																- 화천 • 유기농천국 주 대상지역은 간동으로 27사단과 반대 지역임. • 27사단 주변지역 농산물 생산량 많지 않으며, 교통 여건 좋지 않음 - 양구 • 자체 물류유통단지 검토 중 • 친환경농산물생산지 • 2사단 부지 활용 검토시 향후 동서고 속철도와 연계도 가능함 - 김포시 • 농어업 GRDP 약 1,650억 원 • 쌀, 배, 포도 등 농특산물 • 북한교류 협력 연계 유리한 지역 • 향후, 한강하구 호시무역 연계
② 첨단농기계(드론) 클러스터 - 노지농업 대상, 시설구축 필요 - 드론 비행 고도제한 검토 - 군철수지역 활용검토 • 양구 2사단 철수 • 고성 22사단 분산배치 - 고려 대상지: 농업주력산업 • 철원 농어업 GRDP 14.6% • 양구 농어업 GRDP 9.5% • 고성 농어업 GRDP 7.1% • 포천 농어업 GRDP 9.5%																- 철원 • 노지농업 - 양구 • 노지농업 • 2사단 철수 후 헬기(수리온)부대 배치 예정 • 헬기 연계한 드론 클러스터 조성 가능 - 고성 • 노지농업: 쌀 생산면적 • 접경 지역 중 고도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어 드론 적용 유리 - 포천(드론농업클러스터) • 농업GRDP 접경지 중 최대(약 4,500억 원) • 드론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③ 스마트팜 혁신단지 - 시설농업 • 스마트팜혁신밸리조성 도전 - 군철수지역 활용 검토 • 화천 27사단, 양구 2사단 - 고려대상지 • 강원도: 화천, 철원, 양구 화천 농업GRDP 비중 4.9% • 인천시: 강화 농업GRDP 비중 13.5% • 경기도: 양주 양주 농업GRDP 비중 5.3%																- 화천 • 고령화, 농업생산성 저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설농업 접목 필요 • 신산업 차원에서 27사단 철수지역에 스마트팜 조성하는 방법 고려 • 27사단 주둔지역인 사내면의 경우 토마토 주 생산 지역으로 이와 연계해도 가능성이 있음 • 스마트팜의 경우 토마토, 파프리카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강화 • 토지이용현황 중 농경지 비중이 39.2% (접경 지역 중 1위) • GRDP 중 농업 비중 13.5% • 인력 문제로 시설농업 접목 필요 - 양주 • 다양한 농특산물 44종 • 시설농작물(인삼, 토마토, 딸기, 오이, 방울토마토, 시설채소 등)

특화 산업(대상지 후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강화	웅진	김포	고양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대상지 선정 근거
④ 농촌융복합테마공원 - 관광 연계 효과 - 농촌+체험관광 - 고려대상지: 철원, 강화, 웅진, 연천, 파주 등		○	○	○	○	○					◎				●	- 강원/경기/인천 접경 지역 대상 공모사업 방안 검토 - 관광 산업 부문과 연계 - 연천군은 농촌체험체계/관리 우수
⑤ 라이스밸리 조성 - 오대쌀 중심 - 브랜드화 육성 - 고성 22사단 분산배치 - 고려대상지 • 오대쌀: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강화쌀: 강화군																- 철원 • 강원도 쌀, 철원이 대표이미지 • 오대쌀 외에 새로운 브랜드 육성 중 • 오대쌀 강원도 철원이 주 생산지 - 고성 • 쌀 생산량은 많으나 브랜드화에 어려움 겪고 있음 - 강화 • 강화쌀의 지역특산물
⑥ 곤충산업 테마파크/농생명신소재연구소 - 산림지역 - 신산업 접목 - 소외지역 균형 발전(미정) - 고려 대상지: 6개 시·군	○	○	○	○	●	○										- 인제 • 인제군은 산림특화지역으로 육성 중 • 산림과 관련 다양한 사업 구상 중 • 곤충산업 연계는 바람직한 방법
⑦ 가축종자/질병 공동연구소 - 연구인력(산학연) 공급 입지 - 축산업 - 고려대상지: 춘천	●															- 춘천 • 대학 수 5개 (강원도 접경 지역 총 6개 중) • 기업부설연구 193개 • 연구인력 조달에 유리
⑧ 해조류 사업 - Red Gold 연구선점/진행중 - 다시마 종묘/양식장 조성 - 고려대상지: 웅진군								●								- 웅진 우뚝가사리 • 우뚝가사리 주생산지 • 웅진 마합도(북한)간 공동해역종합연구센터 구축 계획 • 우뚝가사리 연구 14개국 MOU체결 - 다시마 종묘/양식장 조성 • 2년생 다시마(슈퍼다시마) 주생산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 남북교류 협력 가능성 높음
⑨ 꽃게 종자연구/생산 시설조성 - 지역적 특성 - 꽃게종자 생산 시설 건립계획 - 고려대상지: 웅진군							○	●								- 웅진 • 꽃게 주 생산지(웅진 서해 5도, 특히 연평어장 전체 10%) • 꽃게 종자생산 시설 건립계획
⑩ 강화-개성 고려인삼 남북협력사업 - 고려대상지: 강화군							●									- 강화 고려인삼 남북교류 체계 조성 - 실적 축적/준비도 기반으로 성공 가능성 제고

※ (참고)국방개혁 2.0 내용: 2개 군단(6개 사단 해체)

- 2, 27, 28 보병사단
- 20, 26, 30 기계화보병사단
- 강원도: 2사단 양구, 27사단 화천, 22사단 분산배치(고성)
- 경기도 20사단 양평, 26사단 양주, 28사단 파주, 30사단 고양

1.4 스마트 6차산업분야 세부사업 추진 방안

가. 첨단 친환경 농산물 물류유통단지

구분	내 용
정 의	◦ 친환경 농산물첨단 물류유통단지 조성하여 유통혁신을 이루며 접경 지역거점 역할 담당
필요성	◦ 최근 친환경 농산물 선호도 급증에 따른 산지중심형물류 유통 체계 구축필요 ◦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비용 절감 및 대단위 저장시설 구축을 통한 수급조절로 시장가격 안정화 필요
목 적	◦ 친환경 농특산물수요 공급 연계로 중심시장 역할 ◦ 군납, 학교급식 등 대량 수요처 발굴·판매 통한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추진 내역	◦ 후보지: 강원도 양구군, 경기도 김포시 ◦ 소요기간/사업비: 4년/300억 원 ◦ 사업 내용 - 물류창고 및 연계 시스템 구축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소분포장, 안전성검사, 전처리실, 공판장 등) - 친환경 농특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공매, 경매를 통한 직거래 활성화) - 강원, 경기권역의 친환경농산물 집적지,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류유통 거점화
추진 전략	◦ 산지 거점형친환경 농산물 물류 유통센터 구축 ◦ 군대 및 학교 등 대량급식소에 안전하고 규격화된 식자재공급 ◦ 도매, 물류, 급식 복합기능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기대 효과	◦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 인프라 기반 구축으로 원가절감을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 ◦ 친환경 농산물 수요 창출 및 확산에 기여, 지역 소득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 향후, 북한 교류의 친환경농산물 유통거점화 및 물류유통시스템의 북한 전수

● 정의

- 친환경 농특산물, 가공식품 등 지역 주요 상품의 첨단 유통단지 조성하여 유통 혁신을 이루고 주변 지역 물류유통 거점 역할 담당하기 위한 단지 조성

● 필요성

- 교통 요충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친환경 농산물 중심으로 대표적인 농축산품을 직판할 수 있는 판매장과 기타 패션, 생활용품 등을 상설·판매하고 관광 및 제반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 및 이용객의 휴식·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 필요
- 최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친환경 농산물을 권장하고, 수급 조절을 통하여 소비자 욕구 충족이 절실함에 따라 첨단 물류유통단지 조성이 필요함
- 또한, 가공식품의 유통을 집결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대단위 저장창고를 구축하여 수급조절

로 시장의 가격변동에 대응하고자 함

● 목적

- 친환경 농특산물 및 주요 농축수임상품의 물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첨단물류유통거점 단지 조성하여 수요와 공급 연계를 원활히 하여 중심시장 역할 담당
- 군납, 학교급식 등 대량 수요처 발굴 및 판매를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및 친환경농가 소득안정
- 첨단유통시스템 구축으로 물류 유통 비용 절감 및 그로 인한 경쟁력 제고

● 위치

- 후보지: 강원도 양구군, 경기도 김포시
 - 양구군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많으며, 현재 양구군에서 물류유통단지조성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준비가 되어있고, 국방개혁 2.0에 의해 보병 2사단 해체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2사단 부지 활용 가능하며, 향후, 개설될 동서고속철도와의 연계로 물류 체계 향상이 기대됨
 - 김포시는 농어업 GRDP가 약 1,650억 원에 이르며, 쌀, 배, 포도 등 농특산물을 기반으로 북한교류 협력 연계에 유리하여 향후, 한강하구 호시무역 연계 가능

● 주요 내용

- 물류 창고 및 연계 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산물 물류창고 구축: 집배송, 선별포장 등
 - 첨단 시스템으로 저온저장고 기능을 갖추고 품목별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출하량 조절 등 부가가치 제고
 - 유통정보 제공, 안전성 관리, 통합물류 등의 기능 수행
- 유통단지, 쇼핑몰 조성
 - 친환경 농특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 통합유통 체계 구축 및 유통정보화 촉진
- 친환경 농산물공판장 조성 및 상시거래 체계 구축: 친환경농산물 물류 중심지화, 강원, 경기 인천권의 친환경농산물 물류 집적지, 수도권으로 향하는 유통 거점화, 공매, 경매 제도 도입 등
- 농특산물 홍보 및 휴식 편의 제공 공간 병행하여 조성

- 소요기간

- 4년(2020~2023)

- 소요 예산

- 총사업비: 대상지별 300억 원

- 주체 및 관리운영

- 연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주체/추진: 해당 시·군
 - 관리운영: 민간 위탁
 - 사업수행: 용역기관

- 단계별 집행 방안

- 절차: 사업구상 및 타당성 검토 → 행정절차 → 마스터플랜 수립 → 건립부지 토지 확보 → 기본 실시 설계 → 사업 추진 → 거버넌스 구축

- 유사사례

-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나주)

- 총사업비: 27,816백만 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기간: 2012~2017년
 - 위치: 전남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942-7 일원
 - 시설규모: 부지 29,987㎡, 연면적 13,644㎡, 지하 1층/지상 2층
 - 주요시설: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선별포장, 업무시설 등



-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 사업비: 480억 원(국비 229, 도비 251)

- 위 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680번지외 1필지
 - 기 간: 2009~2012년(시공 2011.4~2012.8)
 - 규 모: 대지 68,972㎡, 건축연면적 25,927㎡
 - 주요시설: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소분포장, 안전성검사실, 교육장, 식당, 전처리실, 사무실 등
 - 설치근거: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 기능과 역할: 친환경농산물 중앙시장, 수도권 물류기지, 군대, 학교 등 대량급식소에 안전하고 규격화된 식자재 공급
- 경기와 전남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비교

구분	경기	전남
위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680번지	전남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942-7번지
면적	대지 69천㎡, 건축연면적 26천㎡	대지 30천㎡, 건축연면적 14천㎡
규모	지하 1~지상 3층(총 4층)	지하 1~지상 2층(총 3층)
처리가능물량	연간 73천톤	연간 27천 톤
사업 기간	'09~'12(4년간)	'12~'17(6년간)
공사 기간	'11.2~'12.9(19개월) * '12.10월부터 운영	'16.1~'17.8(20개월)
총사업비	480억 원(국비 229, 도비 251)	278억 원(국비 139, 도비 39)
주요 시설	집배송·선별포장(5,228㎡) 저온저장고(32동, 5,123㎡) 냉동창고(1동, 370㎡) 전처리실(929㎡) 안전성검사실(1실, 618㎡) 일반창고(4동, 2,180㎡) 사무공간(6실, 1,400㎡)	집배송·선별포장(2,737㎡) 저온저장고(16동, 1,666㎡) 냉동창고(1동, 92㎡) 전처리실(400㎡) 안전성검사실(1실, 208㎡) 일반창고(2동, 255㎡) 사무공간(9실, 1,633㎡) CA저장고(3동, 338㎡)
입주 법인	신선미세상, 청아랑, 씨니너스, 남농CS, 해밀마루 등 13개소	아이쿱생협, 학사농장, 자연과 농부들, 조이아드, GS 리테일 등

● 연차별 개발 계획

-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판매 관련 정보수집
- 센터 구축 위치 선정
-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구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 중앙 투자심사(200억 원 이상)

- 부지 매입 등 선조치 필요

● 추진 전략

- 전라남도과 경기도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있으므로 강원도 산지거점형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로 구축하고 경기도 일반농산물유통센터 구축
- 학교급식, 군대납품 등 대량수요처 연계 마케팅
- 도매, 물류, 급식 복합기능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친환경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환경 등으로 확대
- 남북교류 협력의 스마트 6차산업 시설로 활용

● 기대 효과

- 물류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
- 친환경농산물 물류 중심지로 농업 물류유통의 거점화
-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득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 관련 사진(사례)



농산물 입하

농산물 하차



소분(소포장)



친환경 학교급식 물량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나. 첨단농기계(드론) 클러스터

구 분	내 용
정 의	◦ 농업부문에 첨단농기계(드론 등) 4IR 접목으로 첨단농기계클러스터 조성
필요성	◦ 인구감소 대비 및 농업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용 드론활용(토양관리, 방제 등)
목 적	◦ 농기계 개발, 생산, 활용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기계산업 활성화
추진 내역	◦ 후보지: 강원도 고성군, 경기도 포천시 ◦ 소요기간/사업비: 4년/300억 원 ◦ 사업 내용 ◦ 첨단농기계 생산 및 연구 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경 지역농업용 드론 및 농업생산 장비 생산기지 조성 및 수출 산업화- 첨단 농업기계 장기 대여 시스템 구축- 농기계 활용 전문 인력 양성, 농업드론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추진 전략	◦ 드론의 지역맞춤형 농업 응용분야 집중 및 특화연구 ◦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산자부) 활용 ◦ 개발 농기계를 지역농업에 테스트베드로 활용
기대 효과	◦ 농기계 관련 연구 및 활용 인력 양성 ◦ 농업기계분야의 세계 경쟁력 강화 및 농업분야 생산성 향상 ◦ 향후, 기술전수에 따른 북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식량문제해결에 일조

● 첨단 농업기계 클러스터 정의

- 첨단농업 클러스터란 농업인력 감소로 인한 지원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및 첨단 농업장비 개발 및 활용 집적지를 말함
- 기본적인 드론장비 R&D, 생산보다 드론의 응용 분야인 한국형(특산물, 지형 맞춤형)드론 응용 및 활용(IT, AI 접목)에 중점을 둠

● 필요성

- 노지농업 평야를 중심으로 인구 감소 대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용 드론(토양 및 농경지 조사, 파종, 살포, 작물 모니터링, 관개, 작물 생육평가, 정찰 드론등)에 3D, IT 및 AI 접목 등 첨단 장비 지원이 절실함
- 4차산업혁명 대응으로 드론농업(특산물 및 지형 맞춤형 드론 개발)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직, 교육 체계 및 설비가 필요함

● 목적

- 농기계 개발/생산의 경쟁력 제고로 농기계산업을 활성화하며, 농업부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농기계산업 글로벌 4강 목표로 수출 산업화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혹은 양구군

- 고성군: 농어업이 군 GRDP의 7.1%를 차지하며, 쌀 생산면적이 넓어 절절한 여건을 갖추고, 특히, 접경 지역 중 고도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어 드론 적용에 유리함, 또한, 분산배치로 예정된 22사단 부지 활용이 가능함
- 양구군: 농업이 군 GRDP의 9.5%를 차지하며, 2사단 철수 후, 헬기(수리온) 부대 배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헬기 연계한 드론 클러스터 구성에 유리함
- 포천시: 농업 GRDP가 접경지 중 최대(약 4,500억 원)이며, 드론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 주요 내용

- 농업용 드론 및 각종 농업생산 장비 생산기지 조성
- 첨단 농업기계 장기대여 시스템 구축
- 농기계 활용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 농기계 수출 산업화

● 기간

– 4년

● 소요예산

– 총사업비: 대상지별 300억 원

● 주체 및 관리운영

- 연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부/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추진: 해당 시·군
- 관리운영: 해당 시·군
- 사업수행: 용역기관

● 단계별 집행 방안

– 절차: 사업구상 및 타당성 검토 → 행정절차 → 마스터플랜 수립 → 건립부지 토지 확보 → 기본 실시 설계 → 사업 추진 → 거버넌스 구축

● 유사사례

-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계획)
 - 지식기반형 미래농업 기술혁신 연구단지(고흥만 30 ha, 400억 원 규모) 조성 계획
 - 영농법인,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연계한 기술혁신 집적단지로 농업생산, 농기계, 농자재, IT 등 전후방 산업 관련 실증연구, 빅데이터 분석, 전시 체험, 신품목 발굴 등 지원
 - 스마트농업, 스마트농기자재, 스마트축산, 스마트 노지 채소 등 미래 스마트팜 모델 제시

● 연차별 개발 계획

- 농기계 생산, 유통, 판매 관련 정보수집
- 센터 구축 위치 선정
- 농기계클러스터 구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 투자심사, 부지 매입
- 마스터플랜 조성 및 실시 설계

● 추진 전략

- 드론의 농업 응용분야 집중 및 특화 연구
- 한국형, 지역형 농업 기계 연구
- 개발 농기자재를 지역 농업에 테스트 베드 활용
- 개발 농업기자재를 지역 농민 단체 대상 장기 임대

● 기대 효과

- 연구단지 내 농기계 관련 연구 및 활용 전문 인력 양성
- 농업기계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농업분야 생산성 향상에 기여

● 관련 사진(사례)



다. 스마트팜 혁신 단지

구 분	내 용
정 의	◦ 전통적인 농업에 ICT, BT, CT, GT 등과 과학기술 융합한 스마트 화를 통해 생산, 유통, 소비 등 농업범위 확장과 부가가치 제고함
필요성	◦ 농업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기술 보급이 시급함
목 적	◦ 첨단농업의 기점으로 스마트팜혁신단지 조성하여, 농업인, 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능 및 역할 구현
추진 내역	◦ 후보지: 강원도 화천군, 인천시 강화군, 경기도 양주시 ◦ 기간/사업비: 4년/300억 원 ◦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 조성(용수 전기 공급시설 등), 청년보육, 생산유통 , 기술혁신, 관광기능 확충 - 국책 지원 사업 활용

구 분	내 용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혁신단지 운영조직 확보 ◦ 관련 연구소 연계 기술혁신, 재배, 판로 기반 가치사슬 연계 ◦ 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 도전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생명산업의수출주도산업화 ◦ 주변지역 확산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 북한 농업과의 연계 사업 추진

● 정의

- 스마트팜은 전통적인 농업에 ICT, BT, CT, GT 등과 과학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화를 통해 생산, 유통, 소비 등 농업의 범위 확장과 부가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추구함

● 필요성

-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의 보급이 시급함
- 국책공모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도전으로 기반 조성, 청년보육, 생산유통, 기술혁신 및 정주 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함

● 목적

- 첨단농업의 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여 농업인, 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업부문의 혁신성장을 이루고자 함

● 위치

- 후보지: 강원도 화천군, 인천시 강화군, 경기도 양주시
 - 시설농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에 도전이 필요하며, 화천군이 바람직함
 - 고령화, 농업생산성 저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설농업 접목 필요
 - 신산업 차원에서 27사단 철수지역에 스마트팜 조성하는 방법 고려
 - 27사단 주둔지역인 사내면의 경우 토마토 주 생산 지역으로 이와 연계해도 가능성이 있으며 스마트팜의 경우 토마토, 파프리카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주요 내용

- 기반 조성: 용수·전기 공급시설, 오폐수·폐식물 처리시설, 부지정지, 도로 등

- 청년보육: 교육형 실습농장, 경영형 실습농장 등
- 생산유통: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APC, 냉난방 시설, 기존 노후시설 스마트화
- 기술혁신: 공공실증구역, 자율실증구역, 전시·체험센터, 지원센터 등
- 정주 환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귀농인의 집, 농촌다움복원사업,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설치,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둘레길 조성

● 기간

- 4년(2019~2022년)

● 소요 예산

- 총사업비: 대상지별 300억 원

● 주체 및 관리운영

- 연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해당 지자체
- 관리운영: 위탁 조직
- 사업수행: 용역기관

● 단계별 집행 방안

- 절차: 사업구상 및 타당성 검토 → 행정절차 → 마스터플랜 수립 → 건립부지 토지 확보 → 기본 실시 설계 → 사업 추진 → 거버넌스 구축

● 유사사례

●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

- 876억 원의 농업분야 역대 최대 규모
- 47.4ha 부지에 각종시설 보성 나노산단과 동반 성장 모델
- 130억 원을 투입해 유리온실 9동, 비닐온실 21동 총 30동으로 구성
- 임대형 스마트팜은 사업비 113억 원을 투입해 유리온실 4동, 비닐온실 9동 총 13동으로 구성
- 청년창업 보육 수료자들에게 적정 임대료로 3~5년간 온실을 임대, 청년에게 재배·경영 역량 향상 및 수익창출·자본축적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

- 실증단지는 217억 원을 투입해 4동의 유리온실로 구성

● 연차별 개발 계획

- 부지확보,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 설계 등
- 임대형 스마트팜 착공, 노후시설 스마트팜 리모델링, 기존 APC시설보완
- 임대형 스마트팜 공사 및 스마트 APC 준공
- 기반 조성: 기반작업, 주차장, 오페수 및 폐식물 처리시설
- 청년보육: 교육형 실습농장, 경영형 실습농장, 지역시설 등
- 임대형 팜: 임대 1구역, 임대 2구역
- 기술혁신: 실증형(A+B) 스마트팜, 실증C형 스마트팜, 지원센터 등
- 생산유통: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스마트 APC,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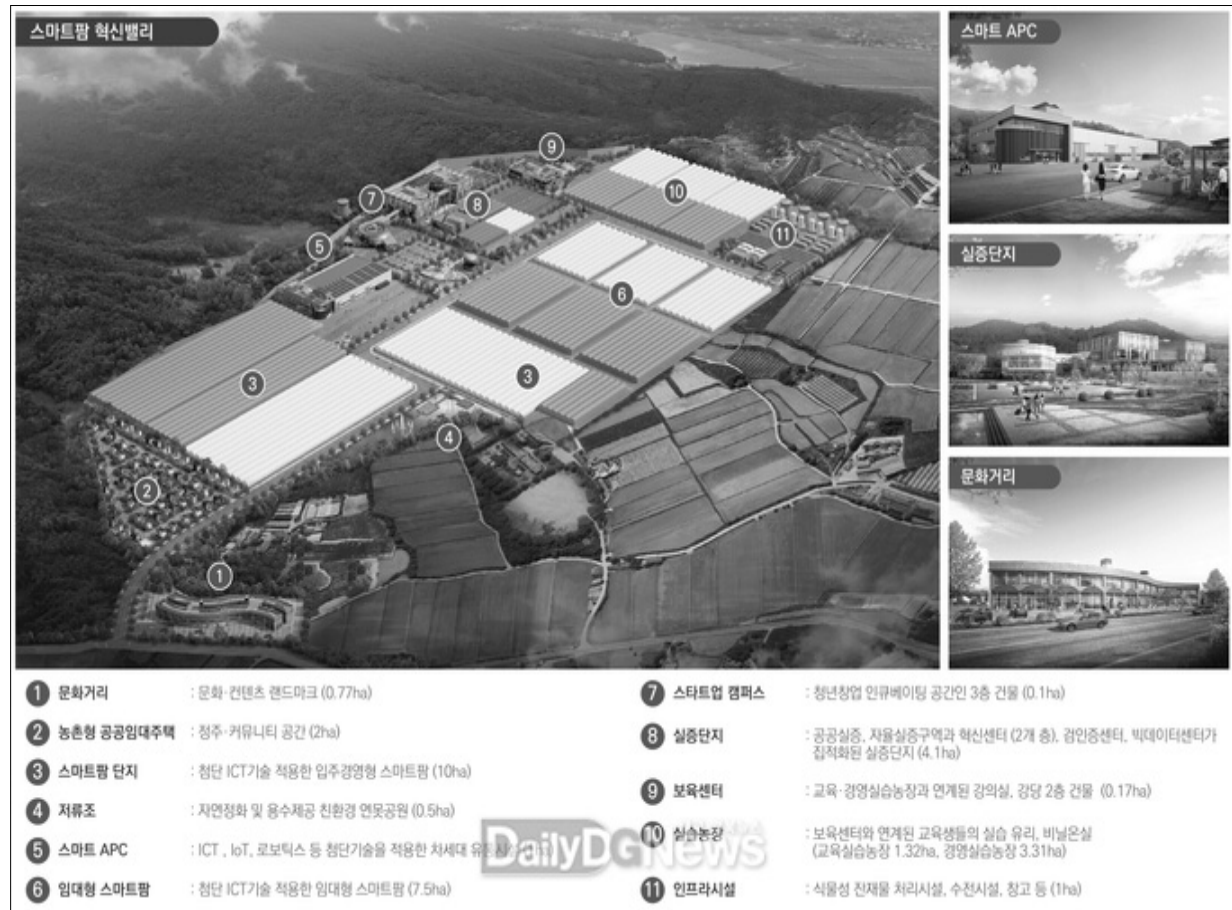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조직 확보(지원 합동본부 및 운영협의회 등)
-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재배-판로기반 가치사슬 연계 지원기관 배치(지방이전 추천 수도권 공공기관 검토)

● 기대 효과

- 사회적 편익
-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
- 인구 유입
- 지역 경제 발전 효과
- 농생명산업의 수출주도산업 개편 효과 기대

● 관련 사진

〈그림 III-4〉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례



※ 자료: 상주의 소리 2018.08.03.

라. 농촌 융복합산업 테마공원

구분	내용
정의	◦ 생산지(텃밭 임대), 식품가공, 건강기능식품, 체험, 관광 등 농업 관련 융복합적인 테마공원(6차산업화 단지) 조성
필요성	◦ 농업농촌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6차산업화 등 다양한 영역의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집중과 선택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 귀촌인구 수용을 위한 구농단지조성의 일환으로 활용 가능
목적	◦ 농촌 및 농업 테마의 6차산업융복합화공원 조성
추진 내역	◦ 후보지: 경기도 연천군 ◦ 기간/사업비: 4년/300억 원 ◦ 사업 내용 - 농특산물생산 및 식품 1차 가공 기반 구축 - 농촌 및 농업 테마공간 및 융복합귀농단지 조성 - 농업농촌 주제의 힐링 관광 단지 조성

구 분	내 용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컬푸드가공센터 구축 및 향토 식품의 우수성 홍보 지역특산물 관련 다양한 공방 조성 및 민간운영체제 구축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 제고의 농업농촌 소득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접경 지역 농업의 체험관광 자원화

● 정의

- 생산지(텃밭 임대), 식품가공, 건강기능식품, 체험, 관광 등 농업 관련 융복합적인 테마공원 조성(6차산업화 단지)

● 필요성

- 농업 농촌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6차산업화 등 다양한 영역의 분야로 확대함으로 집중과 선택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필요
-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 추세이므로 이를 수용하기 위한 귀농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 목적

- 농촌 및 농업 테마를 중심으로 생산, 가공, 체험, 관광 등 망라한 집적 단지 조성하여 상호 연계성 강화 및 6차산업 융복합화
- 경관 및 휴양이 어우러진 단지 내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판매, 체험을 할 수 있는 융복합 귀농단지 조성하여 인구 및 산업 인력 유입
- 위치
 - 강원도/경기도 접경 지역 대상 공모사업으로 추진
 - 관광부문 연계 효과 고려하여 선정
 - 농촌체험관광 체계/관리가 잘되어 있는 경기도 연천군 추천함

● 주요 내용

- 농촌 및 농업 테마 공간 조성, 융복합 귀농단지 조성
- 축제와 체험 관광을 연결하여 쌀 축제의 세계 중심지화
- 농업 농촌 주제로 살기 좋고 건강해지는 힐링 관광단지 조성

- 농특산물 생산 및 식품 1차 가공 기반 구축
- 구례의 자연드림 파크, 장수의 누리파크 참조하되 보다 쌀 전시관, 박물관 등 폭넓은 영역으로 조성

● 기간

- 4년

● 소요 예산

- 총사업비: 300억 원

● 주체 및 관리운영

- 연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주체/추진: 해당 시·군
- 관리운영: 민간 위탁
- 사업수행: 용역기관

● 단계별 집행 방안

- 절차: 사업구상 및 타당성 검토 → 행정절차 → 마스터플랜 수립 → 건립부지 토지 확보 → 기본 실시 설계 → 사업 추진 → 거버넌스 구축

● 유사사례

- 구례 자연드림파크: 아이쿱자연드림이 괴산, 구례에 자연드림파크 조성

〈그림 Ⅲ-5〉 구례 자연드림파크



※ 자료: 구례자연드림파크

〈그림 Ⅲ-6〉 자연드림 친환경 채소단지



※ 자료: 구례자연드림파크

• 완주 로컬푸드 가공센터 사례

〈그림 III-7〉 완주로컬푸드 가공센터



● 연차별 개발 계획

- 특화작물 중심의 농특산물 생산, 유통, 판매 관련 정보수집
- 파크 구축 위치 선정
- 테마파크 구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 중앙 투자심사
- 부지 매입

● 추진 전략

- 축제와 연계하여 기반 구축
- 기업과 연계하여 식자재 및 1차 가공식품 조달 및 연계 마케팅
- 로컬푸드 가공센터 구축
- 생산, 가공, 체험, 관광 등 복합기능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향토 식품의 우수성 홍보

● 기대 효과

- 부가가치 제고의 농업 농촌 소득 창출
- 농업 기반 문화와 역사를 통한 중요성 인식 제고
- 비교우위를 활용한 관광 자산 구축 및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

마. 라이스밸리 조성

구 분	내 용
정 의	◦ 지역 내 다양한 농업자원, 생산, 쌀식품가공제조업, 쌀가공연구소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쌀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단지 조성
필요성	◦ 오대쌀에 대한 수요창출 및 소비 진작으로 초과공급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새로운 수요창출에 집중화할 필요 있음 ◦ 쌀 가공품의 다양화필요(음료, 과자, 국수, 라면, 전통주, 스낵, 씨리얼, 즉석밥, 쌀 죽, 냉동밥 등)
목 적	◦ 쌀 생산 중심으로 연관 산업에 집중하여 밸리를 조성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함
추진 내역	◦ 후보지: 강원도 철원, 인천시 강화군 ◦ 기간/사업비: 4년/300억 원 ◦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중심의 융복합산업화 - 웰빙쌀가공식품의 명품화(전통식품의 현대화, 쌀 가공식품의 다양화) -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오대쌀 및 강화섬쌀 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 전략	◦ 쌀문명관련 역사문화관구축 및 메카 조성 ◦ 쌀 가공식품 관련 국책 공모사업 적극 활용 ◦ 생산, 가공, 체험, 관광 등 복합기능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기대 효과	◦ 지역 농민 소득증진에 기여 ◦ 첨단기법 도입을 통한 쌀 생산성 향상 및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 향상

● 정의

- 라이스밸리란 지역 내의 다양한 농업자원, 쌀식품 가공제조업, 쌀가공식품연구소 등을 유지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한 라이스 관련 네트워크 연계망 구축을 의미함

● 필요성

- 지역브랜드(예: 오대쌀)에 대한 수요창출 및 소비 진작으로 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새로운 수요창출로 집중화할 필요 있음

- 쌀 농업 관련 전후방위 산업의 활성화 및 상호 연계성을 제고하여 관련 분야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 있음
- 쌀 가공품의 다양화(쌀 음료, 쌀 과자, 쌀국수, 쌀라면, 전통주, 누룽지, 쌀 스낵, 쌀 씨리얼, 즉석 밥, 냉동 밥, 쌀죽 등)

● 목적

- 쌀 생산 중심으로 연관 산업을 집중하여 밸리를 조성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위치

- 강원도 철원
 - ‘강원도 쌀’하면 철원이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브랜드화 육성에 유리, 즉, 오대쌀은 철원이 주 생산지이며, 오대쌀 이외에도 새로운 브랜드 육성 중
- 인천 강화섬쌀은 대표적인 지역특산물로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 주요 내용

- 쌀 중심 농촌융복합산업화: 쌀 생산, 가공, 연구, 체험, 관광의 복합적인 단지 조성
- 웰빙쌀가공식품의 명품화: 전통식품의 현대화, 쌀 가공식품의 다양화
-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오대쌀 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전략 수립

● 소요 기간

- 4년(2020~2023)

● 소요 예산

- 총사업비: 300억 원

● 주체 및 관리운영

- 연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주체/추진: 해당 시·군
- 관리운영: 민간위탁
- 사업수행: 용역기관

● 단계별 집행 방안

- 절차: 사업구상 및 타당성 검토 → 행정절차 → 마스터플랜 수립 → 건립부지 토지 확보 → 기본 실시 설계 → 사업 추진 → 거버넌스 구축

● 유사사례

● 이천농업테마공원

- 설립배경: 도시민에게 농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와 이천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위치: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84
- 면적: 150,460m²
- 주요 시설: 쌀문화전시관, 체험용 경작지, 다랭이논, 쌀먹거리, 숲체험존, 약용식물원, 이천 쌀식품명품관, 농식품 홍보판매관, 농촌의 아름다운 사계를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 교육

● 연차별 개발 계획

- 쌀 생산, 유통, 판매 관련 정보수집
- 라이스밸리 구축 위치 선정
- 테마파크 구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 쌀가공식품 연구소 건립
- 부지 매입
- 단지 조성

● 추진 전략

- 쌀문명 관련 역사문화관 구축 및 쌀의 메카 조성
- 한반도 쌀문화 발생지로서 역사 문화적 재조명 등으로 확대
- 한국식품연구원 연계 쌀 가공식품 관련 국책 공모사업 적극 활용
- 대규모 쌀농사 지역 포함하여 테스트베드 활용(스마트팜)
- 쌀 가공단지 구축
- 생산, 가공, 체험, 관광 등 복합기능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오대쌀 브랜드 우수성 홍보

● 기대 효과

- 쌀 문화중심지의 이미지 제고
- 쌀 생산 및 가공의 메카로 조성하여 지역 농민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첨단기법 도입을 통한 쌀 생산성 향상 및 쌀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 향상

● 관련 사진(사례)



바. 곤충산업 테마파크 및 연구단지

구 분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곤충의 체계적인 사육 및 식품산업화를 위한 단지 조성으로 초기에는 가축 및 반려동물 사료로 활용하여 곤충에 대한 인식전환 및 교육적 측면의 체험 단지 조성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화를 꾀하고자 함 ◦ 농생명 소재로서의 곤충산업 연구 개발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먹거리, 경제성 및 다양한 영양과 기능을 갖춘 식용곤충의 산업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 곤충에 대한 인식전환 및 교육적 측면 체험의 장 필요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곤충 사육, 가축 및 반려동물 사료 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미래 산업 선점 ◦ 미래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곤충식품산업 기반 구축 ◦ 주변 관광자원 연계 집약화된 곤충테마파크 조성으로 체험의 장 마련
추진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지: 강원도 인제군 ◦ 기간/사업비: 5년/300억 원(곤충산업 테마파크 100, 농생명신소재연구소 200) ◦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충활용 기능성프리미엄 국산사료 개발로 농업 5대융합프로젝트 반려동물산업 육성 - 곤충생태체험관, 박물관, 가공실, 체험쿠킹 스튜디오 등 조성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사업과 연계 ◦ 곤충사육관련 농가 창업 활성화, 연구단지 조성, 테마파크조성 등 상호연계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 동력산업분야 개발, 곤충 사육 및 가공 메카 조성 ◦ 곤충관광의 미래, 곤충을 이용한 교육, 체험 및 쉼터 등 체험관광 기회 제공

1) 농생명신소재연구소

● 정의

- 식용곤충의 체계적인 사육 및 식품산업화를 위한 단지조성으로 초기에는 반려동물용 고단백 사료로 활용하고자 단지를 구성함

● 필요성

- 국내 사료시장 10조 원, 곤충사료시장 1천억 원(2018년)으로 양 시장은 급성장 하고 있으며, 미래의 먹거리 및 다양한 영양과 기능을 갖춘 식용곤충의 양육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발굴
- 식용곤충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람 먹거리 일반화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반려동물용 사료 생산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곤충의 풍부한 영양학적 가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고른 영양소, 비타민과 무기질 다량 함유한 고급영양
- 경제성: 10kg 사료 투입당 산출량은 소 1kg, 돼지 3kg, 닭 5kg, 곤충 9kg, 건조한 가루 단위 당 단백질 양은 곤충 19~22%, 생선 18.1%, 소 14.97%, 돼지 15.03%
- 국내 사료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수입대체 산업화
- 곤충산업의 경제적 가치: 2019년 1,570억 원, 2015년 2,980억 원 추정(한국농촌경제연구소)

● 목적

- 식용 곤충의 사육과 곤충을 활용한 가축 및 반려동물 사료 생산 시스템 구축
- 집약화된 반려동물 사료 생산 단지 조성으로 미래산업의 선점화
- 미래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사람을 위한 곤충식품산업의 기반 구축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 인제군은 산림특화지역으로 육성 중이며 산림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
- 곤충산업과 산림과의 연계는 바람직함

● 주요 내용

- 곤충을 활용한 기능성 프리미엄 국산사료 개발로 농업 5대 융복합프로젝트인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기여

-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연계 개발(현재 식용곤충은 7종류, 향후 증가 전망)
- 농업 5대 융복합프로젝트인 곤충 이용식품 및 의약소재 개발 추진

● 소요 기간

- 3년(2020~2022)

● 소요 예산

- 총사업비: 200억 원

● 주체 및 관리운영

- 연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부
- 사업 추진: 해당 지자체
- 관리 운영: 연구기관 조직
- 사업 수행: 용역기관

● 단계별 집행 방안

- 절차: 사업구상 및 타당성 검토 → 행정절차 → 마스터플랜 수립 → 건립부지 토지 확보 → 기본 실시 설계 → 사업 추진 → 거버넌스 구축

● 유사사례

+ 미동산 수목원 내 애완곤충생태원

- 위치: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0
- 면적: 94만 평
- 주요시설:
 - 수목산야초 전시원
 - 무궁화통일동산
 - 애완곤충생태원
 - 조성면적: 132 m²(40평)
 - 사육수종
 - 나비류: 호랑나비, 배추흰나비, 큰흰줄나비
 - 갑충류: 장수풍뎅이
 - 식재수종: 15종 1,500본

- 기주식물
- 탕자나무, 산초나무, 굴나무: 호랑나비
- 쥐방울 덩쿨: 긴꼬리제비나비
- 배추, 케일: 배추흰나비
- 흡밀식물: 조팝나무, 라일락, 철쭉, 구절초 등
- 갑충류: 부숙 참나무 톱밥

+ (사)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 위치: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하대리 594
- 면적: 72,727㎡
- 주요시설:
 - 멸종위기종 애기뿔소뿔구리 실험실
 - 멸종위기종 물장군 실험실
 - UFO Butterfly House
 - 애벌레 실험실
 - 박물관

구분	미동산 수목원 내 애완곤충생태원	(사)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위치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0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하대리 594
면적	94만 평	72,727㎡
주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목산야초 전시원◦ 무궁화통일동산◦ 애완곤충생태원◦ 조성면적: 132 ㎡(40평)◦ 사육수종<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비류: 호랑나비, 배추흰나비, 큰흰줄나비- 갑충류: 장수풍뎅이◦ 식재수종: 15종 1,500본<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주식물 탕자나무, 산초나무, 굴나무: 호랑나비 쥐방울 덩쿨: 긴꼬리제비나비 배추, 케일: 배추흰나비- 흡밀식물: 조팝나무, 라일락, 철쭉, 구절초 등- 갑충류: 부숙 참나무 톱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종위기종 애기뿔소뿔구리 실험실◦ 멸종위기종 물장군 실험실◦ UFO Butterfly House◦ 애벌레 실험실◦ 박물관

● 연차별 개발 계획

- 분야별 관련 정보수집
- 산업단지 구축 위치 선정

-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 곤충산업 연구소 건립
- 부지 매입
- 단지 조성
- 입주기업 유치활동

●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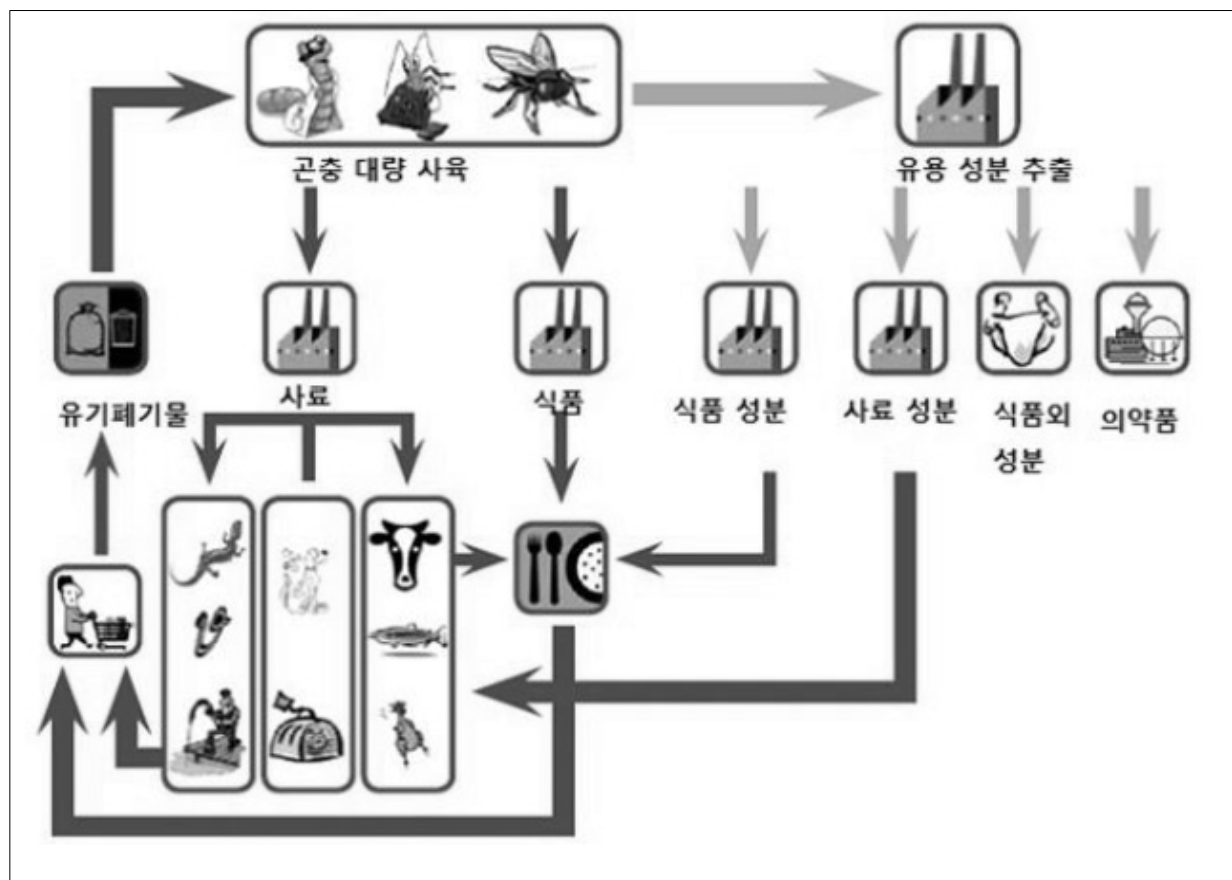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의 곤충산업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국비사업 유치
- 곤충사육 관련 농가 창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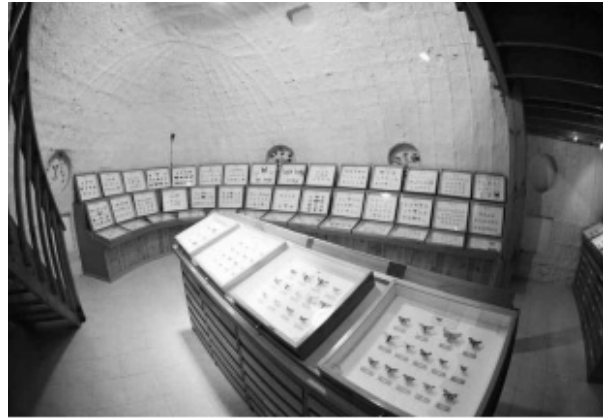
● 기대 효과

- 신성장 동력산업분야 개발: 사료산업의 미래, 곤충을 이용한 동물 사료화
- 곤충 생산 및 가공의 메카로 조성하여 농민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진 자료(사례)

- 곤충사육 순환 체계





※ 자료: 농촌진흥청

2) 곤충체험 테마파크

● 정의

- 다양한 곤충을 테마로 한 곤충체험 테마파크 조성

● 필요성

- 도시민에게 차별화된 “탈 일상의 공간”과 테마화 된 가족 단위의 “쾌적한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정서 함양

- 곤충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교육적 측면 체험의 장 마련

● 목적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를 고려한 농촌, 전원 특성에 맞는 규모 있는 종합적인 체험 시설물 설치
- 집약화된 곤충테마파크 조성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곤충 활용 반려동물 사료단지와 연계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 곤충산업 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조성

● 주요 내용

- 곤충생태체험관, 본관(박물관, 전시관), 유리온실, 연구실, 가공실(밀웜건조분말 가공), 체험 쿠킹 스튜디오, 동물농장, 캠핑장, 영상실 등

● 소요 기간

- 4년(2021~2024)

● 소요 예산

- 총사업비: 100억 원

● 주체 및 관리운영

- 연관 부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주체/추진: 해당 지자체
- 관리운영: 해당 지자체 혹은 민간위탁
- 사업수행: 용역기관

● 단계별 집행 방안

- 절차: 사업구상 및 타당성 검토 → 행정절차 → 마스터플랜 수립 → 건립부지 토지 확보 → 기본 실시 설계 → 사업 추진 → 거버넌스 구축

● 유사사례

● 서울대곤충관

- 위치: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 면적: 전체면적 총 2,358m²(713평),
950m²(약 288평, 지상 2층/지하1층)
- 주요시설:
 - 곤충체험관 1,022m²(309평)
 - 곤충생태관 371m²(113평)
 - 곤충생태원 965m²(291평)
 - 연중행사인 가을 동물 대축제시 길거리 곤충 페스티벌 진행
- 특징
 - 수도권 내 위치 접근성이 좋음
 - 오랫동안 수서곤충 등 일부만을 운영하다가 1999년 5월부터 곤충교실을 개장
 - 그 뒤 육상곤충으로 벼메뚜기 외 9종과 수서곤충으로 장구애비 외 9종 등 사육
 - 2003년 100평 규모의 대형 유리 나비하우스를 완공하여 풍동원리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유리온실형 나비하우스
 - 전문 인력으로는 곤충전공자 1명과 보조 인력 약간

● 한국잠사박물관

- 위치: 충북 청원군 강내면(1995년 개관)
- 면적: 부지면적은 1,310m²
- 주요시설
 - 지상 2층의 본관동과 체험장이 있으며 대한 잠사 회잡업진흥원 내에 설치
 - 농경문화관과 잠삼미래관, 역사문화관, 체험학습장(실크하우스)의 전시실과 체험실을 가지고 있으며, 민속품 78점, 누에표본 700점을 소장
 - 2010년 ‘누에나라공화국’이라는 대행사에 위탁 운영
- 특징:
 - 잠사문화박물관으로 개관
 - 2004년에 한국잠사박물관으로 개칭
 - 누에나라공화국에서는 박물관 입장료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눈썰매장, 세계희귀파충류전 등 각종 수익사업으로 연간 3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10만 명으로 늘어나고, ‘누에나라 오디축제’를 개최해 1만 5천 명 정도가 관람하는 등 지역의 인기축제로 성장

구분	서울대곤충관	한국잠사박물관
위치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충북 청원군 강내면(1995년 개관)
면적	전체면적 총 2,358m ² (713평), 950m ² (약 288평, 지상2층/지하1층)	부지면적은 1,310m ²

구분	서울대곤충관	한국잠사박물관
주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충체험관 1022㎡(309평) ◦ 곤충생태관 371㎡(113평) ◦ 곤충생태원 965㎡(291평) ◦ 연중행사인 가을 동물 대축제시 길거리 곤충 페스티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 2층의 본관동과 체험장이 있으며 대한 잠사회잡업진흥원 내 설치 ◦ 농경문화관과 잠상미래관, 역사문화관, 체험학습장(실크하우스)의 전시실과 체험실을 가지고 있으며, 민속품 78점, 누에표본 700점을 소장 ◦ 2010년 ‘누에나라공화국’이라는 대행사에 위탁 운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내 위치 접근성이 좋음 ◦ 오랫동안 수서 곤충 등 일부만을 운영하다가 1999년 5월부터 곤충 교실을 개장 ◦ 그 뒤 육상 곤충으로 벼 메뚜기 외 9종과 수서 곤충으로 장구애비 외 9종 등 사육 ◦ 2003년 100평 규모의 대형 유리 나비하우스를 완공하여 풍동원리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유리온실형 나비하우스 ◦ 전문 인력으로는 곤충전공자 1명과 보조인력 약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사문화박물관으로 개관 ◦ 2004년에 한국잠사박물관으로 개칭 ◦ 누에나라공화국에서는 박물관 입장료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눈썰매장, 세계희귀파충류전 등 각종 수익사업으로 연간 3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10만 명으로 늘어나고, ‘누에나라 오디축제’를 개최해 1만 5천 명 정도가 관람하는 등 지역의 인기축제로 성장

● 연차별 개발 계획

- 곤충 사육 농가 현황 및 소비자 설문조사
- 지자체의 기존 추진 사업 검토 및 분석
- 곤충 산업 육성 및 테마파크 조성 계획 수립
- 부지 확보
- 테마파크 조성

●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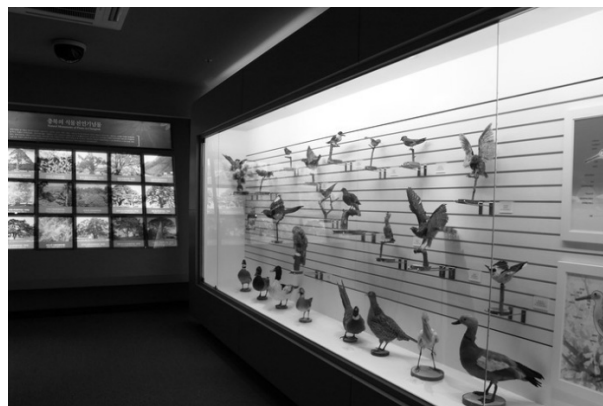
- 곤충 산업 연구 단지와 연계 검토
- 반려동물 식품으로 시작하여 시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
- 소비자 인식 제고 노력
- 창업 활성화 지원

● 기대 효과

- 곤충 관광의 미래, 곤충을 이용한 교육 및 체험, 쉼터 등 기회 제공

- 곤충 테마파크 메카로 조성하여 지역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 발전에 기여
- 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테마파크 운영 관리를 위한 직접 고용 효과
 - 테마파크 조성 및 연관 사업에 따른 간접 고용 효과
- 관광객 수 증가
- 지역 경제 파급효과
 - 관광 소득 효과 및 지역 투자에 대한 승수 효과

● 사진 자료(사례)



사. 가축 종자/질병 공동 연구소

구 분	내 용
정 의	◦ 한반도 가축 질병 발생 및 확산으로부터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교류 연구와 근본적인 가축 종자 개량을 위한 연구 사업 추진
필요성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질병 발생과 확산에서 남북 간 협력에 의한 공동 대응이 절실함 ◦ 기후 등 환경에 따른 가축 종자 개량에서 남북한 공동 연구가 필요
목 적	◦ 매년 발생하는 가축 질병에 대한 남북 공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축 종자에 대한 종자 개량 및 다양성 확보
추진 내역	◦ 후보지: 강원도 춘천시 ◦ 기간/사업비: 4년/300억 원 ◦ 사업 내용 - 가축 품종 개량 및 다양한 종자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사업 -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한 공동대응 사업 추진
추진 전략	◦ 민간차원의 연구 기술 교류 권장 ◦ 가축종자연구소 조성 및 가축 품종 개량을 위한 연구 지원 및 다양성 확보
기대 효과	◦ 남북교류확산의 논리적 편익 제공 ◦ 가축질병으로부터의 손실 감소 및 최소화

● 정의

- 가축 질병 연구 사업 및 질병에 관한 남북 공동 연구 및 교류 사업과 가축 종자 개량 및 우수 종자 지속 보존을 위한 연구 사업 추진

● 필요성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질병 발생과 확산에서 남북 간 협력에 의한 공동 대응이 절실함
- 기후 등 환경에 따른 가축 종자 개량에서 남북한 공동 연구가 필요함

● 목적

- 가축 품종 개량 연구로 우세한 종자 확보 및 국내 종자 주권 확보
- 매년 발생하는 가축 질병에 대한 남북 공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축 종자에 대한 종자 개량 및 다양성 확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 연구인력(산학연) 공급 입지 양호
 - 강원도 접경 지역 총 6개 대학 중, 춘천시에 5개 대학이 위치함
 - 춘천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193개 등 연구 기능 공급 및 연구 인력 조달에 유리함

● 주요 내용

- 가축 품종 개량 및 다양한 종자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사업
- 가축 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한 공동 대응 사업 추진

● 기간

- 3~4년

● 소요 예산

- 총사업비: 300억 원

● 주체 및 관리 운영

- 연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부
- 사업주체/추진: 지자체
- 관리운영: 지역 대학 혹은 연구기관 설립
- 사업수행: 용역 기관

● 단계별 집행 방안

- 절차: 사업 구상 및 타당성 검토 → 행정 절차 → 마스터플랜 수립 → 건립 부지 토지 확보 및 설비 확보 → 기본 실시 설계 → 사업 추진 → 거버넌스 구축

● 연차별 개발 계획

- 사업 구상 및 타당성 검토
- 마스터플랜 구축
- 혁신 추진 체계 구축(민-산-관-학-연)

- 가축종자/질병연구소 건립

● 추진 전략

- 가축 품종 개량 및 다양한 종자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 가축종자 연구소 조성 및 가축 품종 개량을 위한 연구 지원 및 다양성 확보

● 기대 효과

- 점경 지역 축산 농가들의 신소득사업 개발 및 소득 증대
- 가축 질병으로부터의 손실 감소 및 최소화
- 관련 사업 세계 시장 주도를 통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
-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남북한 교류 및 평화 분위기 구축

● 사진 자료(사례)



아. RED GOLD 사업

구 분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해양바이오협력기술기반의 한반도 해조류 평화 벨트사업으로 옹진-마합도 간 공동해양종합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AI/IoT접목한 스마트 친환경 조류육상양식장 구축 및 육상 스마트팜 평화관 광 산업 구축 ◦ 우뚝가사리(Red Gold)와 다시마 관련 연구 및 생산 시설 조성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로코 생산량 감축에 의한 전 세계 우뚝가사리 가격급등 현상 ◦ 옹진군과 북한 마합도 사이에 해조류 평화 벨트 구축하여 우뚝가사리 공동 양식으로 세계 시장 수 요 대응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차원 산업 기술 교류를 통한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접경 지역 신산업발굴 및 지역소득 향상 방안 마련
추진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지: 인천시 옹진군 ◦ 기간/사업비: Red Gold 5년/400억 원, 다시마 4년/150억 원 ◦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뚝가사리 공동 양식으로 세계 시장 수요에 대응 - 한천, Agar Rose 외 다른 기능성 물질 추출하여 의약품, 치매개선제, 화장품, 식품, 숯, 활성탄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로 활용 - 슈퍼 다시마(2년산) 종묘 및 생산 시설(스마트 친환경 양식자) 조성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뚝가사리 한천 시작으로 남북 공동해양자원 활용 블루이코노미 영역 확대 전략 ◦ 옹진군 우뚝가사리 육상 공동 양식시설 구축, 겐트대글로벌마린연구소 구축 ◦ 해조류 기술기반으로 다시마 종묘 연구 및 전국에 종묘 공급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 지역어민의 신소득사업개발 및 소득 증대 ◦ 남북 동동 해양자원 활용한 블루이코노미 실현 ◦ 관련사업 세계 시장 주도를 통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

● 정의

- 남북 해양 바이오 협력기술 기반의 한반도 해조류 평화 벨트 사업으로 남북 최초 옹진
 - 마합도 간 공동해양종합연구센터를 설립하고 AI/IoT 접목한 스마트 친환경 조류육상양식장 구축 및 육상 스마트팜 평화 관광 산업 구축
 - 우뚝가사리(Red Gold)와 다시마 관련 연구 및 생산 시설 조성

● 필요성 및 SWOT 분석

- 현재 해조류 관련 사업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6조원(FAO)이며 이 중 우뚝가사리 한천 시장은 연 2,550억 원 규모로 연간 5.1% 이상 증가 추세

- 모로코에서 자국자원보호를 위한 우뭇가사리 생산량 감축 선언으로 전 세계 우뭇가사리 가격 급등(‘Red Gold’로 호칭)
-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북한 마합도 사이에 해조류 평화 벨트를 구축, 우뭇가사리를 공동 양식하여 세계 시장 수요에 대응
- 민간차원의 남북협력 추진 중으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14개국 MOU체결, 남북공동 학술조사 제안
 - 남북공동 학술조사 제안
- 접경 지역 취약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가능한 사업
- 우뭇가사리, 한천의 중요성으로 독점적 위치 확보 가능한 영역
 - 건강기능식품, 미생물 배양 원료, 치매치료제, 화장품, 숯 활성탄 등
- 인천 백령도 부근 냉수대(Cold Pool)로써 국내 유일의 2년산 다시마 서식에 적합
- SWOT 분석 → 대응 전략 → 추진 전략 → 비전체계 수립 → 세부 사업 개발 → 소요예산

● 목적

- 민간 차원의 산업기술 교류를 통한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촉매 역할
- 접경 지역 신산업 발굴 및 지역 소득 향상 방안 마련

● 위치

- 해조류 육상양식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 글로벌마린연구소: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 동쪽 부지(6,600m²)

●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북한 마합도 사이에 해조류 평화 벨트를 구축, 우뭇가사리를 공동 양식하여 세계 시장 수요에 대응
 - 남북 최초 옹진-마합도 간 공동해역종합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 민간 차원의 학술 및 산업기술 교류를 통한 장기적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 인천시 접경 지역 신산업 발굴 및 지역(어민)소득개발 방안 마련
 - 세계 최초 AI/IoT를 접목한 스마트 친환경 조류육상양식장 구축 및 육상 스마트팜 평화관광 산업 구축
 - 신산업 육성 13대 혁신성장 동력 맞춤형 고부가가치 핵심 기술 및 산업 기반기술 강화

- 한천 외 다른 기능성 물질도 추출하여 의약품(치매개선제), 화장품, 식품, 술, 활성탄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로 활용
- 산학연관 연계 활성화를 통한 기업 지원

● 기간

- 5년(2020~2024)

● 소요 예산

- 총사업비: 550억 원(Red Gold 400억 원, 다시마 150억 원)

● 주체 및 관리 운영

- 연관부처: 해양수산부/과학기술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사업주체/추진: 지역대학/민간학술단체/지자체
- 관리운영: 지역 대학 혹은 연구기관 설립
- 사업수행: 용역 기관

● 단계별 집행 방안

● 추진 로드맵

- 산업 육성 로드맵, 남북 교류 로드맵 병행
- 사업 추진 로드맵: 사업 구상 및 타당성 검토 → 투자 심사 → 건립 부지 토지 매입 → 기본 실시 설계

● 거버넌스 구축

- 혁신역량 구축: 대학/연구단체(R&D, 소재개발) + 주민(육상양식, 대량생산) + 산업체(소재산업, 가공산업, 관광 산업) + 정부/지원기관(정책적 지원)

● 연차별 개발 계획

- 산업 육성 로드맵: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용
- 남북교류 로드맵: 남북평화 벨트 구축 사업 추진

● 추진 전략

- 우뚝사거리 및 다시마를 시작으로 남북 공동해양자원 활용 블루이코노미 영역 확대 전략
- 북한 수용성 검토 및 유연한 전략
- 법규/규제사항 검토 및 특화 산업 연계 검토
- 웅진군에 우뚝가사리 육상 공동 양식시설 구축, 슈퍼 다시마 종묘 및 생상시설 조성 및 겐트대에 해조류 글로벌마린연구소 구축
- 남북 단독 협력보다 다국 간 공동 연구 및 개발로 위험도를 낮추며, 대외 파급효과를 극대화함
- 방어전략: 우뚝가사리 양식 포맷 조성으로 웅진군 지역 경제 활성화
- 확산전략: 웅진-마합도 공동협력을 통한 남북 경제 교류 협력 촉매 역할

● 기대 효과

- 접경 지역 어민들의 신소득사업 개발 및 소득 증대
- 지역적 환경을 활용한 글로벌 비교우위 산업화
- 남북 공동 해양자원 활용한 블루이코노미 실현
- 관련사업 세계 시장 주도를 통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
-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남북한 교류 및 평화분위기 구축

● 사진 자료(사례)



자. 꽃게 종자 연구

구 분	내 용
정 의	◦ 꽃게 주산지에 종자 연구 및 생산 시설을 조성하고 종자 보급체계 강화를 통한 꽃게 자원 회복 및 활성화 사업
필요성	◦ 수산업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최근의 어족 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주민 소득 확보 지원 ◦ 수산업 종자 연구로 남북 교류 협력에 일조 가능
목 적	◦ 지역의 주요 생업인 꽃게 어획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꽃게 연구소 및 꽃게 종자 생산 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하고자 함
추진 내역	◦ 후보지: 인천시 옹진군 ◦ 기간/사업비: 3년/150억 원 ◦ 사업 내용 - 꽃게 연구소 설치 및 연구기능(전문 인력 확보 등) 확충 - 꽃게 종자 생산 시설 조성 및 꽃게 양식 체계 확산
추진 전략	◦ 꽃게 주산지에 종자 연구 및 양식 시설 집중 ◦ 환경적 요인 변화에 대응하는 종자 보급체계 강화
기대 효과	◦ 서해안 꽃게 자원 회복에 따른 어업인 소득 증대 ◦ 꽃게 양식에 따른 생산량 상향평준화로 가격 변동 폭 감소 효과 ◦ 북한과의 연계 협력 및 교류의 테마 발굴 및 실현을 통한 상생 효과

● 정의

- 꽃게 주산지에 종자 연구 및 생산 시설을 조성하고 종자 보급체계 강화를 통한 꽃게 자원 회복 사업

● 필요성

- 수산업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최근의 어족 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주민 소득 확보 지원
- 수산업 종자 연구로 남북 교류 협력에 일조 가능

● 목적

- 지역의 주요 생업인 꽃게 어획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꽃게 연구소 및 꽃게 종자 생산 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하고자 함

● 위치

- 용진군 연평도 일대

● 주요 내용

- 꽃게 연구소 설치 및 연구기능(전문 인력 확보 등) 확충
- 꽃게 종자 생산 시설 조성 및 꽃게 양식 체계 확산

● 기간

- 3년(2020~2022)

● 소요 예산

- 총사업비: 150억 원

● 주체 및 관리 운영

- 연관부처: 해양수산부/과학기술부
- 사업주체/추진: 지자체
- 관리운영: 지역 대학 혹은 연구기관 설립
- 사업수행: 용역 기관

● 단계별 집행 방안

- 절차: 사업 구상 및 타당성 검토 → 행정 절차 → 마스터플랜 수립 → 건립 부지 토지 확보
→ 기본 실시 설계 → 사업 추진 → 거버넌스 구축

● 유사사례

- 전남 영광 꽃게, 백합 양식장 조성

● 연차별 개발 계획

- 꽃게 연구소 설치
- 전문 인력 확보
- 꽃게 양식장 조성

– 남북평화 벨트 구축사업 추진

● 추진 전략

- 꽃게 주산지에 종자 연구 및 양식 시설 집중
- 환경적 요인 변화에 대응하는 종자 보급체계 강화

● 기대 효과

- 서해안 꽃게 자원 회복에 따른 접경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
- 북한과의 연계 협력 및 교류의 테마 발굴 및 실현을 통한 상생 효과
- 남북 공동 해양 자원 활용한 블루이코노미 실현
-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남북한 교류 및 평화분위기 구축

● 사진 자료(사례)



차. 강화-개성 고려인삼 남북교류 협력사업

구 분	내 용
정 의	◦ 인삼 주산지인 강화와 개성의 고려인삼 공동 남북교류사업
필요성	◦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 및 파급효과를 위하여 상징적인 고려인삼의 강화-개성 간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옴 ◦ 강화군에서는 대북교류 협력 창구를 마련하고 체계를 갖추
목 적	◦ 고려인삼의 주산지인 강화와 개성이 공동브랜드를 구축하여 대외 판로확대 및 생산체계 구축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하고자 함
추진 내역	◦ 후보지: 강화군 ◦ 기간/사업비: 4년/100억 원 ◦ 사업 내용 - 강화-개성 고려인삼 연구개발, 공동 브랜드 구축 및 홍보 - 고려인삼 생산 시설 조성, 물류유통, 홍보 마케팅 및 판로 확대
추진 전략	◦ 강화-개성 공동 브랜드 홍보과정으로 남북 교류 협력 강화 ◦ 해외수출 활성화
기대 효과	◦ 인삼에 대한 대외 우수성 전파 ◦ 북한과의 연계 협력 및 교류의 상징으로 수출 산업 활성화

1.5 지방 이전 추천 대상의 수도권 공공 기관

◇ 서울 지역 공공기관(95곳)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
 대한체육회 △동북아역사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사회보장정보원 △세종학당재단 △시청자미디어
 어재단 △식품안전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예금보험공사
 △예술경영지원센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정부법무공단 △중소기업유통
 센터 △중소기업은행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통일연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의료
 기기안전정보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
 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
 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
 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
 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
 어촌어항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
 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
 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한식진흥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협회



◇ 경기 지역 공공기관(18곳)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
 술기획평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
 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인천 지역 공공기관(3곳)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공공기관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2층(여의도동, CCmm빌딩)								
연락처	TEL 02-3775-6700 Fax: 02-780-4725(2층), 02-3775-6795(1층, 정책보험), 02-3775-6779(3층, 모태펀드)								
규모 (조직/예산/ 종사인원)	<div><div><div>이사회</div><div>원장</div><div>전문위원</div><div>검사역</div><div><div>경영기획실</div><div>정책보험본부</div><div>정책자금관리실</div><div>투자운용본부</div><div>리스크관리부</div><div><div>보험기획부</div><div>보험1부</div><div>보험2부</div><div>기금관리부</div><div>투자기획부</div><div>투자심사부</div></div></div></div><div><div> 해당본부 및 부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div></div><div><div> 원장실</div></div><table><tr><th>담당업무</th><th>이름</th><th>직위</th><th>전화번호</th></tr><tr><td>기관장</td><td>김윤종</td><td>원장</td><td>02) 3775-6701</td></tr></table></div>	담당업무	이름	직위	전화번호	기관장	김윤종	원장	02) 3775-6701
담당업무	이름	직위	전화번호						
기관장	김윤종	원장	02) 3775-6701						
기능 (주요 업무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 수산 식품 모태펀드(FAFF fund of funds)<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 수산 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 수산 식품 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조성하는 투자펀드시스템으로, 농어업경영체, 식품사업자 등 농림 수산 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 수산 식품투자조합 또는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 기구에 출자하는 방식의 Fund of Funds◦ 농식품전문 클라우드펀딩<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이 중개업자 투자전용관 홈페이지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함◦ 농업재해보험<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기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축사) 피해 시 보험을 통해 그 피해를 보전받								

음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

- 정부는 농가의 보험 가입 활성화 및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 농작물재해보험: 순보험료 40~60%, 운영비 100%
- 가축재해보험: 영업보험료(순보험료, 운영비)의 50%

◦ 손해평가사

- 손해평가사 의미: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신설되는 국가 자격인 국가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
- 손해평가사의 직무 분야: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농업재해보험의 손해 평가를 하기 위해 피해 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 밖의 손해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
- 자격의 취득: 손해 평가사 자격 시험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거대 자연재해에 대비한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입니다.

◦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 농·수·산림조합 등 대출 기관을 통하여 농림어업인 등에게 지원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관리되도록 검사하여 정책 사업이 그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지원

◦ 농특회계 융자금 관리

- 정부의 특별회계 중 하나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약칭이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 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나. 식품안전정보원

공공기관명

주소

연락처

식품안전정보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5층

02-744-8200, nfsi@foodinfo.or.kr

규모
(조직/예산/
종사 인원)

원장

기획경영본부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1399-건강기능식품이상사
례정보부

식품이력사업본부

제도운영부

현장지원부

정보화사업본부

정보서비스부

정보시스템부

정책연구본부

법·규제연구부

식품안전연구부

원장실

- 권지현

- 연락처:02-744-7802

- 이메일

이메일발송

조직도보기

Q

구분	성명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
원장	정윤희	식품안전정보원 업무 총괄	02-744-8203	<div><div></div></div>
연구원	권지현	기관장 수행, 총무	02-744-7802	<div><div></div></div>

기능
(주요 업무
소개)

◦ 정보수집·분석·제공

① 최신 정보 수집

② 식품안전정보DB(FOODINFO DB) 운영

◦ 신고 센터

① 불량 식품 통합 신고 센터 운영

② 불량 식품 신고 정보 분류 및 통계 분석 실시

◦ 식품 이력추적관리

① 식품 이력추적관리설명회(교육) 개최

② 산업체 현장기술지원

③ 신속 대응지원 서비스(콜센터) 1588-2605

④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홍보

⑤ 식품 이력 관리시스템(www.tfood.go.kr) 운영

◦ 정보화 사업

- ① 데이터 품질관리 및 식품안전 정책 수립 지원
- ②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지원
- ③ 정보 콘텐츠 제작 및 위해정보 등 맞춤형 정보 제공
- ④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정보 포털)’ 홍보
- ⑤ 식품 등 생산실적 통계 구축

◦ 식품안전정책연구

- ① 식품안전 법제 개선 연구
- ② 식품과학기술 정책 연구
- ③ 식품안전 규제정책 연구
- ④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식품 위험 사전예측 포착시스템 발전 방안 연구
- 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지원 연구
- ⑥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고도화 체계구축
- ⑦ 식품안전나라 국민 인지도 향상 방안 연구
- ⑧ 식품분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지원
- ⑨ 국내외 식품정책 학술대회 개최

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공공기관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소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4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22																					
연락처	대표전화: 061-338-9700 팩스: 061-338-9739	대표전화: 031-425-6400																					
규모 (조직/예산/ 종사인원)	<div><div><div>이사회</div><div>원장</div><div><div>감사</div><div>감사실</div></div><div>파견및휴직</div></div><div><div>전략기획본부</div><div>사업관리본부</div><div>경영지원본부</div><div>GSP운영지원센터</div></div><div><div>전략기획실 성과확산실 홍보협력실</div><div>사업기획실 농생명사업실 식품사업실 첨단·가축질병팀 수출·사업화팀</div><div>경영기획실 경영지원실 공간디자인실 열린혁신팀 정보보안팀</div><div>GSP성과확산실 GSP사업운영실</div></div><div><div>* 조직도를 클릭하시면 직원이 조회됩니다.</div><div>· Total 106 건 · 검색결과 104 건</div></div></div>																						
	<table><tr><th>부서명</th><th>직위</th><th>이름</th><th>전화번호</th><th>담당업무</th></tr><tr><td>원장</td><td>원장</td><td>오경태</td><td>061-338-9704</td><td>-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업무총괄</td></tr><tr><td>전략기획본부</td><td>본부장</td><td>신완식</td><td>061-338-9710</td><td>- 전략기획본부 총괄</td></tr><tr><td>사업관리본부</td><td>본부장</td><td>이동권</td><td>061-338-9750</td><td>-사업관리본부 업무 총괄</td></tr></table>			부서명	직위	이름	전화번호	담당업무	원장	원장	오경태	061-338-9704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업무총괄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신완식	061-338-9710	- 전략기획본부 총괄	사업관리본부	본부장	이동권	061-338-9750	-사업관리본부 업무 총괄
	부서명	직위	이름	전화번호	담당업무																		
원장	원장	오경태	061-338-9704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업무총괄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신완식	061-338-9710	- 전략기획본부 총괄																			
사업관리본부	본부장	이동권	061-338-9750	-사업관리본부 업무 총괄																			
기능 (주요 업무 소개)	<div>◦ 사업소개</div> <div><div>- 농생명 산업기술개바</div><div>- 농축산물 안전생산 유통관리기술개발</div><div>- 첨단생산기술개발</div><div>- 농축산 자재산업화기술개발</div><div>- 수출전략기술개발</div><div>- 농림 축산식품연구센터 지원</div><div>- 고부가가치 식품 기술개발</div><div>- 기술사업화지원</div><div>- 농식품연구성과 후속 지원</div><div>-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div><div>- 포스트게놈다부처 유전체 사업</div><div>-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div><div>- Golden seed 프로젝트</div></div>																						

2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분야

2.1 개요

가. 배경

- 접경 지역은 수도권에 근접한 지리적 여건의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산업 정책 추진이 미흡함
- 접경 지역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은 주로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섬유, 가구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주로 경기 북부 접경 지역 지자체별로 산업단지 조성 및 클러스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접경 지역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경제교류의 전초기지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경 지역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분야 특화 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분야의 접경 지역 미래 특화 산업을 도출하고,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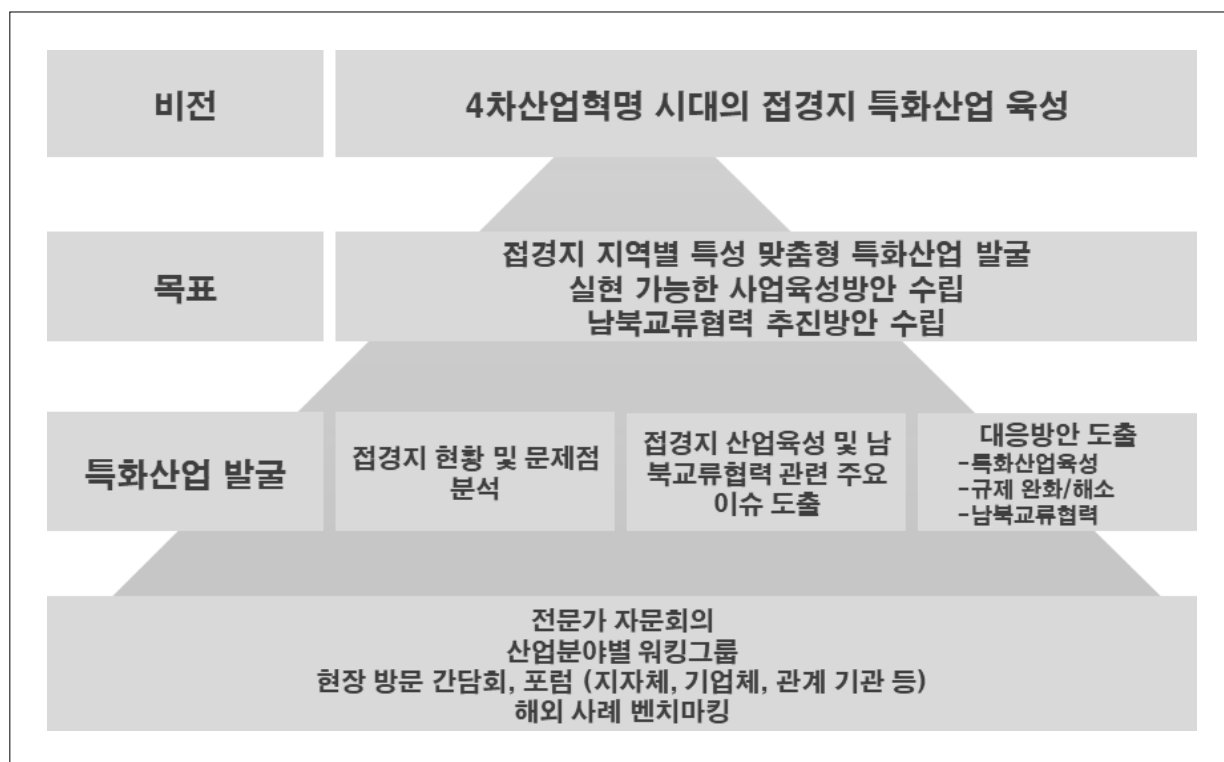
나. 분석대상

-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산업의 범위는 섬유·패션, 농산물 가공식품을 제외한 제조업 전체와 정보통신산업 가운데 출판, 방송영상 분야, 그리고 4차산업, 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함
- 정보통신산업으로 분류되는 출판, 영상 분야까지 포함하며, 본고에서는 ‘콘텐츠산업’으로 분류

다. 특화 산업 후보(안) 도출 방법

-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특화 산업 비전/목표와 특화 산업 도출 프로세스
 -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접경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설정
 -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는 ① 접경 지역 지역별 특성 맞춤형 특화 산업 발굴, ② 실현 가능한 사업육성방안 수립, ③ 남북교류 협력 추진 방안 수립 등으로 설정
 -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특화 산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발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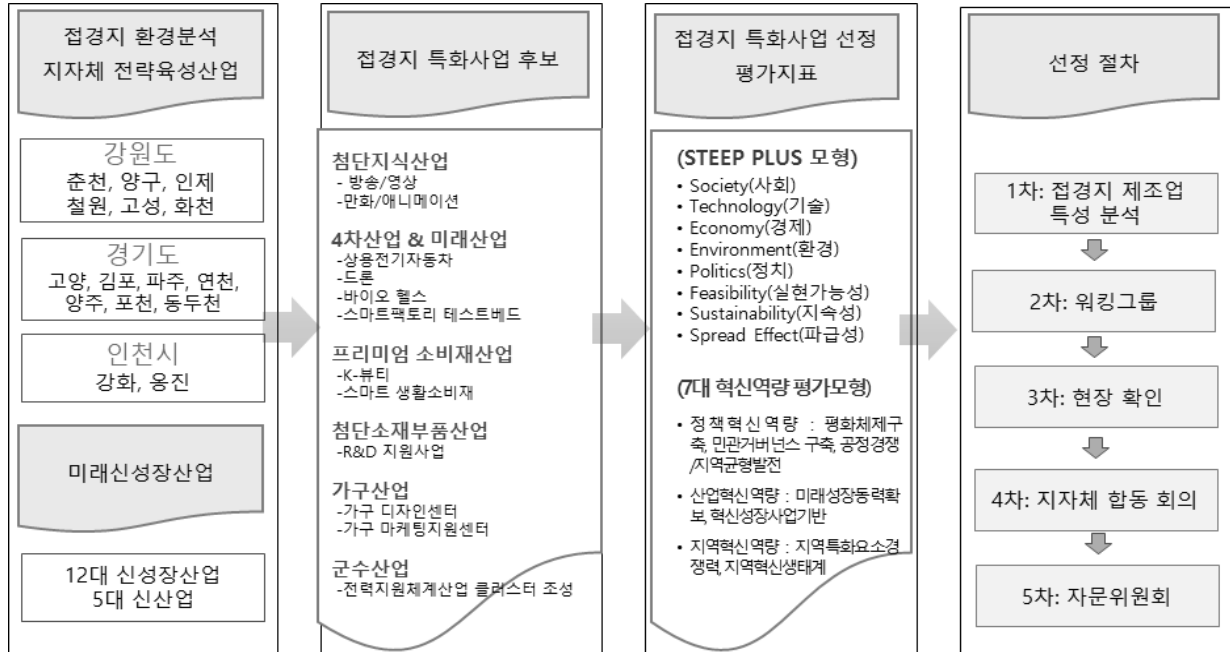
- 접경 지역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접경 지역산업육성 및 남북교류 협력 관련 주요 이슈 도출
- 주요 이슈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특화 산업육성, 규제 완화/해소 및 남북교류 협력방안을 수립



●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특화 산업 후보(안) 도출 및 선정 프로세스

- 접경 지역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특화 산업 후보(안)는 접경 지역 제조업 환경분석, 지자체 전략육성산업, 미래신성장산업 등을 기반으로 현장 수요,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하여 후보를 도출하고, STEEP PLUS 평가모형 및 7대 혁신역량평가 모형을 통해 최종 선정함

〈그림 III-8〉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특화 산업 후보(안) 도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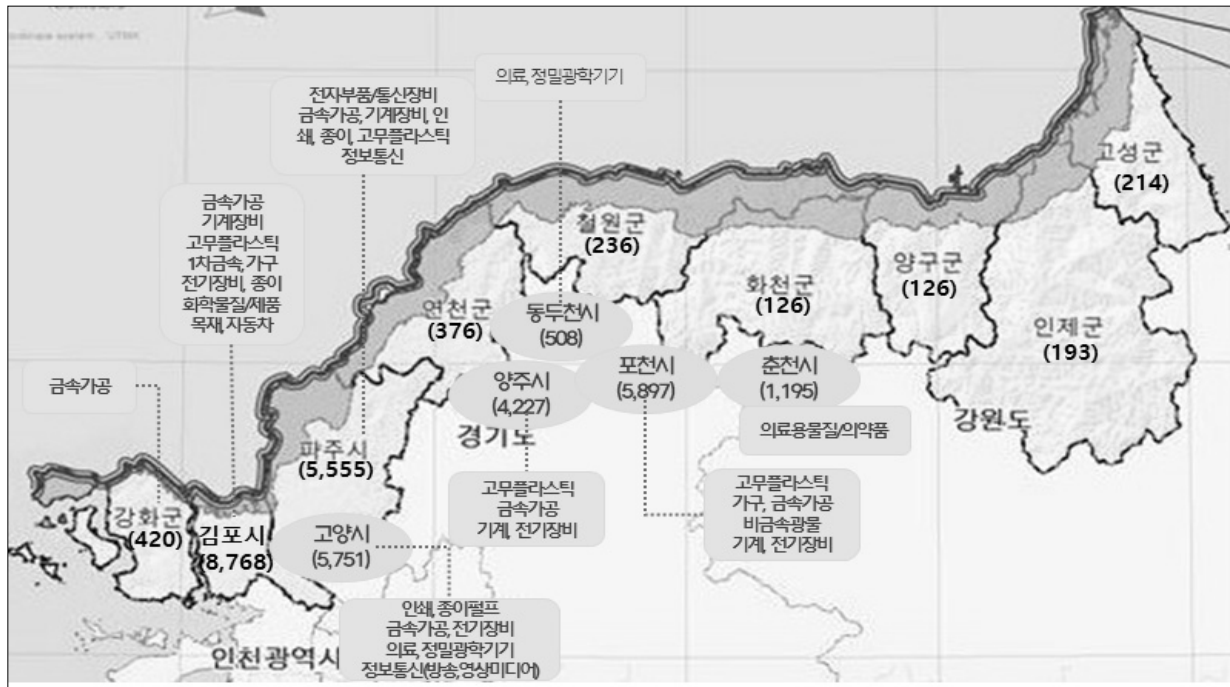


2.2 접경 지역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특화 산업 후보(안)

가. 접경 지역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기반 분석

- 접경 지역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은 주로 김포, 파주, 고양, 포천, 양주 등 5개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음
 -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전자부품, 고무플라스틱, 기계장비, 가구, 전기장비, 인쇄, 종이 산업이 식품/섬유/의복/신발을 제외한 제조업 전체의 78.2% 비중 차지(종사자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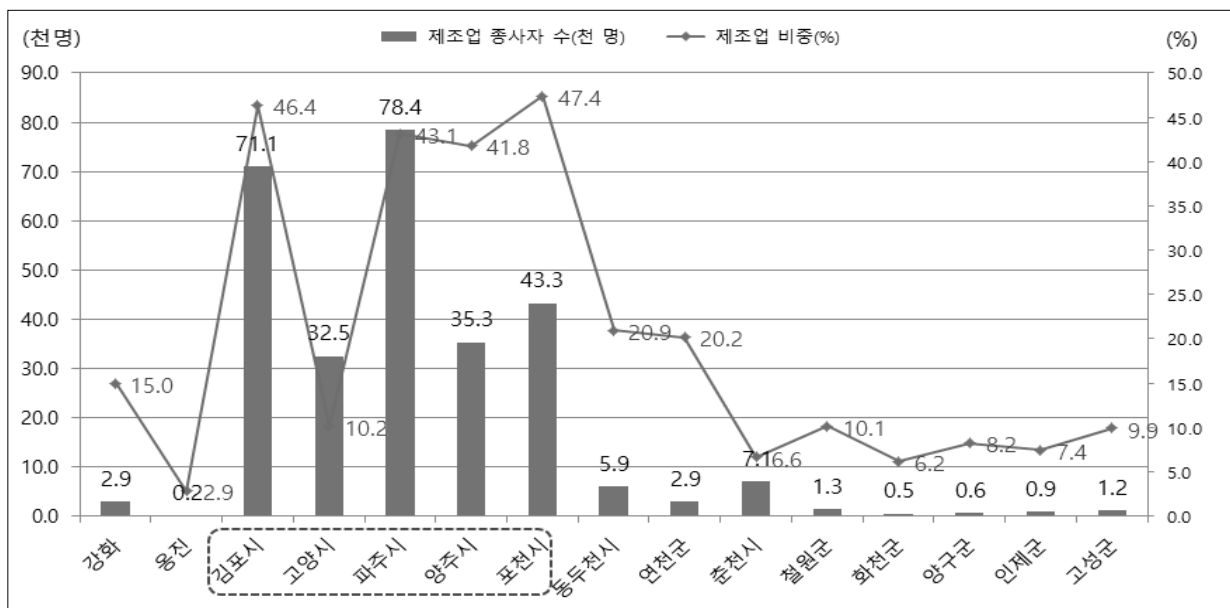
〈그림 III-9〉 접경 지역 제조업 분포



※ 주: 2017년 말 기준
자료: 통계청

- 접경 지역 지역별 제조업 비중은 김포, 파주, 양주, 포천이 40% 이상이며, 동두천(20.2%), 고양시(10.2%)가 뒤를 잇고 있음
 - 고양시는 제조업 비중은 10.2%로 낮으나, 제조업 종사자 수는 32,500명에 이르고 있음

〈그림 III-10〉 접경 지역 제조업 종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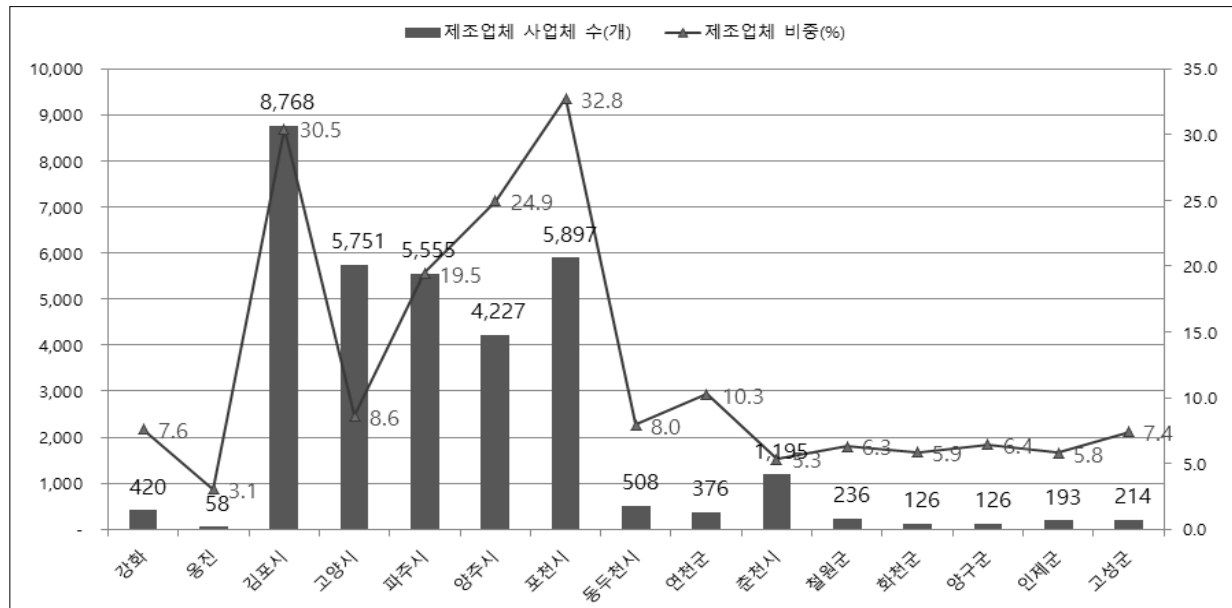


※ 주: 2017년 말 기준
자료: 통계청

- 접경 지역 제조업 사업체 수는 총 33,650개이며, 이 가운데 92.4%가 경기도 접경 지역에 분포

- 김포(8,768개), 포천(5,897개), 고양(5,751), 파주(5,555), 양주(4,227개), 춘천(1,195개), 동두천(508개), 강화(420개), 연천(376개), 철원(236개), 고성(214개) 순
- 사업체 중 제조업 비중은 포천(32.8%), 김포(30.5%), 양주(24.9%), 파주(19.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제조업 비중이 10% 수준 이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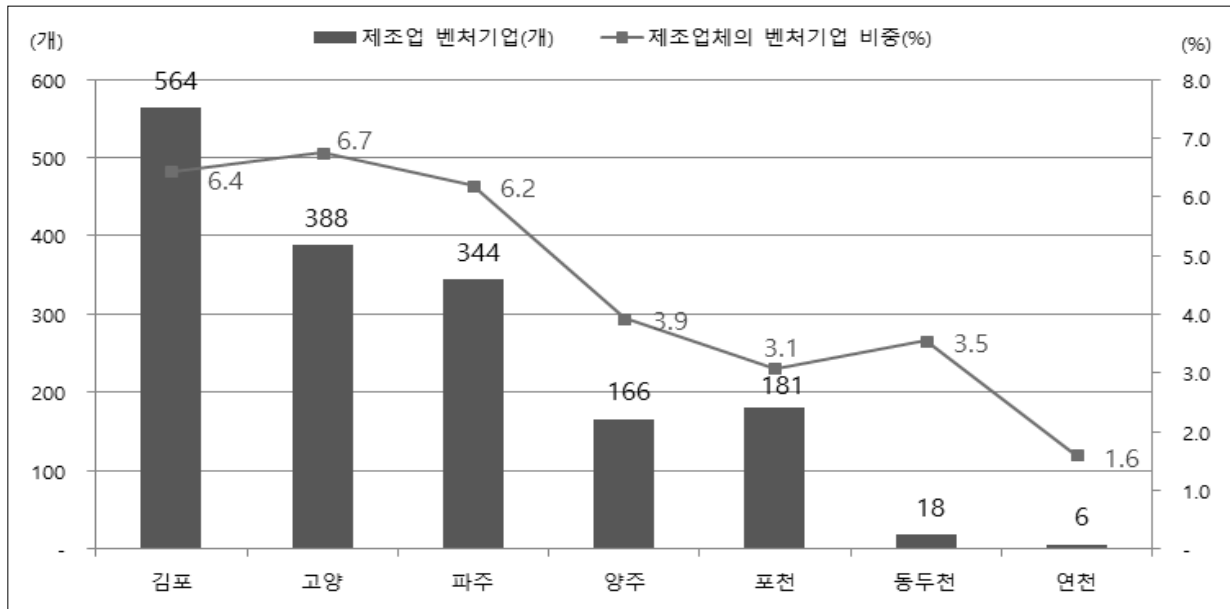
〈그림 III-11〉 접경 지역 제조업 사업체 현황



※ 주: 2017년 말 기준
자료: 통계청

- 경기도 접경 지역 제조업 벤처기업은 1,667개사로 제조업체의 5.4% 비중(경기도 전체 평균 6.96%)
 - 김포, 고양, 파주 등 3개 지역에 경기 접경 지역 벤처기업의 77.8%가 집중되어 있음
 - 양주, 포천은 제조업체 벤처기업 인증 비중이 위 3개 지역에 비해 크게 낮은 편
 - 양주, 포천 지역에 비해 김포, 고양, 파주지역에 첨단기술제품 관련 업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양주, 포천지역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제품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벤처집적시설(지식재산센터)은 고양시에 5개소가 있음

〈그림 III-12〉 경기도 접경 지역 제조업 벤처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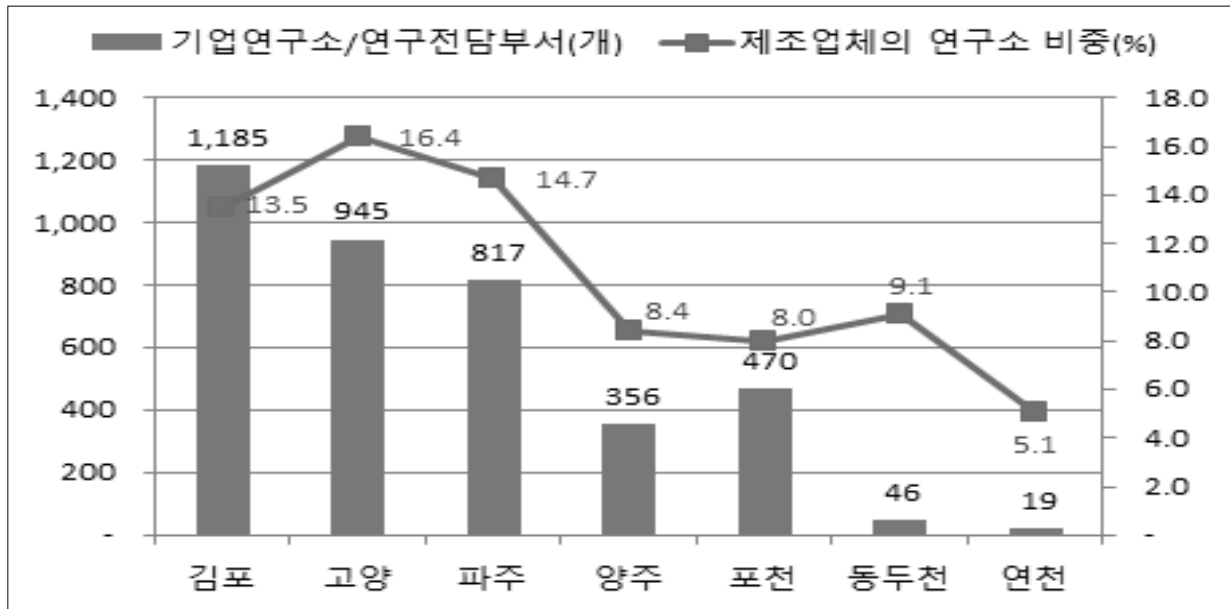


※ 주: 2017년 말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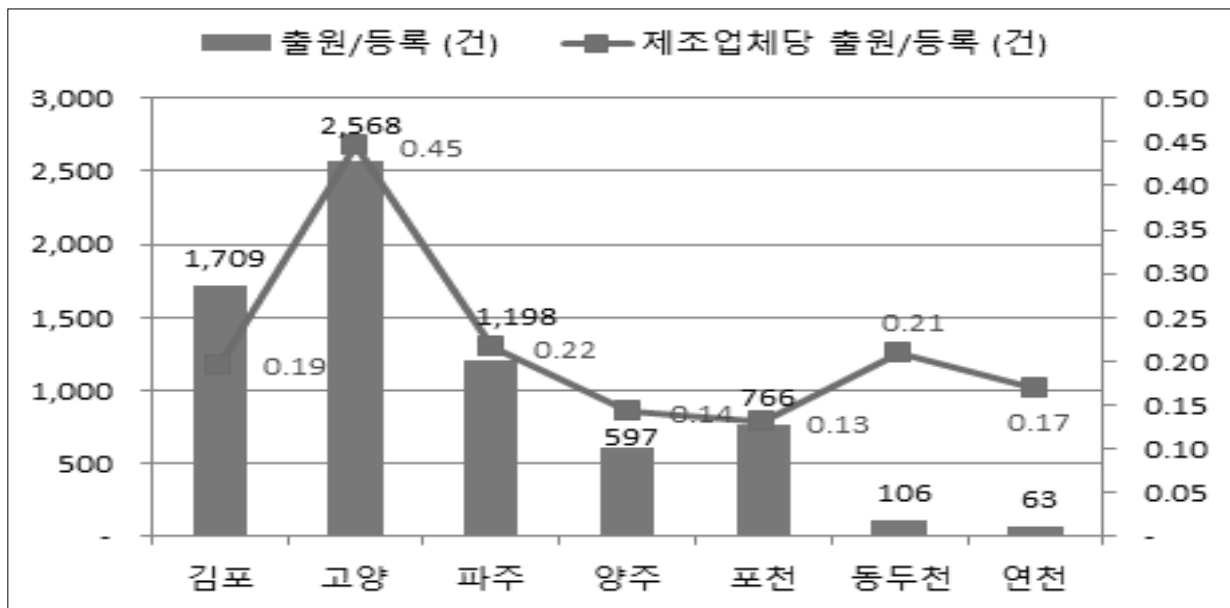
- 경기도 접경 지역 제조업체의 12.4%(3,838개)가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가지고 있음(경기도 전체 평균은 18.2%)
 - 김포, 고양, 파주 등 3개 지역에 경기 접경 지역 벤처기업의 76.8%가 집중되어 있음
 - 양주, 포천 제조업체의 연구소 보유 비중은 위 3개 지역에 비해 크게 낮음
- 특허출원/등록은 경기도 접경 지역이 제조업체 평균 0.23건으로 경기도 전체(0.54건) 평균의 42.6% 수준
 - 창업보육센터는 고양/포천에 각 2개소, 김포 1개소 등 5개로 경기도 전체(51개소)의 10% 미만
 - 경기 북부 제조업체의 R&D 및 창업생태계가 경기도 타지역에 비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Ⅲ-13〉 경기도 접경 지역 제조업체 연구소 현황



※ 주: 2017년 말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Ⅲ-14〉 경기도 접경 지역 제조업체 특허출원/등록 현황



※ 주: 2017년 말 기준
자료: 통계청

● 경기도 접경 지역의 업종별 집적도(제조업, 정보통신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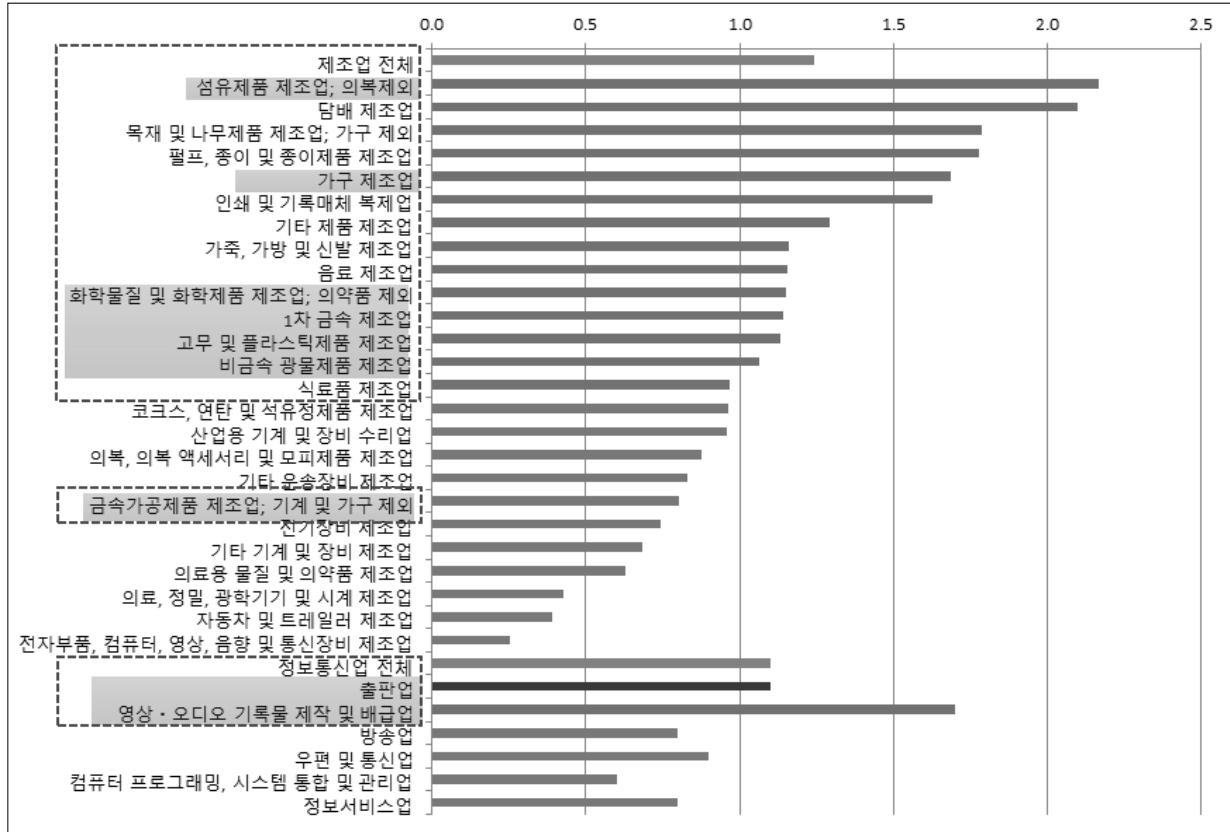
- 경기도 전체 대비 접경 지역 제조업의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남(접경 지역 제조업 상대적 특화지수=1.2)
- 업종별 특화도(상대적 집적도)를 보면, 목재/종이, 가구, 인쇄 업종 특화도가 높으며, 이어서 화학, 1차 금속,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등이 평균 이상의 집적도를 나타냄

〈표 Ⅲ-1〉 경기도 접경 지역의 업종별 집적도(제조업, 정보통신업)

업 종	LQ (사업체)	LQ (종사자수)	업 종	LQ (사업체)	LQ (종사자수)
제조업 전체	1.2	1.2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0.9	0.9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2	2.5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0.8	0.7
담배 제조업	2.1	2.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8	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8	1.9	전기장비 제조업	0.7	0.7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1.8	1.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7	0.7
가구 제조업	1.7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6	0.2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1.6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4	0.6
기타 제품 제조업	1.3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4	0.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2	1.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3	0.7
음료 제조업	1.2	0.9	정보통신업 전체	1.1	0.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2	0.9	출판업	1.1	0.9
1차 금속 제조업	1.1	1.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7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1	1.1	방송업	0.8	4.4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1.1	1.3	우편 및 통신업	0.9	1.4
식료품 제조업	1.0	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0.6	0.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0	0.6	정보서비스업	0.8	0.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	0.6			

※ 주: 2017년 말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III-15〉 경기도 접경 지역의 업종별 집적도(제조업, 정보통신업)



※ 자료: 통계청

나.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특화 산업 후보 도출

- (특화 산업 후보) 현장간담회 및 방문 인터뷰, 전문가 자문,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제조업/정보통신 분야의 1차 특화 산업 후보를 도출함
 - 접경 지역 특화 산업 후보는 접경 지역의 현재 주력산업, 시·군 및 시·도 특화 산업 육성계획, 정부의 미래신성장산업육성 및 제조업 지원정책, 워킹그룹 및 자문위원 의견 수렴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 정보통신산업으로 분류되는 출판, 영상 분야까지 포함하여 후보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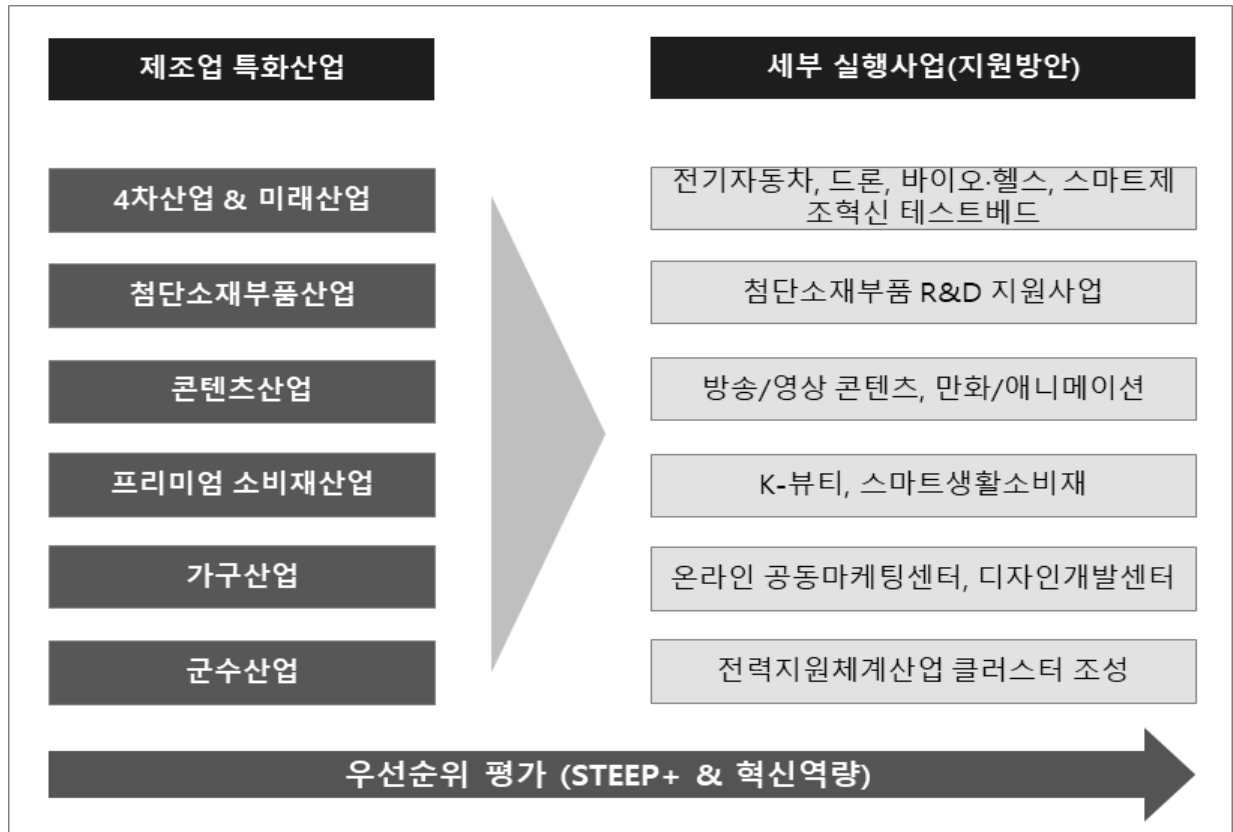
〈표 Ⅲ-2〉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특화 산업 및 사업 후보 검토 리스트

구분	산업	사업	비고
현재의 접경 지역 주력 산업	금속 가공	-	김포, 파주, 포천, 양주, 고양
	전자부품, 통신 장비	-	파주, 양주, 김포
	고무, 플라스틱	-	김포, 파주, 포천, 양주
	기계 장비	섬유/식품 기계, 난방, 소방	김포, 파주, 포천, 양주, 고양
	가구	디자인 개발센터	포천, 김포, 파주
	전기 장비	스마트 생활소비재	김포, 고양, 파주
시·군 추진 계획	전기자동차	상용전기차 클러스터	김포
	첨단소재부품	LCD 부품소재	파주
	지능형 기계	로봇, 자동화기기	김포
	이차전지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사업	김포
	나노소재산업	퀀텀닷 나노소재	철원
	바이오	의료기기, 제약	춘천
	가구, 전자부품/ 통신장비, 전기장비, 의료광학기기	스마트 생활소비재	양주 테크노밸리
시·도 추진 계획	바이오	생명과학, 생명 건강 산업단지 조성	동두천, 포천
	LCD 산업	LCD 부품소재	파주, 양주
	정보통신산업	방송영상 문화 콘텐츠 밸리 조성, IT, CT융합산업	고양 장항지구, 김포, 춘천
	첨단지식산업	항공, IT 등 첨단 지식 산업 클러스터 조성	김포, 춘천
	신재생에너지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춘천
	제조업 전체	소규모 특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양주
	기타	파주 통일 경제특구 연계 남북교류 거점, 파주 LCD 첨단산업기반 확충	고양, 김포, 파주
정부 산업육성 정책 (12대 신산업정책, 5대 신산업, 중견기업 육성정책)	자동차	전기차, 자율차 핵심부품	김포
	전자	IoT 융합 가전	김포, 고양, 파주, 양주, 포천
	기계	로봇, 스마트공장	김포, 파주, 양주, 포천
	제약·의료기기	바이오 헬스	고양, 동두천, 춘천
	항공	드론	고양, 포천
	가구, 전자부품/ 통신장비, 전기 장비, 의료광학 기기, 화학제품	프리미엄 소비재(명품 공예 가구,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화장품 등)	김포, 고양,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춘천
	석유화학	첨단정밀화학, 플라스틱 필름 등	김포, 파주, 양주, 포천

구분	산업	사업	비고
정부 제조업 지원정책	제조업 전체	스마트 제조혁신 테스트 베드	김포, 파주, 포천
	제조업 전체	첨단소재부품	김포, 고양,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철원
워킹그룹 제안	출판업	만화	고양(남북교류 대비)
	영상 오디오 기록물제작업	애니메이션	
	섬유, 의복 및 생활용품	전력지원체계 클러스터 조성	동두천, 화천, 연천 등 군부대 이전 지역

다. 특화 산업 및 세부 실행 사업 선정

- 상기 특화 산업 후보(안)에서 6개 특화 산업을 아래와 같이 도출



● 특화 산업 후보(안) 및 각 특화 산업의 세부실행사업과 선정이유는 아래 표와 같음

〈표 Ⅲ-3〉 특화 산업 후보(안) 및 세부실행사업

특화 산업	세부실행사업	선정이유	역량 보유/미흡
4차산업&미래산업	전기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수열 에너지,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 남북호시무역산업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 접경 지역에 관련 업체 다수 분포 ◦ 지자체의 관련 산업 육성 전략 추진 ◦ 미래 남북경협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대, 대진대, 농협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보유 ◦ 뚜렷한 비교우위 4차산업 미흡 (대부분 계획 단계)
첨단소재 부품산업	첨단소재부품 R&D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및 미래 성장전략산업 ◦ 접경 지역 제조업체의 30% 이상이 관련 기업으로 추정(김포는 4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적된 제품 개발 및 생산 경험 보유 ◦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기술개발, 제품화, 시장개척 역량 미흡
콘텐츠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만화/애니메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성장전략산업 ◦ K-Pop 한류 문화의 글로벌화 지속 ◦ 탄탄한 지역산업기반 ◦ 남북경제 협력 적합 아이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영상산업 클러스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보유 (고양) ◦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재)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강원정보문화진흥원 등 관련 기관 보유
프리미엄 소비재 산업	K-뷰티, 스마트생활 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 전기용품,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화장품 등 중소기업 적합 품목 ◦ 접경 지역에 관련 업체 다수 분포 ◦ 소비재 주 소비처와 근거리 이점 ◦ K-뷰티 등 한류상품 수출 수요 증가 ◦ 중국 고급 소비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진대, 항공대, 대진테크노파크, 경기 섬유산업지원센터 등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기반 보유 ◦ IoT 융합 스마트 소비재 등 고부가가치 소비재 개발, 글로벌 시장 개척 역량 미흡 ◦ 접경 지역 인근에 소비자 제품 시험 인증 기관 부족
가구산업	온라인 마케팅센터, 디자인 개발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천, 파주, 김포지역에 가구업체 집적화(2,439개사, 16,926명) ◦ 수도권 소비처 근접 거리 이점보유하고 있어 향후 지속 가능성 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산업 클러스터 기반 보유 ◦ 영세성으로 인하여 소비자, 시장 변화 트렌드 대응력 미흡 ◦ 디자인개발, 온라인 마케팅 역량 부족
군수산업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산업 내수, 수출 성장 추세 ◦ 전력지원체계 조달 규모 약 6.2조 원('16년 기준) ◦ 국방산업단지조성 추진 분위기 성숙(논산시 국방산업단지 조성 확정, '18.8) ◦ 워리어 품목 33종 중 10종이 전투피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패션사업 클러스터 기반 보유 ◦ 전력지원체계 시장 개척을 위한 체계적 대응 기관 미흡

라. 특화 산업 우선순위 평가

- STEEP PLUS 모형을 사용하여 특화 산업 후보(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평가
 - 우선순위 평가에 사용된 STEEP PLUS 모형에는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책 등에 사업의 실현 가능성, 지속성, 파급효과 등을 추가
 - 우선순위 평가 및 각 세부실행사업 선정을 위해서 접경 지역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환경, 우리나라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의 미래성장전략 방향, 정부 정책, 접경 지역 시·도/시·군 산업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음
 - STEEP PLUS 모형의 평가 항목 및 분석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III -4〉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특화 산업 우선순위 평가항목 및 분석 내용

평가 항목	분석 내용
사회 (Society)	◦ 일자리 창출 기여도, 인적 자원, 남북교류 협력적합도
기술 (Technology)	◦ 국내외 기술변화 트렌드, 4차산업혁명 등 미래신성장 동력산업 ◦ 정부 기술개발로드맵, 접경 지역기술개발 및 보유역량
경제 (Economy)	◦ 접경 지역산업/기업 경쟁력,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트렌드 ◦ 산업의 라이프사이클상 미래 성장 가능성(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 접경 지역산업기반(기업, 지원기관 등)
환경 (Environment)	◦ 기술, 제품, 생산과정 등 사업의 친환경성
정책 (Policy)	◦ 중앙정부·지자체의 산업육성정책, 남북교류 협력정책
실현 가능성 (Feasibility)	◦ 사업의 성과 창출 가능성(기존산업 고도화, 신규 전략산업육성) ◦ 접경 지역 중소기업의 필요성/수용성
지속성 (Sustainability)	◦ 사업 실행 및 추진 효과의 지속 가능성, 기업의 체감 효과
파급효과 (Spread Effect)	◦ 접경 지역특화 산업육성 및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파급효과

- STEEP PLUS 모형으로 접경 지역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특화 산업 후보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우선순위 평가 결과, 첨단 지식 콘텐츠산업, 4차산업 & 미래산업, 프리미엄 소비재 산업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 군수산업은 실현 가능성/지속성 등은 높게 평가되지만, 사회적/기술적/경제적/정책적 요인 등이 낮게 평가되어 가장 후순위로 평가됨

〈표 III-5〉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특화 산업 후보(안) 우선순위 평가

특화 산업	세부실행사업	STEEP PLUS 평가 점수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정책	실현 가능성	지속성	파급 효과	합계 점수
4차산업&미래산업	전기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수열 에너지,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	2.0	1.8	2.0	2.0	1.3	2.0	2.0	2.0	15.1
첨단소재 부품산업	첨단소재부품 R&D 지원사업	1.3	1.8	1.8	2.0	2.0	2.0	2.0	1.5	14.3
콘텐츠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만화/애니메이션	2.0	1.5	1.5	1.0	1.3	2.0	2.0	1.5	12.8
프리미엄 소비재 산업	K-뷰티, 스마트생활소비재	1.0	1.5	1.5	1.0	1.3	2.0	2.0	1.5	11.8
가구산업	온라인 마케팅센터, 디자인 개발센터 구축	2.0	0.8	1.5	1.0	1.0	2.0	2.0	1.5	11.8
군수산업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1.3	0.5	1.0	1.0	0.7	2.0	2.0	1.0	9.5

마. 특화 산업의 혁신역량

- 7대 혁신역량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특화 산업 후보(안)의 혁신역량을 평가하였음
 - 7대 혁신역량 모형의 항목 및 분석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III-6〉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특화 산업 혁신역량 평가항목 및 분석 내용

분 야	역량항목	분석 내용	비 고
정책 혁신 역량	평화경제체제 구축	◦ 평화경제체제정책과 부합도, 평화경제체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	현재, 미래
	민관 거버넌스 구축	◦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및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구축 및 활동력 ◦ 민간의 혁신정책 수용성	현재
	공정경쟁 및 지역 균형 발전	◦ 정책지원사업의 공정성,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도	현재, 미래
산업 혁신 역량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접경 지역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 ◦ 정부의 신성장산업부합도	현재, 미래
	혁신성장 산업 기반	◦ 현재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 ◦ 미래 경쟁우위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가능성	현재, 미래
지역 혁신 역량	지역특화 요소 경쟁력	◦ 지역보유자원 역량 적합도(입지여건/도로, 산업기반, 대학/인적 자원 등)	현재
	지역혁신 생태계	◦ 지식산업 테크노밸리/산업 클러스터 ◦ 벤처·중소기업 지원센터 ◦ 혁신성장 산업 관련 지원 민간·공공기관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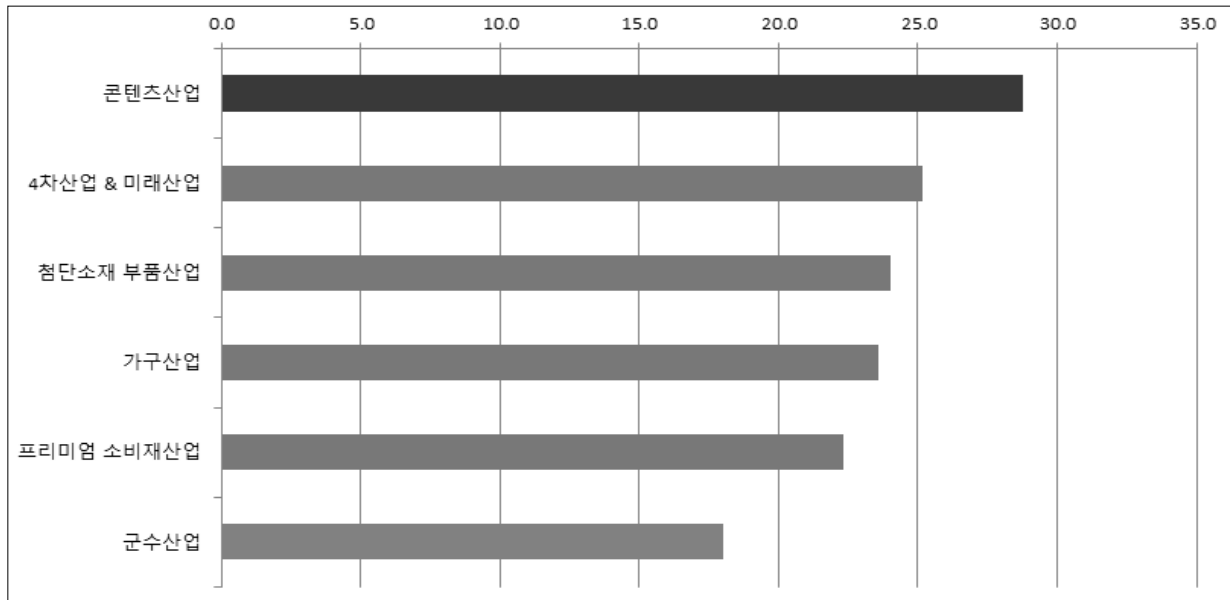
- 7대 혁신역량평가 모형으로 접경 지역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특화 산업 후보에 대한 혁신역량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혁신역량 평가 결과, 콘텐츠산업, 프리미엄 소비재산업, 가구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우선순위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가구산업이 혁신역량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우선순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4차산업& 미래산업의 혁신역량은 낮게 평가된 것이 특징임
 - 이것은 가구산업은 이미 클러스터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혁신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에, 4차산업& 미래산업의 지역혁신역량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임

〈표 Ⅲ-7〉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특화 산업 후보(안) 혁신역량 평가

첨단 미래기술융합 산업 특화 산업 후보(안)	사업 내용	정책혁신역량			산업혁신역량		지역혁신역량		합계
		평화 경제 체제	민관 거버 넌스	공정경쟁/ 지역 균형 발전	미래성장 동력	혁신성장 산업기반	지역 특화 요소	혁신 생태계	
콘텐츠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만화/애니메이션	2.0	1.7	2.0	2.0	2.0	2.0	2.0	13.7
프리미엄 소비재산업	K-뷰티, 스마트생활소비재	2.0	1.3	2.0	2.0	1.5	1.7	1.7	12.2
가구산업	온라인 마케팅센터, 디자인 개발센터 구축	1.5	1.7	2.0	1.0	2.0	2.0	1.7	11.8
4차산업 & 미래산업	전기자동차, 드론, 바이오 헬스, 수열 에너지, 스마트 팩토리테스트베드	1.0	1.3	2.0	2.0	1.5	1.3	1.7	10.8
첨단소재 부품산업	첨단소재부품 R&D 지원사업	1.0	1.3	2.0	1.5	1.0	1.3	1.3	9.5
군수산업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0.0	1.3	2.0	1.0	1.5	1.3	1.3	8.5

- 특화 산업 후보(안)의 우선순위 및 혁신역량에 대한 상대적 종합평가순위는 아래 그림과 같음
 - 우선순위평가와 혁신역량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콘텐츠산업이 가장 상위로 평가됨
 - 4차산업 & 미래산업, 첨단소재부품산업, 가구산업, 프리미엄 소비재산업 등이 중위수준으로 평가되며, 군수산업이 가장 하위로 평가됨

〈그림 Ⅲ-16〉 STEEP PLUS & 혁신역량 평가 종합



바. 특화 산업의 세부 내용

〈표 Ⅲ-8〉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분야 특화 산업 요약

특화 산업	세부사업명	추진사업 내용	비 고
콘텐츠산업	방송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1단계사업 추진 완료상태 ◦ 향후 2단계 사업 추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스튜디오, 관련 기업 입주센터, 테마파크 등 ◦ 고양
	만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애니메이션 창작센터 건립 ◦ 첨단 만화/애니메이션 창작 설비 구축 ◦ 향후 남북교류 협력 추진 기반으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 협력사업 기반 ◦ 파주, 고양
4차 산업 & 미래 산업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전기자동차 부품/완성차 생산 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 지원 ◦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 벤처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시 중점 추진사업 ◦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과 연계 추진 검토
	ICT 융복합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테크노파크(기업입주시설, R&D 지원센터 등) 건립 ◦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의 R&D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 양주
	AI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테크노파크 건립 ◦ AI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 김포, 양주
	드론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입주센터 건립 ◦ 벤처창업지원 ◦ 드론 부품/완제품 R&D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천시, 고양시 미래 산업으로 추진 ◦ 항공대 산학협력 추진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헬스, 디지털케어,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지원 ◦ 관련 중소중견기업 R&D, 벤처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 고성

특화 산업	세부사업명	추진사업 내용	비 고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융합단지 조성 수열기반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조성 수열기반 물기업 특화단지 조성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생태주거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소양강댐 수열 에너지 활용
스마트 팩토리 테스트 베드 구축	맞춤형 제조혁신지원사업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 구축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사업과 연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가구 스마트팩토리테스트베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 파주, 양주 지역
	남북호시 무역산업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 산업단지 부지조성 제조, 물류산업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화
프리미엄 소비재산업	K-뷰티 테크노파크 건립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뷰티산업진흥센터 건립 화장품 기술개발/마케팅/인력양성 지원 일산 MICE산업 연계 화장품 체험테마파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 파주, 양주
	스마트생활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생활소비재 O2O(online to offline) 체험점 건립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제조혁신 지원 디자인/브랜드 개발, 해외인증 등 마케팅 지원 U 턴 업체 유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 킨텍스, MICE 산업 연계
첨단소재 부품산업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부, 중기부의 소재부품 R&D 지원 사업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철원
	소재부품 U-턴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U-턴 시, 산업단지 입주,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복합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경 지역 전체
가구산업	가구 온라인 마케팅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마케팅 공동 사무실 건립 및 운영 지원 (접경 지역 영세 가구업체 온라인 마케팅 인력 입주) 홍보, 마케팅 코디네이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천 '마홀앤' 연계

1) 콘텐츠산업

구 분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 영상 콘텐츠, 만화/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영상 콘텐츠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며, K-Pop한류문화 확산에 힘입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동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벤처창업이 활발한 분야이며,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지식산업 분야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시 만화/애니메이션의 남북교류 협력 추진 가능 고양, 파주지역에 관련 산업 분야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음

구 분	내 용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영상, 만화/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 분야의 벤처창업 활성화 ◦ 유망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초기 벤처기업의 마중물 역할
추진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창업 중소기업의 R&D 지원 ◦ R&D 성과 우수 업체의 사업화(시제품생산) 지원 ◦ 자금지원 및 기술 자문 제공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산업 분야 벤처창업 붐업을 위하여 '창업콘테스트' 개최 ◦ 경쟁에서 선정된 업체 지원으로 사업성공률 및 지원성과 제고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벤처창업기업 발굴 및 접경 지역의 창업 확산 분위기 조성 ◦ 청년 창업 기업인 유치 및 접경 지역 출신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활성화 기대 ◦ 접경 지역 산업구조 혁신에 기여

2) 4차산업 & 미래산업

구 분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 및 미래신성장산업 ◦ 남북호시무역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산업은 당장의 수익성 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필요 ◦ 전기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산업은 현재 성장기 초반 국면에 진입한 단계이며, 미래 시장이 명확한 상태이므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 수월 에너지는 에너지전환 정책목표와 부합하며, 경제성이 우수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평가되므로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 필요 ◦ 가구 및 섬유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 북부 접경 지역(포천, 양주, 파주)의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스마트팩토리 조기 확산 필요 ◦ 남북호시무역산업단지는 미래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기반 구축사업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 전기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산업 중소기업의 생태계 기반의 조기 구축 ◦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수월 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에너지이용효율 증대와 지역 경제활성화 촉진 ◦ 스마트팩토리사전 테스트 기회 제공을 통한 최적 제조혁신 프로세스도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스마트팩토리사업에 참여 유도
추진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 전기자동차산업 생태계의 조기 구축을 위하여 클러스터 내에 전기자동차 부품소재 R&D 센터 구축(김포 황해경제자유특구 내) ◦ 드론, 바이오·헬스케어중소기업 R&D 및 사업화 지원 사업(포천, 춘천) ◦ 춘천 소양강댐 심층냉수의 냉난방에너지 활용 및 데이터 센터, 스마트팜 등 관련 산업 활성화 추진(춘천) ◦ 경기 북부 접경 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가구, 섬유 스마트팩토리테스트베드 구축(포천)

구 분	내 용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자동차 시험·실증 R&D센터는 신규로 추진되는 산업단지 내에 건설하며, 산업단지 구축 속도에 맞추어 인프라 개념으로 선투자 ◦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 구축 생태계(춘천바이오진흥원)와 연계하여 R&D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적 관점에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 창출 유도 ◦ 현재 제조혁신지원센터가 있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설치, 위탁운영(솔루션 공급사의 인력, 기술 지원을 통하여 운영인력을 최소화)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역량이 영세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4차 산업/미래 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 접경 지역 영세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확산 촉진 ◦ 접경 지역 남북교류 협력 기반 강화

3) 프리미엄 소비재산업

구 분	내 용
정 의	◦ K-뷰티, 스마트생활소비재(스마트 가구, 섬유, 주방용품, 장난감) 등 고부가가치 소비재 산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확산에 힘입어 국산 화장품, 미용기구 등 K-뷰티상품과 IoT융합 생활소비재 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중국, 동남아 등 신흥개발국 소비시장 규모 확대로 수출시장 확대 전망 ◦ 중소기업의 프리미엄소비재 상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을 통한 국내외 시장 개척 촉진 필요 ◦ 프리미엄 소비재산업은 제조업 중에서 투자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임 * 투자 10억 원당 취업유발효과 프리미엄소비재산업 10,128명, 바이오헬스 9,304명, 전기자율차 7,860명, 항공드론 7,035명, 첨단신소재 5,626명 순(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제조업체의 프리미엄 소비재 제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중소제조업체의 R&D 역량 강화 ◦ 접경 지역기술창업 활성화
추진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뷰티 테크노파크 건립 ◦ 부설연구소 보유업체에 대한 제품 R&D 자금 및 기술 지원 ◦ 시제품개발 및 상품화 목표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함으로써, R&D 성공률 및 지원 성과 제고 ◦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마케팅 지원까지 확장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혁신제품 개발 활성화 ◦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지역 경제 활성화

4) 첨단소재부품산업

구 분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전자, 화학 관련 첨단 소재부품산업 ◦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산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 지역중소기업의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필요 ◦ 영세중소기업의 R&D투자 역량 강화 지원 필요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제조업체의 첨단 소재 부품 R&D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접경 지역청년 벤처 기술 창업 활성화 지원
추진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의 R&D 투자 및 기술 지원 ◦ 시제품 및 상용화 제품 개발 지원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함으로써, R&D 성공률 및 지원 성과 제고 ◦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마케팅 지원까지 확장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 지역중소제조업체의 혁신제품 개발 활성화 ◦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지역 경제 활성화

5) 가구산업

구 분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디자인, 생산 및 판매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 지역제조업에서 가구산업의 비중은 섬유 다음으로 높은 산업이지만, 대부분의 가구 제조업체의 규모가 영세하며,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열악한 편임 ◦ 따라서 관련 전문 인력의 채용 및 장기 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가구 제조업체에 필수적인 가구디자인 및 온라인 마케팅 공동 사무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 중소가구생산업체의 디자인 및 마케팅 역량 강화 ◦ 우수 전문 인력 확보
추진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여건이 편리한 위치에 디자인 개발센터 및 마케팅지원센터 건립 ◦ 디자인 개발센터 / 마케팅지원센터 사무실 운영비용 지원(디자이너, 관리자 인건비)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디자인 개발센터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건립하며, 가구산업협동조합, 대진테크노파크등 관련기관에 위탁 운영 ◦ 가구 마케팅지원센터는 포천 “마홀앤” 내 공간에 사무실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사에서쇼핑몰 운영인력 채용 및 관리 - 필요시센터의 쇼핑몰 구축 전문 인력이 자문 제공 - 각사에서쇼핑몰 운영인력 채용 여력이 없는 영세업체는 공동 쇼핑몰 구축 및 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 추진(공동쇼핑몰 운영 인력 인건비 비용의 50%는 센터에서 지원)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 가구생산업체의 디자인 및 마케팅 역량 강화 ◦ 영세 중소가구생산업체의 디자인 및 온라인 마케팅 전문 인력 확보 촉진 ◦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6) 군수산업

구 분	내 용
정 의	◦ 피복, 용품 등 비무기체계산업
필요성	◦ 영세중소기업은 전력지원체계산업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신규 진입이 매우 제한적이며, 조달과정의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하기에 역부족 ◦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요구하는 품질 기준 제품 개발 역량 확보가 선결과제 ◦ 따라서 전력지원체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제품개발에서 판매까지 종합적인 지원 조직 필요
목 적	◦ 경기 북부 전력지원체계산업 생태계의 조기 구축 ◦ 전력지원체계 조달 정보 관리, R&D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 구축 ◦ 영세 중소기업의 전력지원체계 산업의 신규 진입 지원 ◦ 전력지원체계산업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 입주 기업들의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지원 체계 제품 시험·실증 R&D 센터 구축(군부대 이전부지, 동두천 국가산단 등)
추진내역	◦ 전력지원체계 관련 시장/기술 정보 수집 및 제공, 제품개발(품질기준, 시험, 인증 등), 조달물자 공급 관련 서류 대응 등을 지원하는 시설 및 조직 구축 (전력지원체계산업 인큐베이팅 기능) ◦ 필요한 기능에 적합한 건물 및 설비 도입 지원 ◦ 센터 운영비용 지원
추진 전략	◦ 전력지원체계 물품 가운데 접경 지역의 강점인 피복류 중심으로 신규시장 개척 추진 ◦ 동두천 국가산단 내에 전력지원체계지원센터 구축하여 클러스터 조성 촉진 및 투자비용 최소화
기대 효과	◦ 전력지원체계 수요지에 인접한 접경 지역의 관련 산업 활성화 ◦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수출시장 개척의 발판

2.3 접경 지역 제조업 현황 및 기초자료 분석

가. 접경 지역 제조업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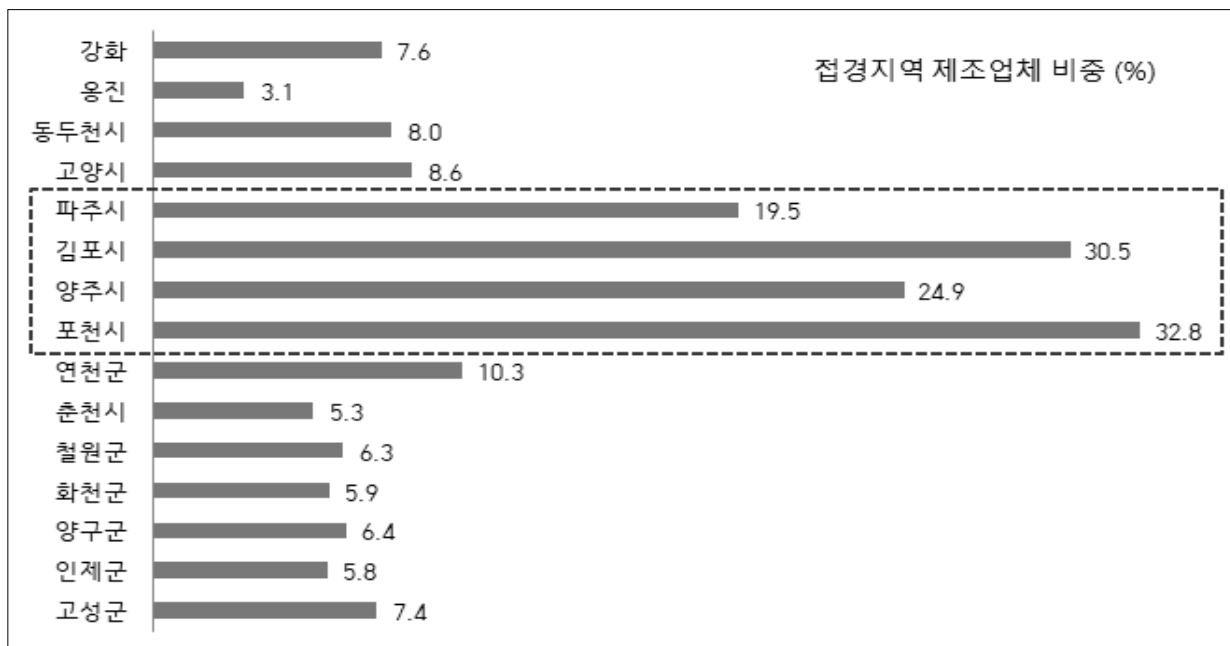
1) 제조업 사업체 현황

- 접경 지역 제조업체의 90%가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지역에 위치
 - 접경 지역 제조업체 수는 김포시가 8,768개로 가장 많으며, 제조업체 비중은 포천시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접경 지역 사업체 기준 제조업 비중(18.4%)은 경기도 전체(14.8%)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
 - 고양시 제조업체 수는 5,751개에 달하지만, 비중은 8.6%로 낮아 제조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춘천(1,195개), 강화(420개), 동두천(508개) 지역에도 제조업체가 다수 분포

〈표 III-9〉 시·군별 제조업 사업체 현황(2017년 기준)

	합계	동두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전산업(개)	212,771	6,388	66,621	28,532	28,792	16,952	17,997	3,659
제조업(개)	33,650	508	5,751	5,555	8,768	4,227	5,897	376
제조업 비중(%)	15.8	8.0	8.6	19.5	30.5	24.9	32.8	10.3

	강화	옹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전산업(개)	5,534	1,897	22,358	3,734	2,149	1,956	3,324	2,878
제조업(개)	420	58	1,195	236	126	126	193	214
제조업 비중(%)	7.6	3.1	5.3	6.3	5.9	6.4	5.8	7.4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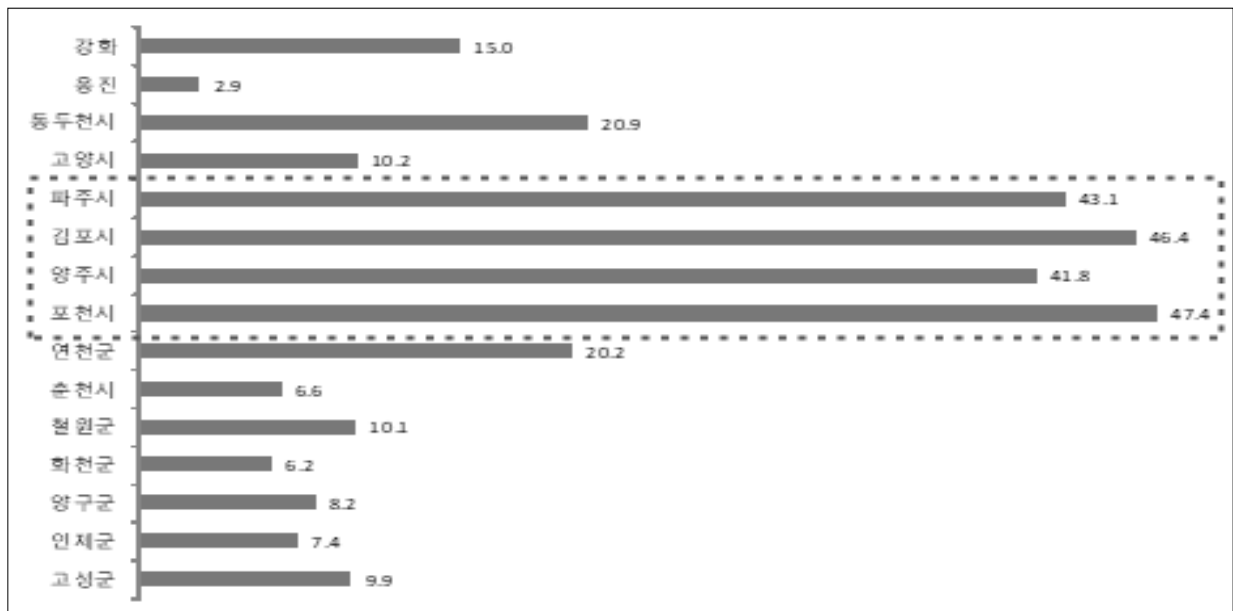
2) 제조업 종사자 현황

- 접경 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91.7%가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지역에 위치
 - 파주시가 78,434명으로 가장 많으며,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포천시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접경 지역 종사자 수 기준 제조업 비중(30.8%)은 경기도 전체(26.3%)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접경 지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등 4개 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어, 이 지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10〉 시·군별 제조업 종사자 현황(2017년 기준)

	합계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전산업(명)	1,059,358	28,252	319,434	181,857	153,261	84,544	91,285	14,312
제조업(명)	284,086	5,915	32,476	78,434	71,059	35,330	43,271	2,887
제조업 비중(%)	26.8	20.9	10.2	43.1	46.4	41.8	47.4	20.2

	강화	옹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전산업(명)	19,166	6,842	107,512	13,090	8,371	7,382	12,093	11,957
제조업(명)	2,868	195	7,121	1,328	517	606	896	1,183
제조업 비중(%)	15.0	2.9	6.6	10.1	6.2	8.2	7.4	9.9



※ 자료: 통계청

- 제조업 업체당 종사자 수는 접경 지역 평균은 6.9명이며, 파주 14.1명, 동두천 11.6명
 - 이것은 파주, 동두천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파주는 LG 디스플레이 영향이 큼. LG 디스플레이(약 24,000명) 제외시 9.7명으로 추정됨)

〈표 Ⅲ-11〉 시·군별 제조업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2017년 기준)

(단위: 명)

접경 지역 평균	동두천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연천
6.9	11.6	5.6	14.1	8.1	8.4	7.3	7.7

강화	옹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6.8	3.4	6.0	5.6	4.1	4.8	4.6	5.5

※ 자료: 통계청

〈표 III-12〉 접경 지역 시·군별 제조업 현황(종사자 기준)

	합계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강화	옹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1,577	2,527	6,220	14,265	3,571	3,904	113	71	273	0	465	38	22	22	47	3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678	740	25,661	1,200	1,538	258	118	58	2	0	59	32	0	0	3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7,315	1,914	5,813	9,114	4,522	5,182	139	211	146	0	201	19	45	0	3	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5,592	2,026	5,259	12,772	2,453	2,352	219	47	284		141	5		23	8	3
식료품 제조업	24,923	2,894	4,562	2,635	2,698	4,843	917	755	994	102	1,936	593	279	301	621	79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4,152	917	896	1,161	9,045	9,530	1,487	765	154	0	159	11	13	0	4	10
가구 제조업	17,377	1,380	4,681	4,686	995	5,151	17	19	280	2	133		12	10	4	7
전기장비 제조업	13,548	2,786	2,174	3,766	1,632	1,932	291	41	62	3	707	80	7	40	23	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3,453	5,150	6,611	881	164	401	38	8	11	0	165	0	7	7	5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3,318	2,906	4,497	3,430	1,100	1,089	65	10	130	0	84	0	7	0	0	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844	1,126	2,516	1,480	935	2,413	106	266	97	48	297	125	41	109	103	18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9,451	657	2,045	3,172	1,148	1,200	160	214	56	0	749	26	11	5	6	2
1차 금속 제조업	8,552	189	1,180	4,911	1,212	631	292	34	55	0	47	0	1	0	0	0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시계제조업	6,661	1,962	1,076	1,509	749	204	764	27	39	0	311	17	1	0	2	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5,147	599	1,027	2,046	266	963	15	9	16	0	137	10	6	19	26	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880	648	263	153	1,286	597	736	190	2	0	5	0	0	0	0	0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제조업	3,267	1,031	345	71	685	667	236	4	9	0	106	98	15	0	0	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48	191	413	1,309	185	325	0	12	83		29			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748	180	232	160	76	46	23	0	17	0	1,014	0	0	0	0	0

〈표 Ⅲ-13〉 경기도 접경 지역 시·군별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2017년 기준)

(단위: 명)

		합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전산업		872,945	319,434	181,857	153,261	84,544	91,285	28,252	14,312
제조업	종사자 수	269,372	32,476	78,434	71,059	35,330	43,271	5,915	2,887
	비 중	30.9	10.2	43.1	46.4	41.8	47.4	20.9	20.2
식료품 제조업	종사자 수	19,304	2,894	4,562	2,635	2,698	4,843	917	755
	비 중	2.2	0.9	2.5	1.7	3.2	5.3	3.2	5.3
음료 제조업	종사자 수	602	49	27	32	22	348	25	99
담배 제조업	종사자 수	12	12	0	0	0	0	0	0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종사자 수	23,801	917	896	1,161	9,045	9,530	1,487	765
	비 중	2.7	0.3	0.5	0.8	10.7	10.4	5.3	5.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종사자 수	3,039	1,031	345	71	685	667	236	4
	비 중	0.3	0.3	0.2	0.0	0.8	0.7	0.8	0.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종사자 수	3,873	648	263	153	1,286	597	736	190
	비 중	0.4	0.2	0.1	0.1	1.5	0.7	2.6	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종사자 수	4,925	599	1,027	2,046	266	963	15	9
	비 중	0.6	0.2	0.6	1.3	0.3	1.1	0.1	0.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종사자 수	13,097	2,906	4,497	3,430	1,100	1,089	65	10
	비 중	1.5	0.9	2.5	2.2	1.3	1.2	0.2	0.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종사자 수	13,253	5,150	6,611	881	164	401	38	8
	비 중	1.5	1.6	3.6	0.6	0.2	0.4	0.1	0.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종사자 수	94	0	8	40	7	13	26	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종사자 수	8,596	657	2,045	3,172	1,148	1,200	160	214
	비 중	1.0	0.2	1.1	2.1	1.4	1.3	0.6	1.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수	717	180	232	160	76	46	23	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종사자 수	26,895	1,914	5,813	9,114	4,522	5,182	139	211
	비 중	3.1	0.6	3.2	5.9	5.3	5.7	0.5	1.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종사자 수	8,842	1,126	2,516	1,480	935	2,413	106	266
	비 중	1.0	0.4	1.4	1.0	1.1	2.6	0.4	1.9
1차 금속 제조업	종사자 수	8,449	189	1,180	4,911	1,212	631	292	34
	비 중	1.0	0.1	0.6	3.2	1.4	0.7	1.0	0.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종사자 수	30,671	2,527	6,220	14,265	3,571	3,904	113	71
	비 중	3.5	0.8	3.4	9.3	4.2	4.3	0.4	0.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종사자 수	29,573	740	25,661	1,200	1,538	258	118	58
	비 중	3.4	0.2	14.1	0.8	1.8	0.3	0.4	0.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종사자 수	6,291	1,962	1,076	1,509	749	204	764	27
	비 중	0.7	0.6	0.6	1.0	0.9	0.2	2.7	0.2
전기장비 제조업	종사자 수	12,622	2,786	2,174	3,766	1,632	1,932	291	41
	비 중	1.4	0.9	1.2	2.5	1.9	2.1	1.0	0.3

		합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종사자 수	25,128	2,026	5,259	12,772	2,453	2,352	219	47
	비 중	2.9	0.6	2.9	8.3	2.9	2.6	0.8	0.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종사자 수	2,435	191	413	1,309	185	325	0	1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종사자 수	341	63	73	174	10	21	0	0
가구 제조업	종사자 수	16,929	1,380	4,681	4,686	995	5,151	17	19
	비 중	1.9	0.4	2.6	3.1	1.2	5.6	0.1	0.1
기타 제품 제조업	종사자 수	8,271	2,220	2,390	1,730	796	1,030	84	21
	비 중	0.9	0.7	1.3	1.1	0.9	1.1	0.3	0.1

※ 주: 비중은 전산업 종사자 대비 각 산업 종사자 비중(%)

자료: 통계청

- 업종별 종사자 비중으로 본 접경 지역 시·군별 주요 산업을 보면,
 - 파주시는 전자/통신/의료/전기장비, 김포시는 비금속/1차금속/금속가공, 양주/포천/동두천은 섬유·의복·가죽·신발 산업으로 나타남

〈표 III-14〉 시·군별 전산업 대비 업종별 종사자 수 비중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제조업 전체	10.2	43.1	46.4	41.8	47.4	20.9	20.2
섬유·의복·가죽·신발	0.8	0.8	0.9	13.0	11.8	8.7	6.7
인쇄종이·펄프	2.5	6.1	2.8	1.5	1.6	0.4	0.1
화학	0.2	1.1	2.1	1.4	1.3	0.6	1.5
고무·플라스틱	0.6	3.2	5.9	5.3	5.7	0.5	1.5
비금속/1차금속/금속가공	1.2	5.5	13.5	6.8	7.6	1.8	2.6
전자/통신/의료/전기장비	1.7	15.9	4.2	4.6	2.6	4.2	0.9
자동차/운송장비	0.8	0.6	2.1	0.6	0.8	0.0	0.4
가구	0.4	2.6	3.1	1.2	5.6	0.1	0.1

	강화	옹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제조업 전체	15.0	2.9	6.6	10.1	6.2	8.2	7.4
섬유·의복·가죽·신발	0.9	0.0	0.3	0.8	0.3	0.0	0.0
인쇄종이·펄프	0.7	0.0	0.2	0.0	0.2	0.1	0.0
화학	0.3	0.0	0.7	0.2	0.1	0.1	0.0
고무·플라스틱	0.8	0.0	0.2	0.1	0.5	0.0	0.0
비금속/1차금속/금속가공	2.2	0.7	0.8	1.2	0.8	1.8	1.2
전자/통신/의료/전기장비	0.5	0.0	1.0	1.0	0.1	0.5	0.2
자동차/운송장비	2.9	0.0	0.0	0.0	0.0	0.0	0.0
가구	1.5	0.0	0.1	0.0	0.1	0.1	0.0

※ 자료: 통계청

〈표 III-15〉 종사자 수 기준으로 본 시·군별 제조업의 주요산업 현황

	주요산업	1위 업종(제조업 내 비중(%))
강화군	금속가공, 식료품	식료품(34.7)
옹진군	식료품	식료품(52.3)
고양시	인쇄, 종이 펄프, 금속가공, 전기장비	인쇄(15.9%)
파주시	인쇄 종이 펄프,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금속가공, 전자, 가구	전자(32.7%)
김포시	종이 펄프, 고무플라스틱, 1차금속, 금속가공, 가구	금속가공(20.1)
양주시	섬유, 가죽신발, 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 전자/통신/의료/전기장비	섬유(25.6)
포천시	섬유, 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 가구, 식료품	섬유(22.0)
동두천시	섬유, 가죽신발,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섬유(25.1)
연천군	섬유, 식료품	섬유(26.5)
춘천시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식료품	식료품(27.2), 의료용 물질/의약품(14.2)
철원군	식료품	식료품(44.7)
화천군	식료품	식료품(54.0)
양구군	식료품	식료품(49.7)
인제군	식료품	식료품(69.3)
고성군	식료품	식료품(67.0)

※ 자료: 통계청

3) 제조업 외 지식정보산업 현황(종사자 기준)

- 접경 지역 제조업 이외 지식정보산업 현황을 보면, 고양은 출판, 영상, 방송산업, 창작예술, 스포츠 오락산업, 파주는 출판업이 주요산업으로 나타남

〈표 III-16〉 제조업 외 산업 현황

		합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	연천군
전산업	소계	872,945	319,434	181,857	153,261	84,544	91,285	28,252	14,312
정보통신업	소계	11,978	6,747	4,139	478	113	201	209	91
	출판업	5,298	1,880	3,278	98	11	21	7	3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913	1,406	335	116	37	4	14	1
	방송업	1,251	1,190	61	0	0	0	0	0
	우편 및 통신업	2,367	1,286	383	213	55	161	187	8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841	739	56	38	7	0	1	0
	정보서비스업	308	246	26	13	3	15	0	5

		합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	연천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소계	19,674	9,122	3,431	2,170	1,673	2,271	635	37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642	2,484	613	424	462	436	104	119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5,032	6,638	2,818	1,746	1,211	1,835	531	253

※ 자료: 통계청

4) 접경 지역 산업단지 현황

〈표 III-17〉 접경 지역 산업단지 현황(2019.1분기 기준)

		산단 수	입주업체	가동업체	가동률(%)	고용(명)
국가산단	파주	2	643	352	54.7	5,111
일반산단	김포	9	691	690	99.9	12,386
	파주	12	355	216	60.8	25,960
	양주	7	164	145	88.4	3,392
	동두천	3	77	77	100.0	3,268
	포천	5	198	96	48.5	3,472
	연천	4	60	43	71.7	845
	강화	2	88	32	36.4	571
계		44	2,276	1,651	72.5	55,005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표 III-18〉 접경 지역 농공단지 현황(2019.1분기 기준)

	산단(개)	입주업체	가동업체	가동률(%)	고용(명)
고성	4	68	58	85.3	430
양구	1	27	19	70.4	47
인제	1	25	25	100.0	114
철원	3	50	36	72.0	777
춘천	10	458	448	97.8	9,302
화천	1	26	25	96.2	173
계	20	654	611	93.4	10,843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 접경 지역 산업단지는 경기도, 인천에만 분포

- 국가산단 2개, 일반산단 42개로 총 44개 단지임
 - 산단 입주업체는 총 2,276개이며 가동률은 72.5%
- 산단입주업체 고용인원은 총 55,005명

● 농공단지는 강원도에만 분포

- 강원도 6개 시·군의 농공단지는 총 20개 단지
 -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총 654개이며, 가동률은 93.4%
 -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고용인원은 총 10,843명

나.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

1)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 출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19.06.19)

+ 추진 배경

- 추격형 산업 전략에 한계 → 혁신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 시급
- 10년간 10대 주력산업 변화 없어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한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함

+ 추진 목표

- 2030년 제조업 4강 목표(현재 6위)
- 제조업 부가가치율 현재 25% → 30%로 증대
- 일류기업 현재 573개 → 1200개로 확대

+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 전략

-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중심으로 제조혁신 가속화
 -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섬유, 뿌리산업, 조선 등 개별업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개발 보급), '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 신설
 - 친환경화 추진: 친환경차(전기, 수소차),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수요창출. 20개 국가산단을 청정제조산단으로 전환. 오염물질 저감설비 구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 추진 확산
 - 융복합화 추진: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
- 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기존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에 2030까지 정부 8.4조, 민간 180조 투자
 - 신산업 분야별 기술 및 규제개혁 로드맵 제시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개혁 추진

- 기존 주력산업 혁신 통해 고부가가치화 추진
- 5조원 규모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 사람, 기술, 금융, 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 중심으로 전환
 - 제조혁신에 필요한 인재 육성(범부처 산업인재양성 로드맵 수립)
 - 창의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방안 수립
 - R&D 지원시스템 개편: 성공 가능성 위주의 R&D 심사방식 → 성공 가능성 낮더라도 혁신기술과 경험 축적이 될 수 있는 ‘알키미스트 프로그램’* 도입
 - * 알키미스트 프로그램: '19년 100억 원에서 2030년 7천억 원까지 확대
 -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2.5조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 조달 혁신: 혁신제품 정부조달구매 확대,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대상 확대(혁신제품 구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 혁신 신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투자 지원 대폭 강화
 - 낙후지역 투자에 세제지원 확대
 - 신산업분야 투자 세제지원
 - 외국인 투자 지원
 - 수출기업, 중소기업 자금지원

2) 신성장산업육성정책

● 신성장산업 육성정책의 시대별 변화

① G7프로젝트(1992~2002, 18개 프로젝트) → ② 21C프론티어(1999~2013, 22개 사업단)
 → ③ 참여정부(10대 차세대성장동력) → ④ MB정부(17대 신성장 동력) → ⑤ 박근혜정부(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 ⑥ 문재인정부(12대 신산업, 5대 신산업, 5대 분야 100개 핵심기술, 중견기업육성)

〈그림 Ⅲ-17〉 정부 신산업 정책 흐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문재인 정부의 주요 신성장산업정책

+ 12대 신산업

-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환경 변화는 스마트화(Smart), 서비스화(Servitization), 친환경화(Sustainable), 플랫폼화(Platform) 등 4대 메가트렌드(3S-1P)로 대표되는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 우리나라가 가진 기반과 잘할 수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3개 산업군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혁신을 추진

산업군	신산업	
시스템 산업	① 전기 자율차	⑤ 바이오 헬스
	② 스마트 친환경 선박	⑥ 항공 드론
	③ IoT 가전	⑦ 프리미엄 소비재
	④ 로봇	
에너지 산업	⑧ 에너지 신산업(신재생에너지, ESS, AMI 등)	
소재 부품 산업	⑨ 첨단 신소재	⑪ 차세대 디스플레이
	⑩ AR VR	⑫ 차세대 반도체

〈그림 Ⅲ-18〉 12대 신산업 분야

산 업		중점분야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	
시 스 템	자동차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전기차·수소차	전기차 표준화/OS	전기·자율차
	조선	스마트 조선소	개조·수리·설계	LNG연료 추진선	ship to shore	스마트 친환경 선박
	전자	IoT가전	스마트폰 연계서비스	에너지 수요관리	스마트홈	IoT가전
	기계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스마트공장	서비스확대 통합운영	로봇
	제약·의료	정밀 의료기기	의료 빅데이터	원격의료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
	항공	고기능 무인기	감시·농업 서비스	물류·배송 해상관리	서비스 융복합화	항공·드론
	소비재	맞춤형 화장품	의약, 패션	농식품	모바일 쇼핑	프리미엄 소비재
에 너 지	에너지 산업	스마트 미터	ESS 서비스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에너지 신산업
소 재 · 부 품	철강 석유화학 섬유	스마트 제철소	초경량소재 기능성소재 탄소섬유			첨단 신소재
	실감형 콘텐츠	디바이스 시뮬레이터	의료·체험 서비스	시험·교육 훈련	융복합 비즈니스	AR/VR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OLED	의료·VR 수요연계	친환경 사이너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지능형 반도체	위탁설계·생산	저전력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 자료: 신산업 민관협의회, '4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2016)

+ 5대 신산업

- 「새정부의 산업정책방향(2017. 12.)」에서 AICBM(AI, IoT, Cloud, Big, Mobility)을 접목한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착수, 핵심기술·인재·금융 등 혁신성장 역량 확충 주력

〈표 Ⅲ-19〉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예시)

분 야	주요 내용
(미래 모빌리티 사회)	◦ '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전기·자율주행차	◦ '22년 전기차 보급 35만대
(초연결 사회)	◦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개발
IoT 가전	◦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 구축
(에너지 전환)	◦ 분산형 발전확대를 계기로 에너지신산업 창출
에너지신산업	◦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 산업 육성 등
(수명 연장과 고령화)	◦ 빅데이터 + 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개발
바이오·헬스	◦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개발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	◦ 후발국 격차 5년 이상 확보(글로벌 No.1)
반도체·디스플레이	◦ 대규모 적기투자 및 차세대 기술확보 병행 추진(차세대 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2017.12)

+ 주요 산업별 중견기업 육성 정책

* 출처: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2017

-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개별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분절적 지원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

〈표 Ⅲ-20〉 주요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추진 방향

구 분	중점 추진 방향
자동차	◦ 전기차·자율차 핵심부품 개발 중견기업 집중 지원 ◦ 완성차 대기업-중소 협력사 공동 R&D 및 해외 마케팅
반도체·디스플레이	◦ 반도체 장비·소재 패키지 개발 추진 ◦ 반도체·디스플레이 대기업 - 소재·장비·부품 중견기업 공동 R&D
바이오·헬스	◦ 글로벌 바이오 스타 프로젝트 추진 ◦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서비스 창출
석유화학	◦ 중견기업 특성에 맞는 스페셜티 기업 육성(첨단 정밀화학, 플라스틱 필름 등)
섬유·패션	◦ 고기능성 화학섬유 및 산업용 섬유 중견기업 육성 ◦ 바이어 맞춤형 제품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 추진

※ 자료: 관계부처합동, 혁신형 중견기업 비전 2280, 2018.2

+ 산업별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통해 혁신형 중견기업 집중 육성

* 출처: 관계부처합동, 혁신형 중견기업 비전 2280, 2018.2



+ 주요 업종별 혁신성장 추진 방향

* 출처: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2017

- 4차산업혁명, 공급과잉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AI, ICBM’* 등 혁신기술 접목하여 산업 포트폴리오 재편 추진

* ICBM 산업: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고도화 전략 추진

벨류체인		업 종	주요 도전과제
	소 재	철강, 화학, 섬유	◦ 범용상품 위주 산업구조, 글로벌 공급과잉 ◦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부품·장비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추격 가속화 ◦ 생산기지 이전, 기술유출 우려 심각
	완제품	자동차, 조선, 가전	◦ 전기차·프리미엄 가전 등 신제품 경쟁 치열 ◦ 높은 생산비용 등 조립 경쟁력 약화

+ 주요 산업분야별 추진 정책

[소재 산업군]: 선제적 첨단기술 투자 → 초격차 확보

As-Is	재편 방향(~22년)	To-Be(제품·기술)
철강	◦ (고부가) 고부가 경량소재 기술개발 ◦ (친환경) 첨단 친환경 제철기술 개발 * 수소환원제철공법, 고효율 전기로 등	◦ 고부가 철강, 경량소재 * 고기능 경량강재, CO ₂ 저감형 하이브리드 제철 기술
석유화학	◦ (첨단화)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 *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충 적기 지원 ◦ (고부가) 고기능성 화학소재 등 고도화 * 경량·극한환경소재, 고순도 화학물질 등 개발	◦ 고기능·첨단화학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PPS, 폴리케톤 등), PI 등 산업소재 기술
섬유	◦ (고부가) 첨단 산업용섬유 세계 시장 점유율 10% * 탄소·슈퍼섬유, 고성능 부직포 등 원천기술·제품개발 ◦ (新산업) ICT기반 스마트·맞춤형 의류 新산업 창출 * 빅데이터 기반 패션산업 육성, 스마트공장 적용	◦ 첨단 산업용 섬유 * 초고강도 탄소섬유 고성능 산업용섬유 소재·제품 기술

[부품 장비 산업군]: 선제적 첨단기술 투자 → 초격차 확보

As-Is	재편 방향(~'22년)	To-Be(제품·기술)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6%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차 등 低전력·超고속 시스템반도체 집중 개발 ◦ (설계) 글로벌 50대 설계기업 5개 육성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조 원 이상 중견기업 2 → 6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워·시스템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C 파워반도체 기술, 뉴로모픽 칩 등 초고속 반도체 설계기술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전환) OLED 매출액 비중(2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OLED 투자프로젝트 인프라 조기구축 지원 ◦ (미래대응) 차세대 OLED 핵심기술 조기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LED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 (국산화) 장비(60→75%), 소재(3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스플레이 매출 3천 억 이상 장비기업 3→10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O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처블 DP, 유연생산 공정기술 (Roll-to-Roll 방식)
기계·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협동로봇 보급 확대, 로봇서비스 제공 ◦ (부품) 국산화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 핵심부품(구동, 센싱, 제어) R&D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서비스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박단소 기술, 고속·정밀제어 모터 등

[완제품 산업군]: 신기술 융합 등을 통한 제품차별화

As-Is	재편 방향(~'22년)	To-Be(제품·기술)
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전) 지능형 스마트 홈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임베디드형AI·첨단센서 R&D, 표준대응 ◦ (경쟁력) 프리미엄화 촉진, 플랫폼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IoT 플랫폼 공유, 스마트공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가전·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상황인지, 기기 간 자율협업 기술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차) 전기차 35만대 보급,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 (기술·인력) 세계최고 수준 기술·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대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국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자율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터리 밀도 30% 향상 (230→300wh/kg), 고속도로 자율주행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선박) 자율운항선박 개발·운항 성공 ◦ (국산화) 친환경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저감, 운항효율 향상 등 4개 분야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친환경·고효율 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운항 STEP4 (先 자체제어) 구현

● 9대 신산업 선정(산업연구원, 2018)

- 12대 신산업, 13개 혁신성장 동력산업, 5대 신산업 분야 등 주요 부처의 신산업 정책 중에서 공통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
 - 산업기반부문: 지능형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소재
 - 인프라(기반기술): 인공지능
 - 융합 제품·서비스: AR·VR, IoT가전, 지능형 로봇, 바이오헬스, 전기차·자율차

3대 부문	신산업 분야	정부 육성 분야			산업 발전단계	비고
		13대 혁신 성장동력	12대 신산업	5대 신산업		
산업 기반	지능형 반도체	○	○	◎	연구개발~도입기	
	차세대 디스플레이		○	◎	연구개발~성장초기	
	이차전지	○	○	◎	도입기~성장초기	에너지 신산업 중에서 선택
	첨단소재	○				
인프라 (기반 기술)	인공지능	○			연구개발~도입기	4차 산업혁명 대표기술
	빅데이터	○				인공지능에 일부 포함
	5G 이동통신	○				
	사물인터넷	○				IoT가전에 일부 포함
	스마트시티	○				
융합 제품·서비스	AR·VR	○	○		도입기	실감형콘텐츠 및 서비스 포함
	IoT 가전		○	◎	도입기~성장초기	스마트홈 포함
	지능형 로봇	○	○		도입기~성장초기	
	바이오헬스	○	○	◎	도입기	제약·신약 포함
	전기차·자율차	○	○	◎	도입기~성장초기	전기차는 제외
	드론	○	○		성장기	
	스마트선박		○			
	프리미엄소비재		○			

• 9대 신산업의 혁신성장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요약

	정책 과제	주요 내용	주요 대상 신산업 분야
산업 생태계 기반	① 전·후방 부문 고도화	◦ 핵심 소재·장비 육성	지능형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 생명공학, 데이터 기반 강화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 서비스 연계성 강화	AI, 지능형 로봇, 바이오헬스, 자율차
	② 중소기업의 혁신 및 제조 역량 강화와 창업 활성화	◦ 소재·부품 기업의 전문화	지능형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지능형 로봇, IoT가전, 자율차
		◦ 창업지원 펀드, VC역할 강화	지능형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실감형콘텐츠, IoT가전, 자율차
		◦ 벤처·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 ◦ 기업 간 협력 활성화	
사업화/시장 창출	③ 본격 성장기에 대응한 사업화 및 시장 창출 지원	◦ 실증·시범사업 지원 ◦ 테스트베드 지원	실감형콘텐츠, IoT가전(스마트 홈), 자율차
		◦ 인증·플랫폼, 표준 지원	디스플레이, IoT가전, 지능형 로봇, 자율차
		◦ 공공구매 및 조달 지원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성장 기반	④ 혁신성장을 이끄는 전문 인력 기반 확충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지능형반도체, 이차전지, 인공 지능, 지능형 로봇, 바이오헬스, 자율차
		◦ 신기술·분야 교육 기반 강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실감형콘텐츠
		◦ 해외 인재 유치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 인재유출 방지	지능형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⑤ 제도 및 규제 정비	◦ 개인정보보호 문제 해소	인공지능, 실감형콘텐츠, IoT 가전, 지능형 로봇, 바이오헬스, 자율차
		◦ 신규 제도 및 규제 정립	이차전지, 지능형 로봇, 바이오헬스, 자율차 등
		◦ 지재산 획득 및 보호	실감형콘텐츠, 자율차 등
	⑥ 신산업 정책 추진의 일관성·효율성 제고	◦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 통합, 연계성 강화	지능형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기술 개발	⑦ 기초·원천 R&D 강화	◦ 응용 분야 SW 및 시스템, 솔루션 등 차세대 기술 확보	지능형반도체, AI,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IoT가전, 자율주행
		◦ 핵심 소재·부품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및 유지	지능형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IoT가전, 자율차
		◦ 응용·상용화 기술 확보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 기초·기반 기술 확보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 자료: 산업연구원(2018)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혁신의 기본방향

- ① 투자 전략: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배분 - 100대 핵심기술 선정
- ② R&D 체계: 도전·축적·속도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구축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Plus R&D
- ③ 산업기술 인프라: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기반 구축 방식 전환
- ④ 성과 창출형 생태계: 신기술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 추진 전략



+ 전략투자분야

- 5대 투자 분야 별로 시장 변화에 대응한 분야별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100대 핵심기술 개발 과제 선정



+ 100대 핵심기술개발과제

	대분류	중분류	핵심기술
수송	전기·수소 자동차 (4)	(전기차) 배터리/충전	① 주행거리 600km 달성을 위한 전기차용 배터리팩 에너지밀도 향상기술 ② 전기차 충전속도 1/3단축을 위한 초고속 대용량 충전시스템 기술
		(수소차) 연료전지 수명향상	③ 상용 수소전기차용 수소연료전지 내구성 5배 이상 향상 기술
		공통기반	④ 냉·난방으로 인한 전기차 주행거리 감소 최소화를 위한 전기차용 공조시스템기술
	자율주행차 (4)	다중센서 기술	① 다중센서융합 기반 인식성능 고도화 기술 ② Hyper-Connected 자율주행시스템 기술
		시스템/플랫폼 기술	③ AI-빅데이터 기반 자율주행 차량부품 기술 ④ 고신뢰 자율주행 보안성·안전성 기술
	친환경 스마트 조선 해양플랜트 (4)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해양플랜트	① 상선적용을 위한 자율운항시스템 ② 선박·해양플랜트 탑재 장비 진단·유지보수 기술 ③ 선박·해양플랜트의 운영·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시스템
		친환경연료 추진선박	④ 선박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가스연료추진기술
	차세대항공 (드론포함) (4)	무인 모빌리티 헬기	① 자율비행 개인항공기(PAV) 및 중대형 드론 핵심기술 ② 민수헬기 핵심기술
		항공기 부품	③ 구조물 설계·제작 및 공정 기술 ④ 엔진, 항공전자 등 항공 핵심 부품 기술
건강관리	디지털 헬스케어 (4)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① 분산형 의료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 ② 의료 통합 플랫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③ 초고령화시대 대비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 및 실증 모델
		AI기반 혁신 의료시스템	④ 융합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4)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기술	① 개량형 바이오의약품 기술
		정밀진단 시스템	② 맞춤형 질병정밀진단 시스템 및 다중시료 자동화 분석 기술
		조직재생 및 인공장기	③ 3D-조직칩 상용화 기술
		장내미생물 응용기술	④ 치료용 인체 장내미생물 대량생산 기술
	스마트 의료기기 (4)	지능형 정밀진단 의료기기 및 플랫폼	① 고해상도 스마트 영상 기반 진단·치료 장비 ② 지능형 환자 케어 시스템
		멀티모달 융합수술	③ 디지털 치과 치료용 원스탑 솔루션

	대분류	중분류	핵심기술
생활		및 치료기기	
		재활 기기	④ 동작 의도 감지형·동력형 재활보조 기구
	스마트홈 (4)	공동주택 체험형 서비스	① 소비자 비용절감, 보급형·프리미엄, 사회복지 등 국민체감형 서비스 융합 기술
		지능형 미래 홈 플랫폼	② 상황인지 기반 공간활용 스마트 인테리어 기술
		지능형 홈케어가전	③ 지능형 AP기반 홈 연동제어 기술
	서비스로봇 (4)	로봇지능·부품 기술	④ AI·데이터·로봇기술 응용 디바이스·서비스 실증
		서비스로봇	① 로봇을 이용한 일상생활 물품의 유니버설 파지 기술
			② 로봇의 강건한 실내외환경 자율주행 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 (4)	비침습 기술	③ 인공지능 내비게이션 기반 경조식 로봇 수술
			④ 일상생활 환경 가사지원 로봇 기술
		가상증강 기술	① 비침습 생체화학 및 생리학적 정보 동시검출 및 연속모니터링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② 산업/제조 현장에서 생산성, 안정성 향상을 위한 가상증강 기술장기 제공 가능 안전 비행기체 시스템
	미래형 디스플레이 (4)	XR(Extended Reality) 기반 산업용 협업시스템	③ 초저전력 경량 SoC, 센서 및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무인기 부품 상태 및 수명관리 기술
			④ XR 디바이스 기반 인공지능 기능으로 자신의 작업내용 및 노하우를 XR Activity로 관리하는 CPS(Cyber-Physical Systems) 융합 기술
		혁신공정·소재 기술	① 상압에서 코팅, 패터닝이 가능한 대형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기술
		플렉서블 기술	② 상압에서 코팅, 패터닝이 가능한 신공정용 화소형성 디스플레이 소재·소자 기술
	지능정보 서비스 (4)	고화질/기능성 패널 기술	③ 곡면 부착이 가능한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및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술
			④ 고화질·고해상도(Rec. 2020 규격) 대면적 디스플레이 및 생체인식 일체형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케어서비스	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음성인식 및 서비스 기술
		교육서비스	② 개인 이력 관리 기술
에너지·환경	수소에너지 (3)	생산, 운송·저장 및 활용	③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 기술
			④ 예지관리형 맞춤형 유통지원 서비스 기술
			① 천연가스 추출, CO ₂ free Green 수소생산기술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6)	태양광	② 수소 압축/액화/액상 고효율 저장 및 운송 기술
			③ 보급형 연료전지 효율향상 및 가격저감 기술
			① 실리콘 태양광 모듈 효율 향상 기술
	지능형 전력시스템 (4)	태양광	② 박형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
			③ CIGS 박막 태양광 모듈 저가화 및 양산화 기술
		풍력	① 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② 부유식 해상풍력 실해역 실증 및 운영관리 기술
			③ 부유식 해상풍력 환경성 및 수용성 확보기술
	에너지 효율향상	산업효율향상	① 스마트미터링(AMI) 상호 운영성 확보 기술
			②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서비스 실증
			③ 분산집합발전소 및 중개거래시스템 운영 실증
			④ 차세대 송배전시스템 핵심기술 상용화
			① 산업/공업단지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 관리 기술
			② 네트워크 기반 산업용 전기 다소비기기 통합 운영 기술

	대분류	중분류	핵심기술
	(4)	건물효율향상	③ 스마트공장 기술 적용 산업부분 에너지 관리 기술 ④ 제로에너지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기술(국토부 협업)
	청정생산 (4)	청정생산	① 4차 산업혁명 연계 기술 적용을 통한 청정생산 기술 고도화 ②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기술
		자원순환	③ 순환공정 핵심 자원확보를 위한 공정내 원료 추출 기술 ④ 폐제품의 신품 동등 성능 확보를 위한 재제조 기술
	원자력 안전 및 해체 (3)	안전 기술	①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한 중대사고 대비 원전 관리 기술
		해체 기술	② 원전 해체 시 구조물 제염 및 효율적 철거 기술 ③ 원전 해체를 통해 발생된 방사선 폐기물 처리 기술
제 조	첨단소재 (6)	고효율 친환경 소재	① 수송기기용 경량·고강도 소재 ②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생산·저장·수송 소재
		첨단공정소재	③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첨단 센싱소재 ④ AI 빅데이터 활용 소재설계 및 제조공정기술 ⑤ 3D프린팅용 소재
		바이오 화학소재	⑥ 환경규제 대응 바이오 화학소재
	차세대 반도체 (5)	인공지능 반도체 (구동 및 제어 목적)	① 빅데이터, 클라우드 환경용 엣지 디바이스 반도체
		센서기반 상황인지 반도체 기술	② 환경정보 및 상황인지형 센서융합 반도체 ③ 자동차/드론/로봇용 고속 및 광범위 인지형 반도체 ④ 사용자 정보 제공용 경량지능 IoT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	⑤ 원자수준의 3D 적층형 반도체 기술
	첨단 제조 공정·장비 (5)	정밀가공시스템	① 차세대 자동차 신수요 부품 대응 하이브리드 가공장비 기술 ② 복합 형상 및 난삭재 가공 첨단 장비 및 고효율/고유연화 기술
		스마트 장비·시스템	③ 산업용 CPS 및 디지털 트윈 응용 기술 ④ 산업용 IoT 데이터 수집·분석·처리를 위한 플랫폼 기술
		로봇융합생산시스템	⑤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자동화 생산라인 구축용 로봇 융합 기술
	스마트 산업기계 (4)	스마트 건설 기계	① Level 3 자율 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기술 ② 건설기계 군집제어를 통한 토공 작업 자동화 기술 ③ 전복 및 충돌방지 기능이 탑재된 초대형 지능형 크레인 기술
		농기계	④ Level 3 자율주행 및 농작업이 가능한 트랙터상용화 기술
	스마트 엔지니어링 (4)	설계 자동화	① 지능형 설계 자동화 지원 기술
		PM 선진화	② 플랫폼 기반의 프로젝트 관리 의사결정 시스템 기술
	3D 프린팅 (4)	통합·운영 고도화	③ 지식기반 스마트 O&M 지원 플랫폼 기술 ④ 전주기 통합관리 미래선도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술
		3D프린팅 소재·부품	① 비철계열 난삭성 금속재료의 3D프린팅 기술 ② 다중재료 하이브리드 3D프린팅 기술
		3D프린팅 장비·제품	③ 초대형 조형물 제작을 위한 로봇기반 3D 금속 프린팅 기술
		3D프린팅 설계·부품	④ 복잡한 형태의 부품 제조를 위한 3D 프린팅 특화 설계(DfAM) 기술

다. 신산업 관련 규제 동향

1) 규제 완화 및 해소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미래 산업이 교차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통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신산업 분야에 적용할 경우 융·복합 신제품 등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따라서 ①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착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규제, ② 정부가 정해진 사업영역이 아니면 기업활동 자체를 불허하는 포지티브규제 ③ 융·복합 신제품을 개발해도 안전성 인증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제때 출시 못하게 만드는 규제 및 인프라 부재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 해소 필요

2) 5대 신산업 규제 동향

- 미래 산업에 대한 R&D는 지속적인 투자와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하는 반면, 신산업 및 신기술 관련 법제도 시스템은 새로운 규제 관리 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은 국가 주도의 집중 투자로 글로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및 의료정보 활용 제한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의사 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허용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 대두
 -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보다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부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의료기기 및 신약의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트랙 도입, 한국형 의사 환자간 원격진료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등이 요구되고 있음
 - 현행법상 유전자 치료의 범위를 국한하고 있어 연구 범위가 제한되며 관련 신약 개발이 불가능한 점도 개선 필요
 - 미국 유, 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료기기 및 웰니스 제품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허가 인증제도 개선 의료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음
 - 미국, 유럽은 동식물뿐 아니라 인간 대상 유전자 편집 임상시험을 준비중이며, 중국 또한 난치질환에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음
 - 국외 규제기관 미국 일본(FDA, PMDA, Health Canada), 캐나다는 신속 심사 프로그램, 우선 심사 가속 승인 등을 도입하여 신약의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심사요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운행규제, 정보활용 규제, 관리규범 부재 등의 문제로 상용화 단계에

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IoT, ICT의 경우 관련 규제 샌드박스 도입 논의로 규제프리존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주파수 할당 제조 관련 인허가 지연 문제가 있음
- 에너지 신산업의 경우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 및 효율적 사용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효율성이 낮은 인허가제도 불안정한 신재생 에너지 가격 등으로 민간주체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라. 시사점

- 정부의 중점육성 신성장산업 분야를 접경 지역 특화 산업으로 선정 필요
 - 접경 지역 관련 주요 육성 대상 산업 분야
 - 전기차, 자율주행차 소재부품
 - IoT 가전 관련 소재부품
 -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
 - 바이오·헬스
 - 고기능성 섬유
 - 고부가가치 철강, 경량 소재
 - 기계·로봇 핵심 부품(경박단소기술, 고속 정밀제어 모터 등)
 - 항공, 드론
 - 프리미엄 소비재
 - 제조업분야 특화 산업 발굴에 반영
 - 4차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전기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 팩토리 테스트베드), 프리미엄소비재산업, 첨단소재부품산업 등
 - 지역혁신역량 확충 지원 필요
 - +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
 - (기능) 기존의 생산거점에서 산업거점 클러스터로 기능 혁신
 - 산단 내 산·학·연 네트워크(MC)를 인근 산단 등 지역 내로 확대하고, 참여기업 간 공동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통해 산업거점 클러스터 육성
- * R&D 위주의 산학연 협력을 넘어 가치사슬 연관 기업 간 제품기획-R&D-생산-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조합형 MC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확산

- 산·학융합 촉진을 위한 ‘산·학융합지구’ 확대(’22년까지 15개)

- (분야)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융·복합 산업 중심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혁신성장 촉진지구」 신설,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추진
- (환경) 우수 혁신인재가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산단환경개선펀드*와 정부합동공모사업**을 통해 근로·정주 환경 지속 개선

*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을 건립하기 위해 ‘산단환경개선펀드’ 지원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어린이집(고용부), 임대주택(국토부) 등을 지속 확충

+ 지역 밀착형 풀뿌리 성장기반 조성

- (주체)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수요 대응 → 지역 일자리 창출·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풀뿌리 성장 기반 조성
 -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여 공공·시장경제 부문을 보완 → ’00년 이후 약 1.5만 개의 사회적경제 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활동
 - 시·도별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 해당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사업(신규, 98억 원): 사회적경제 기업의 마케팅·디자인·R&D·전시회·투자연계·유통 등 지원
- (제도)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기업 밀착형 제도개선 추진
 - (예) 「재생에너지 3020」과 연계하여 지역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 시민 참여에 따른 REC 가중치 부여, RPS 대행 제도 마련 등

2.4 접경 지역 시·군의 제조업 현황 및 육성 정책

가. 김포시

● 기본 여건

- 김포시는 산업체가 늘어나고 신도시 개발과 함께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경기도내 인구증가율 1위, 전국 인구증가율 1, 2위를 다투고 있음
 - 2019년 6월말 기준 인구는 452,137명(외국인 포함)
- 김포시는 한강과 서해, 염하강과 조강, 남은 경인 아라뱃길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서북쪽 3면이 한강과 염하강으로 둘러싸인 반도로, 김포 평야는 예로부터 곡창 지대로 유명하며, 북으로는 조강(한강하구)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개풍군과 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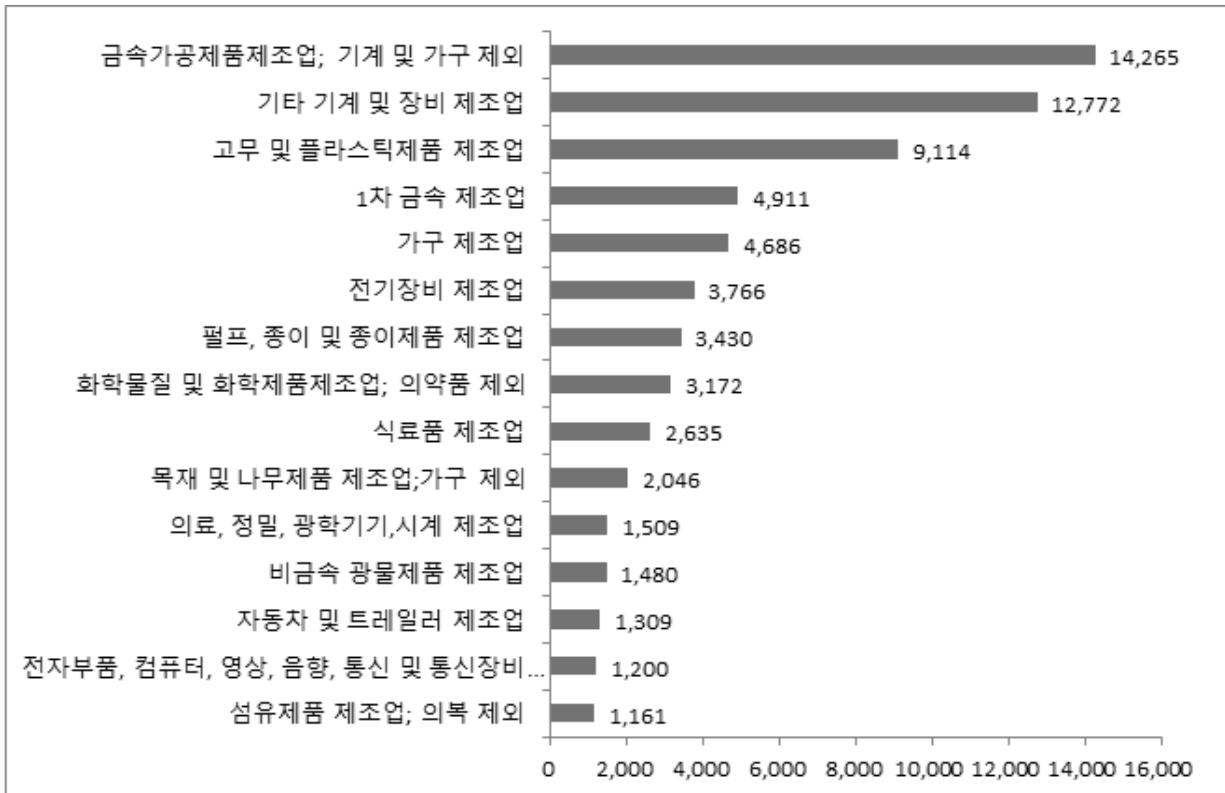
- 김포공항, 인천공항, 경인 아라뱃길(고촌물류단지) 등 지리적으로 유리한 접이지대로 대한민국 복합물류 거점 중심지로 급부상
-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주거지 확대에 따른 민원발생 증가에 대응하여 시 조례를 강화하여 공해배출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음
 - 늘어나는 공장 입지 수요에 대응하여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계획 중인 1개 단지를 포함하여 14개 산업단지 분포

● 산업 현황 및 정책

- 김포시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에 힘입어 접경 지역 중 제조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음

〈그림 III-19〉 김포시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2017년 말 기준)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 서울, 인천 등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므로 지식기반사업단지 유치, 첨단산업 육성 도모하는 한편, 제조업 지원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 발전 가속화 유도
- 국제무역을 선도하는 콘텐츠 산업 도시 육성
 - 파주LCD단지 및 고양, 인천 송도 청라지구와 연계된 서북부권 첨단산업 중심의 지식기반 클러스터 육성

- 대곶 항공 지방산업단지와 연계된 항공, IT 등 첨단 업종의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항공대학 유치를 통한 미래형 지식 인재 육성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초고속 정보통신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지역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업정보센터 건립 등 지역정보 통합관리 시스템구축과 지리정보, 재난, 환경, 교통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

● 대표산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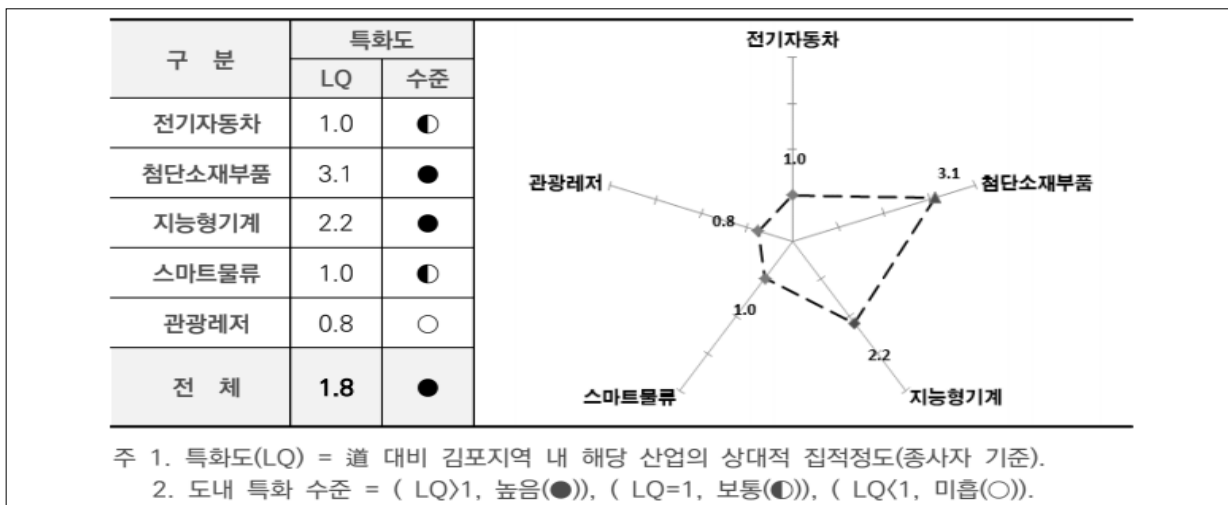
- 김포시 미래 선도 신산업으로 ‘전기자동차’,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소재부품’, ‘지능형기계’, 기반 인프라 ‘스마트물류’, 연계산업으로 ‘관광레저’ 등 5대 사업 선정(출처: 김포시)
- 5개 대표사업 중 경쟁력 수준인 높은 분야는 ‘첨단소재부품’, ‘지능형기계’

〈그림 Ⅲ-20〉 김포시 5대 대표산업



※ 자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그림 Ⅲ-21〉 김포시 5대 대표산업 경쟁력



※ 자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첨단소재부품

- 소재부품은 일반적으로 원자재 → 중간재 → 최종재로 완성되는 제품 생산의 가치사슬 구조에서 가공 공정을 거친 제품을 의미하며, 첨단소재부품은 경량화, 고기능화, 고효율화 등의 다양한 기능과 형상의 물품 제조로 분류
- 첨단소재부품 관련 업종 사업체 수는 총 3,891개, 종사자는 30,645명
 - ▶ ‘금속 구조 및 가공’ 사업체가 2,265개로 대표사업의 58%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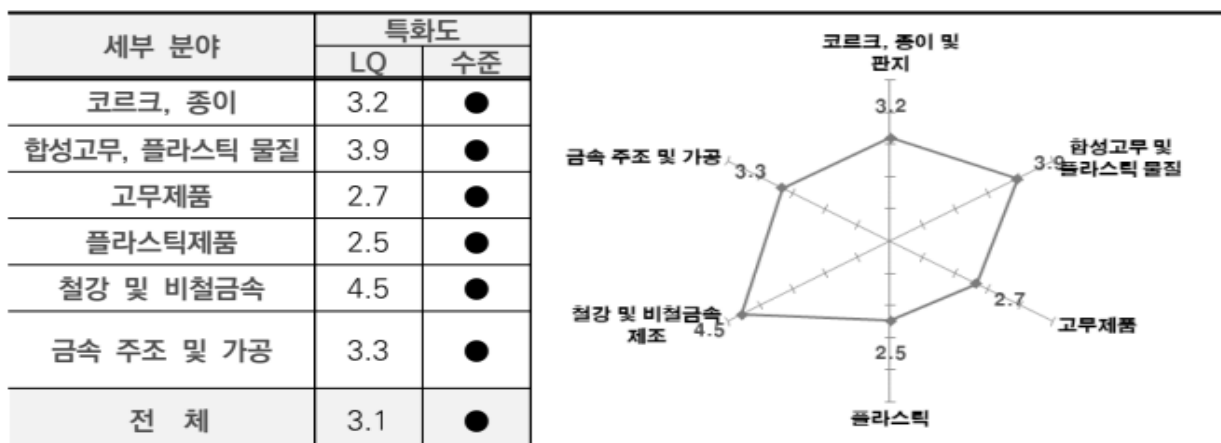
〈표 III-21〉 첨단소재부품 세부업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세부 분야	사업체수	종사자수	도내 종사자 비중
코르크, 종이	326	3,069	9.9%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157	1,017	12.1%
고무제품	107	781	8.2%
플라스틱제품	805	7,160	7.7%
철강 및 비철금속	231	2,483	14.1%
금속 주조 및 가공	2,265	16,135	10.2%
합 계	3,891 개	30,645 명	9.7%

※ 자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첨단소재부품’은 대표사업 중 지역산업 여건이 가장 우수한 분야로 6개의 세부분야에서 모두 기업이 집적되어 있어 도내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

〈그림 III-22〉 첨단소재부품 세부업종 경쟁력 수준 분석



주 1. 특화도(LQ) = 도 대비 김포지역 내 해당 산업의 상대적 집적정도(종사자 기준).
 2. 도내 특화 수준 = (LQ>1, 높음(●)), (LQ=1, 보통(○)), (LQ<1, 미흡(○)).

※ 자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능형기계산업 현황
 - 지능형기계는 기계산업에 IT, NT, ET와 같은 기술이 융합되어 안정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기계로 전통적인 기계산업에 신기술과 타 산업의 융합으로 창출된 기계부품 및 장치를 총칭
 - 지능형기계 관련 업종 사업체 수는 총 1,234개, 종사자는 10,022명
 - ‘유압, 펌프 및 일반기계’ 사업체가 528개로 약 43%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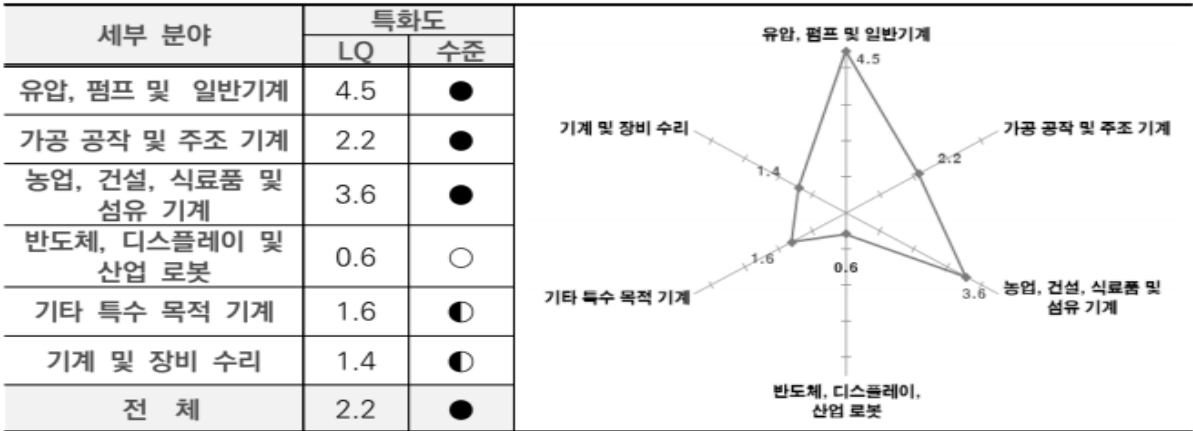
〈표 Ⅲ -22〉 지능형기계 세부업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세부 분야	사업체수	종사자수	도내 종사자 비중
유압, 펌프 및 일반기계	528	4,973	13.8%
가공 공작 및 주조 기계	138	783	6.7%
농업, 건설, 식료품 및 섬유 기계	100	1,046	11.0%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로봇	13	706	1.8%
기타 특수 목적 기계	359	2,191	5%
기계 및 장비 수리	96	323	4.4%
합 계	1,234개	10,022명	6.8%

※ 자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능형기계’는 5개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산업로봇’ 분야는 경쟁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
- 지능형기계산업에서 유망 아이템은 ‘공장 자동화 시스템(기계)’
 - 인천/부천 등이 개발되면서 김포로 이전하는 관련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Ⅲ -23〉 지능형기계 세부업종 경쟁력 수준 분석



주 1. 특화도(LQ) = 도 대비 김포지역 내 해당 산업의 상대적 집적정도(종사자 기준).
2. 도내 특화 수준 = (LQ>1, 높음(●)), (LQ=1, 보통(◐)), (LQ<1, 미흡(○)).

※ 자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현황

- 전기자동차 산업의 범위는 제조에서 AS까지 모든 관련시장을 포함
- 아직까지 자동차 부품제조, 완성차 조립 등 후방산업*의 경쟁력이 약하지만 정비, 배터리 재활용 등 전방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육성 가능성 존재

* 현재 전기자동차교육센터에서 정비사,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고 전기차 배터리 처리 방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

- 전기자동차 관련 중소 전장부품 업체*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기업**의 집적(클러스터화) 필요

* 대표 관련 기업은 심명전기(모터)와 금속가공 업체 연계 가능

** 마곡지구와 연계하여 첨단산업(SW) 집적 및 고급인력 유치 추진

- 김포시 전기자동차 관련 업종 사업체 수는 총 1,121개, 종사자는 8,6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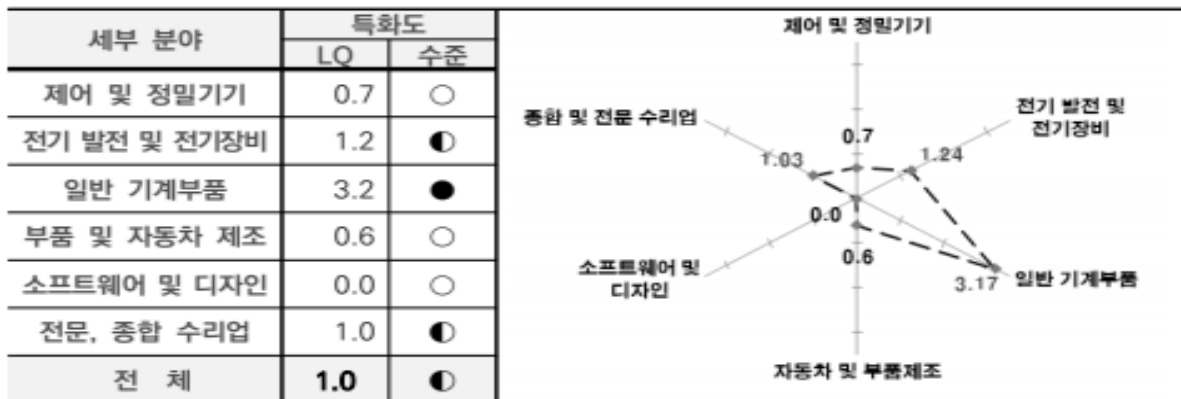
- 일반 기계부품, 전기발전 및 전기장비, 전문 수리 분야를 중심으로 업체 구성
- 세부분야 중에서 일반기계부품 분야 경쟁력이 가장 높고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역량은 매우 부족

〈표 III-23〉 전기자동차 세부업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세부 분야	사업체수	종사자수	도내 종사자 비중
제어 및 정밀기기	59	597	2.1%
전기 발전 및 전기장비	338	2,797	3.8%
일반 기계부품	295	2,686	9.8%
부품 및 자동차 제조	109	1,404	1.9%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11	32	0.09%
전문, 종합 수리업	309	1,099	3.2%
합 계	1,121 개	8,615 명	3.1%

※ 자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그림 III-24〉 전기자동차 세부업종 경쟁력 수준 분석



주 1. 특화도(LQ) = 도 대비 김포지역 내 해당 산업의 상대적 집적정도(종사자 기준).

2. 도내 특화 수준 = (LQ>1, 높음(●)), (LQ=1, 보통(◐)), (LQ<1, 미흡(○)).

※ 자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나. 고양시

● 기본여건

- 고양시는 경기도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남동으로 서울과 접하고, 북동으로 양주시, 북서로 파주시, 남서로는 한강을 끼고 김포시와 인접하고 있음
- 통일로 자유로 경의선 중심축에 있으며 군사분계선과 20km 떨어진 통일 거점도시
- 고양시는 접근성이 양호한 수도권 북부물류 및 교통의 요충지
-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이 인접해 있으며, 자유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속철도, 전철3호선, 제2자유로, 경의선복선전철 통과
- KINTEX, MICE 복합단지, 한류월드, K-컬처밸리 등 인프라를 통해 국제교류의 중심지 부상

● 산업환경

- 고양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은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고양시 방송영상산업 사업체는 860개이며, 세부업종별로는 출판 383개, 영상 오디오 제작 및 배급업 195개, 방송업 8개 등임(출처: 고양시정연구원)
- 고양시 정보통신업 종사자 수는 총 6,747명으로 접경 지역 전체의 56.3%를 차지(경기도 전체 정보통신업 종사자 대비 6.2% 비중 차지)

〈그림 III -25〉 고양시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2017년 말 기준)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업지역지정 금지 및 산업은 도시형, 첨단산업 단지에 한하여 허용

-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비전과 전략 추진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콘텐츠산업 집적지
-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청년 스마트타운 사업, 방송영상문화 콘텐츠 밸리,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테마파크, 관광특구, 3대 스트리트) 조성 추진
 - MICE·관광 산업: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장 KINTEX를 보유
 - 방송통신산업: MBC·SBS 제작센터, 한류월드(관광문화단지), K-컬처밸리 등 조성
 - 첨단의료산업: 동국대 의생명과학대학을 중심으로 5대 종합병원이 위치

●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 고양시의 경우 산업기반이 취약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발굴한 전략산업이 영상 콘텐츠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정부에 제안을 하면서 ‘고양시 = 문화 콘텐츠’ 라는 이미지 구축
 - 대부분의 방송 콘텐츠 기업 본사는 서울 상암동에 위치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한 제작센터 등의 Back오피스는 고양에 위치
 - 현재 콘텐츠 제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부기업이 고양시 기업을 활용해 방송 제작을 하면 제작센터 이용료의 일부를 각 기업에 피드백 해주는 지원 사업 시행 중
- 고양 영상문화단지 기본 구상
 - 남-북 공동 영상 콘텐츠 단지 조성
 - 고양 아쿠아스튜디오 연계 영화촬영 + 세트시설 + 관광 산업 융합
 -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고양 방송영상밸리,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등과 연계 추진
 - 종합 스튜디오, 의상 및 소품보관 전시실, 세트 제작실 및 보관실, 영상·영화 촬영거리, 영상 테마공원 및 전시관, 수련관, 위락·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종합촬영단지 조성

01/ 영상제작 기반시설

- **한국 최대 아쿠아스튜디오 강화**
- 특수촬영 및 특수효과 기능
- 복합화로 영상제작 인프라 조성
- 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및 지원
- 융복합 특수 촬영(4차산업혁명)

02/ 남북 콘텐츠 교류협력

- **남북 영상 콘텐츠 공동제작센터**
- 콘텐츠 교류 지원 및 영상제작 협력
- 영상산업 등 문화교류를 통한 민간부문 교류 활성화
- 남북 영상 전문인력 교육 및 교류

03/ 문화시설

- **영상 콘텐츠 활용 문화 콘텐츠**
- 방송영상산업 관련 엔터테인먼트
- 직업체험, 생활안정 등 특수목적 교육
- 전시관,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인프라 조성

다. 파주시

● 기본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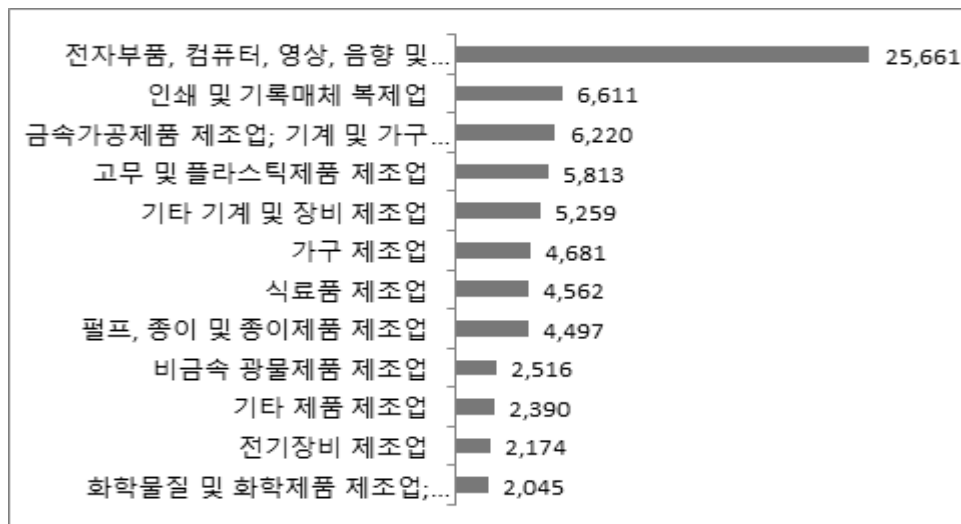
- 동쪽으로 양주시, 북쪽으로 연천군과 북한, 남쪽으로 고양시와 접하고 서남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와 인접, 서쪽에는 임진강과 사천을 경계로 북한 개풍군과 마주하고 있음
- 약 75km에 이르는 임진강이 파주의 동서를 가로지르고 있음
- 파주시의 주요 교통축은 자유로, 국도1호선(통일로)으로 경의선과 함께 남북으로 발달되어 있어 향후 남북한 육로교통의 요충지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 산업환경

- 파주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순
- 파주시 정보통신업 종사자 수는 총 4,139명으로 접경 지역 전체의 34.6% 차지(경기도 전체 정보통신업 종사자 수의 3.8% 비중 점유)

〈그림 Ⅲ -26〉 파주시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2017년 말 기준)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 파주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신증설이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
- 늘어나는 공장입지 수요에 대응하여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분양 및 조성계획 중인 6개 단지를 포함하여 19개 산업단지 분포
 - 통일시대 경제교류거점, 평화, 안보, 관광 중심도시로 발전 도모
 - 예술문화창조, 복합문화 및 출판도시 및 파주 LCD로 대표되는 첨단산업기반 확충
- 경기 북부제1산업벨트와 연계한 산업 거점 마련
 - LCD 산업단지, 축현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와 추진 예정인 파주희망프로젝트, 파주경협 산업단지 등 산업클러스터를 통해 경쟁력 강화
 - 고양시 문화 콘텐츠, 의료기기 산업, 개성공단과 광역 연계체계 구축
- OLED 산업 육성을 위한 LCD 산업단지 내 P10 사업 추진
 - LCD 산업단지 내 P10 공장 건설, 용수, 전력 등 인프라 기반 구축
 - 세계적인 OLED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산업 거점 마련
- 파주문산 통일경제특구 개발 계획
 - 파주 남북경제 협력단지 건설
 - IT중심의 연관 지식기반산업과 개성공단 연관산업, 물류산업으로 특화
 - 접경도시 개념의 남북교류 협력도시 건설
 -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 대비 대북교류 협력행정, 과학기술 전수 및 연수, 산업 물류관련 시설 유치
 - 산업형 교류발전지구 조성
 - 경제 협력 및 남·북 동질성회복을 위한 경제·문화 교류 협력 거점 조성
 - 9.9km²(남·북 교류 협력단지 4km² + 배후도시 5.9km²)
 - ▶ 남·북 교류 협력단지(산업·물류 2km², 협력업무 1km², 기술교류 0.3km², 관광숙박위락 0.7km²)
 - (문제점) 산업형 교류발전지구 사업은 접경 지역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사업 추진 여부나 추진 시기 등 구체적인 사업방향 미정
 - ▶ 행정안전부 접경 지역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산업형 교류발전지구와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이후 조성될 통일경제특구와 연계 방안 마련 필요

라. 양주시

● 기본여건

- 경기 북부 물류교통의 중심지
 - 양주시는 국토 공간상 경기도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서울시 경계로부터 반경 20km 지점에 위치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2017년 6월 완공),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국도 3호선, 국도 39호선 등의 도로망을 통해 양주시는 서울시와 경기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경기 북부의 중심 거점도시의 역할을 담당함
- 광역 교통망 여건 개선과 함께 신도시 접근성 향상으로 인구 유입 증대 전망
 - 2019년 10월 말 현재 인구는 229,378명
-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추진

● 산업 현황

- 양주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은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식료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순

〈그림 Ⅲ-27〉 양주시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2017년 말 기준)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 양주시 산업 현안

- 전통적 농업 및 영세 제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
- 섬유 등 지역특화 산업의 영세성 및 경쟁력 취약
-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 동력 산업 미흡
- 개별입지 중심의 산업입지(수도권 규제)로 인한 산업기반시설 미흡
- 낮은 일자리 자급도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 주요 산업정책

-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성장산업으로 스마트생활소비재 산업 육성 정책 추진

-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양주시의 지리적 이점 및 제조기반을 바탕으로 경기 북부의 성장을 이끌어 갈 혁신거점 마련 필요
 - ▶ 2025년까지 남방동과 마전동 일대 55만5천㎡의 개발제한구역에 2천635억 원을 들여 섬유·패션과 전기·전자 분야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
 - ▶ 특정업종을 유치하기보다는 기존의 도시형 산업, 뿌리산업, 기계산업 등을 기반으로 서비스융합 및 데이터기반 혁신을 지향
 - ▶ 대학, 연구소, 대기업 등 앵커 기업 및 기관 유치
 - ▶ 젊은 인력 확보와 도시형 첨단업종 유치, 창업생태계조성 등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 (경기 북부 비즈니스센터 건립) 경기 북부 주요 혁신기관을 집적화하여 경기 북부의 공공 지원거점 조성
 - ▶ 경기 북부 아이디어 창출 및 융복합의 공간 마련
 - ▶ 의정부, 양주, 고양, 포천 등에 소규모로 분산된 중소기업지원기능을 집 적화하여 효율화 및 시너지 제고
 - ▶ 창업자, 기업, 지원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융복합 스타트 업 발굴, 새로운 가치 및 시장 창출
- (스마트제품혁신지원센터)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구조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형 창업을 용이하게 하는 생태계 조성
 - ▶ 양주시의 전통제조업과 뿌리기술산업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 발굴 추진: 디자인, 신기술, 디지털 등과 융합한 스마트제품 개발 프로그램 지원
 - ▶ 3D 프린팅, IOT 등을 생산에 도입하여 전통제조업을 스마트 제조업으로 전환

마. 포천시

- 기본여건

- 2017년 말 기준 인구는 165,339명(외국인
- 12,414명 포함)으로 10년 전 수준과 비슷하며, 최근 소폭 감소 추세

- 향후 남북 협력사업과 주요 행사 유치로 통일시대 한반도 거점도시 역할 기대
- 서울에서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하며, 세종-포천 민자고속도로,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포천선(전철 7호선) 철도 등으로 교통 여건 개선

● 산업 현황

〈그림 III -28〉 포천시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2017년 말 기준)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 포천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은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식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순
- 현재 5개 산업단지에 총 198개 업체 입주하였으며, 실제 가동업체는 96개사(가동률 48.5%, 입주계약은 총 224개 사)
 - 산업단지 입주계약업체의 49.1%인 110개 사가 섬유업체이며, 포천의 대표업종인 가구제조업은 7개사 입주에 그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것으로 분석됨
- 경기가구인증센터, 경기가구디자인창작스튜디오
 - 경기가구인증센터는 700m² 공간에 총사업비 15억 원 투자
 - 주요 사업은 경기도 내 가구기업 가구인증 시험 자원으로 친환경 가구제품 개발, 생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구기업 경쟁력 확보 및 가구기업 인지도 확대
 - 경기가구디자인창작스튜디오는 면적 578m² 공간에 총사업비 6억 원 투자
 - 경기 가구디자인창작스튜디오는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을 목적으로 조성
 - 주요 사업은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교육 및 가구제작 실습 교육 수행

● 산업정책

● 포천 드론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계획

- 4차 산업 아이템인 드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포천 드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창업지원, 기업 유치,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 계획 수립
- 주요 사업 내용은 벤처 창업지원센터 설립, 기업입주센터, 기업지원센터 및 생활 인프라 구축 등
 - ▶ 벤처 창업지원센터는 창업 컨설팅, Maker Space, 마케팅, 펀딩, 직무교육 및 훈련 등 창업 관련 종합 지원업무 수행
 - ▶ 기업입주센터는 공유형 사무실, 세미나실, 홍보관 등 기업입주 공간 지원
 - ▶ 기업지원센터는 공동연구개발센터, 실증실험센터 등 R&D 지원 업무 수행
 - ▶ 이 밖에 기숙사, 연수원, 공공 거주 시설, 병원, 스포츠센터는 생활 인프라 구축
- 현재 추진현황 및 계획
 - ▶ '19.12 : 포천 드론 클러스터 구축 계획 수립 용역 발주
 - ▶ '20년 하반기 : 부지확보
 - ▶ '21년 : 입주업체 유치, 드론 수요 창출 추진

●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총 309,126㎡ 면적에 621.2억 원을 투자하여 펄프, 종이 및 가구제조업 클러스터화 추진
- '19년 6월 착공, '20년 말 준공 예정

● 고모리에 디자인산업단지 조성사업

- **(목적)** 패션·디자인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창조적 융·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
- **(위치)**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산 2번지 일원 439,562㎡(약 13.3만 평)
- 현재 진행 상황
 - ▶ 타당성 평가 결과 경제성 미달로 인하여 당초 공영개발 계획을 변경하여 가구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전환,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추진
 - ▶ 포천시, (주)한샘, (주)한샘개발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투자 협약 체결('19.10.14)

● 나전칠기 명장 정수화 공방

- 2001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13호 칠장으로 지정
- 2018년, 포천 고모리에 근처 초가팔리로 공방 이전
- 포천시 브랜드 접목한 작품 제작 등 가구공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추진 중

바. 동두천시

● 기본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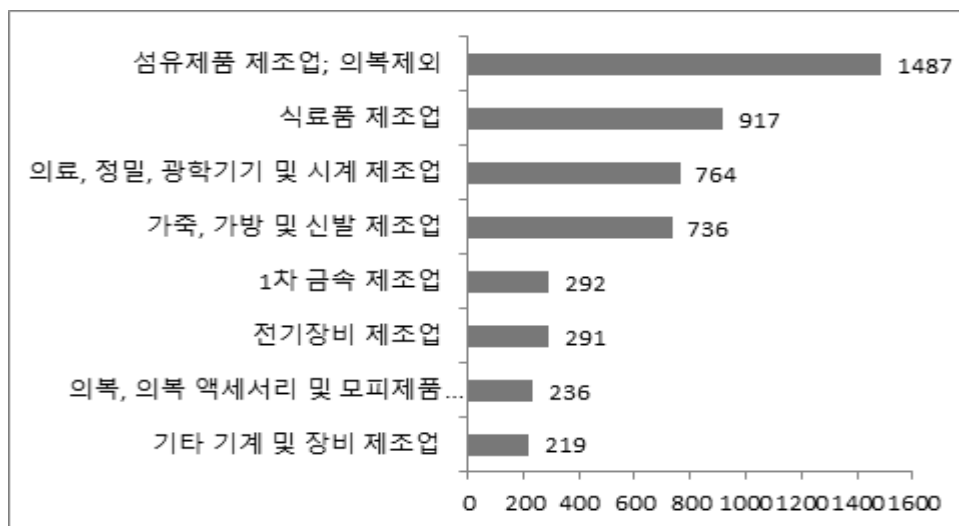
- 동두천 동단은 포천시, 남서단은 양주시와 접하며, ‘구리~포천 고속도로’, 서울~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철원(57km)을 잇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2020년 개통 예정), 경원선 급행열차 증대 등으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 동두천시의 인구는 2006년 경원선(전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상당한 수의 인구가 유입되었음
 -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동두천시 내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진행되고 미군기지 부지 반환이 미뤄지면서 인구증가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 '19년 11월 말 기준 인구 94,779명

● 산업 현황 및 정책

- '17년 말 기준 사업체 수는 총 6,388개, 종사자 수는 28,252명이며, 이 중 제조업체는 508개, 제조업 종사자 수는 5,915명
 -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각각 전체의 8.0%, 20.9%로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이 업체 수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동두천 상봉암산업단지 등 일반산업단 3개소, 지식산업센터(동두천싸이언스타워) 1개소, 동두천두드림패션센터 등 소재
- 동두천시 제조업 종사자 분포를 보면, 섬유업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 -29〉 동두천시 주요 제조업 종사자 수(2017년 말 기준)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사. 춘천시

● 기본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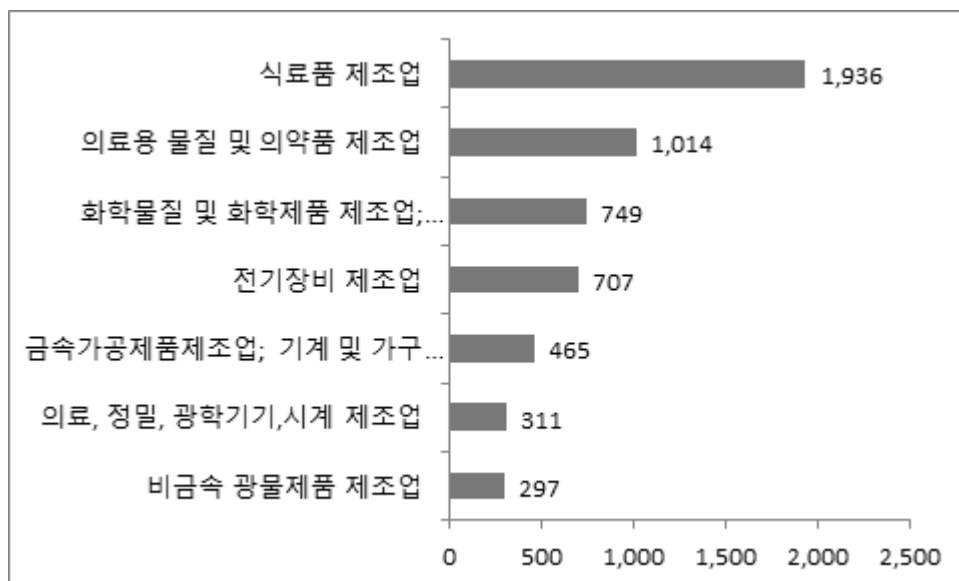
- 춘천시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경춘선 전철, 동해안 고속철도(계획) 등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저렴한 토지/물류비용, 풍부한 용수 등 경쟁력 있는 산업환경 보유
- 춘천시 인구는 281,291명('19년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0.4% 증가율 기록하였으며, '17년 이후에는 인구증가율이 정체 상태(연평균 0.07% 증가)
- 소양강댐 일원은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9.3℃의 심층냉수를 다량 보유(소양강댐 저수량 29억 톤)

● 산업 현황 및 정책

- 춘천시 제조업체는 1,195개, 제조업 종사자는 후평일반산업단지, 퇴계농공단지,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13개 산업단지가 있음

〈그림 III-30〉 춘천시 주요 제조업 종사자 수(2017년 말 기준)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 강원도는 춘천시를 ‘수도권 첨단산업·레저관광휴양도시’의 장기비전 목표 하에 R&D 기능을 토대로 한 지식기반형 경제도시권 육성 정책 수립
 - 춘천의 5대 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 정보, 문화, 관광·레저 환경산업 육성
- 수열 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계획 수립

- 춘천시 수열 에너지 융복합사업은 '17년 8월 국토부가 주관하는 '투자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음
- 춘천시 동면 일원 78만5천㎡(약 23만8천 평)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3천27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데이터 집적단지,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와 물 기업 특화 산업단지 등을 조성

〈그림 III-31〉 소양강댐 수열 에너지 발생 개념도



※ 자료: 연합뉴스

2.5 워킹그룹 자문회의

- 워킹그룹 자문회의를 통하여 4개 분야 특화 산업발굴을 자문받음
 -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 지식콘텐츠산업은 파주시 출판단지, 고양시 영상문화단지 등에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남북교류 협력 대상 산업으로 적합하다고 제안함
 - 경기 북부지역에 중소제조업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시험인증기관이 부족하여 경기 남부지역까지 가야만 하는 불편 해소 필요: IoT 융합제품혁신 R&D 지원사업에 시험인증기관 설립 사업 포함
 - 비무기체계(전력지원)사업 클러스터 신규 조성사업이 유망하다는 제안: 주 소비처가 인접하고 있어 물류 및 필드테스트에 용이하다는 점이 강점
 - 접경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가 중요

〈표 III-24〉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워킹그룹 자문회의 요약

구 분	내 용
소비재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재산업 육성방안은 적합하지 않음 ◦ 다만,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 협력 배후단지로 육성은 가능함
지식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 남북교류 유망 아이템
보세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 활성화 시, 수출품 보세창고 필요 ◦ 경기 북부에 보세창고 없음
시험 인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개발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시험인증기관 필요 ◦ 현재 경기 남부지역의 시험인증기관 이용하는데 불편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유치 및 인력 조달을 위해서 교통망 확충이 시급 ◦ 남북교류활성화를 대비한 선투자 개념으로 미리 투자할 필요 있음 ◦ 개성공단 배후단지 기능 산업, 금강산 관광, 산림녹화, 철도/도로 건설 관련 원부자재 산업 육성 ◦ 비무기체계 군수산업 ◦ IT산업 남북교류 전진기지로 육성
전력지원체계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무기체계 산업 규모 연간 18조원 ◦ 실제 주 소비지인 접경 지역 유치 당위성, 필요성 제시 ◦ 전력지원체계 전시회 유치 ◦ 국방기술품질원 분원 유치
R&D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R&D 지원이 중요 ◦ 접경 지역 특화 산업 발굴 및 산업육성방안 연구회 조직 및 운영 지원 필요 ◦ 첨단소재부품 연구소 유치 및 지원(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2.6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분야 특화 산업 세부사업 추진 방안

가. 콘텐츠산업

1) 콘텐츠산업 정의

● 만화산업

-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산업 중에서 접경 지역 특화 산업 후보로 선정된 만화·애니메이션, 방송 영상산업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분석하였음
 - 만화·애니메이션, 방송영상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일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 협력 대상사업으로 적합도가 높은 산업이기도 함
 - 또한, 파주시와 고양시에서 동 산업 관련 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동산업의 산업 기반도 탄탄한 것으로 평가됨

- ▶ 콘텐츠산업에는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산업, 콘텐츠솔루션산업 등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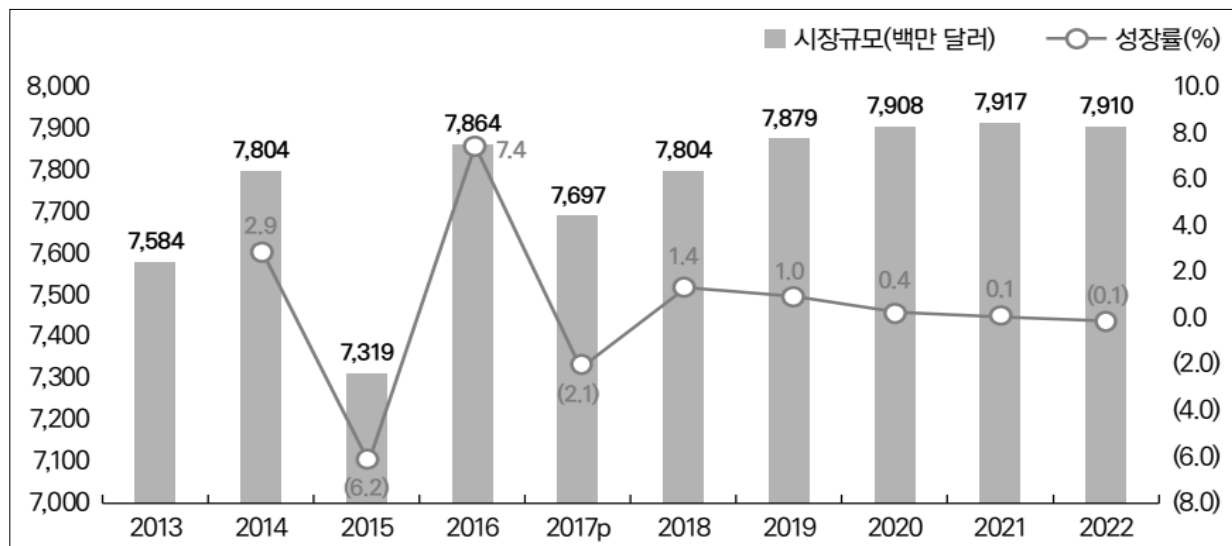
2) 콘텐츠산업 동향 분석

● 만화산업

+ 글로벌 만화산업 동향

- 만화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디지털 만화로 공급이 전환되고 있으며, 한국 웹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만화의 수요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전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은 2016년 8억 1,200만 달러에서 2021년에는 13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2021년까지 연평균 9.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출처: 2018 만화산업백서)

〈그림 Ⅲ-32〉 세계 만화산업 규모 및 성장률(2013~2022)



※ 자료: 2018 만화산업백서

- 2017년 만화산업의 사업체 수는 7,172개이며, 종사자 수는 1만 397명임. 매출액은 1조 822억 원이며, 부가가치액은 4,327억 원, 부가가치율은 40.0%임. 수출액은 3,526만 달러, 수입액은 657만 달러임

+ 국내 만화산업 동향

〈표 III-25〉 국내 만화산업 현황

구분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가치율 (%)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2013년	8,520	10,077	797,649	322,569	40.4	20,982	7,078
2014년	8,274	10,066	854,837	336,854	39.4	25,562	6,825
2015년	8,145	10,003	919,408	362,028	39.4	29,354	6,715
2016년	7,726	10,127	976,257	392,558	40.2	32,482	6,554
2017년	7,172	10,397	1,082,228	432,681	40.0	35,262	6,570
전년대비 증감률(%)	△7.2	2.7	10.9	10.2	-	8.6	0.2
연평균 증감률(%)	△4.2	0.8	7.9	7.6	-	13.9	△1.8

※ 자료: 2018 만화산업백서

- 만화산업이 웹툰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소비가 증가한 대신 실물(만화책) 소비가 줄어들고 있음
 - 만화산업의 매출은 '13년~'17년 중 연평균 7.9% 증가하였으나, 실물 만화책 소비 감소 영향으로 인하여 만화산업의 사업체 수는 2017년 7,172개로 2013년 8,520개보다 1,348개 감소하였음
 - 1인 사업장 중심의 만화책 임대업과 만화 도소매업은 감소되고 있는 반면, 다수의 인력이 요구되는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의 사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음
 - 웹툰 붐이 반영된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의 증가는 만화산업 전반의 지표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음
- '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0.9%, 부가가치액은 10.2%, 수출액은 8.6% 증가.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감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매출액의 경우 1조 원 규모를 돌파
 - 만화산업의 2017년 1인당 평균매출액은 1억 409만 원이며,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1억 5,090만 원
 - 중분류별로 보면, 만화 출판업은 1인당 평균매출액이 2억 1,040만 원,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25억 6,203만 원
 -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은 1인당 평균매출액이 2억 7,139만 원,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22억 5,492만 원
 - 1인당 평균매출액은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이 가장 높으며,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만화 출판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만화산업의 지역별 사업체 현황을 보면, 서울의 사업체 수가 1,805개로 전체의 25.2%를 차지했고, 경기도의 사업체 수가 1,450개로 전체의 20.2%를 차지해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국내 만화산업은 웹툰 붐 이후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산업으로 변화
 - 2017년 만화산업의 수출액은 3,526만 달러로 전년대비 8.6% 증가했으며,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연평균 9.6% 증가
 - 2017년 만화산업의 수입액은 657만 달러로 전년대비 0.2% 증가했으며,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연평균 1.1% 감소하여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산업으로 수출입 차액은 2,869만 달러로 나타남
 - 지역별 수출액 현황을 보면, 유럽으로 1,109만 달러를 수출해 전체 수출액의 31.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일본에 974만 달러(27.6%), 동남아에 709만 달러(20.1%), 북미에 504만 달러(14.3%), 중국에 137만 달러(3.9%)를 수출
 - 유럽은 우리 만화의 주요 소비 지역으로 작가주의적 성향과 한국의 역사성이 반영된 그래픽 노블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 일본은 디지털만화 시장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웹툰을 집중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동남아 시장은 신흥 만화 소비지역으로 한국문화와 웹툰에 우호적임.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 웹툰을 집중 소비하고 있음
 - 2017년 만화산업의 지역별 수입액을 보면, 일본에서 597만 달러(90.8%)를 수입해 수입의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만화산업의 종사자 수는 총 1만 397명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0% 증가

+ 만화산업 정부지원현황

- 국내 만화산업발전을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만화창작작활동 지원사업
 - 신인 만화 매니지먼트 지원사업: 신인 만화가를 육성하는 프로젝트로서 매니지먼트사를 선정 후 신인 만화가의 지망을 받아 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 기간의 작가 원고료, 취재비, 작품 홍보·마케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년에 6개의 매니지먼트사와 25명의 작가가 선정·매칭되어 지원
 - 연재만화 제작 지원사업: 우수 만화의 연재 지원을 통한 만화 창작 기반과 유통환경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요 지원 내용은 매체연재를 조건으로 해당 기간의 작가 원고료,

- 취재비, 작품 홍보·마케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비활성 만화 콘텐츠 육성 지원사업: 웹툰을 중심으로 한 국내 만화시장에서 만화 콘텐츠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사업임
- 만화 글로벌 프로젝트 발굴 지원사업: 글로벌 시장형 만화 합작을 통한 한국 만화의 해외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글로벌 시장
- 타깃의 우수한 만화웹툰 발굴을 위한 국내외 만화 콘텐츠 기업의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
- 만화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 만화 원작을 바탕으로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공연 등의 2차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 글로벌 웹툰 기획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우수 만화 콘텐츠의 조기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 사업으로 신규 웹툰 프로젝트 개발비 및 해외 마케팅비 지원
- 기타 디지털 만화유통 활성화, 만화 창조인력 양성사업, 만화 수출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추진

● 애니메이션산업

+ 애니메이션 기술 동향

- 애니메이션 기술은 카메라를 중심으로 하는 ‘광학 및 영상기술’과 컴퓨터의 탄생과 발전에 따른 ‘컴퓨터그래픽기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4차산업 혁명을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로 발전되어 왔음
- 컴퓨터그래픽기술은 4차산업 혁명 시대의 실감형 미디어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들과 융합하여, 새로운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을 선도하는 등 향후 애니메이션의 핵심 기술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애니메이션 산업은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기술, 혼합현실(XR)과 홀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실감형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게임엔진에 최적화되도록 제작되어진 모델, 텍스처, 애니메이션 등을 VR 등 인터랙션이 가능한 다른 매체에 즉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향후 게임엔진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편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임
- 게임엔진은 현재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향후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기능 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효율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가장 유용한 기술이자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짐

- 4차산업 융합기술을 통한 애니메이션의 혁신이 기대됨
 - 인공지능기술은 디즈니를 비롯한 많은 애니메이션 제작사들 또한, 관심을 갖고 애니메이션에 접목하고자 시·도하고 있음
 - 실제적으로 캐릭터의 미묘한 표정과 움직임 등을 구현해 내는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와 인공지능기술 간 융합을 핵심으로 하는 ‘지능형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AI 기반 3D 캐릭터 생성기술’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동작표정 등을 딥러닝으로 학습해 스스로 캐릭터를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의 카메라 워크를 자동으로 구현하는 ‘애니메이션 카메라 워크 추적 기술’ 등이 AI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애니메이션 산업 동향

- 2017년 세계 극장 애니메이션산업은 51억 4,200만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26.8%인 18억 8,200만 달러가 감소
- ‘17~’22년 기간 중 글로벌 애니메이션 산업은 연평균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

〈표 III -26〉 세계 극장 애니메이션산업 규모 및 전망(2013~2022)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p	2018	2019	2020	2021	2022	2017-22 CAGR
박스오피스	5,222	4,467	4,772	6,537	4,775	4,979	5,196	5,410	5,606	5,797	4.0
극장광고	391	325	354	487	368	384	403	418	432	446	3.9
합계	5,614	4,792	5,126	7,024	5,142	5,363	5,599	5,829	6,038	6,242	4.0

※ 자료: 2018 애니메이션산업백서

+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 동향

- 2017년 애니메이션산업의 사업체 수는 492개, 종사자 수는 5,161명이며, 매출액은 6,655억 원, 부가가치액은 2,231억 원, 부가가치율은 33.5%. 수출액은 1억 4,487만 달러, 수입액은 760만 달러
 - 애니메이션산업 사업체 수는 2013년 342개에서 2017년 492개로 4년간 연평균 9.5% 증가
 - ▶ 애니메이션 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시 332개, 경기도 83개, 광주광역시 23개, 부산시 19개 등이며, 나머지 지역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 애니메이션 매출액은 2013년 5,205억 원에서 2017년 6,655억 원으로 연평균 6.3% 증가
- 수출액은 1억 4,487만 달러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여 2015년 이후 연평균 7.0% 성장.
지역별 수출비중을 보면, 북미 수출액이 전체의 5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유럽이 21.5%, 일본이 18.3%로 나타남
- 2017년 애니메이션산업의 종사자 수는 총 5,161명으로, 전년대비 0.4% 증가
- 애니메이션산업의 지역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 서울이 3,865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74.9%를 차지하며, 경기도가 전체의 12.1%인 622명, 광주광역시 233명, 부산광역시 183명

+ 애니메이션산업 정부지원 현황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외 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국산 애니메이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총 63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음

〈표 III -27〉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본편)	글로벌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 (가족용, 유아용)	7,400	7,400	7,400	7,000	5,575
기획개발 및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지원	-	700	200	250	250
	애니메이션 파일럿 영상 제작지원	700		400	480	480
	프리비주얼 제작지원	-	-	120	-	-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500	500	480	500	500
	애니메이션 프리프로덕션 부트캠프	-	-	-	120	120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	500	500	400	400
우수 애니메이션 레벨업 제작지원		-	-	3,000	3,000	3,000
애니메이션 미디어 프로모션 지원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포함)	국산애니메이션 미디어 홍보지원	600	850	900	880	945
	웹애니메이션 활성화지원					
아시아 애니메이션 공동마켓 활성화 지원 (AAS)		300	300	300	270	220
애니메이션 해외전시마켓 참가지원		1,250	1,200	1,200	1,098	927
합 계		10,750	11,450	14,500	13,998	12,417

※ 자료: 2018 애니메이션산업백서

- 경기콘텐츠진흥원(GCA)은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VR/AR·빅데이터·스마트 콘텐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콘텐츠로 지원 분야를 확장함으로써 차세대 미래성장 기반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직접 스타트업을

보육하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판교 등 경기도 주요 거점에 클러스터(경기문화창조허브)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있음

-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부천 본원 및 5개 도시(판교·광교·시흥·의정부·고양)에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도내 콘텐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며 육성하고 있음
-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온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ICT 콘텐츠 선도 기업 집적화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기업들과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지역 스토리를 담은 지역특화콘텐츠 기반 선도사업 발굴육성, 지역기업들과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기업 육성 지원, 체험형 문화 교육시설 운영 등
 - 연간 58만여 명이 방문하는 애니메이션박물관과 토이로봇관을 운영하며 지역기업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토이, 로봇, VR/AR을 구축하여 청소년 미래교육체험, 학습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음

● 방송영상산업

+ 글로벌 방송영상산업 동향

-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방송통신 융합, 4차 산업혁명 등의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 방송영상 콘텐츠 창작 저변이 확대되고 유통 경쟁이 심화되며 이용 패턴이 다양화되는 등 콘텐츠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실감미디어는 현실 세계와 근접하게 재현 가능한 차세대 미디어이며, 상대적으로 더 나은 현실감과 표현력을 제공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이루고 있다. 방송, 영화, 게임 등의 엔터테인먼트와 컴퓨터 그래픽, 디스플레이 그리고 응용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감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됨
 - 360도 동영상, 혼합현실, 가상현실 등 실감미디어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초기 시장은 해외의 일부 업체가 이미 독점하고 있음
 - 하드웨어는 오클러스 리프트와 바이브, 그리고 홀로렌즈가 완전몰입형과 투시형 기기시장을 이끌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 그리고 플랫폼은 유튜브와 스팀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음
 - 미국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약 80% 수준이며 미국과 2년 이상의 기술격차가 나는 것으로 추정(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 글로벌방송영상산업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4,462억 달러로 예측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2년에는 5,08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출처: 2018 방송영상산업백서)

+ 국내 방송영상산업 동향

- 글로벌 플랫폼 업체의 국내 시장 진출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영상유통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시장에서 급속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상 콘텐츠 제작에도 뛰어 들고 있음
 - ▶ 2017년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옥자>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넷플릭스는 약 600억 원을 투자하고 국내의 봉준호 감독이 제작했으며, 2017년 6월 29일 국내 개봉일에 맞춰 넷플릭스 플랫폼 기준으로 190개국 유료가입자 9,300만 명에게 동시에 공개되었음 (유진희, 2017)
- SK브로드밴드와 KT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
 - SK브로드밴드의 모바일동영상 서비스 ‘옥수수’는 <애간장>, <멜로홀릭>, <복수노트>, <회사를 관두는 최고의 순간> 등 주로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오리지널 드라마를 제작하였으며, ‘옥수수’는 2017년 한 해 동안 30여 편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이를 통해 누적 6,000만 뷰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17년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의 영향으로 중국시장 수출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방송영상 콘텐츠 수출 지역이 스페인, 북미, 프랑스, 벨기에, 남미 등으로 확장하였음
- 2017년 방송영상독립제작 사업체 수는 총 631개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71.0%인 448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경기도 61개, 부산 29개, 강원 15개, 인천 12개, 대구 10개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매출액은 1조 5,314억 원, 부가가치액은 5,204억 원, 부가가치율은 34.0%로 나타남

〈표 Ⅲ-28〉 방송영상물제작업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중분류	소분류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방송영상물제작업	방송영상독립제작사	1,143,498	1,428,813	1,531,422	7.2%	15.7%

※ 자료: 2018년 방송영상산업백서

- 지역별 매출액을 보면, 서울이 1조 3,119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6.7%를 차지하며, 이어서 경기도 1,186억 원으로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머지 지자체는 부산 301억 원, 강원도 235억 원, 제주도 87억 원, 대구 77억 원으로 미미한 수준임
- 2017년 방송산업의 수출액은 3억 6,240만 달러로 전년대비 11.9% 감소했으며,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연평균 6.3% 증가. 2017년 방송산업의 수입액은 1억 1,020만 달러로 전년대비

14.7% 감소했으며,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연평균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방송산업의 종사자 수는 총 4만 5,337명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4% 증가
 - 지역별 방송산업 종사자 수는 서울시 28,908명, 경기도 2,208명, 강원도 804명, 부산 618명
 - 고양시 영상/방송/광고 사업체 수 329개, 매출액 4,904억 원, 종사자 수 2,439명

3) 접경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방안

세부사업명	추진사업 내용	비고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1단계사업 추진 완료상태 ◦ 향후 2단계 사업 추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스튜디오, 관련 기업 입주센터, 테마파크 등 ◦ 고양시
만화 애니메이션 창작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애니메이션 창작센터 건립 ◦ 첨단 만화/애니메이션 창작 설비 구축 ◦ 향후 남북교류 협력 추진 기반으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 협력사업 기반 ◦ 파주시, 고양시

●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 지원사업

- 폐 정수장을 수상/수중 특수촬영장(아쿠아스튜디오)으로 리모델링('19년 완공)
- 2단계로 아쿠아스튜디오와 연계하여 실외 스튜디오, 관련 기업 입주센터 등 영상문화단지 조성 지원

● 만화 애니메이션 창작 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

- 파주 출판문화단지, 고양시 지역에 만화 애니메이션 창작 센터 건립
 - ICT 융합, AR/VR, 3D 애니메이션 제작 관련 첨단장비 구축하고, 입주업체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동 센터를 만화 애니메이션 창작 거점으로 육성
- 경기콘텐츠진흥원 분원 형태로 건립 운영 검토
 -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부천)에 콘텐츠 관련 기업 입주하고 있음
- 경기 북부 접경 지역에 만화 애니메이션 창작거점 구축은 향후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거점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북한의 만화 애니메이션 기술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미 남북한 공동사업을 추진한 경험도 있음(게으른 고양이 덩가, 뽀롱뽀롱 뽀로로, 왕후 심청 등)
 - 접경 지역의 만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면,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서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제작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협력사업이 이루어지는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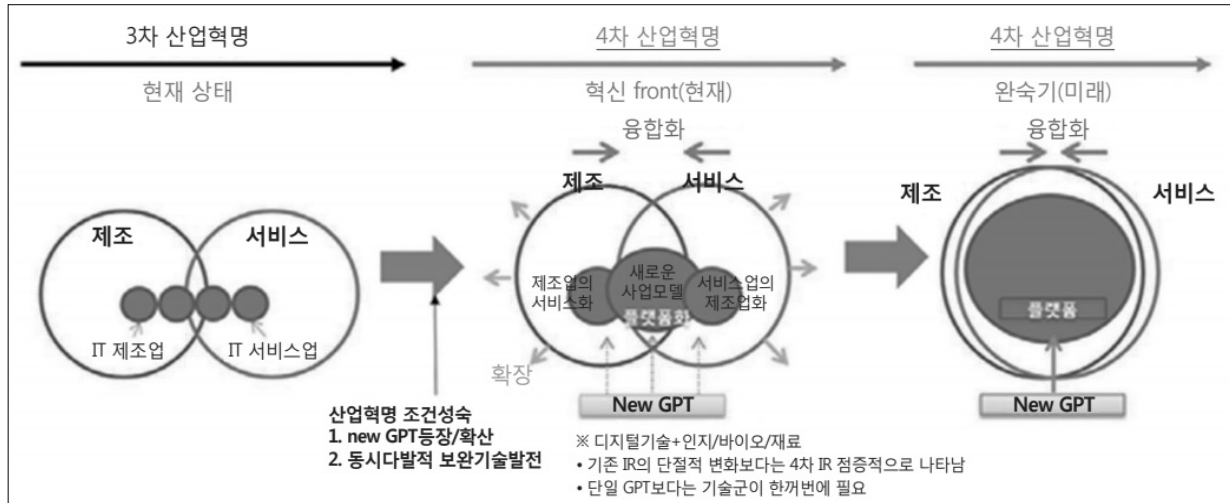
- 단순히 남한이 기획하고, 북한이 일부 하청 형태로 추진하는 낮은 수준의 협력사업에서 공동 기획, 공동 개발하는 높은 수준의 협력이 기대되며, 인터넷 등 통신문제만 해결되면, 북한지역의 공동제작 장소도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평양 등 대도시 근처에서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낮은 인건비와 양질의 노동력을 갖추고 있어 국제적으로 3D 애니메이션 주문자위탁 생산(OEM)에 적합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나. 4차산업 & 미래산업

1) 4차산업 & 미래산업 정의

- 본 연구에서 접경 지역 특화 산업으로 선정된 4차산업 & 미래산업은 전기자동차, 드론, 바이오 헬스, 수열 에너지, 스마트팩토리 등을 포함함
- “4차 산업혁명”은 2016.1월 스위스 다보스에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이슈화 되면서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고, 알파고 대국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
 - (4차 산업혁명의 특징)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시킬 것이라 전망함(출처:KISTEP, 2016)
 - 4차산업혁명의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는 사물인터넷(IoT)을 산업 현장에 적용한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차 등으로 구현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의 지능정보기술은 로봇, 3D 프린팅 등 신산업의 등장뿐만 아니라, 기존 주요 제조업의 생산·소비에서 혁명적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
 - 4차 산업혁명은 초자동화, 초연결성, 초지능화의 특성을 갖는 사이버 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s) 기반을 통해 기존 하드웨어 제품 중심의 제조·조립 위주의 생산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제품과 장비에 소프트웨어와 통신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제품의 스마트화, 커넥티드화 나아가 시스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초연결성 기반의 플랫폼이 발전하고 O2O(On-line to Off-line),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Ⅲ-33〉 4차산업혁명과 산업의 변화



※ 자료: 산업연구원, 2017년 산업경제 5월호

- 국내 제조업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범용기술 중 우리가 강점을 가진 ICT 기술과 스마트 공장 추진에서 적용이 활발하며, CPS를 중심으로 조사검토 단계를 지나 계획수립 초기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 우리의 높은 ICT 역량을 반영하여 빅데이터와 모바일, IoT, 클라우드 기술의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검토 단계가 대부분임. 음성인식기술, CPS의 활용을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성상 나노기술(NT)은 소재, 바이오기술(BT)은 바이오헬스, 클라우드는 통신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이 주요 제조업의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임
 - 현재는 제조공정에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며, 향후에는 제품설계와 연구개발, 기획단계와 아울러 제품혁신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산업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의해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 간·산업 내 융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에서 주로 영향을 미치는 가치사슬 영역은 제조공정, 원료조달, R&D, 물류 및 서비스 분야임

〈표 III-29〉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제조업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주요 영향
원료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재 물성 분석(성형 용이성, 초경량, 고기능성, 친환경 등) 연결 플랫폼을 위한 정보 구축(양방향성 연결을 위한 소재 개발)
제품기획·설계·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선택, 신제품 시뮬레이션 연구 활성화 빅데이터·클라우드에 집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 기반의 제품 기획 및 설계비용 크게 감소 3D프린팅을 활용한 원거리 시제품 제작 증가 가상설계시스템으로 공정 운용 및 제어에 대한 시뮬레이션 확대(CPS) AI와 AR·VR 등을 통한 설계·검증 활성화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셀프 디자인(3D프린팅을 활용한 디자인) 확대 빅데이터 및 AI에 기반한 소비자 맞춤형 디자인 강화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서→IoT→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어지는 유연한 공정 확대 맞춤형 대량생산체제(Mass Customization) 확산 3D프린팅 및 나노·바이오공정 확대로 초미세 공정 가능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 역량 확대 개인 제조화 가능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oT,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물류 최적화 제품에 대한 이력관리 등 제조 후 서비스 강화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강화 수요 정보 획득 및 분석에 대한 AI 적용 확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 영역의 서비스 분야(AS, 제품 유지·보수·관리) 확대 강화 제품과 결합된 서비스 제품 확대(비즈니스 모델 혁신)

※ 자료: 산업연구원, 2017년 산업경제 5월호

- 미래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의미하며,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새롭고 진보한 핵심원천기술을,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의 부가가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 새로운 핵심기술 혹은 산업을 의미
 - 역대 정부는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여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정책을 추진해 왔음
 - 현 정부는 13개 혁신성장 동력을 선정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전략 마련
 - 현 정부는 그간 정부가 육성한 성장동력 중 지속지원이 필요한 분야 및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과 연계하여 범부처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를 검토하여 13개 혁신성장 동력을 선정
 - 선정된 혁신성장 동력 분야별로 특성과 산업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

〈표 Ⅲ -30〉 역대 정부의 신성장 동력산업 변화

	G7 프로젝트 (‘92~’02)	차세대성장동력 (‘03~’08)	신성장 동력 (‘09~’13)	미래성장동력 (‘14~’17)	혁신성장 동력 (‘18~)
정부	14·15대 정부	16대 정부	17대 정부	18대 정부	19대 정부
키워드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	주력 산업의 기술력 확보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 과학기술과 ICT융합	혁신성장
사업 분야	18대 분야	10대 분야	17대 분야	19대 분야	13대 분야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 동력, 어떻게 찾을 것인가, 2018.10.12.

2) 4차산업 & 미래산업 동향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팩토리 등 접경 지역 4차산업 및 미래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함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는 2025년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급증하여 2040년 신차 판매량의 54%, 전 세계 자동차의 33%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
 - 2025년부터는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보조금 없이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 내연기관차와의 경쟁에서 경량차는 2030년부터, 중형차는 2020년 후반부터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될 것임
- 국내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등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주행거리 극복을 위한 경쟁에서는 뒤처져 있는 상황
- 구매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보급이 더딘 상황
- 국내 보급되어 있는 전기차는 승용차 중심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 반영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한계
- 신기술의 성능, 안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베드가 부족하고, 기업의 서비스 시장 창출 노력이 미흡
 - 해외의 경우 가상실험도시(美 M-City), 실증특구(日 센다이현) 등에서 반복적 실험 및 실증 사업(무인셔틀 등) 진행 중
 - GM, 포드, 아우디 등 주요 완성차업체들은 카셰어링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진출
 - 완성차업체-부품기업의 수직 계열화 구조로 인해 새로운 플랫폼을 창출하고 산업 간 융합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 미비
-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8만 4,150대와 수소차 1만 280대 보급으로 2020년에 미래차(전

기·수소차) 누적 20만 대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19년까지 친환경차 보급대수는 총 11만 3천여 대이며, '20년에 총 9만 4,430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임
 - 전기승용차 6만 5,000대, 전기화물차 7,500대, 전기버스 650대, 전기이륜차 1만 1,000대 등 전기차 8만 4,150대를 비롯해 수소승용차 1만 100대, 수소버스 180대 등 수소차 1만 280대를 보급할 계획
-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
 - 2019년 11월 기준으로 화물차 등록 대수는 360만 대로 전체 자동차의 15%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은 전체 자동차의 56%를 차지
 - 경유화물차 1대(8.49kg/년)는 승용차(0.88kg/년)보다 미세먼지를 약 10배 많이 배출
 - 기존 전기화물차는 경유 엔진 차를 개조한 것으로 그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최근 완성형 전기화물차인 포터Ⅱ EV 및 봉고Ⅲ EV가 연이어 출시됨
- 환경부는 '20년부터 미래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구축 등 수요 정책 뿐 아니라,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등 공급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판매사가 연평균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일부를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임. 2019년 4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되며, 환경부는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
- 현재 국내에서는 여러 기업이 중소형 전기상용차 개발·생산을 추진하고 있음

〈표 Ⅲ-31〉 국내 중소형 전기상용차 개발·생산 현황

업체명	주요 내용
조이롱 코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조이롱자동차(九龙汽车)의 국내법인인 조이롱코리아는 2016년 3월에 광주시와 연 10만 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 ◦ 조이롱은 광주 지역에 2020년까지 2,500억 원을 투자하여 전기승합차 2만 대와 기타 차량 8만 대를 생산한다는 계획 ◦ 조이롱의 18인승 전기승합차 E6 모델의 국내 인증이 지연되면서 생산계획이 차질을 빚었으나 2018년 5월에 모든 인증시험 통과
르노/대동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노는 2019년 하반기부터 1톤 전기트럭 '마스터'를 대구에서 생산할 예정 ◦ 르노의 전기트럭은 대구에 위치한 대동공업 전기트럭 공장에서 위탁 생산될 예정이며, 판매는 르노 삼성 네트워크를 이용 ◦ 르노는 출시될 1톤급 전기트럭에 LG화학에서 생산한 250kWh급 중형 배터리를 탑재하여 항속거리가 최소 250km가 될 것으로 발표

업체명	주요 내용
제인 모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인모터스는 2017년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전기화물차 생산공장을 준공하고 1톤 전기트럭의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 ◦ 울산 자동차부품기업 다이이씨의 대구법인인 제인모터스는 대구 국가산업단지(대구 달성군 구지면) 4만여 m² 부지에 1만 7,000여m² 규모의 전기화물차 공장을 건설 ◦ 2018년 5월 준공된 전기화물차 공장은 1일 15대씩 연간 3,000대의 생산능력을 갖췄으며, 추가 라인 증설 시 연간 1만 대 생산 가능 ◦ 제인모터스가 생산하는 1톤 전기트럭 칼마토(CALMATO)는 1톤 포터 트럭의 엔진을 들 어내고 모터를 얹는 방식의 개조전기차 ◦ 2019년 3월 1톤 트럭 중 최초로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선정되어서, 구매시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파워 플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조형 경형 전기트럭인 라보 피스(Peace)를 시판 중으로, 피스는 최대출력 26kW, 최대토크 108Nm, 적재중량은 최대 500kg ◦ 배터리는 17.8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는 72km
현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는 소형트럭 포터(1톤)와 중형트럭 마이티(2.5톤)를 기반으로 한 전기트럭을 2019년에 출시할 예정 ◦ 전기트럭은 256kWh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하고 항속거리는 250~300km 정도 ◦ 양산 초기에는 기존 해당 모델 판매량의 5~10%를 전기트럭으로 판매할 계획

※ 자료: 각종 보도자료

- 정부 및 지자체가 대중교통의 전기차화를 위해 전기버스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현재까지 국내에 총 7종의 전기버스 브랜드가 선보이고 있는 중
 - 현재 한국의 현대차, 자일대우버스, 우진산전, 에디슨모터스(옛 한국화이버) 등 4개사와 중국의 비야디(BYD), 포톤(FOTON), 에빅(AVIC) 등 3개사의 전기 버스가 있으며, 다른 중국 전기버스 브랜드가 추가로 국내 진출을 시도 중
 - 서울시는 '19년에 114대의 전기버스 공급업체로 현대자동차, 우진산전, 에디슨모터스, 제이제이모터스 등 국내 4사와 BYD, 하이거 등 중국 2사를 포함해 총 6개사를 선정, 총 143대의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0% 이상인 3,000대를 전기버스로 보급할 계획임
 - 경기도는 '19년 179대, '20년에 600대의 전기버스 보급 계획
 - 제주도는 2021년까지 80대의 전기버스 보급을 목표로 이미 배터리교체형(BSS) 전기버스 시범사업 등을 진행했고, 우도에 BYD의 7m급 전기버스 20 대를 보급하는 계약을 체결
 - 부산광역시 역시 2016년부터 에디슨모터스의 전기버스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대차의 일렉시티 20대 도입을 진행 중이고, 김포시는 2017년 4월부터 선진운수를 통해 중국 에빅의 전기버스를 투입·운영 중

〈그림 III-34〉 국내 시판 전기버스 브랜드



〈우진산전 '아폴로'〉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에디슨모터스 'e-FIBIRD'〉



〈자일대우버스 'BS110EV'〉



〈BYD 'C6(국내명 eBus-7)'〉



〈BYD 'K9(국내명 eBus-12)'〉

● 드론

- 드론(Drone)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자동 또는 원격 조종으로 비행하며 일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비행체를 의미
- 드론은 일반적으로 제어컴퓨터 및 조종보드, 본체, 프로펠러, 전기모터, 임무장비, 항법센서, 통신안테나, 배터리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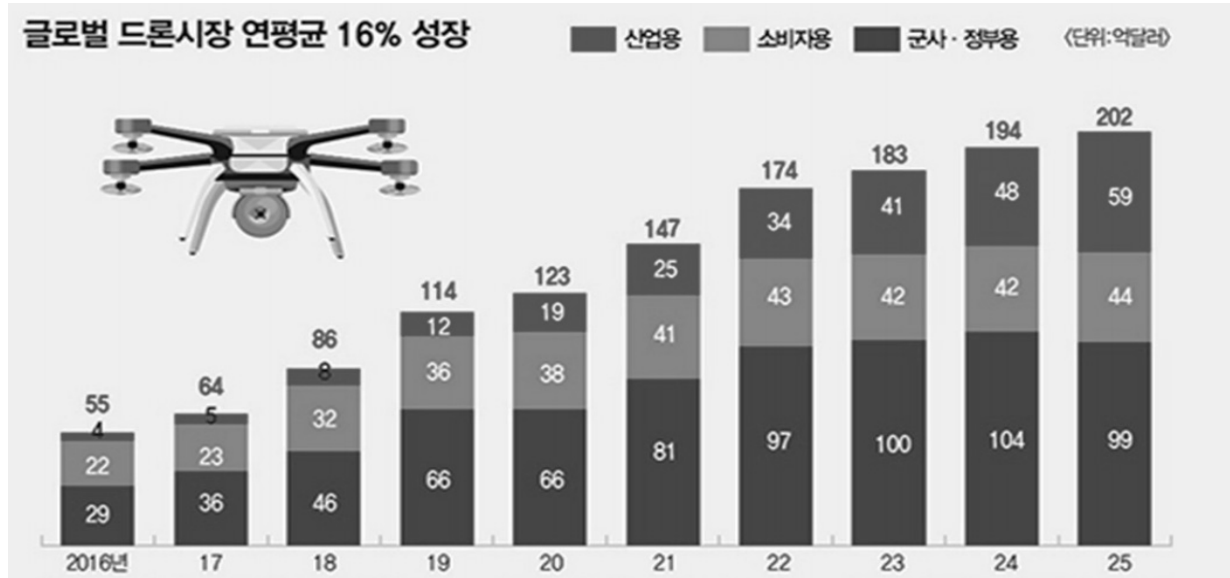
〈그림 III-35〉 드론의 용도별 분류

	육 상	공 중	해 양
운송	자율주행차 배송 드로이드	배송 드론 유인 드론 화물무인기	무인화물선
농수산업	무인농기계 무인트랙터	방제 무인헬기 농업 드론	무인양식 어군탐지
인프라 관리	발전시설관리 지하공간관리	전력선 관리 교량 관리	수상인프라 수중인프라
오락 및 스포츠	스포츠중계 레이싱	촬영 드론 드론 레이싱	수중 관광 수중촬영
핵심 기능 및 기술			
탐지 및 인식 ▶ MEMS 센서기술 ▶ 인지기술	자율 조종행법 ▶ 자율지능기술 ▶ 정밀항법기술	이동 및 작업 ▶ 배터리/연료전지동력원 ▶ 전기모터, 잠벌제어	조종사 교류 ▶ 데이터 통신 ▶ 네트워크기술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드론은 크게 용도에 따라 군수용, 민간용으로 분류. 초창기 군수분야에서는 표적기 및 정찰용으로 활용되었으나, 근래에는 항공과 정보통신 융합기술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민간 분야로 발전됨. 민간용 드론은 통상적으로 사업용과 취미용으로 분류됨
 - (사업용 드론) 운송, 농수산업, 인프라 관리에서 사용되는 드론으로, 각 산업계에서 드론은 운송을 위한 배송·유인드론, 농수산업에서 사용되는 방제 무인헬기와 농업드론, 접근성이 떨어지는 인프라 관리를 위한 전력선, 교량 관리 드론 등으로 분류됨
 - (개인용 드론) 오락 및 스포츠 분야에서 사용되는 드론으로 촬영, 레이싱 드론 등이 대표적임
- 국내 민수용 드론 기술의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가치평가가 어렵지만, 8대 핵심 부품 기술은 선진국 대비 약 10~50%p의 격차가 존재
- 국내 시장은 군수 중심으로 시장 잠재력이 큰 민수 시장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임
 - 국내 드론 산업계는 항법과 제어, S/W 기술을 보유한 자체 개발 기업(주로 대형기업)과 외국 부품 조립 기업(소형기업)으로 나뉘며, 약 40여 개 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자체 개발형 기업은 대한항공(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으로 틸트로터형 무인기 개발, 상용화 추진 중), 유콘시스템(정찰용 무인기 리모아이 개발, UAE 수출) 등으로, 군수 시장에서 주로 사업 추진하고 있음
 - 해외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LG유플러스가 LTE망을 이용해 드론제어기술을 확보하는 등 타분야 기업의 드론 시장 진출이 활발히 진행됨
 - 국내 제품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중국 제품에 비해 기술과 성능은 유사한 수준이지만, 가격 경쟁력이 낮아 시장 맞춤형 사업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글로벌 드론 시장은 군수용 시장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상업용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추세로, 농업, 광업, 치안, 물류, 에너지, 방송 산업 등 민간 시장이 급속히 확장됨
 - 무인 비행체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114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약 20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히 상(산)업용 무인항공기 시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출처: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그림 III-36〉 글로벌 드론시장 성장 전망



*전 세계 군사용, 산업용, 소비자용 드론 생산기준

(출처 : World Aircraft Production Forecast, 2017, 윈터그린, 골드만삭스, 맥킨지 분석)

※ 자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인용

- 전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은 2017년 전체 약 20억 달러 규모 → 2019년 44억 달러 → 2026년 약 13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됨
- 전세계 취미용 소형 드론은 2020년까지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이후에는 시장이 세분화되며 안정기에 접어들고 점차 완만한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 2017년 23억 6,000만 달러 → 2019년 38억 2,700만 달러 → 2026년 87억 9,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
 - ▶ 소형 드론시장이 성장기로 직면하기까지 3~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미 맞춤형 제작 시장이 열리는 등 시장의 빠르게 변화되고 있음
- 국내 드론 시장은 기존 항공기 관련 제조업체의 군수완제기 중심으로 시장 형성되어 2020년까지도 군 수요 기반의 군수 시장이 시장의 중심을 점유할 것으로 추정
- 잠재력이 큰 민수 시장은 영세 중소기업 중심으로 여전히 미비한 성장세지만 IT, 전자, 통신업체, 완구용 비행로봇 생산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드론 시장에 진출하면서 타 산업 부문의 시장도 점차 확대될 전망
 - ▶ 국내 무인기 등록 수는 37,000여대(2017년 기준), 미국의 경우 무인기 등록 수가 2017년 1/4분기 기준 77만대에 달하여 선진국 대비 국내 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은 편
 - ▶ 국내 내수시장은 세계 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지만, 국내 기업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은 상황

〈표 Ⅲ-32〉 국내 전체 드론 제조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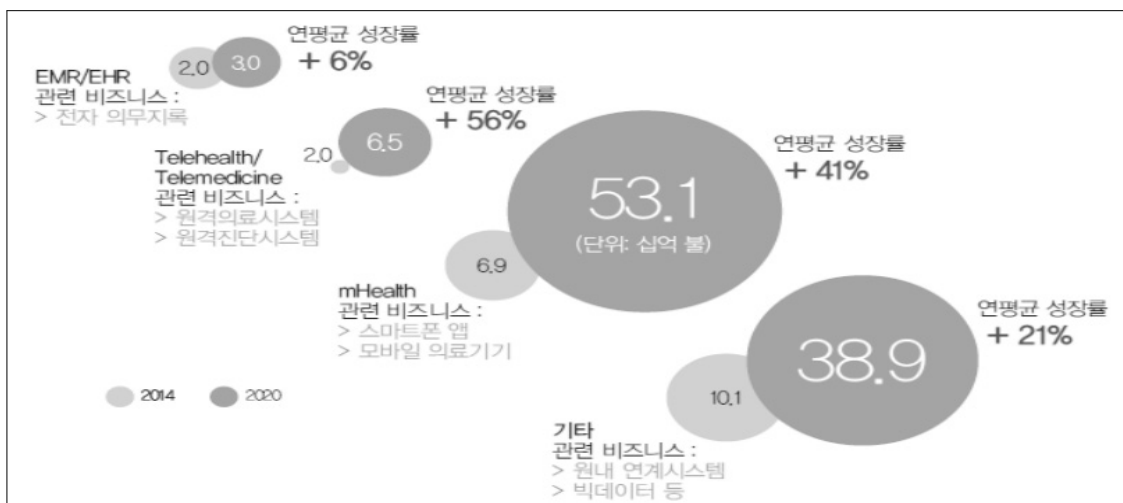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ACR
국내시장	1,030	1,754	2,198	3,354	3,661	4,158	32.2

※ 자료: 국토교통부, 2017

● 바이오헬스

- 바이오산업과 헬스케어산업을 포괄하는 바이오헬스산업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경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
 - '18년 글로벌 헬스케어 IT 시장은 전년대비 6.4% 성장한 1148억 달러(약 122조 원)(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바이오헬스산업은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
 -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포함
-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바이오헬스 세계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
 - ▶ 성장률(~'30) 전망(%): 바이오헬스 4.0 > 조선 2.9 > 자동차 1.5%(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9)
- 디지털 헬스케어는 미래의료가 4P기술로 진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예측, 예방, 맞춤, 참여의료를 제공하는 기술로 발전
 - ▶ 4P 의료 : '예측의료(Predictive Medicine)', '예방의료(Prventive Medicine)', '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 '참여의료(Participatory Medicine)'
- 대부분의 조사기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산업에 대해 높은 성장세 전망(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그림 Ⅲ-37〉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산업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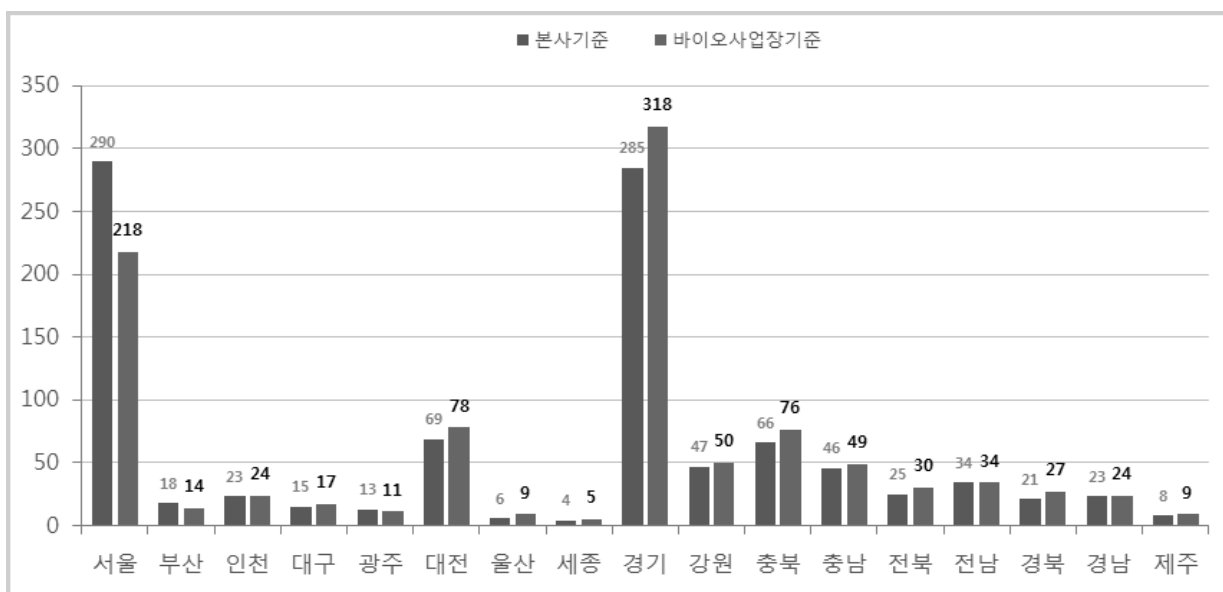
※ 자료: KISTEP, 2017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 및 병원시스템, 의·약학 인재, 첨단산업 경험 등 국제 경쟁력 보유
 - 정교한 생산과정·위생관리 등 바이오와 유사한 반도체 생산공정 운영경험을 토대로 단기간(선진국 1/2 수준)에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 확보
- '18년 신약 기술이전 5.3조 원(전년 대비 4배), 제약·의료기기 등 수출 144억 달러(전년 대비 19% 증가)로 사업화 초기 성과가 나타나는 상황
 -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 2/3 점유
-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전체 기술력은 최고기술국(미국) 대비 78% 수준, 약 3.8년의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
 - 美(100%) > EU(93%) > 日(90%) > 韓(78%) > 中(70%) [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제약)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 석권, 세계 2위 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신약 기술수출 증가, 특허 보유 등 국제경쟁력 확보
 - 2세대 바이오시밀러(레미케이드 등 4개)의 2/3를 국내기업이 생산('18년)
 - 국산신약 총 30개 개발('99~'18), 줄기세포치료제 세계 최다 보유(4개/전 세계 8개)
 - 국내 선도기업들도 글로벌 빅파마들과 비교 시, 해외임상을 위한 자금력 부족으로 신약개발 대신 중간단계 기술 수출에 주력
- 의료기기는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이 높고(62%), 초음파영상진단기기(세계 산부인과 1위), 치과 임플란트(세계 5위) 등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
 - 아직 글로벌 지배기업이 없는 인공지능 진단기기* 등 융복합의료기기 분야에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진출 시작
- 국내 의료기기 벤처기업 사례
 - Vuno社: AI 진단기기 국내 최초 출시('18), 유럽 허가('19.1)
 - 루닛社: 인공지능 X-ray 영상판독 기술로 세계 100대 AI 기업에 선정('17)
- 최근 바이오헬스 분야 벤처캐피탈 투자, 창업 및 벤처기업 상장이 증가 추세이고, 정부의 창업 지원 인프라도 지속 확충
 - 벤처캐피탈 투자액(억 원): ('16) 4,686 → ('17) 3,788 → ('18) 8,417
-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대다수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은 R&D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 민간/정부 R&D 비율(배): 생명·보건의료(1.2), ICT·SW(14.7), 기계·제조(9.9)
- 100만 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신약개발 등 질병극복 산업발전 기반 마련('20~, 복지부·과기부·산업부)

-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25년까지 4조 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
 - 2025년까지 신규 바이오벤처 1,250개 육성, 글로벌기업 4개 육성, 글로벌 클러스터 2개 구축 등을 통해서 12만 개 일자리를 창출 목표(출처: 과기부,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2017~2026년))
 - 2022년까지 바이오 실험실 창업 기업 500개 창출 목표(출처: 과기부, 2018)
 - 생명·보건의료 R&D: ('17) 2.6 → ('25) 4조원 이상 달성 목표
 - '16년 400개 이상의 바이오 창업 붐을 이어나가고, 바이오벤처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성장펀드 (Scale-up 펀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정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규제로 사업화가 어려운 제품의 대규모 실증기회 제공('19, 중기부)
- 국내 바이오산업체는 서울·경기 지역에 많이 위치함. 서울에 218개, 바이오사업장은 경기도 318개가 있음. 다음은 충북 76개, 강원 50개, 충남 49개 순
 - 2018년 기준 바이오산업 인력은 시·도별로 경기 지역이 14,131명으로 30%의 비율을 보여 가장 많은 바이오 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충북(7,512명), 서울(6,786명), 인천(5,397명), 강원(2,700명) 순으로 바이오 인력 수가 많음
 - 접경 지역 중 바이오산업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는 춘천지역의 바이오 인력은 1,014명으로 파악됨(강원도 바이오산업 종사자의 37.6%). 나머지 접경 지역의 바이오산업 종사자는 김포, 고양, 파주 지역에 572명이 있음

〈그림 III-38〉 바이오산업체의 소재지별 분포

(단위: 개)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9)

● 수열 에너지

- 수열 에너지란 해수, 하천수, 지하수, 하수, 발전온배수 등 물이 가지는 열에너지를 의미하며 이 열에너지를 이용해 건물, 주택 및 산업용시설 등에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적 에너지임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3면이 바다인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해수 열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50% 이상의 에너지절감이 가능하고 수산양식, 담수화설비, 광물자원회수, 농업시설 등에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도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집단에너지방식의 대용량설비가 운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표수는 크게 댐 및 저수지와 원수관로로 나눌 수 있는데, 댐 및 저수지의 공급량은 1일 3,670만 톤이고 원수관로는 2,000만 톤으로 이를 5℃ 온도차의 열을 뽑아 쓴다고 가정해 열량을 계산하면 댐 및 저수지의 부존량은 361만 9,000RT이고 원수관로는 138만 1,000RT로 총 500만RT(1만 7,581MW)로 절감율과 가동시간 그리고 이용률을 고려 시 연간 2,727만 2,526MWh를 활용할 수 있음. 이는 신고리2호기 2016년 연간 발전량(697만 5,411MWh)의 3.9배인 580만 9,048TOE)에 해당하는 에너지절감 및 약 1,271만 톤)의 CO₂ 절감 효과와 같음. 또한, 대도시 인근의 광역상수도 1일 830만 톤이 공급되고 온도차 5℃를 기준으로 부존열량을 환산하면 57만 4,000RT로 광역상수도 공급량의 70%만 활용해도 40만 4,000RT로 신고리2호기 2016년 연간 발전량의 31%인 46만 6,547TOE에 해당하는 에너지절감 및 약 100만 톤의 CO₂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출처: 투데이에너지, 한국수자원공사 자료 재인용)

〈그림 III -39〉 롯데월드타워 수열 에너지 활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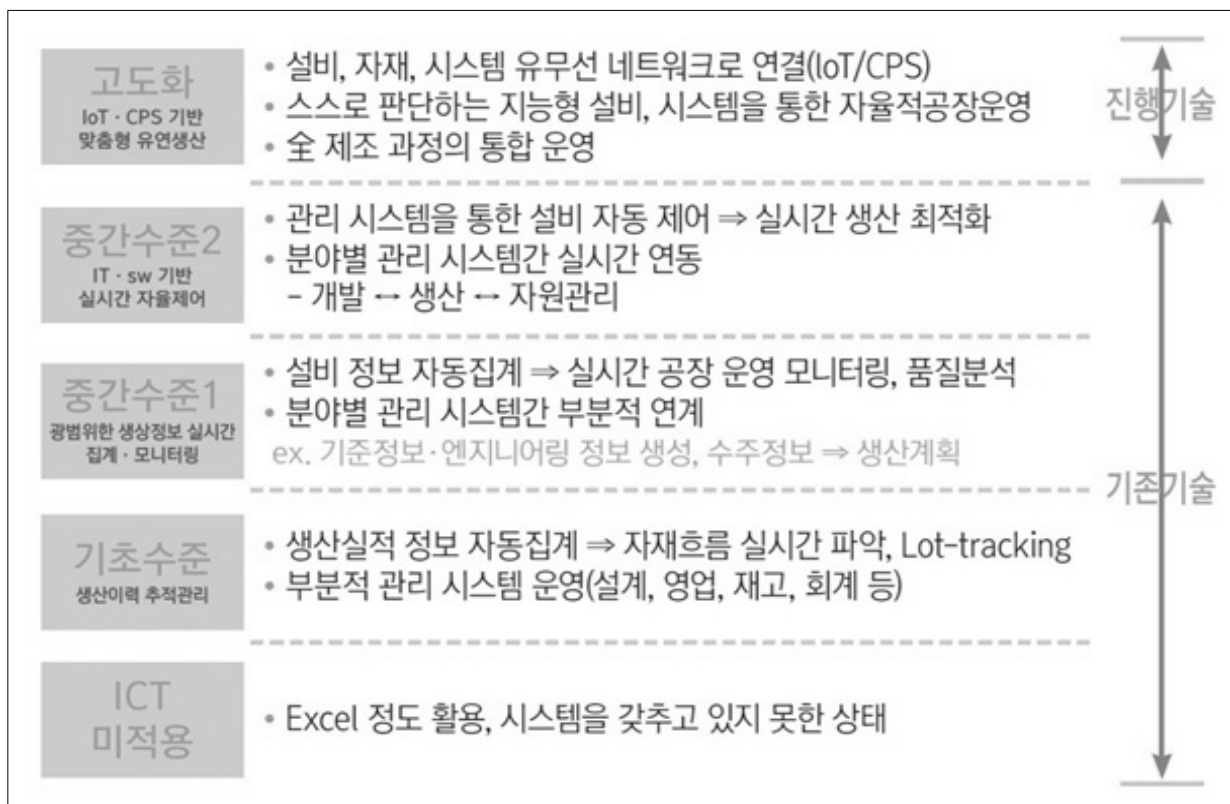


※ 자료: 투데이에너지, 2019.01.03.

- 롯데월드타워에 3,000RT 규모의 광역상수도를 이용한 수열 히트펌프가 설치·운전되고 있음
 - 롯데월드타워에 적용된 광역상수도 수열 히트펌프는 냉방 시 히트펌프 응축기에서 발생된 열을 원수에 버리고(냉각탑 역할) 난방 시 원수가 가지는 열을 히트펌프 증발기를 통해 흡수해 실내로 공급하는 방식임
 - 이는 주변에 관경 800mm의 광역 1단계 분기관로가 설치돼 있고 관 갱생 후 20년간 5만톤/일의 원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 전체 부하의 10%에 해당되는 3,000RT 히트펌프를 사용해 냉·난방에 사용하고 있음
 - 값싼 심야전력으로 수축열조를 구축해 운영하면 연간 운영비 절감, 히트펌프의 효율 증가, CO₂ 발생량을 저감시킬 수 있다. 현재 냉온수기 사용 운전비대비 14억 원을 절감하고 있으며 축열조 설치 투자비는 3년 이내에 회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하천수의 경우에도 하천, 댐 저층수 및 광역원수를 활용할 경우 30% 이상의 에너지절감이 가능하며, 현재 강원도를 중심으로 빅 데이터 센터의 냉각수 열원과 첨단농업 단지로 구성되는 융복합 클러스터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발전온배수를 이용한 수열 에너지는 수산양식, 농업 및 건물냉난방에너지로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하수를 이용한 수열 에너지도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이용한 냉난방시설의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높은 에너지절감효과가 실증되고 있음
- 그동안 수열은 ‘해수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라고 정의돼 있어 해수의 표층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열원은 미활용 에너지로 분류돼 있으며 관련 설비 설치 시 정부로부터 지원이 적었음
- 수열 에너지 기준 및 범위 정의
 - '19년 10월 관련 법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수도 수열 에너지 범위에 포함되었음
 - 수열 에너지 기준: 물의 열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수열 에너지 범위: 해수(海水)의 표층 및 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스마트제조혁신
 -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생산, 수출, 부가가치 비율의 추세적 하락으로 활력을 잃고 있으며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로 생태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인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과 스마트제조를 지향하는 스마트공장의 개념은 제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스마트팩토리란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 시간으로 고객과 시장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추구. 즉, 스마트팩토리는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인간 중심의 작업환경이 구현되고, 개인 맞춤형 제조, 융합 등 새로운 제조 환경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공장을 의미함
- 스마트팩토리 운영 시스템은 스마트제조를 통해 수집되고 가공되는 생산 정보(4M1E)를 활용하여 스마트 공장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주로 IoT 데이터 센싱,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 모니터링, HMI 공정화면 모니터링, 품질 분석, 실시간 알람 및 조기경보 제공을 특징으로 함
- 스마트팩토리는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아래와 같이 기초수준, 중간 1 수준, 중간 2 수준, 고도화 수준 등으로 구분

〈그림 III -40〉 스마트공장의 수준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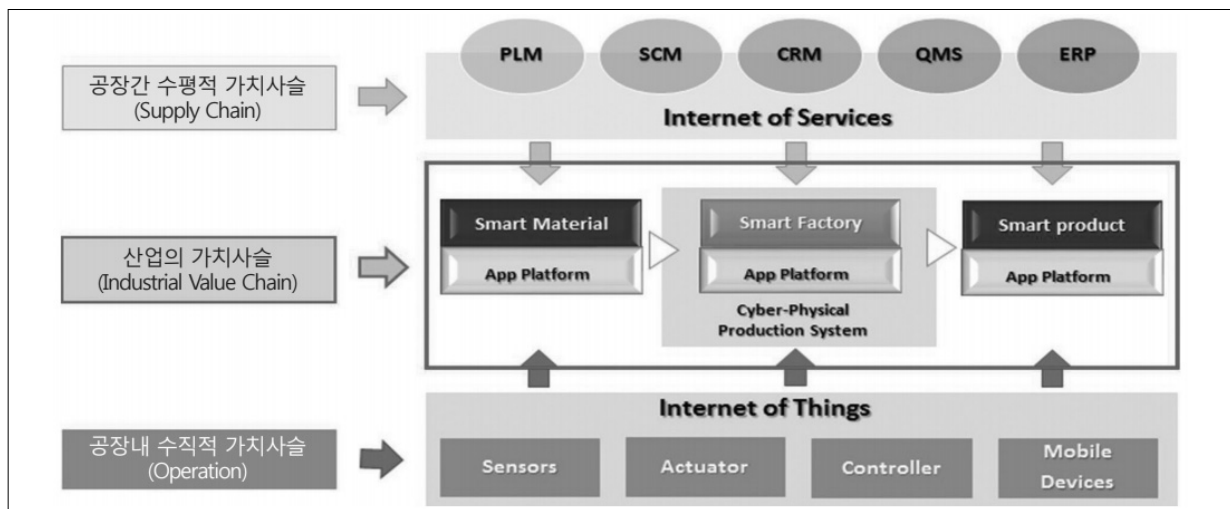
※ 자료: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스마트공장구축활성화방안, 2018 재인용)

- 스마트공장은 제조생태계 전략으로서 기업과 산업 가치사슬의 디지털 연계를 동시에 고려
 - 공장 내 수직적 가치사슬의 통합은 운영(operation) 차원에서의 디지털 연계로서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 달성을 목표 함
 - 공장 간 수평적 통합은 공급사슬(supply chain) 차원에서의 디지털 연계로서 다양한 제조지

원 서비스가 인터넷(IoS)을 통해 연결되는 디지털 제조 생태계를 의미. 특히, 스마트공장 공급산업과 함께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제조지원서비스를 포함하며 스마트공장의 지속적 고도화를 전인하는 솔루션 제공의 기능을 담당

- 산업의 가치사슬 측면에서 스마트공장은 스마트소재, 스마트공정, 스마트부품 및 스마트제품을 포괄. 즉, 일련의 정보가 데이터로 구축된 스마트소재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에서의 공정을 통해 관련 정보의 데이터가 구축된 스마트부품과 스마트제품을 생산함. 따라서 완전한 스마트공장은 소재단계에서 시작하여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산업가치사슬의 전 단계가 디지털 연계로 고도화될 때 완성될 수 있음

〈그림 III -41〉 스마트 공장과 제조혁신



※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경제, 2019.11

- 국내 제조기업의 제조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공급사슬 단계별 디지털 전환 수준의 균등화(Digital Transformation Smoothing)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
 - 디지털 전환 수준의 균등화를 통해 제조혁신 수행상의 병목현상 해소가 이루어져야만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임
 -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디지털 전환 가능 영역에서 개시 후 확산이라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업종별 디지털 전환 수준의 상한(upper-bound) 식별을 통해 제조혁신역량 제고의 현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과의 거래관계가 중소·중견 기업의 제조혁신역량을 제고함에 따라 대기업과 거래기업 간의 발전적 협력 관계 형성이 필요
 - 거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해 결정된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생산을 위한 생산설계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공정개선 등 혁신여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 대기업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

- 제품수명 전 주기에 걸친 관련 기업의 참여로 개념설계, 기본설계, 생산설계 작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거래기업은 제품개발과 동시에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공정 간소화를 위한 혁신 추진이 가능함
- 대기업의 아웃소싱 방식을 고려한 국내 디지털 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 접근이 필요
 - 최근 대기업의 아웃소싱 발주 시 데이터 해석결과의 제시를 요구하는 SR(Sourcing Request)이 보편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수주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과 함께 제조혁신을 위한 투자여력의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음
- 기존 지원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혁신 정책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정책의 보완과 함께 질적 개선이 필요
 - 국내 스마트공장 고도화 단계는 수준간 격차가 과도해 실질적인 분류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분화로 지원정책의 정밀성 제고가 필요. 또한, 기존 양적 보급·확산 중심의 사업으로부터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성과평가와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질적 수준 제고 중심의 사업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스마트팩토리 고도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기 북부 제조혁신지원사업 센터(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재)를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 설비 구축을 통하여 각 기업 환경에 최적 맞춤형 스마트팩토리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남북 호시무역

- 북중 변경무역
 - 2017년 이후 대북제재로 인하여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석탄, 철광석, 섬유, 해산물 등이 중국 수출이 금지되고 있음
 - 2000년대 북중 무역에서 차지하는 변경무역 비중은 약 2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2001년 이전에는 중국정부가 변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변경부역에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增值稅)의 50% 감면에 힘입어 변경무역비중이 약 80%를 차지해왔음¹⁾
 - 변경무역은 변민호시무역(邊民互市貿易)과 변경소액무역(邊境小額貿易)으로 나누어지는데, 변민호시무역은 국경선 20km 내의 정부 허가 개방지역 혹은 시장에서 변경지역 주민들이 생활용품을 거래하는 무역을 말하며, 변경소액무역은 변경지역의 변경소액무역권을 부여받은 기업이 변경세관을 통해 인접국 변경지역 기업 혹은 무역기구와 거래하는 것을 말함
 - 2000년대 이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의해 북한 수출품에 대한 남한의 수입수요 증가함에 따라

1)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 제246호, 2006

서 북중 변경무역은 보세무역 형태로 바뀌게 되었음

- 남북교역의 약 60%가 중국을 경유한 간접교역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약 85% 이상이 단둥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반입되었음
- 이는 북한의 상품화 역량 미흡과 운송 인프라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남북호시무역산업단지의 필요성 큼

- 위 북중 변경무역 사례로 볼 때, 남북교류 활성화 시, 남북호시무역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 즉, 북한의 물자가 남한으로 반입되기 전에 일정한 완충지대에서 가공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한국의 물품이 북한으로 반입될 경우에도 북한 수요에 적합한 형태로의 가공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따라서 남북교류 활성화 시, 호시무역산업단지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단둥 호시무역구

- 북중 변경무역 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단둥시에 북중호시무역구를 2015년에 설립
 - 단둥시내 중심지에 위치하며, 한국, 북한, 일본 등 상품 면세 판매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대북제재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호시무역구에는 세관, 보세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축자재, 북한 미술품, 한국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구역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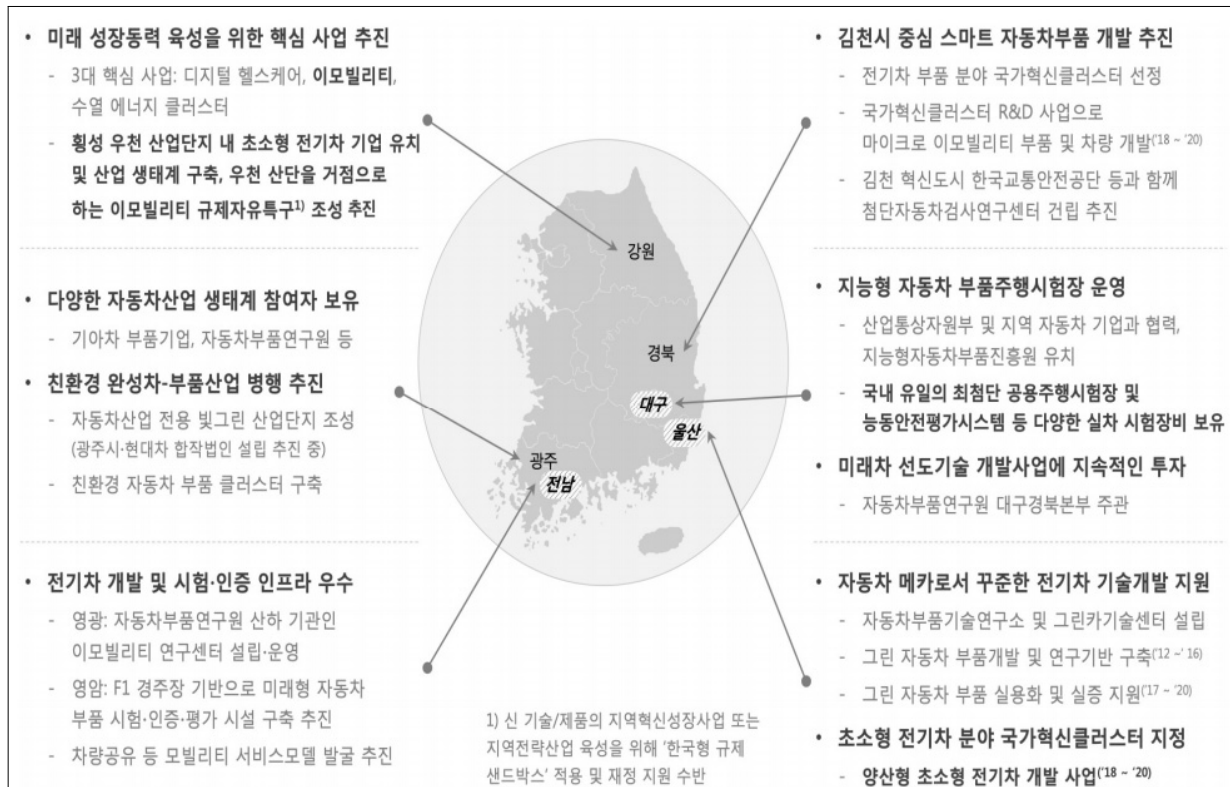
3) 접경 지역 4차산업 & 미래산업 육성방안

세부사업명	추진사업 내용	비 고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전기자동차 부품/완성차 생산 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 지원 ◦ 관련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 벤처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시 중점 추진사업 ◦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과 연계 추진 검토
드론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입주센터 건립 ◦ 벤처창업지원 ◦ 드론 부품/완제품 R&D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천시, 고양시 미래산업으로 추진 ◦ 항공대 산학협력 추진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헬스, 디지털케어 클러스터 조성 지원 ◦ 관련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 벤처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바이오진흥원과 연계 지원 ◦ 김포/고양/파주 지역 바이오업체 지원
수열 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융합단지 조성 ◦ 수열기반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조성 ◦ 수열기반 물기업 특화단지 조성 ◦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생태주거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 소양강댐 수열 에너지 활용
스마트팩토리 테스트 베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제조혁신지원사업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 구축 ◦ 스마트팩토리 고도화사업과 연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가구 스마트팩토리테스트베드
남북호시무역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물류 기반시설 조성 ◦ 산업단지 부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 교동도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산업은 핵심적인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평가되며,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육성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경북: 전기차 부품 분야가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선정되었으며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센터 건립 추진 중
 - 대구: 지능형 자동차 부품주행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연구원을 중심으로 미래차 선도기술 개발사업에 지속적인 투자
 - 울산: 자동차 메카로서 꾸준한 전기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소형 전기차 분야에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 전남: 영광군에 자동차부품연구원 산하 이모빌리티 연구센터가 설립·운영 중이며 대마산단에 관련 기업 유치
 - 광주: 다양한 자동차산업 생태계 참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음
 - 강원: 이모빌리티를 핵심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에 이모빌리티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초소형전기차, 농업용전기차 등 4개 전기차 업체 유치하였음. 전기차 양산을 위한 임대공장, 주행시험로 등 핵심 인프라 구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우천산단을 거점으로 이모빌리티 생태계를 기반 구축하고 있음
 - 군산: 군산 GM 자동차 폐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이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정부, 지자체, 업체가 공동투자조합 결성하고(총 4천억 원),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그림 III-42〉 지역별 이모빌리티 산업 동향



※ 자료: 강원연구원,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 이모빌리티산업, 추진성과와 차별화전략, 2019

- 김포는 청소차, 버스 등 상용전기차를 주 타겟시장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김포지역 제조업체 가운데 전기자동차 부품소재 관련 업체가 1,121개 사로 전기차 산업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전기차 관련 업체 대부분이 아직 직접 전기차 부품소재 혹은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김포시 상용전기차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서 상용전기차 관련 부품 소재산업 및 완성차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
- 클러스터 조성을 통하여 입주업체의 기술개발, 마케팅, 인력양성 등을 지원
- 본 사업에서는 김포시 상용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사업 가운데 상용전기차산업단지 조성, 중소 중견기업의 상용전기차 핵심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 등이 지원 대상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음. 또한, '20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함

● 드론

- 포천시의 드론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계획
- 4차산업 아이템인 드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포천 드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창업지원, 기업 유치,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 계획 수립
- 주요 사업 내용은 벤처 창업지원센터 설립, 기업입주센터, 기업지원센터 및 생활 인프라 구

축 등

- 드론 관련 제조업체, 기술연구소, 체험형 테마파크 등 드론 생태계 기반 조성을 통한 드론 산업 집적화를 위한 드론 클러스터 조성
 - 포천 육군 드론군단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근거리에 위치하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도입 산업으로 적합
 - 드론 관련 중소기업 및 연구소 입주공간, 벤처창업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공동 활용장비 구축, 드론 체험 및 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 바이오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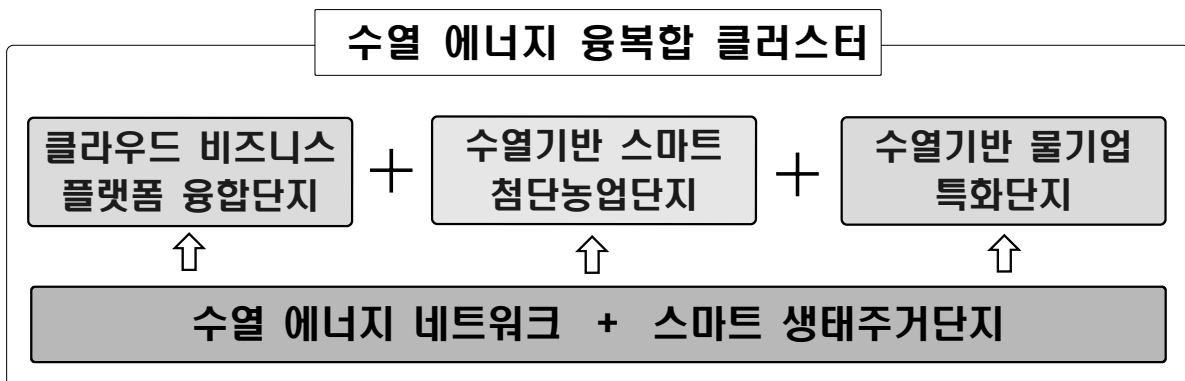
- 접경 지역은 수도권에 근접하여 우수한 정주 여건과 연구개발 인프라, 물류교통이 발달하여 기술 집약적인 바이오산업이 발전하기에 우수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접경 지역 중 바이오산업은 춘천지역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김포, 고양, 파주지역에도 각각 춘천지역의 20%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음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총 부지면적 36,000㎡, 건물 5동에 120실 규모의 입주공간 및 아파트형 공장과 다양한 기술사업화 지원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400여 종의 첨단 연구·분석장비 및 시생산장비(Pilot Plant)와 더불어 국내 바이오 특화센터 중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획득한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시설(GMP)과 유럽인증 기준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원료 GMP 등의 시설을 통해 바이오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있음

- 바이오헬스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김포, 고양, 파주지역 바이오산업 업체에 대한 R&D 지원, 벤처창업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바이오산업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 바이오벤처창업 지원사업 추진

● 수열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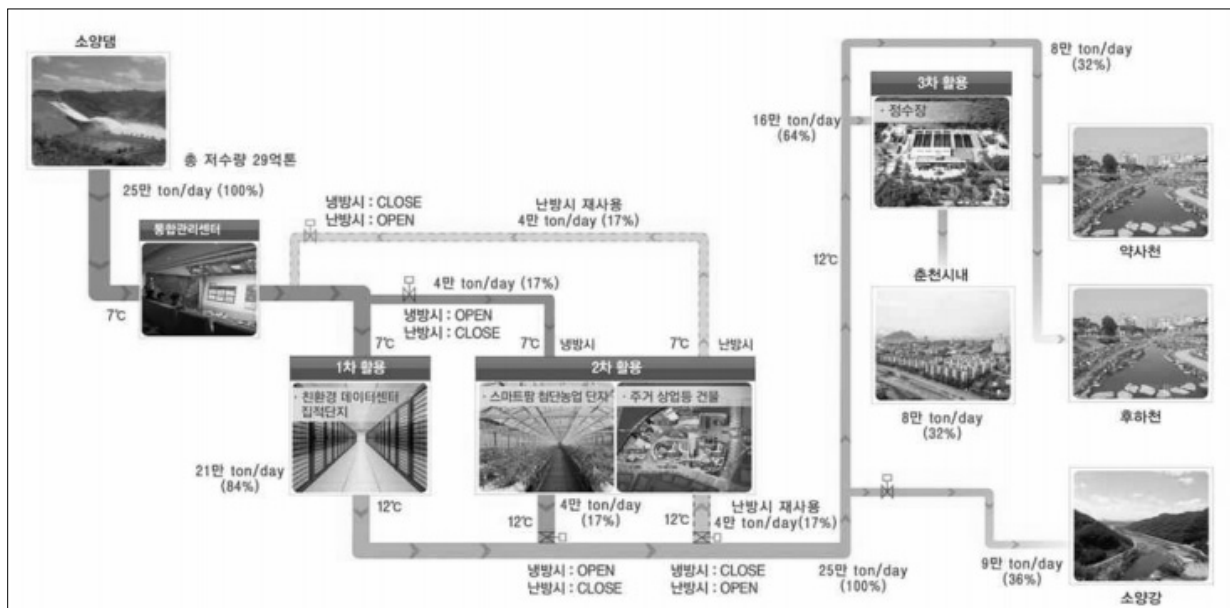
- 춘천시의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계획



※ 자료: 춘천시

- 사업목적: 지역자원인 소양강댐 냉수를 적극 활용, IT기업 유치 및 첨단농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미래 新산업으로 육성(고품질 일자리 창출)
- 사업 내용
 - ▶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융합단지 조성
 - ▶ 수열 에너지 기반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조성
 - ▶ 수열기반 물기업 특화단지 조성
 - ▶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생태주거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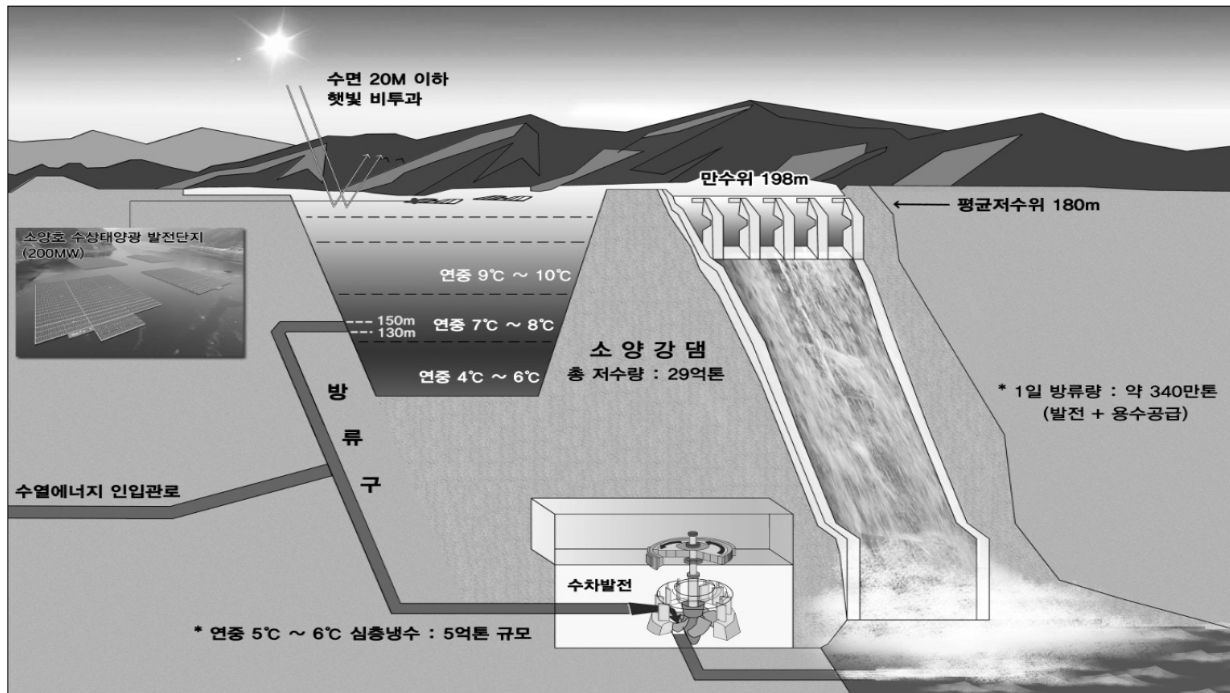
〈그림 Ⅲ -43〉 소양강댐 수자원 활용방안



※ 자료: 춘천시

- 개발전략: 소양강댐에서 내려오는 저온냉수(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수열 에너지 순환네트워크 및 수자원 신산업화 기반 마련
 - ▶ 소양강댐의 저온냉수(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데이터 센터 집적단지 조성
 - ▶ DC에서 사용 후 승온된 용수는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에 난방용으로 재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미래농업단지 조성
 - ▶ 물기업 특화산단은 친환경 데이터 센터 집적단지 및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연관기업 유치
 - ▶ 수열원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 최적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입주기업의 정주 여건(주거+상업) 개선

〈그림 III -44〉 소양강댐 수열 에너지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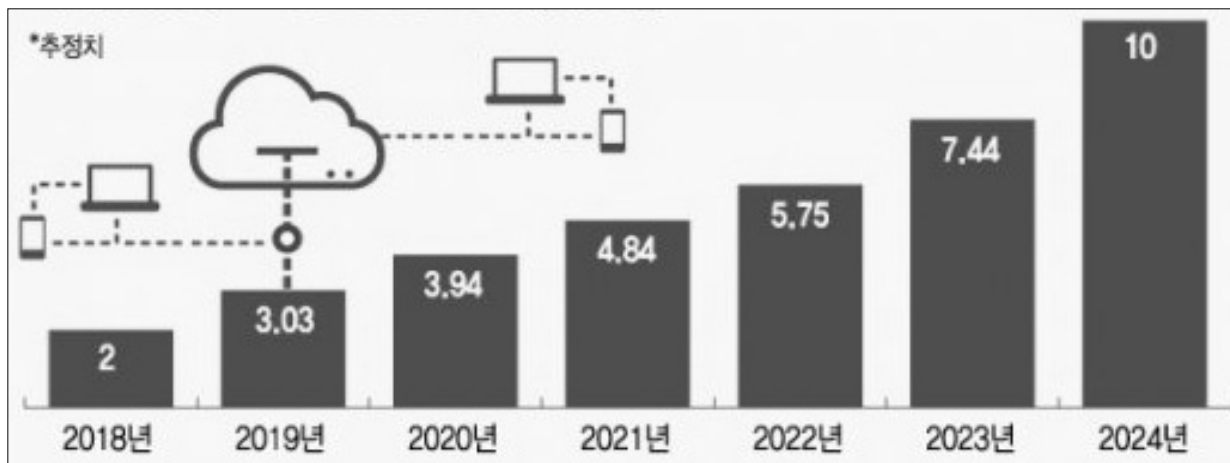


※ 자료: 춘천시

- 소양강댐 수열 에너지 현황
 - 소양강댐은 국내 댐중 수심이 가장 깊으며 방류구가 130~150m 지점에 위치
 - 일사량 한계지점(20m) 하부 수온은 7°C 이하로 급격히 하강(심층부 4.7°C)
 - 방류량은 1일 평균 340만 톤(최근 3년간 평균)이며 방류온도는 6~9°C 수준
- 국내 클라우드 시장 '19년 공공, 금융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24년까지 평균 27%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그림 III -45〉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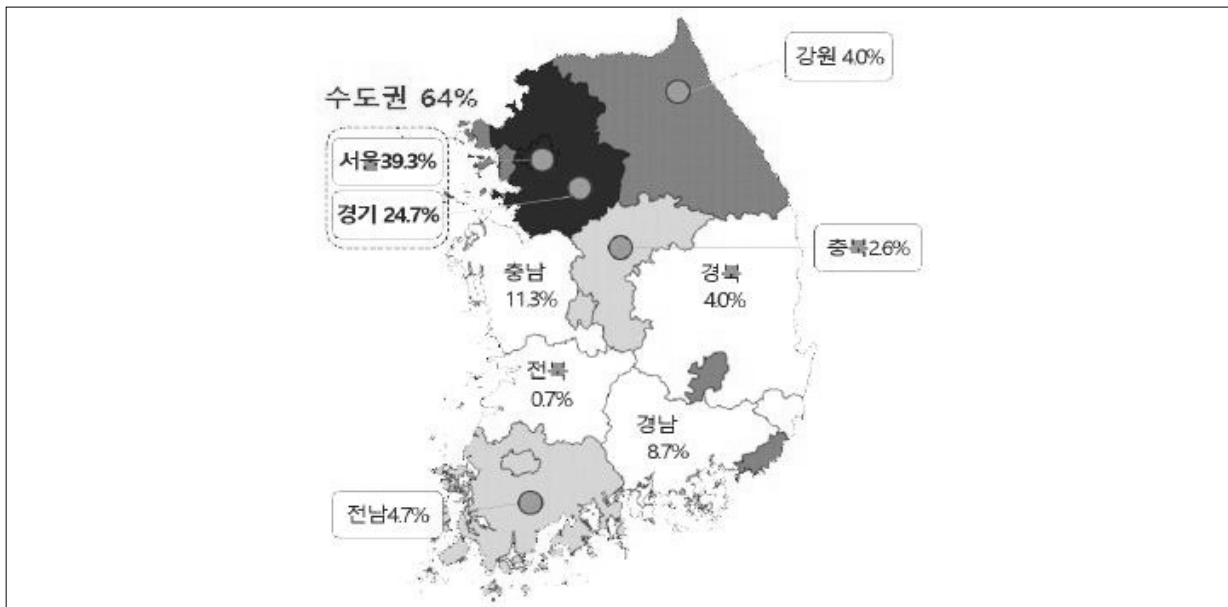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자료: 머니투데이, 2019.0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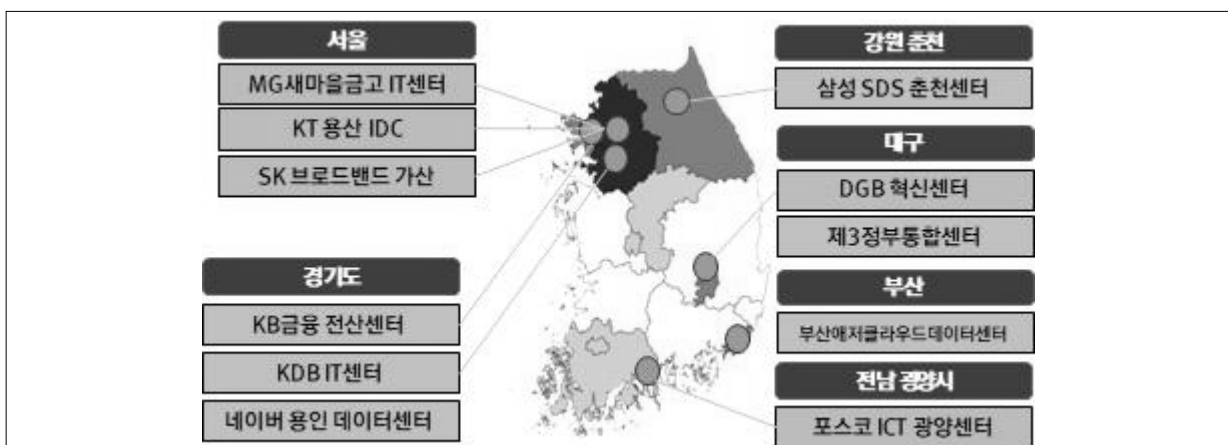
- 수열 에너지 기반 클라우드센터 구축사업 추진
 - 고객 및 유지보수 인력의 접근성, 고속·대용량 통신 인프라의 우수성으로 인해 수도에 집중되어 있으나, 일부 데이터 센터(LG CNS,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더존비즈온 등)는 냉각 효율 개선을 위한 외기도입 활용, 지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방(부산, 춘천)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
 - 산업계 데이터 센터의 경우 81.3%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부·공공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38.1%), 충청권(19.0%), 동남권(16.7%)순으로 분포
 - 향후 2~3년 내(2020년 이전) 1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들이 신규 구축 추진 중

〈그림 Ⅲ-46〉 국내 데이터 센터 분포 현황



※ 자료: 춘천시

〈그림 Ⅲ-47〉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 추진 현황



※ 자료: 춘천시

- 소양강댐 수열 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시 기대 효과²⁾
 - 냉방전력 절감: 123,240Mwh/년 / 16,021백만 원/년
 - 총 절감량은 춘천시 약 26,520가구가 소비하는 연간 전력량과 동일수준
 - CO₂ 감소량: 57,461tCO₂eq/년 / 1,178백만 원/년

산업경제적 측면	지역·정책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일자리 창출: 5,000여 명 * 유치예상 기업 67개사 입주완료 시 ʼ 지방세 세수증가: 220억 원/년 * 지방세 납부 실제 사례 적용 ◦ 생산유발효과: 3조 9,765억 원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유발계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산업육성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수도 - 春川』 구현 ◦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는 『지역산업구조 선진화』 기여

※ 자료: 춘천시

- 소양강댐 수열 에너지의 경제적 효율성으로 인하여 데이터 센터 유치에 유리한 환경 조성 가능
- 부산 미음산업단지(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시범단지)와 싱가포르, 중국 貴陽·貴安 빅데이터 산업발전 클러스터 등 국내외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조성사업 성공사례 다수 있음
- 결론적으로 소양강댐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데이터 센터, 스마트팜 유치 등을 통하여 접경 지역 산업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산업 인프라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스마트팩토리

- 정부는 스마트 제조혁신 거점센터 6개를 포함하여 전국에 19개 스마트 제조혁신 센터를 건립
 - 전국 6개 스마트 제조혁신 거점센터에는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를 구축함
 - 첫 번째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로 건립된 안산 스마트공장은 스마트 제조 핵심기술을 실제 공장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비교 시험·인증할 수 있는 실험형 공장임
 -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디지털트윈),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제조 빅데이터, 클라우드, 협업로봇, 입체(3D) 프린터, 증강·가상현실(AR·VR) 등 첨단 스마트 제조기술을 집약한 기술·설비 간 상호 호환성 시험과 장비인증 기반시설을 구축
- 현재 접경 지역에도 경기 대진테크노파크에 경기 북부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 공장 신청, 선정과 협약, 컨설팅과 교육, 사후관리,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구시험인증센터와 연계하여 1단계로 가구 스마트

2) 소양강댐 수열 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사업설명 자료(2020.2.20.), 춘천시 에너지기본계획(2019.11) 참조

팩토리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추진하고, 2단계로 섬유, 기계, 자동차 등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

- 현재 제조혁신지원사업이 기초수준과 중간 1 수준에서는 비교적 중소기업이 접근하기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중간 2 고도화 수준은 각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테스트베드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각 업체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이 적용할 필요가 있음. 즉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는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도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접경 지역 기업이 경기 남부지역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는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있어 거의 이용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접경 지역에 제조혁신거점센터(테스트베드) 유치가 필요함

〈그림 Ⅲ-48〉 안산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



※ 자료: 스마트 제조혁신 센터 홈페이지(https://www.demo-factory.kr/SMIC_510_view.php?page=2&now_YY=&wr_id=29)

● 남북 호시무역

-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하여 남북 변경무역기반 구축사업 추진 필요
- 남북호시무역 대상지는 접경 지역 중에서 남북한 상호 간에 통제에도 용이한 강화 교동도가 지리적 입지 여건 상 적합함
- 남북호시무역산업단지 계획을 남북호시무역산업단지로 개념을 변경한다면, 사업 타당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프리미엄 소비재산업

1) 프리미엄 소비재 산업 정의

- 본 연구에서 프리미엄 소비재 산업은 접경 지역 특화 산업으로 선정된 K-뷰티산업과 스마트생활소비재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 K-뷰티산업은 한류 붐을 기반으로 중국,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산 화장품 및 미용기구를 의미함
 - 스마트생활소비재는 ICT, IoT 융합 생활용품을 의미하며, 전기용품, 어린이용품, 생활용품으로 구분됨

2) 프리미엄 소비재 산업 동향 분석

- K-뷰티는 혁신적 제품 개발과 한류의 확산을 토대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며 세계 수출 4위 국가로 성장
 - ('09) 17위 → ('14) 10위 → ('16) 5위 → ('18) 4위
- 최근 5년간 시장 규모가 연간 5%대 성장* 하는 가운데, 수출이 연평균 34.9% 증가** 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
 - * (시장규모) 세계: 3,329억 달러('14) → 4,087억 달러('18)/ 연평균 5.2% ↑
국내: 87.6억 달러('14) → 120억 달러('18)/ 연평균 5.4% ↑
 - ** (수출액) 19억 달러('14) → 63억 달러('18, 세계 4위)/ 연평균 34.9% ↑
-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중 4개 기업 포함, 코스맥스·한국콜마 등 수탁기업(ODM/OEM)이 세계 상위 기업으로 부상
- 전체 기업 수는 빠르게 증가하나 소규모 업체가 다수를 차지
 - (제조업체 수) 2,244개('18, 8.5% ↑), (책임판매업체) 12,673개('18, 7.1% ↑)
 - 국내 책임판매업체 중 매출액 50억 미만 기업이 97%(12,292개)
- 화장품 산업 일자리 약 23.5만 명('18년 추정)로 지속적 성장
 - 화장품 제조업 일자리 증가율 4.0%('19.9월, 제조업 -0.2%)
- 경기도 접경 지역의 화장품 생산업체는 김포(49개), 파주(46개), 고양(45개), 포천(14개), 양주(10개), 연천(2개), 동두천(1개) 등(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 소비수준 향상, 피부과학이 발전하면서 화장품 산업의 경쟁 패러다임이 “기능성 선호·개인 맞춤·고급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3대 트렌드	소비 동향
기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 기능성 화장품 시장 470억 달러('17년, 전체 16%) ◦ 신남방 국가에서 미백·수분보습 등 제품 선호
맞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대 중심으로 개인 피부 상태에 따른 나만의 화장품 구매
고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 중심 경쟁 심화(프랑스/일본) ◦ 화장품과 문화콘텐츠(K-POP)가 함께 소비

- 세계 상위의 ODM/OEM 시설 보유로 혁신제품 출시가 용이하고, 기능성 화장품 제도 세계 최초 도입('99)으로 기능성 화장품 시장 선도
- 우리나라 소비자는 혁신성과 스피드, 품질과 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 개발된 화장품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 시장 역할 수행
- 중국, 아세안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 등 전세계적 한류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제품 선호도 증가
 - 영화·드라마·K-POP 등 문화 콘텐츠 수출(한류)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 의류 등 소비재 상품의 수출이 함께 증가
 - ▶ 한류의 수출기여효과(국제문화교류진흥원): '18년 기준 94.8억 달러(식료품 16.1억 달러, 화장품 16억 달러, 액세서리 13.7억 달러, 가전제품 4.4억 달러)
- 대기업 중심의 '압정 구조'에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피라미드 또는 항아리 구조'로의 건강한 생태계 변화 시급
 - ▶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2개 기업이 국내 내수 생산 실적의 약 60% 차지
- 기초 소재 연구개발 및 국산화, 산업 인프라 조성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기술력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함
- 정부는 국내 화장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 추진
 - (내용)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설 및 지식 재산권 침해 대응 강화
 - (기대 효과) 중소기업 브랜드 경쟁력 제고, 맞춤형 화장품을 통한 신규 일자리(5,000명) 창출, 한류 편승기업 해산 및 확산 방지
- 정부는 K-뷰티 클러스터 조성 계획
 - (K-뷰티 클러스터 지정) 민·관(국가·지자체) 협의체 운영을 통해 화장품 특화 클러스터 지정 추진('21). 화장품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모여있고, 연구 및 정주 환경이 우수한 산업단지* 중에서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생산 시설, 연구기관, 인력 양성기관 및 기반 인프라 조성
 - * 오산 가장산업단지, 화성 향남산업단지, 인천 남동공단, 충북 오송·오창산업단지 등
 - (화장품산업 지원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및 종합 컨설팅(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안전성 평가·인증 등 전담공인기관 인프라 구축 추진

- (K-뷰티 글로벌 인력 양성) 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연 2,000여명 전문교육 실시
- (화장품산업 전시관 신설) K-뷰티 산업 전시관 신설을 통해 수출유망국가* 해외 바이어 및 규제당국자 대상 산업 소개 및 홍보
 - *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등
-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엄격한 품질관리 및 공정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시설개선 자금 지원
-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GMP 시설에서 생산해야만 하며, GMP 시설을 갖추려면 약 10~5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한데,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GMP 시설을 투자할 여력이 없음
- K-뷰티산업을 견인할 뷰티산업진흥센터를 접경 지역에 유치 추진필요
 - (뷰티산업진흥센터) 뷰티산업 기술개발과 융 복합 사업을 통해 기술력 축적,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분야 및 종사자에 보급함. 뷰티산업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연구 정보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 뷰티산업 선도기업과 스타기업을 육성함. 지역전략산업으로서 뷰티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지역 뷰티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최근 세계적으로 ICT 기술을 응용한 스마트패션 웨어러블(Smart fashion wearable) 제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각국 기업들의 투자 및 제품 출시가 활발히 진행 중
 - 액세서리 분야에서는 Tag Heuer(블루투스가 내장된 스마트워치), Swarovski(수면패턴을 알려주는 크리스털 장신구) 등, 의류·가방 분야에서는 Ralph Lauren(심박동 측정 폴로텍크), emPOWERED(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한 가방) 등이 혁신제품을 출시
 - 기존 명품 소비재 분야는 미국, 유럽 등 전통 브랜드 강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은 반면 혁신제품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우리 기업의 시장 선점이 가능

혁신제품 사례	
의류에 IT 기술을 접목한 제일모직	지난해 제일모직은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골프의류를 출시했다. 빈폴 골프웨어는 옷에 부착된 NFC(근거리무선통신) 태그를 통해 라운딩할 골프장의 남은거리, 방향 등 분석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해준다. 이 밖에 모바일 명함을 상대방에게 전송 가능한 로가디스 스마트수트 출시에도 주력하며 명품의류의 스마트화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시장을 시작으로 중국 등 해외 수출을 계획 중이다
침구류에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원텍 코리아	(주)원텍코리아 IoT기술을 접목해 숙면을 도와주는 베개 '웰로우'를 제작했다. 이 베개는 3D 입체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경추와 허리의 자세를 잡아줘 편안한 숙면을 도와준다. 센싱장치 및 PCB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면정보를 제공한다. 중국,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 준비 중이다.

※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2016년 22호

- 고급 소비재 수출이 호조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급 소비재 산업은 주요국에 비해 산업 규모 및 노하우가 미흡한 상황임
 -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고급 소비재 수출의 총수출 대비 비중은 크게 낮은 수준이며, 세계적인 인지도를 지닌 글로벌 브랜드도 거의 없는 상황
- 해외 고급 소비재 시장 진출에 있어 다양한 긍정적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를 적극 활용하여 고급 소비재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함
 -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산층 인구 및 소비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세계 고급 소비재 시장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전통 브랜드 보다는 새로운 감각을 찾는 소비층 증가와 온라인 구매 증가 등의 소비 트렌드는 브랜드 인지도가 미약한 우리 제품의 고급 소비재 틈새시장 공략을 가능하게 함
- 한국의 문화와 IoT 기술이 가미된 고급 소비재를 브랜드화 할 경우, 향후 고급 소비재도 우리의 유망 수출품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한류와 연계한 명품 소비재 기획, 인디브랜드 육성, ICT 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 개발 등 노력이 필요
- 시계 및 주얼리 산업은 K-주얼리 열풍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음³⁾
 - 전세계 시계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79조원이며, 2019년까지 연평균 6.6% 성장하여 약 96조원을 기록할 전망
 -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소득 수준 증가, 스마트 워치 시장의 확대 등으로 인해 시계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
 - 글로벌 주얼리 시장은 2016년 기준 222조원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까지 연평균 6.4% 성장하여 약 251조원을 기록할 전망
 - 최근 중산층 여성의 구매력 향상으로 주얼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그 외 아시아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현지 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한 제품과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한 진출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
 - 핵심 부품 및 소재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다수 기업이 국내에 자체 공장 보유하고 있음
 - 정밀 기술을 요구하는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 특성상, 비싼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부품 가공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 공정 독자 수행
 - 인기 한류 스타를 앞세운 마케팅으로 K-주얼리 열풍 국내 주얼리 브랜드의 세계 시장 점유율

3)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소비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성 수립, 2018.5

확대

- 주방용품 산업은 냄비/팬류, 플라스틱 용기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 전세계 주방용품 시장 규모는 약 18.7조원이며, 2023년까지 24.1조원으로 성장할 전망
 - 주방용품 시장 규모는 2012년 15.5조원에서 2017년 18.7조원으로 약 3.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 (원/부자재 공급) 스테인레스 등 해외에서 반가공원료를 수입하여 가공된 원료 제작, 원재료인 플라스틱과 유리류는 중국, 베트남 현지에서 조달
 - (냄비, 팬류)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국내 유명 OEM 생산업체 다수
 - (용기류) 중국, 베트남 현지공장에서 자체 생산
 - (테이블 웨어류) 한국도자기의 경우 국내생산, 젠한국은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
- 가구의 수입 완제품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원재료는 관세가 적용되어 국산 제품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하며, 복잡한 유통 구조로 인해 마진이 높은 것이 특징임
 - 전세계 가구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151.3조 원이며, 주요 수입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 급격한 도시화와 부동산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가구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약 4.5%를 기록하며 205.2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소형 가전은 전기밥솥과 홈 뷰티 디바이스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음
 - 글로벌 면도기 시장은 생필품으로서의 꾸준한 수요에 기인하여 2017년 시장 규모는 약 25조원에서 연평균 4.3% 성장하여 2025년 시장 규모는 약 35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2015년 약 25조원 규모에서 연평균 19.4% 성장하여 2024년에는 약 124조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세계적인 K-뷰티 열풍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 뷰티제품에 대한 바이어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의 가정용 미용기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이 용이한 환경 조성. 이를 근거로 미국이 한국 뷰티 디바이스 제품 수출 유망국이라 판단
 - 글로벌 주방용 기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건강 관심도에 따라 식(食)문화가 발달하여 주방용 기기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60조원의 규모를 기록한 시장은 연평균 4.6% 성장하여 2023년 86조 원을 기록할 전망
 - 주방용 기기의 경우 소재 대부분은 국내에서 조달하여 국내 자체공장에서 생산

- 프리미엄 전기밥솥 출시, 헤어기기의 제품 혁신 등에 기인하여 최근 3년간 소형가전의 생산액 급증
- 유아용품은 전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자녀 1인당 지출액 확대 및 이에 따른 국내 및 해외 시장의 성장이 진행되고 있음
 - 세계 완구 시장은 2016년까지 3.3%의 성장률로 지속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126조원의 시장 규모를 기록할 전망
 - 완구 수요의 대륙별 현황을 보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성장세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북미, 서유럽 등 선진국 시장은 약 2.3% 성장률로 사실상 시장이 정체
 - 세계 유아위생용품 시장은 연평균 8.0%의 성장률로 성장하여 2021년 88조 원의 시장 규모를 기록할 전망
 - 2016년 기준 가장 낮은 기저귀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시아 중심의 아시아 지역에서 앞으로 유아용 위생용품 시장의 높은 성장성이 전망
 - 유모차 시트 및 기저귀 펄프 등 유아용품은 국내에서는 기획 및 디자인 연구에 주력하고, 대부분 원재료의 경우 높은 수입에 의존. 생산은 중국, 필리핀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OEM으로 생산
 - 국산 애니메이션 흥행으로 국내 완구 시장이 확대되면서 유아용품 생산액 및 사업체 수 증가
- 생활소비재 산업을 산업 중요도 및 국내 기업의 성장 잠재력 수준에 따른 포지셔닝을 통해 영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
 - (생활소비재 산업 중요도 판단 요소) 성장성 및 규모, 글로벌 시장의 경쟁강도, 생활 필수도
 - (국내 생활소비재의 성장 잠재력 판단 요소) 상대적 점유율, 차별화 가능성
 - (브랜드, 기술 등 측면), 일자리 창출 가능성
 - ① 중요도로 보면, 구두류, 가방, 주얼리, 이미용기기, 주방용품기기, 완구 등이 높고, ② 성장잠재력으로 보면, 구두류, 가방, 주얼리, 위생용품, 이미용기기, 주방용품기기, 유아위생용품 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8)
 - 종합적 평가로 본 유망생활소비재는 구두류, 가방, 주얼리, 이미용기기, 주방용기기, 완구, 유아위생용품 등 7개 품목임
 - 위생용품은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대기업 중심의 산업으로 정책 방향성 도출 대상 산업에서 제외
 - 전략적 종합육성 대상 산업으로 선정한 상기 7개 생활용품 산업의 경우 Value Chain 연계

체계 부재, 제조 인프라 경쟁력 하락 우려 등의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음

- 완구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은 인력 및 자금 등 제작 인프라가 부족하여 자체적인 콘텐츠 개발에 어려움
- 유아용품의 경우,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 획득에 대다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급화 추세에 맞춰 국내 소매 유통업체들 간의 수입 브랜드 유치 강화로 인한 국내 브랜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추정됨. 해외 시장은 니치마켓을 발굴이 중요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은 해외 현지 시장 정보(산업 트렌드, 현지 소비자 수요 등)가 미흡하여 해외국의 니치마켓 발굴이 어려운 실정
- 주얼리 산업은 인력 고령화, 구인난 등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치 및 탈세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정부의 산업 육성정책이 미흡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내 주얼리산업 규모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3가 내 약 550개의 주얼리 업체가 디자인-제조-도소매 유통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으나, 산업기반 시설 노후화 및 개별시설 위주로 체계적인 산업 공간 관리가 미흡. 중국의 인건비 상승, FTA 발효 등 대내외 환경변화 및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중국으로 진출한 주얼리 기업이 2013년부터 U턴을 추진 중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유입 급감
 - 중국의 경우, 중국 투자 시 10년 이상의 실제 경영기간을 요구하며 그 전에 법인 청산 시, 그간 받은 기업소득세와 지방세 우대혜택을 반납해야 해서 해외현지법인을 완전히 청산하고 U턴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가방은 디자이너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여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 심화. 브랜드가 대표 소비 영향요인인 가방 산업 특성상 국내는 우수한 핸드백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력이 미흡하여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어려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R&D, 제품 다각화 필요
- 소형가전(이미용기기, 주방용기기)은 소비자의 수요가 세분화되면서 가전의 UI/UX 등 디자인 측면이 핵심 소구점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영세기업이 주도하는 소형가전의 경우 디자인 활용 기술 R&D 전무. 국가별 다양한/복잡한 해외규격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어려움. 가전은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교체의 필요성이 낮은 산업으로 단일 품목으로 성장하기 어려우나, 소형가전을 주도하고 있는 영세 기업들은 R&D 투자 여력 부족. 대형가전의 사업을 영위하던 대기업이 소형가전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시장 잠식 우려. 전기밥솥 등 주방용 기기는 각국별 식문화, 뷰티디바이스 등 이 미용기기는 인종별 얼굴골격, 피부타입 등을 반영한 현지화 제품이 필수적이나 영세기업들은 이를 위한 R&D 여건이 부족하여 수출 전개에 어려움 직면

- ▶ 세계 소비자들은 지역에 따라 각자 다른 니즈가 존재, 이들에 맞는 현지화 상품개발이 수출 성공의 열쇠
 - ▶ 소형가전 업체의 세계적인 기업인 필립스(네덜란드)의 경우 주부들의 피드백을 제품개발에 적극 반영하는 현지화 마케팅을 통해 주방 가전 시장에서 성공
- 구두는 해외 현지소비자들의 족형 DB가 부재하여 해외 진출 경쟁력 미흡. 수제화는 디자인부터 제값(가족원단 봉제), 저부(창과 굽 끼우기) 까지 제작자의 고급기술을 요하나 열악한 근무환경, 신발 제작 기술 교육기관 부재 등의 이유로 인력 매우 부족한 상황. 성수동 구두공장 약 60%는 브랜드 업체의 1차 하청업체이며, 갈수록 원청업체의 폭리가 심화되어 제조업체의 수익성 하락세 지속
- ▶ 2014년 이후 성수동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성수동 공장 주변의 임대료가 상승, 기존에 입주해있던 상인들이 높은 임대료 탓에 상권에서 이탈하는 현상 발생
- 생활소비재 산업은 공통적으로 미흡한 한국 브랜드력, 낮은 가격경쟁력, 해외규격인증 대응 어려움 등 산업 Value Chain 전반에 걸쳐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 생활소비재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면서 접경 지역으로 유치하는 전략 추진 가능
- 한류와 생활소비재 판매를 연계한 한국형 생활소비재 O2O(online to offline) 체험점을 고양 킨텍스와 연계하여 건립 추진
 - ▶ (K-드라마 AR존) 체험존 내에 인기 드라마 장소를 실제로 구현하고 AR기술을 접목하여 방문객이 드라마 한 장면 속에 있는 것처럼 연출
 - ▶ (K-POP스타 라이브 홀로 콘서트)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외국에서도 인기 있는 BTS 등 한국 대표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생동감 있게 재현
 - ▶ (K-FOOD 전문관) 한국음식을 함께 조리하고 맛볼 수 있는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주방용품, 위생용품 등을 체험하고 판매 연계 추진
 - ▶ (3D 한국 공예품 제작관)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한국 공예품을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쉽게 제작하고 체험할 수 있게 지원: (ex) 머그컵에 본인만의 디자인이 가미된 손잡이를 3D 프린터로 제작 등
-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의 실효성 高 산업을 선별하고, 업종별/규모별 역량 맞춤형 스마트화 수준 고도화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 지원 추진

3) 접경 지역 프리미엄 소비재산업 육성방안

세부사업명	추진사업 내용	비 고
K-뷰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뷰티산업진흥센터 건립 ◦ 화장품 기술개발/마케팅/인력양성 지원 ◦ 일산 MICE산업 연계 화장품 체험테마파크 조성 	◦ 고양, 파주, 양주 지역
스마트 생활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생활소비재 O2O(online to offline) 체험점 건립 ◦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제조혁신 지원 ◦ 디자인/브랜드 개발, 해외인증 등 마케팅 지원 ◦ U 턴 업체 유치 지원 	◦ 고양 킨텍스, MICE 산업 연계

- 중소기업의 프리미엄소비재 상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을 통한 국내외 시장 개척 촉진 필요
 - 한류 확산에 힘입어 국산 화장품, 미용기구 등 K-뷰티상품과 IoT융합 생활소비재 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중국, 동남아 등 신흥개발국 소비시장 규모 확대로 수출시장 확대 전망
 - 프리미엄 소비재산업은 제조업 중에서 투자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임
- 세부 추진사업(K-뷰티산업)
 - 뷰티산업진흥센터 건립
 - 부설연구소 보유업체에 대한 제품 R&D 자금 및 기술 지원
 - 시제품개발 및 상품화 지원
 - 마케팅/인력양성 지원
 - 일산 MICE산업 연계 화장품 체험테마파크 조성
- 세부 추진사업(스마트생활소비재)
 - 한국형 생활소비재 O2O(online to offline) 체험점 건립
 -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제조혁신 지원
 - 디자인/브랜드 개발, 해외인증 등 마케팅 지원
 - U 턴 업체 유치 지원
- 추진 전략
 - R&D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함으로써, R&D 성공률 및 지원 성과 제고
 -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마케팅 지원까지 확장

라. 첨단소재부품산업

1) 첨단소재부품산업 정의

- 소재·부품산업은 성격과 특징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이종 업종에서 완제품을 제외한 ‘소재’와 ‘부품’을 공통분모로 정의된 산업임
 - 소재부품산업에는 섬유, 화학, 비금속, 1차금속,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장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수송기계부품 등이 해당되며, 제조업 성장의 핵심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 2017년 소재·부품 사업체 수는 2만 5,869개 사로 제조업에서 37.2%를 차지. 종업원 수는 131만 6,000명으로 제조업의 44.5%, 생산액은 743조 원으로 제조업의 48.9%, 부가가치는 281조 원으로 제조업의 51.6%를 차지하고 있음⁴⁾

●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

- 우리나라 제조업은 조립가공형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핵심 소재와 부품을 주로 일본에 의존했음
-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이지만 유독 일본에 대해서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장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2년에 특별법을 만들어 소재·부품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지속해 왔음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세계 소재·부품 수출시장 13위(2001년)에서 2017년 현재 6위로 도약(홍콩을 중국에 포함시킨다면 세계 5위)

● 기술경쟁력 강화 시급

- 그동안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은 선진국 따라잡기(catch up) 전략을 통해 빠른 외형적 성장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선진국 따라잡기와는 다른 전략으로 발전을 모색해야 함. 부품과 완제품은 상당 부분 중국과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소재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저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 관련 기술력이 부족하고 평균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66%에 불과한 상황
-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2,000대 기업 중 소재 기업 수는 2017년 현재 미국과 중국이 40개, 일본이 29개지만 한국은 7개에 불과
- 기업의 생산액 등 외형적인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소재 관련 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인력 등 기술개발 역량은 부족한 것이 현실

2) 첨단소재부품산업 동향 분석

- 2001년 부품·소재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형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달성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생산은 2001년 240조원에서 2017년 786조원으로 증가했음. 같은 시

4) 산업연구원, 산업경제 2019.05

- 기 수출은 2001년 646억 달러에서 2018년 340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001년 9억 달러 적자에서 2018년 1375억 달러 대규모 흑자를 기록
- 외형성장의 이면에는 낮은 기술자립도, 만성적 對日적자 등 주력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취약성 존재
 - 日本은 시장크기는 작아도 오랜 기술축적을 통해 수많은 품목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구조
 - 한국·일본의 공동 생산품목 931개 중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 일본품목은 309개
 - '18년 對日전체 무역적자 241억 달러 중 소재·부품·장비 적자가 224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본만 장기간 무역적자가 지속

〈표 Ⅲ-33〉 소재·부품·장비 對日 교역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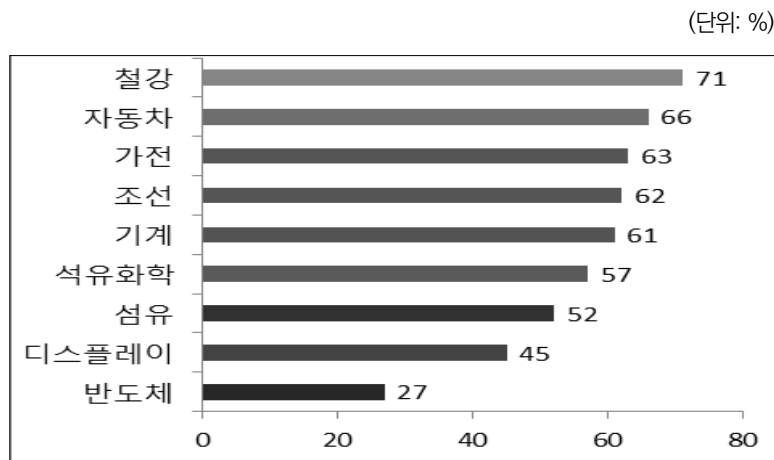
구분		'01	'10	'15	'16	'17	'18
소재 부품 장비	수 출	64	145	131	136	143	148
	수 입	192	453	309	328	387	371
	무역수지	△128	△308	△178	△192	△244	△224

자료: 관계부처 합동회의(2019. 8. 5)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소재·부품 중요성은 더 커질 전망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플랫폼화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성격과 특징이 다른 다양한 이종 업종 사이에서 '소재'와 '부품'이라는 공통분모로 산업을 재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소재·부품산업은 업종 간의 융합이 강조되는 미래 산업 흐름을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일본의 핵심소재부품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 국산화기술개발 강화
 - 소재부품산업 규모는 커졌지만 기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제품 위주로 성장했기 때문에 기술력은 그만큼 탄탄히 다지지 못했음
 -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로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

- '01년부터 '17년까지 소재·부품·장비 자체 조달률은 60% 중반 정체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정밀산업 자체 조달률은 50% 미만
 - 자체 조달률(산업연, '18): 반도체(27%), 디스플레이(45%), 기계(61%), 자동차(66%) 등
 - 그간 해외 공급망에 치중, 국내 공급기업과 협력, 기술자립 부족

〈그림 III-49〉 업종별 자체 조달 수준



자료: 관계부처 합동회(2019. 8. 5(KIET, 2018 재인용))

- 반도체는 600여 개 이상 공정에서 수백여 개의 소재와 장비가 필요하나, 해외의 안정적인 공급망에 치중하여 자체 조달수준은 27%에 불과
- 디스플레이는 패널기업과의 소재·장비 기업 간 공동 R&D*를 통해 국산 경쟁력 제고를 추진했으나, 아직 자체 조달 수준이 45%에 불과(소재 30%, 장비 70%)
- 자동차 소재부품의 자체 조달률은 66% 수준으로, 미래차 시대에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부품 생태계 구축 시급
 - 전기, 수소차 제조·공급능력은 세계 수준이나, 배터리 소재, 수소차 부품의 핵심소재 등은 수입에 의존
- 기계는 “제조를 위한 제조장비”로서, 전방산업의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에 따라 스마트 기계장비의 수요도 확대
 - 정밀제어부품인 CNC 등 핵심품목에 대한 해외의존으로 기계분야 자체 조달률은 61% 수준
 - 기계분야 핵심부품 등에 대한 해외 의존성 등은 기계장비 산업의 스마트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걸림돌
 - 전기전자 산업의 자체 조달률은 63% 수준에 불과하며, 차세대 품목인 이차전지 관련 핵심소재도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

●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에 총 7조8천억 원 예산 지원
-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 핵심품목 관련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기업들 사이의 수평적 협력 등 4가지 협력모델에 자금, 세제,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
-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Test-bed 확충
 -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양산 Test-bed를 대폭 확충하고, 신뢰성 보증 등 위험분산 시스템 도입
 - 수요기업이 보유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Test-bed를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 확대
- 민간의 생산과 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 민간투자 밀착 지원, 투자자금 공급 확대, 전문 인력의 공급 등 입체적·맞춤형 지원 강화
-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 시장이 작더라도 특화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전문기업(GTS)이 나올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통해 성장 지원체계 구축
 - 업종별로 핵심품목에 대해 전문적 공급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GTS: Global Top Specialty)을 육성
 - 잠재력있는 소재·부품·장비 강소·스타트업 기업 육성

3) 접경 지역 첨단소재부품산업 육성방안

세부사업명	추진사업 내용	비 고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사업	◦ 산업부, 중기부의 소재부품 R&D 지원 사업 연계 지원	◦ 김포,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철원
소재부품 U-턴 지원사업	◦ 중국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U-턴 시, 산업단지 입주,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복합적 지원	◦ 접경 지역 전체

● 접경 지역중소기업의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필요

● 세부 추진사업

- 영세중소기업의 R&D투자 역량 강화 지원

- 시제품 및 상용화 제품 개발 지원
- 국내 U-턴 시, 산업단지 입주,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 추진 전략

- R&D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함으로써, R&D 성공률 및 지원 성과 제고
-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마케팅 지원까지 확장
- 스마트팩토리 제조혁신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마. 가구산업

1) 가구산업 정의

- 가구는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의 총칭이며, 용도/기능/구조/재료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4가지로 구분

- 용도에 따른 분류: 가정용, 주방용, 사무용
- 기능에 따른 분류: 수납용, 휴식용, 거치용, 공간용
- 구조에 따른 분류: 이동식, 붙박이식, 조립식
- 재료에 따른 분류: 목재가구, 금속제 가구, 플라스틱제 가구

- 가구산업은 노동집약적이며,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전통산업

산업 특성	제품 특성	시장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집약적 산업 · 목재산업 중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 · 중소기업형 산업 · 쉽게 진입하고, 쉽게 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품질/가격이 3대 경쟁요소 · 주원료가 목재로 자원조달의 중요성 · 친환경적 특성 강조 심화 · 패션산업적인 요소를 지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유통구조 · 수요층이 다양한 소비재 산업 · 경기변동에 민감 · 시장 진입장벽이 낮음 · 온라인 구매율 증가

- 가구산업은 고용친화형 업종

- 가구제조업은 자동화 및 기계화가 어려워 수요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음
- 현재 가구제조업에 약 1만3천여개의 업체에 77,396명 종사(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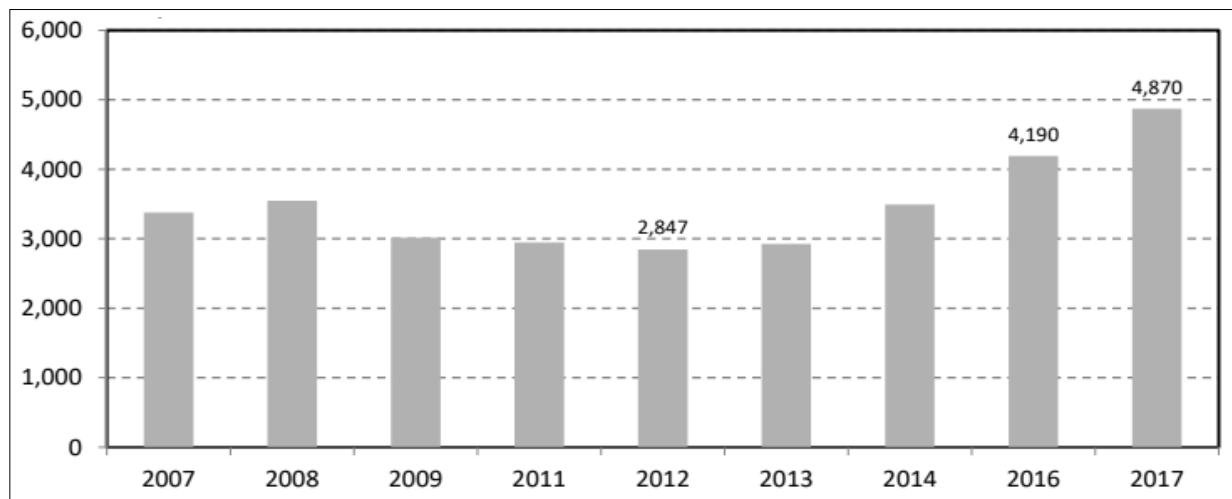
- 가구산업은 기술의 진입장벽이 낮고 생산을 위한 고정투입비용이 높지 않아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임

- 2016년 기준 가구제조업체 중 300명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하나도 없는 반면 10인 이하의 사업체 수는 전체의 90%를 넘을 정도로 전반적인 규모가 영세함

2) 가구산업 동향 분석

- 가구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7%의 높은 내수 성장세를 나타냄
 - 최근 가구 시장은 대형화와 고급화로 인해 국내 브랜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상승
 - '17년 가구제조업 매출액은 주택건설경기 호종 힘입어 4조 8,7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6.2% 증가

〈그림 III-50〉 목재 가구 제조업 매출액 추이



자료: 통계청

- 소비패턴의 양극화에 따라 중저가의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소비자들과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젊은 층 고객들에 의해 온라인 가구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싱글족 증가와 쇼핑 패턴 변화 등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의해 온라인 가구 구입은 계속해서 증가
- 정보통신기술(ICT)과 가구산업간 결합이 가속화되면서 각 업체들이 스마트 가구 제품을 출시함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시장이 가구 시장까지 확대될 전망
 - 주요 가구 업체들은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퍼니처’와 별도의 기기사업부를 신설하여, 국내 가전업체와 공동으로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음
 - 이에 따라 홈인테리어 시장에도 관련 기술이 적용되면서 스마트 가구 시장 확대가 기대되어

가구산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최근 가구업체들이 소비자의 흐름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사용이 거의 없는 원목과 천연 소재 페인트를 개발하며 가구의 최종 마감을 하고 있음
 - 1자녀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집중되고, 어린 아이들의 아토피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될 만큼 그 정도가 심각하여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가구이나 아니나는 소비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
- 경기도 가구산업의 특징
 - 경기도는 우리나라 가구제조업 생산의 70%, 사업체 수의 42%, 종사자 수의 47%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중
 - 사업체 수: 전국 11,104개 / 경기도 4,717개(남부 2,604, 북부 2,113)
 - 종사자 수: 전국 64,868명 / 경기도 29,972명(남부 16,813, 북부 13,159)
 - 경기도 가구업체는 10인 미만 영세업체가 전체의 90% 차지
 - 가구제조업 84.7%, 가구도소매업 97.8%
 - 포천은 중저가를, 파주는 원목의 재질을 살린 중고가, 남양주는 식당 등 영업점 대상의 주문형 가구를 생산·공급
 - 김포는 조달 및 호텔, 콘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구를, 광주·용인은 수도권 남부소비시장을 대상으로 고급가구를 생산·공급
- 경기도 가구산업의 문제점
 - 숙련된 기술·디자인 전문 인력 부족, 업체간 협업노력 부족으로 가구선진국에 비해 기술경쟁력 저하
 - 가구사업자 설문결과: 가구모델개발(31%), 전문 인력확보(27%), 기술·신소재개발(23%)
 - 생산과 전시판매 채널 간 체계적인 연계 부족
 - 낙후된 쇼핑 환경과 낮은 마케팅 경쟁력
 - 홈쇼핑·온라인쇼핑 등 소비자 Needs에 필요한 마케팅능력 미흡
 - 자체 브랜드로 판매 36%, 상표없이 판매하거나 OEM 납품 64%
 - 기업체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물류·전시판매 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대외경쟁력 부족

● 경기도 가구산업 발전 과제

-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구산업을 생활디자인산업으로 확대하고 디자인과 혁신 역량을 갖춘 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신기술개발 지원, 디자인전문가 육성, 마이스터高 유치, 기업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대·중·소 기업 상생프로그램 실현, 경영컨설팅 지원 등
- 쇼핑환경 개선 및 판로확보 지원을 통한 선진국형 마케팅 추진
 - 스마트 쇼핑환경 조성, 통합 온라인 쇼핑망 구축, 공동마케팅 지원 등
- 가구산업 집적화 및 공용인프라 확충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으로 성장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생산단지 집적화, 거점별 물류·판매시설 확보 등
- 가구산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며 4차 산업의 한 축이 될 미래적 산업이며, 혁신이 요구되는 산업
 - 현재 선풍적 인기를 끄는 LG의 스타일러는 가구에 전자기술이 접목된 이노베이션 상품. 즉, 주방의 미세먼지와 악취를 제거하는 ‘스마트 싱크대’처럼 스마트 가구를 만드는 혁신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

3) 접경 지역 가구산업 육성방안

세부사업명	추진사업 내용	비 고
가구 온라인마케팅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마케팅 공동 사무실 건립 및 운영 지원(접경 지역 영세 가구업체 온라인 마케팅 인력 입주) ◦ 홍보, 마케팅 코디네이터 지원 	◦ 포천 ‘마홀앤’ 연계
가구 디자인 개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여건이 편리한 위치에 가구디자인 개발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 가구 디자인 기술 교육 지원 	◦ 포천 대진테크노파크 위탁운영

- 접경 지역제조업에서 가구산업의 비중은 섬유 다음으로 높은 산업이지만, 대부분의 가구 제조업체의 규모가 영세하며,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열악한 편임
 - 따라서 관련 전문 인력의 채용 및 장기 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가구 제조업체에 필수적인 가구 디자인 및 온라인 마케팅 공동 사무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 추진사업 내용
 - 교통 여건이 편리한 위치에 디자인 개발센터 및 마케팅지원센터 건립

- 디자인 개발센터 / 마케팅지원센터 사무실 운영비용 지원(디자이너, 관리자 인건비)

● 추진 전략

- 가구 디자인 개발센터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건립하며, 가구산업협동조합, 대진테크노파크 등 관련기관에 위탁 운영
- 가구 마케팅지원센터는 포천 “마홀앤” 내 공간에 사무실 마련
 - 각사에서쇼핑몰 운영인력 채용 및 관리
 - 필요시센터의 쇼핑몰 구축 전문 인력이 자문 제공
 - 각사에서쇼핑몰 운영인력 채용 여력이 없는 영세업체는 공동 쇼핑몰 구축 및 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 추진(공동쇼핑몰 운영 인력 인건비 비용의 50%는 센터에서 지원)

● 기대 효과

- 영세 가구생산업체의 디자인 및 마케팅 역량 강화
- 영세 중소가구생산업체의 디자인 및 온라인 마케팅 전문 인력 확보 촉진
-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바. 군수산업

1) 전력지원체계산업* 정의

* 군수산업 중 비무기체계 분야인 전력지원체계산업을 특화 산업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력지원체계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함

● 전력지원체계산업은 피복, 식품, 비품 등 비무기 군수지원물자를 의미함

- 방위사업법 제3조 3항과 4항의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 정의를 살펴보면, “비무기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지칭
- 비무기체계는 전투화, 전투복, 전투식량 등 장병의 사기 및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과 주장비 성능발휘 보장을 통한 전투력 극대화와 직결됨
- 비무기체계의 품목수는 전체 군수품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은 약 17%에 불과하여, R&D 예산 미편성으로 연구개발은 대부분 업체투자개발에 의존하고 있음

〈표 III -34〉 전력지원체계 분류표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일반군수품	병력운영, 시설유지, 장비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	일반차량, 버스, 승용차, 도저, 크레인, 정비장비/물자(공구) 등
	개인의 기본 및 방호 장구	전투화, 전투복, 천막, 나침의, 헬멧, 방탄복, 대검, 야전삽 등
	전력화 장비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수리부속 및 유지물자	부분품(Part), 결합체(Assembly), 모듈(Module), 각종 유류 등
	기타 공병, 병참, 의무, 통신, 함정, 항공 등의 일반적인 군무지원 장비 및 물자	발전기, 축전지, 위장망, 철조망, 야전취사기구, 급수펌프, 난방기구, 충전기, 소화기, 해상브이, 정훈기재, 기상팩스, 사진장비, 정밀측정, 야전숙영 장구 및 물자 등
국방보시스템	자원관리정보체계	기획·재정정보체계, 인사·동원정보체계, 군수·시설정보체계, 전자행정정보체계
	M&S체계	연습·훈련용, 분석용, 획득용 ※ 무기체계로 기 분류된 M&S 전력은 제외
	기반체계	정보통신망, 컴퓨터체계, 정보보호체계, 상호운용성체계
교육훈련용 장비/물자	교육훈련용 장비	중대급 마일즈 장비, 기계화대대 훈련용 마일즈 장비 등
	교보재류	실험실습장비, 특수교보재, 교육훈련, 보조교육체계 등
	교육지원장비	빔 프로젝트, 환등기 등
기타 일반시설		교육훈련장, 사격장, 방음벽, 강의실, 일반경계시설 등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장비 및 물자		

자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 비무기체계 종합발전방안 연구, 20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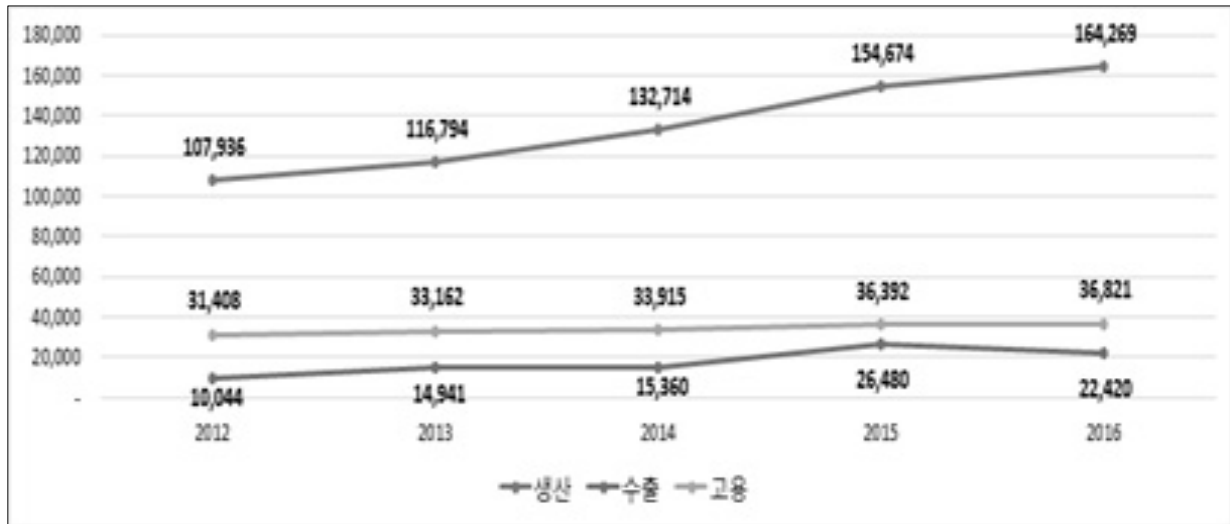
2) 전력지원체계산업 동향 분석⁵⁾

-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2018년 43.1조원으로 최근 5년(2014~18)간 연평균 4.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국방개혁 2.0('18.7)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향후 5년(19~23)간 GDP 대비 2.9% 수준으로 상향 추진
- 국내 방위산업의 생산, 수출, 고용은 2016년 기준 각각 16.4조 원, 2.2조 원(통관 기준), 3.7만명 수준을 기록
 - 최근 5년(2012~16)간 방위산업의 연평균 생산, 수출 증가율은 각각 11.1%, 22.2%를 기록

5) 산업연구원 작성 자료

〈그림 Ⅲ-51〉 방위산업 생산, 수출, 고용 현황

(단위: 억 원, 명)



자료: 산업연구원

- (전력지원체계) 국내 전력지원체계 조달 규모는 2016년 기준 6조 2,000억 원 규모가 편성됨
 - 장비유지/유류 등의 군지원 분야 68%, 급식/피복 등 병력운용 분야 32%로 구성(국방부 군수관리실 발표자료, 2016)
 - 향후 전력지원체계 예산은 국방예산 증가세에 비례하여 전력운영비의 일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육군에서 추진중인 위리어플랫폼 구축과 논산시의 전력지원체계산업 중심의 국가 국방산업단지 조성('18.8)이 확정되는 등 관련예산 증액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국방산업 발전전략) 국방중소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 지원 필요
 - 국방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부, 3군 군수사와 협력을 통해 납품확대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국방중소기업의 밸류체인(GVC) 진입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방 중소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참여가 미미한 실정
 - 국내 중소기업의 GVC 참여에 대한 지원 체계 미비, GVC에 진입한 일부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GVC 참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 호소
 - KIET 실태조사 결과, 방산 중소기업의 GVC 진입 애로사항으로는 시험평가 등 수출 수반 비용의 조달(23.9%), GVC 정보 확보의 어려움(22.9%) 순
 -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국내 우수제품에 대한 글로벌 품질인증 강화(21.3%), 제품 도면 등 기술 자료의 공개 및 접근성 확대(19.2%), 시험평가 등의 수반 비용 정부지원 확대(19.2%) 등의 순

〈표 III -35〉 방산 중소기업의 GVC 주요 지원 필요분야

방산 중소기업 수출시 주요 지원필요 분야	세부 내용
해외 방산시장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주요국 조달계획 정보제공(방사청 협조) ◦ 해외 주요방산 대기업의 원·부자재 수급동향 등 밸류체인 정보 제공(방사청 협조)
절충교역, GtoG 협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oG 절충교역, 국제공동개발 등 정보제공 및 지원(방사청, 산업부, 중기부, KODITS 협조)
해외 방산수출시 인증, 시험평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인증, 시험평가 지원 * 군 납품실적 등 실적증명자료지원, 글로벌 해외업체의 공통인증요구사항 식별/지원 ◦ 기술자료(도면, 규격 등) 제공 ◦ E/L 등 수출제한 규정정보 제공
해외 방산전시회 참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중소기업의 해외 방산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 정부는 우수국방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대 및 고수준 기술개발사업 신설을 추진 중
 - 국방벤처지원사업 예산(18년 43.5억 원 → 20년 55.5억 원 → 22년 67.5억 원)
- 특히, 소요군, 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수준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 지원을 위한 ‘국방벤처 혁신기술사업’을 신설할 계획(방산기본계획, 18.3)
 - 사업 선정시 3년 이내 5억 원 지원
- 국방벤처센터 수를 현재(8개)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과 국방비즈 클럽 회원사를 대폭 확대 추진
 - 국방비즈클럽의 회원사 확대와 함께 ‘국방중소벤처협회(가칭)’의 회원사로 등록, 중소기업 관련 대정부 정책건의 및 소통, 세미나, 전시회, 공청회 추진, 기타 방위산업 및 수출 정보공유의 창구로 활용

3) 접경 지역 전력지원체계산업 육성방안

세부사업명	추진사업 내용	비고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입주 지원 ◦ 전력지원체계 품목 개발 및 납품 지원 ◦ 민관 거버넌스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두천 국가산단 ◦ 화천 군수특화단지

- 영세중소기업은 전력지원체계산업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신규 진입이 매우 제한적이며, 조달과정의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하기에 역부족
 -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요구하는 품질 기준 제품 개발 역량 확보가 선결과제
 - 따라서 전력지원체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제품개발에서 판매까지 종합적인 지원 조직 필요

- 현재 전력지원체계산업은 주로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으나, 수요처와 근접한 접경 지역 입지여건의 유리한 부분과 특화 산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즉, 접경 지역에는 피복, 전투화, 식품 등 주요 전력지원체계 품목 관련 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동두천, 화천, 연천, 포천 지역의 군부대 이전 후 유휴부지를 활용한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함
 - 또한, 인접 지역에 수요처인 군부대가 입지하고 있어 물류의 유리한 점과 제품개발과 실증시험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 다만,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 자격 획득 및 선정의 폐쇄성과 까다로운 관련 절차를 일반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 지역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관 거버넌스 조직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추진
 - 군부대 이전 부지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유리한 부분임
 - 처음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한 전력지원체계산업은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함
 - 지자체에서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 등을 통해서 사업위험을 줄인다면, 유망 기업 유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세부 추진사업 내용
 - 주요 지원사업은 전력지원체계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며,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조성 및 입주 지원, 제품개발 지원, 전력지원체계 품목 납품 지원, 민관 거버넌스 구축 지원 등임
 - 사업추진에 따라서 클러스터 내에 전력지원체계지원센터 건립 추진 지원
 - 전력지원체계 관련 시장/기술 정보 수집 및 제공, 제품개발(품질기준, 시험, 인증 등), 조달물자 공급 관련 서류 대응 등을 지원하는 시설 및 조직 구축(전력지원체계산업 인큐베이팅기능)
 - 필요한 기능에 적합한 건물 및 설비 도입 지원
 - 센터 운영비용 지원
- 추진 전략
 - 전력지원체계 물품 가운데 접경 지역의 강점인 피복류 중심으로 신규시장 개척 추진
 -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및 동두천 국가산단 내에 전력지원체계지원센터 구축하여 클러스터 조성 촉진 및 투자비용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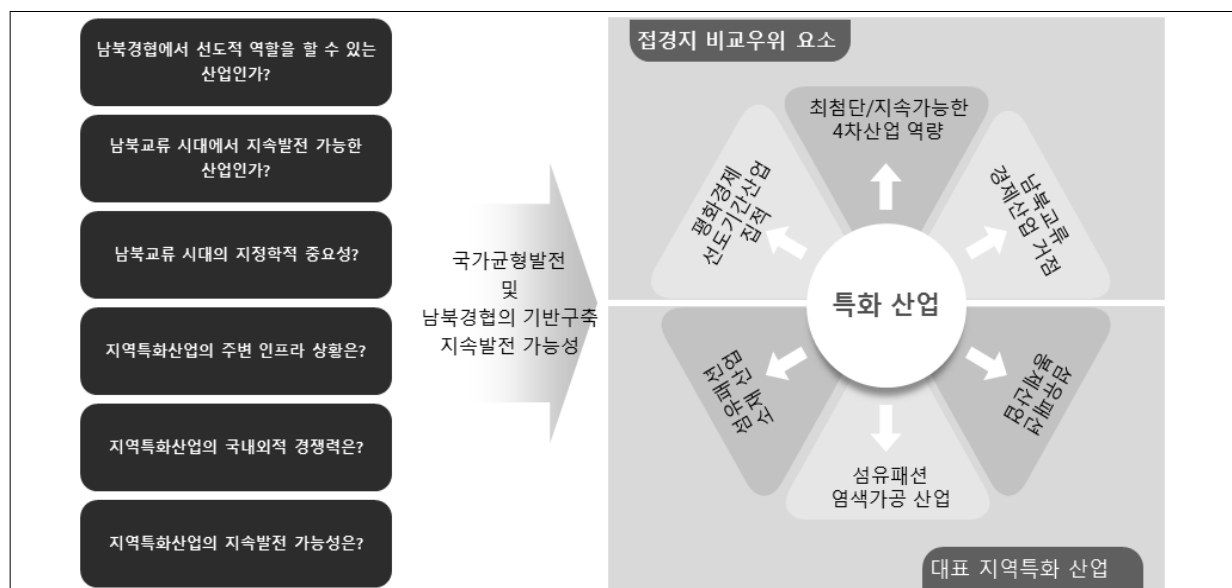
3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분야

3.1 연구개요

가. 연구배경

-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접경 지역 특화 산업인 섬유 패션 산업 육성 방안 제시
 - 지역 섬유 패션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
 - 이를 위해 지역 섬유 패션 산업의 특성 및 역량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발전방안 제시
- 평화협력시대 섬유 패션 산업의 남북교류 협력 및 발전방안 제시
 - 한반도 평화협력 시대를 준비하는 접경지내 섬유 패션 산업의 기반 구축 방안
 - 남북경협 재개시 접경지내 섬유 패션 산업의 역할 및 실행역량
 - 한반도 평화협력 시대에 적합한 남북한 섬유 패션 산업의 상생 발전방안

〈그림 III-52〉 섬유패션 특화 산업 도출모형



나. 연구범위

- (지역별) 경기도 양주, 포천, 동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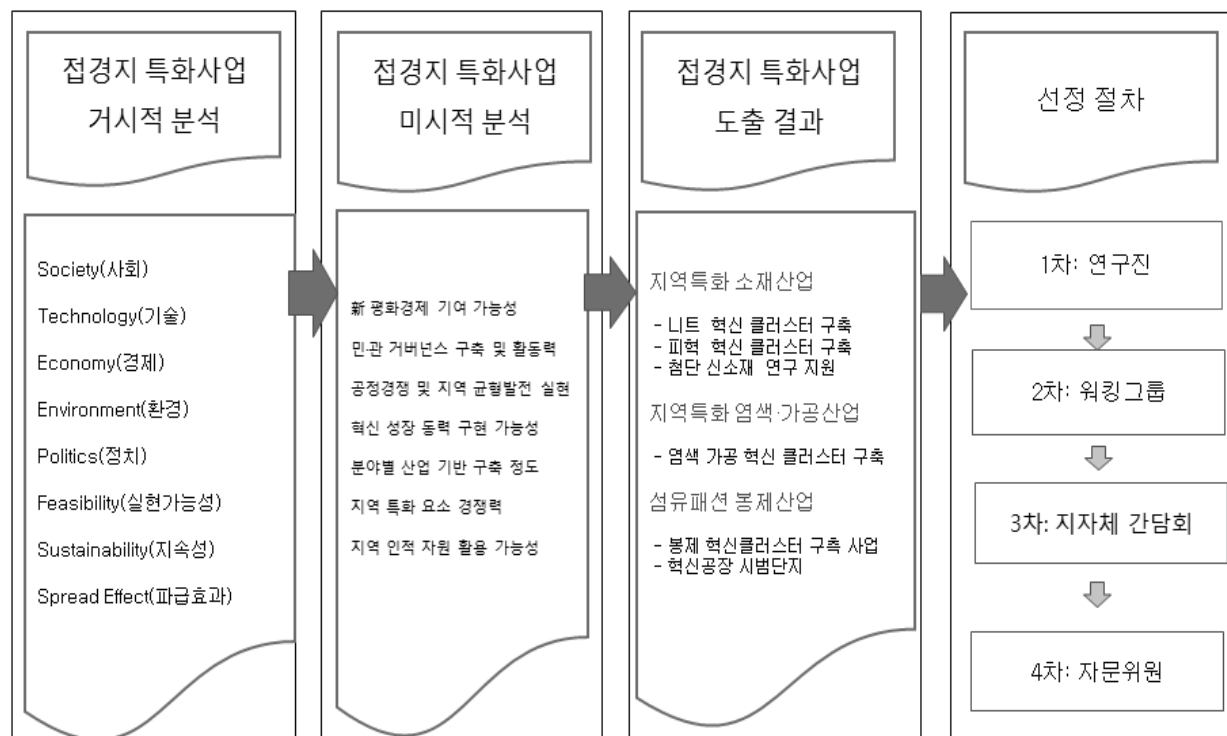
- 접경 지역(강원도, 경기도, 인천시) 중 섬유 패션 산업의 인프라 및 경쟁력을 확보한 지역은 경기 북부의 양주, 포천, 동두천(이하 양포동)
- 섬유 패션 산업의 특성상 소비시장인 대도시와의 근접성이 확보되어야함. 양포동은 대도시 서울과 평양의 중간위치로 평화경제체제 하에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
- 현 정부의 ‘한반도신경제지도 3대벨트’, 경기도의 ‘3대3로’정책과 연계해 섬유 패션 산업의 서울-경기 북부(양포동, 파주)-개성-평양-신의주로의 교류/확대가 전망됨

● 니트, 가죽, 염색가공, 봉제 산업

- 섬유 패션 산업은 스트림간의 협력이 중요한 산업특성상 지역 내에 최소한의 섬유 패션 산업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야함
- 양포동은 경기 북부 섬유패션 제조업 중심지로 특히 소재(니트, 가죽)와 염색가공 산업은 대한민국 대표 생산지이자 경기 북부 특화 산업임
- 섬유 패션 산업 중 봉제산업은 서울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나 양포동 지역의 소재, 염색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육성이 필요한 산업
- 최근 서울 지역의 봉제기업들이 의정부 및 양포동 지역으로 이전·확대되는 추세

다. 연구방법

● 특화 산업 선정 프로세스



- 특화 산업 선정 절차는 자료분석, 환경분석(거시적/미시적)과 워킹그룹/지자체 담당자/자문위원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통해 선정

+ 자료분석

- 기관, 단체의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
- 논문 및 연구보고서
- 세미나

+ 환경분석

- STEEP PLUS 분석(거시적 환경분석)
 - 전략수립의 일환으로 미래예측에 가장 많이 활용되며 거시환경 분석에 사용되는 STEEP에 본 사업적 특성의 3요소(실현 가능성, 지속성, 파급성)를 부가한 STEEP PLUS를 선정기준으로 분석
- 지역 혁신역량 분석(미시적 환경분석)
 - 미시환경 분석은 연구진들이 자체 개발한 7대 지역 혁신역량(정책, 산업, 지역)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

+ 워킹그룹-지자체-자문위원 의견수렴

- 경기도 양포동의 섬유패션관련 기관/조합 담당자로 구성된 워킹 그룹과 지자체 담당자와의 간담회 실시
- 섬유 패션 산업 기업인, 기자, 컨설턴트, 교수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의 그룹별/개별 인터뷰 실시

3.2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환경분석

가.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현황 및 이슈

1)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현황

- 섬유 패션 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핵심 기간산업
 - 섬유 패션 산업 업체수는 '18년 기준 5,268개사로 제조업 내 7.6% 비중 차지, 고용인원은

143천명으로 4.8%점유

- 연관산업*을 포함한 전체 섬유 패션 산업 업체수는 296,362개사, 고용인원은 828천명, 전 산업 업체수의 7.2%, 고용의 3.7% 점유

* 연관산업은 가방 및 신발제조, 섬유기계,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포함

- 섬유 패션 산업은 여전히 많은 기업수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제조업 평균을 넘는 고용 창출 및 高부가가치 산업이자 주요 생활산업

〈표 III-36〉 섬유 패션 산업 업체 수, 고용, 생산 현황

구분	업체수(개사)	고용(천명)	생산(십억 원)	부가가치(십억 원)
제조업	69,513	2,956	1,575,999	565,245
섬유·패션산업	5,268	143	39,393	15,642
비중(%)	7.6	4.8	2.5	2.8%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2018

● 세계 15위의 섬유 수출국, 기술력 세계 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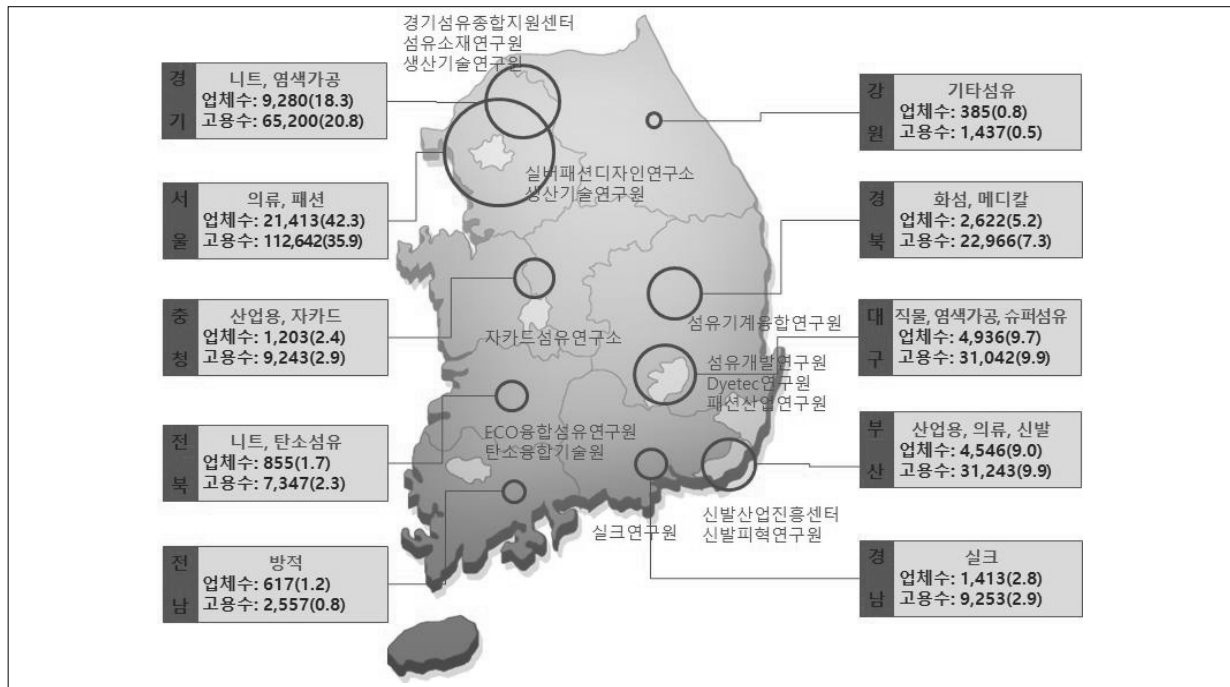
- 섬유류 수출 세계 16위: 섬유소재 수출 세계 7위, 의류수출 세계 34위
- 섬유류 수출: 중국(1), 인도(2), 이탈리아(3), 베트남(4), 독일(5), 방글라데시(6), 터키(7), 홍콩(8), 미국(9), 스페인(10), 한국(15) 순('17년 기준)
- 섬유 기술력 세계 4위로 생산기술도 고르게 발달
- 섬유기술 수준 세계 4위: 미국(1), 일본(2), EU(3), 한국(4), 대만(5) 순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다수 보유
- 섬유 패션 산업 무역수지는 단일산업 최초로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 '87년부터 '01년까지 매년 100억불 이상 흑자 기록
- 국내 섬유패션 산업은 이미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되어 고기능섬유, 나노섬유, 슈퍼섬유, IT융합섬유 등에서 두각

〈표 III-37〉 섬유패션 업체 현황

('17년 기준)	원료,원사(실)	원단(편직물)	봉제·의류	합계
기업수(개)	2,252 (대기업4)	20,477 (대기업0)	25,118 (대기업3)	47,847
10인 미만(비중)	1,856 (82%)	17,752 (87%)	22,898 (91%)	42,506 (89%)
종사자수(천명)	22	132	140	294
생산액(조원)(비중)	6.7 (17%)	17.0 (42%)	16.4 (41%)	40.1 (100%)

자료: 섬유 패션 산업 활력제고방안_2019.6.26.

〈그림 III-53〉 섬유·의류·신발산업 지역별 현황('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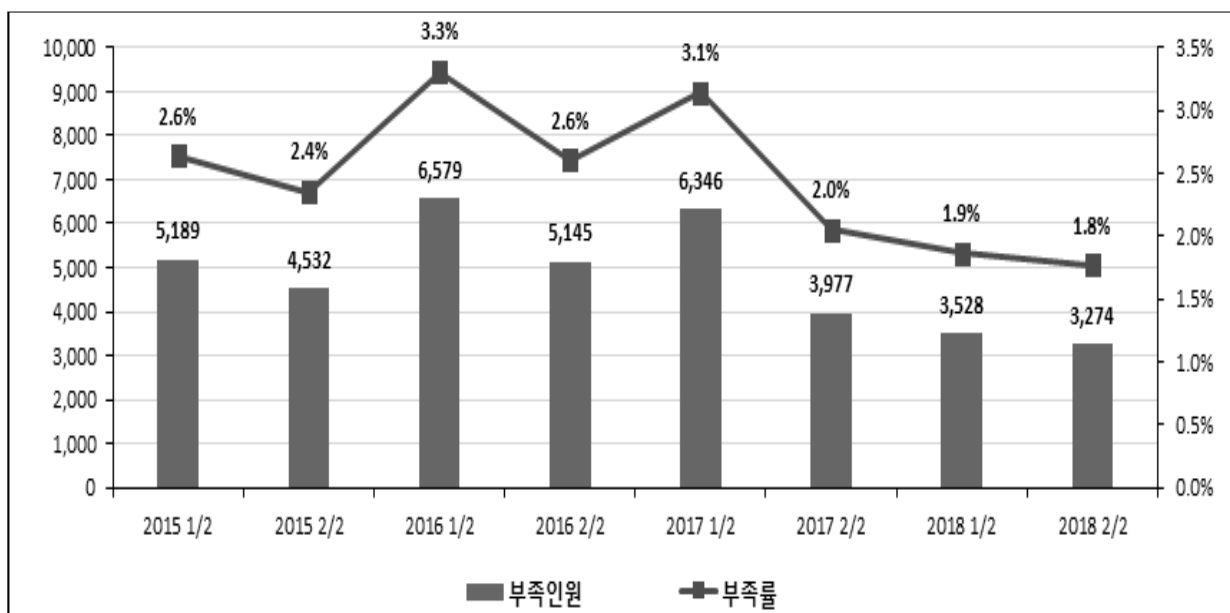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1인 이상), 주: () 안은 전국대비 비중

● 스트림간,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구조 구축으로 경쟁력 확보

- 우리나라 섬유 패션 산업은 원사, 직물, 염색가공, 패션의류 등 Up Stream(면방, 화섬)에서 Middle Stream(직물, 염색) Down Stream(의류, 패션)까지 균형된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기술도 고르게 발달됨

〈그림 III-54〉 섬유 패션 산업(5인 이상)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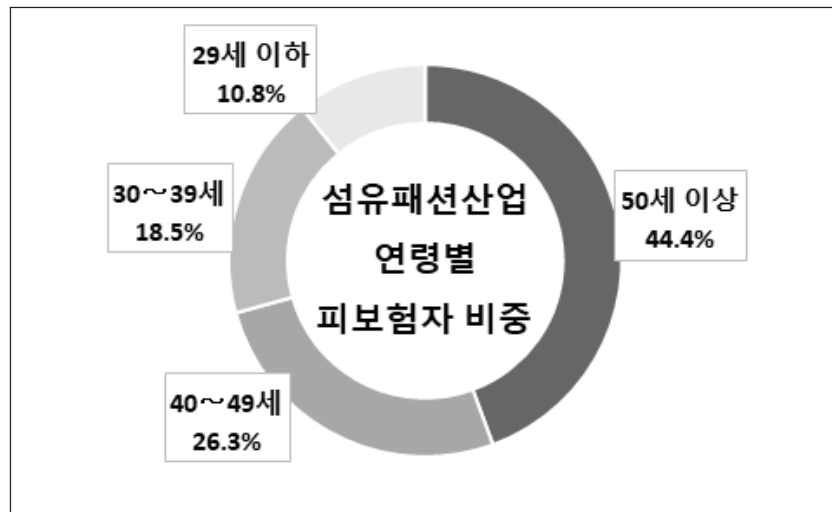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3,200개 표본조사)

-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한계 직면
 - 노동인력 감소로 부족인원 증가
 - '18년 하반기 섬유 패션 산업 부족인원은 전년 동기대비 17.7% 감소한 3,274명, 인력부족률은 0.2p 감소한 1.8%로 나타남
 - 노동인력의 고령화 가속
 - 2019년 섬유 패션 산업 인력활용실태조사에 의하면 섬유 패션 산업의 종사자 중 50세 이상이 48.8%, 40~49세는 23.7%로 고령화 심각
 - 고용보험 통계('18년 기준)에 의하면 섬유 패션 산업에서 연령별 피보험자 비중에서 50세 이상은 44.4%, 40~49세는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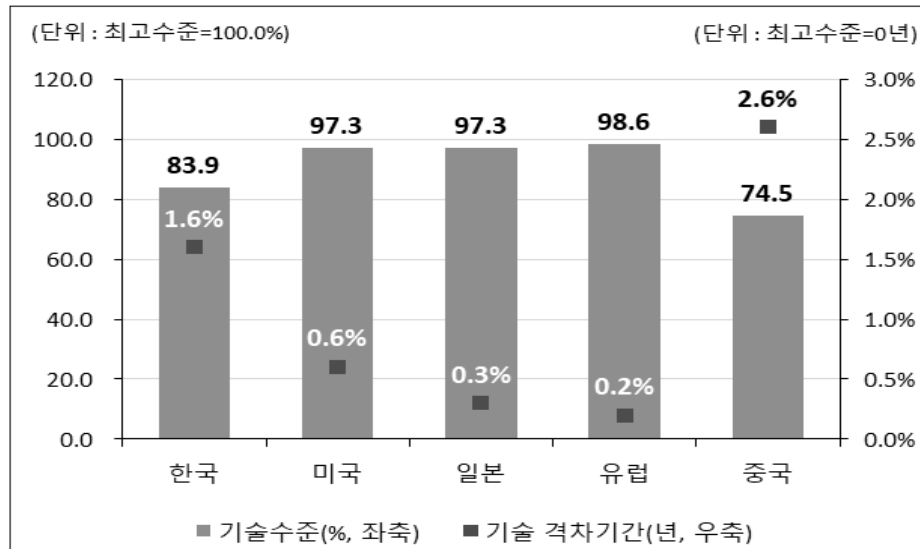
〈그림 Ⅲ-55〉 섬유패션 산업 연령별 종사자 비중



자료: 고용보험 통계('18년 기준)

-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선진국이 산업용섬유, 고감성·기능성 소재 및 제품에 주력한데 비해, 국내섬유 패션 산업은 저부가가치 의류용·범용 제품 중심으로 발전
 - 우리나라 섬유 패션 산업의 기술수준은 최고 수준대비 83.9%이며,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약 1.6년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중국의 기술수준은 최고수준대비 74.5%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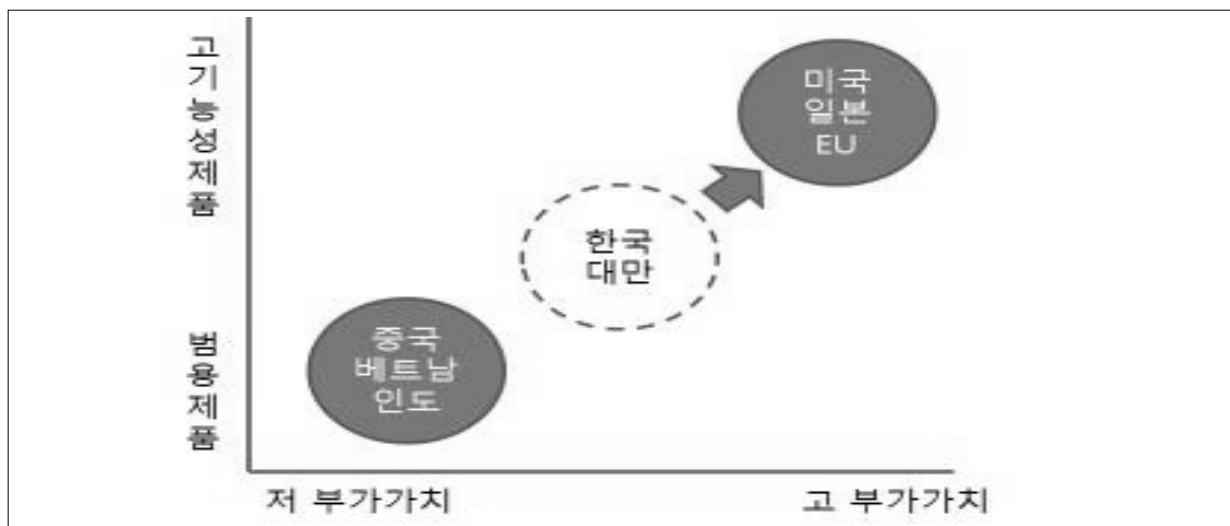
〈그림 III-56〉 섬유소재 주요 국가별 기술수준비교



자료: 2019~2021 산업기술R&D투자전략(2019.8)

- 국내 섬유 패션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 열세, 품질 경쟁력 미흡하고, 후발 개도국의 추격 가속화로 글로벌 Nut-cracker 상황에 직면
 -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기술수준 열세, 품질 경쟁력 미흡 등으로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국의 별을 넘지 못하고 있음
 -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인도 등 후발 개도국들과의 가격경쟁력 열세로 시장잠식 가속화

〈그림 III-57〉 한국 섬유 패션 산업의 발전 방향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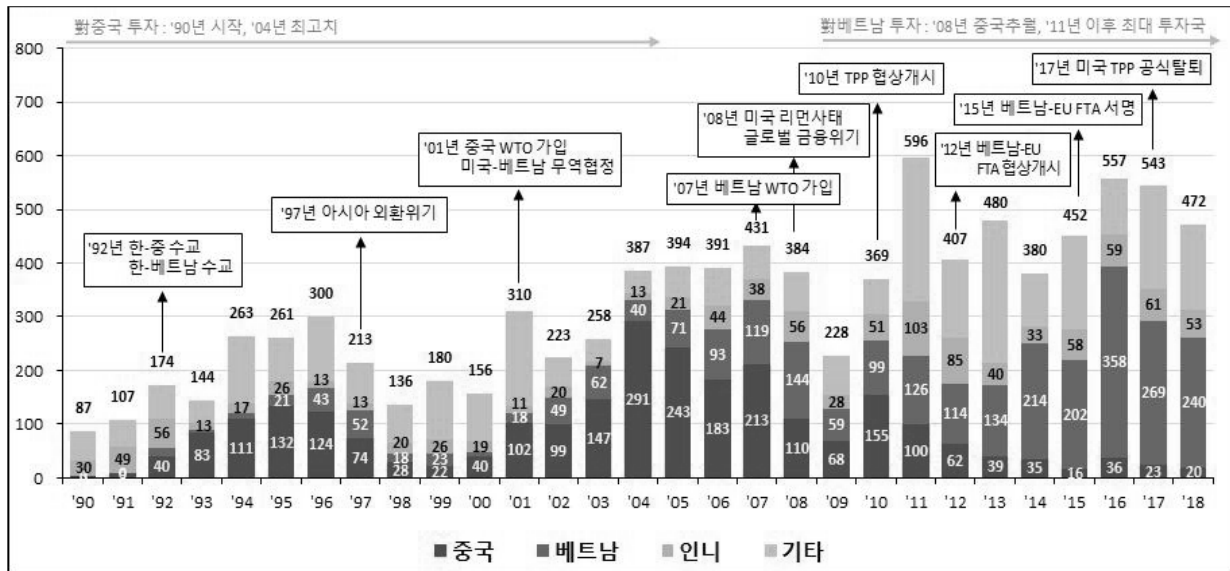
- 노동임금 상승, 가격경쟁력 약화로 해외이전(투자) 확대
 - 국내 섬유 패션 산업은 제조비용 절감을 통한 글로벌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확대해 왔음

- 노동집약적 임가공 생산기능을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개도국으로 이전하여 범용 섬유소재와 중저가 의류를 생산하는 한편, 고부가가치·차별화 섬유소재와 고급 패션의류는 국내에서 생산
- '68~'18년 누계기준, 우리나라 섬유 패션 산업의 해외투자는 신규법인수 5,881개 사, 투자 금액 93.6억 달러

〈그림 III-58〉 섬유 패션 산업 주요 국가별 해외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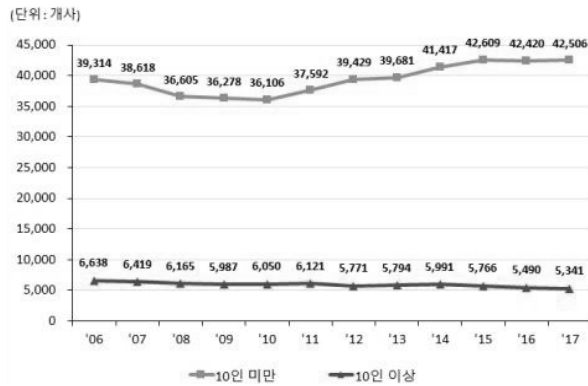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

● 국내 섬유패션 기업 영세화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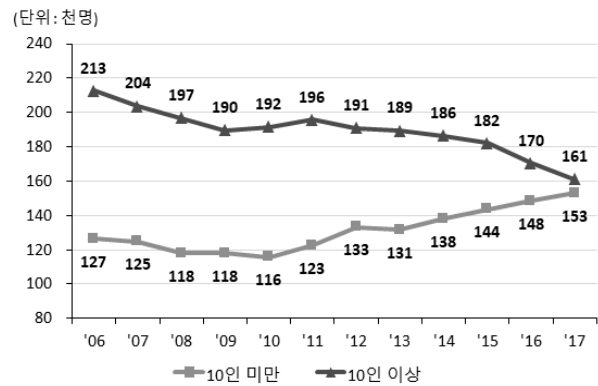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섬유패션 업체수 및 10인 미만 규모의 비중 증가하고 있음
 - ▶ 10인 미만 업체 수(개사): ('10) 36,106 → ('17) 42,506
 - ▶ 10인 미만 업체 종사자수(천명): ('10) 109 → ('17) 144
- 국내 섬유패션 48천개 기업 중 88.8%가 10인 미만 영세기업으로 스트림 간 유기적인 협력이 미흡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 등이 심화되면서 청년 구직자의 대 기업 선호 및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그림 III-59〉 종사자규모별 업체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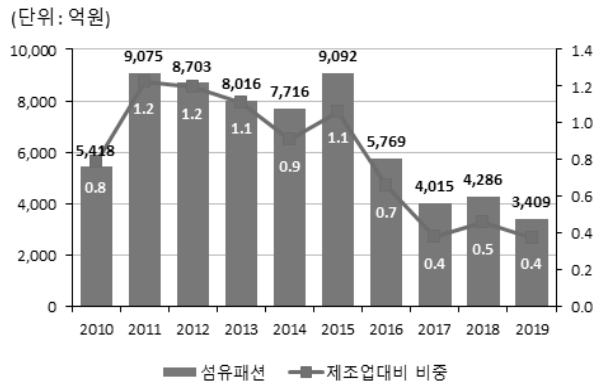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1인 이상)

〈그림 III-60〉 종사자규모별 종사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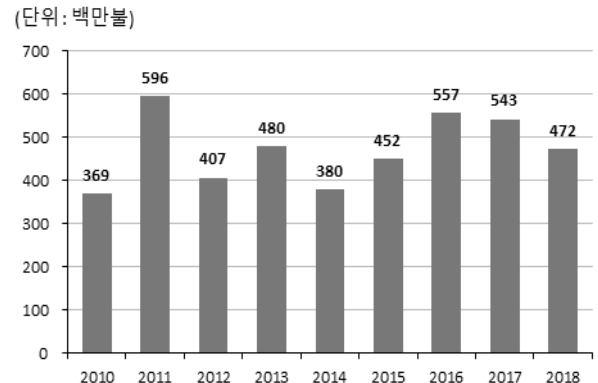


〈그림 III-61〉 국내설비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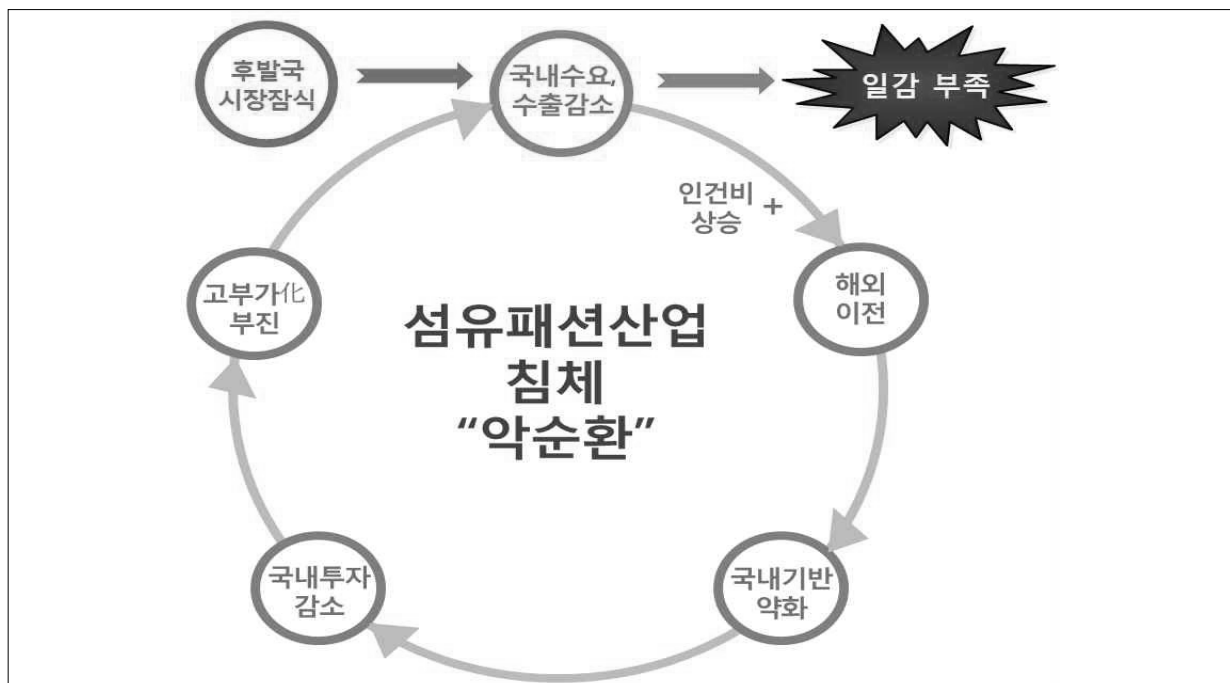
자료: 한국산업은행

〈그림 III-62〉 해외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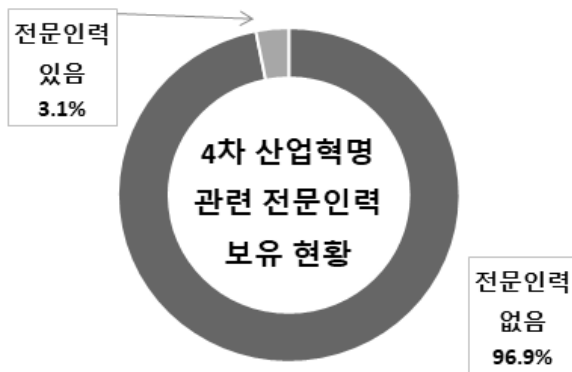
〈그림 III-63〉 섬유 패션 산업 침체 악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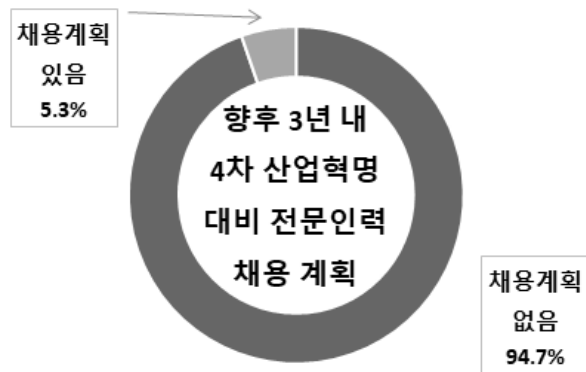
자료: 섬유 패션 산업 활력제고방안, 2019.6.26.

- '00년대 이후 설비투자 감소, 해외이전 등으로 생산설비 노후화
 - 생산설비 노후화로 생산효율성이 떨어지고 설비경쟁력 약화
 - 열악한 작업환경은 국내 청년층의 구직기피로 인력난 가중
 - 해외이전으로 국내일감부족, 생산감소, 투자위축 등 악순환 고착화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제조공정 혁신 및 해외투자 업체 유턴 촉진
 - 섬유 패션 산업은 인력부족 문제해소를 위해 스마트공장(자동화공장, 로봇활용공장 등)을 도입 및 제조공정 혁신이 시급하지만 관련 투자 및 전문 인력 부족

〈그림 III -64〉 4차산업혁명 관련 전문
인력보유현황



〈그림 III -65〉 4차산업혁명 관련 전문
인력채용계획



자료: 한국산업연합회(2019.8)

2) 섬유패션 산업의 이슈(ISSUE)

- 스피드(speed), 반응생산시스템(quick response system)
 - 향후 섬유 패션 산업은 짧은 리드타임과 생산비용 제고한 제조업 혁신 필요⁶⁾
 - 패션소비자의 구매패턴 트렌드가 '즉시성+주문제작'으로 전환되면서 '시간'과 '가치(가격, 차별화, 지속 가능성 등)'가 핵심경쟁력으로 부상
 - 미국의 의류 임원 중 약 2/3와 국제 최고 조달 책임자(CPO)의 약 80%가 '스피드'와 '반응생산', 이 두 가지 역량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
 -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을 넘어선 '울트라패스트 패션(Ultra fast fashion)'의 등장. ASOS, Boohoo.com, Missguided 등이 대표적인 기업으로 디자인부터 판매까지 최소 1주 혹은 2주 내에 진행

6) Digitization: The next step for the apparel-sourcing caravan, McKinsey & Company, Inc, September 2017.

〈표 III -38〉 Fast fashion 의류업체 기획시스템 비교

구분	업체명	소요기간	출시제품수	매출증가
Ultra fast fashion	ASOS	2~8주	4,500	38%
	Boohoo	2주	100	49%
	Missguided	1주	250	75%
Fast fashion	ZARA	5주	-	10%
	H&M	수주~6개월	-	4%

자료: Fast fashion speeding toward Ultra fast fashion, Fung Global retail & Technology, 2017.5.19.

- **오프쇼어링(Off-shoring)에서 니어 혹은 온 쇼어링(Near/On-shoring)으로⁷⁾**
 - 섬유패션기업들이 저렴한 임금이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 모델을 추구했으나 30일 이상의 운송기간 및 운송비로 기업의 이익률을 압박시키는 원인이 됨
 - 무역협정의 영향력 축소, 환율변동 심화, 아시아 의류 수요 증가로 해외수출을 위한 소싱처 개발 어려움 봉착
 - 오프쇼어링보다 니어쇼어링(Near-shoring) 혹은 온쇼어링(On-shoring)으로 전환하는 추세
 - 특히, 스포 패션 브랜드 러시와 함께 로컬생산이 다시 각광, 국내생산의 중요성과 성장성 기대
- **스피드팩토⁸⁾로 제조환경 개선 및 생산성 제고 방안 모색**
 - 기존 스마트 팩토리의 생산공정 자동화 기반 위에 섬유 패션 산업의 B2C 특성을 살려 매장(스토어)에서 소비자 주문을 받아 ‘수요자 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
 - 생산효율 향상으로 국내 제조기반 확대, 국내 U턴을 통한 국내 섬유패션 일자리 창출기대
 - 봉제, 염색가공, 신발 분야에서 스피드 팩토⁸⁾어 추진
- **고부가가치·차별화된 첨단소재 시장 확대**
 - **고부가가치 산업용섬유 시장 성장**
 - 산업용 섬유산업은 ICT, NT, BT등 첨단 신기술 및 연관산업과의 융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융복합 섬유가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
 - 3대 고성능섬유(PAN계 탄소섬유, 파라아라미드, 메타아라미드)가 각각 31%, 29%, 13%의 수요를 보이며 전체의 73%를 차지

7) Korea Fashion Market Trend 2019 하반기 보고서_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9

8) 스피드팩토⁸⁾어는 ‘팩토리(공장)’와 ‘스토어(매장)’의 합성어. 자동화된 생산공정인 스마트팩토리에 소비자 주문(매장)을 직접 연결 수요자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섬유 패션 산업 활력제고방안, 2019

- 고성능 섬유 제작에는 높은 기술력과 자본이 요구되어 소수의 기업만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섬유기업들이 시장 선도
- 의류용 섬유산업 역시 헬스케어 테크놀로지(나노섬유, 중공섬유, 흡습속건, 마이크로 캡슐)가 접목된 고기능성 섬유 시장 확대

〈그림 III-66〉 주요 슈퍼 섬유 현황

구 분	초고강력 (강도: 20g/d, 탄성률: 500g/d 이상)	고내열성 (온도: 450℃, LOI: 28 이상)	내화화성 (pH: 1~3, 12~14의 장기내구성)
주요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 · 초고분자량PE 섬유 · 탄소섬유 · PBO 섬유, 폴리케톤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계) 아라미드 섬유 · 폴리이미드 섬유 · 실리카섬유 · 알루미늄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S섬유 · 페놀섬유 · 불소 섬유 · 멜라민 섬유
주요 특징	<p><탄소섬유> 무게가 철의 1/4, 강도는 철의 10배 탄성률은 철의 7배</p> 	<p><메타계 아라미드> 500℃ 이상 고온에 견딤 연소시 가스발생량, 특히 유독가스 발생량이 적음</p> 	<p><PPS> 200℃이하에서 대부분의 산, 알칼리, 유기용제에 대해 내구성을 지님</p> 

자료: 섬유제조패션산업 인력현황보고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9

- 4차 산업혁명 시대⁹⁾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AR/VR, 빅데이터 등의 기술발전으로 생산, 소비, 유통 등 섬유 패션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
 - 섬유·ICT·SW 융합을 기반으로 디지털시대에 요구되는 스마트 의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핵심기술 개발 중
 - 하지만 국내 섬유 패션 산업의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 적용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R&D 단계

9) 섬유제조 패션산업 인력현황 보고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9

〈그림 III -67〉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사례



자료: 섬유제조 패션산업 인력현황 보고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9

- 첨단소재기업의 협력시스템이 섬유산업의 미래
 - 첨단소재기업들은 의류제조기업으로 확장 혹은 의류기업들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이태리의 에르메네질로 제냐, 로로피아나, 마르조토, 영국 버버리등 역시 고급 모직기업으로 시작하여 의류제조기업으로 확장된 사업모델로 운영.
 - 일본의 첨단소재기업인 'TORAY'의 경우, 유니클로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2003년 발열속옷 '히트텍(HEATTECH)', 2008년 냉감속옷 '에어리즘(AIRISM)', 2009년 초경량 패딩 '울트라 라이트 다운', 2014년 자외선을 차단하는 'UV-Cut' 가디건을 출시 5,000억엔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성공
- 글로벌 패션산업은 지속가능패션 시대로 대전환
 - 패션의 뉴 패러다임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¹⁰⁾
 - 파타고니아, 나우 같은 친환경브랜드 뿐 아니라 노스페이스, 아이더, 팀버랜드 아디다스 등이 재활용소재를 사용하면서도 패션성이 뛰어난 제품을 선보임으로서 서스테이너블 패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
 -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비난받던 패스트패션(fast-fashion) 브랜드들

10) 패션비즈, 2019.11월호

도 서스테이너블을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내세움

- 연매출 34조 5천억 원의 **인디텍스**와 26조 원의 **H&M**이 2025~2030년까지 모든 상품 소재를 지속가능 원단으로 대체하겠다고 공표
- '19년 구찌, 발렌시아가,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H&M, 자라 등 32개 회사 150여개 브랜드는 플라스틱 사용금지, 해양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G7패션협약** 공표

〈그림 III -68〉 기후변화대응을 위한UN패션업계 현장



자료: Screen Print India

〈그림 III -69〉 G7 Fashion Pact



자료: Kering

- 섬유산업에 부는 **리사이클(recycle)** 바람¹¹⁾
 - ‘리사이클 섬유’란 환경문제 대처를 위해 사용이 완료된 제품이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재활용하여 만들어진 섬유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리사이클 섬유는 대부분 **PET병**으로부터 생산
 -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섬유로는 폴리에스터로 '17년 세계 전체 섬유생산량의 50%를 차지
 - 고품질 Chip이 요구되는 FY(필라멘트사) 재생섬유의 경우, 대만의 Nanya가 월 2천 톤을 생산하며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기업의 품질경쟁력이 우수
 - 국내의 경우 상업화 초기단계로 효성, 휴비스 등 화섬기업은 재생원료를 수입, 의류용 필라멘트를 생산 혹은 개발 중
 - 향후, 친환경 요구 추세에 부응하여 2030년경 국내 PET리사이클 시장은 의류용으로 4,200억 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 패션에서의 지속 가능성(sustainable fashion) 의미¹²⁾
 - 패션상품의 생산과 판매, 사용의 과정은 물론 패션산업계가 가장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정

11) KOFOTI Report,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9.12.2.

12) 패션비즈, 2019.11월호

의를 고려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함

- 즉, 패션산업의 각 단계(디자인, 원자재 생산, 제조, 운송, 보관, 마케팅, 판매, 상품의 사용, 재사용, 수선, 재제조, 상품 및 부품의 재활용)를 지속가능적으로 개선하는 것

〈그림 III -70〉 지속가능패션의 주요 목표



자료: greenstrategy.se(패션비즈, 2019.11 재인용)

나. STEEP PLUS 분석

1) 양포동 지역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환경(거시적) 분석

● 사회(Society)

-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
 -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총인구는 경기도 전체 인구대비 약 18.2%를 차지하며 '17년도 기준 1,953천명으로 접경 지역 내 고양시, 파주시가 접경 지역 내 인구수의 약 60%를 차지하는 반면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의 총인구 비율은 24%수준임
 - 경기 북부 접경 지역 시·군의 생산가능 인구비율은 고양시를 제외하고는 전북 평균보다 모두 낮으며, 동두천시, 포천시의 노령인구비율은 전국 평균과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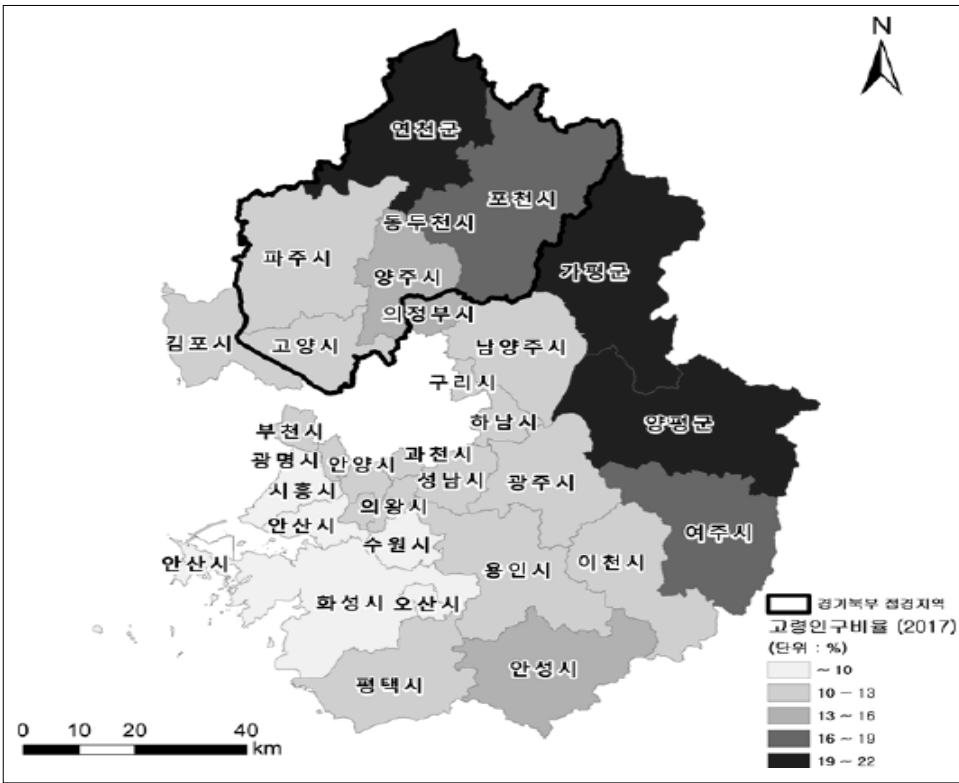
〈표 Ⅲ-39〉 경기 북부 접경 지역 시·군 인구추이

(단위: 천 명, %)

시·군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경기 북부 접경 지역	1018	13.31	1315	14.63	1525	14.64	1696	14.90	1916	15.35	1953	15.21
동두천시	71	7.0	75	5.7	80	5.2	92	5.4	98	5.1	97	5.0
고양시	518	50.9	764	58.1	867	56.9	905	53.4	990	51.7	1005	51.5
파주시	163	16.0	178	13.5	242	15.9	328	19.3	415	21.7	431	22.1
양주시	95	9.3	110	8.4	152	10.0	188	11.1	206	10.8	213	10.9
포천시	119	11.7	139	10.6	142	9.3	141	8.3	163	8.5	163	8.3
연천군	52	5.1	49	3.7	42	2.8	42	2.5	44	2.3	44	2.3
합 계	1018	100	1315	100	1525	100	1696	100	1916	100	1953	100

자료: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발전구상과 실천방안, 국토연구원, 2018

〈그림 Ⅲ-71〉 2017년 경기도 노령인구 비율



자료: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발전구상과 실천방안, 국토연구원, 2018

- 경기도 인구증가율(5.65%) 대비 양포동지역의 인구증가율은 1.66%로 상대적으로 낮음
 - 양주시의 인구는 증가(신도시개발), 포천시와 동두천시는 지속적 감소추세
 - 외국인 고용인력 증가 ⇒ 외국인 인구 증가율 포천은 6.27%, 동두천은 8.26%

- 청년인력 섬유패션 제조업종 기피(3D업종으로 인식)
 - 접경 지역의 특성상 섬유기업의 영세성 및 노동환경 낙후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이에 섬유업종은 3D업종이라는 인식이 더해져 청년층 취업 기피현상이 가중됨
- 패션소비자 개인·개성화, 디지털화 가속 ⇒ 수요자 맞춤형 제품 요구 증가
 - 다품종소량생산 ⇒ 스몰 패션 브랜드 러쉬, 유통브랜드의 P·B 확대
 - 가성비(고품질/고감도-중저가)제품 선호 ⇒ 로컬생산(made in Korea) 주목
- 캐주얼·스포츠 라이프스타일 ⇒ 니트제품의 지속적인 수요
 - 스포츠 전문 분야의 고기능성이 일반 캐주얼에 적용(고기능/고감도)
 - 고부가가치의 산업용 섬유 개발은 의류용으로 확대적용
- 남북교류시 북한의 노동자원 활용 및 교류방안 필요
 - 북한 노동자원은 저렴한 인건비 뿐 아니라 교육, 커뮤니케이션, 숙련정도 등의 차원에서 비용절감효과
 - 북한은 노동 및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섬유 패션 산업부문에서의 남북교류는 노동과 기술(감도) 측면에서 서로에게 효율적
- 기술(Technology)
 - (니트) 이태리에 비해 열위, 중국보다 우세
 - 세계섬유패션시장은 이태리 생산 고가 브랜드 시장과 중국/베트남에서 생산된 품질이 낮은 저가 제품시장으로 형성
 - 한국(양포동) 섬유제품의 기술이나 품질력은 중급 이상 수준이지만 거래가격이 낮고 인건비 비중이 높아 수익이 낮음
 - 품질력 높이고 중고가 브랜드에 의한 틈새시장공략 필요
 - 국내 니트 대표산지, 다품종 단납기 생산시스템(세계 최단납 수준)
 - 양포동 중소섬유제조업체들은 전문화, 분업화, 집적화에 의한 신속한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세계 유일의 1주일 이내 니트 원단 공급가능

〈그림 III-72〉 세계유일의 단납기 니트원단 공급시스템



자료: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계획, 2018.8

- (피혁) 세계 5위, 고급시장에서 한우피 선호
 - 안산시와 더불어 국내 가죽산업 발전(내수시장 20%), 부산 가죽산업 침체(신발사업 사양화)
 - 가죽제품시장에 적합한 다품종소량 생산체제 갖추
 - 국내 한우피 80%를 동두천에서 취급
- 기술혁신(디지털화)속도 느림 ⇒ 기술집약산업으로 체제 전환 요구
 - 염색업체 생산현장은 조동조액(CCM)¹³⁾, 자동평량(CCK)¹⁴⁾, 자동운반시스템 등 자동화 미흡
 - 염색·니트업체의 경우 공장운영기술과 ICT 제조기술 간 융합가치 창출 공장화(스마트공장= ERP + ICT기반 제조)가 시급하며, 날염¹⁵⁾업종은 소량 단납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날염 디지털 생산기술로의 전환이 필요
- 글로벌 하청 생산시스템유지 ⇒ 선도기업(U턴)유치, 기획/마케팅력 보완 요구
 - 로컬생산으로의 U턴 기업(글로벌 벤더기업) 유치
 - 스몰 패션브랜드(자체 기획력), 컨버터(소재개발), 프로모션(의류개발)업체 유치 ⇒ 스타트

13) CCM: Computer Color Matching, 컴퓨터컬러매칭시스템

14) CCK: Computer Color Kitchen, 자동실무계조절장치

15) 날염: 염색법의 하나, 실이나 직물을 부분적으로 착색하여 필요한 무늬가 나타나게 하는 기술

● 경제(Economy)

- 양포동을 중심으로 경기도는 생산 제조기반인 니트와 염색 및 가죽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요충지
 - 전국 염색단지 11개소 중 6개소가 양포동에 있고, 국내 피혁 전용산업단지는 동두천이 유일함
- 섬유산업 스트림구조 형성, 미들스트림(원단-니트/가죽, 염색가공) 특화
 - 양포동의 니트-염색-가죽 협업생산체제의 지역산업클러스터 조성 ⇒ 지식(기술)기반 산업과의 협업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조성 가능
 - 섬유 패션 산업은 다운스트림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선진국형 산업구조. 따라서 다운스트림(봉제) 비중을 강화하여 경쟁력 강화해야 함
 - 서울지역의 봉제기업 포화 및 유지비용증가로 경기지역(의정부-양주)으로 이전추세 증가
- 부가가치, 고용창출, 수출점유율 현상 유지, (자연발생)정체 및 감소 예상
 - 작업/노동 환경 개선 및 고부가가치(고기능/고감도) 상품개발 통한 혁신역량강화
 - 기술혁신(디지털화), 미래지향산업(신소재개발) 기반마련 등의 혁신 성장동력 필요
 - 지원인프라(R&D)확충 및 지역특화 산업 전문 인력 양성

● 환경(Environment)

- '20년 이후 글로벌 환경규제 본격화(전 생산공정, 인권 및 작업환경 평가)
 - 완제품의 유해성 차원을 넘어 전체 생산공정 및 사용·폐기과정까지 유해성·친환경성 평가. 향후 노동인권·근로환경까지 평가(품질→환경→인권)
 - 니트 염색가공 업체 중심으로 에코라벨인증(Okotex) 업체는 극소수
 - 가죽제조 폐기물처리 등 환경규제 대응부담 가중
 - 2019년 경기 북부노동인권센터 '노동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양포동 섬유기업 중 10인 미만 기업이 81%, 미충원율 16%, 저임금, 근로시간 연장고착, 휴게/식사 공간부재, 임금성 복리후생 미흡 지적¹⁶⁾

16) 섬유가공·염색업종 노동실태조사 보고서, 2019 경기 북부노동인권센터

〈표 Ⅲ-40〉 섬유가공 염색업종 노동실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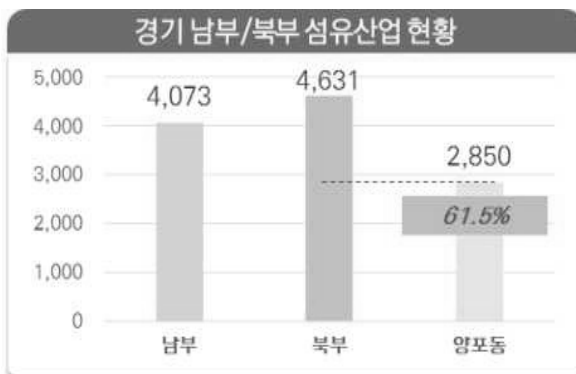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응답자수	구성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채용계획	미충원률
전산업	38,724	204,788	193,005	11,783	116,082	5.8
섬유제품	777	2,539	2,112	428	1,253	16.8
의복, ACC	227	815	777	38	445	4.6
가죽가방신발	162	570	53.5	34	426	6.0

● 정치/법규(Politics/Legal)

- 정부의 소재산업 육성 정책-니트/가죽/염색가공은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
 - 국가차원에서 섬유 패션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니트, 피혁, 염색 산업은 전략적 육성해야 하는 산업
- 양포동 섬유 패션 산업은 경기 북부의 특화 산업(경기도섬유산업육성종합계획)
 - '12년 섬유 패션 산업을 경기 북부지역 특화 산업으로 지정,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조례' 지정(2012.5.11.시행)
 - 경기 북부 제1위 제조업종은 섬유산업(16.5%)으로, 양포동 3개 지역에 경기 북부 섬유업체 72.7% 밀집

〈그림 Ⅲ-73〉 섬유 패션 산업비중



〈제조업에서 섬유산업비중 (10인 이상)〉

구분	전제조업	섬유산업	비중
전국	69,513	5,890	8.5%
경기도	24,682	1,524	6.2%
경기 북부	4,820	793	16.5%
양포동	1,972	577	29.3%

- 접경 지역 전반 과도한 중첩규제
 - 대규모 계획적 지역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한계 등으로 지역 경제 낙후
 - 군사관련규제지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권역 등
- 한반도 신경제 3대 벨트 및 경기도 3대3로 정책에서 양포동은 남북한 섬유 패션 산업의 중추적 역할기대 ⇒ 지정학적으로 중심위치, 지역특화 산업의 비교우위

-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는 산업, 물류, 교통 벨트로 한반도 섬유 패션 산업의 중심지역이자 동북아시아 시장 진출로 확보
- 경기도 3대3로 정책은 통일경제 특구를 지정, 경의선(경협벨트)과 경원선(환경/관광/교통 벨트)을 연결 경기 북부의 지역별 산업 특화(양주 테크노밸리, 파주·고양문화 콘텐츠) 개발과 이를 통한 평화경제권 형성 제시

● 실현 가능성(Feasibility)

- 남북교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선도적으로 실현가능한 산업분야(개성공단)
 -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교류의 시작을 알리는 핵심 대표사업으로 한국의 섬유 패션 산업이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및 유라시아 시장으로의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폐쇄 이전과 이후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노동자원 활용방안이 중장기적으로 남북공동 개발 및 발전방안 마련필요
- 섬유패션은 남북경협의 주요 핵심 산업
 - 북-경제부흥의 동력으로, 남-소비시장 및 자원의 확보 차원에서 섬유 패션 산업은 생활 경제 혁신성장 동력 산업이자 혁신역량강화 산업임
 - 북한은 노동 및 과학기술 가치를 중시하는 기초,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지식(기술)집약 산업으로의 전환 및 접근 필요함

● 지속성(Sustainability)

- 섬유패션 산업은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생활기반산업**이자 향후에도 선진기술이 접목되어 발전해갈 **최첨단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지속적인 변화·발전이 보장된 산업임
- 웰빙, 환경 이슈는 향후 지속될 메가톤급 트렌드로 캐주얼·스포츠의류 시장은 지속발전 가능 높음 ⇒ 니트와 가죽 소재는 스포츠 제품의 핵심소재
 - 양포동 지역의 특화 산업인 니트/가죽/염색 산업은 현재와 미래의 패션소비트렌드에 최적화된 소재산업임
-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하는 섬유패션 산업 특성에 적합한 서울-평양의 중간지역 위치
 - 섬유패션 소비시장인 서울-평양과의 인접성, 경협벨트(환서해벨트, 경의선-경원선을 통한 평화경제권 형성)를 통한 지역특화 산업 발전 가능성 확보
-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시간적 물적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원인프라, 전문 인력 양성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경쟁력 확보가능

● 파급효과(Spread Effect)

- 남북 인구 1억 시장 규모의 시장 확보와 기술/인력 보완 시, 한반도 섬유 패션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기대
 - Made in Korea의 ‘글로벌 브랜드’탄생 가능성 높음
 - 양측 Win-Win 효과, 북측(경제부흥, 기술도입)과 남측(생산기지, 시장확보)
 -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김정은 시대에 적합한 최첨단 소재 공동연구 및 발전가능성 높음
 - 2032년 남북공동 올림픽 유치 시 패션섬유산업의 비약적 발전(‘88서울올림픽, 08’북경올림픽 이후 내셔널 스포츠 브랜드 탄생 및 산업/경제 성장 가속화)
-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유라시아까지 섬유패션시장의 확대 및 국제적 경쟁력
 - 현재 한국 소비시장의 규모와 고비용의 교통(해운/항공)은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및 시장확대에 한계가 있음
 - 한반도의 신경제벨트를 통한 한반도-동북아시아-유라시아를 잇는 육상교통(도로/철도)은 한반도의 전체 산업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능케 함

2) 양포동 지역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환경(거시적) 평가

- STEEP + 분석 내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 표와 같음

STEER+항목	분석 내용	평가
사회 (Soci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율저하, 고령화시대 등으로 노동인구 감소 ⇒ 노동집약적산업 한계 직면 ◦ 인구증가율은 미흡, 외국인 노동자 인구증가 ◦ 접경 지역의 낙후성으로 청년인력 섬유제조업종 기피(3D 업종 인식)현상 가중 ◦ 패션소비자 개인·개성화, 디지털화 가속 ⇒ 수요자 맞춤형 제품 요구 증가 ◦ 캐주얼·스포츠 라이프스타일 ⇒ 니트/가죽 소재 수요증가 ◦ 남북교류시 북한의 노동자원 활용 및 교류방안 필요 	△
기술 (Techn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트) 이태리(선진국)에 비해 열위, 중국(개발도상국)에 비해 우위 ◦ 국내 니트제조산업 특화지역, 다품종 단납기 생산시스템(세계 최단납 수준) ◦ (피혁) 세계 5위, 고급시장에서 한우피 선호 ◦ 기술혁신(디지털화)속도 느림 ⇒ 기술집약산업으로 체제 전환 요구 ◦ 글로벌 하청 생산시스템유지 ⇒ 선도기업(U턴)유치, 기획/마케팅력 보완 요구 	△
경제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포동을 중심으로 경기도는 생산제조기반인 니트와 염색 및 가죽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요충지 ◦ 섬유산업 스트림구조 형성, 미들스트림(소재-니트/가죽, 염색가공) 특화 ◦ 부가가치, 고용창출, 수출점유율 현상유지, 향후 정체 및 감소 예상 	△
환경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이후 글로벌 환경규제 본격화(전 생산과정 평가, 인권 및 작업환경평가) ◦ 니트 염색가공 중심으로 에코라벨인증(Oko-Tex) 업체는 극소수 ◦ 가죽제조 폐기물처리 등 환경규제 대응부담 가중 	△

STEEP+항목	분석 내용	평가
정치/정책 (Poli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소재산업 육성 정책-니트/가죽/염색가공은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 ◦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은 경기 북부의 특화 산업(경기도섬유산업육성종합계획) ◦ 접경 지역 전반 과도한 중첩규제 ◦ 한반도 신경제 3대벨트 구상에서 양포동은 남북한 섬유 패션 산업의 중추적 역할 ⇒ 지정학적으로 중심위치, 지역특화 산업의 비교우위 	○
실행 가능성 (Feasi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선도적으로 실현가능한 산업분야개성공단 ◦ 섬유패션은 남북경협에서 주요 산업, ◦ 북-경제부흥동력으로, 남-시장 및 자원확보를 위해 섬유 패션 산업은 필수산업 ◦ 저렴한 노동자원 차원 아닌, 기술집약산업으로(북-혁신클러스터 요구) 상생발전 	○
지속성 (Sustain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패션 산업은 선진적인 기술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최첨단 미래지향적 산업이자 인간생활에 밀접한 생활산업 ◦ 웰빙, 환경 이슈는 향후 지속될 메가톤급 트렌드 ⇒ 스포츠의류 시장 지속발전 ⇒ 니트와 가죽 소재는 스포츠(고기능,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핵심소재 ◦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하는 산업 특성에 적합한 서울-평양의 중간지역 위치 ◦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시간적 물적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파급효과 (Spread Eff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인구 1억 시장 규모의 시장 확보와 기술/인력 보완 시, 한반도 섬유패션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전망 ◦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시장확대 및 발전으로 국제적 경쟁력 확보 	○

3) 양포동 지역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환경분석 결과 및 시사점

- 경기 북부 특화 산업인 섬유 패션 산업의 ‘지식집약산업’으로의 혁신적 전환 필요
 - 노동인력부족/ 작업환경노후화 ⇒ ‘자동화공장’ 필요
 -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연구개발 ⇒ 신소재 연구개발지원
- 지역특화 산업 니트/염색/피혁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필요
 - 미들스트림(소재-니트/피혁)의 상품력 강화 ⇒ 다운스트림(봉제) 확대
 - 환경훼손 이미지 탈피 ⇒ 친환경제품, 친환경작업공정, 국제인증 지원
 - 섬유패션 제조-생산 전문 인력 양성 및 유치 필요
- 상품 간, 지역 간, 스트림 간 연계 확대 방안 필요
 - 니트+가죽+염색을 활용한 의류제품, 가구제품 공동 개발 추진
 - 봉제-서울(동대문), 섬유개발생산-대구 협력 및 공동 사업 추진
 - 기획력, 마케팅력 보완 지원 필요

다. 지역혁신역량분석

1) 양포동 지역혁신역량 분석

〈표 III-41〉 지역혁신역량 평가항목 및 내용

분 야	역량항목	분석 내용	비 고
정책 혁신역량	평화경제체제 구축	◦ 평화경제체제정책과 부합도, 평화경제체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	현재, 미래
	민관 거버넌스 구축	◦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및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력 ◦ 민간의 혁신정책 수용성	현재
	공정경쟁 및 지역 균형 발전	◦ 정책지원사업의 공정성,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도	현재, 미래
산업 혁신역량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접경 지역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 ◦ 정부의 신성장산업 부합도	현재, 미래
	혁신성장 산업 기반	◦ 현재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 ◦ 미래 경쟁우위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가능성	현재, 미래
지역 혁신역량	지역특화 요소 경쟁력	◦ 지역보유자원 역량 적합도(입지여건/도로, 산업기반, 대학/인적 자원 등)	현재
	지역혁신 생태계	◦ 지식산업 테크노밸리/산업 클러스터 ◦ 벤처·중소기업 지원센터 ◦ 혁신성장 산업 관련 지원 민간·공공기관	현재

● 정책역량

- 新평화 경제 체제 기여 가능성
 - 섬유 패션 산업은 남북경협 주요핵심 산업으로 남북교류 재개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개성공단 운영 및 연계방안 및 고려
 - 북-경제부흥동력 산업, 남-자원 및 시장 확보 차원에서 양측 윈-윈효과
 - ⇒ 남북교류시 협력사업 단계별 방안 고려
 - 북측의 저렴한 인건비 및 운송비용에 초점을 맞춘 협력방안은 현실적이지 않음 따라서 제도적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 또한, 섬유 패션 산업이 노동집약에서 지식(기술)집약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남북 협력 사업 역시 지식(기술)협력 공동 사업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북측은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희망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력

- 양포동 지역은 이미 자연발생적 니트/피혁, 염색가공 산업클러스터 형성된 지역으로 정부/기관의 지원을 통해 ‘혁신 클러스터’구축이 가능
-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예산 사업의 한계로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임 ⇒ 활성화 방안 필요
- 섬유 패션 산업 지원 인프라 안정적 구축 및 활동 수행중
- 공정 경쟁 및 지역 균형 발전 실현
 - 한국은 지역별 특화된 섬유 패션 산업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 따라서 경기 북부 지역은 지역 특화 산업으로 니트산업과 염색가공산업 발전
 - 지역특화 산업인 니트, 염색가공산업 그리고 경쟁력 확보한 피혁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봉제산업의 비중을 확대하여 기존 특화된 소재산업의 발전을 견인해야 함
 - 봉제산업은 서울지역과 가죽산업은 경기남부(안산), 신소재사업은 대구와 연계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정경쟁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음
 - 특히, 기 형성된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기업 간의 동업·이업종간의 협업을 활성화 시키고 혁신성장 역량(친환경, 디지털, R&D) 강화 추진 필요
 - 향후, 한반도 신경제체제에서는 지역 간 산업간의 협업시스템을 북한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음
- 혁신 성장 동력 구현 가능성
 - 양포동은 생산제조기반인 니트와 염색, 피혁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요충지이고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의류용 원단생산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패션산업 및 산업용 섬유로의 전환 등 새로운 세계 시장 대응전략 모색이 시급함 ⇒ 신소재(고기능, 고감도, 친환경)소재 개발연구 지원필요
 - 국내외 섬유 패션 산업은 짧은리드타임, 미니멈 오더, 다품종 소량생산, 신속한 딜리버리에 대한 요구가 가속화되고 있음 따라서, 자동화공정 및 IT 융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체제 전환이 필요함 ⇒ 지역기업의 영세화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 민관 합동 전략 및 지원이 필요함
 - 섬유 패션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인력난’임.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정도가 심한 양포동 지역의 기업들이 실감하는 정도는 더 높음.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및 남북협력재개시의 북한노동자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보완가능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의 시스템을 전환해야함 ⇒ 자동화공정시스템 필요
- 분야별 산업 기반 구축 정도

- 현재까지는 양포동 지역의 니트/염색 산업 경쟁력은 기확보된 상황이지만 넷크래커 상황에 직면, 고부가가치 상품력 보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
- 투자미비로 인한 시설의 노후화 작업환경의 낙후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환경문제(제품, 공정, 노동)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존의 생산시스템(염색/피혁)에 대한 정비 및 보완이 시급함 ⇒ 접경 지역에서의 환경문제는 더욱 강조되는 부분으로 기업의 친환경제품개발과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환경훼손 산업의 이미지를 탈피해야함. 민관협력 및 지원 필요.

● 지역역량

● 지역 특화 요소 경쟁력

- 양포동 섬유산업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접한 위치로 다운스트림 산업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수요시장과의 접근성 확보로 경쟁우위의 상황
- 양포동 내에서 니트-염색-가죽 간의 협업뿐만 아니라 경기권의 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 및 협업을 통해 미래혁신성장의 비전을 확보하고 있음
- 한반도 신경제 시대에서 양포동은 섬유패션의 최대 수요시장인 서울-평양의 중간 위치로 유리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과의 협업에도 유리한 지정학적 요충지임

● 지역 인적 자원 활용가능성

- 지원 인프라(지원센터, 대학, 연구기관)가 구축되어있으나 접경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적 자원 활용가능성은 낮은 편임
- 3D업종으로 인식되어있는 섬유 패션 산업의 작업환경개선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에 특화된 전문 인력(기획, 생산)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연구센터 및 산학협동 체제 구축을 통해 전문가 영입과 컨버터 및 프로포션 부문의 스타트업기업 유치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2) 양포동 지역혁신 역량 평가

+ 섬유패션 소재산업_피혁산업

분야	분석 내용	평가		
		상	중	하
정책 역량	新 평화 경제 체제 기여 가능성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력		○	
	공정 경쟁 및 지역 균형 발전 실현	○		
산업 역량	혁신 성장 동력 구현 가능성		○	
	분야별 산업 기반 구축 정도		○	
지역 역량	지역 특화 요소 경쟁력		○	
	지역인적 자원 활용성			○

+ 섬유패션 염색가공 산업

분야	분석 내용	평가		
		상	중	하
정책 역량	新 평화 경제 체제 기여 가능성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력		○	
	공정 경쟁 및 지역 균형 발전 실현	○		
산업 역량	혁신 성장 동력 구현 가능성		○	
	분야별 산업 기반 구축 정도		○	
지역 역량	지역 특화 요소 경쟁력	○		
	지역 인적 자원 활용성			○

+ 섬유패션 봉제 산업

분야	분석 내용	평가		
		상	중	하
정책 역량	新 평화 경제 체제 기여 가능성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력	○		
	공정 경쟁 및 지역 균형 발전 실현	○		
산업 역량	혁신 성장 동력 구현 가능성	○		
	분야별 산업 기반 구축 정도		○	
지역 역량	지역 특화 요소 경쟁력		○	
	지역 인적자원 활용성			○

3) 양포동 지역혁신역량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정책역량

- 新평화 경제체제를 대비한 단계적 남북교류 협력방안 제시필요
 - (개성공단-경기도 섬유패션산업 협력발전방안)
- 북측과 노동집약이 아닌 지식(기술)집약 산업으로의 접근필요
 - (혁신클러스터, 자동화생산시스템, 신소재개발)
-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사업 재정비 및 활성화방안
- 지역 간, 업종 간 융복합 협력시스템 구축 방안 필요

● 산업역량

- 국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특화 산업이긴 하나 글로벌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동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동력 필요함
- 다운스트림 산업 보완, 스마트공정시스템(디지털화/자동화), 신소재연구개발
- 강화되는 국제적 기준과 접경 지역 특성에 따라 ‘친환경’체제로 전환 시급

● 지역역량

- 수요시장인 대도시(서울, 평양)와의 접근성을 적극 활용한 발전방안 필요
- 지역낙후성을 보완하고 특화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영입 필요
- 컨버터, 프로모션 부문의 스타트업 기업 지원 육성방안 필요

3.3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인터뷰/간담회

가. 양포동 섬유패션기업 및 관련기관 간담회

1) 1차 접경 지역 경기 북부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간담회

- 일시/장소: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 참석자: 경기도, 양포동 담당자, 유관단체 단체장, 균형위, 연구진 총 23명
- 내용
 - 경기 북부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현안 요약

- 양포동 업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인력 확보
- 양포동은 미들스트림(니트-가죽-염색) 주력, 다운스트림인 봉제산업 보완을 통해 미들스트림의 경쟁력 강화해야함
- 지역특화 산업 클러스터 중심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혁신역량 강화필요
- 접경 지역인 양포동은 친환경-리사이클의 브랜드화, 클러스터조성, 지속적 R&D 지원필요
- 피혁산업 공정상의 환경문제 → 규제완화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필요(공동작업공간 및 공동보관 장소) 계획)
- 미군 공여지 활용 및 과제
- 포천시 리사이클 신소재 연구지원 요청
- 경기도-포천시 환편기 연구 개발 사업 지원 요청
- 남북교류시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역할 및 과제
 - (개성공단) 접경 지역에 봉제단지 구축(트윈시티(상단))해서 북측의 노동자가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위기대처 방안임
 - 섬유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완화 필요
 - 경의선 벨트를 활용한 중국시장 진출 전략 및 마케팅 필요
 - 남북의 피해지역 보상 및 환경문제 해결이 관건

● 시사점

- 지역특화 산업 혁신역량강화
 - 인력난 해소, 특구지정사업 활성화, 환경문제해결, R&D지원 방안 필요
- 지역특화 산업 혁신성장 동력 마련
 - 혁신클러스터, 다운스트림산업 보완, 신소재개발연구지원 필요
- 남북협력사업을 위해 정책적 지원필요
 - 접경 지역 규제완화 및 환경개선
 - 개성공단 활용 및 개선방안 마련

2) 2차 접경 지역 경기 북부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간담회

- 일시/장소: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 참석자: 양포동 섬유패션업체 대표, 경기도, 양포동 담당자, 유관단체 단체장, 균형위, 연구진 총20명

● 내용

- 접경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육성 및 남북교류 협력방안 보고서_섬유패션부문 요약발표
- 양포동 섬유패션 기업 현황 및 의견
 - 양포동 섬유패션 산업발전을 위한 4개 사업제안
 - 혁신성장 동력 필요 ⇒ U턴 기업 및 선도기업 유치 방안 마련해야함(정부차원의 혜택방안 마련)
 -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리사이클 섬유’개발 연구사업의 경우,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대안 필요(타지역과의 협업필요)
 - 양포동 섬유패션 특구지정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 속도 미흡
 - 화학섬유(고부가가치 상품개발)중심 개발연구 필요함
- 균형위 의견
 - (보고서) 특화 산업 및 사업의 단계적 구체적 육성방안 및 전략 제시 필요
 - (지자체 및 단체) 정부차원의 지원 방향 및 사업안 제시 요구
 - 지자체 및 단체에서 제안한 사업은 지자체 내에서 진행 가능한 사업임
 - 섬유패션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제안필요

● 시사점

- 지역특화 산업 혁신역량강화
 - 양포동 특구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역특화 산업 혁신성장 동력 필요
 -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생산으로 전환 필요
 - 선도기업 유치 방안 마련

나.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전문가 인터뷰

1)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

● 유통/영업

- 현재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은 ‘물류’에 투자 집중
 -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비중이 오프라인을 압도하고 있음 따라서 무신사 같은 유통브랜드가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 가능성 높음

- 유통브랜드는 물류시스템이 관건, 주로 서울 이남지역으로 투자 집중 ⇒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있다면 경기 북부에도 가능할 수도 있음
- 남북교류시 유럽진출이 용이해짐에 따라 물류거점확보 의미 있음
- 북한을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접근
 - 개성공단 재개시 현재의 노동법 적용되면 과거에 비해 비용절감효과 떨어짐
 - 한류열풍 흐름으로 중국,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사례가 북한에도 적용될 것임
 - 서울과 평양 대도시 소비시장 중심에 위치한 양포동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할 산업 구상 필요(봉제산업/유통산업)

● 패션브랜드 / 교육

- 소규모의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력확보
-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는 샘플제작에서 봉제까지 ‘원스탑’ 시스템이 갖춰진 ‘봉제타운’ 형태 선호
 - 봉제산업은 샘플, 부자재 등의 인프라가 같이 조성되어야 함
 - 의정부로 확대되었으나 거리가 멀고, 아직은 완성도에 대한 확신 떨어짐
- 제조, 생산 전문 인력 양성 필요하지만 마케팅, 디자인부문에 편중
 - 지역소재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는 지역특화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필요함
⇒ 테크니컬디자이너(패턴+디자인), 패턴사, 컨버터 등 생산인력

● 마케팅

- 패션피플들을 공략한 핫플레이스 필요
 - 개인(인플루언서) 혹은 소규모의 패션브랜드(업체) 증가추세
 - 대규모의 패션전문 스튜디오가 있다면 소규모 패션업체, 개인, 인플루언서들이 모여들 것임.
서울에 스튜디오가 있지만 50평 규모로 현실적이지 않음
 - 패션인플루언서 및 소비자가 모여들면 관련 패션산업이 활성화될 것임
- 스마트팩토리는 서울시 ‘스마트앵커 프로젝트’ 연계방안 필요
- 스마트팩토리의 적용 부문 고려(봉제, 신발, 염색, 온라인쇼핑몰제작)
⇒ 양포동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서울시 스마트 앵커 프로젝트’와 연계필요

● 전략

- 스마트공장은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전체의 당면과제
 - 노동자원 확보 문제 해결책으로 생산라인 자동화는 필수
 - 짧아지는 리드타임과 다품종소량생산에 대응책
 - U턴 기업들은 스마트공장 형태로 국내 복귀할 것
 - 기획에서 생산, 판매까지 전밸류체인인 통합시스템 구축이 최종목표지점
 - 현재 기술수준은 반자동화 생산시스템임
- 양포동의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은 혁신동력이 필요함
 - 소재(니트, 피혁)산업과 염색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함(고부가가치 상품개발)
 - 미들스트림을 견인할 다운스트림 산업의 도입은 긍정적
 -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및 노력이 필요
 - (지자체-부지제공, 메이저회사-시설투자, 영세업체-입점의 형태)
 -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선도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특화 산업 견인임
 - ⇒ 국내 U턴을 추진중인 글로벌 벤더기업 유치 노력 필요(스마트공장형태)
- 접경 지역 특성상 환경문제가 중요할 것
 - 섬유 패션 산업은 환경을 훼손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과감성 필요
 - 친환경 제품, 제조공정, 작업환경 등의 문제 해결
 - 가죽 악세서리 기업 '시몬느'의 경우 의왕시에 본사, 환경친화적 작업환경
 - ⇒ '한우피' 특화 지역에 시몬느 같은 기업의 생산공장을 유치한다면 의미 있음

2) 시사점

- 물류단지 연계 방안 검토
- 섬유패션 봉제산업 및 유통산업 도입을 통한 소재산업 견인 방안 검토
- 수요자(디자이너브랜드, 유통브랜드)에 맞춘 생산공정 및 생산형태 구성
- 산학협력 및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방안
- 소비자/수요자의 흐름에 맞춘 산업 및 사업 방안 고려
- 서울 및 타지역과의 연계 협력 방안 고려
- 스마트 팩토리 시범단지의 실현 가능성 확인 필요
- 다운스트림 강화로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스트림확대 방안 필요
- 친환경 제품, 제조공정, 작업환경 현황과 현실가능성 확인 필요

3.4 정부/지자체 섬유패션 관련 사업추진 현황¹⁷⁾

〈표 III -42〉 정부/지자체 섬유패션관련 정책

기관	계획명(기간), 예산	세부내용 및 기대 효과	비고
산업통상 자원부	섬유 패션 산업 발전계획 (201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공장보급, ICT+패션의류 융·복합제품개발, 노후설비교체 및 친환경 염색기술 국산화 지원 국가적으로 섬유산업 육성 종합 발전계획 수립 	경기도 지원없음
중소벤처 기업부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2018~22, 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주·포천·동두천 지역을 섬유가죽 패션특화 산업 특구로 지정함으로써 특화 사업 및 규제특례 이용 근거 마련 특구와 관련 사업 수행시 규제 특례 이용 가능 	비예산 사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섬유소공인 집적지구조성 (2018~, 19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인 이하 소공인이 집적되어 있는 양주시 남면 지역을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 센터를 통해 섬유제조 소공인 기술/판로/금융/경영 등 분야별 애로사항 해소지원 	
경기도	제2차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종합계획 (2017~21, 79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즈니스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술 혁신·마케팅 역량 강화 및 기업 간 협업생태계 조성에 중심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양주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계획 (2018~24, 1,40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주역 주변의 GB조정 가능지를 경기 북부의 미래 복합형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 북부특화 산업(서유, 가구, 피혁 등)과 IT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행안부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2024년 준공
동두천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2017~21, 723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두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패동 일대를 국가 산업단지 조성추진 동두천시의 산업 공동화 및 도시 쇠퇴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기대 행안부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2022년 분양예정
포천시	고모리에 (종합디자인패션단지) 조성계획 (2015~21, 1,30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 산업의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경기 북부지역 활성화,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열악한 문화 시설 확충, 신성장 동력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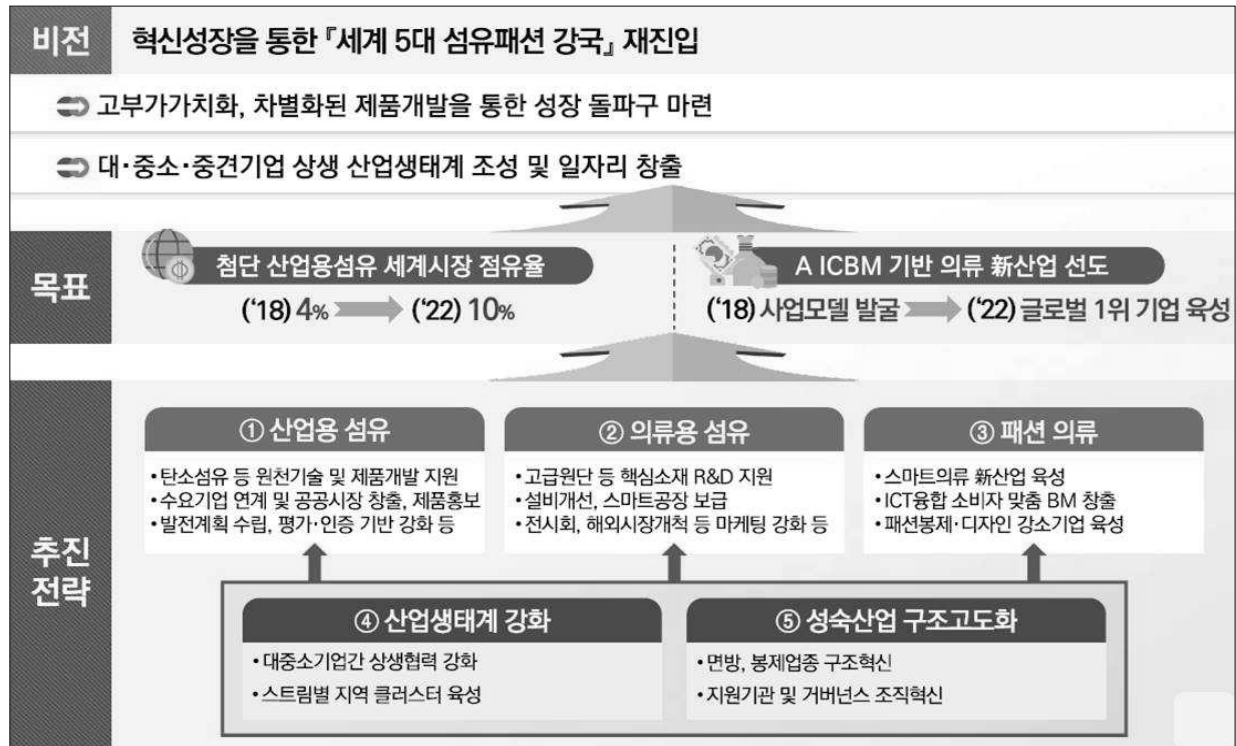
가. 섬유 패션 산업 발전계획(산업통상자원부)

- 비전: Premium! Top 5 비전
- 추진사업

17)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계획, 2018.8

- 첨단 산업용섬유 집중육성
- 의류용섬유 경쟁력 강화
- A ICBM¹⁸⁾기반 의류 신산업 선도
- 섬유 패션 산업 생태계 강화
- 성숙산업 구조 고도화

〈그림 III-74〉 섬유 패션 산업 발전비전



자료: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계획, 2018.08

● 사업연계

- 의류용섬유 경쟁력 강화
 - 양포동 지역특화 니트/피혁 소재의 고감도 상품 개발
 - 양포동 섬유패션기업 노후설비 개선,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및 시범공장, 친환경염색기술 국산화
- A ICBM기반 의류 신산업 선도
 - 판교 테크노밸리 ICT연구기업과 협력 ICT 패션의류시장 진출
- 섬유 패션 산업 생태계 강화
 - 양포동 니트/피혁/염색 혁신클러스터 육성

18) A ICBM(AI, IoT, Cloud, Big data, Mobile)

나.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중소벤처기업부)

● 추진사업

- 특구 산업 인프라 확충
- 글로벌 섬유, 가죽, 패션 수출시장 활성화
- 섬유, 가죽, 패션 생산기술 고도화
- 특구운영 및 산업지원 기능 강화

● 사업연계

- 특화 사업 및 규제특례 이용 근거로 활용
- 특구계획을 기반으로 니트, 피혁, 염색 산업클러스터를 혁신클러스터로 발전

다. 기술개발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 추진사업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업연계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 지역 섬유패션관련 대학과 연구소등과 공동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연계
-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 지역특화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R&D 지원 사업과 연계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양포동 지역내 섬유패션기업들은 대부분 5인 미만 영세업체로 조건에 부합
 - 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컨설팅, 팔로개척 등 S/W지원 프로그램 병행 가능

라. 제2차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종합계획

● 비전

〈그림 Ⅲ-75〉 경기도 섬유산업 비전



자료: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계획, 2018.08

● 추진사업

- (마케팅·브랜드) 중고가 시장 공략, 신규 오더 창출
- (생산·R&D) 글로벌 우위 생산성·품질·기술경쟁력 확보
- (환경·인력) 근로환경 개선, 우수 인재 육성
- (기반 구축) 무역업종 강화, 기업 간 협업생태계 조성

● 사업연계

- 5년마다 섬유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차 계획
- 지역특화 산업(니트/피혁/염색)의 혁신역량강화 방안 연계
 - 혁신클러스터 조성(니트/피혁/염색 클러스터→섬유패션 혁신클러스터)
 - 글로벌 경쟁우위(생산성/품질/기술경쟁력) 상품 개발 지원

마. 양주테크노밸리(양주시)

● 개발전략

- 양주시 특성화(미래 복합형 첨단 산업단지)
- 지역특화 산업과 전통산업을 4차 산업혁명과 접목
- 생활소비재 제품에 디자인, IT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제조-서비스-디자인 융합형 창업기업 유치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기여
- 기존제품의 스마트화

● 사업연계

-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한 제품개발 및 생산공정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
- 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사업 연계

바. 국가산업단지(동두천)

● 개발전략

- 미군기지이전과 열악한 지역 재정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정부지원대책
- 국가산업단지로 단계적 개발 및 사업성확보
- 국가산업단지 내 섬유제품, 의복 및 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조업 배치

● 사업연계

- 지역특화 산업(가죽/모피)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연계
- 집적된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스트림 간 협업을 통해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활성화

사. 고모리에 종합디자인패션단지(포천)

● 개발전략

- 21C를 선도할 新산업단지 조성(디자인 산업 도입)
- 경기동북부지역 발전 거점

-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 문화·예술의 창조적 공간(주변관광지 연계)

● 사업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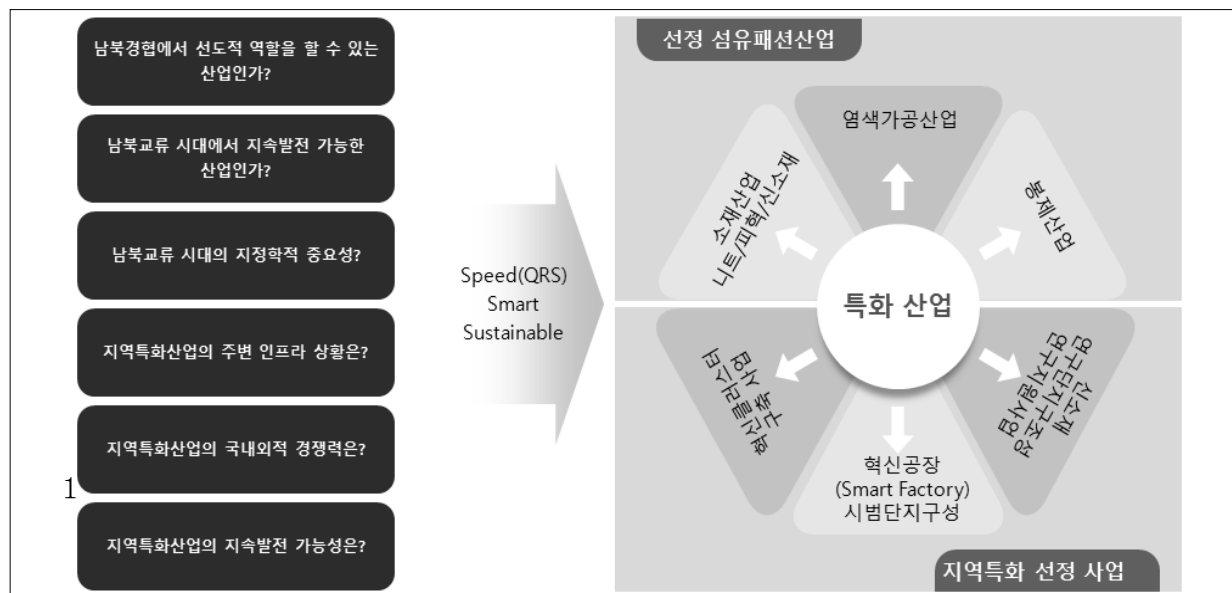
-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 지속 가능한 친환경 新소재 연구개발 지원 사업 연계
- 21C를 선도할 新산업단지 조성(디자인 산업도입)
- 고감도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사업 연계

3.5 특화 산업/사업 선정 및 전략

가. 특화 산업/사업 선정

1) 특화 산업/사업 선정 모형

〈그림 III-76〉 특화 산업/사업 선정 모형



2) 특화 산업

● 섬유패션 소재산업 - 니트 / 피혁 / 신소재 산업

- 니트, 피혁 산업은 지역특화 산업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의미를 넘어 ‘한국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함

- 현재까지 부가가치, 고용창출, 수출점유율 등의 경쟁력이 확보된 국내외적 비교우위 산업부문이지만 현상유지 수준임 향후 현재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연적으로 성장은 정체 및 쇠퇴할 가능성이 높음
- 신소재 산업은 니트, 피혁 제품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고기능, 고감도, 친환경) 소재산업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시장을 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

● 섬유패션 염색가공 산업

- 지역특화 산업으로 비교우위의 염색가공 산업 활성화의 의미뿐만 아니라 니트/피혁 산업의 기술혁신 및 발전을 위해 필수 산업임
- 염색가공을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
- 친환경 제품, 공정, 환경에 대한 대책 및 지원이 필수

● 섬유패션 봉제산업

- 봉제산업은 리드타임이 생명인 산업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집적되어있음. 경기도에서도 발전수준이 높은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확보되어있지 않음
- 하지만 지역특화 산업인 니트/피혁, 염색가공 산업의 완성도를 높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봉제산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서울에 집중되었던 봉제업체들이 운영난등의 이유로 의정부, 양포동으로 이전하는 사례 및 속도가 증가하는 상황

3) 특화사업

● 혁신클러스터

+ 혁신클러스터 개념 및 정의

- 혁신 클러스터(innovative cluster)는 연구소, 대학, 기업 지원 기관, 금융 기관 등 혁신 관련 행위 주체들이 일정한 공간 또는 지역 내에 입지하여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
- 산업클러스터가 지식의 활용주체인 산업부문간의 연관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혁신클러스터는 산업뿐만 아니라 지식의 창출 및 확산까지를 포괄하는 개념

+ 혁신클러스터의 특징(OECD Focus Group).

- 첫째, 클러스터가 속한 경제 체제의 고유한 특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전문화 되어 발전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별로 규모, 연계수준, 연구 개발의 투자의 정도, 혁신제품의 비중 등의 차이가 나타남
- 둘째, 혁신 클러스터는 신산업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이나 성숙 산업을 토대로 형성될 수 있음
- 셋째, 이미 형성된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유아 단계의 미성숙 클러스터도 혁신 클러스터의 분석에 있어 중요
- 넷째, 기술지식 이외에도 조직 기술이나 마케팅 기술 등의 지식이 클러스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다섯째, 혁신 클러스터의 지리적 범위는 국지적(local), 지역적(regional), 국가적, 국제적 입지 등 지식의 원천의 소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됨. 따라서 모든 집적지가 혁신 클러스터는 아니며, 역으로 모든 지역이 혁신클러스터가 될 수 있음

+ 선정이유

-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국가 균형 발전
- 지역특화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 남북교류시 협력사업으로 적합
- 평화경제체제에서의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 역량

- 국내 대표적 니트/염색 산지이자 경기 북부 특화 산업으로서의 역량
-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협력시스템 및 주변인프라 구축 정도
- 북측의 혁신클러스터 조성 의지(공동개발, 협력사업 추진)
- 양포동 섬유패션 특구 사업의 추진동력 역할 및 재정비

● 혁신공장(Smart Factory)

+ 개념 및 정의

-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섬유 및 봉제기계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부터 제조공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IOT, 로봇등을 섬유기계에 탑재된 시스템을 갖춘 공장을 말함
- 자동화봉제시스템, 다품종 소량생산용 최적공정설계, 생산관리시스템(주문-품질관리)의 과정을 포함

+ 선정이유

- 지역특화 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필요
- 다운스트림 강화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노동자원 확보의 문제 해결
- 수요자중심의 산업시스템으로 전환
- 한반도 섬유패션 전 밸류체인 구축 기반

+ 역량

- 미들스트림 산업(소재/염색)의 역량 기반
-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서울-평양 인접)
- 낙후된 접경 지역의 자원 활용가능

● 신소재(고부가가치/고기능/친환경)

+ 개념 및 정의

- 신소재는 크게 고부가가치, 고기능, 친환경 섬유소재로 탄소섬유나 아라미드 같은 산업용 섬유와 헬스케어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나노(초극세사)섬유, 중공섬유, 흡습속건, 마이크로 캡슐섬유와 같은 의류용 섬유로 구분
- 한편, 지속 가능한 섬유 즉, 리사이클(재활용) 섬유나 친환경적 공정을 거친 섬유가 신소재로 부각되고 있음

+ 선정이유

- 고부가가치 미래지향 사업
- 섬유산업의 혁신성장 도모
- 남북교류시 공동/협력 사업으로 적합
- 지속 가능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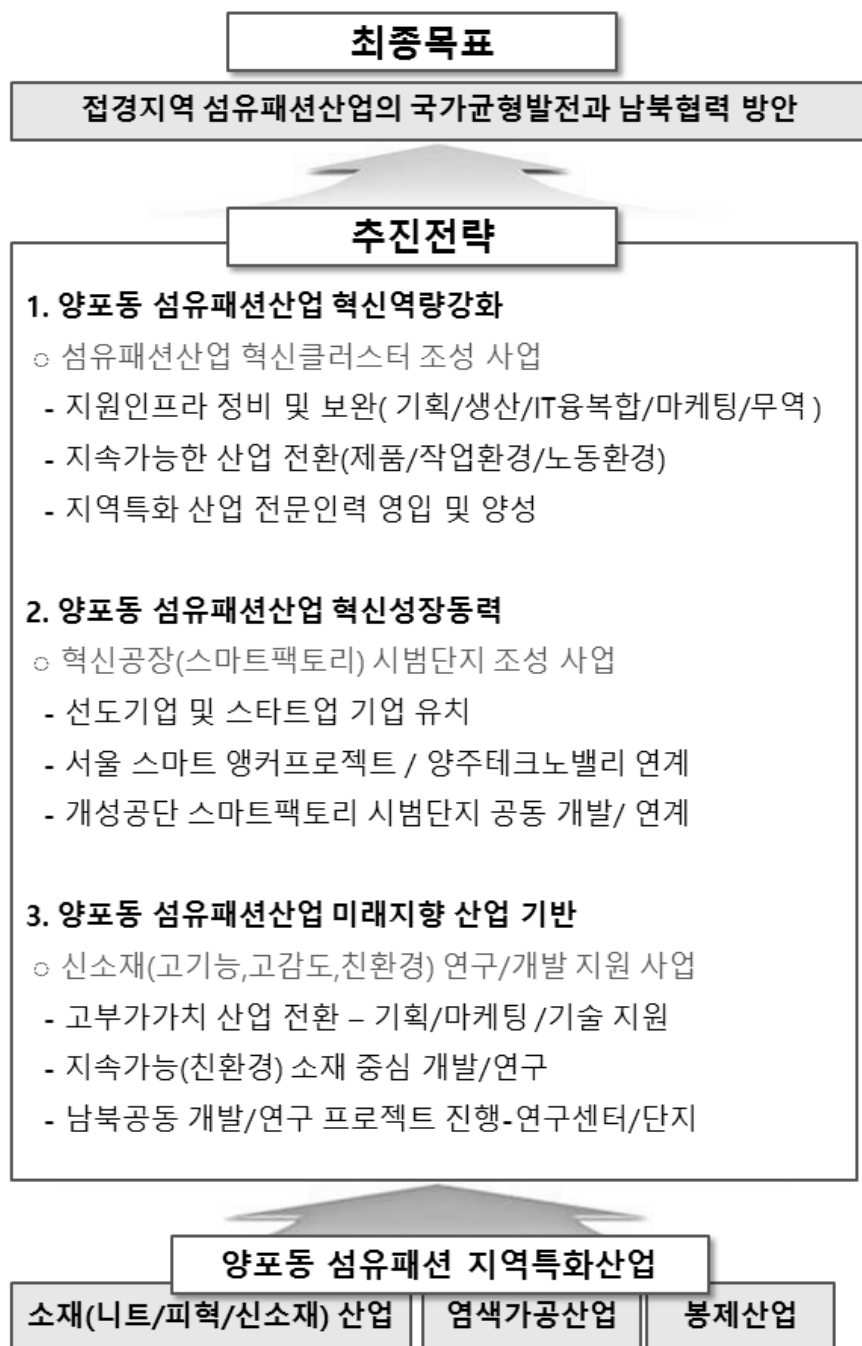
+ 역량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업그레이드 시점
- 친환경(리사이클) 소재 연구개발 의지
- 접경 지역의 '친환경' 이미지

〈표 Ⅲ-43〉 특화 산업/사업 선정이유 및 역량

특화 산업	세부사업		선정이유	역량
섬유 패션 소재 산업	양포동 섬유 패션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신소재 개발·연구 지원사업	〈혁신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국가 균형 발전 ◦ 지역특화 산업의 혁신역량강화 ◦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적합 ◦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국내 대표적 니트/염색 산지이자 경기 북부 지역특화 산업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포동 협력체제 및 인프라구축 ◦ 북측의 혁신클러스터 조성의지 (공동개발, 협력사업 추진가능) ◦ 양포동 특구 사업의 추진동력 약화 ◦ 기업-지원 인프라 조정 ◦ 미들스트림산업의 역량확보 ◦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 낙후된 접경 지역의 자원 활용 (접경 지역보상, 특례법 지정 등) ◦ 전문 인력 육성/인프라 낮음 ◦ 니트/염색 국내외 경쟁력확보 ◦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 ◦ 기술(고기능),기획(고감도)지원 ◦ 친환경(리사이클)소재 연구지원
섬유 패션 염색 가공 산업		고기능 고강도 친환경	〈혁신공장-스마트팩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 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 다운스트림 강화 ◦ 노동자원 확보 문제점 해결 ◦ 수요자중심의 산업시스템 전환 ◦ 한반도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전밸류 체인 구축 기반마련 	
섬유 패션 봉제 산업		스마트 팩토리 시범단지 자동화 스피드 융복합	〈신소재 개발·연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미래지향산업 ◦ 섬유산업의 혁신성장 도모 ◦ 남북공동사업으로 적합 ◦ 지속 가능한 사업 	

나. 특화 산업/사업 추진 전략 및 목표



3.6 특화사업 추진 계획

가. 혁신클러스터 조성

1) 정의

- 양포동 지역에 집적한 섬유패션 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협업생태계가

이루어진 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신기술과 지식의 혁신을 실현하는 행위 주체(연구소, 대학, 기업 지원 기관 등)들이 지역 내에 입지하여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로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의 개념까지 포괄함

2) 사업선정 근거

- (산업역량) 양포동은 한국섬유 패션 산업 중 니트, 염색가공 산업의 대표산업집적지역이자 최대산지이며 동두천은 안산, 대구 지역과 함께 대표적 피혁제품 생산집적지역(국내 한우피 80% 취급, 세계 5위)으로 이미 국내외적 경쟁력과 시장을 확보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니트 및 가죽, 염색 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산업임
 - 균형있는 스트림 구성으로 니트의 경우 세계 최단납기(7일내) 시스템 형성
 -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특화 산업 기반과 산업지원인프라 구성 등 자연적으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반이 마련되어있음
- (정책역량)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은 경기 북부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특히 양포동은,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및 사업 추진중 ⇒ 비예산사업의 한계로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재정비 및 적극 추진해야함
- (지역역량) 패션소비시장 및 패션산업중심지인 서울과 인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시 대도시 서울-평양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지정학적 경쟁우위를 선점하고 있음

3) 필요성

- 기 형성된 지역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 기업 간의 협업과 분업을 활성화 시키고 혁신성장 동력(친환경, 디지털, R&D)을 추진하여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남북교류시대에 선도적 산업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양포동 지역의 니트, 피혁, 염색·가공 산업은 지역특화 산업이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각 산업별 역량의 정도가 차이가 있고, 영세화, 노후화, 환경문제 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각의 산업별 미니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통해 핵심역량을 키워야함
- 양포동 지역의 봉제산업 즉, 다운스트림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미들스트림(니트/피혁/염색)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현재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오는 봉제기업들이 늘어가 는 추세로 봉제산업 육성 및 강화가 실현가능함. 따라서 양포동 지역에 적합한 유형의 봉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니트, 피혁, 염색가공 산업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효과

가 극대화될 것임

- 접경 지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특히, 양포동지역)은 섬유산업이 가장 크고, 캐주얼 의류 등에 활용되는 니트 원단의 국내 최대 산지로 세계적인 니트패션도시로 성장 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보유
- 양주·포천·동두천지역의 섬유산업은 최적의 남북경협 대안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의 실현 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를 조기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동력으로 기대되며, 경기 남부의 섬유중심의 용·복합 역량과의 결합 시에는 세계 최대의 첨단 섬유·패션 거점으로 성장이 가능

경기 북부(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경기남부(안산시)

자료: 경기섬유산업연합회, 2020

- 이의 실현을 위해 기 형성된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기업 간의 동업종·이업종 간의 협업을 활성화시키고 혁신성장 역량(친환경, 디지털, R&D) 강화 추진 필요

4) 목적

- 양포동 지역특화 산업인 니트, 피혁, 염색가공 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및 국가균형 발전 도모
- 남북경협에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있는 섬유·패션산업 집적지간 연계·협력 방안(니트패션 Ultra-fast 생산관리시스템 등) 마련하여 신규 노동시장이자 잠재 소비시장인 북한과의 경협 진행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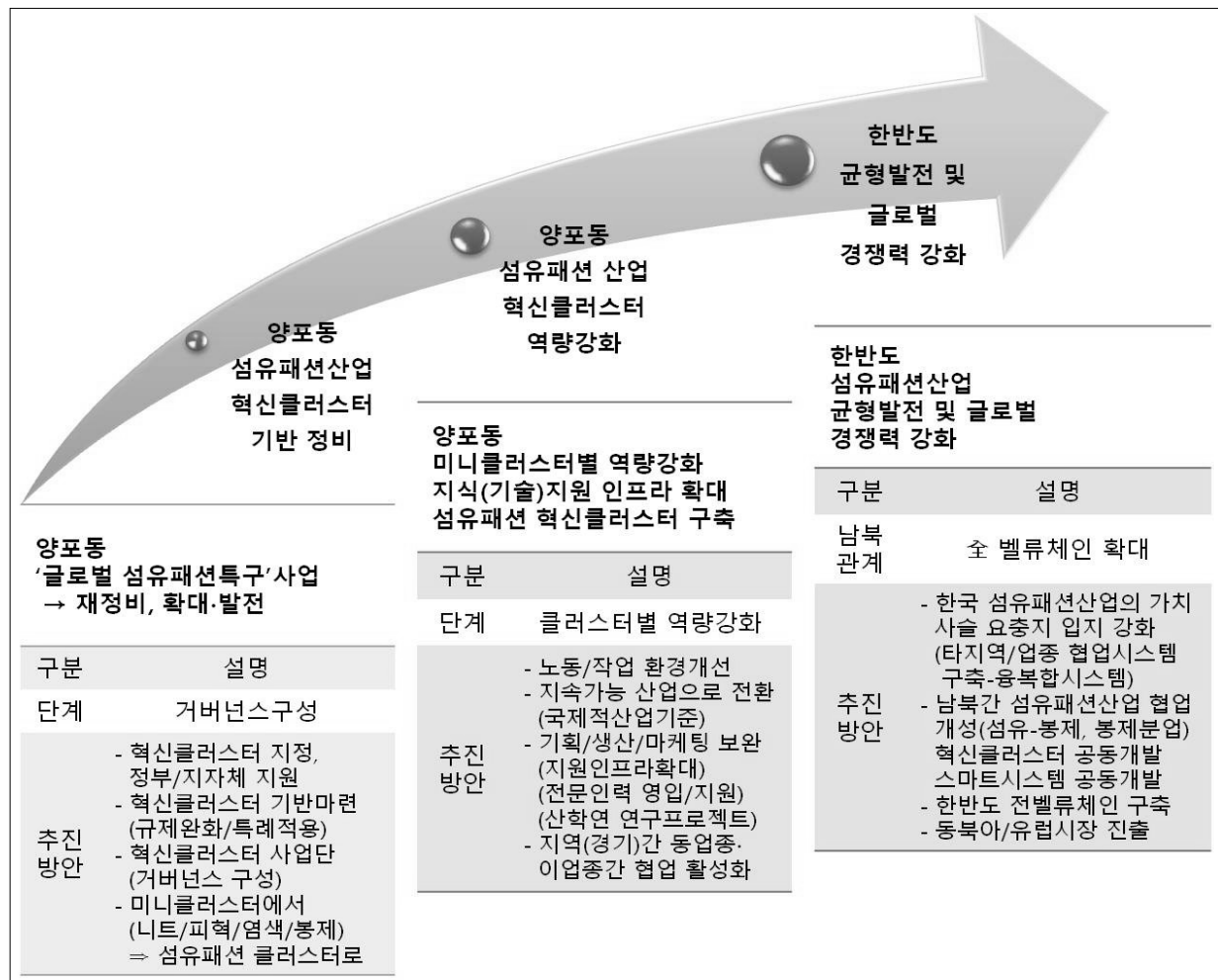
5) 추진 전략

- 현재 계획까지 수립된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 특구사업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활력방안 제고

- 각 산업(니트/피혁/염색가공/봉제) 혁신클러스터별 역량강화 사업의 방향 및 지원방안 고려
(작업환경개선, 디지털화, 기술혁신, 융복합시스템구축 등)
- 타업종·이업종 간의 연계·협업 활성화방안
 - 양포동 지역내 니트-가죽-가구 산업 협업(상품/시장 공동개발, 공동마케팅)
 - 경기 남부의 섬유 패션 산업(제조-협업/분업, 유통-PB개발 등) 및 IT산업(디지털화) 연계
- 남북협력사업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조성, 공동개발 및 협업

6) 추진내용(단계)

〈그림 Ⅲ-77〉 혁신클러스터 단계별 추진내용



-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
 - 기존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특구'사업 재정비 및 확대·발전
 - 지원 인프라 재정비(역할분담 및 전문성 보완)
 - 산업클러스터에서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확대 ⇒ 사업단 및 거버넌스 구성

〈그림 III-79〉 경기 북부 섬유 패션 산업
발전계획_2019



- **니트산업 혁신클러스터**

- **피혁산업 혁신클러스터**

- **염색·가공산업 혁신클러스터**

- 384 접경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육성 및 남북교류 협력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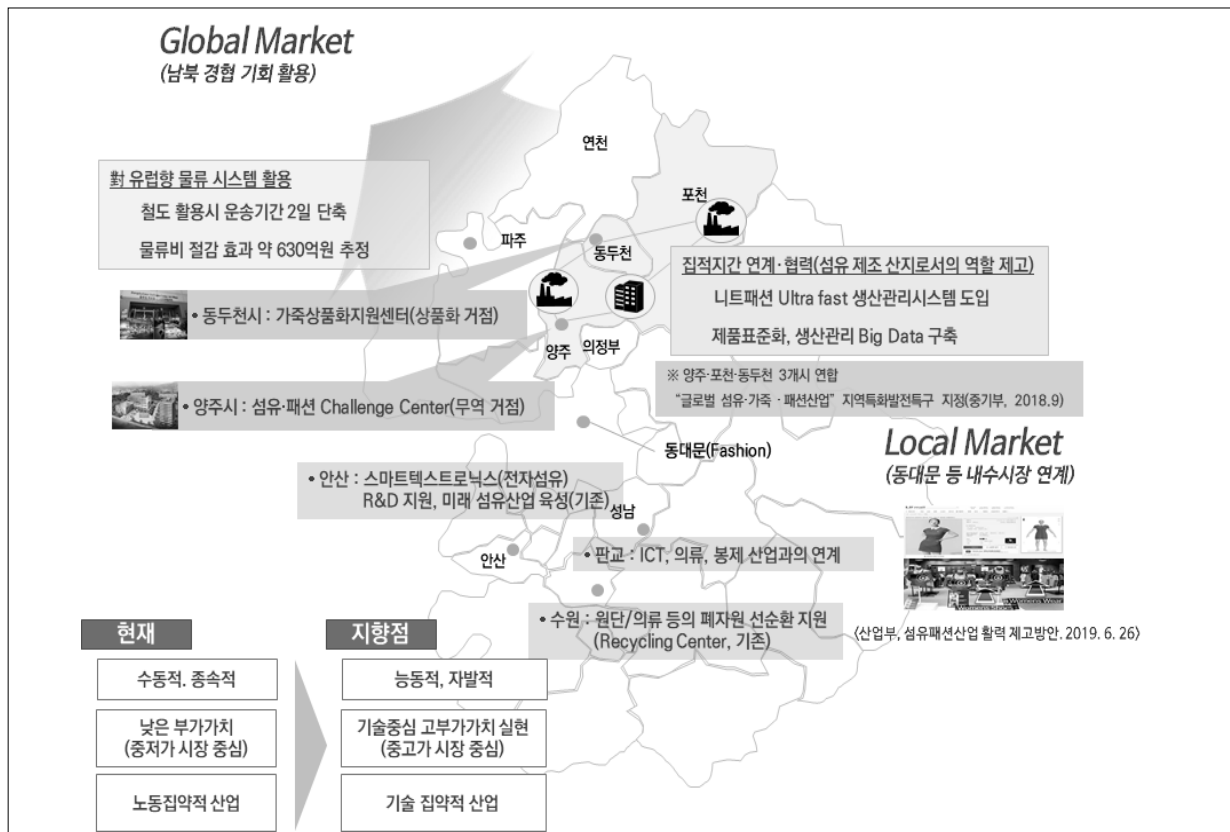
- 니트용 염색기술 ‘ECOOROOM’ 기술 보급 사업 지원을 통해 제품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상의 환경보호 고려한 가치소비시장으로의 확대 가능
- 포천 ‘신평공단 백연처리 집진기 저리용자 지원 사업’과 ‘양문염색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친환경 산업으로 부가가치 향상
- 섬유패션 제품 컨버터 육성 사업의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 확보, 일자리창출, 산업의 활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음
- 봉제산업 혁신클러스터
 - 노후산업단지의 환경개선 및 근로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봉제산업의 활력제고
 - 양포동 산단 간 제품별/공정별 집적화 재구성을 통해 생산효율성을 높이고 ‘원스탑’ 주문이 가능한 구조를 통해 신규 수요자확보에 용이
 - 봉제산업은 부자재산업 같은 관련 산업의 유치 및 발전에 기여율 높음
 - 지역특화 산업에 적합한 전문가(테크니컬디자이너, 생산관리, 마케팅, 유통) 집중 양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교육기관과의 상호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음
-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소재/염색가공/봉제클러스터) 혁신클러스터와 타업종/타지역과의 협업 및 연계 활성화
 - 양포동내 가구산업과의 협업을 통한 제품 및 시장 개발 및 공동마케팅
 - 경기남부의 IT클러스터와의 협업을 통한 기술혁신, 제품개발
 - 경기남부 섬유 패션 산업과의 협업 및 분업 활성화(공동수주, 공동마케팅 등)
- 한반도 섬유 패션 산업 균형 발전 및 글로벌 시장확대
 - 한국 섬유 패션 산업의 가치사슬 요충지로서의 입지강화
 - 니트/가죽/염색의 미들스트림과 봉제의 다운스트림으로 특화된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 산업과 서울(봉제/유통), 대구/부산/전주(화학섬유/직물)지역 섬유 패션 산업과 연계(협업/분업) 시스템 구축
 - 남북간 섬유 패션 산업 협업(개성공단)
 - 남북교류시 북측의 노동자원 활용방안 마련, 개성공단과는 소재-봉제산업의 협업과 동시에 봉제(임가공)산업의 분업형태로 연계가능
 - 향후 개성공단의 혁신클러스터의 공동개발 및 협업으로 확대발전
 - 한반도 섬유 패션 산업 전 벨류체인 구축
 - 한반도의 섬유 패션 산업 연계 및 협력(전벨류체인 구축)을 통해 한반도 균형 발전 도모
 - 물류/유통 시스템 강화로 한반도가 생산-산업기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섬유패션소비시장

으로 활성화

- 동북아/유럽시장 진출

– 한반도신경제지도의 3대벨트를 통해 동북아시아 및 유럽 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그림 III-80〉 한반도 섬유패션 시장



7) 기대 효과

- 낙후된 경기 복구 지역 경제를 양포동 섬유 패션 산업이 미래지향적,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견인차 역할
- 남북교류 시대에 선진적 기술 및 시스템을 갖춘 섬유 패션 산업은 선두산업이자 지속 가능한 산업교류를 통해 평화경제 실현
- 지역 경제활성화
 - 지역특화 산업의 역량강화를 통해 국내외 경쟁력 강화
 - 타지역/타업종 협력 사업 추진
 - 경기도내 니트/가죽-가구산업: 상품개발-판매-유통 협업
 - 서울-봉제산업, 대구-섬유산업: 상품개발-판매-유통 협업
 - 경기남부 테크노밸리 연계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 남북교류 협력
 - (단기) 개성공단과 섬유패션 혁신클러스터 형태로 협업
 - 남측의 자원(기술/자본) 지원을 통해 개성공단을 섬유패션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 북측의 자원(노동/부지/투자자본) 활용
 - 특별법 제정(접경지, 특수상황지역, 통일특구) 필요
 - (중장기) 북한 섬유패션 혁신클러스터 확대 및 미래성장산업 공동연구개발
 - 섬유패션 제품개발-판매-유통 협업
 - 혁신역량강화 사업의 공동연구개발 추진

8) 지자체 추진(혁신클러스터) 단위사업

● (양주)섬유패션 챌린지센터 구축

+ 개요

- 위 치: 양주시 마전동 일원(양주테크노밸리 內)
- 사업기간: 2021~2024
- 부지면적: 5,000m²(실 대지면적 4,500m²)
- 건축 및 연면적: 3,000m² / 11,000m²(지하 1층, 지상 3층)
- 사업비: 450억 원(국 150, 도 150, 시 150)
- 국비확보방안: 산업부 산업융합 실증지원 사업연계 계획

+ 추진 배경/필요성

- 양포동 섬유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양포동 섬유산업은 임가공 위주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
 - 지역내 주류산업인 섬유산업의 인식 변화 필요(임가공→창의적제품)
- 4차산업 연계 제조창업문화의 복합 섬유패션공간 조성필요
 - 기존의 파편화된 공간을 군집화하여 제조·창업·문화를 하나의 공간에서 조성
 - 다양한 섬유패션제품의 마케팅 환경·소비자 인식 변화에 부합
 - 거대한 수요처와의 근접성
 - 양포동 플랫폼만의 차별화(소재 기획력 + 스마트팩토리(ICT) 연계)

+ 추진 방안

-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섬유패션 메이커스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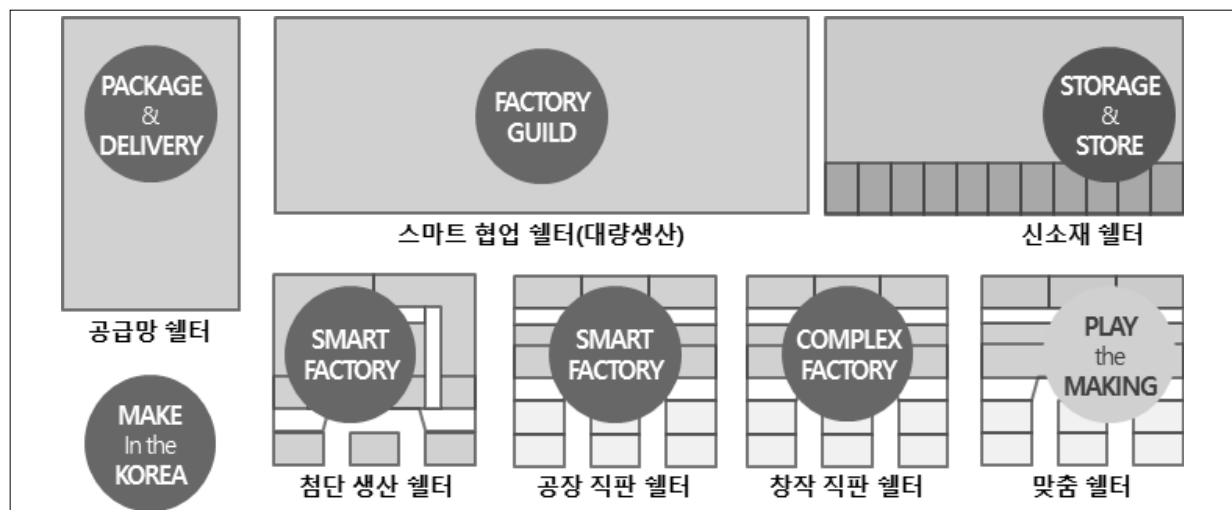
- 섬유패션 기업(소상공인) 종합 인큐베이팅 활성화
- 지역 섬유기업과 입주 메이커스와의 동반성장 추진
- 첨단 지식서비스 기술을 활용한 섬유패션 연구-생산-문화공간 조성
 - 체험하고, 즐기고, 만들고, 구매하는 체감형 팩토리 그라운드 구축
 - 4차산업 연계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및 ICT기술 융복합 섬유패션 체험공간 조성

〈표 III -44〉 챌린지센터 구성안

구 분	사업 내용
1구역 (패션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션창업 수요자, 신진디자이너의 성공적 창업 지원 ◦ 제조/유통/자금 플랫폼 연계 지원 ex) 양포동發 ‘스타일난다’ 육성, 무신사(온라인) 양포동 제품 입점
2구역 (사회적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업사이클링)·일자리·여성·영유아·공유경제 등 사회적 문제를 섬유·패션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ex) 폐플라스틱 재활용 섬유로 섬유제품 개발 방탄소년단이 매는 백팩 ‘모어댄’ - 차 자투리 가죽재활용
3구역 (원단벤더/컨버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포동 섬유임가공 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수주 증대 ◦ 원단 개발 기획역량 및 수출/유통 역량 강화 ex) 도내 섬유임가공업체-연계 지원
4구역 (체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를 통한 다양한 놀이/체험시설(증강현실, AR/VR) 확보 ◦ 직업체험(디자이너, 연구원) 공간 확보
5구역 (지원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팩토리(봉제, DTP) 구축, 창업보육지원 ◦ 섬유패션 소재 라이브러리(일반, 친환경 특화)

자료: 섬유패션 챌린지센터 구축사업, 한국섬유소재연구원, 2019.10

〈그림 III -81〉 챌린지센터 구성안



자료: 섬유패션 챌린지센터 구축사업, 한국섬유소재연구원, 2019.10

- 남북교류 협력방안
 - 섬유 패션 산업은 가장 현실적으로 남북협력이 가능하고 선도할 수 있는 산업군
 - ▶ 양주·포천·동두천 섬유 패션 산업 특구는 개성공단으로부터 40km에 위치
 - ▶ 개성공단 폐쇄 전 125개 업체 중 73개(58%)가 섬유의류업종
 - ▶ [양포동]제품(소재)개발, 연구개발, [남북경협]생산(봉제)로 연계
 - DMZ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섬유패션제품의 공동 브랜드화 구축
 - ▶ 섬유 패션 산업은 남북간의 평화적 협력을 브랜드화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임
 - ▶ DMZ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Tour de DMZ, DMZ걷기대회)에 참여하여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 증대

나. 혁신공장(스마트팩토리 smart factory) 시범단지 조성

1) 정의

- 생산공정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에서 섬유패션 봉제제조 전 공정(기획-생산-유통) 혹은, 수요자(유통브랜드, 디자이너브랜드, 개인) 주문을 받아 ‘수요자 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스피드팩토리’¹⁹⁾의 개념까지 포괄

2) 사업선정 근거

- (Speed/QRS) 섬유 패션 산업의 생명인 ‘짧은 리드타임’과 ‘생산비용 제고’와 수요자 맞춤형제품생산(다품종소량생산) 시스템 구축 실현
- (노동집약산업한계) 자동화(반자동화) 생산시스템을 통해 노동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 해결
- (On-shoring) 긴 운송기간 및 비용, 환율변동심화, 무역협정 영향력 축소 등의 이유로 해외 투자기업의 U턴화 ⇒ 스마트공장 추진 시도
- (지역역량) 섬유 패션 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혁신성장을 추진 중인 양주, 포천, 동두천(이하 양포동) 지역 중 양주시는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가 많고, 지역인프라 구축이 되어있음
- (근접성)다운스트림 영역인 봉제분야는 패션 브랜드 및 업체와 소비시장과의 근접성이 중요함. 따라서 양주시의 경우,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지역임
- (시정책연계)양주시가 추진 중인 ‘양주테크노밸리’ 사업 혹은 ‘챌린지센터’ 사업 연계 시 실현 가능성 높음

19) 스피드팩토리의 개념은 ‘섬유 패션 산업 활력제고방안(2019.06)’에서 제안됨

3) 필요성

- (현황) 중대형 벤더업체들의 2000년대 초반부터 후발국에 구축한 생산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국내 봉제업체는 전반적으로 오더 물량이 급감함
- (현황) 섬유 패션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즉, 유통 특히 온라인 시장으로 중심축이 옮겨짐에 따라 새로운 수요자가 생겨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 반응 생산(스피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함
- (현황) 국내뿐 아니라 양포동의 섬유패션 봉제업체들은 영세화·고령화 문제가 지속되면서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짐
-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동화, 디지털화가 가미된 스마트시스템도입을 통해 중대형 벤더들의 국내U턴을 유도하고, 유통(온-오프)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 등의 새로운 오더를 창출해야함
- 노동집약형에서 지식기반형 산업으로의 전환 즉, 섬유패션 봉제의 스피드 제조 시스템 도입을 통해 생산효율 향상
- 다운스트림 산업(봉제) 유치/강화를 통해 미들스트림(니트/피혁/염색/신소재) 산업에 편중/정체된 양포동 지역특화 산업 역량강화
-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지식(기술)집약 산업’으로 혁신적인 전환이 절실함
 -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봉제부분에서의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재(니트/가죽)와 염색부분에서의 적용 견인
 - 서울시 스마트 앵커 프로젝트와의 협업모델 개발 가능 ⇒ 시장확보/효율성 ↑
- 북측의 섬유패션 산업과의 연계 및 공동사업 전개 역시 지식(기술)집약 산업으로의 접근이 필수적임.
 - 북측의 자원(노동, 투자, 기술 등) 활용시 효과 극대화
 - 서울-평양의 중간에 위치한 양포동은 대도시의 시장 확보에 경쟁력우위

4)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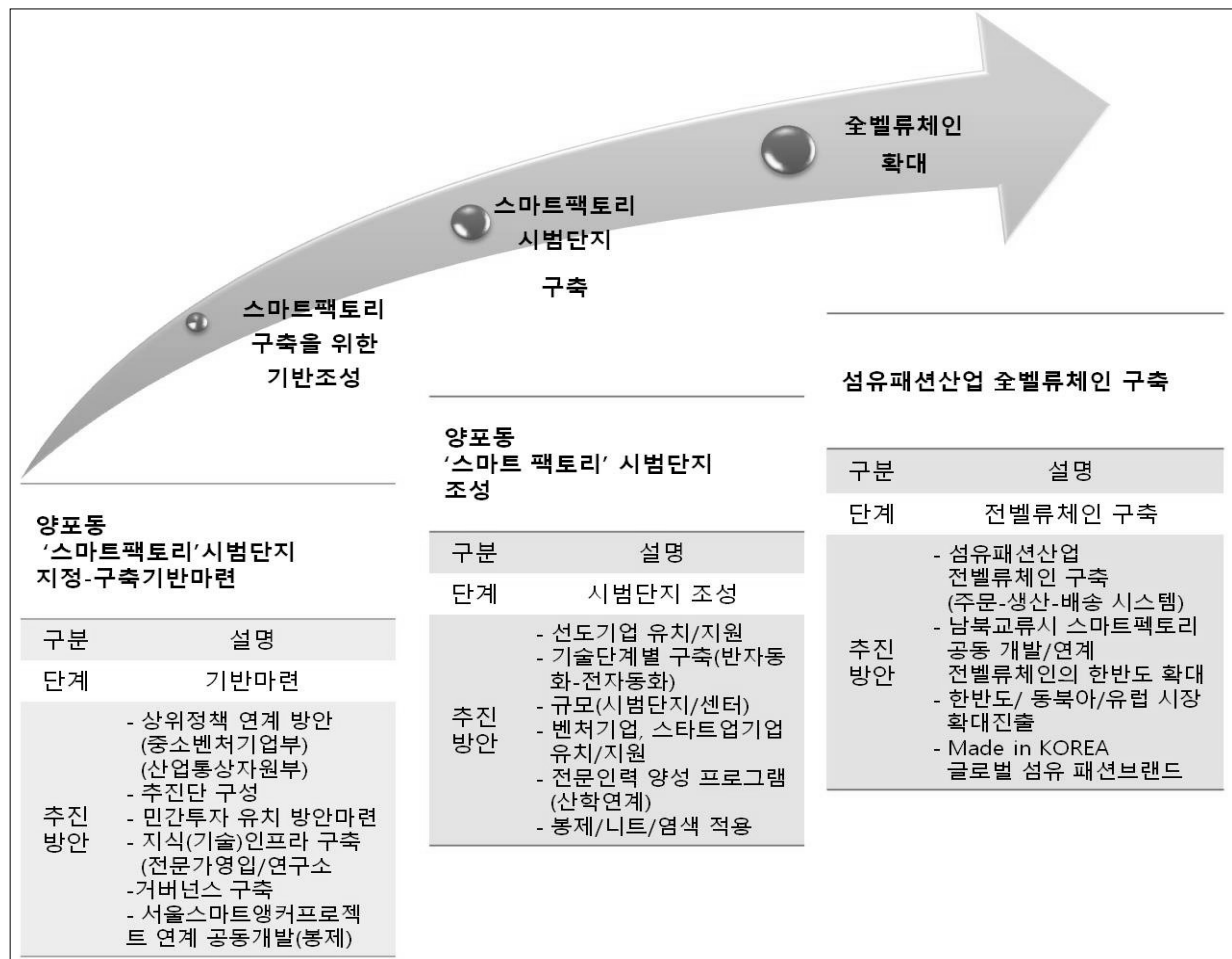
-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반응생산 시스템 구축
- 양포동이 국내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스피드팩토리’ 산업의 선두지역으로 부상

5) 추진 전략

- 상위정책 연계 및 민간 투자 유치 및 지원방안
- 혁신공장(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선도기업 및 벤처기업) 구축 지원
- 혁신공장 전문 산학연계 R&D연구 사업 지원
- 한반도 전밸류체인 구축/확대

6) 추진 내용

〈그림 III-82〉 혁신공장 단계별 추진내용



● (1단계) 양주시內 스마트팩토리 사업선정 및 부지(공간) 마련

- 양주시 추진사업(테크노밸리/챌린지센터) 연계 가능
- 지역법률현안 검토/제안
 - 수도권정비법(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 접경지/특수상황지역 적용 추진/제안
- 정부기관의 지원 정책 및 사업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ICT융합스마트팩토리보급·확산지원사업/클라우드형스마트팩토리보급사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 산업통상자원부(산업혁신운동)
- 현재 스마트팩토리 지원은 대구와 서울을 중심으로 검토 중
- 서울시의 경우 국내 최대/최고의 봉제산업 집적지인 '동대문'을 중심으로 스마트앵커 프로젝트 진행중. 서울시 자체 운영 역량 있음
- 대구의 경우 섬유 및 직조 중심의 산업이 발달된 지역으로 '봉제스마트팩토리'의 경우 봉제산업 주변인프라의 부족과 서울과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실현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또한, 국가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양포동' 지역에 비해 비교열위임
- 스마트 팩토리 조성 및 발전방안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R&D 사업단 구성 및 지원

● (2단계) 선도기업, 스타트업(벤처)기업, 전환기업 유치 및 지원

- 접경지/특수상황지역 적용 및 제언(세금 및 부담금 감면 혜택)
- 봉제(제조)업체 이외에도 스튜디오, 재단센터, 샘플실, 유틸리티, 물류시설, 편의시설 구성 (원스탑 주문제작납품 가능)
- 현실가능한 반자동공정 / 자동공정

● (3단계) 스마트 팩토리 체계구축

- 디자인, 재단, 봉제, 유통의 전공정이 시스템으로 연결된 스마트팩토리 체계구축
- 염색(디지털 염색 설비·솔루션 연구개발) 및 니트/가죽 산업으로 확대적용
- 서울시 스마트 앵커 프로젝트 연계-협업
 - 한국의 섬유 패션 산업 중 다운스트림(봉제) 산업의 중심은 서울시임 따라서 구축 과정에서의 자원(기술, 투자, 정보 등)의 교류뿐 아니라 기획-생산-유통-마케팅 전과정에서의 협업 필요
- 스마트팩토리 성공요건-표준화, 스마트화, 디지털화, 협업화
- 스마트 팩토리 활성화 지원 사업추진
 - 스마트팩토리 관련 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공동연구
 - 대학 및 교육기관에 전문과정 개설(학점연동, 취업연계, 공동연구)
- 향후, 소매유통체인 통합 스피드팩토이 시스템
 - 개인 맞춤 의류 등 다양한 소량 개별 주문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데이터 플랫폼 기반 협업 시스템 구현

- 주문: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 개인별 디자인 추천, AR/VR 주문시스템 등
- 생산: 작업지시서 자동생성, 공정 간 협업관리, 원부자재 관리 등 연계
- 배송: 개인별 물류 배송 수행 및 DB관리

7) 기대 효과

- 생산효율 향상으로 섬유패션 제조기반 확대, 국내 U턴을 통한 국내 봉제 일자리창출 기대
- 양포동이 국내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스피드 팩토리’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부상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이바지
- 남북교류 시대의 선진기술 및 시스템을 통해 북한 자원과 결합함으로써 세계적인 섬유패션 산업으로 발전
- 지역 경제활성화
 - 경기 북부 특화 산업인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을 수요자 맞춤형제품생산(다품종소량생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짧은 리드타임’과 ‘비용 절감 및 생산성확대’를 실현하여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 매출증대, 생산구조 효율화 뿐 아니라 작업환경 현대화·지능화로 청년층 신규 인력유입 및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한국의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활성화 및 발전에 선도적 기여
- 남북교류 협력
 - 지식(기술)집약 산업의 형태로 북측의 섬유 패션 산업과 연계
 - 개성공단 재개시 단기적으로는 북측의 노동자원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활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생산 시스템 적용이 필수불가결함
 - 서울-평양 대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은 패션소비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성장 가능함

다. 신소재(고기능/고감도/친환경) 개발/연구 지원 사업

1) 정의

- 신소재(고부가가치, 고기능,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사업

2) 선정근거

- 포천시에서 미래산업 핵심가치인 ‘지속 가능성’ 사업의 대표로 거론되는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소재 개발·연구 사업 추진 중

- 패션기업들의 재생섬유 사용 비중 확대 방침에 따라 향후 재생섬유 원사단가 및 공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경쟁력 제고할 수 있는 사업
- 접경 지역의 ‘친환경’사업 활성화는 상징적 의미 ⇒ 마케팅차원에서의 큰 자산

3) 필요성

- 양포동의 니트, 피혁 산업은 현재까지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저가/중고가의 제품력과 노동집약적 생산라인 등으로 성장률이 정체되어있는 상황임
- 니트, 피혁, 염색가공의 기술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고기능, 친환경 소재의 개발이 필요함
- (혁신성장 동력)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집약적, 미래지향적,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력 필요
 - 섬유 패션 산업 연계한 ‘재생 PET 플레이크, 칩 생산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 극복
 - 한국을 대표하는 양포동의 니트산업은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 네크래커 상황에 직면함 따라서 지속 가능한 재생섬유 원사 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미래성장산업기반) 지속 가능성은 미래산업의 핵심가치임 따라서 친환경 소재로 대표되는 리사이클 소재 연구·개발 필요
- (남북교류) 과학기술 및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북측과 신소재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섬유패션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음

4) 목적

- 고부가가치의 섬유 및 염색가공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의 발전과 지역발전 추구
- 섬유 패션 산업을 기술집약적, 미래지향적,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
- 과학기술 분야를 중요시하는 북한 섬유 패션 산업과 연계 발전 할 수 있는 산업으로 평화경제 시대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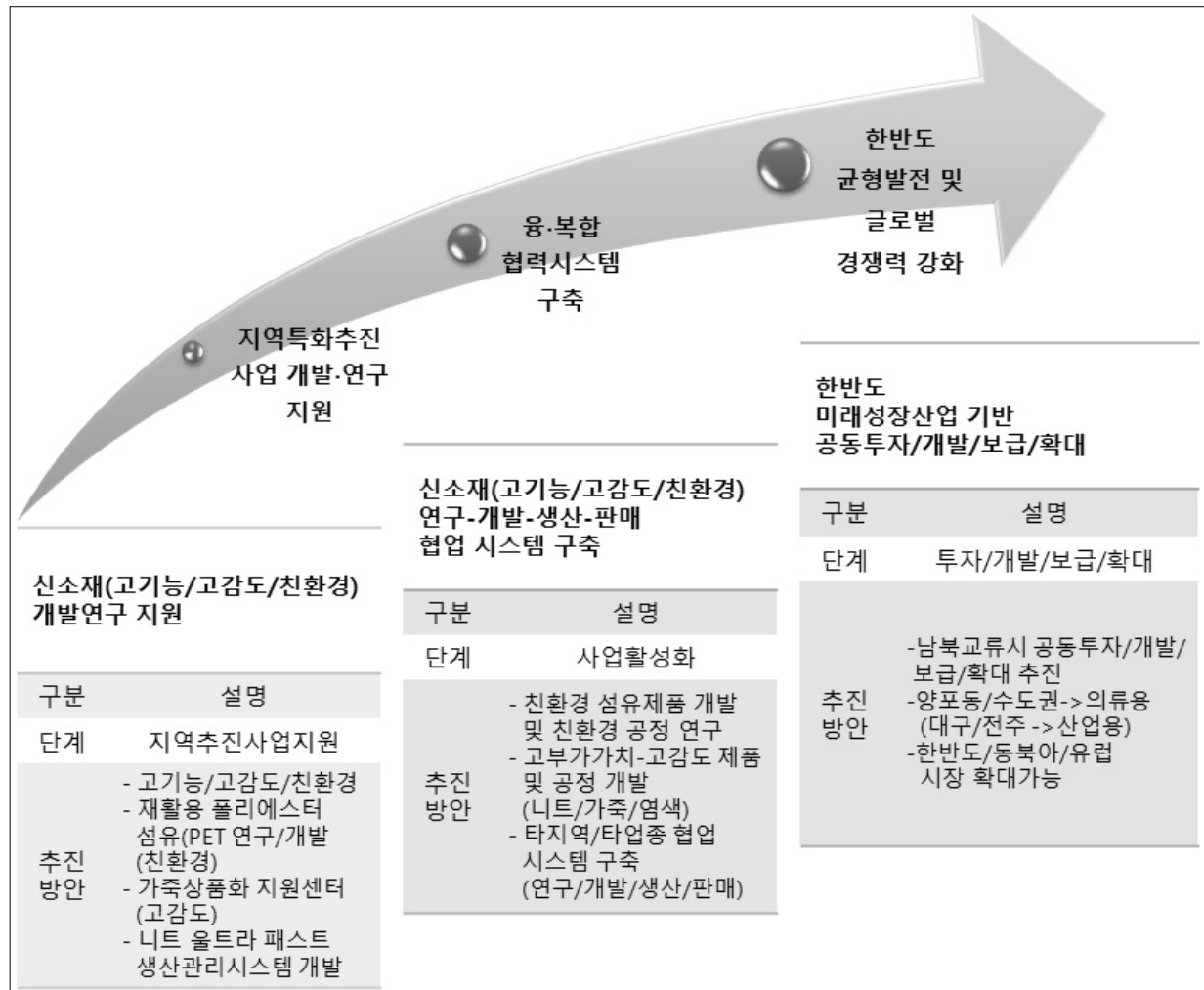
5) 추진 전략

- 현재, 양포동 지역에서 추진 중인 신소재(고기능/고감도/친환경) 연구·개발 사업 중심으로 우선 추진

- 기존의 니트/피혁/염색 산업에서의 고부가가치 상품 및 공정 개발 사업 포함
- 접경 지역의 특성에 맞춘 친환경 제품 및 공정 사업에 집중

6) 추진내용(단계별)

〈그림 Ⅲ-83〉 신소재 개발·연구 지원 사업 단계별 추진내용



● 지역추진사업 지원

- 지자체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소재 개발·연구 추진사업 지원
 - (친환경) 포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연구센터’ 구축 및 운영 ⇒ 재생 PET 플레이크(Flake), 칩(Chip) 생산을 위한 산업기반시설마련
 - (공정자동화) 포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니트산업 글로벌경쟁 시스템 개발’ 사업 지원 ⇒ 환편기계의 세계최초 실 자동연결 장치를 개발사업
 - (고감도) 동두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죽상품화 지원센터’ ⇒ 가죽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연

● 사업 활성화

- 신소재(고기능/고감도/친환경) 제품 및 공정 개발·연구
 - 피혁연구센터, 한국섬유소재연구원 등의 인프라 활용과 섬유패션관련 대학과의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단지의 조성
- 니트, 피혁, 염색가공 산업의 기술혁신 및 생산공정의 혁신을 위한 개발·연구 프로젝트 지원
 - 니트용 친환경 염색기술(ECOROOM) 보급확산 지원
 - 노후산업단지 인프라 경쟁력강화(백연처리 집진기 지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
- 타지역 / 타업종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 재활용 섬유의 생산의 경우, 화학섬유생산지인 대구와의 협업가능
 - 연구/개발/생산/유통 과정에서의 협업/분업 가능

● 한반도 미래성장산업기반

- 남북교류시 남북한 공동 투자/연구/개발/보급 사업 추진
 - 산업용 섬유의 경우 대구 및 전주지역 특화 산업으로 역량확보 ⇒ 북측의 함경도 및 화학섬유공단과의 협업
 - 의류용 섬유의 경우 수도권지역이 비교우위 ⇒ 북측의 개성, 평양, 신의주 지역과의 협업
- 한반도-동북아시아-유럽으로 시장확대

7) 기대 효과

- 고부가가치의 섬유 및 염색가공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의 발전과 지역발전 추구
- 섬유 패션 산업을 기술집약적, 미래지향적,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
- 과학기술 분야를 중요시하는 북한 섬유 패션 산업과 연계 발전 할 수 있는 산업으로 평화경제 시대 대비
- 지역 경제활성화
 - 지역특화 산업이자 한국의 대표 니트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확보
 -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확대를 통해 국내외 환경문제 해결 및 쓰레기 처리비용 감소 및 효과적인 자원순환

- 리사이클 소재 사업을 시작으로 고부가가치의 신소재(고기능, 고감도, 친환경)사업으로 확대 가능
- 남북교류 협력
 - 신소재 공동 개발·연구 사업을 통해 섬유 패션 산업 강국으로 도약
 - 지속 가능한 산업 즉 친환경소재의 연구개발은 접경 지역 특화 산업으로 상징적의미가 있음
⇒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확보

8) 지자체 추천 단위사업

● (포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재활용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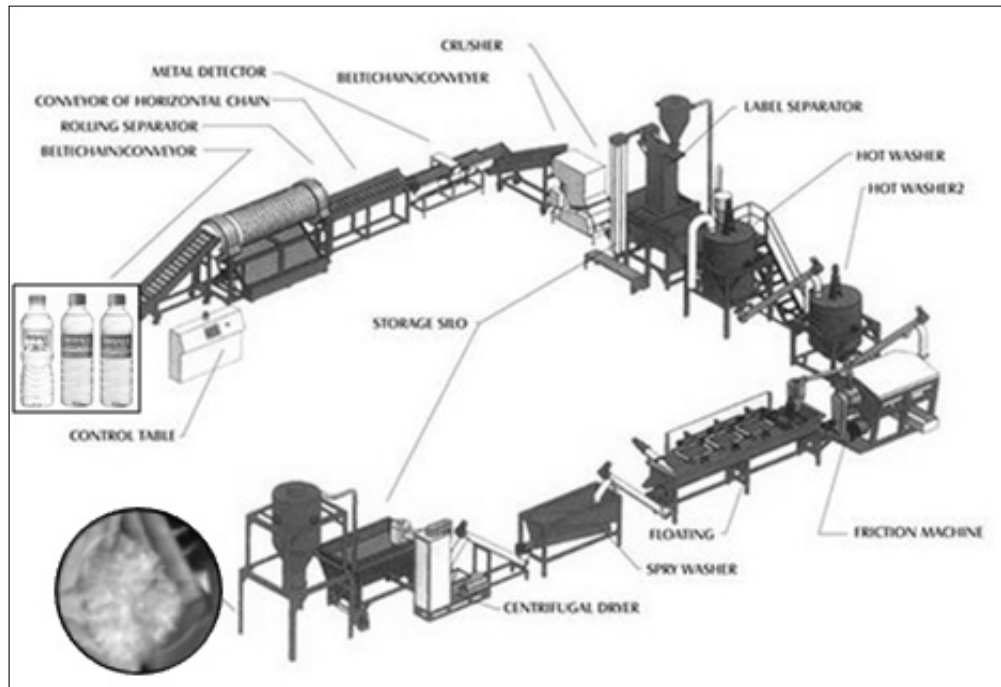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위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장자경제로 95-4, 장자일반산업단지
- 사업기간: 2020. 01. 01 - 2022. 12. 31.
- 사업주체: 경기도/포천시/경기 북부환경공업협동조합
- 사업규모: 리사이클 폴리에스터(rPET) 재활용센터 1개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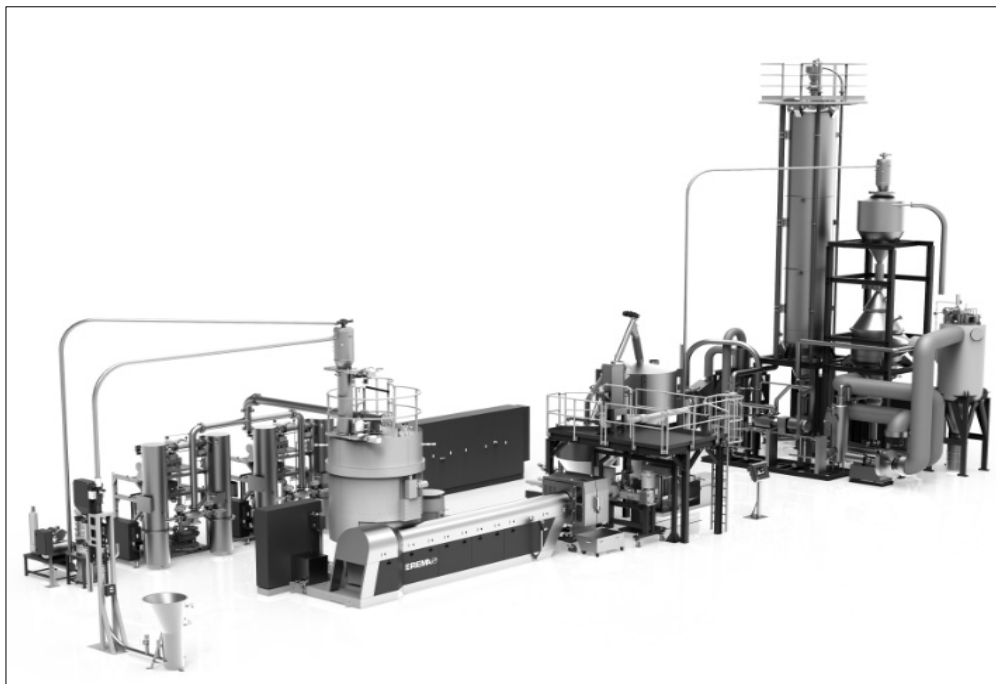
건축	대 지	◦ 6,600㎡(2,000평)
	건 평	◦ 3,960㎡(약 1,200평)
	연면적	◦ 5,610㎡(약 1,700평)
구성	생산관	◦ 1개 층(약 3,960㎡ / 1,200평) - 고순도 재생 PET 플레이크 생산라인 1식 - 고순도 재생 PET 칩 생산라인 1식
	지원관	◦ 1개 층(약 1,650㎡ / 500평) - 사무실, 지원시설 등

- 사업비: 13,000백만 원(국비 70% 9,100백만 원, 지방비 30% 3,900백만 원)
- 사업내용: 국내 최초 리사이클 PET 섬유 제품 대응 재생 PET 플레이크(Flake) 및 칩(Chip) 생산이 가능한 리사이클 PET 재활용센터 구축 및 운영

〈그림 III -84〉 재생 PET 플레이크 생산 시스템



〈그림 III -85〉 재생 PET 칩 생산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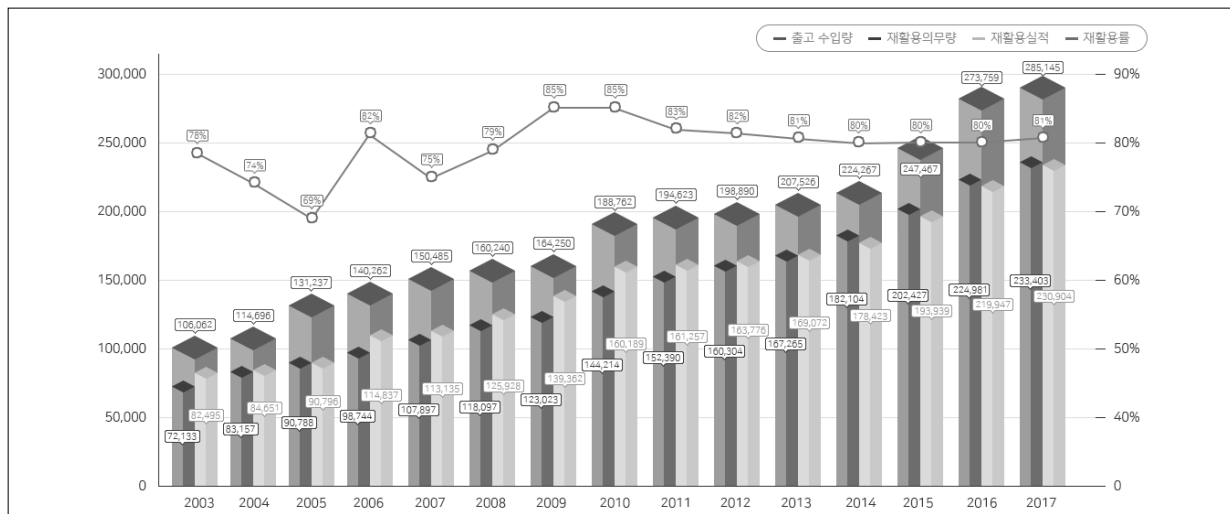
+ 추진 배경/필요성

- 지난 66년 동안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83억 톤으로 이 가운데 63억 톤이 쓰레기로 폐기. 폐기된 쓰레기 중 약 9%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 매립되거나 자연에 버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품의 재생 비율은 20~40%로 타 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국내는 플라스틱의 높은 회수율에도 불구하고 고순도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기술 부족 및 고부가가치 제품화 기술 부족으로 재활용률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PET병의 국내 생산량은 2012년 약 19만 8천 톤에서 2017년 약 28만 5천 톤으로 2012년 이후 연평균 7.6% 증가하였으나, 재활용률은 1.0% 감소한 81%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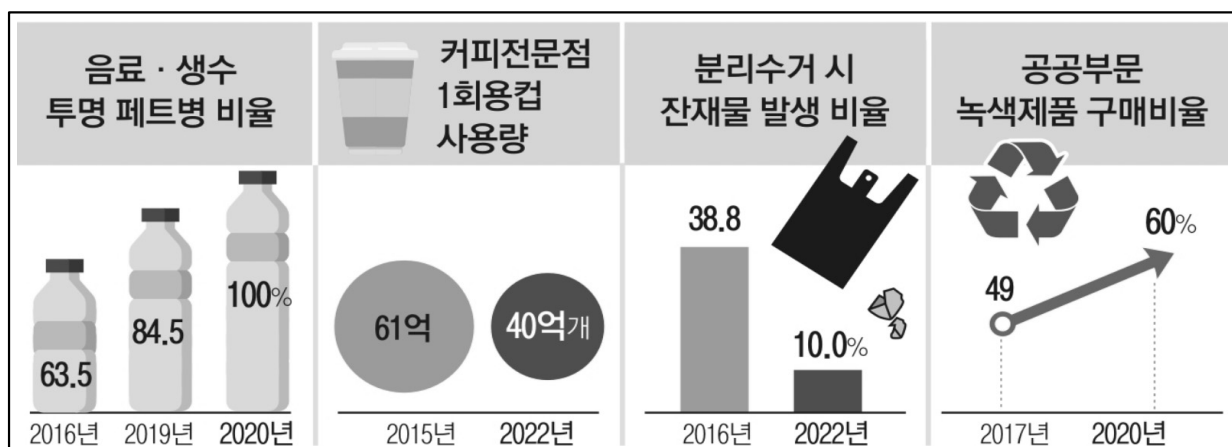
〈그림 III-86〉 PET병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률



자료: 국제섬유신문, 2019.09.06

- 정부는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 및 제품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단계별 개선으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139만 2000t) 줄이고 현재 34%인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이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함

〈그림 III-87〉 재활용쓰레기 감축목표



자료: 환경부

- 특히 국내 생산되는 리사이클 PET 섬유는 국산 재생 PET 칩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해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나이키, 아디다스 등 세계적인 스포츠 의류 기업뿐만 아니라 H&M, GAP 등 캐주얼 브랜드, 그리고 자라를 비롯한 글로벌 SPA 브랜드 모두 신규 오더에서 리사이클 소재의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기대 효과

-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지속 가능한 신시장 개척 등으로 낙후된 접경 지역 지역 활력 및 경쟁력 강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 고순도 재생 PET 플레이크 및 칩 생산을 통한 의류용 섬유 대응 신시장.
- 폐패트병 리사이클링으로 인하여 경쟁력확보가 가능하고 세계 1위 위치 재탈환하여 국가경쟁력 확보
- 리사이클 수지의 고순도화 및 이로 인한 적용분야 확대로 자원순환 속도 증가 기대
- 리사이클 수지의 의류용 섬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 적용으로 인한 재활용률 증가 및 효과적인 자원순환 기대
-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확대를 통해 국내외 핫 이슈인 환경문제해결 및 쓰레기 처리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 신산업과 관련한 고용인력 창출(선별, 수거, 운반, 세척, 원료화)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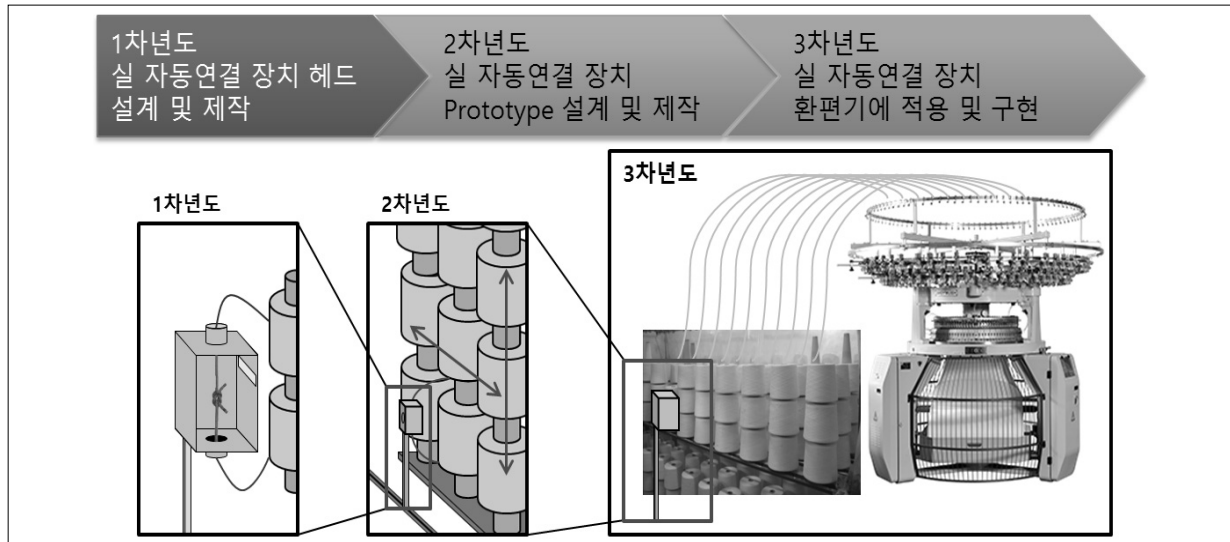
● (포천) 니트산업 글로벌 경쟁시스템 개발 - 환편기 자동 실연결장치 및 회전속도 증대사업

+ 사업개요

- 사업위치: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일원
- 사업대상: 경기 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병균
- 사업기간: 2020.1.~2022.12.
- 사업규모: 환편기 실 자동연결장치 개발, 회전속도 증대 연구개발
- 사업비: 2,000백만 원(3개년간)
- 과업수행: 한국섬유소재연구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컨소시엄
- 단계별 사업 내용
 - 환편기 실(콘) 자동연결 시스템 및 회전속도 제고 기획
 - 환편기 실(콘) 자동연결 시스템 헤드 및 Prototype 개발
 - 환편기 실(콘) 자동연결 시스템이 적용된 실 공급장치 제작 및 구현

- 환편기 실(콘) 자동연결 및 회전속도 제고시스템 보급 및 확산

〈그림 Ⅲ-88〉 환편기 자동 실연결장치 및 회전속도 증대사업



자료: 포천시, 니트산업 글로벌 경쟁시스템 개발, 2019.09

● 배경 / 필요성

- 국내 환편업체는 중국에 이어 전 세계 니트시장의 2위를 차지하는 글로벌한 생산거점임
-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국내 최대의 니트 생산기지 이나 최저인건비상승, 근로시간단축, 외국인고용 문제 등으로 3중고를 겪고 있어 환편기계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계최초 실 자동연결 장치를 개발하고자 함
- 경기 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원이 보유한 환편기는 약 7,000대가 있으나 환편기 가동 중 실이 끊어졌을 때나 실을 교환할 때 수작업으로 실을 연결하고 있어 인건비 비중이 높아 개선하고자 함(전 세계적으로 환편기 자동 실 연결 장치는 개발되지 않음)
- 환편기의 회전속도가 분당 20회로 가동하고 있으나 회전속도를 최대 27회전까지 높여 자동 실 연결과 함께 획기적으로 생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성 대폭증대

+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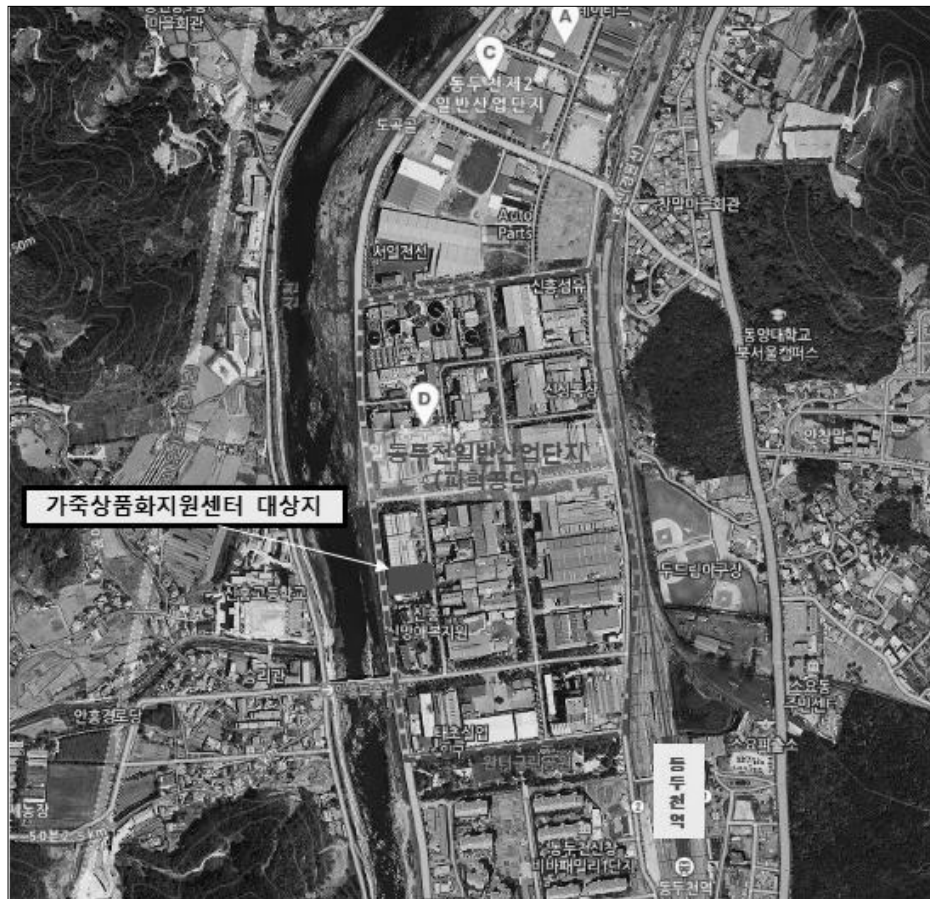
- 실 자동연결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
- 편직 공정 개선으로 불량률 감소 및 품질 경쟁력 향상
- 인력난 및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섬유업체의 어려움 해소에 이바지
- 차후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내 타 지역 및 해외 업체까지 판매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국제특허로 국내개발 장치 시스템 해외수출

● (동두천) 가죽상품화지원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치: 동두천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부지
- 면적: 1,645.7m²(500평)
- 사업비: 25억 원(부지매입 7.5억 원, 건축공사 12억 원, 시험 및 분석장비 5.5억 원)

〈그림 III-89〉 가죽상품화지원센터 부지



자료: 동두천시, 가죽상품화센터건립, 2019

+ 필요성

- 가죽제조업체 상품개발 기반 취약
 - 동두천일반산업단지 내 가죽제조업체들은 기업부설연구소가 1% 미만으로 상품개발 기반 취약
- 상품개발 지원기능 구축 필요
 - 전국 가죽제조업체 상당수가 동두천시에 입지하고 있으나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독자적인 제품개발 및 시험분석 등이 곤란, 공단 내 근거리에 위치한 상품개발 지원시설

건립 필요

- 외국 가죽산업과 기술경쟁력 제고 필요
 - (상품화 지수) 선진국인 이태리에 비해 상품화 지수가 60% 정도임
 - (가공제 분야) 세계 가죽원단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화를 위한 가공용 화학약품분야에서 이태리 등의 선진국에 비해 열악
 - (공정기술) 우피 등 중저가 원피 가공기술은 그간 중국 등 후발경쟁국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었으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기술 경쟁력 열세 우려, 국내 가죽산업은 우피 중심이 대량생산체제로 단일화된 품목 생산에 치중

+ 사업 내용

- 상품화: 공단 내 생산되는 소재를 이용한 상품 기획 및 디자인 기술 지원
- R&D: 3대 산업분야 전략기술 개발
- 시험/분석: 품질 평가 및 KC 인증 관련 인체유해성 평가
- 비R&D: 기업체 애로기술 지원 등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3.7 남북협력 사업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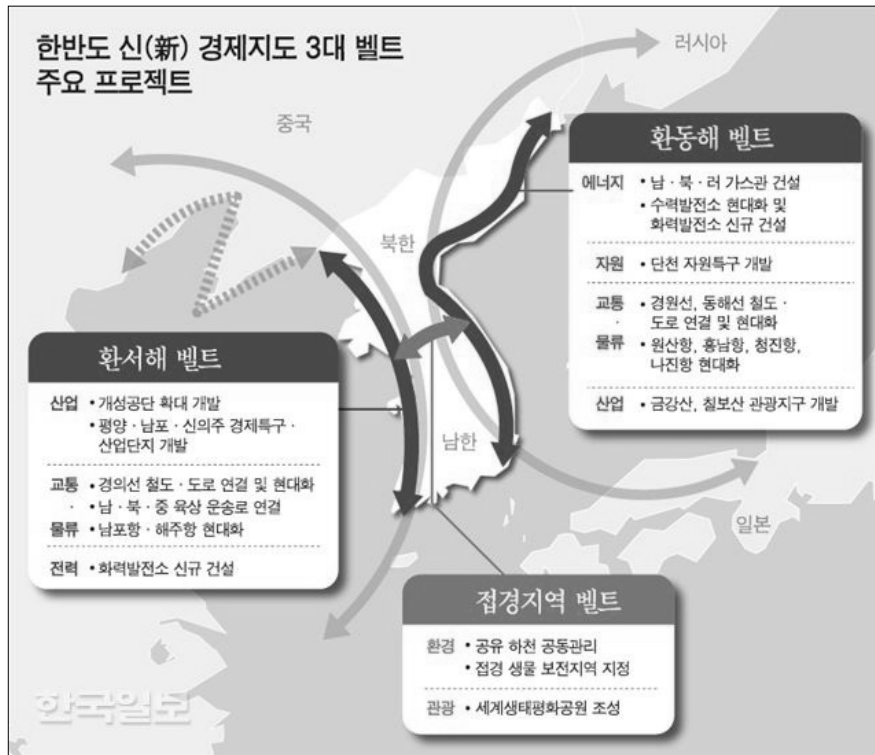
가. 정부/지자체 남북경협 정책

1) 정부의 대북정책방향 - 한반도 신경제 지도 3대 벨트²⁰⁾

- 3대 경제벨트 구축은 환동해 경제권(에너지·자원), 환서해 경제권(산업·물류·교통), 접경 지역 평화 벨트(환경·관광)의 개발을 통해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균형 발전을 도모
- 환서해벨트는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를 건설하고, 중국과 연계하는 산업네트워크를 구축(중국주요 도시와 1일 생활권의 교통망)

20) 국토연구원, 접경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발전구상과 실천방안, 2018.12

〈그림 III-90〉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 벨트 주요 프로젝트



자료: 한국일보, 2018.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되면 가스비 1/4, 일본물류흡수. 2018.05.02.

2) 경기도 경기 북부 정책방향 - 3대3로 정책²¹⁾

- 경기도는 민선 7기 공약으로 경기 북부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로 육성, 세계평화를 위한 교류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경의선 및 경원선 연결사업을 지원하여 서해안 경협벨트(경의선) 및 환경·관광·교통 벨트(경원선)와 DMZ 중심의 생태·평화 공간의 조성을 제안(파주·고양의 출판문화 콘텐츠 클러스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 경기 북부지역에 대해 경의축, 경원축, DMZ동서축 지대와 경의선, 경원선, 환서해 해양로드의 3대(帶)3로(路) 정책 제안
- 경의축: 통일경제특구조성, 남북 경의선연결, 한강하구 남북공동활용 및 명소 조성, 고양·파주 출판 및 문화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GTX-A연결을 통한 경의 중앙선 연장,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조기 준공, 남북교류 협력
- 경원축: 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북 경의선연결, 남북연결 도로 및 고속도로망 확충,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친환경 디자인 융 클러스터 구축, 공연·예술 및 휴양산업 육성, 대북 농업교류 전초기지 조성
- DMZ동서축: DMZ/임진강 평화생명벨트 조성, 임진강수계 공동관리, 강화-간성간 고속도로 (파주-연천)사업 추진지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21) 경기연구원,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조성방향은?, 2018.8

- 경의축과 경원축의 통일경제특구 조성
 - 경의축(개성연계)은 국제기구, 학술교류 및 국제교역, 개성공단 연계사업 및 첨단산업, 관광, 주거기능을 경원축(철원연계)은 국제평화생태 및 관광, 물류, 에너지 및 육종산업, 주거 등의 기능 분담
- 남북관계 시나리오에 따라 통일경제특구 단계별 조성방안 고려
 - 남북관계가 경색 및 경색완화 단계일 경우 경의축은 개성공단 연계 및 보완, 예비역할과 개성공단입주 불가기업 입지를, 경원축은 남한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산업기반 조성
 -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경의축은 개성공단의 확대, 통일경제특구의 확대 및 기능강화, 경원축은 남북 교통로 연결 등 물리적 기반 조성
 - 통일이 가까울 경우 경의축은 개성과 파주 경제특구의 통일대비 완충역할강화, 한반도 메가리전²²⁾ 및 동북아 확장을, 경원축은 러시아 등 확장을 고려한 사업수행
- 경의축 통일경제특구 - 개성공단연계, 동북아시아경제벨트의 거점 형성
 - 경의축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단지(통일경제특구)를 남측인접 지역에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남북경제 협력지대를 조성하여 ‘글로벌 메가리전’을 한반도 중부 일대에 창설
 - 통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과 통일경제특구 간의 통합을 추진, 서해안 일대의 북한 경제특구와 산업벨트를 형성하며, 동시에 동북아시아 경제벨트의 거점 형성

〈그림 Ⅲ-91〉 경의축 및 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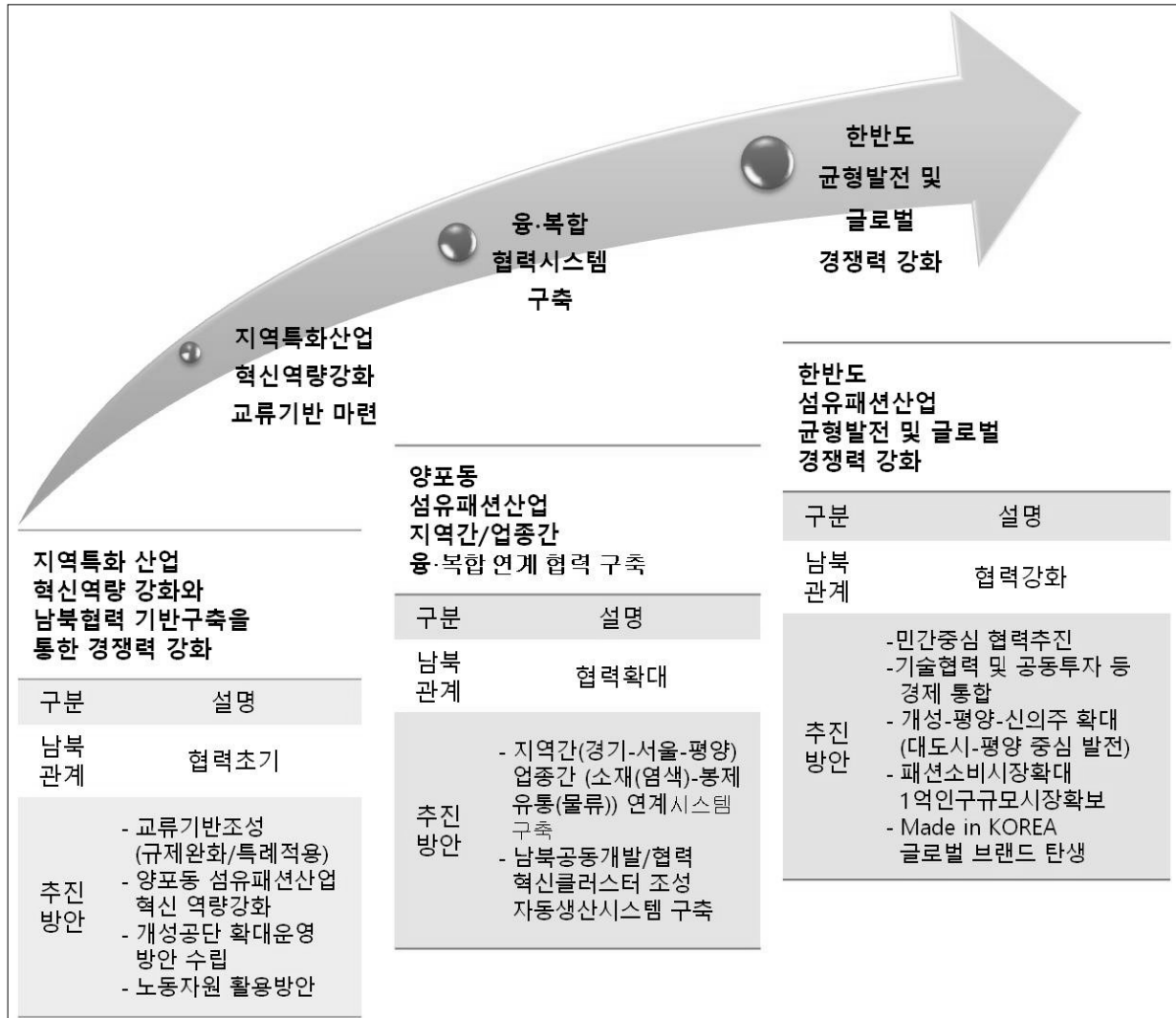
자료: 경기연구원, '통일경제특구, 경기도조성방향은?', 2018.08

22) 글로벌 메가리전(Global Mega-Region)

나.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남북협력 방안

1)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남북협력 모형

〈그림 III-92〉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남북협력 발전 모형



2)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남북협력 단계별 전략

- (남북협력 초기)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혁신역량강화 및 교류 기반 조성
 - (지역특화 산업 혁신역량강화)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은 다운스트림(봉제) 보완과 ‘지식(기술)집약 산업’으로의 전환으로 혁신성장의 동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특화 산업인 미들스트림(소재-니트/피혁, 염색)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 (남북협력기반) 접경 지역의 각종규제 완화, 특례적용 등의 남북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
 - (개성공단) 섬유 패션 산업부문에서 남북경협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시작됨. 따라서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벨트’ 정책 및 경기도 ‘3대3로’ 정책을 기반으로 개성공단의 비전과 개발/운영 전략을 수립해야함. 특히 폐쇄 이전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전략 수립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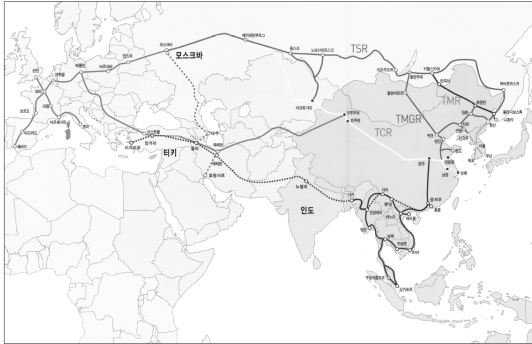
- 개성공단 개발방향은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원기관, 연구소, 주택, 병원, 교육 시설을 포함하는 공업단지
- (북한노동자원 활용) 개성공단의 인적·물적자원의 활용과 양포동의 기술·시스템의 협업 및 분업
 - 개성(봉제)-양포동(섬유) 협업, 개성(봉제)-양포동(봉제) 분업(제품별, 공정별)
 -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북한노동자의 남한일부지역(양포동)으로 이동 등의 의견이 트윈 시티의 형태로도 제시되고 있으나, 제도/법률적 검토와 함께 북한의 수용이 전제되어야 함

● (남북협력 확대) 지역 간, 업종 간 연계 및 융·복합 협력시스템 구축

- (지역특화 산업 융·복합 협력시스템)
 - 지역 간(서울-양포동-개성), 업종간(소재-염색가공-봉제-유통(물류))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성극대화 및 경쟁력 확보
- (개성공단 단계적 개발방향)
 - 단기적으로는 양포동 섬유패션기업들이 북측의 노동자원을 활용하는 협력체제(양포동의 섬유/염색산업 ↔ 개성공단의 봉제산업, 양포동의 고감도·고기술제품생산 및 기획 ↔ 개성공단의 단순임가공)구축
 -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집약산업으로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즉 노동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동생산 시스템(스마트 팩토리)의 도입과 혁신클러스터 조성 필요. 따라서 남북공동 개발 및 협력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음

국내 섬유기업의 對유럽 수출실적

구 분	수출액(US천\$)	중량(Ton)
2017	1,879,001	586,548
2016	1,734,588	540,969



〈남북한 철도연결 화물통과시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²³⁾
 - 현재 한국의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유럽향(向) 수출화물은 남
 북한 철도망 연결로 인해 운송시간은 2일 단축, 운임은 컨테
 이너당 미화 800~1,100달러 절감 가능
 * (기존운송방식) 수도권→부산항(육상운송): 600~700달러,
 부산항→러시아 항만(해상운송): 1,000~1,200달러(총 운
 송일수: 3일)
 * (남북철도망이용방식) 경원선을 이용 수도권에서 TSR 출발
 지까지 운송될 경우 800~1,100달러(총 운송일수: 1일)

〈그림〉 유라시아 철도망

※ 남북한 철도 연결 화물통과시 국내 섬유기업의 기대 효과

a. 물류비 절감 효과: 약 630억

(\$800 절감시) 53,523 C/T X \$ 800 = \$42,658,400(환산시 458억 원 절감/年)

(\$1,100 절감시) 53,523C/T X \$ 1,100 = \$58,655,300(환산시 630억 원 절감/年)

* 가정: 1) C/T(컨테이너)는 20ft의 사용을 전제하며, C/T당 11Ton²⁴⁾ 적재 가능

2) 환율은 \$1당 1,075원으로 환산함(2018. 5. 28 기준)

b. 운송시간 단축: 해상운송 이용 시보다 운송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 가능

● (남북협력 강화) 한반도 섬유 패션 산업의 균형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남북협력 양적확대) 섬유 패션 산업의 경우 양포동(수도권)-개성공단-의 시범사업으로 시작, 환서해벨트의 인프라 구축에 따라 북한의 평양, 신의주로 확대할 수 있음. 남한의 경우, 지역 별특화 산업의 연동가능
- (남북협력 질적확대) 지식(기술)기반산업으로의 발전 방향에 따라 혁신클러스터, 스마트공장 뿐 아니라 신소재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성장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23) 출처: KDI, “남북·유라시아 철도사업의 의의 및 협력과제”, KDI 북한 경제리뷰 2014년 2월호,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 교통·물류 통합플랫폼 추진 전략”, 한국교통연구원 이슈페이퍼 2015-11

24) Spec.상으로는 최대 24Ton까지 적재 가능하나, 섬유제품의 부피 등의 이유로 최대 11Ton까지 적재 가능

3)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남북교류 비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섬유패션제품으로 한반도 통합 ‘글로벌 브랜드’탄생 가능할 뿐아니라 한반도-동북아시아-유라시아 지역으로 섬유패션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생활기반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음
- 남북한의 철도 연결을 통해 파주, 개성공단 등을 경유한 대 유럽 항 육로 수출시 국내 섬유기업들은 물류비 약 630억, 운송시간은 해상운송보다 절반이상 단축 가능

3.8 결론 및 정책제언

● (국가 균형 발전)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 경제 및 국가 균형 발전

- 한국의 대표 니트/염색 생산지인 양포동 지역의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혁신성장 동력으로 ‘봉제 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조성, 미래지향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소재(고기능/고감도/친환경)개발/연구지원사업’을 제시함
 -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기존 양포동지역을 중심으로 ‘섬유가죽패션특구 지정사업’을 예 산사업으로 전환하고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임. 특히, 니트, 피혁, 염색, 봉제 산업별 미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을 바탕으로 작업·노동 환경개선 및 지원인프라 구축에 있어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사업임
 - (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노동력에만 의존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인력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또한, 패션소비자의 소비행동의 변화(개인화, 개인화 등)에 따른 ‘빠른 리드타임’, ‘다품종소량생산’을 실현해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봉제 부문의 스마트팩토리는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양포동 지역의 ‘다운스트림’ 강화의 측면에서, 그리고 선도기업의 투자 및 유치의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이를 기반으로 니트 및 염색 부분에도 확대·발전할 수 있음
 - 스마트팩토리는 봉제산업이 집중·발전되어 있는 서울시와의 연계하여 협업 및 분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발·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개성공단 및 북한 측과의 공동개발 등의 연계·협력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임
 -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미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접경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소재의 연구 및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청정지역의

이미지로 상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동시에 접경 지역의 낙후 이미지를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 이미지로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섬유 패션 산업의 자연훼손산업이라는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자연친화·보호의 이미지로 전환시킬 수 있음

- 니트, 피혁, 염색의 특화부문에서도 ‘고기능’, ‘고감도’의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생산에 꾸준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

● 섬유 패션 산업은 노동집약산업 → 지식(기술)기반산업으로 전환시점에 직면, 따라서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 지원 및 확충 방안이 필요함. 단, 하드웨어적 지원 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섬유패션 제조업은 의류브랜드 및 벤더를 통한 ‘하청시스템’ 중심으로 발전되어 대부분의 업체들이 기획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기획력(디자인·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및 사업 혹은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이 제안되고 있으나 현실성 및 효율성 떨어짐(기획력은 지적재산권의 차원, 영세한 업체들의 기획력 보안을 위한 투자여력,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업체와 학교의 간극이 큼, 섬유 패션 산업의 짧은 리드타임 등)

- 기획력을 갖춘 ‘스몰 패션브랜드’, ‘컨버터(소재개발)’, ‘프로모션(니트, 피혁)’업체들의 창업 지원(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기획력을 보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체 기획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 섬유패션 교육기관의 현실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개발은 민관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안정된 지원 및 노력이 필요함. 양포동 주변 교육기관은 ‘니트, 피혁, 염색’ 부분의 생산관리, 기획(테크니컬 디자인, 패션마케팅, 정보조사 및 분석, 컨버터, 프로모션)등 지역특화 산업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함

● (남북협력방안) 기술집약산업으로서의 한반도 섬유 패션 산업 상생발전

- 단기적으로는 북측의 노동자원 활용을 통해 양포동 섬유 패션 산업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음(북측의 노동자원 ↔ 양포동 경제자원)

- 개성공단(섬유 패션 산업) 재개시 과거 개성공단운영의 문제점(노동력공급/임금직불 및 노동력관리/물류/통행·통관/기업금융지원/민관의 역할분담/대기업·외국기업 유치 등) 해결 필요함

- 또한, 기술집약산업(혁신클러스터/스마트팩토리/신소재개발 공동연구 및 개발)으로 접근이 필요함

-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접경 지역’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기반으로 연구/분석되었음.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경우 포괄적인 협업모델에 대한 확장연구가 필요함
 - 한국 전체의 섬유 패션 산업과 양포동의 지역특화 산업의 협업 및 연계방향에 관한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연구 필요
 - 각 산업별 제안산업·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진행단계에 따른)에 대한 후속연구 필요
- (북한수용성의 한계) 북한과의 현실적인 교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북측의 섬유 패션 산업에 대한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음. 특히 섬유 패션 산업의 경우 생활 산업으로 북한 패션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기반이 되어야 함

4.1 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북한의 관광 산업 활성화 정책 현실화 가능성

- 최근 북한은 경제특구·개발구를 두 가지 형태로 추진 구상
- 2013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지방급 경제개발구가 중국의 다층적 경제특구 전략을 북한 상황에 맞게 적용하거나 2014년 원산-금강산 국제 관광지대, 2015년 무봉 국제관광특구 등 관광 산업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진행
- 북한은 각 지역 특성을 살린 경제특구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그 대표 분야가 바로 관광 산업으로 판단됨
-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은 경제특구 등을 대부분 해안 지역에 지정하고 향후 내륙으로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통일 대비 관점에서도 접경 지역 산업 개발은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시·도 가능한 관광분야의 특화 산업을 도출하고자 함

● 관광 산업 분야의 접경 지역 비교 우위 요소 정립

- 접경 지역은 종합 집계되는 대부분의 경제 지표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는 항목이 많지 않음
- 이에 각 지역별 종합 개발이나 예산 배정에서 겪게 되는 약점들을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가능성이나 지역 균형 발전,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보유한 잠재력 등 상대적으로 정성적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접경 지역의 현재 상황은 특히 관광 분야를 전제로 했을 때 실질적인 비교 우위 요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
- 관광 산업 개발 초기에는 우선 기존에 보유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방법에서 출발하여 숙박시설 등 기반 시설 개발과 레저, 체험 프로그램, 특산물과 기념품 판매, 음식 판매 등으로 확대되며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문 인력발굴과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연관 산업으로 확대가 가능함
- 접경 지역은 DMZ을 포함하여 그동안 자연 그대로 보존된 관광 생태자원이 풍부하며 성장 잠재력 역시 향후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 국가까지 포함한 광역 경제권 구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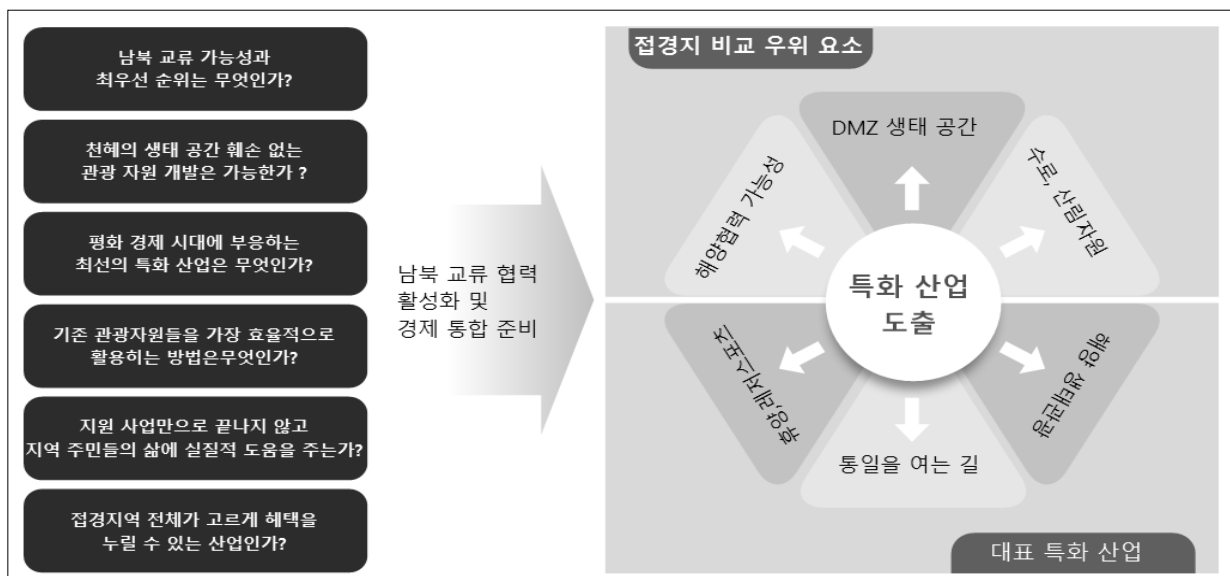
도 가장 적합한 곳이라 평가됨

나. 연구 방법

● 특화 산업 도출 모형

- 접경 지역 15개 시·군의 대표 전략 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 균형 발전 및 남북 교류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특화 산업 도출 접근
- 거시·미시적 관점의 균형, 접경 지역 간 균형, 국가 차원의 균형 및 남북 교류의 효율적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함
- 기존 관광 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태 공간의 장점 반영,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 기여 등의 원칙을 반영한 특화 산업 도출 모형 제시

〈그림 III-93〉 관광 산업 분야 특화 산업 도출 모형



● 연구 방법

- 미래관광 산업 분야의 접경 지역 특화 산업 도출을 위해서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거시적 환경 분석) STEEP+ 모델을 활용하였는데 이 모델은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책 분야의 환경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해당 산업 및 사업의 실현 가능성, 지속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며 실제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 III -45〉 미래관광 산업 분야 STEEP+ 분석 내용

STEEP PLUS 항목	분석내용	평가
사회(Society)	- 여가 시간 증가로 인한 최고의 성장 잠재력 보유 - 국제 사회의 관심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세계 평화의 상징)	○
기술(Technology)	- AR, VR 등 미래 기술과 접목된 융복합 확장성 확보 가능 - 산업 관광, 해양 관광 등의 분야에 첨단 산업 도입 여건 마련	○
경제(Economy)	- 굴뚝없는 공장으로 최고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전략산업 - 국제수지 개선, 고용 증진 등에 직접 기여하는 경제적 파급력	○
환경(Environment)	- DMZ이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 보유 - 접경지 여건으로 인한 낙후된 관광산업 인프라 는 극복 필요	△
정치/정책(Policy)	- 남북간의 정치적 여건 변화에 앞서 가장 먼저 접근 가능한 교류 협력 분야 - 정치, 정책적으로 외자 유치 및 개발 가능성 가장 높은 분야	○
실현가능성(Feasibility)	- 금강산 관광 등의 사례로 볼 때 실현가능성 높으나 대북 제재 완화 필수 - 생태 보존의 원칙 을 유지하면서 가장 효과적 개발 계획 수립 필요	△
지속성(Sustainability)	- 관광 서비스업의 속성상 초기 인프라 확보만 이루어지면 꾸준한 수요 유입 - 세계 평화 및 생태 보존의 보고 유지가 관건	○
파급효과(Spread Effect)	- 남북 교류의 상징성 및 파급효과 가 가장 기대되는 산업 분야 -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 이 기대되는 산업적 파급력 기대	○

- 관광 산업 분야는 STEEP+ 모델을 통한 분석 결과 최근의 사회 여건과 첨단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남북 간의 교류 가능성 등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었으며 연관 산업으로의 확장성 역시 좋은 평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다만 생태, 해양 관광 분야 모두 기존의 대형 인프라 구축 위주의 개발 사업 보다는 DMZ을 비롯한 생태자원 기반의 환경 친화적 개발과 남북 관계의 실질적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을 파악할 수 있었음

- **(미시적 환경 분석)** 연구진에서 자체 개발한 7대 지역 혁신 역량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거시적 환경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2대 특화 산업(생태관광 산업, 해양·해상 관광 산업), 4대 특화 사업(DMZ 생태·평화 도보 여행길 조성 사업,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 도서 및 내수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실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DMZ 생태·평화 도보 여행길 조성 사업

	분야	분석내용	평가		
			상	중	하
지역 혁신 역량	정책 역량	新 평화 경제 체제 기여 가능성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력	○		
		공정 경쟁 및 지역 균형 발전 실현	○		
	산업 역량	혁신 성장 동력 구현 가능성		○	
		분야별 산업 기반 구축 정도		○	
	지역 역량	지역 특화 요소 경쟁력	○		
		지역 인적 자원 활용 가능성		○	

- DMZ 생태·평화 도보 여행길 조성사업은 남북 교류 확대 분위기에 맞춰 실시되고 있는 접경 지역 인근 도보 여행길 조성 사업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관심을 끌 수 있는 대표사업으로 판단됨. 다만 그동안의 관광형태와는 달리 지역 산업 기반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사업 설계가 필수 요소임

2)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분야	분석내용	평가		
			상	중	하
지역 혁신 역량	정책 역량	新 평화 경제 체제 기여 가능성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력	○		
		공정 경쟁 및 지역 균형 발전 실현	○		
	산업 역량	혁신 성장 동력 구현 가능성	○		
		분야별 산업 기반 구축 정도		○	
	지역 역량	지역 특화 요소 경쟁력	○		
		지역 인적 자원 활용 가능성		○	

-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남북 교류의 확대 이전에 우선 실시 가능한 사업으로 최근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웰니스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북한강

수계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의 높은 관심과 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

3)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

	분야	분석내용	평가		
			상	중	하
지역 혁신 역량	정책 역량	新 평화 경제 체제 기여 가능성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력		○	
		공정 경쟁 및 지역 균형 발전 실현		○	
	산업 역량	혁신 성장 동력 구현 가능성	○		
		분야별 산업 기반 구축 정도	○		
	지역 역량	지역 특화 요소 경쟁력	○		
		지역 인적 자원 활용 가능성		○	

-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 남쪽 방면의 동해안 권역 전체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미 국가 산업 발전 종합 계획 차원에서 기획·진행되고 있는 사업임. 여기에 접경 지역이 가지는 특화 요소를 가미하여 세부 발전 전략을 구상하게 될 경우 미래 전략 산업 분야의 하나인 해양 관광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4) 도서 및 내수면 활성화 사업

	분야	분석내용	평가		
			상	중	하
지역 혁신 역량	정책 역량	新 평화 경제 체제 기여 가능성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력	○		
		공정 경쟁 및 지역 균형 발전 실현	○		
	산업 역량	혁신 성장 동력 구현 가능성	○		
		분야별 산업 기반 구축 정도		○	
	지역 역량	지역 특화 요소 경쟁력	○		
		지역 인적 자원 활용 가능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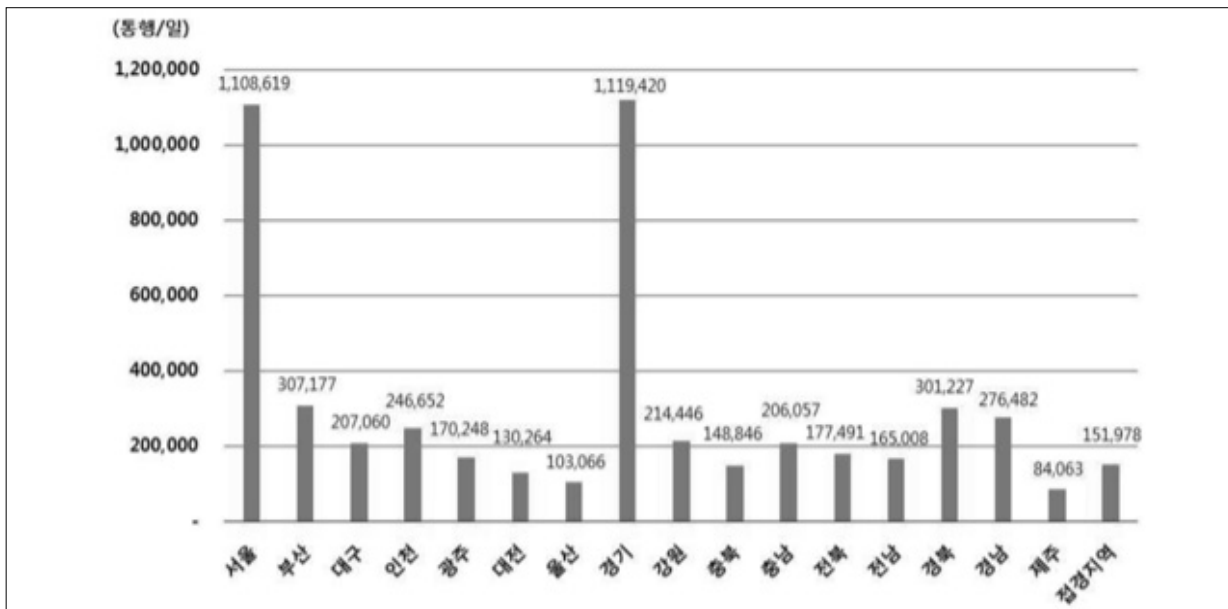
- 도서 및 내수면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활 S.O.C 개선 사업(어촌 뉴딜 300 사업)과 내수면 마리나 육성 사업 등을 종합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제안하는 사업으로 해양·해상 관광 산업 분야의 미시적 영역을 개척하는 사업으로 충분한 육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남북 교류 협력 차원에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현실화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는 서해안 인접 지역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섬 관광 활성화는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상호 협력 차원의 사업으로 향후 그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함

4.2 접경 지역 관광 산업 현황 분석

가. 접경 지역 관광 산업 통계

- 16개 시·도 대비 접경 지역 1일 여객통행량

〈그림 Ⅲ-94〉 시·도 대비 접경 지역 1일 여객통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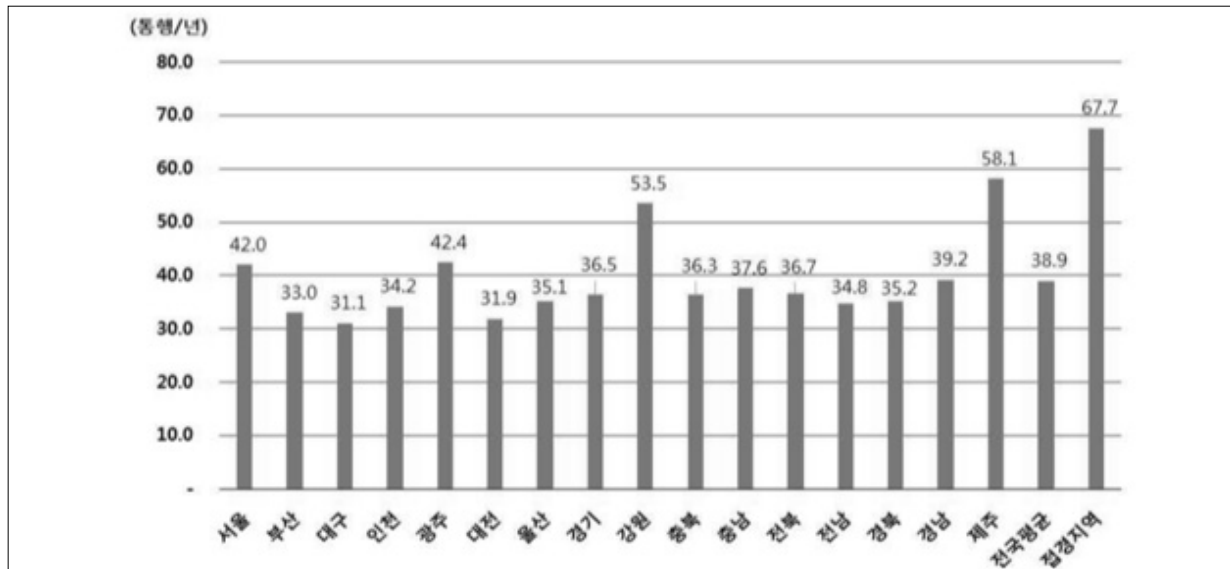


자료: 접경 지역의 특성별 유형 구분과 경기도와 강원도의 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김홍배, 박종필, 이미주)

- 가장 많은 여객 통행량을 보이는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대비하여 접경 지역은 약 13% 정도 수준임
- 전체적인 절대량은 수도권 두 지역에 비해 많지 않으나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지역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16개 시·도 대비 접경 지역 인구 1인당 여객통행량

〈그림 III-95〉 시·도 대비 접경 지역 인구 1인당 여객 통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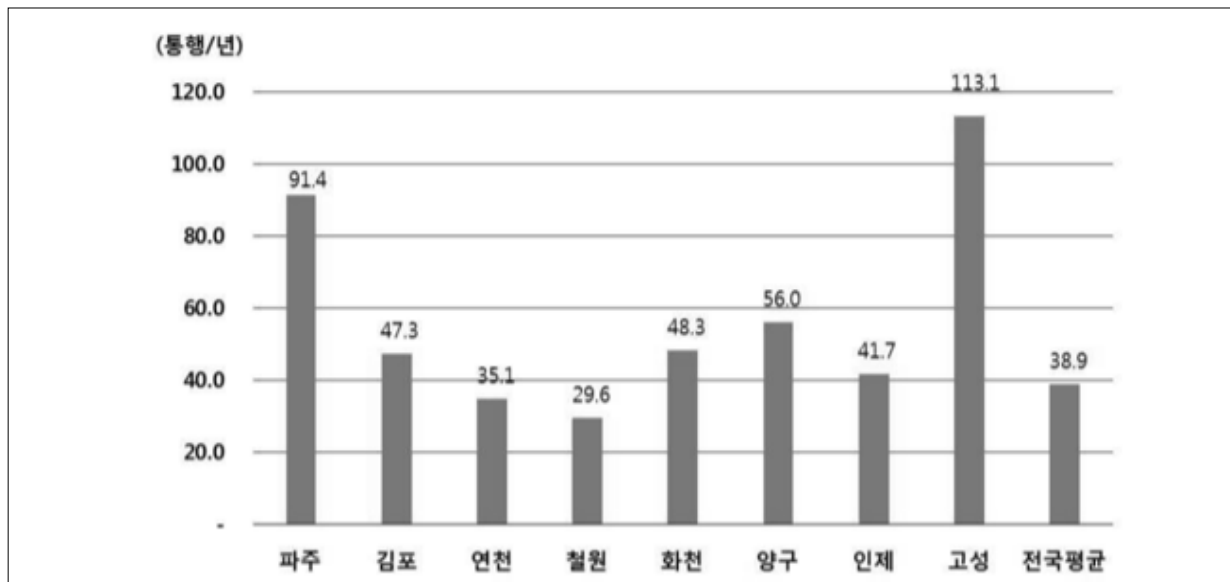


자료: 접경 지역의 특성별 유형 구분과 경기도와 강원도의 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김홍배, 박종필, 이미주)

- 인구 1인당 통행량은 접경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연간 67건이 넘고 있음
- 동일한 수치가 강원, 제주 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는 군 장병, 관광객 등의 이동이 활발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음

● 접경 지역별 인구 1인당 여객 통행량

〈그림 III-96〉 접경 지역별 인구 1인당 여객 통행량



자료: 접경 지역의 특성별 유형 구분과 경기도와 강원도의 협력을 통한 경제활성화 전략(김홍배, 박종필, 이미주)

- 접경 지역의 여객 통행을 토대로 관광수요를 살펴본 결과, 접경 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는 전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접경 지역들이 관광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됨

● 접경 지역 관광시장 규모 및 관광수지

- 2015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메르스 영향으로 전년대비 6.8% 감소한 약 1,323만 명을 기록
- 2015년 내국인 국내여행 참가자 수는 전년대비 0.7% 증가한 약 3,831만 명이었으며, 당일여행은 1.5%, 숙박여행은 0.4% 감소
- 관광수입은 2010년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11년에 123억 달러, 2012년에는 134억 달러, 2013년에는 145억 달러를 기록
- 2014년에는 전년대비 21.9% 증가한 17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관광수입은 전년대비 14.3% 감소한 152억 달러로 나타남
- 2015년 관광 지출은 전년대비 9.3% 증가한 213억 달러로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하였고 방한 외래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함

〈표 Ⅲ -46〉 연도별 대한민국 관광수지

(단위: 천 달러, %)

연도	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2010	10,290,500	5.4	14,277,700	29.4	-3,987,200
2011	12,347,200	20.0	15,530,800	8.8	-3,183,600
2012	13,356,700	8.2	16,494,500	6.2	-3,137,800
2013	14,524,800	8.7	17,340,700	5.1	-2,815,900
2014	17,711,800	21.9	19,469,900	12.3	-1,758,100
2015(잠정)	15,176,700	-14.3	21,271,700	9.3	-6,095,000

자료: 문화관광부(2015), 관광동향에 관한 보고서

- 접경 지역 시, 군의 연도별 관광객 수는 전체적으로 DMZ 대표 관광 시설이 밀집된 파주, 고성, 강화 지역에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외 지역에 유입되는 관광객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전국 대비 접경 지역 관광객 방문 비율은 2015년 기준 3%로 타 지역에 비해 낮으며, 지역별로 보면 고양시 45%, 파주시 33%, 인제 4% 순이며 경기도에 집중해 있음

〈표 III-47〉 접경 지역 시·군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수

(단위: 명)

구분		측정개소 수	무료관광지	유료관광지	총계(내/외국인)
총계		124	37	87	28,821,159
인천	강화군	1	1	-	985,689
경기	김포시	14	1	13	1,025,939
	파주시	25	-	25	8,068,375
	고양시	22	2	20	11,667,627
	연천군	13	8	5	911,219
	철원군	7	1	6	2,018,386
강원	화천군	9	9	-	1,080,749
	양구군	11	7	4	406,229
	인제군	16	8	8	1,258,548
	고성군	6	-	6	1,398,398

주: 2015년 기준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 관광지별 관광객 현황

- 접경 지역 내 관광지로 지정된 15개소 관광객은 2012년에 전적자원, 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각각 3.2%, 25.4%, 38.6% 감소하였으나, 래프팅, 미술관, 철새관망타워 등에 대한 관광수요는 5.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표 III-48〉 접경 지역 관광지별 관광객 수

(단위: 명)

관광지명			2011 (전적자원은 2010년 기준)			2012 (전적자원은 2011년 기준)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전적	강화	강화도평화전망대	186,250	186,730	520	213,632	209,432	4,200
	김포	애기봉 전망대	114,311	113,891	420	119,213	118,012	1,201
	파주	도라산전망대, 제3땅굴 등	535,858	365,023	170,835	572,012	339,506	232,506
	연천	열쇠전망대	15,583	15,427	156	25,262	24,771	491
		상승 OP	10,123	9,923	200	10,682	10,492	190
		태풍전망대	38,556	38,049	507	35,892	35,489	403
	철원	노동당사, 의삼각적시관	-	-	-	-	-	-
		백마고지전적지	120,652	120,345	307	115,056	114,518	538
		제2땅굴, 평화전망대	155,235	154,290	945	175,585	174,174	1,411

관광지명			2011 (전적자원은 2010년 기준)			2012 (전적자원은 2011년 기준)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화천	칠성전망대	2,574	2,546	28	4,875	3,127	1,748
	양구	을지전망대	82,666	81,013	1,653	84,230	81,000	3,230
		제4땅굴	95,446	95,414	32	71,567	71,417	150
	고성	통일전망대	574,725	571,918	2,807	526,674	522,873	3,801
	계		1,931,979	1,754,569	178,410	1,954,680	1,704,811	249,869
생태	강화	마니산	364,104	364,104	-	223,090	223,090	-
	연천	한탄강관광지	317,853	308,034	9,819	208,428	208,428	-
		재인폭포	30,226	30,226	-	5,084	5,084	-
	철원	고석정	354,024	354,024	-	323,677	323,677	-
	화천	광덕계곡	197,874	197,874	-	166,007	166,007	-
		파로호	54,165	54,165	-	47,155	47,155	-
	양구	두타연	25,553	23,511	2,042	28,777	27,353	1,424
	계		1,343,799	1,331,938	11,861	1,002,218	1,000,794	1,424
역사문화	김포	장릉	117,886	117,731	155	98,587	98,443	144
	파주	황포돛배	20,588	20,537	51	16,754	16,746	8
	인제	만해마을	30,365	30,032	333	23,912	23,867	45
		백담사	556,569	556,569	-	306,347	306,347	-
	계		725,408	724,869	539	445,600	445,403	197
기타	철원	철원한탄강 래프팅	482,700	451,440	31,260	485,250	466,500	18,750
	양구	박수근미술관	30,043	28,155	1,888	29,624	27,921	1,703
	인제	내린천 계곡 래프팅	161,155	161,155	-	212,508	210,462	2,046
	고성	진부령미술관	18,888	18,888	-	13,976	13,976	-
		송지호철새 관망타워	34,222	34,222	-	24,784	24,784	-
	계		727,008	693,860	33,148	766,142	743,643	22,499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나. 접경 지역 관광 산업 자원 현황

● 관광 입지 및 교통 여건

+ 현행 여건

- 현재는 단절된 고립 공간이나 남북 교류 확대 및 통일 시대를 전제로 볼 때 동북아 간선 철도망 및 속초·양양 국제공항을 통한 관광객 유입 성장 잠재 가능성이 높은 입지 조건임
- 한반도 지형을 고려할 때 중심부를 관통하는 동서축 지역이나 접근성은 아직 미약한 상태

-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접근 시간이 1~4시간까지 상이함
- 접경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는 경의선(문산~도라산역), 경원선(소요산역~백마고지역), 고속도로는 서울외곽(김포~고양), 일반도로로는 48번(김포~강화), 1번(고양~파주), 3번(양주~동두천~연천), 43번(화성~철원), 47번(포천~철원) 등이 있음

〈표 III-49〉 접경 지역 도시교통 체계

지역	광역 및 도시 교통 체계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사회로의 여건 변화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지속적 인구 유입으로 광역 교통체계 변경 ◦ 도시 규모에 비해 철도망이 미흡하며 신도시에는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 ◦ 동서 간 도로망에 비해 남북 간 도로망이 부족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 저해 ◦ 도서 지역을 연결하는 수상교통체계 미흡과 낮은 편의성
김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수요에 비해 도로 공급 절대 부족 ◦ 간선 도로망체계에 비해 도시 내 보조간선 및 분산도로 취약 ◦ 낮은 도로율과 체계적이 못한 가로시설 구조로 인해 교통 혼잡 심각 ◦ 도시철도가 전무하고 대중교통시설 또한, 미흡
고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산 신도시 건설 이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일산, 화정 중심으로 이원화된 시가지 형성 ◦ 행정구역의 51.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시가지 확장 불가능 ◦ 생산 상업·업무기능 부재로 서울권 통근 비율 높음
파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순응형, 자연 발생형 가로망 체계 형성 ◦ 경의선을 중심으로 서측에 비해 동측 도로망 발달 미흡 ◦ 군사시설물로 인한 도로계획 및 연속성 확보 어려움 ◦ 버스노선 광역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필요한 환승 및 불편 발생 ◦ 경의선 복선철도로만 서울 및 고양시 방면 유·출입 교통 수요 담당
연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인근에 위치하여 큰 배후시장을 가지고 있으나 도로 사정 열악하여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 지속적인 군 훈련으로 지역 도로 훼손 ◦ 남북축 위주의 도로개발로 접경 지역 동·서 연결 광역도로망 전무
양구·인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면과 서화면이 접해 있으며, 31번 국도와 46번 국도를 중심으로 육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물길로는 소양호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음 ◦ 남북한 군사분계선에 인접해 있는 양구와 인제는 접경 지역으로서의 경제·사회·문화적 연계성을 지님
철원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 및 지방도의 포장률이 각각 91.5%, 97.4%이며, 시·군도의 경우에는 34.8%로 강원도 평균 54.6%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광역교통망은 남북방향으로 형성하고 있으며, 시가지교통망체계는 선형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주 흐름은 남북방향으로 이루어짐 ◦ 광역교통망 체계는 일부지역이 지형적 제약과 민통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호 연계성이 미약함 ◦ 인근지역 및 내부 지역 간 접근성 제약으로 인해, 경제·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의 교류 부족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저해함
고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기준 고성군의 도로현황은 도로 총 연장 365,711m로서 포장도로 198,091m임 ◦ 포장률은 일반국도 100%, 지방도 19.1%, 시·군도 44.0%로서 도로정비 시급 ◦ 고성군의 지역 간 도로는 국도 7호선이 남북축을, 국도46호선, 지방도56호선이 각 남북축을 형성

자료: 유현아(2006)

● 역사 자원

- 접경 지역 DMZ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병인양요, 6.25 한국전쟁 등과 같은 중대한 역사 자원을 보유
 - 한국전쟁의 흔적으로는 철원 백마고지, 양구 편치불 고지, 화천 파로호, 휴전회담이 열린 파주시 판문점, 충성이 울리지 않았던 천연요새인 고성군 왕곡마을 등이 손꼽힘
 - 용진군 연평도 향토방위대, 강화군 한국전 참전 호주군의 치열한 전투 흔적, 김포시 한강 지역을 50여 회 작전 수행으로 지켜낸 해병대, 연천군 대통령 암살 간첩에서 목사가 된 김신 조 이야기, 화천·양구 지역의 에티오피아 참전, 무적 위장부대인 인제군의 백골부대 등의 스토리자원이 있음
-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인물(궁예, 황희 정승 등)과 관련된 지역이 다수이며 스토리텔링 관광 상품 개발이 가능
 - 한강벚길을 따라 강화군에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까지 다양한 인문자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철원군은 궁예 왕이 선택한 도읍지로 태봉국 도성터가 민통선 내에 위치하고 있음
 - 황희 정승이 여생을 보낸 파주시 반구정, 박수근의 고향 양구군,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이 기거했던 인제군 백담사, 심청이 이야기가 얹혀있는 용진군 심청각 등 인물과 연계된 자원 역시 풍부함

〈표 Ⅲ-50〉 접경 지역 주요 역사 자원 현황

구분		역사자원	주요 역사관광지
인천광역시	강화	고조선, 고려, 조선시대의 방어요새, 성터, 전적지, 선사유적(내가지석묘, 강화지석묘 등), 교동향교, 충렬사, 전통사, 보문사, 화개사지, 고려왕릉 및 왕성터, 고려자기 가마터, 봉천산 일대 문화재	전망대(연백군조망), 해안안보관광지
	파주	삼국시대 성터(오두산성, 덕진산성, 육계토성, 칠중성 등), 허준의 묘, 선사유적, 진흥왕순수비, 조선누각, 향교, 사찰터, 서곡리 고려 벽화묘, 삼국시대 고분, 조선백자기 가마터	6.25 전적지 및 기념공원, 자유의 다리, 판문점, 오두산 전망대, 통일공원, 도라산 전망대, 제 1·3땅굴
경기도	김포	삼국시대 성터(수안산성), 조선시대 방어요새(문주산성, 월곶해안포대), 선사유적(고인돌), 조선향교, 서원	애기봉, 제적봉
	고양	삼국시대(북한산성, 행주산성 토성), 고려시대(고려공양왕릉) 조선시대(연산군 금표비, 서오릉, 서삼릉, 북한산성 행궁지, 고양 벽제관지)	-
	연천	학곡리 지석묘 및 백제 적석총, 삼국리 백제 적석총, 삼국시대 성터(호루고지성지, 수철성, 대전리산성), 심원사지부도군, 신답리고구려 석실분, 경순왕릉과 잠두봉 암각문, 허목의 묘, 송의전(고려7왕을 모신 사당)	태풍전망대, 김신조침투로
강원도	철원	통일신라 및 후삼국시대 성터(동주산성, 성산성 등) 병자호란 전적비(전골총, 유림대첩비), 선사유적(고인돌, 성터, 유물), 궁예왕성터, 석등, 우물, 도피안사(철조비로사나불좌상, 삼층석탑), 분청사기가마터, 백자기 가마터, 도피안사, 고석정, 지석묘군, 토성, 안양사지	제2땅굴, 노동당사, 월정역, 통일전망대, 전골총, 금강산전철, 김응하장군비, CA3070P, CA3060P, 김화지구합동순의비, 망향동산, 금강산철도중단점, 백골전망대, 철의삼각지, 백마고지위령비, DM3050P(구철원읍), 삼천지구, 대성산,저격능선, 전투전적비, 송일교
	화천	화천향교, 화음동 정사지, 위라리 칠층석탑, 파로호 주변 선사유적(고인돌, 유적), 삼국시대 산성터, 사찰터, 계성리 석등(고려), 성불사지, 법장사, 월하시조비	상승대, 충렬탑, 조국과 자유수호전적비, 643고지 전투전적비, 사창리전투전적비, 수리봉, 비목공원, 평화의 댐, 파로호, 화천발전소탈환전공비
	양구	해안분지 선사유적(고인돌, 유물), 양구 공수리 지석묘군, 산성터(노고성, 비봉성), 심곡사 부도 및 목삼존좌불상, 백자요지(송현리, 장평리, 칠전리)	편치불지구 전투전적비, 백석산지구 전투전적비, 피의능선 전투전적비, 도솔산지구 전투전적비, 제4땅굴, 편치불총훈탑, 방산방공위령탑
	인제	신라산성(한계산성), 경순왕 및 마의태자 유적, 백련정사, 상동리삼층석탑 및 석불좌상, 인제향교, 갑둔리 5층 석탑 및 3층 석탑, 백담사, 합강리 합강정지 및 미륵불상, 오세암, 만해한용운 시비, 봉정암	향로봉, 칠정보, 3군단터, 옛싸움터시비, 백골병단 전투전적비, 인제지구 전투전적비, 현리지구 전투전적비, 제10야전군사령부 창설기념비, 충훈비, 오덕준장군 송덕비, 리빙스턴고, 통일전망대
	고성	건봉사, 보림암터, 칠성단암각문, 화암사, 고려시대고분군, 조선시대 전통가옥(왕곡마을, 노명 고가), 고인돌 무덤(명호리, 죽정리, 화포리, 자산리), 천간정, 명파리 조제암지, 간성향교	통일안보공원, 충훈비, 화랑사단전적비, 351고지 전투전적비, 충훈탑, 건봉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3)

● 문화자원

- 지정문화재
 - 접경 지역에는 총 360개의 문화재가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132개, 시·도 지정 문화재 169개, 등록문화재 22개, 문화재 자료 40개로 다수의 유·무형자원을 보유
 - 지역별로 국가 지정 문화재는 인천광역시 강화에 29개, 강원도 철원 21개로 밀집되어 있고, 시·도지정 문화재는 강화 63개, 고양 31개, 파주 29개로 서부권역에 밀집되어 분포
 - 서부지역은 한강하구와 관련한 자원, 중동부지역은 선사시대부터 한국전쟁까지 역사·문화 자원이 존재함

〈표 Ⅲ-51〉 접경 지역 시·도별 문화자원 현황

(단위: 개)

구분	계	국가 지정 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
전국	11,413	3,385	5,092	485	2,451
접경 지역	360	132	169	22	40
인천광역시	113	38	63	-	12
강화	104	29	63	-	12
경기도	98	25	52	7	14
김포	19	4	11	-	4
파주	56	14	29	5	8
고양	47	14	31	4	1
연천	23	7	12	2	2
강원도	111	64	23	11	13
철원	38	21	8	8	1
화천	20	11	5	3	1
양구	13	7	3	-	3
인제	16	10	3	-	3
고성	24	15	4	-	5

주: 문화재 중복이 있는 경우 중복을 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 체험 관광 자원

● 관광 거점형 농촌 마을

- DMZ 접경 지역 마을은 생활자원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각종 체험행사 및 축제를 통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킴

〈표 III -52〉 접경 지역 농촌 마을 현황

구분		마을
인천 광역시	강화	용두레마을, 화문석마을, 달빛동화마을, 도래미마을, 행복나들이 불은마을
경기도	파주	주월리(한배미)마을, 산머루마을, 통일마을
	김포	매화미르마을
	고양	
	연천	나룻배마을, 새둥지마을, 고대산 산촌생태마을, 모아베리 교육농장, 열두개울 버섯마을, 초성김치마을, 푸르내마을, 허브빌리지, 포드목장, 조선왕가, 임진강 캠프, 연천 유기농 범바위 알밤농원, 연천승마공원, 애심목장, 38선마을, 고려마을, 백학정보화마을, 수철성마을, 호랑이배꼽마을
강원도	철원	두루미 지는 버들골마을, 학마을, 철새마을 누에마을, 두루미평화마을, 토성민속마을
	화천	토고미마을, 파로호생태마을, 풍산마을, 하늘빛호수마을
	양구	엄마품 마을, 약수산채마을, 국토정중앙배꼽마을, 오미마을, 편치불마을
	인제	월학리 냇강마을, 용대리 황태마을, 하늘여울 소치마을, 보랏빛 산채마을, 진동계곡마을, 백담사 템플스테이마산마을, 백담마을, 하추마을
	고성	개천무지돌이마을, 대가삼계체험마을, 송천참다래정보화마을, 하일동화어촌체험마을, 수로요 보천도예창조학교, 옥천사 템플스테이, 종생마을, 자란만마을, 정광새들녘, 트는진 등마을, 진부령흘리마을, 화진포마을, 송천떡마을, 해담마을

자료: 2017년 기준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운영 중인 체험마을(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자료)

● 관광 사업제 자원

● 여행업 등 관광 사업제 현황

- 접경 지역 내 관광 사업제는 총 360개소로 대부분 규모가 영세함
- 여행업, 숙박업, 관광이용 시설업은 수도권 지역에서도 서쪽 지역인 고양시 177개, 파주시 96개, 김포시 31개로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중부, 동부지역과의 격차가 심한 편

〈표 Ⅲ-53〉 접경 지역 관광 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 개소 수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 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총계	360	275	18	4	10	0	15	46
인천권	28	17	2	2	-	-	1	6
강화	13	6	1	-	-	-	1	5
경기권	311	254	4	-	5	-	12	36
김포	31	30	1	-	-	-	-	-
파주	96	54	-	-	1	-	9	32
고양	177	168	2	-	4	-	3	-
연천	7	2	1	-	-	-	-	4
강원권	36	15	13	1	-	-	2	5
철원	6	4	1	-	-	-	1	-
화천	0	-	-	-	-	-	-	-
양구	4	3	1	-	-	-	-	-
인제	8	5	-	-	-	-	1	2
고성	18	3	11	1	-	-	-	3

자료: 3개 시·도 통계연보

● 관광 명소 자원

● 관광 명소 현황

- 접경 지역 내에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에 출입 고객들이 집계되는 곳이 총 129개소로 인천권 7개소, 경기권 71개소, 강원권 51개소로 구성됨

● 여행 상품 자원

- 접경 지역 내 여행상품은 지자체, 관광공사, 코레일 등에서 운영 중이며, 주로 안보 관람형 성격의 코스로 구성
-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와 관련된 관광 상품은 산천시티투어(주말)와 DMZ 자전거 정기투어(매달) 외에는 모두 연중 운영되나, 대부분 당일 또는 무박상품이며 체험 프로그램은 단기체 류형의 단순 관람 위주의 단발성 프로그램이 중심임

〈표 III-54〉 접경 지역 내 관광 명소 현황

구분		마을
인천 (총 7개)	강화 (7개)	강화전적지(갑곶돈대,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고려궁지), 강화나들길, 강화역사박물관, 강화 자연사박물관, 코레스코강화가족호텔, 프레시아관광호텔, 호텔에버리치
경기 (총 71개)	김포 (13개)	김포함상공원, 장릉, 경기도학생김포야영장, 김포사계절썰매장, 김포시사이드컨트리클럽, 김포청소년수련원, 김포평화누리코스, 다도박물관, 덕포진교육박물관, 로그밸리청소년수련원, 아라뱃길김포터미널, 약암관광호텔, 태산패밀리파크
	파주 (23개)	울곡선생유적지, 임진각관광지, 제3땅굴, 파주삼릉, 황포돛배, 황희선생유적지, 공릉관광지(하니랜드), 두루외박물관, 베스트밸리, 벽초지수목원, 산머루농원, 서서울컨트리클럽, 서원밸리골프클럽, 소월원, 쇠골마을, 영집궁시박물관, 우농타조농장, 유일레저, 카트랜드, 통일전망대, 파주영어마을, 파주임실치즈스쿨, 헤이리예술마을
	고양 (21개)	고양어울림누리, 서삼릉, 서오릉, 행주산성, 123컨트리클럽, 고양어린이박물관, 뉴코리아컨트리클럽, 신행주관광호텔, 중남미문화원, 주주테마동물원, 한양컨트리클럽, 항공우주박물관, 고양아람누리, 고양꽃전시관, 증권박물관, 키텍스, 고양생태공원, 고양원마운트, 고양종합운동장, 고양체육관, 아쿠아플라넷 일산
	연천 (14개)	나룻배마을, 송의전지, 신라경순왕릉, 열쇠전망대, 땅에미소, 상승전망대, 재인폭포, 조선왕가, 태풍전망대, 평화관광교육원, 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 한탄강관광호텔
강원 (51개)	철원 (9개)	고석정, DMZ안보견학, DMZ생태평화공원, 대명호텔, 복주산자연휴양림,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원, 철원온천관광호텔, 철원한탄강레프팅, 한탄강 CC
	화천	이외수 감성마을, 거례리 수목공원, 곡운구곡, 광덕산, 꺼먹다리, 동구래마을, 동촌리 마을, 탄산, 말골, 미륵바위, 벌떡약수, 법장사, 북한강길, 봉어섬, 비수구미, 삼일계곡, 파로호, 평화의 댐, 한뼘길, 해산자작나무, 화악산 촛대바위, 화음동정사지
	양구 (12개)	국토정중앙천문대, 두타연, 박수근미술관, 생태식물원, 양구선사박물관, 통일관, 박정희전대통령 사단장 공관, 산양증식복원센터, 양구KCP관광호텔, 양구백자박물관, 양구인문학박물관, 양구 DMZ둘레길
	인제 (18개)	(췌)미리내캠프, DMZ평화생명동산, 농촌체험마을 6개(넣강마을, 산채마을, 소치마을, 신월리마을, 하추리마을, 황태마을), 모험레포츠연수원, 설악산국립공원 3개소(남교리지킴터, 백담탐방지원센터, 장수대분소, 한계령탄방지원센터), 스피디움 호텔, 원대리 자작나무숲, 점봉산곰배령, 하늘내린호텔, 합강정공원(번지점프)
	고성 (12개)	낙산사, 골든비치리조트비치골프텔, 골든비치컨트리클럽, 대명리조트썰비치 관광호텔, 마천골자연휴양림, 설악산국립공원 4개소(남설악, 약수터, 용소폭포, 흘림골),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오색그린야드호텔, 알현미술관

〈표 III -55〉 접경 지역 여행상품

운영	상품명	지역	코스 및 특징	가격 (천원)	교통	시기/기간
고양	평화누리길	고양	◦ 4코스(행주나루길)행주산성-호수공원(선인장전시관) 2시간 40분 소요 ◦ 5코스(킨텍스길) 호수공원-출판도시3시간30분 소요	0	버스, 지하철	연중/당일
파주	DMZ 연계견학	파주	◦ 서울-임진강역-도라산역 ◦ (도라전망대, 3땅굴, 통일촌)	10	기차	연중/당일
철원 및 코레일	DMZ 농촌체험 관광열차	철원	◦ 서울 또는 제천-신탄리-철원 ◦ 농촌체험마을-DMZ안보관광-고석정 ◦ 한여울길 트레킹-서울	40	기차	연중/당일
철원 및 코레일	무박2일 에코레일열차	철원	◦ 부산-신탄리-DMZ안보관광-DMZ 산두릅축제장	69.4	기차, 버스	연중/ 무박 2일
철원	안보관광	철원	◦ 고석정-제2땅굴-철원평화전망대-철원두루미관-월정리역-노동당사	10	버스	연중/당일 3시간30분
양구	두타연 트레킹	양구	◦ 방산면 송현리의 천연연못 두타연 주위	10	도보	당일1시간
화천	산천시티투어	화천	◦ 시외버스터미널-화천민속박물관-붕어섬-파로호-안보전시관-물빛누리-카페리호-세계평화의종공원, 평화의 댐-DMZ꺼먹다라-산천어 공방-시골 장터 등	15	버스, 배	주말/당일
경기 관광공사	DMZ 자전거 정기 투어	경기도	◦ 임진각-통일대교-통일촌사거리-초평도-임진각	-	자전거	매달/당일
DMZ 평화생명 동산	한국DMZ 평화생명동산 연수프로그램	인제	◦ A: 오행동산, DMZ전시관-민통지역(당일) B: 제4땅굴, 을지전망대, 국선도, 향로봉큰굴 숲길 탐방 추가(1박 2일)C: 농촌체험, 천연 치약과 비누 만들기 등 추가(2박 3일)	6(A) 3.8 (B) 7(C)	버스	연중/ 당일, 1박 2일, 2박 3일
관광주식 회사 및 한국관광 공사	판문점 관광	파주	◦ 롯데호텔-통일공원-임진각 공원-자유의 다리-통일대교 검문소-보니파스캠프-JSA경내 견학	77	버스	연중 화~토요일/ 당일
	제3땅굴 투어	파주	◦ 임진각-제3땅굴-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마을	60	버스	연중 화~일요일/ 당일
	DMZ 철책선 걷기 투어	연천	◦ A: 롯데호텔-열쇠전망대-자유로 ◦ B: 관광공사-열쇠전망대-임진각	65(A) 70(B)	버스	연중/ 당일
	철새탐조관광	철원	◦ 한국관광공사-고석정-양지리초소-토고저수지-평화전망대-샘통-노동당사-한국관광공사	45	버스	연중 11~2월말/ 당일
	생태관광	연천	◦ 경순왕릉-송의전-조개뚝습지-은대리 ◦ 물거미서식지-도감포	41	버스	연중/당일
	웰빙관광	양구	◦ 한국관광공사-양구-대우산~가칠봉 ◦ DMZ걷기-생태식물원-양구명품관	33	버스, 도보	연중 화~일요일/ 당일

자료: DMZ 관광주식회사(<http://dmztourkorea.com/>)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2011), 마음을 잇는 특별한 여행 DMZ 참조

● 축제 자원

+ 지역별 축제 현황

- 접경 지역 각 시·군의 대표적인 자연자원, 문화자원, 전적자원 등을 소재로 연중 34개의 정기 축제가 개최되고 있음
- 축제를 개최시기별로 살펴보면 춘·추계에 17개, 하계에 10개, 동계에 7개 개최되어 춘·추계에 집중 개최
- 축제 주제별로 살펴보면 특산물 기반형 11개, 역사문화 기반형이 15개, 전적자원 기반형이 1개, 자연경관 기반형이 7개로 지역상품 기반의 축제와 역사문화 축제가 큰 비중을 차지함

〈표 III-56〉 접경 지역 축제

구분	자원명	주요 내용	시기	유형
인천	강화	고려산 진달래 예술제 고인돌 문화축제 삼량성 역사문화축제 개천대축제	4월중 10월 10월 10월	자연경관 역사문화 역사문화 역사문화
	김포	중봉 문화예술제 포도축제 대명향축제	10월 9월 9월	역사문화 특산물 특산물
	파주	파주 장단콩축제 개성인삼축제	11월 10월	특산물 특산물
	연천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민통선예술제 연천성당 국화축제	5월 10월 10월	역사문화 역사문화 자연경관
경기	고양	행주산성 해맞이 축제 고양 국제꽃박람회	1월 4월	자연경관 역사문화

구분	자원명	주요 내용	시기	유형	
	고양호수 예술축제	◦ 호수공원 내 대규모 퍼레이드 공연과 총 60편 넘는 공연으로 구성된 도심축제	10월	역사 문화	
	고양국제 야외조각축제	◦ 호수공원에서 국내외 정상급 조각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거리 공연 과 전시작품으로 볼거리 제공	10월	역사 문화	
	고양호수 꽃빛축제	◦ 낮에는 실내놀이터, 체험존과 밤에는 불꽃쇼와 다양한 먹거리로 구성	12월	역사 문화	
강원	철원	태봉제	◦ 옛 태봉국의 왕도로서의 전통을 기리는 축제 ◦ 국민화합 도모, 풍년농사 자축 기념	10월	역사 문화
		화강 다슬기축제	◦ 철원 화강의 다슬기뿐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DMZ를 직접 보 고 자연환경보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물축제	8월	특산물
		DMZ 국제평화 마라톤대회	◦ 대한육상경기연맹이 공인한 코스로 잘 보존된 DMZ 내 청정 자연 속 을 달리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축제	9월	자연 경관
	화천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 화천의 청정 자연환경과 산천어를 접목한 볼거리가 가득한 겨울철 이 색테마 축제(2009년 문화 관광축제 우수축제 선정) ◦ 얼음낚시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볼거리가 가득한 화천 대표 축제	1월	특산물
		쪽배축제	◦ 물과 사람을 주제로 밤하늘 배경에서 별빛 콘서트를 여는 축제 ◦ 붕어섬, 화천강, 은하수공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다이내믹한 수상 레 포츠 체험 기회	7-8월	역사 문화
		토마토 축제	◦ 스페인 토마토축제를 벤치마킹하여 화악산 고랭지 토마토를 선보이는 장	8월	특산물
	양구	도솔산 전적문화제	◦ 과거의 역사적 비극을 문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군민 문화축제 ◦ 한국전쟁 중인 1951년 6월 도솔산 전투의 호국 영령들을 추모 및 전 쟁관련 사진전, 모의지뢰탐지 체험 등의 행사 시행	6월	전적 자원
		배꼽축제	◦ 국토의 배꼽이 상징하는 생명, 자연, 상생을 주제로 여는 축제 ◦ 자전거 한반도 트레킹, 배꼽 열기구 체험, 두타연과 오미리 농촌체험 마을 탐방 프로그램 운영	8월	자연 경관
		DMZ 마라톤 대회	◦ 금강산 가는 길목 두타연 생태 관광지를 달리며 자연의 숨결을 느끼는 대회	8월	자연 경관
		편치볼 시래기 축제	◦ 양구군 양질의 무와 시래기로 만든 다양한 음식 을 맛보는 축제	11월	특산물
	인제	인제빙어축제	◦ 인제군 남면 소양호 일원에서 빙어를 주제로 펼쳐지는 축제(2009년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 선정) ◦ 빙판 위에서 산촌문화를 만날 수 있는 축제	1월 말 - 2월 초	특산물
		인제황태축제	◦ 인제군 용대3리 마을에서 건조된 인제 황태를 맛보는 축제 ◦ 황태쌀기, 황태 걸기, 황태포 만들기 등 행사 시행	3월초	특산물
		서화 DMZ 평화생명축제	◦ 기존 군인추억페스티벌이 2010년부터 DMZ와 접목한 평화생명축제 로 탈바꿈 ◦ 마라톤대회를 비롯, 백일장, 사진 전시회, DMZ 탐방, 장병 장기자랑 등 군부대와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	10월	역사 문화
	고성	수성문화제	◦ 고성군 고유의 전통민속문화를 발굴 계승, 향토 문화예술의 창달로 정 신문화의 지주가 되는 고성군 문화예술행사	9월	역사 문화
		통일전망대 해맞이 축제	◦ 대한민국 최북단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열리는 해맞이 축제 ◦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해소망과 남북 평화통일 염원	1월 1일	자연 경관
		고성 명태와 겨울바다 축제	◦ 고성 명태의 맛과 군어임을 알리고자 10여 개 향구를 돌아가며 열리 는 축제 ◦ 전양제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명태요리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	2월 정월 대보름	특산물

구분	자원명	주요 내용	시기	유형
	왕곡마을축제	◦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왕곡마을과 송지호 일대에서 펼쳐지는 전통생활 체험, 민속놀이체험, 왕곡장터체험, 생태체험 등의 민속축제	10월	역사 문화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2017-11.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DMZ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운영 방안, 52~55p

● 지역특산품 자원

● 지역 특산품 현황

- 접경 지역 내 10개 시, 군의 특산물은 농산품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 또한 다양함
- 양구의 곰취 찌빡, 막국수, 인제의 올챙이묵 등 지역 향토음식과 파주 장단콩, 화천 화악산 토마토, 강화 인삼 등 농·특산물이 타 지역과 차별화 됨

〈표 III-57〉 지역 특산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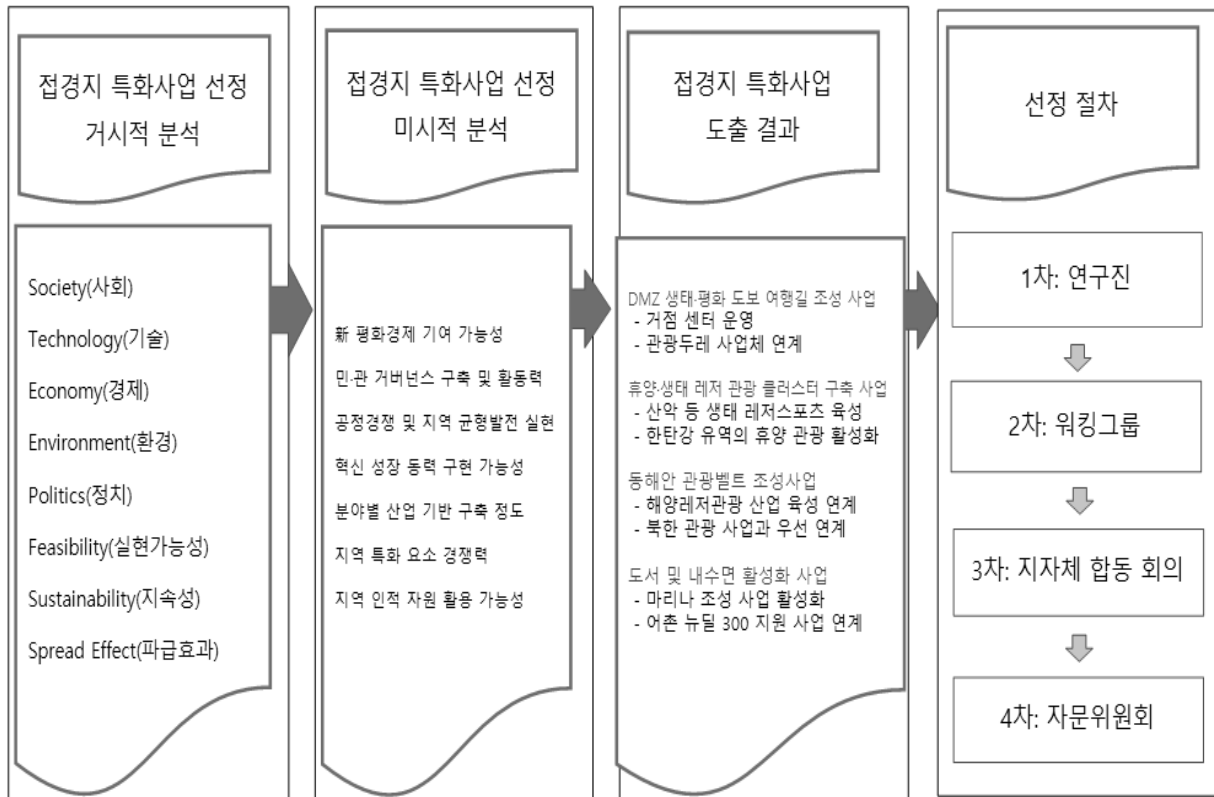
구 분	향토음식	공예품	농·특산물
인천	강화 ◦ 오가피주, 순무식혜, 순무김치	◦ 왕골공예품, 화문석, 꽃삼합, 화방석	◦ 강화순무, 강화인삼, 감화섬 쌀, 강화사자 발쑥, 강화속 노랑고구마
경기	파주 ◦ 참게장, 임진강 담수어, 한과	◦ 천연유약용기	◦ 파주장단콩, 파주개성인삼, 임진강쌀
	김포 ◦ 문배주		◦ 김포금쌀, 포도, 배, 인삼, 버섯, 찹쌀보리
	고양		◦ 장미, 선인장
	연천 ◦ 임진강김치, 청산김치, 울무 막걸리, 북삼참기름	◦ 석공예	◦ 남토복수(쌀), 참깨, 연천콩, 병배, 병포도, 울무, 밤호박
강원	철원 ◦ 한우생고기, 닭백숙, 두부정식	◦ 현무암공예품, 맷돌	◦ 철원오대쌀, 삼지구엽초, 철원 쌀 막걸리, 철원쿨포크
	화천 ◦ 삼색달떡, 도토리송편, 고추 김치		◦ 화악산토마토, 산천어훈제, 미니 단호박, 토고미오리쌀
	양구 ◦ 곰취찜빡, 막국수, 메기찜, 민물회, 산채백반, 오골계구이	◦ 방짜 티스푼&포크, 압화공예품, 연봉 수저, 조롱박문살, 죽절수저	◦ 오대쌀, 잡화꿀, 양구민들레, 가시오가피, 둥글레, 시래기, 무말랭이, 검정콩, 건고구마순, 건고사리, 건취나물
	인제 ◦ 올챙이묵	◦ 목공예, 석공예	◦ 황태, 인진숙, 송이, 치커리, 토종꿀, 하늘 내린쌀
	고성 ◦ 자연산물회, 고성막국수, 도치 두루치기, 토종흑돼지, 도루묵 찌개, 명태지리국	◦ 강원서각, 관음보살, 관솔공예품	◦ 치커리, 머루주, 젓갈류, 다시마장, 가리비, 전복, 표고버섯, 피망, 명태, 송이, 오징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8), 평화·생명지대(PLZ) 광역 관광개발 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지자체 홈페이지

4.3 관광 분야 특화 산업 도출

● 특화 산업 선정 과정

- 접경 지역 시·군의 역점 추진 사업과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선정 과정 진행



워킹그룹 1차 회의록

일 시	2019. 10. 02(수), 16:00	장 소	생산성본부 504호
내 용			

◦ 제안 내용 요약

- 행정안전부 생태·평화 벨트 육성 사업 관광 분야 사업 내용과 연관성 검토
- 인프라 구축 사업이 많아 산업적 관점 보완은 적절한 관점으로 평가됨
- 현재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두레 사업 등 해당 지역의 실질적 역량을 감안한 사업 구상 필요
- 내생적 지역 발전 전략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필요
- 접경 지역 관광은 고양, 파주, 강화 등을 중심으로 이미 활발
- 강원도 지역은 철도 인프라 부족으로 당일 시각 관람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기존 여행 프로그램, 상품들도 홍보 부족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음
- 청정지역 이미지를 활용한 각종 농특산물을 6차산업 차원에서 개발
- 지역 체험관광과 청년 귀농인 연합회 등 기존 인프라 활용 필요
- 국내 관광객 유입만으로는 접경 지역 관광 활성화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다양한 방안 고민이 필요하며 생태 보존 지역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양, 산림, 국립공원 등을 연계할 것을 제안
- 인제, 화천 지역의 군부대 정리 지역 활용한 병영 체험 구상
-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생태 스포츠(산악 트래킹 등) 육성 사업 권장
- 축제 위주로 이루어지는 현재 접경지역 지역 관광 상품은 숙박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인근 비접경 지역의 산업만 활성화 되는 결과 초래(화천, 춘천 등)
- 지역의 관광학과 학생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추구 필요
- 웅진군, 고성군의 해양 관광 산업 못지않게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도 해양수산부의 내수면 어업 육성 사업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 발생
- 북한 웅진군과의 트윈시티 모델 구현 가능
- 그러나 실제 관광 현장에는 숙박업소 등의 질적 수준이 많이 낮은 상태이므로 관광특구 지정 등을 통하여 여행 인프라 개선이 절실함
- 접경 지역 관광특별법 제정 등도 검토 대상
- 접경 지역 주민들 내부에서 기존 지원사업의 혜택 수혜 축소 등의 염려로 인한 배타적 행태 등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평가
- 추진 사업의 명확한 컨트롤 타워 정비 필요
- 새로운 사업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사업들을 산업적 관점에서 묶어내는 방안 고민이 필요
- 지역 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민간 시장의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사업 참여 가능성 타진 등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지역 청년들을 해당 관광 산업의 주요 자산으로 투입하여 현장의 관광 붐업을 하는 방안도 필요
- 현재 추진 사업이 하드웨어 보강에 맞춰져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강화 쪽으로도 많은 고민이 필요

워킹그룹 2차 회의록

일 시	2019. 10. 25(금), 16:00	장 소	생산성본부 308호
내 용			

◦ 제안 내용 요약

- 제안한 4가지 사업들은 실제 투자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파주시에서는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순 농업 개발 측면이 아니라 해당 시설을 체험 및 관광 시설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향후 제안 사업들은 이와 같은 연관 산업 혹은 산업체를 관광자원화 하는 등 실리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
- 춘천 지역의 레고랜드처럼 시설 기반으로 개발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 경우라면 랜드마크 성격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 가능성이 있어야 함
- 도보 길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적용하여 전체를 연결하기 보다는 가치 있는 곳만 우선 개방하는 안 집중 권고
- 용진, 고성 의 해양 관광도 충분히 활성화가 가능함. 마리나 등의 활용도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기존에 조성된 아라뱃길만 연결해도 가능하며 대규모 개발을 통한 사업화가 아니라 대중적 관광 프로그램으로 해양관광의 가능성도 타진 필요함
- 기존에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관광 인프라와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으므로 이를 제대로만 활용해도 충분히 사업화 가능함. ‘유람선 타고 강화도 가자’등도 현실 가능성 충분함
- 트윈시티 모델을 적용할 경우 최신의 AR, VR 기술을 도입하며 통일시대 이전에도 관광 차원의 체험이 가능하도록 체험 공간 조성도 가능할 것임
- 도보 길의 경우 역시 실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이나 제한된 관광객만 가능하다는 점이 우려되는 바임
- 따라서 관광의 시작과 끝 지점 등 일정 간격을 두고 휴게 쉼터 등을 적절하게 설치해야 소규모 자유 여행객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음
- 이곳에 해당 지역의 마을 공공 기업인 관광두레 프로그램 소속 공동체나 지역 관광 해설사 등 지역의 역량을 집결하는 방법 고민
- 주민관광단체, 군부대와의 관계 등 선행되어야 할 과제 정리 필요
- 시설 및 인프라 지원은 화장실, 숙박 공간 지원 등으로 국한하고 숙박 역시 글램핑 등 최소한의 여건만을 활용하는 방안 고려
- 현재 대부분의 농산어촌 마을들은 원형 보존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므로 원형의 매력을 구현하는 방안 마련
- 한탄강 유역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자연 그대로를 이용하는 호버 크래프트 등을 주상 절리 지역에 관광에 활용
-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 중 하나인 해양 치유 산업 지원 대상 가운데 강원도가 빠져있는데 동해인 지역의 해양 심층수를 활용하여 소형 선박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프로그램 마련이 가능할 것임
- 생태, 체험 도보 길의 경우 대통령 말씀 등에 반영되어 있는 등 추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업으로 보이나 문제는 연계사업 확보가 관건임
- 철도, 도로 등 접근 인프라 개선은 계속 남아 있는 과제임
- 접경 지역 관광 산업은 단순히 인프라 구축 등 기존 생태 자원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에는 반대
- 현재 관광객들이 단순히 보는 체험이 그치고 있어 재미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질적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 Army Theme Land와 같이 기존의 보편적 병영 체험이 아니라 최고급 체험 등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음
- 야생 음식 축제 등도 고려해 볼 만 함
- 스포츠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개발은 산업 차원에서 실익이 없음
- 우선 시설 경쟁력 자체를 갖추기도 힘들거니와 스포츠 이벤트 이후의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이 고민임
- 따라서 자연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시행할 수 있는 스포츠 위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특화 산업 도출 결과

+ 접경 지역 혁신 역량과 전문가 그룹의 종합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관광서비스 분야 접경 지역 특화 산업으로 2대 산업, 4대 사업을 선정함

- 2대 산업: 생태 관광 산업, 해양·해상 관광 산업

〈표 III-58〉 접경 지역 관광분야 2대 산업

특화산업 후보	선정이유	역량 보유 현황
생태 관광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그대로 보존된 DMZ의 생태 가치와 세계 평화 상징 지역으로서 도보 여행길에 대한 전 세계적 소비자 욕구 증대 - 생태 레저 스포츠 이용객 증가와 우수한 접경지역 산림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철도 교통 체계 미흡 - 자연 생태 환경 보존 양호 - 우수한 산림자원 - 생활 자원이 잘 유지되어 관광 거점 가능 마을 분포 - 유네스코 자연 유산, 생물권보존지역 지정
해양·해상 관광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어촌 활성화와 평화 수역 조성 가능성 타진 - 북한과 조기에 접근 가능한 해안 관광 계획 연계 가능성 - 해양 관광에 관한 산업 측면에서의 성장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안, 동해안의 지형 차이 - 러시아 및 일본을 연계하는 해상 관광 루트 개발 가능 - 대형 항구 위주의 인프라 구축으로 小港 낙후 - 해안 배후지 연계 관광 프로그램 취약

- 4대 사업: DMZ 생태·도보 여행길 조성 사업, 휴양·생태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생태 관광 산업 분야)과 동해안 관광 벨트 조성 사업, 도서 및 내수면 활성화 사업(해양·해상 관광 산업 분야)

〈표 III-59〉 접경 지역 관광분야 2대 산업

4대 특화 사업	선정이유	역량 보유 현황	지원방안
DMZ 생태·평화 도보 여행길 조성 사업	DMZ의 세계적 생태 가치와 평화 지역으로서의 상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철도 교통 체계 미흡 - 자연 생태 환경 보존 양호 - 생활 자원이 잘 유지되어 관광 거점 가능 마을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여는 길' (행정안전부) 사업 연계 - 농촌, 산촌 마을 조성 지역 연계 사업 개발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한탄강 수계, 백두대간 산림 지의 높은 활용 가치와 레저 인구 증가를 반영한 지역 산업 육성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 계곡 자원을 활용한 익스트림 스포츠 부족 - 한탄강 주상절리 유네스코 문화 유산과 생물 권 보존 지역 등 - 지자체의 스포츠 행사 유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 수상 스포츠 및 체험 프로그램 육성 방안 마련 - 폐 군사시설 관광자원화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	북한과의 빠른 관광 연계성 확보와 국제 협력 체계 구축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및 일본, 중국 연계 해상 관광 루트 보유 - 크루즈 이용객 대상 내륙 서비스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대책 연계 (해양수산부) - 북한 동해안 관광지 육성 사업
도서 및 내수면 활성화 사업	생활 SOC 육성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속적 성장 가능 관광 산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항구 위주의 인프라 구축으로 小港 낙후 - 대도시 인근 수상 스포츠 인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면 마리나 육성 사업 (해양수산부) - 어촌 뉴딜 300 사업 연계 (해양수산부)

● 4대 특화 사업 상세 분석

+ DMZ 생태·평화 도보 여행길 조성 사업

-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해당 지역 가운데 DMZ를 직접 관할하는 10개 지방자치단체(강화, 김포, 고양, 파주, 철원, 연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대상 ‘(가칭) 통일을 여는 길’ 조성 연관 부속 세부 사업

구 분	내 용
정 의	접경지 가운데 DMZ를 포함하고 있는 10개 시군의 인접 도보길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
필요성	세계적 생태자원의 보고이자 평화의 상징으로 부각된 DMZ의 천연 자원을 활용하여 천혜의 관광지역으로 조성하고 주변 지역 연관 산업 육성 필요
목 적	생태 보존의 보고를 훼손 없이 보전하면서 평화의 가치와 관광자원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 내역	2019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수정 발표한 '접경지역 발전 종합 계획'에 근거하여 2024년까지 단계적 조성 계획 수립 완료
추진 전략	'한탄강 주상절리 길'부터 시작하여 경제적 효과 및 길 조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반드시 주변 지역 산업과 연계 마련
기대 효과	'스페인 산티아고 길'에 버금가는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 휴양·생태 레저 스포츠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접경 지역 시·도 중 연천군, 포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 6개 시·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이거나 실행 중인 사업

구 분	내 용
정 의	한탄강과 백두대간 등 청정 자연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휴양과 관련 레저 산업을 역점 산업으로 육성
필요성	여가 문화 확산과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한 인식 제고로 청정 자연 자원을 적극 활용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 필요성 제기
목 적	수도권의 관광 인구 흡수와 군 주둔지 정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 산업 공동화 방지 및 국제적 휴양, 레저 스포츠 요람 조성
추진 내역	한탄강 주상절리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지정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유지하고 있는 스포츠 행사의 저변 확대 노력
추진 전략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수상, 산악 스포츠 인프라 확보와 관련 대회 유치 및 일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기대 효과	스포츠 행사 참여자들의 소비와 군 주둔지 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접경지역 산업 공동화 현상 방지 가능

+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

- 접경 지역 시·도 중 동해안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고성군 기초 자치단체 현실과 특성에 맞춰 종합적 해양 산업 발전 관점에서 육성

구 분	내 용
정 의	동해안 특성에 맞으며 향후 남북 교류 확대에 따라 조기에 확장 가능한 해양 생태 관광 산업 육성
필요성	미래 성장 산업 분야의 하나인 해양 산업을 기반으로 관광과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미래 10대 관광 트렌드의 절반)의 개발 필요성 대두
목 적	추가 시설 설치 없이 빠른 남북간 교류가 가능한 해안을 활용하여 국내 관광 자원의 가치 상승을 도모하며 향후 평화 경제 시대를 대비
추진 내역	설악~금강을 연결한 국제관광 자유지대 구상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및 서해 공동 어로 구역 등 추진
추진 전략	4대 해양 레저 관광 산업 육성 방안 등과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활용
기대 효과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기반으로 한 동해안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한 평화 수역 조성 기대

+ 도서 및 내수면 활성화 사업

- 접경 지역 시·도 중 내수면 관광 자원이 풍부한 웅진군, 강화군, 김포시의 3개 시·군 각 기초 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한 내수면 자원 활성화 관점에서 육성

구 분	내 용
정 의	강, 호수, 제방 등 주로 내륙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수상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레저 관광 산업 육성
필요성	해양이 아니라 생활권 주변에 위치한 시설들을 이용하여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 필요
목 적	대형 항만이 아닌 소규모 수상 자원들의 활용 효과를 극대화 하며 배후지 연관 산업 활성화
추진 내역	내수면 마arina 조성 사업 및 어촌 뉴딜 300 등 생활 SOC 개선을 통한 지역 관광 산업 지원 추진
추진 전략	국내 小港 정비 계획인 어촌 뉴딜 300 사업 및 내수면 마arina 조성 사업에 접경지 현황을 고려한 제도적 배려 반영
기대 효과	해양·해상 관광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도서 및 내수면 자원의 활성화 및 배후지 기존 산업의 동반 성장

4.4 접경 지역 관광분야 특화 산업 실행 방안

가. 생태 관광 산업

- DMZ 생태·평화 도보 여행길 조성 사업
-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1) DMZ 생태·평화 도보 여행길 조성 사업*

* DMZ와 연결하는 접경 지역 10개 시·군에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세계 평화 상징으로서의 DMZ

-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3일 국빈 방한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의 청와대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처럼 평화의 길이 되어 세계인이 함께 걷게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
- 펠리페 6세 국왕은 “비무장지대를 산티아고 길처럼 평화의 길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며 “DMZ에서의 적대관계 종식으로 그곳이 진정한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

+ '19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접경 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발표

-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 균형 발전 기반 구축,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등 4개 전략, 10대 과제 추진 결정
- 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조 2,000억 원(국비 5조 4,000억 원, 지방비 2조 2,000억 원, 민자 5조 6,000억 원) 투입해 접경 지역을 한반도의 생태·평화 벨트 중심지로 육성 계획
- 이 가운데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108개 사업에 3조 원 투입 예정
-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와 2,500억 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 기대

● 경과

+ 다양한 둘레길 조성

- 북한 접경 지역에는 DMZ 펀치볼 둘레길(양구), 파로호 산소 100리 길(화천), 한탄강 주상절리길(포천·연천), 의주길(파주), 고양누리길(고양)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음

- 가장 대표적인 둘레길은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경기도 접경 지역 4개 시·군에 조성된 ‘평화누리길’(189km)
- 특히 대명항에서 출발해 문수산성 남문~애기봉 입구~전류리포구까지 이어지는 김포 구간(39km)은 염하강과 조강을 두고 마주 선 북녘 땅과 김포평야의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

+ DMZ 평화의 길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가 43억 원 정도를 들여 조성한 길로 비무장지대가 민간에 개방된 첫 탐방로
- 고성 금강산전망대에서는 금강산 주봉능선과 해금강, 동화 ‘선녀와 나무꾼’의 배경인 감호, 사공바위, 외추도 등 북한 명소를 멀리서 감상 가능
-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길을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사업이자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의 초기 사업으로 간주

+ ‘통일을 여는 길’ 조성 계획

- 분단 및 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에 도보 여행길을 조성해 세계적 관광 코스로 개발 계획
- ‘(가칭) 통일을 여는 길’ 사업은 2022년까지 286억 원을 투입해 DMZ 서쪽 끝인 인천광역시 강화군부터 동쪽 끝인 강원도 고성군 까지 총 연장 456km에 도보 길과 10개의 거점 센터 건립 계획
- 연천, 포천, 철원 지역에 2020년까지 611억 원을 투입해 접경 지역 대표 생태 체험 공간인 ‘한탄강 주상절리 길’ 119km 우선 조성
- 지형 및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양구 지역 편치볼 지역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90억 원을 투입하여 ‘편치볼 하늘길’과 전망대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국방개혁 2.0 진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 막사 등 군사시설을 활용한 병영 체험 공간 조성 사업도 포함 예정

● DMZ 도보 여행길 조성 and 연관 산업 육성 원칙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적 접근

- DMZ는 ‘접경 지역 발전 종합계획’ 내에서도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 상위 계획과의 연

계, 군부대와의 협의 등 다양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에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특히 전체 456km를 모두 도보 여행길로 연결하여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여부, 인근 지역 경제에의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은 선도 사업으로, 대규모 민자 투입이나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상당 부분 진전된 이후에 가능한 사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가장 중요한 원칙은 DMZ이 가지는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있는 그대로 자연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집중해야 한다는 점임
- 그동안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도보길 조성 사업과 중복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최대한 지양하고 특히 방문객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 훼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절실

+ 인근 지역 경제에의 파급력 제고 방안 마련

- 현재 접경 지역 인근 지역에는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다양한 관광 관련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음
-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적 정보를 전달하는 문화 해설사에서부터 지역 공동체들이 주체적으로 사업체를 구성하여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관광두레 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각종 마을 공동체 육성 사업 등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단순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실행한 뒤 관광객들은 해당 시설이나 건축물 등을 참관하는 방식의 관광 산업에서 벗어나 생태 가치를 극대화 하고 평화 지역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관 산업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DMZ 도보 여행길 조성 유사 사례 분석²⁵⁾

+ 지리산 둘레길

● 현황

-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둘레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 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16개 읍면 80여개 마을을 잇는 21개 구간, 300km의 도보길
- 2011년까지 각종 자원 조사와 정비를 통해 지리산 곳곳에 걸쳐 있는 옛길, 고갯길, 숲길, 논둑길, 농로길, 마을길 등을 원형으로 연결된 숲길로 최대한 옛길을 복원
- 산림청의 “환 지리산 생태역사문화 관찰로 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거한 국내 첫 장거리 보도

25) 접경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DMZ,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운영 방안, 2017.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소영, 김상민 연구원

길 조성 사업

- 길을 통한 광역 단위 자원 네트워크 구축, 느낌지향과 문화 확산 및 국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기여,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신개념 발전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함

-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과 사단법인 숲길 설립

-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 지리산권인 전남, 전북, 경남의 7개 시·군(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의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마케팅하기 위하여 2008년 조직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
- 지리산권자치단체간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나 유사시설 도입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관광개발 연계성과 집행력을 강화하는 10개 중점사업을 실시
- 숲길은 생명평화의 정신으로 지리산 주민과 뜻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지리산을 보전하고 성찰과 순례를 통하여 화해·소통·협동의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2007년 설립
- 둘레길 조성을 위한 조사·설계와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걷기 프로그램 운영

• 세부 사업추진 내용

- 각 권역 센터 운영

- 사단법인 숲길은 총 7개의 각 권역센터 운영과 걷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주제의 전시·도 진행
- 지리산 둘레길도 제주올레 패스포트와 같은 관광여권을 '2014 지리산권 방문의 해'를 맞아 무료 배포하였으나 이후 지속적 활용은 되지 않고 있음
- 방문객들에게 해당 지역의 대표 관광지, 축제, 기념품, 음식 등을 선정하여 정보로 제공하고 있음

〈표 III -60〉 지리산방문의 주요 관광지와 주요축제 및 7품 7미

지역	대표관광지	대표축제	7품	7미
전북 남원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춘향제	목기	추어탕
전북 장수	승마체험장, 논개사당	한우랑 사과랑 축제	사과	한우고기
전남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 천문대	심청효문화대축제	멜론	참게 매운탕
전남 구례	화엄사, 아생화 자연생태학습장	산수유꽃축제	산수유	다슬기 수제비
경남 하동	최참판댁, 차문화센터	야생차문화축제	녹차	재첩국
경남 산청	한의학박물관, 목면시배유지	한방약초축제	곶감	버섯 약초전골
경남 함양	상림공원, 지곡개평마을	산삼축제	산삼	흑돼지 삼겹살

자료: 농민신문

-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공동 마케팅

-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2008년 설립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실시
- 10대 추진 사업으로는 연계 관광상품개발, 지리산권 방문의 해 추진, 7품 7미 육성,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 조성, 타운 투어리즘 시범 조성,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육성, 관광 순환로 조성, 관광 정보화 시범 사업, 관광아카데미 운영,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

• 시사점

-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 지역주민 및 관련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성공요인이었던 제주올레길과 달리, 지리산 둘레길은

중앙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이 성공적인 걷는 길 정착에 기여

- ▶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수립한 국내 5대 트레일 조성사업이 지리산둘레길의 초석이 됨

– 도보여행 열풍

- ▶ 학습과 체험을 포함한 생태, 문화 도보 관광의 증가 추세와 최초의 국립공원이라는 지리산 여행에 대한 흥미 자극

– 단기 트레킹의 매력도

- ▶ 제주올레길의 도보여행이 이동 등 평균 4일의 체류시간을 갖는 것에 비해 지리산 둘레길은 대중교통 및 자가용을 이용한 소그룹 단위의 관광객들이 당일, 1박 2일 짧은 기간 한 구간을 걷고 마을을 여행할 수 있는 패턴으로 주말, 휴일의 방문객이 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음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과 사단법인 숲길의 역할 분담

-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10대 중점 사업을 중심 교통, 숙박, 7품 7미, 여행 아카데미 등 지리산권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반 구축
- ▶ 숲길은 탐방객과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과 권역 안내소 운영 등 방문자 친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자연 보호 캠페인 실시

+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 현황

- 스페인과 프랑스 접경에 위치한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란 뜻의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로 알려진 길은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의 유해가 안치된 스페인 북서부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로 가는 순례길
- 순례길은 출발지점이나 과거 그 용도에 따라 ‘프랑스 길’, ‘포르투갈 길’, ‘북쪽 길’, ‘은의 길’, ‘프리미티보’, ‘영국 길’ 등의 이름이 붙은 여러 길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길인 ‘카미노 프랑세스(Camino Frances; 프랑스 길)’는 800km에 이르는데, 하루 평균 25km씩 한 달 이상을 걸어야 목적지에 도착
- 1987년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 출간과 1993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프랑스 길, 북부 스페인 길) 지정 이후 전 세계 도보 및 자전거 순례자들의 방문 급증
- 5~6월부터 순례자 수가 증가하며, 산티아고 성인의 축일인 7월 25일에 도착하려는 순례자가 가장 많아 여름에 가장 붐비게 됨. 특히 산티아고 성인의 축일이 일요일인 희년에는 특히 순례자가 많아 숙소나 식당을 잡기 어려울 정도임
- 11세기 동안 축적된 순례여행의 문화유적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역사 유산, 자연경관, 문화 콘텐츠 등이 결합하면서 발전
- 순례길에는 교회, 병원, 호스텔, 수도원, 여행자 숙소, 다리 등 건축물과 같은 로마네스크 양식에서부터 바로크 양식까지의 문화유산들이 산재함

－ 순례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 순례자를 위해 제공되던 숙소는 현재까지 이용되며 공립, 사립으로 나뉘어져 있고 가격은 7~15유로 사이
- ▶ 까미노 관련 주요 홈페이지, SNS와 각 국의 산티아고순례자협회가 있어 순례자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2010년부터 비영리단체인 대한민국산티아고 순례자협회를 개설하여 운영

● 세부 추진내용

－ 중앙,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유산 보호제도

- ▶ 993년 프랑스 길과 스페인 북부 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스페인 정부 차원의 순례길 보호 노력이 지속됨
- ▶ 가장 많이 알려진 프랑스 길은 5개의 자치 단체와 100개가 넘는 마을을 지나며 순례길이 지나는 각 자치단체는 그 관할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경계 내에서의 유산 보호를 명시

－ 순례자 여권(Credencial) 및 순례증명서(Compostela)

- ▶ 순례자 여권은 걸어온 길을 증명하는 스탬프와 날짜를 기록
- ▶ 보통 순례자협회가 설치된 국가에서 사전에 2유로에 발급받거나 시작하는 지점의 순례자 사무소, 공립 숙소(알베르게)에서 발급
- ▶ 일반 순례자와 대학인 순례자 여권 두 종류가 있으며 전 세계 대학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2002년 나바라 대학과 스페인 교육부, 유럽 연합 의회 인가를 받아 만들어짐
- ▶ 반드시 순례자 여권을 지참하여야만 산티아고 꿈 뽀스텔라 순례자 사무소에서 순례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알베르게에서 묵을 수 있음

－ 저렴한 가격의 순례자 전용숙소 알베르게

- ▶ 알베르게는 수도원, 공립, 사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요금제와 기부제로 나뉘어져있음
- ▶ 공립 알베르게는 성별, 나이 구분 없이 1인 2층 침대 1자리를 배정하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1박만 허용
- ▶ 대부분의 사설을 제외한 알베르게는 사전예약을 받지 않아 도착 순서대로 이용하므로 배낭으로 줄을 세워 대기함
- ▶ 순례자들의 짐을 운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알베르게에 비치된 운송봉투에 도착예정인 알베르게 이름을 적고 운송료를 넣어 배낭에 매달아 놓음. 가격은 15kg 이하 7유로

〈그림 III -97〉 운송회사를 통한 배낭 운송서비스



자료: El Camino de Santiago con Correos(www.elcaminoconcorreos.com)

● 시사점

－ 방문자들을 통한 문화 콘텐츠 재생산

- 도보여행으로서 대규모 관광과 차별화하여 순례로 나를 찾는 길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며 여행후기로서 에세이가 많이 출간되고 공유되면서 스토리텔링 작업이 지속적으로 발생
- SNS에서 확대 재생산되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유용한 관련 앱 등이 개발되어 있음

－ 이용객 편의 및 흥미 유발

- 순례자 여권을 발급 받아 도장을 채우는 재미를 느끼게 하고 순례증서 발급으로 순례를 마쳤다는 성취감을 가지게 함
- 알베르케는 물론 호텔, 인펜시온 등 다양한 유형의 숙소가 있으며 세계 각국 순례자의 만남과 정보공유의 장 제공

－ 순례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노력

- 각 국가 순례자협회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순례의 길 소개와 지켜야할 에티켓 등을 교육, 홍보
- 지역 대학에서 스페인 교육부와 함께 대학생 순례증명서 발급과 순례길이 통과하는 지방정부는 조례로 길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은 순례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방문하는 요인이 됨

● DMZ 도보 여행길 조성 및 거점 센터 운영

+ 거점 센터 구성의 원칙

- － DMZ 생태관광을 위한 도보 여행길 조성에서 거점 센터의 역할은 사업 추진 및 성공의 핵심임
- － 단순히 도보 여행객들이 거쳐 가는 휴식 장소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함
- － 이를 위해서 이미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각종 마을 공동체는 물론 기념품 생산 업체, 지역 음식 및 숙박업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연관 프로그램의 구비가 필수 요소임
- － 지역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숙박·식음·여행·체험·레저·기념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관광 사업체를 직접 창업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하는 ‘관광두레’ 사업(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2020년 4월부터는 한국관광공사로 운영 주체가 변경)에서 발굴된 주민사업체의 경우 거점 센터의 콘텐츠를 채워줄 수 있는 주요 대상으로 평가됨
- － 2019년 현재 전국 47개 시·군구에서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접경 지역 해당 시·군구는 강화군, 고양시, 연천군, 춘천시, 인제군 등 5개에 불과
- － 향후 관광두레 사업 지원 대상 지역 선정에서 접경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통하여 접경 지역 지자체의 관광 산업 관련 지역 주민들의 자체 역량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 거점 센터의 주요 필요 기능

- 생태관광의 거점기능

- 에코 뮤지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

에코 뮤지엄(Eco Museum)

- 기존 박물관처럼 건물 내 어느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어떤 지역의 일정 '영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산이나 무형의 기억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유산 및 기억을 수집·보존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박물관
- 기존 박물관의 수집, 연구, 전시, 교육 활동이 박물관 건물과, 학예사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보호구역 등의 영역, 지역공동체, 현지에 보존된 유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주요 모델로 제시
- 일반적 구성 원칙은 공동체(community)의 참여, 특정 영역(territory)에 기반, 건물 등의 시설이 아닌 지역에 보존된 유·무형의 유산의 존재 등을 공통적으로 강조
- 영역(territory), 거점박물관(core museum), 지역유산(satellite), 탐방로(discovery trail) 등을 구성 요소로 고려

- 지역 주민의 자발적 노력 및 연계 촉진
 -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발전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 상품이 지역사회 요구에 응하여 방문객으로 인한 지역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임
 - 길로 인한 지역 경제효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지역 관광자원개발부터 판촉 및 지역관광연계 활용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생산-소비-활용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관련 시·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은 지역내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의 이해 당사자와의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중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직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간 수평적 네트워크, 지역 거버넌스가 중요
 - 2019년 4월 공식 출범한 '접경 지역 균형 발전 공동연구 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시·군 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접경 지역 생태·관광·통일 등 복합 허브 기능
 - 인근 숙박업소, 농가식당, 특산물 판매 등과 연계하여 주변 마을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길을 걷는 관광객을 위한 복합 관광센터 기능과 생태자원 보존을 위한 전시·교육 기능을 동시 수행
- 통합정보체계 구축
 - 여행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맞춤형 통합 어플리케이션 구축
 - 안전지킴이, 걷기 마일리지, DMZ Pass, 스토리텔링 자원 등 도보 여행에 필요한 각종 관광 정보체계를 통합 운용

- 올레길, 산티아고 길 등에서 발행하고 있는 Tour-Pass 상품을 참고하여 DMZ Pass 발급 및 운영(현재 민간 차원에서도 관광벤처 기업으로 유사 패스 상품을 출시한 기업도 등장)
- 스토리텔링 발굴 및 활용
 - 기존 길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인 통제구역은 가급적 지양하여 단절구간 없이 도보 코스로 설계한 길임
 - 길 위에 비콘 등을 설치하여 길 주변의 스토리텔링 자원을 앱을 통하여 바로 구독 가능하도록 IoT 기반의 스토리텔링 육성
 - 지역 환경을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해설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가운데 해설사 육성
- 공유경제 활성화
 - 거점 센터나 인근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을 활용하여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
 - 현재 일부 운영 중인 ‘평화누리 게스트하우스’를 통일을 여는 길 전용 공동 숙박브랜드로 활용
 - 경기도에서는 평화누리길에 2016년부터 김포시, 연천군에 2개의 게스트하우스 지정 운영을 시작하여 2018년에 10개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 중

〈표 III-61〉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현황

지역	명칭	지정연도
김포시	조강리 마을회관	2016년
연천군	옥계리 문화복지회관	2016년
파주시	모티브 원	2018년
파주시	DMZ 스테이	2018년
파주시	쉽표	2018년
파주시	논밭예술학교	2018년
연천군	캠핑브릿지	2018년
연천군	임진강 해돋이 펜션	2018년
연천군	징파연수원	2018년
연천군	고대산 캠핑 리조트	2018년
김포시	문수산 농원	2018년
김포시	약암홍염천 관광호텔	2018년

자료: <https://dmz.gg.go.kr>(경기도 DMZ 비무장지대 홈페이지에서 구성)

- 도보여행객 편의 증진을 위해 친환경 공유자전거 대여
- 이용객 편의를 위해 대여지점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거점 센터 간 렌탈 시스템 공유
- 배송서비스도 통합 운영하여 도보여행객 편의 증진

+ 적정 운영체계 구축

- 전문기관 위탁 운영 방식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행사하도록 하는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전문기관에게 위탁 운영
 - 행정안전부가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 운영하거나 10개 지방자치 단체가 합의 하에 단일한 전문기관에 각각 위탁 의뢰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 가능
 -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사)제주올레길 운영에 대한 사무위탁
- 지방자치단체조합 활용
 -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자치단체 간 상호규약에 따라 사무 등을 공동처리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 단 지방자치단체조합 구성원인 시·군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사항임
 - 법 제162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 따라 운영되므로 안정성 및 지속성은 담보될 수 있으나, 설립절차가 다소 복잡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까지 받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음
 - 사례: 남원, 장수, 구례, 곡성, 함양, 산청, 하동 등 지리산 인근 7개 시·군이 지리산 관광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표 III -62〉 통일거점센터 운영방식 비교

구분	전문기관 위탁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운영 주체	민간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비	예산 + 민간자금	지자체 부담금 + 수익금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전문성 ◦ 혁신적 정책제안 가능 ◦ 통합적이며 유연한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안정적 지원 ◦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수립 ◦ 사업추진 효율성 증대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계약 연장여부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 약화 ◦ 사업추진의 집행력 부족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절차 복잡 ◦ 행정안전부의 지도·감독으로 지자체 자율성 약화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2017-11.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DMZ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운영 방안, 164p

● 지역별 거점센터 운영 실행 방안

+ 강화군

● 지역 여건

- 강화군의 경우 육상 접경 지역이 없는 여건으로 인하여 도보 여행길로서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나 전 지역이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2.6km에 불과한 지역도 있어 ‘통일을 여는 길’ 시작 지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
- 2014년 개통된 교동대교로 인하여 접근성이 개선된 교동도의 경우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KT가 ICT 기반 민관 협력 프로젝트인 ‘기가 아일랜드’ 사업을 통해 관광 안내소 플랫폼인 ‘교동 제비집’을 조성
- 인근 대룡시장 내에는 교동스튜디오를 조성하여 추억의 사진관 및 인공지능 DJ 기가지니 등도 운영 중
- 교동도 마을주민들이 마을기업을 통해 교동도 제비집과 교동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음
- 교동도는 거점센터로서 손색없기는 하나 숙박시설 부족 등을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강화 평화빌리지’와의 연계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접경권 초광역개발 시범사업으로 2014년 조성된 ‘강화 평화빌리지’는 게스트하우스 7개 동의 숙박 시설로 2016년부터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면서 수익 구조가 개선되고 있음

● 주요 운영 방향

- 시작 센터의 경우는 ‘통일을 여는 길’ 전체 브랜드 컨셉을 확립하게 되므로, 전 노선 안내에 필요한 핵심거점 기능을 수행
- 교동 제비집 2층 카페테리아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역 특산품은 주로 농·특산물로 콩 등 1차 농산물 위주여서 실질 주민소득 기여도가 높지는 않음
- 향후 1차 농산품뿐만 아니라, 도보 여행객을 대상으로 판매 가능한 6차산업으로의 발전 필요

● 기대 효과

- 약 3천여 명의 주민의 80%가 쌀농사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대룡시장 및 교동 제비집을 중심으로 관광업이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없는 교동도 주민들을 위해 각종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삶의 질 제고
- 추가 조성되는 숙박업소, 판매 시설 등에 일자리 창출 가능

+ 김포시

• 지역여건

- 김포시는 접경 지역 중 DMZ가 아닌 한강하구 중립지역 일명 프리 존(Free Zone)으로 북한과 접경
-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와 중·장기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애기봉, 조강 일대 평화공원 사업 추진
- 경기도 평화누리길의 시작인 1코스를 비롯하여 2, 3코스는 이미 수도권 방문객들의 인기 코스
- 통일을 여는 길은 기존 평화누리길 2, 3코스(25km)와 3코스 마지막 지점에서 일산대교까지 자전거길 8.3km 연결 계획
- 최대 30명 수용이 가능한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조강1리 마을 회관을 거점 센터로 활용 방안 고려
- 현재는 쓰레기 배출 문제, 낮은 비용 등으로 수익성 약화

• 주요 운영 방향

- 현재의 소규모 숙박시설에서 복합 관광거점센터로서 기능 강화
- 평화문화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 사회, 환경, 인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농산물 판매 창구를 개설하고 화장실 개방 등 시설 관리 실시
- 지역화폐인 통일 상품권으로 지역 민박, 농산물 구매 유도
- 김포 쌀, 포도, 배, 인삼 등 우수 농산물을 지역 특산품으로 유치
- 농업진흥청의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농촌마을’에 선정되어 캠핑장, 숙박시설 및 농촌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용강리 지역에 통일을 여는 길 구간 조성
- 1996년 북한 홍수로 김포 유도섬으로 떠내려 와 구출된 소를 기념하는 평화의 소 조형물과 북한강과 남한강을 합쳐 흘러들어온 한강과 한탄강이 이끌고 온 임진강, 북한의 개성을 지나온 예성강까지 한반도 중부내륙의 모든 물길을 담아내는 ‘할아버지 강’이라는 뜻의 ‘조강(祖江)’이라는 한강하구의 옛 지명을 스토리텔링
- 대립의 상징이었던 애기봉 전망대에 조성 중인 ‘애기봉 평화생태 공원’ 조형물과 함께 엽서, 배지, 에코백 등 스토리텔링 디자인 이미지 상품들을 다수 개발하여 활용
- 앞서 제시한 관광두레 형태의 주민 사업체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업체를 발굴, 육성하고 이에 적합한 운영 체계 구축

• 기대 효과

- 애기봉 트리 및 평화의 소 디자인 상품은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디자인 전문 회사를 발굴하여 생산업체의 고용창출 기대
- 기존 거점센터 게스트하우스의 직원 상근 및 농산물 판매 인력 투입으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가능
- 도보 여행길 투어 해설 인력, 평화교육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추가 일자리 확대

+ 고양시

- 지역여건
 - ‘통일을 여는 길’ 해당 10개 시·군 중 가장 도시 비중이 높은 곳으로 접경 지역은 송산동, 고봉동, 송포동 일대
 - 김포시와 일산대교까지 ‘통일을 여는 길’ 연결 협의 필요
 - 김포와 파주를 연결하는 ‘통일을 여는 길’을 고려할 경우 평화누리길과 동일한 행주산성-호수공원코스를 제외하고 일산대교를 건너 KINDEX에서 동패 지하차도로 연결되는 평화누리 5코스만을 대상 코스로 하는 것이 길의 연결성에 적합
 - 지하철 3호선, 경의선, 광역버스 등으로 서울지역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숙박 및 각종 편의 시설, 먹자골목 등도 잘 갖추어짐
- 주요 운영 방향
 - 고양시는 ‘통일을 여는 길’ 대상 10개 시·군 가운데 약 40%에 달하는 관광객을 확보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꽃박람회, 다양한 KINDEX 개최 박람회, 한류 월드 등으로 도보 여행길 사업 홍보 채널로 중요한 역할 수행 가능
 - 거점센터로는 기존의 고양관광안내센터 활용이 가장 현실적이며 센터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쉼터, 알림터, 어울림터 구비
 - 한옥으로 지어진 고양관광안내센터는 화장실, 쉼터(정수기, 무료 와이파이), 각종 관광 안내 자료, 전통놀이 프로그램 제공
 - 고양관광안내센터는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내의 어울림터는 다목적 복합 문화공간으로 영상 상영, 전시, 공연 등이 이루어짐
 - 고양문화마켓 행사에서는 30여 명의 공예작가가 참여한 전통 공예 제품 판매, 전래놀이, 전통 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어린이 대상 전통놀이(비석치기, 옷놀이, 공기놀이, 산가지 나무)와 한복체험 등도 진행
- 기대 효과
 - 연 1,000만 명이 넘는 고양시 방문 관광객에게 ‘통일을 여는 길’ 홍보 효과 극대화

- 다목적 문화 공간 활용을 통하여 정기적인 연주회 및 평화뮤지컬, 각종 공연 등을 실시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도 기대

+ 파주시

- 지역여건
 - 평화누리길 9코스 시작점인 울곡 습지공원에 거점 센터 건립 가능
 - 울곡습지공원은 버려져 있던 습지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발한 생태공원으로, 임진강 인근 평야에 조성
 - 연꽃 군락지, 억새 등 생태자원 외에도 솟대, 장승, 물레방아, 초가 원두막 등이 있어 쉼터로서 기능 충분
 - 인근의 수목원, 캠핑장 등으로 연계자원도 양호
- 주요 운영 방향
 - 기존 안내소의 기본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
 - 도보 관광객들의 쉼터 기능은 물론,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도보여행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변 자원 및 프로그램 안내 치중
 - 2017년 4월 말부터 시작된 울곡수목원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사임당 숲 명상’은 방문객 재방문율이 높으며, 파주뿐만 아니라 고양, 김포, 인천 등의 시민들도 활발하게 이용 중
 - ‘통일을 여는 길’과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 기획 필요
 - 거점센터는 기존 안내소 운영방식을 준용하되, IOT 기술을 접목한 무인거점센터의 활용 방안도 고려
- 기대 효과
 - 판문점, 임진각 등 파주시가 보유한 안보 관광자원을 활용한 ‘통일을 여는 길’ 활성화 기여
 -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 위주의 안보관광객을 도보 여행길을 통한 개별관광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관광 서비스 모델 제시
 - 숲 치유 프로그램과의 연계로 추가 일자리 창출

+ 연천군

- 지역여건
 - 경기도에서는 ‘평화누리길 거점센터’로, 연천군이 추진 중인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 구역 내의 군남면 옥계리 일대를 고려
 - 연천을 시작으로 김포, 파주, 고양시로 확대 예정이며 총 사업비 40억 5,000만 원을 투입하

여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업 진행 예정

- 유사한 성격의 관광 거점센터를 행정안전부 사업(통일을 여는 길)과 경기도 사업(평화누리길)으로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통합 및 조정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연천군의 경우 한탄강, 전곡리 유적지와 인접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주상절리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
- 군에서 추진 중인 연천 DMZ 농촌체험 관광특화단지, 임진강 테마 파크 조성사업 등 역점사업과의 연계성도 도모 필요
- 주요 운영 방향
 - 그동안 연천군에서는 갈수록 고령화 되는 지역 여건과 공동화 되는 학교 등 교육 공간 활용을 위해 동이리의 마전분교에 예술가 레지던시를 조성하고 창작공간으로 제공함
 -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카페테리아, 아트마켓 등을 신축하고 숙박 및 카페운영, 농산물 판매 등의 활동을 진행
 - 이러한 경험을 활용하여 새로 조성될 거점센터에 적절히 활용
 - 특히 접경 지역 가운데 4곳만 선정된 관광두레 지원사업의 주민 사업체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연천군에서 추진해 온 ‘연천 체험형 통일평생교육특구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개최된 ‘통일평생교육 박람회’도 주요한 관광객 유입 요인임
 -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교육 및 예술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현장 학습을 통한 고정 수요 창출
 - DMZ 울트라 트레일 러닝대회, 국제자전거 대회 연계 DMZ 자전거 투어 행사 등 군의 문화관광 체육 행사 중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현
- 기대 효과
 - 예술가 레지던시 구축으로 청년층 유입 및 지역 활력 제고와 주민들에게 예술체험의 기회 제공
 - 숙박 관리자, 아트마켓 담당자, 카페테리아 운영자,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자, 프로그램 강사, 레지던시 입주 작가 등 다양한 방면의 고용창출 기대
 - 여름철 한탄강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관내 낙농업 재료를 활용한 청년 마켓을 운영할 경우 지역 창업 활성화도 기대

+ 철원군

- 지역여건

- 철원에는 DMZ 안보관광 자원으로 백마고지 위령비와 기념탑, 노동당사, 철원 제일감리교회 터, DMZ 생태평화공원, 철원군병영체험 수련원 등이 ‘통일을 여는 길’과 관련하여 활용되고 있음
- 경원선 백마고지 역과 신철원 터미널 등 수도권에서 1시간 정도면 이동 가능한 대중교통 여건을 구비
-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거점센터는 갈말읍 지경리에 위치한 두루셀 숲속문화촌 등을 고려
- 이곳은 자연 휴양림으로 숙박, 체험시설을 갖춘 공간이며 목재문화 체험관, 삼림욕 체험장, 족욕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 자연휴양림을 기반으로 숲 레저단지조성사업까지 연계하여 산악 레포츠 사업의 기반과 숲길, 산책길 조성 등의 계획 추진
- 주요 운영 방향
 - DMZ 안보관광 및 한탄강 래프팅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주력
 - 에코 어드벤처로 산악 레포츠시설과 숲속 산책길 등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산림체험과 휴양 공간 활용
 - 관내에 위치한 군부대 폐 막사 활용한 체험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 갈말읍에 위치하여 240명 수용 가능한 병영체험수련원 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단순히 군대 생활을 간접 체험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간부 체험 프로그램’ 등 차별화 된 프로그램으로 이용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군 체험 프로그램’ 등 이색 프로그램도 기획 고려
 - 폐 막사 체험시설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여 관리를 맡고 도입시설별 운영자를 모집, 위탁운영 하는 방안을 고려
- 기대 효과
 - 폐 군사 시설의 효율적 활용
 - DMZ 안보관광지, DMZ 생태평화공원, 병영체험수련원과 연계하여 단일 품목 관광이 아닌 연계형 체류 관광으로 유도 가능
 -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로 주민조직을 참여시켜 지역 수익구조 확대 가능

+ 화천군

- 지역여건
 - 화천군의 ‘통일을 여는 길’ 예정지는 산악초 마을, 산천어축제장을 거쳐 산속호수마을, 평화

의 댐 캠핑장에 이르는 약 68km로 숨은 명소가 많아 트레킹 동호회의 입소문으로도 이용객이 많음

- 교통 여건은 좋지 않지만 깨끗한 자연, 한가로운 마을 풍경 때문에 생태관광으로 각광 받음
- 현재 동촌리에 산속호수마을로 운영 중인 해산농촌체험연수원을 거점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고려
- 폐교를 활용하여 만든 이곳은 평화의 댐에 이르는 길에 파로호를 끼고 걸을 수 있어 화천군에 서도 ‘한 뼘 길’이라는 도보 코스 운영
- ‘한 뼘 길’은 폭이 좁은 길을 뜻하며 15km의 생태 체험코스임
- 파로호는 화천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인공 호수로 국내 호수 가운데 축조 연대가 가장 오래됨
- 6.25 전쟁 때 국군이 중공군의 대공세를 무찌른 것을 기념해 이름 붙여진 ‘파로호’는 전적 기념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평화의 댐까지 유람선도 운행 중에 있음
- 주요 운영 방향
 - 2007년 환경부 ‘생태 우수마을’로 선정된 산속호수마을을 거점 센터로 활용할 경우 생태체험 관광객을 위한 숙박업소로 사용 고려
 - 이곳의 ‘해산 농촌체험연수원’은 시설 보강 등 리모델링 필요
 - 천연 자연 환경의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점을 활용하여 에코뮤지엄 거점센터로서 기능을 부여 하고 민물낚시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고객 유입
 - 지역에서 개최한 ‘호랑이 고개축제’ 등 생태 보존이 잘 되어 있어 야생동물을 보호와 관련 지역자산의 스토리텔링 시·도
 - 도보와 배편 이외에는 접근이 어려운 ‘비수구미 생태길’ 등 트레킹 명소로서의 명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거점 센터와의 연계성 고려
 -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등 국내 최대 관광객 유입 행사로 자리 잡은 ‘산천어축제’와도 연계 하여 홍보 실시
 - 유입된 관광객들을 화천 지역 내의 숙박 시설로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
- 기대 효과
 - ‘한 뼘 길’, ‘비수구미 생태길’ 등 기존 우수 트레킹 코스 자원과 시너지 효과 발휘 가능
 - 일부 구간만 연결하면 종합적 트레킹 코스 완성
 - 거점센터가 인근의 산촌 생태체험 마을과의 연계로 새로운 관광 경험 부여와 지역 주민 소득 증대

- 산촌 생태체험 지원, 트레킹 투어가이드, 파로호 낚시체험 지원 등으로 인해 추가 일자리 창출 가능

+ 양구군

• 지역여건

- 안보관광과 편치볼 관광객을 포함하여 연간 약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DMZ 접경 10개 시·군 중 가장 적음
- 관광자원 다양화를 위해 춘천역에서 출발하는 양구 시티투어버스는 두타연, 편치볼 코스로 운영되고 있음
- 경춘선을 따라 주말 운영되는 호수문화열차는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에서 운영됨
- 관내에서 실시되는 축제 중 하나인 ‘청춘양구 DMZ 마라톤대회’는 주변 군부대 후원까지 포함하여 참가자들에게 지역 관광지 방문 및 숙박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음
- 이러한 행사를 비롯하여 ‘금강산 가는 옛길 걷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통일을 여는 길’ 코스를 활용
- 화천지역은 무엇보다 군부대 주둔에 따른 지역 경제의 영향이 막대한 곳으로 ‘접경 지역발전 종합계획’ 사업으로 폐 군대막사를 활용한 거점형 게스트하우스 조성을 계획
- 유사하게 군부대 주둔의 영향력이 지대한 철원, 양구, 인제군 등과 연계하여 종합 발전 방안 마련 필요

• 주요 운영 방향

- 사단 직접 입영제 시행에 따른 면회객 증가 현상 등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방문동기 부여
- 국토 정중앙, 금강산 물과 두타연 물이 만나 남북한 물이 합쳐지는 상징적 경관인 두물머리 등의 스토리를 홍보에 적극 활용
- 관내에 베니키아 호텔 외에는 대부분 펜션, 민박, 모텔 등의 숙박 시설로 방문객 편의를 위한 관리 필요
- 관내 투어버스는 있으나 박수근 미술관, 양구도자기 박물관 등 문화 자원과 도보 여행 길을 연계하는 종합 해설 인력은 부족해 전문성을 가진 도슨트, 투어가이드 등의 양성 필요
- 두타연 인근 도보 길에는 집중호우로 매설 지뢰가 떠내려 올 위험 요소가 있어 특별한 안전교육 필요

• 기대 효과

- 기존 관광자원과 마을의 연계성을 높인 체험 관광 상품 제공으로 지역 소득증대 및 주민 참여 증대
- 관광객 방문동기 증가와 체류형 관광자원을 확보하여 관광활동의 다변화를 통한 지역 브랜드 제고

+ 인제군

- 지역여건
 - 서화면에 2012년 조성된 평화빌리지의 활용 적극 고려
 - 이곳은 DMZ와 인접한 청정지역에 생태·문화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체류형 안보체험 관광지를 목적으로 조성되어 운영 중
 - 서화 DMZ 평화생명동산에서는 ‘DMZ 역사에서 “평화와 생명”을 배운다’는 취지 아래, DMZ 생태평화교육 실시
 - 이곳은 1970~80년대 말까지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음식업과 유흥사업이 활성화되었던 지역임
 - 특히 전방과 가까운 서화리보다 다소 뒤쪽에 위치한 천도리는 장병들이 면회나 휴가 때 반드시 들르는 곳으로 유명
 - 군 전역 남성들에게 천도리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지역이며, 군 생활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연계 가능
 - 민통선의 5km 북상으로 ‘통일을 여는 길’ 관내 코스가 민통선을 벗어나게 되었지만 산림청 관할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 출입은 허용되지 않음
 - 사람 발길이 닿지 않아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숲길 물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코스로 개발 가능함
 - 도보 여행길 조성을 위해서는 산림청, 환경부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
 -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파생되는 폐 군사시설의 활용 및 자전거 동호인들의 통과의례 코스인 서울-속초 코스 자전거 라이딩 거점 지역으로의 명성 활용 가능
 - 자전거는 물론 바이크 라이더들도 홍천-인제-속초 코스를 입문 때부터 이용
 - 친환경 생태 이동 수단인 자전거 친화도시로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여 생태 레저 스포츠 1번지라는 이미지로 지역 브랜딩
- 주요 운영 방향
 - 서화면 일대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여 ‘통일을 여는 길’ 사업과 연계하는 접경 지역

거점 허브역할 담당

- 친환경 자전거 및 바이크 이용객, 도보이용객, 인근 군인, 지역주민 등을 주요 이용대상으로 설정
 - 수리 정비 및 부품 판매는 물론 휴식 공간 등의 편의 시설 다양화
 - 단순한 거점 센터보다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활용하는 복합 거점커뮤니티센터로 운영
 - 인근의 생명평화마을은 물론 다양한 숙박, 식당 및 판매점과 연계
 -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팝마트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 수익 창출 도모
 - 인제군에서 군 생활을 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군대 생활 체험 키트 판매 및 걷기 대회 개최
 - 복합적 요소가 가미된 거점 센터인 만큼 총괄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민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 정비
- 기대 효과
 - 자전거 및 바이크 특화 요소가 가미된 거점 센터 브랜드 구축
 -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으로 보다 다양한 일자리 추가 창출
 - 지역주민과 이용자 간의 보다 다양한 소통 및 교류 수행

+ 고성군

- 지역여건
 - 고성군에는 송정마을에 위치한 평화생태마을이 2016년도에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독일의 바이로이트 지역과의 우호 교류 협정에 따라 설계되어 있음
 - 향토음식체험관 및 주변에 야영장까지 조성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용객들이 활발하게 찾고 있지는 못함
 - 거점 센터의 보다 활발한 기능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최북단 마을 명파리와 통일전망대 등이 위치한 지역에 설치가 보다 효과적
 - 통일전망대는 남북 화해와 교류 시대에 금강산 육로 관광의 길목으로서 그 의미가 높으며 6.25 전쟁체험전시관 및 DMZ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어, 전쟁과 분단의 비극을 체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명산 금강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주요 거점임
 - 특히 '통일을 여는 길' 종점으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으므로 DMZ pass 등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의 협의 등이 필수임
- 주요 운영 방향
 - 통일 전망대를 주요 거점 센터로 활용할 경우 전체 '통일을 여는 길'의 종점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전체 도보 여행길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필요

- 특히 원활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DMZ pass 발급 및 운송을 지원하고 완주 기념 상징물(관광 기념증서 등)을 제공
- 센터 부지 내에는 '통일을 여는 길' 상징물 건립하여 포토 존 활용
- 인근 통일전망대, DMZ 박물관 및 6.25 전쟁체험전시관 등을 활용하여 통일 교육장으로도 활용
- 인근 송정마을과의 연계성도 고려하여 관광객 편의 및 휴식공간인 '팜카페(Farm-Cafe)'를 마련하여, 지역특산물 판매
-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인근 대진항 등대 등 해변 관광 자원도 적극 활용
- 실제 운영을 위해서는 위탁 운영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 주체가 통합 운영하는 방안, 별도의 마을 법인 설립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기대 효과
 - 접경 지역에는 흔하지 않은 바다 자원 연계 활용으로 지역 특성화 및 홍보 효과 증대
 - 통일전망대, DMZ박물관, 전쟁기념관 등을 연계한 통일·안보 최대 교육장으로서의 정체성
 - '통일을 여는 길' 중점으로서의 상징성 부각

2)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연천, 포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등 7개 시·군에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DMZ를 비롯한 임진강 주상절리 등 접경 지역에는 자연 환경 자체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곳이 다수임
- 이러한 천연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 자원을 활용한 휴양 서비스 산업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Outdoor 레저 스포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악, 익스트림 스포츠 관련 관광 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강원 생태평화(2019년), 연천 임진강(2019년)은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 특히 청정 생태 관광과 힐링, 휴양 등을 연계하고 예방 의학과 대체 의학 영역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 분야는 웰니스(Well-being과 Happiness, fitness를 포함하는 개념)의 영역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음
- 접경 지역에는 이러한 지역 환경을 배경으로 웰니스 관광에 생태 레저 스포츠 산업까지를 접목한 관광 클러스터 조성이 지역 산업 발전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됨
- Global Wellness Institute가 발간하는 Global Wellness Economy Monitor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6,394억 USD이며 그 후로 5년간 연평균 7.5% 성장하여 2022년에는 9,194억 USD에 달할 것으로 예측.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하여 연 평균 13.0% 성장 전망

- 웰니스 관광은 접경 지역의 경쟁 우위 요인인 ‘청정 및 생태 자연 환경’, ‘힐링·휴양·관광’ 등에 잘 부합하는 분야임
- 뷰티 및 안티 에이징, 스파, 온천·광천, 피트니스와 심신안정, 예방 의학과 공중보건, 대체 의학, 식생활·영양·다이어트 등 다른 웰니스 시장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
- 국제적으로 웰니스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일반 관광객 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내 웰니스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도 일반 국내관광객보다 80%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사업 진행 경과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에 웰니스 관광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방, 힐링·명상, 뷰티·스파, 자연·숲 치유 등 4가지 테마의 우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니스 관광 시설을 2017년 25개, 2018년 8개, 2019년 10개 선정하여 기반 구축 작업 실시
- 2017년 선정된 25개 지역은 다음과 같음

테마	지역	시설	테마	지역	시설
한방	서울	약다방봄동	뷰티 스파	서울	올리바인 스파
		여용국 한방스파			정관장 스파 G
		티테라피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스파
	대구	하늘호수		부산	스파랜드 센텀시티
	경남	산청동의보감촌		대구	리조트 스파밸리
힐링 명상	강원	힐리언스 선마을		인천	청라 스파렉스
	충북	깊은산속옹달샘 아침편지 명상치유센터		광주	편백나라효소 궁
	제주	WE 호텔 웰니스 센터		경기	편백숲힐링토피아 허브아일랜드 허브힐링센터
자연 숲 치유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순천만습지		충북	리솜포레스트 해브나인 힐링스파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전북	진안홍삼스파 스파라쿠아 전주온천
	경북	국립산림치유원(다스림)		제주	오설록 티뮤지엄 &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
	제주	제주허브동산			

자료: 연구진 구성

- 2018년에 추가로 선정된 8개 지역은 다음과 같음

지역	시설명	테마
서울특별시 광진구	비스타 워커힐 웰니스 클럽	힐링/명상
경기도 고양시	아쿠아필드 고양	뷰티/스파
강원도 동해시	동해 무릉건강숲	자연/숲치유
강원도 정선군	파크로쉬 리조트&웰니스	힐링/명상
충청남도 태안군	팜카밀레	자연/숲치유
전라남도 신안군	태평염전 해양힐링스파	뷰티/스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 치유의 숲	자연/숲치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화리조트 스파테라피센터	뷰티/스파

자료: 연구진 구성

- 선정된 시설은 구글 등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높은 포털 사이트에 ‘Wellness Korea’, ‘Medical Korea’, ‘Visit Korea’ 등의 검색어를 통하여 소개되고 있는데 웰니스 관광지 VR, 웰니스 map 등을 통해서도 홍보되고 있음
- 해당 시설은 2020년까지 총 50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임
- 해외 관광 박람회 등 한국관광공사의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도 다각적인 홍보가 실시되고 있어 2018년 ‘웰니스 관광 33선’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2만 7,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웰니스 관광 시설 지정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의 특색 있는 웰니스 관광 거점육성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지원 사업을 2018년도부터 실시하였는데 2018년에는 경상남도, 2019년에는 충청북도가 선정되어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총 8억 원의 예산이 각 지역에 투입됨
-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건강, 휴양 등과 관련된 관광자원들을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2018년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최초로 선정된 경상남도는 산청, 통영 등 일대를 지정하여 한방 향노화와 해양 웰니스 관광 중심지로 육성
- 내륙지역은 한방향노화를 주제로 산청, 함양, 합천, 거창 등이 클러스터에 포함되었으며 산청 ‘동의보감촌’과 함양 ‘산삼휴양밸리’ 등을 중심으로 한방 족욕, 약초차 요법, 향노화 약선 요리 등을 제공
- 산청 ‘동의보감촌’은 웰니스 관광 25선에도 포함된 곳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3년 연속 최우수 축제인 ‘산청한방양초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 ‘동의보감촌’은 축제와 관련하여 한방 기 체험장, 동의본가 등 한방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음. 특히 한방양초버블체험, 한방화장품 만들기 체험 등 전통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선보이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향노화 웰니스 관광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
- 해양 웰니스는 통영, 거제, 고성 등이 클러스터에 포함되었으며, 해양 자원을 중심으로 피부 건강 프로그램, 스파 등을 제공함
- 정부지원을 통해 휴양 관광지, 치유 관련 시설 등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홍보는 물론 인식제고와 웰니스 관광 전문가 양성 등을 진행
- 웰니스 관광은 휴양 개념과 관광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으로 단순한 1회성 체험이 아닌, 연계 상품들을 적절히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웰니스 관광은 휴양 레포츠형, 건강의료 휴양형, 휴양 치유형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관련 개념은 아래 표와 같음²⁶⁾

〈표 III-63〉 유형별 웰니스 관광

유형	개념
휴양 레포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해양 자원을 활용한 액티비티 체험과 자연 속에서 휴양을 즐기는 관광서비스가 결합한 형태 ◦ 산림자원의 활용 사례: 숲속 어드벤처 시설을 통한 팀 빌딩 프로그램 및 액티비티 체험
건강 의료 휴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치유 또는 회복을 목적으로 산림·해양 자원을 활용하는 의료 프로그램 및 시설을 갖추고 미병, 질환, 치유, 회복 등으로 분류하여 치유효과를 의과학적 정량평가를 통해 규명하는 의료관광 서비스
휴양 치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음악, 미술 등을 소재로 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심신 안정에 초점을 두는 서비스 ◦ 단순한 흥미 유발 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치유효과를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연천군은 2017년에 고대산 캠핑리조트 내 연천 베이스볼 파크에서 3일간 연천 레저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스포츠카 경연대회, 애견페스티벌, 패러글라이딩 체험, 에코 캠핑, 뮤직 페스티벌 등을 다양하게 진행
 - 특히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을 통해 서울에서 약 1시간 반이면 이 지역에 닿을 수 있어 각종 익스트림 레포츠의 활성화 기대
- 포천시는 ‘스포츠 투어리즘 도시’를 표방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즐기기 위해 문화·관광·스포츠·헬스케어를 통합한 서비스를 주창
 - 세계문화유산인 국립 포천수목원과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생활 밀착 체류형 관광 모델을 개

26) 양구군 자연치유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2019, 강원연구원, 조근식, 이영주 연구위원

- 발하고 있으며 이 모델의 중심에는 남북 스포츠교류 종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 등을 지원받아 군내면 일대 48만여m² 부지에 실내외 체육시설, 스포츠산업 창업 및 육성시설, 미래형 스포츠 물, 500실 이상의 유스호스텔 등을 건립하는 사업
- 양구군에서는 ‘자연 치유센터’를 조성하고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는 스포츠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조성된 ‘자연 치유센터’는 급식시설을 제외한 의료시설과 제조·가공시설을 외부 업체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자연 치유센터 2층에 조성된 숙박시설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으로 인하여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의료시설 내 숙박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료 목적의 병상으로 활용해야 하며, 관련 이용료는 병·의원 병실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되므로 단순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
 - 또한, 양구군은 종목별로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를 조성하여 전국 단위의 각종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스포츠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
 - 스포츠 시설 주변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시설도 질적으로 수준을 향상시켜 연간 20여 개 종목, 100여 개 각급 대회를 개최
 - 대회 참여를 위해 약 7만 8,000명이 방문을 하고, 전지훈련을 위해서도 2만 5,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그 결과 ‘제5회 스포츠마케팅 어워드 2019(sport marketing awards 2019)’에서 자치단체 부문 본상 수상
- 화천군은 DMZ MTB 자전거 랠리 코스 명품화를 비롯하여 동서 녹색 자전거 도로 중심지로의 도약 등 전국 유명 자전거 메카로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여 산악 레포츠 산업의 토대를 구축
 - 또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여름축제 ‘회천 쪽배축제’는 수상 자전거, 카약, 카누, 범퍼보트, 워터 볼, 페달보트 그리고 특히 인기가 높은 용선 경주대회 등 다채로운 수상 스포츠는 물론 북한강을 가로지르는 짙 라인을 비롯해 자전거, 스마트 바이크, 미니 자동차 체험 등 가족 레포츠도 함께 즐길 수 있음
- 인제군은 국내 최대의 산림 보유 지역(군민 1인당 산림면적 4.78ha)이라는 특징에 맞게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휴양·레저사업을 진행 중
 - 휴양을 위한 산림 조성, 도시 녹화 식생 자재 보급, 미래형 산촌 마을 개발에 약초 산업까지 광범위한 산림 산업 개발을 추진 중
 - 여기에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래프팅, 클라이밍, 산악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 각종 레포츠까지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특히 인제군은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직접적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 전개가 기대
- 고성군은 통일전망대를 비롯하여 대표적인 DMZ 연관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며 이에 못지않게 생태 관광 여건 역시 이미 잘 조성되어 있음
 - 대표적으로 송지호 호수에 조성된 천연생태 공원은 철새 관람은 물론 습지, 산책로 등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음. 또한, 화진포에 조성된 지상 3층 규모의 생태박물관은 뛰어난 경관과 함께 주변의 관광시설들을 연계한 코스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 고성군의 경우 기존 관광 자원들이 생태 및 레저 관광을 기반으로 풍부하게 조성되어 있어 본 제안 사업의 효과적 전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육성 원칙

+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확보를 통한 사업 전개

- 휴양·생태 레저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넓고 쾌적한 공간을 폭넓게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르게 됨
- 또한, 인근 지역 주민들 수요만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격지 관광객들의 유입이 필수 전제 조건임
- 상당수의 기존 휴양·레저 시설들이 많은 투자비를 동원한 공사 끝에 조성되지만 기획 초기 단계 계획과는 달리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고객 유입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가동률이 낮아지고 시설 재정비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을 반복해서 겪게 되는 사례가 빈번
- 특히 스포츠 행사를 기반으로 계획된 시설 투자와 이에 따른 시설 활용 계획이 당초 예상을 빚나가는 경우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올림픽과 같은 대형 이벤트 개최 이후 겪게 되는 대표적 후유증 중의 하나로 이야기 되고 있음
- 다행히 산악 레저 스포츠 등은 대규모의 시설 투자가 뒤따르는 기존의 스포츠 이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천연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 역시 인기 대회를 거듭 될수록 자연 자원의 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임
-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기획되는 생태 레저 관련 이벤트는 최대한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주제에 충실하도록 구상되어야 함
- 또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사한 기획 이벤트들을 중복하여 개최하여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최적화 된 분야를 선별하여 특

화시키는 방향으로 향후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제안이 휴양과 생태 레저를 복합하는 클러스터 내용으로 구성되는 만큼 각 분야별 전문 영역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함

+ 휴양과 레포츠를 복합한 체류형 관광 정착

- DMZ 인근을 비롯한 접경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교통 접근성이 최근에 개선된 곳이 많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음
- 또한, 인접 관광지와 연계성이 높지 않아 한 곳만을 찾는 여행 수요가 많음으로 인해 방문 고객 대비 체류 시간과 소비 금액이 높지 않았음
- 휴양과 레포츠를 복합한 관광 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1일 이상의 체류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
- 특히 숙박업소 현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편이어서 실제 스포츠나 레포츠 혹은 축제 행사가 진행되는 지역에 머무르는 경우보다 인근 대도시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소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음
- 휴양지의 경우 쾌적한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다른 어떤 관광 서비스 산업보다 높으므로 시설 개보수 및 신축 등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 지원 사업은 물론 민간 투자의 활성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
- 휴양 시설의 경우 요양시설, 요양 병원 등 의료 목적의 시설이 다수를 이루는 반면, 레포츠의 경우 스포츠의 성격이 강하므로 두 가지 분야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참고 요소로 최근 성장 추세인 웰니스(Wellness) 개념을 보다 세분화, 고도화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접경 지역 산림 자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산악 스포츠의 경우 기존의 일반 스포츠에 비해 성장성은 높게 판단되나 소비자 안전 문제, 장비 수리, 전문 보조 인력 등 사업 실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전제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함
- 기존 의료 관광과는 차별화 되어 산림을 활용한 자연 치유 문화를 보급하고 기존 산림 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산악 레포츠의 즐거움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복합 관광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임

●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유사 사례 분석²⁷⁾

+ 일본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생태관광

27)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DMZ,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운영방안, 2017.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소영, 김상민 연구원

- 현황

- 야쿠시마는 규슈 지역 최남단에서도 남쪽으로 60km에 위치한, 둘레 132km, 면적 505km²의 작은 섬
- 아열대에서 냉온대까지의 기후가 공존하는 독특한 생태계와 수령 1000년이 넘는 야쿠스기 삼나무, 이끼, 그리고 풍부한 수계 때문에 ‘태고의 숲과 물의 섬’이라 불림
- 1993년 일본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록
- 특히 2003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월령공주(모노노케 히메)의 배경으로 유명해 짐
- 일본 본토 최남단 가고시마 공항에서 비행기로 35분, 고속여객선으로 1시간 50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취약한데도 여름 성수기 주요코스에는 하루 1,000여 명의 관광객이 몰림

- 사업 추진 경과

- 세계자연유산 등록 이전에도 야쿠시마는 원시림에 가까운 울창한 삼림으로 인해 생태관광지로 주목을 받아옴
- 1980년대 후반까지는 등산객 중심으로 1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았으나 최근에는 40만 명이 넘고 있음
- 여행상품으로는 1박 2일 혹은 3박 4일 일정이 주를 이루는데 3대 코스인 조몬스키, 월령공주의 숲, 야쿠스기랜드 뿐만 아니라 시토 코가주마르공원, 바다거북 산란지인 나가타하마, 센 피로타키도 둘러보게 됨

- 세부 구성 내용

- 야쿠스기랜드는 시라타니운스쿄와 함께 야쿠시마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곳으로 야쿠시마 국립공원 1,000m 지점에 있으며 일부가 세계유산에 편입
- 부처삼나무, 쌍둥이삼나무, 모자삼나무, 2대 삼나무(에도시대에 베어다가 그대로 둔 흔적에서 이끼가 자라고 그 위에 다시 씨앗을 틔어 거목으로 자란 나무)와 같은 고유명시를 붙인 특이한 형태의 야쿠스기가 있어 기이한 형태의 원시림 이미지를 제공
- 150분 도보 코스에는 추정 수령 3,000년이라는 야요이스기 등 기이한 형태의 거목들과 얽히고설킨 녹색 이끼류가 관광객들에게 신비감과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 일으켜 가장 인기 있는 코스
- 조몬스키 코스는 왕복 22km, 9~10시간이 소요되는 난코스로 현지 가이드의 안내가 필요
- 세계 최대 거북이 산란지인 나가타하마는 섬 북서쪽 해안 3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500여 명의 주민이 거주
- 바다거북 산란지로 2005년 랍사르 조약에 등록된 세계적인 생태 환경지이며 바다거북 산란과 부화과정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생태관광 명소

-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연락협의회는 산란기에 일반관광객을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예약제를 활용해 생태 관광 취지 지키고 있음
- 나가타 에코투어는 지역 이야기꾼과 걷는 2시간 투어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요리, 아름다운 자연, 소규모 마을과 신사를 둘러보는 코스
- 바다거북 산란을 보기 위해서는 밤 시간 대, 바닷가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지역 내 숙박시설을 책임지는 ‘나가타 숙소 조합 가맹 여관’을 조성하기도 함
- 시사점
 - 1990년 6월 가고시마 현이 수립한 ‘종합기본계획 기본이념’에 따른 전략 프로젝트 14개 가운데 ‘환경디자인’에 해당되는 ‘환경문화촌 구상’을 통해 자연환경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룬 구체적인 지역 정비 사업으로 안착
 - 자연과 공생하고 상호작용하는 지역개발을 생태관광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설정하여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으로서 대규모 리조트가 아닌 작은 규모의 관광지로서 야쿠시마의 자연, 마을경관, 섬 역사 등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
 - 원래 섬의 약 20%만 원시림으로 지정된 유산 지역이었던 곳을 1993년 세계유산지역 지정 이후 훼손된 산림을 급속도로 복원하여 주요 탐방로에서는 거대 삼나무 절단흔적과 함께 산림 이용, 훼손, 보호의 역사를 관광객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야쿠시마 생태관광은 패키지든 개인 소그룹이든 대부분 현지가이드의 안내로 이루어지며 가이드의 역할이 생태관광의 질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 수행
 - 이곳 산림가이드는 ‘산림 체험가이드’, ‘환경교육 체험가이드’, ‘자연 관찰 해석가이드’, ‘세계유산의 원시적 자연생태에 관한 가이드’ 4가지 형태로 구성
 - 현지가이드는 규슈 최고봉인 미야노우라타케를 안내하는 ‘등산가이드’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산등록 후 생태관광이 강조되면서 생태관광가이드로 전환
 - 생태관광에서 강조되는 내부 역량을 바탕으로 한 관광 사업의 핵심으로 현지인들 삶의 방식인 생태환경문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
 - 야쿠시마지구 에코투어리즘 추진협의회(2004년 9월 결성)는 ‘가이드등록 인증제도’에 따라 자연유산과 자연공원법, 야쿠시마에 관한 기본적 내용 학습이나 강의수강 등, 생태관광에 대한 기본 지식과 가이드로서 지켜야 할 규정 등 사전지식을 갖추
 - 이들 가운데에는 현업 은퇴 후, 이주하여 후 전업으로 다시 활동하는 다양한 경험 보유자들도 포함됨
 - 기본적인 가이드 서비스 이외에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 지원, TV나 영화 촬영 지원, 숙박시설 안내, 래프팅, 피싱, 랜탈 사이클 등 관광객들이 원하는 체험활동 일체를 지원

+ 독일 지몬스발트 산촌 생태마을

• 현황

- 독일 지몬스발트는 세계적 생태도시인 프라이부르크 북동쪽 약 20km 떨어진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산촌마을로 흑림 지역인 독일의 전형적 생태관광지
- 전체 7,300ha 중 산림이 83% 차지하는 산림마을로 인구 3,000명의 작은 농촌마을에 매년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음
- 흑림 안에 잘 보전된 산림과 야생화 단지, 약초재배, 생태탐방로 등 흑림에서 살아온 마을 역사와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생태 관광지로 마을이 잘 보존됨
- 2000년 지몬스발트 근처 쾰바이탈러란트(Zweitalerland) 지역의 다섯 개 마을이 생태관광을 테마로 공동마케팅을 하면서 자연문화 체험코스가 생기고 생태관광 명소가 됨
- 천연 퇴비와 바이오가스,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통하여 양모와 면화, 와인, 목재 등 산촌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고 가공 판매
-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와인, 소시지, 맥주 등 대표상품에 우수제품 인증스티커를 붙여 판매수익을 높임

• 추진 배경

- 독일 남서쪽, 스위스와 프랑스 접경 지역에 자리 잡은 흑림지대는 전체 산림 면적의 2/3가 사유림으로 지역발전 차원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농업조건이 불리한 알프스 산악지역임으로 인해 농가 소득창출이 어렵고 인구 감소도 두드러졌던 지역
- 1960년대에 들어 지몬스발트가 속한 바이에른주는 농업과 관광을 접목시킨 농산촌 관광정책을 통해 인구유출 방지 노력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1997년에는 흑림 6개 자연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센터 설립
- 마을 특색을 살리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 박물관 건립, 문화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역 사회는 수익 창출 사업을 통해 민박집과 생태프로그램 개발, 특산물 판매 등을 지원
- 에코투어리즘을 표방하는 자연퇴비, 바이오가스, 벌목장작,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고 '농가SHOP'은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과일 잼, 와인, 빵, 꿀, 야생차, 고기 등을 판매

• 세부추진내용

- 16~19세기 흑림지역 일대에 지어진 30여 채 옛 건물을 원형 그대로 옮겨놓음
- 당시 산촌에서 사용했던 의복, 신발, 주방기구 등 생활도구들을 전시하고, 예배당을 비롯한 시계공장, 식용기름 공장, 곡식창고, 제재소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
- 전통주택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저탄소 생태관광자원을 활용

- 대형 관광버스 진입을 억제하고, 철도와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친환경 교통정책을 시행
- 철도의 경우 대도시는 국철을 이용하고 지역 간 연결은 프라이부르크 지역 운수연합과 지역 버스 연계 시스템 운영
- 2005년부터는 지역 내 민박을 이용할 경우 나누어 주는 쾰바이탈러란트 카드를 활용해 버스나 기차 등 교통망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였고 박물관, 미술관 등 130 여개의 시설도 할인 혹은 무료
- 버스나 기차가 운행되지 않는 구간은 현지에서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음
- 주민차량 렌트 시스템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승용차를 렌트카 회사에 등록하고 민박 손님이 필요로 할 경우 빌려주는 시스템
- 250개 농가의 4,000여 개 객실을 활용하여 지역민박을 운영하며 ‘Q마크 인증제’를 실시하여 농가 민박을 3등급으로 엄격하게 품질 관리한 결과 연간 10만 여명이 이용
-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하여 마을마다 캠핑장과 레크레이션 시설을 설치
- 생태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1인 평균 4.4일 정도를 머무르고 한 농가에 연 평균 1,600명 정도의 손님이 숙박을 하여 전체 관광객은 2백만 명, 관광수입은 6천 만 유로에 달함
- 생태자원 보전과 농촌관광, 특산물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0년에 협동조합 형태로 관광회사를 설립
- 시사점
 - 이 지역은 비록 산촌마을이지만 대도시인 프라이부르크와 국철로 연계된 통합교통체계와 주민차량을 이용한 렌트카 서비스 확립
 - 숙박을 할 경우 발급되는 게스트카드(G stkarte)로 박물관과 독일 남동부지역 일대를 무료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국내 투어 패스카드의 경우 이제 도입기에 있어 각종 시설에 대한 입장 할인 혜택에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작 가장 중요한 교통 시설과의 연계성이 낮아 사용이 제한적임
 - 가족 관광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바이럴 마케팅에 역점
 - 대표적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자전거 투어가 있으며 세계적 자전거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 (매년 7월에 3주간 개최)가 인근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 중임
 - 태양광 전지판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에너지 시설, 바이오매스 시설 전학 프로그램이 인기

- 지역 내에 위치한 6개 마을은 각각 나름대로의 특색을 보유하여 트레킹, 자전거 타기, 패러글라이딩 등 관광객 기호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비
- 초행자도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이 잘 구축됨
- 이 지역 관광공사는 주민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
- 관광회사의 주 수입원은 민박 숙소 소개 수수료이며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지역 홍보에 집중하며 재투자
-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유지를 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지역현황 파악,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자원 개발, 고객 네트워크 강화, 지역특산물 생산과 판매 지원, 이벤트 참여 독려, 지역 생산 제품의 지역 내 소비 시스템 구축을 설정
- 독일 내 약 8,000개 마을의 농촌관광 사례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6개 마을이 통합, 연계 관광으로 품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독자성을 추구한 결과
- 독자성 유지 방안으로 ‘최소한의 이동’, ‘신재생에너지 사용’, ‘지역 문화 보전’, ‘자연유산 보호’, ‘순환농업 장려’, ‘주민 참여 시스템 확충’을 채택
- 2002년부터 독일에서 서비스 산업에 도입한 Q마크 제도는 관광 서비스 분야에도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농촌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민박 등 숙박업소의 품질 제고에 한 몫
- 지역 주민 가운데 새로운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전문가들의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며 관광업 종사자 들 간의 공모전 추진 등 지역주민들과 프로젝트 공동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방안²⁸⁾

+ 휴양 의료시설 확대

-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 수요 발생
- 고령화 사회 도래, 만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예방 및 맞춤 치료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 필요
- 휴양 의료가 가능한 시설로는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들 수 있음
- 요양시설은 인근 주민들에게 설치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 요양 병원의 개설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함. 이 경우 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확인하여 개설을 허가하게 됨
-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른 요양병원 설립 기준을 위한 인력 구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28) 양구군 자연치유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 2019, 강원연구원, 조근식, 이영주 연구위원

〈표 Ⅲ-64〉 요양병원 인력 기준

구분	요양병원 인력기준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치과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한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자료: 강원연구원, 양구군 자연치유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 2019

- 현재 일부 지역에 휴양 의료 시설 개념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는 자연 치유센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의료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용도변경 없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관계부처 협의에 상당한 시간과 행정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 없이 의료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형태인 것으로 판단됨
- 요양병원의 경우, 2010년 전국 868개에서 2019년 1/4분기 현재 1,565개로 80.3% 증가하였으며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77.4개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 특히 휴양 의료 시설 설치를 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강원도의 경우 2010년 20개에서 2019년 1/4분기까지 34개로 증가하였음
- 향후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되면,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표 Ⅲ-65〉 요양병원 증가 현황

(단위: 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868	988	1,103	1,232	1,337	1,372	1,428	1,529	1,560	1,565
강원	20	21	24	26	27	31	31	30	33	34

주: 2019년 자료는 1/4분기 자료이며, 그 외 자료는 4/4분기 자료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일반 요양시설의 경우, 2010년에 전국 1,528개에서 2017년에는 3,289개로 115%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연 평균 251.57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강원도의 경우 2010년 85개에서 2017년 182개로 114% 증가

- 요양시설은 요양병원에 비해 인력 및 시설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설 수요가 더욱 많을 수는 있음
- 또한, 요양시설은 노인 장기요양급여 등으로 인해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여 입소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큰 것으로 판단됨

〈표 III-66〉 노인요양시설 증가 현황

(단위: 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1,528	1,763	2,015	2,496	2,714	2,935	3,137	3,289
강원	85	96	108	131	138	159	177	182

주: 1) 2010~2013년 자료는 노인요양시설로 전환되기 이전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포함한 자료임

2) 노인전문요양시설은 2013년 4월 3일자로 유예기간 종료되어 개정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로 전환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 및 의료 수요에 따른 선택보다는 의료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많음
- 소득이 높으면 요양병원을, 소득이 낮으면 요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며 요양병원은 요양시설과 비교하여 소득 5분위 계층(소득 상위 계층)의 입원 비율이 높음

+ 지역 자원을 연계한 클러스터 구성

- 적합한 웰니스 관광 테마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관련 시설의 개보수가 진행된다면 자연 치유센터의 본래 목적인 의료관광, 주민소득 창출, 일자리 창출 등을 달성할 수 있음
- 접경 지역의 산림지역에서 생산되는 웰빙 식재료와 약초 등은 전국적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로컬 허브 & 푸드 기반의 한방 의료가 가능하며, 인근 숲을 활용한 숲 치유 상품의 연계 가능성도 충분함
- 따라서 웰니스 관광시설의 설치에 기존의 자연 치유센터를 거점으로 그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하여 실행되고 있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사업은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통하여 선정되며 1차 경상남도, 2차 충청북도가 선정된 바 있음
- 경상남도의 경우 산청, 함양, 합천, 거창, 통영, 거제, 고성 등 인접한 7개 시·군을 연계한 개발을 계획함
- 각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산청, 함양, 합천, 거창의 경우는 한방 향노화 웰니스 관광을 통영, 거제, 고성의 경우 해양 웰니스 관광 육성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접경 지역의 경우도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연천, 포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의 시·군 특성을 반영한 종합 관광 클러스터 육성을 시·도할 필요 있음
- 관광객들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산청의 ‘동의보감촌’, 함양의 ‘산삼 휴양벨리’ 등과 같이 기존 시설 등 자산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추가로 시설,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홍보 등의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신규 지원 기관 설립 및 최신 트렌드 사업 도입

- 레저 관련 시설 및 기관 유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가칭) 생태 레저산업 진흥재단’ 설립 검토
- 설립된 재단의 경우 운영 초기에는 대부분의 예산을 정부 지원을 통하여 조달하게 되지만 5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수익 사업을 통하여 자체 재원 조달 방안 마련
- 생태 레저 스포츠 분야는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선제적으로 호버 크래프트(Hovercraft)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의 사업을 과감히 도입하여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필요가 있음
- 호버 크래프트는 영국에서 최초 개발을 한 브리티시 호버크래프트 회사(社)의 상품명인 배의 종류처럼 사용되고 있음
- 배의 아랫부분에서 압축공기를 수면으로 강하게 내뿜어서 에어쿠션을 만들고, 이것으로 무게를 지지한 다음, 수면에서 약간 떠 있는 상태에서 달리는 선박을 말함
- 배가 떠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할 경우 보통 배보다 저항이 현저히 작으므로 비교적 쉽게 고속에 도달할 수 있음
- 1959년 세계 최초의 도버해협에서 운항되었으며, 1968년에는 정원 254명으로 정식 취항함
- 호버 크래프트는 고속성·수륙 양용성이라는 장점이 있는 여객선으로 그 유망성이 기대되었으나 현재는 제조가격은 물론 보수 정비를 위한 비용 등으로 상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최근 학생들의 과학 체험 활동이나 게임 등에서 자주 등장하여 호기심이 높아지고 있어 제작비 절감 등의 여건이 조성된다면 미래형 레저 상품으로 개발이 기대되고 있음
- 북한강 등 접경 지역 인근 지역의 내수면을 활용한 소형 상품의 개발 등도 고려해 볼 만 함

〈그림 III -98〉 호버크래프트



호버크래프트 소형의 호버크래프트, API-88 : 에어 쿠션을 만드는 팬 구동용과, 후부의 덕트 프로펠러 구동용으로, 2기의 디젤 엔진을 갖추고 있다. 방향타는 프로펠러 덕트 속에 짜넣어져 있다. 이 호버크래프트도, 쿠션의 구실을 하는 공기가 새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기체에는 스커트라 불리는 것이 장착되어 있다.

자료: <https://www.scienceall.com/%ed%98%b8%eb%b2%84%ed%81%ac%eb%9e%98%ed%94%84%ed%8a%b8hovercraft/>

나. 해양·해상 관광 산업

* 웅진, 강화, 고성군, 김포시 등 4개 시·군에 조성

-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
- 도서 및 내수면 활성화 사업

1)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

* 고성군에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5월 15일, 정부에서는 제 16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 겸 제 1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광수요 증가에 맞춘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양레저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 해당 내용에서는 국내 전 해역을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따라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 테마가 있는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명소 조성을 기획
- 우선 수도권은 요트 글램핑, 요트학교, 마리나 선박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도시 위락형 마리나 관광거점으로 만들고, 서해안권은 해양생태체험, 해양관광벤처 지원 등을 제공해 해

양문화 생태관광의 융·복합 모델을 만들 예정

- 다도해권은 중간 계류시설, 요트 크루즈 개발 등을 통해서 섬·연안·어촌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화할 예정이며, 한려수도권은 해수욕장, 해양치유 센터 등을 통해 여유와 휴양이 있는 해양 힐링 거점으로 만들 예정
- 동남권은 마리나 비즈센터, 해양레저 체험 이벤트 등을 통해서 친수 문화를 선도하는 해양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만들 예정이며 동해안권은 해양과학교육관, 해양레저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해양레저 거점을 구축 시·도
- 제주권은 수중레저시설, 해상욕장, 바다목장 조성을 통해 체험과 힐링이 있는 다이빙 포인트로 조성 예정
-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양레저관광을 4대 산업으로 정리하여 집중 육성 예정
- 치유자원 발굴과 산업화 모델 개발을 통해 사계절 해양 치유산업 체계 구축
- 거점형 마리나를 추가 조성하고 관리 강화와 비즈센터 조성을 통해 마리나 산업 활성화 노력
- 2020년까지 국내 크루즈 수요를 10만 명까지 확대하기 위해 크루즈 부두·터미널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제선사 출범 여건을 조성
- 수중 환경과 개발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채택하여 수중레저 시설 조성 지원
- 우리나라 해안은 해양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물론 접경 지역으로서 육지의 DMZ과 같은 경계 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 어로 구역을 포함한 '평화의 바다' 실행이 보다 용이하다는 특성을 보유함
- 특히 동해안은 서해나 남해와는 달리 도서 지역이 많지 않다는 점, 러시아와 일본은 물론 미국과의 연계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무엇보다도 금강산 관광으로 대표되는 북한과의 교류 가능성 등에서 많은 잠재력을 지닌 곳임
- 따라서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한반도 新 경제 지도를 그리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구상이 되어야 함
- 세계 관광 산업도 육지관광에서 해양관광으로 옮겨가는 추세로 UN관광기구는 2015년 12억 명이었던 해양관광인구가 2030년 18명으로 증가 예측
- 또한, 미래 10대 관광 트렌드인 해변/스포츠/생태/농어촌/크루즈/문화/도시/모험/테마파크/국제회의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양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사업 진행 경과

-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접경 지역이 가지는 장점과 동해안 전체 지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의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기획 및 진행되고 있음

- 접경 지역 인근 해안 도시들은 관광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양양군은 죽도 해변을 중심으로 서핑으로 큰 인기를 얻음
- 속초군은 국제크루즈터미널 준공과 함께 서핑, 요트, 바다낚시, 어촌체험마을 등도 종합적으로 주목 받고 있음
- 강릉시는 바다낚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바다낚시 공원 조성과 해저레스토랑,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 등을 구상 중임
- 속초시와 강릉시는 접경 지역 인근 동해안 지역 가운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2권역 지역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아름다운 풍광과 화려한 유적보다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나, 독특한 체험,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떠나고 남에게 자랑하고 보여주려는 여행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심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을 원하는 여행 트렌드가 반영된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속초시에 위치한 오래된 목선 제조업체 ‘칠성조선소’가 2017년 콘텐츠 사업자로 선정되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각되기도 함
- 강원도 해안 도시들은 수온변화가 남해와 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낮은 탁도와 조류로 해양레저와 해저경관 감상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강원도, 경상북도의 협력 사업 추진은 물론 설악~금강 국제관광 자유지대 조성 계획까지 연계되어 있음
- 이 사업은 남측의 설악권(속초, 고성, 양양) 관광지구와 북측의 금강산 관광 지구를 연계 개발하는 계획으로 금강산 관광특구, 고성 통일경계 관광특구, 설악산 관광특구, 강릉 국제관광 자유도시 계획 등과 함께 종합적인 초 광역 관광개발 계획이며 외국인 투자 유치까지를 염두에 두는 남북 통합의 新 관광 경제권 구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현재 구상에서는 인근에 위치한 양양 국제공항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철도 인프라 구축만 전제된다면 육로, 철길은 물론 크루즈를 통한 해상 관광 활성화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여건으로 판단하고 있음
- 특히 강원도 고성군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섬 일대와 함께 국내 최초로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국비 450억 원 투입 계획
- 해중경관지구는 바다 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는 해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8년에 최종 선정됨
- 이에 따라 해중 생태계 보전사업과 수중레저 체험활동 지원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다이빙센터, 해중전망대와 공원, 해상인도교(스카이워크) 등이 2023년까지 설치될 예정임

〈그림 III-99〉 설악-금강 국제관광 자유지대 구상도



자료: <https://blog.naver.com/heysun62/221272769070>

● 연관 산업 육성 원칙

● 북한과의 연계성 고려²⁹⁾

-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필연적으로 북한과의 연계성이 최우선 육성 원칙으로 제시됨
- 남북연계 상품 개발, 남북연계 해양관광지구 지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동안 남쪽 관광객이 북쪽 관광지를 찾는 일방향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양 관광 벨트 사업은 주요 인프라와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 등 SOC 개념의 투자가 필요하며 정부와 민간차원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뒤따라야 함
- 북한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점은 국제 사회를 통한 협력과 공동 홍보 및 마케팅의 필요성임. 해당 상품들을 남북한 관광객들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국제사회에서의 관심 제고를 통하여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들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 러시아, 일본은 물론 중국과도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혀 요트, 서핑, 스쿠버다이빙 등 다양한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민간 차원의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관광 거점 조성을 통한 관광 벨트 사업에는 현재 북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천, 송도원 등의 해수욕장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개발이 진행될 경우 북한 주민에게

29)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2018. 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인주, 홍장원, 이정아 연구원

- 도 산업을 통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함
- 보존을 통한 개발이라는 지속 가능성 원칙에 입각한 남북 교류 협력 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 사회로 환류 될 수 있도록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국가 전체의 거시적 관점에서, 다양한 해외 국가들과의 이해관계 및 협력 체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통일 이후의 해양관광 기본계획 수립의 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국내 국토·관광 개발 계획은 물론 현행 북한 법령 가운데 해운법, 항만법, 건설법, 경제개발구법, 외국인국제법 등 관련 법률 검토도 필요할 것임
 - 본격적 사업 전개 이전이라도 남북한이 공동으로 동해 해양수산 자원에 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적절한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며 실질적 사업개발을 위해서는 관광객과 사업자 등에 대한 신변보장과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등 남북 정부 상호간의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함
 - 북한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구상을 위해서는 북한이 보유한 관광 산업 관련 최신 정보와 국내 지방자치단체별 특성과 연계한 관광 협력사업의 종합 구상이 필요함
바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구상을 위한 북한 해양관광 자원현황이나 정책, 법 제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으므로 관련 정보 수집과 공개 업무를 담당할 정보센터 등의 운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시점에서 양양 국제공항, 강릉 국제 관광자유도시 구축 계획, 크루즈 선박의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고성 지역의 중요도가 다소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기획이 필요한 상황임
- 거점 조성과 거점 간 결합 상품 개발
 - 접경 지역 가운데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은 고성군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 사업 개발 이후의 파급효과까지를 고려한다면 접경 지역 남쪽 해안 도시들과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
 - 우선 개발이 필요한 대상지역을 거점으로 선정하되 거점 지역의 범위를 최소화 하고 거점 연계 관광 상품개발을 통해 해양 관광 시설과 콘텐츠를 동시에 육성해야 함
 - 관광지의 추가 개발보다는 주요 거점 관광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상징물이나 랜드 마크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해양휴양 및 관람 형태의 관광에서 진일보하여 내륙관광과 연계한 종합발전 계획의 수립도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일본, 러시아를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 역시 중점 고려 대상임
 - 실질적 관광객을 전제로 할 때 감안해야 중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크루즈 여행이며 동북아 지역 특화 크루즈 상품을 개발하여 초고소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등의

고객 유치에 기반으로 만들어 함

- 관광 벨트 조성을 위한 거점 선정을 위해서는 개별 지역의 입지나 관광 인프라 구축 정도도 중요하지만 거점 도시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적 자원 역시 중요한 고려 대상임
- 이를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관광 상품은 물론 국제적 해양 전시관 건립, 지역별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특산물, 수산물을 활용한 전통 음식 개발, 쇼핑 여건 마련 등이 뒤따라야 함

● 유사 사례 분석 - 베트남 해양경제특구³⁰⁾

+ 현황

-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유교 문화권으로 사회·문화적, 감성적 유사성이 높은 나라이며 도이모이로 상징되는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인해 향후 북한과의 실질적 교류 협력 가능성에 대한 모델 연구로 큰 의미를 가짐
- 베트남 연안지역에는 해양경제특구를 지정해 해양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이모이 정책 도입 이후 관광 산업이 급성장하여 대도시 중심에서 전국으로 관광 지역이 확대되고, 외국인 관광객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베트남 정부는 2006년 개최된 제 10차 전당대회 4차 회기에서 해양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0년에 해양산업이 GDP 53~55% 기여하도록 계획 발표
- 베트남 해양 관광 산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다낭 지역은 개발 역사가 길지 않아 아직 경제발전 수준이 높지 않고 SOC 구축 역시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북한의 여건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 과정에의 민간 참여와 투자 유치, 외래 관광객 유치, 제도 개선 등은 북한과의 교류를 고려했을 때 시사점이 많음
- 2000년대 후반부터 설립된 경제특구는 베트남 전역에 걸쳐 조성 중이며 중부에 10여 개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용 항만과 경제 활동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조성
- 2015년 말 기준으로 연안지역을 따라 총면적 54,000ha, 18개소의 경제특구 조성·운영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인근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광 수요가 급감한 것이 상대적으로 베트남에는 기회로 작용
- 관광 활성화를 위해 24개 국가에 대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 산업의 발전 및 규제 개선과 완화를 위해 관광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개정
- 국제 규모의 해변 관광지 6개와 해양관광 활동이 가능한 5개 항만 개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투자, 브랜드 개발, 주요 해양관광지 중심의 해양관광 전문 인력 개발, 해양관광특구 조성, 리조트 등 관광 시설 조성,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이 주요 추진 과제

30)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2018. 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인주, 홍장원, 이정아 연구원

- 관광숙박 업체는 2010년 12,352개에서 2015년 18,800개로 연평균 8.8% 증가했으며, 객실 수는 2010년 23만 7천 개에서 2015년 35만 5천 개로 연평균 8.4% 증가
- 관광 산업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도 증가하여 2013년 234만 개의 직접 고용을 창출했으며, 간접적 일자리까지 총 404만 개 조성

+ 해양관광 여건

-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바다에 접하고 있으며 동북 몬순의 영향으로 동일 위도에 위치한 다른 국가보다 평균 온도가 낮고 4계절이 나타남
- 해안선이 3,260km에 달하며, 해양영토 면적이 국토면적의 약 3배
- 해변은 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평균 경사가 20~30° 정도로 해수욕이나 경관 감상, 휴양, 레저·스포츠 등의 활동에 적합
- 연안에 약 3천여 개 도서가 분포하고 있으며 1km² 이상 면적의 도서가 90여 개임. 풍부한 수산물, 해변 동굴, 산호초 군락, 해양보전 지구, 세계자연유산 하롱베이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
- 자연풍경 감상 관광객뿐만 아니라 윈드서핑, 비치발리볼 등 해양 레저스포츠 관광객 비율도 높음
- 베트남 관광청 추산 외국인 관광객 중 70%, 국내관광객 중에서는 50% 정도가 해양관광 고객
- 크루즈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홍콩과 싱가포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크루즈관광 발전 잠재력 높음
- 2017년 기준 베트남 방문 크루즈 관광객은 6,400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으며, 2018년 기준 크루즈선박 기항 횟수는 총 493회 전망
- 베트남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따르면 2015년 베트남 해양 총생산은 2,893.8만 달러(약 328억 원)로 국가 GDP의 18.8%를 차지
- 이 중 해양관광업 규모는 545.5만 달러(약 62억 원)로 전체 해양 총생산의 18.9%를 차지해 해양석유 및 가스 산업 다음

+ 해양관광지 사례 분석: 다낭

- 5개 특별시 중 하나인 다낭은 베트남 네 번째 도시이자 뛰어난 경관의 해양휴양도시로 인기가 높아 포브스지에서 뽑은 세계의 매력적인 해변으로 선정
- 베트남전 당시 전략적 요충지로 미군이 최초로 상륙한 곳이자 미 해군이 이용하던 주요 항구
- 면적은 1,285km²로 수도 하노이의 약 3분의 1 정도이며, 인구는 2014년 기준 약 101만 명

- 수준으로 우리나라 경주시와 비슷한 넓이(1,324km²)지만 인구는 4배 정도 많음
-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수산업 중심의 1차 산업구조에서 탈피, 2·3차 산업을 육성
 - 2016년 기준 베트남 전체 경제성장률이 6.21%인데 비해 이곳의 경제성장률은 9.04%에 달해 베트남 경제발전을 선도
 - 인접 국가인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과 공동 건설 중인 ‘동서 4개국 횡단도로망 구축 계획’에 따라 베트남 중부 교통 및 경제 중심
 - 중부지역 도로망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확충되면 베트남의 특화 관광 상품인 버스타워 거점으로 활성화 기대
 - 기존에는 하노이, 호찌민 등 도시 관광지 인기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호텔 체인들의 투자가 다낭, 나짱, 푸꾸옥섬 등 연안 지역에 집중
 - 해외 교통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등 20여 개 정기 직항노선이 운영되며 2018년 크루즈선 기항 횟수 중 30% 이상 차지
 - 정부에서는 다낭, 하롱베이, 나트랑 등 연안지역 주요 도시를 해양 관광 허브로 개발하는 한편 MICE 산업 중심지로 육성 계획 추진
 - 2017년까지 다낭에 투자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총 31억 달러(약 3조 5천억 원)인데, 이중 절반이 넘는 60.2%가 부동산 및 관광 산업에 투자

+ 시사점

- 다낭에는 크루즈 선박 접안이 가능한 대형 항만이 있고 인근 국가들과 연계한 크루즈 항로를 운영하고 있어 북한 동부 지역 관광 여건 개발에 참고 가능
- 다낭 중심의 해양관광 산업 성장 요인
- 중앙 정부 주도의 개발 정책 수립과 지방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 의지
- 중앙 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와 다양한 혜택 제공하며, 투자 자금 상당수를 SOC 확충 및 관광 분야에 투입
- 최근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중부 연안 13개 성·시의 중심이며, 인접한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과 접근성이 좋아 관광 수요 흡수 가능하며 무엇보다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이 배후
- 연안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내륙지역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특색을 반영한 유산이 많아 연계 관광지로서의 가치 높음
- 저렴한 물가와 인건비로 관광 및 편의시설 확충이 용이하며 젊은 인구가 많아 교육을 통한 관광 서비스 인력 공급이 원활

●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 실행 방안³¹⁾

+ 거점 연결 방안

- 현재 남쪽 접경 지역의 고성지역만으로는 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북쪽 동해안과 종합 고려 관점에서 해양 관광벨트 조성의 비전 제시가 필요
- 해양 관광에 특화된 사례 가운데 중국 저우산 군도는 지역성 특성을 살린 6대 관광 상품을 테마로 내세우고 ‘1핵 1축 2권 다도 연선’이라는 거점 연계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린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주요 거점을 잇는 벨트형 구상 적용
- 여기서 제시하는 한반도 新 경제구상의 ‘환동해 벨트’와는 차별화하여 에너지·자원이 중심이 아닌 관광을 주요 콘텐츠로 한 벨트 구성을 기획해야 함
- 벨트의 거점 구성은 북한 지역에서도 항만, 공항 등 기본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향후 정책 지원과 외국인 투자가 주목되는 ‘원산’, 통천을 이은 ‘원산-금강산 일대’를 하나의 축으로 남측의 고성 지역과 연계 벨트를 구성
- 이후 북·중·러 접경 지역과 가까이에 위치한 ‘나진’ 지역을 2차 거점으로 하여 1차 거점인 원산에서는 ‘함흥’ 지역과, 2차 거점인 나진은 ‘청진’ 지역으로 확장을 고려
- 앞서 제시한 북한지역의 주요 거점과 고성군을 비롯한 남쪽 지역들을 순차적으로 연계하여 동해안 해양관광벨트 완성
- 남북한의 거점 연결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해안유역 개발부터 시작하여 해안 해역 개발, 최종적으로는 내륙과의 연계까지를 감안하여 단계별 접근 방안 마련이 필요
- 향후 조성되는 동해안 관광벨트에서는 우선 해안 지대에 해수욕, 바다낚시, 어촌체험, 생태 관광, 해양치유 등의 관광활동이 가능하며 카약,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와 보트,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도 기능할 것으로 예측
- 특히 북한과의 교류 협력 속도에 따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외국 관광객의 방문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실행되어 온 관광 방식과는 다르게 동해안 관광벨트 내에 공동 관광특구 등을 조성하며 북한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필요
- 고성군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금강산 관광과 연계하여 해수욕을 중심으로 상품을 우선 구성하고 이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대형 리조트, 크루즈, 마리나 등을 조성하여 외국 관광객들에게 희소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남북한 동해 접경 지역 관광 상품 제공

+ 관광 인프라 구축 방안

- 베트남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다낭 지역은 항공 접근성도 좋아 외국

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2018. 11.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

-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도 항만, 항공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외국인 투자를 병행하면서 교통·숙박·관광시설 투자가 용이한 지역을 핵심 거점으로 선정
- 대부분의 관광 산업은 특별한 기반시설 등의 투자 없이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출발하여 시설 등 기반이 갖추어지면 부가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전개됨
- 복합리조트, 크루즈관광 등은 부가가치가 높고 시설기반이나 테마 등이 필요한 산업기반의 관광 상품임
- 아직까지 북한지역은 시설기반의 완성도가 높지 않으므로 자연관광을 중심으로 스포츠관광 등 일부 특화 상품 적용이 가능할 것임
- 크루즈 접안을 위해서는 부두, 터미널 등 관련 시설을 구축해야 하며 추가로 운영 인력도 양성해야 함
- 관광지 개발은 교통·전력·상하수도를 비롯해 전반적 정주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해양관광 거점으로 지정되는 곳에는 인력 양성기관 수립도 검토
- 우리나라 크루즈관광 실태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크루즈선의 입항 못지않게 관광객이 기항지에서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고 지출을 할 수 있는 관광활동과 소비시설이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크루즈 상품만이 아니라 배후지 관광 및 소비 시설 개발이 병행되어야 크루즈상품 전문 여행사 및 관련 전문 서비스 개발도 필수적임
-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조선·선박수리, 해양레포츠 장비 제조 및 관련 서비스산업도 발전시킬 필요
- 해외의 사례들처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양관광 관련 제조·서비스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구상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음식·숙박업, 수산물·특산물 판매 등으로 거점 구성에 따른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

+ 국가별 관광객 특화 상품 개발

- 방문하게 될 인접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해외 관광객들을 위해서 단순 관람 개념의 관광에서 진일보 하여 특화 상품 개발이 필요
- 내국인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에는 바다낚시, 해수욕, 생태관광, 무동력 레포츠 상품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인접 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부터 동남아, 유럽, 남북 아메리카 관광객들에게 특화된

해수욕, 바다낚시, 수중레저, 어촌체험, 생태관광, 무동력 레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 및 체험 상품의 개발이 필수적임

2) 도서 및 내수면 활성화 사업

*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등 3개 시·군에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 관광·레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해양레저과’를 ‘해양레저관광과’로 재편하고 해양 관광 진흥정책 수립 등 업무와 함께 마리나 항만 개발, 크루즈산업 육성 등 해양 관광 기반업무 추가
- 마리나 대중화 및 마리나 산업 생태계 조성, 크루즈산업 재도약,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주요 추가 업무로 설정하고 거점 마리나 항만 착공, 크루즈 전용부두 확충, 한국-대만 크루즈 운항 본격화 등 지원책을 수행하고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사업 역시 진행
- 내수면 마리나는 해수면에 비해 수면이 잔잔하여 수상레저 초보자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외곽 방파제를 갖출 필요가 없으며, 공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경제적 면에도 이점이 있음
- 서해안은 많은 도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항만이나 항구 지원 사업에서 후 순위로 분류되어 보유한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2019년 2월에는 도서 지역이 가지는 관광 산업에서의 높은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간 협약을 통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사업 진행 경과

- 마리나는 스포츠·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 선박을 위한 항구로, 넓은 의미에서 계류시설뿐 아니라 주차장, 호텔, 놀이시설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
- 수상레저 선박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전체 선박의 3분의 1이 내륙에 있지만, 내수면 마리나는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 마리나와 아라뱃길에 위치한 김포마리나 2곳뿐이어서 내륙 마리나 확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 해양수산부에서는 내륙지역에서도 수상 레저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내수면 마리나 확충을 시·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등 12개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
- 선정된 최종 후보지 12개소는 ‘제2차(2020~2029년)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 내수

면 마리아 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 예정

- 일본·유럽 등 해외사례와 하천, 호수, 방조제 등 국내 내수면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 특성에 맞는 내수면 마리아 개발유형을 도심 레저형과 전원 휴양형으로 도출
- 내수면 마리아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제2차 마리아 항만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 검토 중

〈표 III-67〉 2019년 내수면 마리아 최종 후보지 선정 내역

지역	시설
강원도	의암호(춘천시 삼전동)
경기도	시화호(반달섬, 안산시 해양 아카데미)
경상북도	형산강 하구(포항시 남구)
부산광역시	화명 생태 공원(북구 덕천동)
	을숙도 생태공원(사하구 하단동)
	삼락 생태공원(사상구 삼락동)
인천광역시	경인항 함상공원(인천시 서구)
전라남도	영암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삼포지구)
전라북도	심포항(김제시 진봉면)
충청남도	탑정호(논산시 가야곡면)
충청북도	청풍호 청풍랜드(제천시 청풍면)
	남한강(단양군 하방리)

자료: 연구진 구성

- 특히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2010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해안누리길’ 선정 사업은 인위적인 보행길 조성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이미 조성된 길 가운데 자연 경관이 우수하고 해양문화 역사나 해양 산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는 사업임. 2019년에도 새로운 해안누리 길을 5곳 선정하여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접경 지역 가운데 강화, 옹진 등 섬 자원을 다수 보유한 지자체들이 활용 가능한 사업 분야로 판단됨

● 연관 산업 육성 원칙

- 내수면 마리아를 포함한 마리아 조성 및 운영 사업은 단순한 해양 관광의 차원이 아니라 종합 해양산업의 관점에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생활 SOC를 포함한 SOC 관련 사업인 만큼 사업 시행 주체부터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내수면 마리아 및 마리아 조성 대상지는 필요 수심이 확보되어야 하며 도서 지역은 잔교, 부잔교가 있어도 어선 접안이 많아 해당 어촌의 어촌계와 협력해 관련 시설을 활용한 레저사업 진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
- 특히 인천광역시 강화, 옹진 지역이 포함된 서해안 지역에는 다량의 도서가 위치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여객선 등 통행 선박들의 접안 시설 설치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접안시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임. 해양 레포츠 인구들을 위한 기반 시설 마련에 대한 개념 확립이 필요함
- 내수면 마리아 및 마리아 조성 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수요 예측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 예정지의 토지 소유권자의 협조 여부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서해 도서 및 접경 지역 내수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미 2018년 9·19 공동선언 과정에서 남북 간에 합의된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과 이에 따른 해당 수역의 공동 조사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때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상황임
- 향후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 및 공동 어로수역 설정과 함께 한강 하구의 평화적 활용 등 각종 남북 교류 사항의 진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연관 지원 사업 검토 - 어촌 뉴딜 300 사업

-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지역·생활 밀착형 어촌 혁신을 위한 ‘어촌 뉴딜 300’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이 사업을 통해 해양레저시설 확충은 물론 지역 경제와 어촌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임
 - 2018년 70개 지역을 시작으로 2019년에 12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20년에 110개까지 총 300개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
 - 2019년 선정 이후 2020년에 지원이 이루어질 곳을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 37개 ▲경상남도 23개 ▲충청남도 14개 ▲경상북도 11개 ▲전라북도 9개 ▲강원도 5개 ▲제주특별자치도 5개 ▲인천 광역시 5개 ▲경기도 5개 ▲부산광역시 4개 ▲울산광역시 2개임
 - 앞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할 방침
 - 선진국 수준인 대형 항구의 SOC에 비해 어촌 주민의 생활공간인 동시에 경제 활동 핵심시설인 어항·포구는 매우 낙후되어 있음
 - 항·포구 기반인프라 미비는 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악화로 이어져 지속적 인구 감소 및 도서

지역 공도화의 원인으로 작용

- 국민들의 레저·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양관광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제반 여건 부족이 현실 환경임
- 이 사업에서는 개별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에 따라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수산물 화형 ▲재생기반형 등 4가지의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공통사업, 특화사업, 타 부처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
- 범 부처 ‘어촌뉴딜300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업과제 발굴을 통한 집중 투자·관리를 통해 범 부처 연계사업 패키지로 지원 예정
-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관광 인프라 사업, 행정안전부의 유인도서 관리사업인 ‘가고 싶은 섬’ 사업이나 어촌체험 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등과 함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원 필요 사례: 홍성군 천수만 해상 낚시 체험 공원
 - 충청남도 홍성군 천수만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해상 낚시 체험 공원의 경우 1,500평부지 위에 조성되어 조황도 좋은 관광지로서 높은 가치가 있는 시설임
 - 소규모 선박으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반드시 선박 운행이 필요한 환경에 있어 관광객들을 비롯한 이용객의 불편이 따르고 있는 상황임
 - 인근 방파제에서부터 간단한 부교(浮橋) 설치만 이루어지게 되면 충분히 추가 관광객 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어촌 뉴딜 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음

〈그림 Ⅲ-100〉 홍성군 천수만 해상낚시체험공원



자료: 연구진 촬영

-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접경 지역 도서 및 내수면에서 마리나를 비롯하여 간단한 시설 공사를 통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곳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어촌 뉴딜 300 사업 선정 과정에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서해안 도서 지역의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촌 뉴딜 300’ 사업의 정책적 배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서 및 내수면 활성화 사업 실행 방안

- 마리나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1.5배 고용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新 융·복합 산업
- 일반 마리나의 경우 조성하는 데에만 1곳 당 적게는 300억 원에서 많게는 5,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
- 마리나 배후 부지에는 해양레저와 휴양, 명품쇼핑, 교육이 동시에 가능한 클러스터 조성이 관건임
- 인천광역시의 경우 ‘글로벌 관광 산업 복합형 마리나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면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국제마리나 비즈센터 운영 등 주요 과제들을 선정
- 또한, 지역 마리나 개발 형태로 요트클럽형 마리나, 관광형 마리나, 슈퍼 요트 및 복합형 마리나, 내수면 마리나, 낚시 전용 마리나를 구상 중에 있음
- 마리나 조성에는 부가적으로 마리나 비즈센터와 R&D센터에서 고급 요트 수리와 선박 구입에서 검사, 매매, 보험, 금융, 부품공급 등 연계 산업 생태계 조성이 수반되어야 함
- 내수면 마리나의 경우 선박 정박에서 수리까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드라이 스택과 수상 레저를 학생 및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수상 비즈니스센터를 건설하여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기획
- 내수면 마리나 조성 사업은 이제 태동 단계이지만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 성장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아라뱃길에 건설되어 있는 김포 아라 마리나는 수도권에 위치한 최대 해양레저 체험공간으로 접경 지역 수도권에서도 기존 수상레저 인프라와 연계한 새롭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200개에 달하는 선박 계류시설을 갖추고 있어 해양과 내수면 까지 아우르는 도심형 마리나로 선박 수리소, 주유소, 상하가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음
- 내수면 마리나에서는 입문 단계부터 고급 과정까지 해양 및 수상 레저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변 관광까지 아우르는 등 단순히 시설을 제공하고 관리에 치중하는 곳들과는

차별화된 시설 운영으로 국내 산업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함

- 도서 및 내수면 마arina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아직까지 취약한 내수면 지역 및 서해안 도서 지역의 생활 S.O.C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어촌 뉴딜 300’ 사업의 2.0 버전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관광 산업 가치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태 관광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해안 누리길’ 선정 사업과 강화군 교동도에 추진 중인 ‘국제 슬로시티’ 지정 추진 등에 중앙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IV

특화 산업 연계 남북교류 협력사업

1. 남북교류 협력 현황
2. 북한 수용성 분석
3. 특화 산업 연계 남북교류 협력
단계별 추진 방안

IV 특화 산업 연계 남북교류 협력사업

1 남북교류 협력 현황

1.1 남북교류 협력의 개관

가. 남북교류 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접경 지역 평화경제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 간 정상 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멘텀(momentum)이 형성됨
- 하지만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관계개선 및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들이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 같던 분위기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에 실패하면서 동력을 상실한 분위기임
 - 더군다나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북미 간 실무 협상에서도 점점 찾기가 진척을 거두지 못한 채 결렬되면서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평화경제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핵화 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남북교류 협력 시도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 특히 한반도 균형 발전과 평화경제로의 진전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접경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한 남북교류 협력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 것”을 제안함
 - DMZ의 평화지대화(남북공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판문점·개성을 연결한 평화협력지구 지정,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DMZ 지뢰협력 제거 등)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한 축으로 볼 수 있음
- 이처럼 접경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은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의 가치를 제고시킴으로써 남북교류 협력의 전진기지 역할을 가능케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 할 수 있음

나. 중앙정부 남북교류 협력

●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남북교류 협력의 필요성

-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신한반도체제의 핵심구상을 천명함
 - 신한반도체제의 핵심구상은 △ 대립과 갈등을 끝낸 평화협력공동체 △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남북 간 ‘경제 협력체’ 구축임
-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한반도 대전환 국면 이후 펼쳐질 새로운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 것임
 -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와 동북아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중-러-일 사이에서 소극적 생존을 도모하는 차원이 아닌, 적극적 활로를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우리의 인식체계에 내재되었던 주변부라는 사고에서 파생되는 전략을 지양하고자 하는 다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대북 연락·협의 등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정부-지자체 간 공동의 협력사업 발굴도 추진해야 함

● 남북교류 협력의 경제적 효과

- 제조업, 관광, 자원 분야의 경쟁력 강화
 - 남북 간 언어와 문화적 동일성,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 낮은 세금과 토지사용료, 육상 중심의 물류 시스템 등 남북교류 협력은 해외 어느 생산기지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 북한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을 활용하여 광물자원 수입비용 절감할 수 있으며, 교류 협력을 통해 자원의 자주화가 가능함
 - 분단과 전쟁의 상징으로서 한반도가 아닌, 안정과 평화가 정착된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남북관광 자원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음
- 남북한이 본격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게 되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land bridge) 역할이 가능함
 -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3성, 연해주 등 대규모 인구 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 국가로의 발전이 가능함
 - 남북교류 협력으로 육상·해상·항공 물류가 연결되어 물류거점 국가로의 발전이 가능해짐

〈그림 Ⅳ-1〉 남북교류 협력의 패러다임 변화



자료: 남북물류포럼, 새 남북협력 패러다임으로 여는 한반도 경제 공동체, 2019.10.14.

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

●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의 필요성

-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 및 해소되고 남북관계가 다시 개선되는 국면을 상정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중앙정부가 남북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비정부행위자 중 하나인 지자체의 역할과 비중이 커짐
 - 이에 따라 지자체는 남북협력과 지역 재생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접경 지역 지자체의 비교우위 산업 및 환경을 바탕으로 남북교류 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함

● 남북교류 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확대

- 남북교류 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 사회 및 지자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남북 당국 간의 협정체결 및 제도화를 통해 교류 협력의 기반, 공간을 조성 및 확보하고 지역 사회와 지자체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의 실천을 통해 교류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함
 - 주변국들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받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역 사회와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유

- 연하게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지자체는 정부기관이라는 공식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 협력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지자체는 종합적인 사업을 기획하거나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획력과 재정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 이와 같이 지자체는 유연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표 IV-1〉 남북교류 협력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

	중앙정부	지방정부
초기	한반도 균형 발전 구상 선포 및 분권형 대북정책 전파	한반도 균형 발전 구상에 기초한 지역 차원의 남북 협력 계획 수립
	정치적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대화	남북협력 계획에 기초한 지역 간 남북합의 검토·복원
	남북합의 복원	
	UN 제재를 고려한 인도적 지원 재개	지방정부 간 신뢰형성
중장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의 재개	
	남북격차 해소를 위한 경제적 조건 형성	남북 지방정부의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교류 협력사업 추진
	인프라 구축 중심의 남북협력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남북 교류 협력 추구
	북방·남방 협력을 위한 한반도의 동북아·동남아 연결 강화	분권형 대북정책에 기초해 남북격차를 해소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노력 전개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반도 균형 발전과 남북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2019.10.22.

- 정부와 지자체가 한반도 평화·번영과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 동시에 대북 연락·협의 등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남북공동 연락사무소에 지자체 참여를 위해 노력하며, 정부-지자체 간 공동의 협력사업 발굴도 추진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 주요 사례
 - 2000년대 본격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이 시작된 이후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오고 있음

〈표 Ⅳ-2〉 지방자치단체 주요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사례

지자체	주요 남북교류 협력사업		조례 제정	
인천 광역시	'84.9.29~10.4	서울·경기 수해시 북측 수해 구호물품 도착-북측의 최초지원	2004	
	'04	◦ 용천 참사지원 ◦ 북한어린이 돕기 모금 행사 ◦ 6.15 4주년 기념행사인천 개최		
	'05	◦ 북한어린이 돕기 ◦ 피치(Pitch) 및 페인트 지원 ◦ 시 대표단 북한 방문 ◦ 제16회 아시아육상대회 북한선수단 및 협력단 참가 ◦ 시 경제대표단(평양, 남포) 방문		
	'07	◦ 평양시 체육단 축구장 현대화 ◦ 북측 홍수피해 지원 ◦ 노동당 통전부장 일행 인천방문		
	'08	◦ 평양 치과병원 리모델링 ◦ 시 대표단 평양방문 ◦ 평양 창광거리음식점 현대화		
	'14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도	'02 ~'05	농업·보건·식품 등 인도적 지원	2001	
	'06 ~'08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07 ~'11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		
	'08 ~'11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		
	'08.10.2~10.18	2008 평양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		
강원도	경제 협력 분야	'01~'04	연어자원보호증식	1998
		'01~'08	북강원도 산림병해충 방제	
		'04.12	원산 농민기술강습소 보수	
		-	금강산 공동영농사업	
	사회 문화 교류 분야	'05.9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	
		'06.3	남북아이스하키 친선경기	
		'06.11	북한의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지 합의 체결	
		'07.4	북한태권도시범단 초청행사	
		'18. 2~3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	
	인도 대북 지원	'00.12	못자리용 비닐 제공	
'04.4		북한 룡천역폭발사고 성금 전달		
'07.10		북강원도 수해복구 물자제공		

자료: 성남시, 성남시 남북교류 협력추진 전략, 2015 재구성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의 추진체계 정비

- 남북교류 협력기구의 확충 및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 지자체별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확대 조성 및 기금 재원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함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남북교류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북한과의 협의를 기반으로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함

1.2 남북교류 협력 관련 법제

● 남북관계의 진전과 법제 정비

- 남북한이 평화공존 및 교류 협력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음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제도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제정되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질적·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룸

● 남북교류 협력 관련 법령

- 남북관계 및 교류 협력을 규율하는 법·제도는 통일부 소관의 법령과 상위법인 헌법의 영토조항(제3조)과 통일조항(제4조), 국가보안법 등이 포함됨
-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제정일 1990년 8월 1일)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정일 2005년 12월 29일), 남북협력기금법(제정일 1990년 8월 1일) 등이 있음
- 지자체에 의한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국가보안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등이 함께 적용됨

가. 남북교류 협력 관련 주요 법률¹⁾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 남북관계발전법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 관한 기본법적인 관계와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2조(기본원칙)에서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며, 한반도의 공동번영 및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함

1) 법제처, 국가법령센터(www.law.go.kr)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2장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여 남북경제 공동체 구현, 민족 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국제협력, 재정지원 등의 주체를 정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남북관계발전법 제8조에 의거 하여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교류 협력을 지원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함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제13조)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설립(제14조)에 관한 규정을 제공함
- 남북회담대표 규정(제3장) 및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규정을 제시함(제4장 제21조)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 협력법)」
 - 남북교류 협력법은 남북관계발전법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법으로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적 성격의 법률임
 - 남북교류 협력 추진협의회를 설치(제4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제7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남북한 간 거래를 민족내부의 거래로 규정(제12조)하고 있으며, 협력 사항에 관해(제18조) 규정하고 있음
 - 남북교류 협력 지원(제24조)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제25조의 4)을 담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법」
 -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 협력법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한정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 남북협력기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4조에서 제8조까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나. 접경 지역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조례 제정

- 남북교류 협력에 있어서 지자체의 위상
 - 현재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교류 협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하여

추진되고 있음

- 1990년 제정 당시 제12조에서 대북교류 당사자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여 지자체를 포함하였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이에 따라 남북교류의 주체로서 지자체가 갖는 법률적 위상과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은 중앙정부의 승인과 감독 아래에서만 이루어지게 됨
- 하지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어 인도적 지원사업의 독자적 남북교류 협력이 가능해짐
- 남북교류 협력에서 지자체의 독자적 사업을 확대·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관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회에는 지자체의 ‘협력사업 주체 명시’ 규정을 포함하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상정되어 있음
-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관련 조례 제정 및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은 각 지자체별로 제정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음
 - 201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17개 광역시도 모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강원도가 1998년 처음으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였고, 경기도는 2001년에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현재 한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조례)를 제정해놓았음
 - 한편 지자체들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음
 - 지자체는 법률상 북한과의 교역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중앙의 지원 없이 자체 재정으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임

〈표 Ⅳ-3〉 지방자치단체별 남북교류 협력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광역지자체	조례 제정일	법규명
서울특별시	2004-07-02	서울특별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2007-07-11	부산광역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2004-11-08	인천광역시 남북교류 협력조례
대구광역시	2005-08-10	대구광역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2006-04-06	울산광역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2008-06-20	대전광역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2005-11-25	광주광역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2015-07-30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경기도	2001-11-09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강원도	1998-09-09	남북강원도교류 협력위원회조례
	2018-05-04	강원도 남북교류 협력 조례
충청북도	2008-02-22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2012-11-02	충청북도 남북교류 협력 조례
충청남도	2011-11-10	충청남도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2007-12-28	전라북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2003-06-05	전라남도 남북교류 협력조례
경상북도	2008-01-10	경상북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2005-04-07	경상남도 남북교류 협력조례
제주특별자치도	2007-05-09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자료: 통일연구원,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 방향, 201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http://www.lgw.go.kr>).

〈표 Ⅳ-4〉 광역시도별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2019년 기준)

(단위: 원)

광역지자체	2018년도 말 조성액	2019년도 지출계획
서울특별시	13,992,246,000	15,050,000,000
부산광역시	5,913,560,000	1,005,400,000
인천광역시	1,334,852,000	1,657,700,000
광주광역시	3,601,987,000	2,000,000,000
경기도	32,989,863,000	10,863,000,000
강원도	1,801,088,000	5,000,000,000
충청북도	2,417,771,000	1,200,000,000
충청남도	3,416,000,000	34,000,000
전라북도	9,501,276,000	1,000,000,000
전라남도	3,210,984,000	300,000,000
경상북도	4,168,486,000	0
경상남도	0	1,000,000,000
제주특별자치도	5,294,100,000	1,015,000,000
합계	87,642,213,000	40,125,100,000

자료: 각 시도별 2019년 기금 운용 계획 참고

2 북한 수용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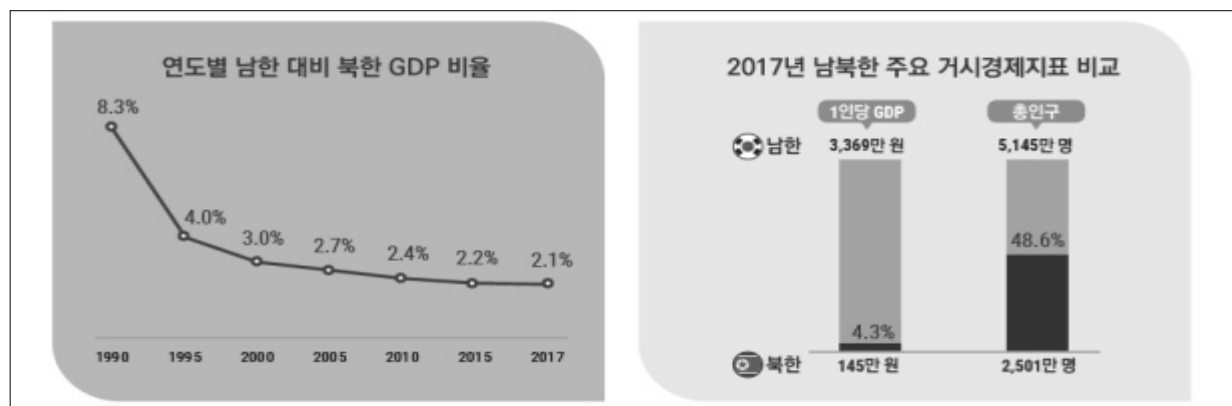
2.1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정책

가. 북한의 경제 및 산업 현황

● 북한의 경제성장 개황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경기 회복세 후퇴
 - 북한의 GDP는 1990년 남한의 8.3% 수준에서 2017년에는 2.1%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2017년 북한의 1인당 GDP는 남한 대비 4.3%나 인구는 48.6% 수준임²⁾
-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2016년 기준 1/45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GNI)은 36.6조 원(한국은행 추정 결과)으로 한국의 1/47 수준으로 추정됨
 -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1,294 달러로 한국의 29,741 달러의 1/23 수준임
-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2017년 IMF 기준으로 베트남, 케냐,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을 밑도는 수준임

〈그림 IV-2〉 남북한 경제지표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북한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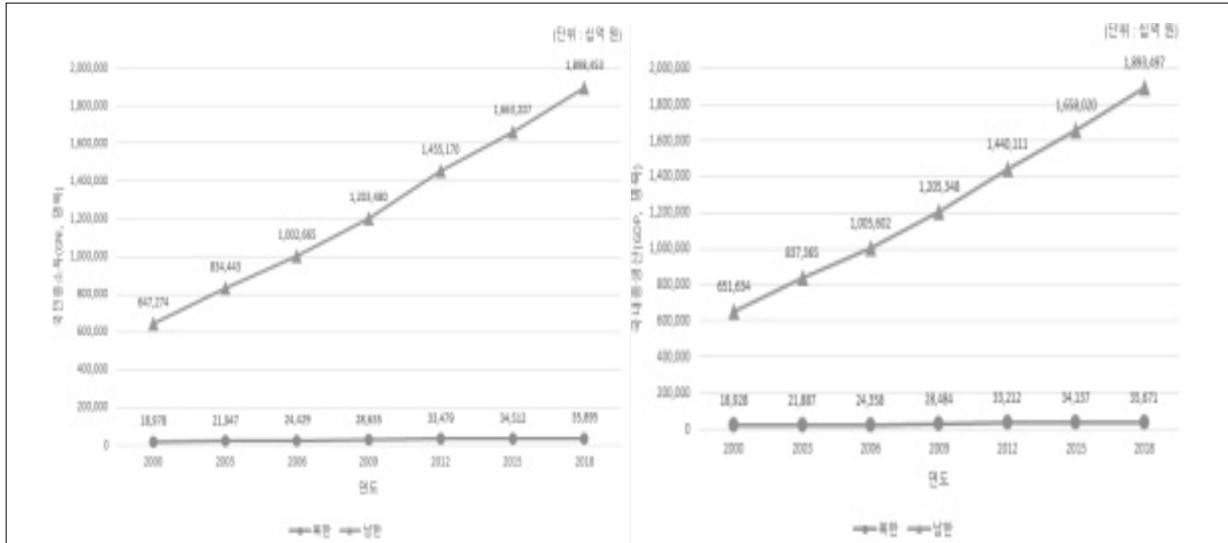
- 한편 식량 부문에서는 매년 50~100만 톤의 만성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김정은 체제에서는 일기호조, 농업개혁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 만성적 기근을 회복하려고 시도하였음

2) 국회예산정책처, 북한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2019

- 북한은 식량 부족분을 통상적으로 국제사회 원조 또는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을 통해 채우고 있음

〈그림 IV-3〉 남북한 국내총생산·국민총소득(명목) 비교

(단위: 십억 원)



자료: 통계청, 2019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9

- 북한은 경제회복을 위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북한은 전력과 석탄 부문을 금속, 철도·운수와 함께 인민 경제의 4대 선행부문으로 선정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7차 당 대회에서 전력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있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조건이라고 강조함
 - 북한의 전력난은 자력갱생의 폐쇄적 에너지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시장화의 진전으로 북한의 전체 전력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에 시장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시장의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음³⁾
 - 2018년 기준 장마당(종합시장)은 약 500개 이상, 골목장을 포함하면 800여 개 이상의 시장이 형성됨
 - 제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북 경제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의 제도화를 시도함
 - 국영기업의 시장경제 활동 용인하고 국가와 시장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북한 정부의 재정 확충에도 기여함
- 최근 북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는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북한 시장의 쌀 가격지표 및 환율 동향은 대체로 안정적임

3) 남북물류포럼, 새 남북협력 패러다임으로 여는 한반도 경제 공동체, 2019.10.14

- 북한의 가축 사육 두수 추이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주민의 육류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영양실태 조사 결과, 북한 주민의 건강지표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로 중국에 대한 대외무역 의존도가 심화되었음
 -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2000년 20.4%(4.9억 달러)에서 2007년 41.7%(19.7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17년 94.7%(52.9억 달러)를 차지하였음(KOTRA, 2017년 북한 대외무역동향 기준)
 - 북한의 대남 의존도는 2000년 17.8%(4.3억 달러)에서 2007년 37.9%(18.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17년 0.02%(90만 달러)로 감소하였음(KOTRA, 2017년 북한 대외무역동향 기준)
-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새로운 경제정책 노선
 - 2016년 5월에 개최된 제7차 당 대회에서 제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전략 및 산업정책을 구체적으로 보여줌
 - 2020년까지 경제 전반의 활성화와 경제 부문 간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의 지속적 인 발전 토대를 구축함
 - 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과 기초공업(기계 및 화학)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농업과 경공업 생산을 늘리고 인민 생활 향상을 추진함
 - 각 부문에서 내부적으로 생산량 목표치를 비롯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현재 북한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반영
 - 북한 산업 전반에서 확대재생산이 일어나기 어려운 원인인 에너지와 금속 및 화학소재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
 - 에너지 공급 확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에너지 사정은 여전히 북한의 경제 회복 및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따라서 에너지 부문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였음
 - 4대 선행부문과 기초공업의 정상화는 김정은 시대 산업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5개년 전략의 수행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금속과 화학소재 부문임
 - 이와 함께 기계공업에서는 국산 설비를 통한 설비 현대화와 자동차 및 철도차량 등 수송기계 부문의 재건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기존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2013년 3월 전원회의 채택)을 ‘경제노선(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으로 전환하였음

- 한편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군수공업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함
 - 군수공업 부문에서 농기계와 건설기계, 인민소비품 등을 생산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한편, 새로운 전략 노선이 그리는 미래도 과거 ‘쌀밥에 고깃국’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풍요’임을 제시함

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정책

● 김정은 시대 산업의 목표 및 주요 내용⁴⁾

-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산업부문의 기술장비를 첨단기술로 혁신하여, 모든 생산공정을 견본 모방형으로부터 개발창조형으로 전환시키는 것임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에 현대적인 지식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에서 현대화, 정보화 실현
 - 인민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실현은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인화하는 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
 -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보다는 개보수를 통하여 기존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컴퓨터의 도입 등을 통한 현대화를 통하여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
 -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나 기존의 기술적 역량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농업이나 수산업, 경공업,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자원 배분을 늘림
- 지식경제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 실현
 -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는 과학기술연구개발과 생산을 하나의 생산과정 속에서 통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음
 - 기업체들은 과학기술 및 지식을 통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관리체계 확립
 -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과 기술관리 공정을 기존의 노동 및 물자집약형으로부터 기술집약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이 하나의 통일적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경제적, 법률적 지원의 수행
- 정보산업, 나노 산업, 생물산업, 우주산업, 에너지 산업과 같은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 확립
 - 모든 첨단기술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함
 - 첨단기술개발구는 첨단기술의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기술개발구 혹은 어느 한 첨단

4) 리기성, 지식경제 시대와 새 세기 산업혁명, 2019

기술 분야를 전문화한 기술개발구로 구분 지을 수 있음

- 북한의 은정과학지구와 같은 첨단기술개발구에서 국제경쟁력이 높은 첨단기술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 ‘환경보호’에 기반한 산업발전방식 추진

+ 산업발전에서 ‘녹색생산방식’의 도입을 강조⁵⁾

- 제7차 당대회에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전략적 노선 실현을 위한 녹색생산방식’을 강조
 - ‘녹색’은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하고 깨끗함을 상징
 - 생산과정에서 유한한 자연자원의 재생능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하는 것이 향후 오염을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도 경제적임
- 국제적으로도 ‘지속발전’을 위하여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유엔환경계획, 세계은행의 후원 아래 생태환경보호가 진행 중임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환경과학기술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하여 생태환경 보호 및 지속발전이 가능한 ‘녹색생산방식’ 확립 필요성을 강조함

〈표 IV-5〉 2012년~2013년 노동신문에 나타난 북한 산업 관련 기사

일 자	제 목	면
20120114	련하기계개발자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따라배워 새 세기산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치자!	3
20120129	련하기계개발자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따라배워 새 세기산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치자!	3
20120211	온 나라에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어	2
20120224	새세기산업혁명의불길을지펴주신위대한스승	2
20120226	새세기산업혁명의불길을지펴주신위대한스승	3
20120227	새 세기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힘있는 당조직정치사업	3
20120315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신 위대한 창조의 영재	2
20120414	새 세기 산업혁명의 앞장에서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주도해나가겠다	6
20120419	일심단결, 불패의 군력 더하기 새 세기 산업혁명-사회주의강성국가	4
20120501	새 세기 산업혁명의 앞장에서 달려갈 드팀없는 의지	3
20120505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산업미술성과	4
20120508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더욱 거세차게	4
20120523	김정일애국주의의 고귀한 결정체-새 세기 산업혁명	3
20120531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를 추켜들고 금속공업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자	5
20120623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 참관	2
20120628	새 세기 산업혁명의 봉화를 더 높이	1
20120711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킨다	1

5) 허성철, 녹색의 의미에서 중요한 문제, 2018;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관광 산업, 전력산업, 환경보호 산업발전방식, 지적재산 분야, 2019

일 자	제 목	면
20120913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폐막	4
20120927	애국의 의지로 안아오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2
20121113	새 세기 산업혁명의 힘있는 추동력	3
20121210	세차게 타오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1
20121225	우리 식 축산업발전의 설계도	5
20130221	새세기 산업혁명은 과학기술혁명 - 강규철	4
20131015	축산업의 나라-김수진	6
20131113	우리의 힘으로 창설하는 첨단산업	3
20131222	축산업의 튼튼한 토대를 축성 - 한성일	4

다.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경제 분야 주요 내용(2019.12.28~31 개최)⁶⁾

-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력강생을 통한 ‘정면돌파’ 전략 추진
 - 김정은 위원장은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잠재 생산력을 총발동해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당면과업으로 제시
 - 경제 분야의 정면돌파 주요 과업 제시
 - 경제사업체제와 질서 정돈, 경제관리사업 개선, 인민 경제 주요 공업들의 생산 증대, 10대 전망목표 수립, 농업 생산 결정적 증대, 과학, 교육, 보건사업의 개선, 증산 절약(노력, 에너지, 원가, 부지 절약 등)과 질 제고 등
 - 주요 산업부문의 과업 제시⁷⁾
 - 금속공업: 주제철 생산공정 완비
 - 화학공업: 화학공업 현대화와 화학공장 정비보강
 - 전력공업: 발전설비들의 효율성 제고, 어랑천, 단천 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개발, 신규 에너지 자원 발굴
 - 석탄공업: 석탄 설비, 자재, 물자 보장 등
 - 철도운수: 철도 현대화, 현존수송능력 활용
 - 경공업: 현대화와 국산화, 질 제고에 초점
 - 기계공업: 기술역량 강화 방향으로 현대화사업 추진
 - 건재공업: 국산화 비중 제고, 고급 건재품 생산
 - 농업: 정면돌파전의 핵심 분야로 과학농업을 통한 다수확 관철, 농업과학연구기관 및 농업과 학기술인재육성, 육종사업 초점, 기계화, 농촌경리의 수리화, 축산과 과수업 집중 등

6) 『로동신문』, 2020년 1월 1일.

7) 접경 지역 혁신포럼, 북한의 2020 정면돌파전략과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협력 전망, 2020.2.15

-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정면돌파’ 전략을 통해 2020년 주요 건설대상과 관광 산업육성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주요 관광개발구에 대한 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평양 및 지방 주요 대도시 (신의주, 만포시, 강계시, 금강산 등)의 경제기반 건설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어랑천발전소, 온실농장, 양묘장 등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 정비, 과학 기술과 국산화 분야의 성과에 집중한 국산화 등이 주요 과제임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공장들의 신축 및 개건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2.2 북한의 경제개발구

가. 경제개발구 현황

- 북한은 27개의 경제특구 및 중앙급·지방급 경제개발구 지정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채택을 공포⁸⁾함
 - 2013년 11월 21일과 2014년 7월 23일을 비롯하여 정령으로 10개의 직할시, 도들에 경제개발구들을 창설한다고 선포함
 - 직할시, 도들에 창설된 경제개발구들은 매개 지방의 경제기술적 토대와 자연 지리적 특성에 맞게 배후지와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무역거래와 수송을 발전시킬 수 있게 위치를 정하고 전망계획을 세우고 있음
 -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은 자기의 전문분야와 희망에 따라 적합한 경제개발구를 선택하고 공업과 농업, 무역, 관광,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무역활동을 진행하도록 함
 -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설정하고 경제개발구의 활성화를 강조함
 - 당대회 사업총화에서 김정은은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⁹⁾
 -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규모 맞춤형 경제특구임
 - 기존특구 5개는 대규모·복합형, 새로 신설된 22개의 경제개발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경제특구임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2018

9)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 종합형 경제개발구 6개, 공업개발구 4개, 관광개발구 4개, 농업개발구 3개, 수출가공구 3개, 첨단기술개발구 1개, 국제녹색시범구 1개로 특성별로 분포함
- 경제개발구는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일정 수준의 권한을 양도함으로써 지방의 자력갱생 혹은 자력자강을 통한 지역적 동시발전을 추구하려는 노력의 일환임¹⁰⁾
 - 경제개발구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으로 지역적 상황이나 특성에 맞는 유형의 개발구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음
- 따라서 북한 경제개발구의 개발유형을 확인함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지역개발 방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음
 -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개발구들이 설치된 지역에는 기초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해외투자 유치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IV-4〉 북한의 27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자료: NK경제(<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95>)
(검색일: 2019년 10월 22일)

10) 통일연구원,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 방향, 2018

- 2018년 기준으로 북한의 경제특구 중 운영이 되고 있던 곳은 나선경제무역지대로 최근에는 이마저 대북제재로 거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기타 경제개발구의 경우 개발성고가 미진함¹¹⁾
 - 경제특구(5곳): 나선경제무역지대(1991), 개성공업지구(2002), 원산-금강산 관광특구(2002), 신의주 특수경제지대(2002),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2010) 등
 - 경제개발구(22곳): 중앙급(5곳) 강령(2014, 황해남도), 은정(2014, 평양), 진도(2014, 남포), 무봉(2015), 강남(2017, 평양), 지방급(17곳) 해산(2013), 만포(2013), 청진(2013), 압록강(2013, 평안북도), 위원(2013), 현동(2013, 원산), 흥남(2013), 청남(2014, 평안남도), 신평(2013), 온성(2013), 송림(2013, 황해북도), 와우도(2013, 남포시), 북청(2013), 어랑(2013), 숙천(2014), 청수(2014), 경원(2015) 등
- 최근 북한이 발표한 경제개발구별 투자 희망액은 총 29억 달러로, 주요 유치 희망업종은 농수산물, 식품, 경공업, 금속·기계·전기·전자·관광 등임

〈표 IV-6〉 북한 경제개발구별 투자 희망액 및 유치 희망업종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종류	투자희망액	유치 희망업종
청진	경제개발구	200	금속가공, 기계제작, 전자제품생산, 건재생산, 중계수송, 대외무역
압록강		240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만포		120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경원		140	전자제품생산, 수산물가공, 피복가공, 식료가공, 관광
해산		100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강남		140	다수확우량품종 육종과 사료생산, 첨단제품가공 및 임가공
청수	관광개발구	240	관광봉사
무봉		240	백두산지구참관 관광객들에 대한 종합봉사
온성섬		90	관광봉사
신평		140	관광봉사
와우도	수출가공구	100	수출지향형 가공조립업
진도		90	기계, 전기, 전자, 경공업 및 화학제품 보세가공무역
송림		80	철강재생산제품 수출가공업, 창고보관업, 화물운송업
현동	공업개발구	100	정보산업, 경공업, 산림자원가공
흥남		100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제품생산, 기계설비제작
위원		150	광물자원가공, 목재가공, 기계설비제작, 농토산물가공
청남		120	채취설비, 부속, 공구제작, 석탕원료 화학제품생산, 대외무역
어랑	농업개발구	70	순환생산체계 농축산기지, 농업과학 연구개발기지
숙천		90	농산, 축산, 과수, 남새, 버섯생산 및 가공, 기술연구개발
북청		100	과수업, 과일종합가공업, 축산업
강령		90	녹색상업기술연구개발, 유기농산물 및 수산물가공, 수산물양식
은정	첨단기술개발구	160	정보기술, 나노 및 새 재료, 생물공학분야의 연구개발
합계		2,900	

자료: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북한 경제개발구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19

11) 경기도, 경기도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지원 사업, 2018

나. 경제개발구 특징

●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특징¹²⁾

-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2013년 5월에 제정된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도 1구 원칙에 입각하여 지정되었음
 - 중국을 모방하여 경제특구 및 개발구를 중앙급과 지방급으로 이원화 함
- 종합적 성격의 경제특구가 아닌 각 지방이 보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공업·농업·관광·수출 등 지역적으로 특화된 경제개발구를 추진하고 있음
 - 경제개발구는 대부분 서해안 및 동해안에서 접근이 용이한 연안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농업, 수산업, 관광업, 수출가공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남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 사업을 진행하기에 유리함
- 하지만 대북제재 및 대북투자 리스크, 인프라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진척이 거의 없음

● 경제개발구 우대 정책 현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경제개발구 개발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법, 경제개발구 창설규정, 경제개발구 개발규정, 경제개발구 환경보호규정, 경제개발구 노동규정 시행세칙 등 수십 개의 법·규정·세칙을 제정함
- 경제개발구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경제 활동을 보장하게 되며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와 이익, 신변안전을 법적으로 보호 받게 됨
- 국가는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하며 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위치선택에서 우선권과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해 줌
- 경제개발구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해주며 이윤을 재투자하여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50%를 돌려줌
 -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 세액의 전부를 돌려줌
-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개발 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이고 기업소득세율을 결산이윤의 14%, 장려부문은 10%임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 협력 필요, 2018.5

-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하며 경제개발구 건설용 물자와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 또는 경영용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가가 쓸 생활용품, 그밖에 국가가 정한 물자에는 관세를 부여하지 않음

〈표 IV-7〉 북한 경제개발구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설립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국가 개발 총 계획과 지역 국토건설 총 계획에 따라 국가를 개발
지역선정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국가경제발전전략에 부합 ②대외경제 협력과 교류에 유리 ③국가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④주민지역과 일정거리 확보 ⑤국가지정 보호구역 훼손 금지
개발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단계적 개발 ②외자유치 다원화 ③자연생태환경 보호 ④토지와 자원 합리적 이용 ⑤생산, 서비스 국제경쟁력 제고 ⑥경영활동 편익보장 및 사회공공이익 보장 ⑦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
관리 권한 및 개발구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특수경제 지도기관 및 지방 인민위원회 ◦ 분야별로 공업 개발구, 농업 개발구, 관광 개발구, 수출 가공구, 첨단기술 개발구 관리 소속에 따라 지방급 경제개발구,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분
투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법인·개인·경제조직, 해외 동포
기업 관련 활동 혜택	기업경영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 경영활동에서 특혜 보장 ◦ 회사, 지사, 사무소 자유롭게 설립 가능
	기업 활동 우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 노동력채용, 세금납부 등 특혜보장(라선과 동일) ◦ 인프라 건설, 첨단기술, 국제경쟁력 갖춘 생산 부문 투자 장려 및 우대·토지위치 선택 우선권 부여, 토지사용료 일정기간 면제
	세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소득세율 결산이윤의 14%, 장려부문 결산이윤의 10% ◦ 10년 이상 운영기업은 기업소득세 감면 혹은 면제 ◦ 기업에 재투자 혹은 기업을 신설하여 5년 이상 운영할 경우 재투자분의 소득세 전부 환급
	관세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관세 혜택: ①건설용 물자 ②가공·중계·보상무역 물자 ③생산 또는 경영용 물자, 수출물자, 투자가 생활용품
	토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기간은 50년(라선과 동일) ◦ 토지 이용권과 건물 소유권 매매, 재임대, 증여, 상속, 저당 가능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노동력, 외국인 노동력
기타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적인 이윤과 기타 소득의 자유로운 송금(라선과 동일) ◦ 외화의 자유로운 반출입 가능 ◦ 유가증권 거래 가능

자료: 한국산업은행 KDB 미래전략연구소, 김영희 북한 경제팀장 제공자료

●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연계 전략¹³⁾

- 북한은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에 외자를 유치하여 시장경제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남북교류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특정 지역에 경제특구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남북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던 통일경제특구는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을 어떻게 유치하여 북한과 교류 협력을 확대할 것인가가 불분명한 상태였음
 - 북한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특구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2.3 북한 투자 유망 분야와 북한의 수요

가. 김정은 시대의 유망 산업 분야¹⁴⁾

● 북한의 산업개발 기초

- 산업적으로는 금속 및 화학 등의 소재산업과 ICT 등의 기술집약산업, 수출제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지역적으로는 동해안 지역에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서해안 지역에는 ICT 등 기술집약산업과 수출제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로 기술집약산업과 수출제조업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 금속, 화학 등 소재산업과 기계산업의 육성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며 이들 산업에서는 국지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의 주력 수출산업

- 북한이 주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수출산업 분야는 지하자원(석탄, 철광석 등), 철강, 수산물, 의류, 전자제품(전자기기, TV, VTR), 광학 및 정밀기계(시계, 광학, 의료, 검사, 정밀기기), 비철금속 등이 있음
- 소재 산업의 공급능력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금속 및 화학을 기초공업으로 상정하여 생산력 확충을 도모하고 있음
- 기술집약산업의 육성과 경공업에서의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료 및 원료, 설비, 제품의 국산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질 제고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13) 경기연구원,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 기본구상과 전략 연구, 2018

14) 북한연구학회·산업연구원·LH, 북한 산업입지 전략과 경제특구 협력방안, 2019

- 관광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산, 삼지연 등의 지역에 집중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중단기적으로는 관광, 식품, 등 최종소비재, ICT(전자포함) 제조업 및 서비스 등이 유망분야로 볼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석유화학, 금속, 자동차, 공작기계 등의 산업 분야에 집중해야 함
 - 한편 관광, 식품, ICT 제조업 및 서비스 농기계 등의 업종은 민간기업의 주도로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투자확대가 가능한 분야임
- 북한 지하자원의 단순 수입대체를 넘어서 남한의 고부가가치 미래산업과 북한 지하자원의 결합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북한의 지하자원인 희토류와 남북한의 관련 산업기술 및 중앙정부의 미래산업 투자계획 등이 함께 연계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임
 - 북한에 다량으로 매장되어있는 지하자원인 희토류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원료로 경제성이 매우 높음
 - 남한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ICT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후 북한의 희토류와 연계될 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나. 북한의 수요를 고려한 남북교류 협력 추진

- 북한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건설 추진¹⁵⁾
 - 북한의 대부분 지역은 기존 인프라의 해체나 전환비용 없이 신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함
 - 즉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개발도상국 발전단계를 답습할 필요 없이 도약적 경로를 모색할 수 있음
 - 현재 북한이 지정한 27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대상으로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별도의 법률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 해외투자 자본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정책집행이 가능하고, 북한이 제시한 경제개발구 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음
 -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와 당의 결정을 통해 정책집행의 단계가 축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함
 - 평양과 평안도는 입지여건이 좋아 대부분의 산업 입지가 적합하며, 특히 평양은 중화학 공업을 제외한 기계, 전기·전자, 생산자서비스업 위주로 적합함

15) 한반도 미래도시협력네트워크포럼, Peace, Planning, and Person, 2019

〈표 Ⅳ-8〉 북한의 지역별 산업배치(안)

지 역	입지 적합 업종
평양	음식료품, 섬유 및 의복, 기계, 전기 및 전자, 생산자서비스
평안남도	금속소재, 기계, 전기 및 전자, 자동차, 조선, 물류
평안북도	음식료품, 섬유 및 의복, 화학, 기계, 물류
함경북도	화학, 금속소재, 기계, 전기 및 전자, 물류, 생산자서비스
함경남도	음식료품, 섬유 및 의복, 화학, 금속소재, 기계
황해북도	음식료품, 비금속소재, 금속소재
황해남도	음식료품, 섬유 및 의복, 비금속소재, 관광
자강도	목재 및 종이 및 출판, 금속소재, 기계
양강도	목재 및 종이 및 출판, 금속소재, 관광
강원도	음식료품, 화학, 조선, 물류, 관광

자료: 북한연구학회·산업연구원·LH, 북한 산업입지 전략과 경제특구 협력방안,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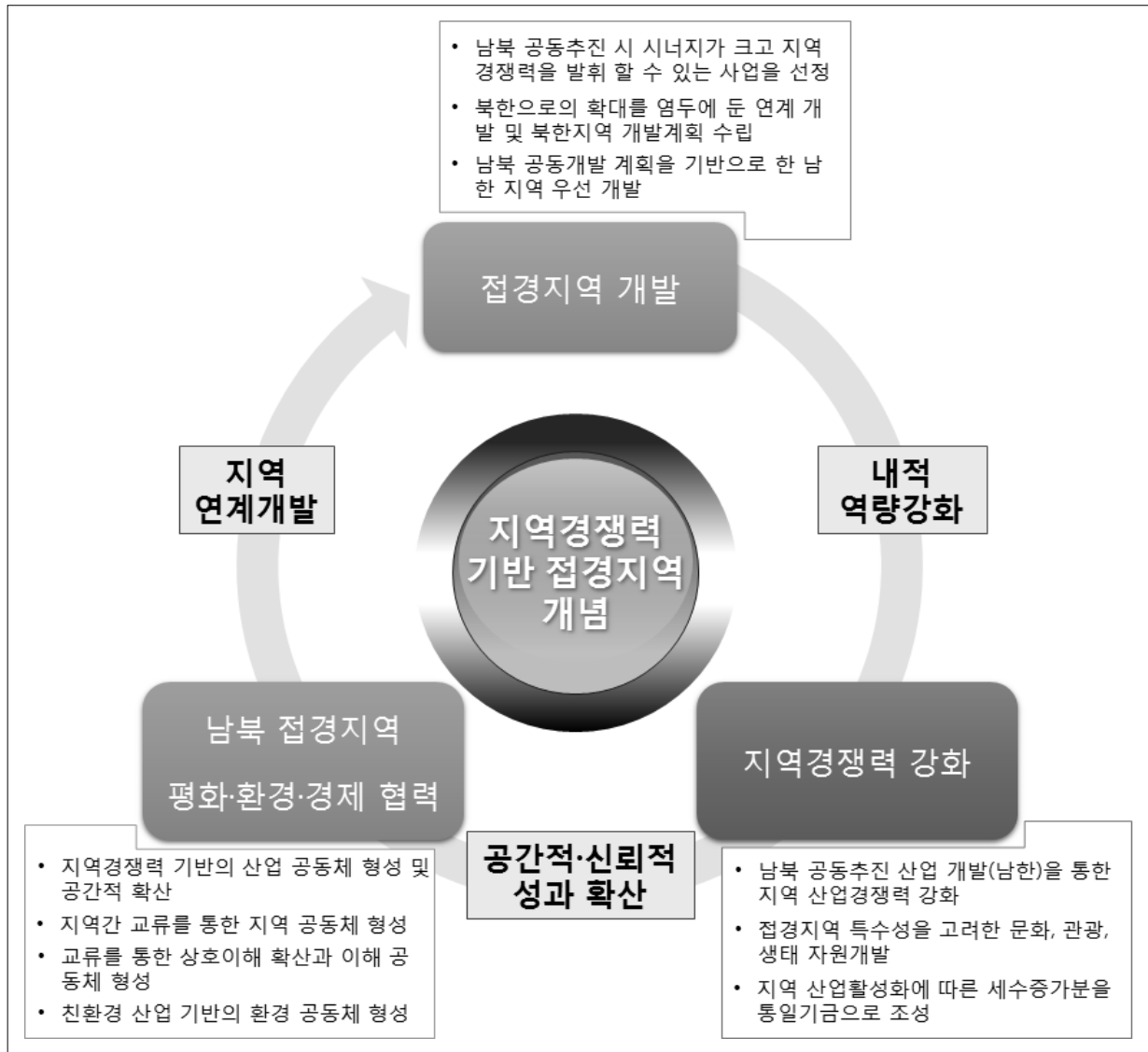
3.1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가. 추진 목표

- **접경 지역 특화 산업과 북한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접경 지역 지자체의 균형 발전**
 - 접경 지역 특화 산업의 발굴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동시에 북한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평화경제의 실현
 - 중소기업의 남북협력 거점 개발 및 시범단지 구축을 통해 남북교류 협력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켜 남북교류 협력의 지속화 및 안정화 기여
 - 한반도 균형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의 구상 및 목표 반영
- **평화균형성장을 통한 신한반도체제 형성에 기여**
 - 접경 지역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성에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 할 수 있음
 -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호혜적 경협’ 추진, 북한의 수요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류 협력 등을 제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경협 사업의 추진을 제시하고 있음¹⁶⁾
 -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연계·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견인하도록 함
 - 신한반도체제의 주요 목표는 남북이 하나의 사회문화·경제 공동체로서 단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동시에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 해양을 연계하는 중심적 허브 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임
- **남북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화해와 협력, 신뢰 구축, 공감대 형성을 통한 통일 환경 조성**
 - 다양한 교류를 통해 남북 간 신뢰 조성의 자리를 마련하여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 환경을 조성함

16) 민주연구원,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 추진 방향, 2018.10

〈그림 Ⅳ-5〉 접경 지역 경쟁력 기반의 남북교류 협력 목표



자료: 국토연구원, 통일대비 남북 접경 지역 국토이용 연구 구상: 남북협력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2017; 국토연구원,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2018

나. 기본 방향

-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역량 강화(전담조직 및 법제 정비)
 - 남북교류 협력 전담부서 확충을 통한 규모의 확대, 전담 인력구성 등 실질적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이 우선되어야 함
 - 실무교육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접경 지역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전담 할 인력을 확충하고 체계적 교육 등을 통해 접경 지역 지자체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지자체 내 잦은 부서 이동은 남북교류 협력 전담인력의 전문성 단절을 야기함
- 이에 따라 기 추진사업을 임기 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업무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 한편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차원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
 -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남북관계 및 중앙정부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이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자체 스스로 일정 수준의 독립적·자율적 공간을 확보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지자체를 남북교류 협력의 주체’로서 명시한 교류 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함
-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확대 조성 및 재원의 다각화
 -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남북관계 및 북한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단계적·점진적 협력방안 모색¹⁷⁾
 - 남북관계의 유동성 및 대북제재 현황을 고려할 때 남북 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협력방안의 모색은 현시점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실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규모와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남북교류 협력의 각 개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과거의 학습 효과를 통해 대북 투자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음
 - 특히 대규모의 자원과 노력이 수반되는 사업일수록 점증적이고 단계적인 추진방식을 사업추진의 원칙으로 삼아야 함
 - 특히 분단 7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생성된 남북 간 장기 갈등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적 이질감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교류 협력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단계적·점진적 협력은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남북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임
 - 북한 내 수용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북한의 참여 유도 및 북한 내 산업기반 조성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상호교류

17) 경기연구원,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 기본구상과 전략 연구, 2018

의 발판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남북한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호혜적 협력 속에서 남북 모두가 이익을 창출하는 형태의 단계별 협력이 되어야 함

●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한 투 트랙(two-track) 접근

-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남북교류 협력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대안을 항상 마련해 두어야 함
 - 즉 대북제재가 지속되어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대안적 추진방식, 기획 중인 사업의 새로운 경로 등을 사전에 구상해 두어야 함
 - 남북교류 협력의 각 국면을 ‘중단 및 대기’, ‘재개 및 활성화’, ‘확대 및 성장’ 등의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각 시나리오별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의 대응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¹⁸⁾
 - 또한, 여타 분야의 사업들에 비해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구속받는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 내 교류 협력이 가능한 지역들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향후 교류 협력 재개 국면에 대비해야 함
- 대북제재 하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의 ‘창의적 발굴’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과감한 사업 영역 발굴이 필요함
 -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는바, 남북교류 협력의 본격적 재개와 활성화에 대비한 사업계획들을 재평가하고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즉 인도적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협력사업 연결고리를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의 대내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정책 방향과 전략이 필요
 - 또한, 남북 정상 간 합의되었던 ‘감염병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및 보건 의료분야 협력’, ‘산림협력’ ‘관광’ 등의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만,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최근 지자체·민간단체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협조하기로 한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제재 면제가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검토 및 발굴이 필요함

● 남북교류 협력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기존 남북한 합의 사업들의 재검토 및 사업의 다각화¹⁹⁾

-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사업은 북한의 지역별 산업배치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18) 경기연구원,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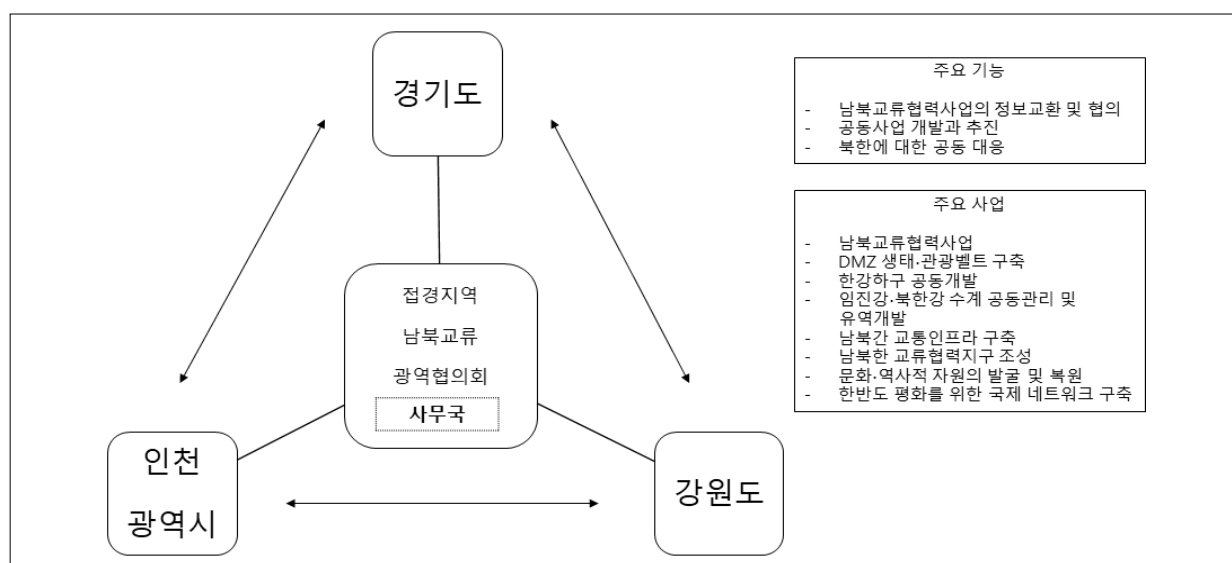
19) 북한연구학회·산업연구원·LH, 북한 산업입지 전략과 경제특구 협력방안, 2019

- 남북한이 합의한 사업을 지역적으로 보면 '10·4 공동선언문'에는 해주를 포함한 서해 평화협력지대 구상과 남포 및 안변의 조선협력, 그리고 단천 지역의 자원개발 사업 등이 있음
-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동해관광특구와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을 합의한 바 있음
- 남북이 이미 합의하였던 기존 사업들에 대한 재추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북한과의 상호신뢰 회복과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함
- 이와 함께 지자체별 남북교류 협력의 마스터플랜을 새롭게 계획하고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농축산·수산업 및 식품 산업 협력, 접경 지역 상생 협력, 북한지역 개발 및 역량 발전지원 등 각 분야별로 사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함

● 로컬 거버넌스 중심의 협력네트워크 구축(협의체 구성)

- 인천시·경기도·강원도 간 '접경 지역 남북교류 광역협의체' 구성, 대북지원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네트워크 결성 등을 통해 남북교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함²⁰⁾
-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타 지역 광역 및 기초지자체들과 상호협업 및 협력 시스템을 구축함
- 이를 통해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합리적인 조정·조율·보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동시에 남북교류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

〈그림 IV-6〉 접경 지역 남북교류 광역협의회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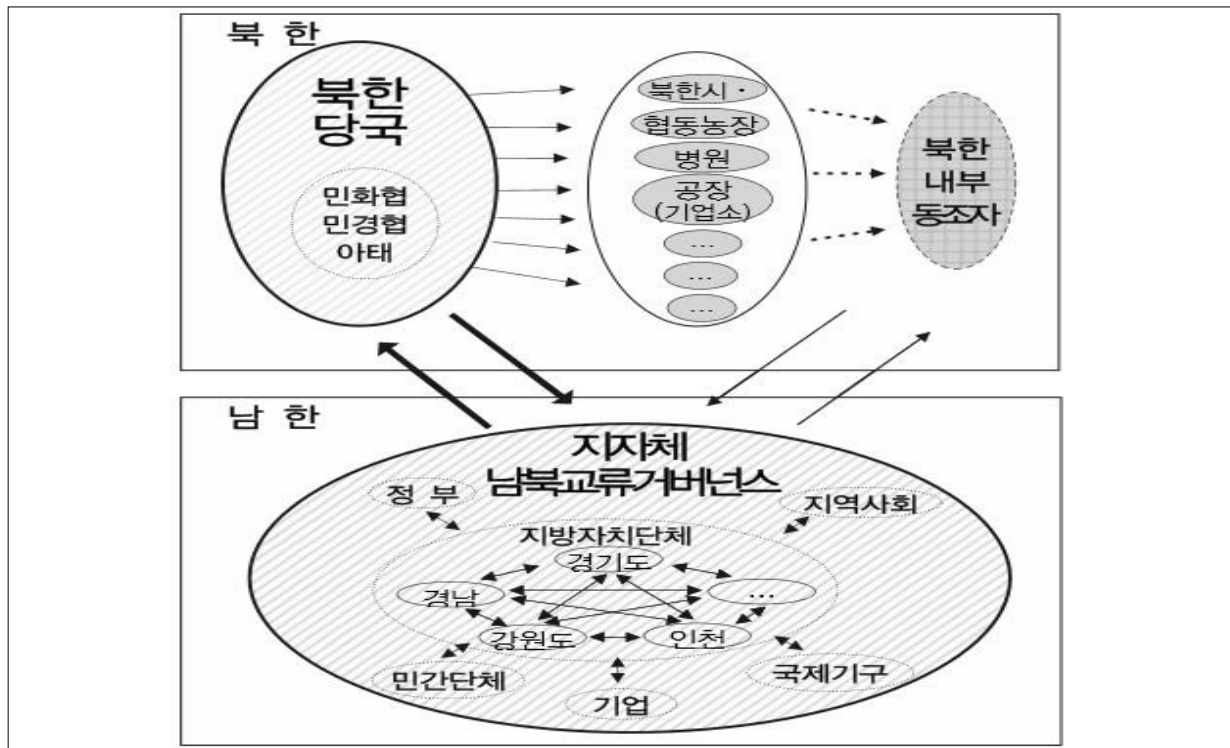


자료: 경기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방안, 2011

20) 경기연구원,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2018

-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전략 모색
 - 북한 지원사업에 진출 및 관여하고 있는 UN, EU 및 기타 국제기구들과의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적극 검토하여 국제기구들의 대북사업 역량과 경험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북한 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서도 우회 통로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지역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
 - 지역사회의 지지와 참여는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밑거름으로서 지속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건임
 - 각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동의와 함께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함
 - 이와 함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취지와 의의, 그리고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과 공유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
 - 특히 접경 지역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대체로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리의 확대에도 크게 유용함을 전파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를 확보해야 함

〈그림 IV-7〉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모형도



자료: 경기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방안, 2011

● 북한의 수요 반영 및 수용 가능성 확대

- 남북교류 협력은 중장기적으로 남과 북 모두가 이익을 얻고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
 - 북한 사회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구와 자립하지 않는 한 과거와 같은 일방적 대북지원은 한계에 직면하게 됨
- 따라서 북한의 경제정책 및 산업정책과 연계 추진으로 협력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
 - 북한의 시장화 진전과 경제개발구 정책 등 북한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
 - 개발 협력 방식의 새로운 접경 지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남북한 산업을 연계하는 방식 등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함
 - 예를 들어 농업개발구 내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농업협력, 주민 생활 개선 등이 결합된 패키지 형식의 종합적 개발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북측 배후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접경 지역 북측지역 공동개발 및 활용에 대한 북측의 수요 반영 및 경제적 유인체계 마련을 통해 북한 당국 및 주민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야 함
-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자매결연사업의 추진을 통한 북한 내 남북교류 협력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남북교류 협력의 거점기지를 구축할 수 있음

다. 남북 산업협력 단계별 기본 구상 및 전략

1) 단계별 기본 구상²¹⁾

-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정해 나감

● 단기에서의 남북한 산업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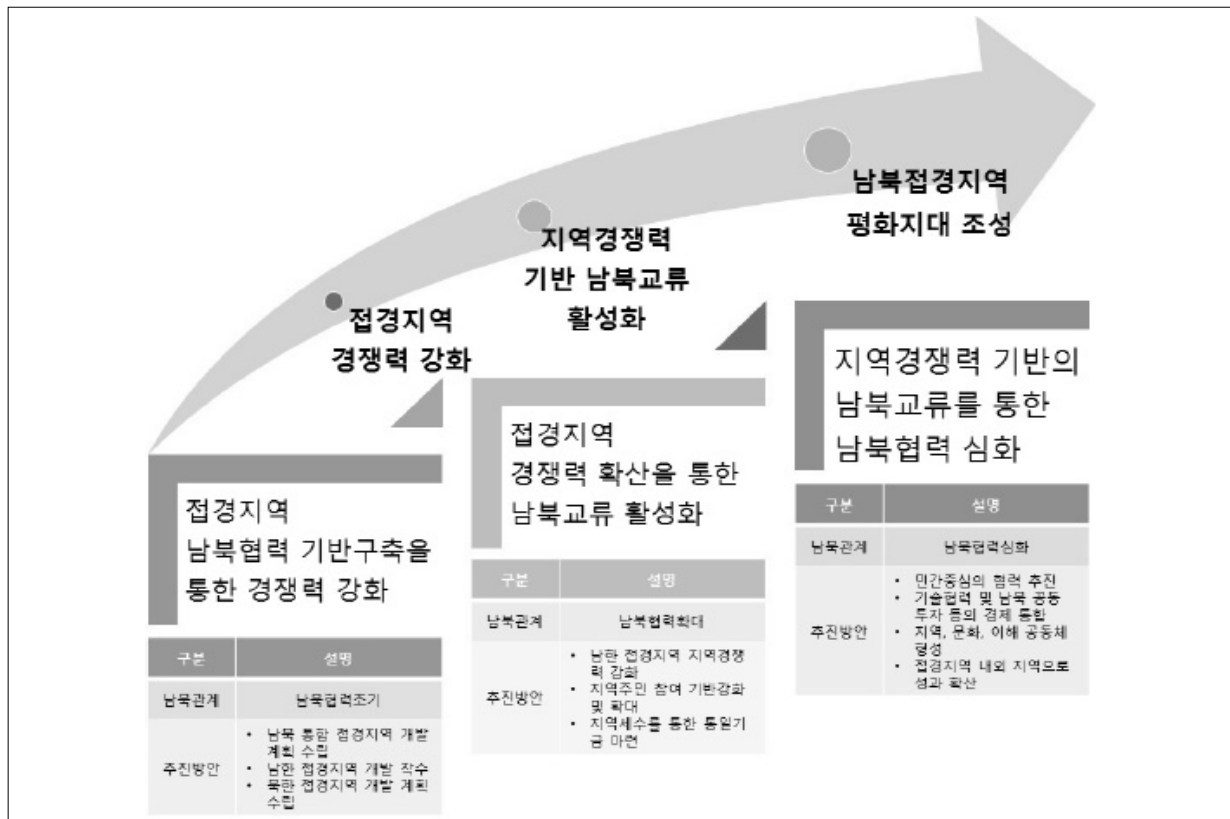
- 이 시기는 남북교류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로 국제사회의 예외·면제 대상 확대 유도 노력과 함께, 남북교류 협력 재개에 대비한 여건 조성 및 역량 강화 등 ‘남북교류 협력 생태계 복원’에 주력해야 함²²⁾

21) 북한연구학회·산업연구원·LH, 북한 산업입지 전략과 경제특구 협력방안, 2019

22)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경협 활성화와 UN의 대북제재 문제점 해소방안, 2019.10.29

- 이를 위해서는 재개에 대비한 관련 법·제도의 재정비와 개선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또한, 국내 구간의 미연결 철도·도로 복원, 이산가족 상봉과 사회문화 및 보건, 의료, 산림·환경 등의 민생 부문의 사업부터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관광 산업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최근 북한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관광지역인 원산·갈마, 평양, 삼지연(백두산) 등의 지역에서의 관광 산업협력을 추진함
- 북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공업 분야의 협력, 북한 기업의 생산력을 확대할 수 있는 산업기반 조성이 요구됨
 - 섬유 의류, 식품 가공을 비롯한 생활 산업에서의 남북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함
 -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업협력 분야는 중소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주도의 남북경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규모가 큰 제조업보다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중소기업의 기술집약적 산업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이 설치한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거점 개발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남북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점차적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함
- 중·장기에서의 남북한 산업협력
 - 이 시기는 대북제재가 완화 및 해제되는 단계로 기존 사업의 재개와 확대, 신규 선도사업의 시범 운영 등으로 발전시키며 점차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확대해 나감
 - 기본적인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 북한의 산업 분야 위주로 협력을 본격화 함
 - 소비재 시장과 관련된 소재, 원자재, 산업용 기계 공급 관련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건설수요와 관련된 기계, 자재 등의 협력도 필요함
 - 주력 산업 분야에서의 남북한 분업구조 구축을 본격화하는 한편 평양을 남북한 기술집약적 산업 및 서비스 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함
 - 최종적으로는 남북한 산업협력을 북한 전역으로 확산시켜 개발함

〈그림 IV-8〉 접경 지역 남북교류 협력 단계별 추진과제



자료: 국토연구원, 통일대비 남북 접경 지역 국토이용 연구 구상: 남북협력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2017; 국토연구원,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2018

2) 기본 전략

● 북한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단계적·점진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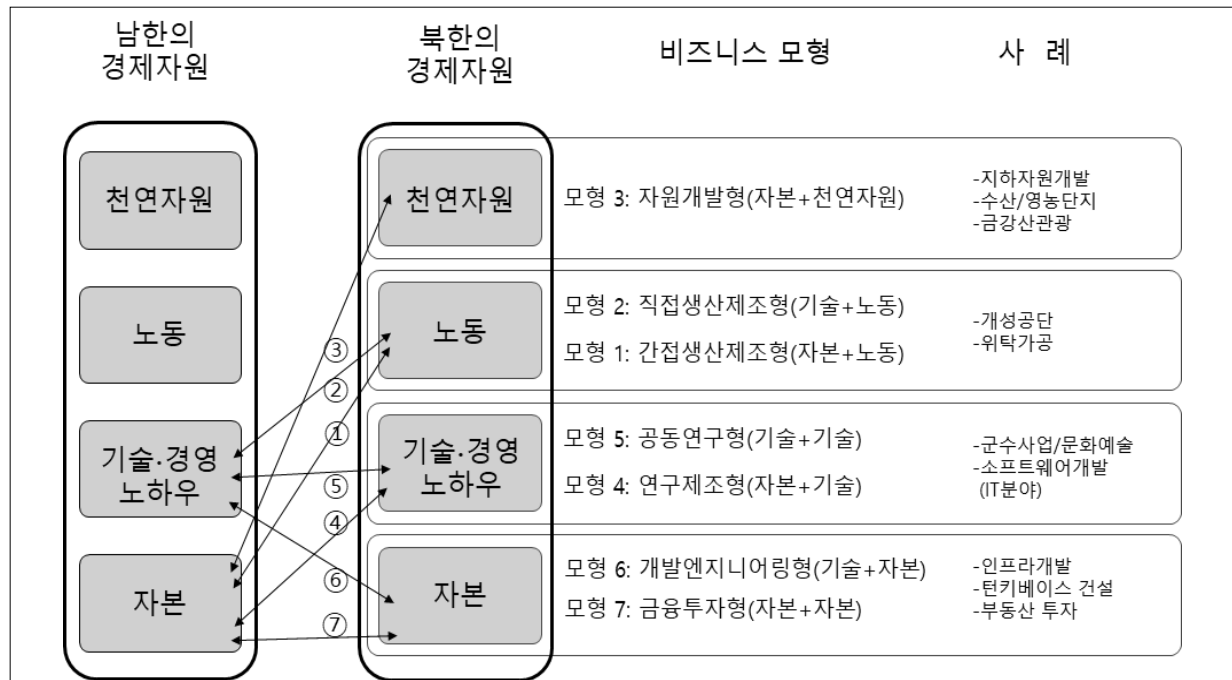
- 남북한 산업협력은 북한의 수용 능력 확충과 맞추어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 기반시설에 관한 북한의 물적, 인적, 제도적 수용 능력은 여전히 매우 낙후되어 있음
 - 현재 북한지역에서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산업협력은 리스크가 큼
 - 우선 설비반출형 위탁가공 교역 등의 소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협력부터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투자 규모가 큰 협력사업이 검토되어야 함

● 남북한 산업협력은 현재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추진

- 기반시설이나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도시나 인근 지역에 우선 진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북한이 전국에 설치한 지방개발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음

- 주변의 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지방개발구는 민간기업이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민간주도의 남북한 산업협력의 성과가 축적되고, 북한의 인적, 제도적 기반이 확충된 이후 정부 간 대규모 협력사업이 추진함
 - 에너지, 수송, 통신 등 정부주도의 기반시설 협력사업과 함께, 민간에 의한 투자협력사업을 추진함
-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남북교류 협력의 지자체 주도
 - 투자의 규모나 협력사업의 성격 등에 중간영역에서는 정부 혹은 민간이 아닌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여 사업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
 - 지금까지 지자체는 NGO 단체를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이나 소규모 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개발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림 IV-9〉 남북협력 비즈니스 모형의 형태와 해당 사례



자료: 민경태,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 2018

라. 해외 접경 지역 교류 협력 사례: 중국 변경무역제도²³⁾의 남북 접경 지역 적용

- 대부분의 변경지역은 국가 간 경계선으로 인해 자유로운 이동이 제약되면서 국경을 마주한 인접 지역과 생활 공동체가 분절되거나 교역의 단절 혹은 제약이 나타남에 따라 생활필수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역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소멸되는 특징이 나타남
 - 이와 같은 이유로 WTO도 국경선에서 15km 이내 지역 거주민에 한정하여 생활필수품 수급을 위한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관세특혜를 허용하고 있음
-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국경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고 생활필수품 수급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으며,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경선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 간에 교역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WTO는 국경무역, 중국은 변경무역이라고 칭함
- 이와 같은 중국의 변경무역제도, 특히 호시무역은 남북관계 경색 및 대북제재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 접경 지역 교류 협력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모색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함

1) 중국 변경무역(호시무역)의 개요

● 중국의 호시무역

- 중국의 변경무역은 국경선 20km 이내 지역의 주민, 기업 등이 중국 정부가 허가한 개방지역, 시장 등에서 인접국가와 상품 및 서비스교역을 추진하고, 이들 교역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관세 및 내국세의 면제 혹은 감면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변민호시무역(边民互市贸易)
 - 호시무역은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허가된 주민이 변경지역 통상구 및 시장에서 규정된 금액, 품목의 범위 내에서 상대국 변경지역 주민과 거래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매일 1인당 8,000위안 범위 내에서 관세 면제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 편의를 제공함

● 중국 호시무역의 주요 사례

- 중국-북한 간 호시무역
 - 북·중 간 호시무역의 주요 지역은 함북 나선시 원정리, 지린성 창바이현, 지린성 투먼시, 랴오닝성 단둥, 함경북도 경원군 유다도 등 2017년 기준 306개로 알려짐
 - 주요 거래 물품은 중국은 쌀, 밀가루, 옥수수 등 식량과 담배, 술, 사과, 꿀, 신발, 모자, 등산

23) 경기연구원, 중국 변경무역제도 연구, 2019

복, 운동화 등 주로 일상 생활용품이며, 북한은 말린 오징어, 문어, 새우, 가리비, 해삼, 명태 등 해산물과 편직물 등 수공업품 등임

〈그림 IV-10〉 북한과 중국 간 호시무역구 설치 지역



자료: 경기연구원, 중국 변경무역제도 연구, 2019

2) 남북 접경 지역의 중국 변경무역(호시무역)제도 적용

● 예성강-김포/강화 호시무역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남북관계 경색 및 대북제재의 장기화로 인해 접경 지역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대북제재 면제 가능 사업의 발굴 및 우선적 추진 필요함
-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동시에 10·4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에서도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사용은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남북교류 협력 재개 시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한강하구는 예성강, 임진강 등의 하구가 만나는 곳으로 오래전부터 무역,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 협력 추진이 가능한 지역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중국의 호시무역을 남북 접경 지역에 적용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제안함
 - 북한 접경 지역의 경우 특별한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지원 및 협력 차원의 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호시무역 추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남북 간 ‘호시무역’은 접경 지역 내 양국이 허가한 제한적인 범위(금액, 품목 등)에서 접경 지역 주민 간 거래행위를 의미함
 - 주민의 생활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낙후된 변경지역의 빈곤 탈출 및 경제 수준 향상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 군사분계선과 군사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육상 접경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한강하구는 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어 접근이 용이함(예, 남북 간 교동도 또는 조강리(김포) 다리 연결)

+ 추진 내용

- 남북 접경 지역인 예성강 하구와 김포/강화 호시무역 추진
- 접경 지역에서의 호시무역 추진을 위한 인천·경기도 ‘한강하구 호시무역 사업단’ 조직
- 예성강~김포/강화 호시무역 공동관리를 위한 북한과의 협력관리체제 구축
- 대북제재 면제 가능 품목(생필품, 의약품 중심)을 고려한 호시무역 추진
- 남북 호시무역의 금액, 품목 등 제한적 범위 선정

〈그림 IV-11〉 남북 해상 접경 지역 호시무역



자료: Google Map 기반 작성

+ 기대 효과

-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호시무역을 통한 작은 교류가 점차 확산하게 될 경우 남북 주민 간 접촉면 확대로 신뢰형성이 가능하며,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예성강-김포/강화 호시무역’은 기존 남북이 합의했던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이를 통해 남북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해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상호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 할 수 있음

3.2 스마트 6차산업

가. 남북협력 실행가능 산업 근거

1) 북한의 농수산물산업 정책

● 북한의 농수산물산업 혁신 정책

- 북한은 농산·축산·수산 부문 혁신을 통해 인민 생활을 개선시키고자 하였음
- 농업부문의 주요과제로 우량품종 및 과학농법 도입,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알곡생산계획 완수하는 것과 축산과 수산부문의 주요과제로는 기존에 건설된 양어장, 남새온실, 버섯생산기지 등의 생산량 증대 등이 제시되었음
- 특히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포전담당책임제를 통해 농업부문의 경영관리수준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²⁴⁾
- 아울러 농·수산 각 부문 외에도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농·축산), 임농복합경영방법(임·농업·축산) 등 다른 부문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타 산업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과학화 기조 또한, 농·수산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 북한에서 수산업은 식량난 해결과 외화획득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하지만 수산 관련 기술의 낙후와 기자재와 에너지의 심각한 부족 등으로 생산능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북한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함

● 북한의 해양 입지²⁵⁾

- + 북한의 해양은 동해와 서해로 나누어져 있으며, 환경적 특성이 상이하여 수산생물의 분포가 매우 대조적임
- 동해는 난류와 한류가 연중 교차하면서 어류의 생육에는 좋은 환경이 생성되며, 세계 3대 어장의 하나인 북서태평양 어장과 인접해 있어 어류의 왕래도 빈번하며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음

24) “토지개혁법령 공포 70주년 중앙보고회,” 『로동신문』, 2016년 3월 5일.

25) KDB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2015

- 서해는 굴곡이 심한 해안선과 해안선 주변에 크고 작은 많은 섬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연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토사를 운반해 와서 넓은 간석지를 형성하여 패류, 해조류의 생산 및 양식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국내 서남해 갯벌생태계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이며, 연간 가치는 16조 원 규모임

– 평안남북도 및 황해도를 포함한 북한의 갯벌 면적은 2,670km²임

+ 특히 서해 옹진군 마합도가 새 우뚝가사리 생산지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 해역은 큰 조수 간만차와 갯벌이 있는 환경적 특이성으로 육상양식에 필요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 북한 마합도에 대규모 우뚝가사리 군락이 있으며, 같은 종이 소청도 연평도 일대에도 식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 북한의 수산업 정책

- 북한은 수산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바다로부터 인민의 식량을 공급받고, 한편으로는 외화벌이의 중요한 산업으로 이를 장려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확대, 수산의 과학화, 생산의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설정함

- 김정은 시대 북한은 군을 활용한 단기간 내 수산생산 증산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영양문제를 해결하는 친인민적 정책의 일환으로 수산업 강조

–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은 다른 분야 및 과제들보다 신속하게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수산부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이 집중된 어선 건조사업과, 양식장 개발이 중점 협력 아이템으로 꼽힘

– 특히 북한은 원산에 수산기자재 공급 기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관련 업체가 공동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음

〈표 IV-9〉 북한 신년사 수산 관련 내용

2014년	2017년	2018년
고기 배와 어구 현대화	적극적인 어로 전투	배 제작과 배 수리 능력제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고기 잡이 전투 전개	양어와 양식의 확대	과학적인 어로 전투 전개
바닷가 양식 대대적 육성	현대적인 고기 배 생산	양어와 양식의 활성화
	동해안에 종합 어구 생산기지 구축	
	수산업의 물질적·기술적 토대 강화	

자료: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내용을 kmI 정리

● 농업개발구

- 북한에서 지정한 농업개발구 지역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로, 전력 등 기초 인프라 및 선진농업기술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2018년 6월 제3차 방중 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농업과학원을 방문해 ‘세포등판’ 등과 같은 농업혁신과 북·중 간 농업협력을 의논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또한, 2018년 11월 15일 경기도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남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도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서 경기도의 스마트팜(Smart Farm)에 많은 관심을 보임
- 기반시설에 관한 북한의 물적, 인적, 제도적 수용 능력은 여전히 매우 낙후되어 있음
 - 현재 북한지역에서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산업협력은 한계가 있음

● 스마트팜(Smart Farm)

-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식량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농업에 ICT, IoT, 클라우드 등을 융복합 시킨 고생산성 스마트팜이 주목을 받고 있음²⁶⁾
- 북한도 2015년에 대규모 시설원예를 위한 장천남새(채소) 전문협동농장을 건설하고 각 지역 별 협동농장에서 시설원예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스마트팜은 북한에서도 수용성이 큰 사업인 것으로 보임
- 북한과의 농업협력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고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판매·마케팅까지 연계하고 농촌 지역의 문화·전통 특성을 살린 6차산업²⁷⁾으로 연계될 수 있는 농업기반을 구축해야 함

26)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김정은 집권 이후 농업정책 및 농업생산기반 변화, 2019

27) 특화상품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관광·수출 등에 종사하는 경영체들이 네트워크 구성, 가치사슬(벨류체인) 효율화 등을 통해 집합적 활동에 기반 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단위 시스템임

〈그림 IV-12〉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예시)



자료: 스마트팜 확산 방안, 관계부처 합동 자료, 2018

- 농업 분야에서의 남북교류 협력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증대는 북한 주민의 농가소득으로 이어져 농촌 지역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남북교역 및 경험을 통해 형성된 하나의 시장을 통해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스마트팜은 ‘첨단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핵심 자원이 될 수 있음

● 북한의 농수산업 분야 주요 성과²⁸⁾

- 농업 분야에서 포전담당책임제의 영향과 성과를 홍보하면서 농장원들의 생산의욕 고취를 선전하였으며, 농업경영방법의 개선을 통해 토양 침식의 감소와 작물 생산량 확대를 성과로 제시하였음
- 간석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매도 간석지 4구역 건설 시작, 함주군 1,500여 정보의 토지개량 사업 조기 완료, 서해지구 농업부문에서 2만여 km의 물길가시기 사업, 삼지연군, 기계화 포전·규격 포전으로 만들기 위한 800여 정보의 토지 정리 사업 등이 진행되었음
- 수산 분야의 주요 성과로는 대동강 이동식 그물 양어장 건설 및 수확, 자강도의 강과 호수에 6,000여㎡에 달하는 15개의 이동식 그물 우리 양어장 및 1,000㎡의 온실식 메기 양어장 건설, 신창수산협동조합의 생산계획을 1.3배 이상 초과 수행 등이 제시되었음

28) 사)경기시민연구소, 수원형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2017

2) 북한의 농수산물식품산업 관련 경제개발구²⁹⁾

- 검토 지역: ① 북한 마합도
 - + 위치 및 면적: 황해남도 옹진군 마합도
 - + 주요 업종: 수산업(우뭇가사리)
 - 현재 남한과 같은 종의 우뭇가사리 군락지로 확인됨

〈그림 Ⅳ-13〉 마합도(우뭇가사리 군락지)



자료: Google Map 기반 작성

- 검토 지역: ② 강령국제녹색시범구
 - + 위치 및 면적: 황해남도 강령군(강령읍 서남지구), 개발면적은 3.5km²임
 - + 주요 업종: 녹색산업기술연구개발, 유기농산물 및 수산물가공, 식품가공(수출), 친환경에너지 개발
 - + 개발 계획
 - 지대는 자연지리조건을 이용하여 녹색제품생산 및 무역을 기본으로 하는 녹색공업지구를 본보기로 창조하고 그 성과와 경험을 확대하여 강령군을 국제녹색시범기지로 꾸릴 것을 계획하고 있음
 - 해주항과 인접하고 있어 해상수송조건이 유리하며 읍을 지나는 철도와 도로가 평양과 해주, 남포와 연결되어 있어 육로수송조건도 유리함
 - 바다의 양식면적은 8,000여 정보로 해삼, 전복, 조개류, 다시마, 김, 꽃게, 광어 등 수산자원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2018.

이 풍부함

- 군에 있는 수십 개의 저수지들은 양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이 되며, 고구마를 비롯한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잘 되는 무공해지대로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제시험기지, 유기농토산물생산 및 가공기지, 관광봉사기지로써의 전망이 좋음
- 특히 1단계 개발 대상인 시범구에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양식에 유리한 해양조건과 생태조건을 이용하여 메탄가스 등 자연에너지환경보호기술, 녹색산업기술연구보급기지건설, 수산물 양식, 가공지구를 꾸릴 것을 전망하고 있음

〈그림 IV-14〉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2018)

● 검토 지역: ③ 어랑농업개발구

- + 위치 및 면적: 함경북도 어랑군(룡전리, 부평리 일부 지역), 개발면적 5.1km²
- + 주요 업종: 고리형순환생산체제를 도입한 농축산기지, 채종과 육종을 포함한 농업과학연구개발기지
- + 개발 계획
 - 어랑농업개발구는 동해안 북북 농업지대의 대표적 단위로서 앞으로 농업연구와 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축산, 양어까지 배합한 현대적인 고리형순환생산체제가 도입된 고효율농업기지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육종 및 채종 생산을 위한 시범기지로 꾸리며 온실에서 물 절약 및 무토양 재배를 포함한 남새화 화초 생산을 위한 선진 영농법 도입과 축산, 과수, 양어까지도 배합한 고리형 순환체계에 의한 현대적인 속성 축산기지 전망
 - 시범단계의 농업개발구건설경험을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여 어랑지구의 유명한 배와 추리 등 과수재배업도 추가적으로 발전시키며 가까이 있는 대자연호수인 장연호와 바닷물을 이용

한 양어와 물고기 가공업지들도 꾸리게 될 것임

● 검토 지역: ④ 숙천농업개발구

- + 위치 및 면적: 평안남도 숙천군(운정리 일부지역), 면적은 3km²임
- + 주요 업종: 다수확우량품종들의 육종과 채종, 농산, 축산, 과수, 남새, 버섯부문생산 및 가공, 기술연구개발
- + 개발 계획
 - 숙천농업개발구는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을 기본으로 경제발전이 집약화된 경제개발구 건설을 목적으로 함
 - 개발지구에는 유기농법에 의한 논벼, 강냉이, 과수, 잠업 및 채종, 육종 가공기지과 유기농법 개발을 위한 연구기지들, 유기질비료와 유기질 농약생산기지, 축산기지와 가공기지를 갖춘 현대적인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도입한 현대농업연구개발 및 생산, 가공기지 건설을 목표로 함
 - 그뿐만 아니라, 개발구주변의 린회석광산, 공장, 기업소들을 이용한 가공공업을 발전시키며 도안의 풍부한 약초자원을 이용한 가공기지도 건설 할 예정임

● 검토 지역: ⑤ 북청농업개발구

- + 위치 및 면적: 함경남도 북청군(운정리 일부지역), 면적은 3.5km²임
- + 주요 업종: 과수업과 과일종합가공업, 축산업을 기본으로 하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
- + 개발 계획
 - 북청농업개발구는 과수업과 과일종합가공업, 축산업을 기본으로 하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확립된 현대적인 농업개발구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형, 기후, 풍토조건이 과수재배에 알맞은 적지로서 과수업과 과일종합가공업, 축산업을 결합한 개발구임
 - 북청사과를 널리 재배하여 수출하며 지구내의 과수가공기지에서 뿐만 아니라, 가공공장, 북청과수기계공장, 풍부한 노동력 등을 이용하여 과일가공업을 발전시킬 계획임
 - 또한, 주변의 모든 과수농장들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원료로 하는 생산체계를 세우며, 삼주, 삼지구엽초, 당귀 등의 약초와 고사리, 도라지, 더덕, 송이버섯 등 산림자원, 동해바다의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업을 함께 발전시킬 계획에 있음

● 검토 지역: ⑥ 강남경제개발구

- + 위치 및 면적: 평양시 강남군(고읍리 지역), 개발면적 3km²
- + 주요 업종: 다수확우량품종육종과 사료생산, 첨단제품가공 및 임가공
- + 개발 계획

- 강남경제개발구의 농축산지구에는 우량품종육종 및 채종과 사료생산, 선진영농설비생산기지, 과학연구기지를 설립하고 선진적인 영농방법과 설비, 첨단농업기술 및 우량 종자들을 국내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개발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라의 농업생산능력의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음

나. 실행전략

● 첫째,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국제지원기구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남북교류 협력정책의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진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개발지원은 중앙정부와 별도의 차원에서 독자적인 정치기능과 대외협상 권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특정 지방의 이익과 협력만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가발전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전제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북정책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함

+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국제사회 의제를 매개로 협력을 추진해야 함

- 북한이 회원국인 유엔에서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북한의 경제발전, 환경보호, 사회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유효한 매개체임³⁰⁾
- IUCN, UNESCO 등 국제기구는 접경 지역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접경 지역의 환경, 생물종다양성, 문화 등을 보호할 수 있는 협력관리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³¹⁾
- 특히 현재 남한과 북한의 교류와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고려할 때, 국제기구의 지원과 참여는

3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

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해연안 접경 지역 남북 협력관리 방안, 2003

접경 지역의 협력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점진적·단계적으로 북한 농수산물식품의 생산기반 조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식품산업 남북교류 협력의 초기 사업 내용과 형식은 실현 가능하고 남북 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분야에서 출발해, 그 이후 남북 간에 신뢰가 형성되고 나면 점차 그 분야나 형식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
 - 농업 분야의 지원이 비료, 농약, 우량 종자 등 농자재 분야의 지원뿐만 아니라, 농기계, 관개시설과 같은 농업 인프라 등 북한 내 생산기반 조성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인적교류와 기술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과 같은 종합적인 프로젝트 개발지원으로의 방향전환도 필요함
- 셋째, 농수산물식품산업 분야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다양화
 - 북한의 경우 일차적으로 주곡 생산을 늘려 식량부족을 해소해야 하며, 시설채소, 과수, 특수작물의 생산성 증대를 통해 주민의 영양 상태 개선 및 소득향상을 추진해야 함
 - 특히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1차 가공, 보관 및 저장, 유통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점차 확대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북한지역 내 남한과 동일한 첨단 친환경 농산물물류유통단지 설립 추진)
 - 예를 들어, 북한의 강령국제녹색시범구에 남한 접경 지역의 특화 산업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기반으로 ‘첨단친환경농산물물류유통단지’를 설립하여 남북 친환경 농산물 유통의 중소 규모 거점 단지를 구축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에서도 북한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인프라 건설 지원 등 개발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들 분야의 개발지원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북한의 경제특구 및 개발구의 운용이 미비하고, 글로벌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남한의 농수산업 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북한의 농수산물식품산업 분야의 발전 과정과 잘 연계·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사업의 다양화 및 혁신을 모색하여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수산물식품산업 관련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견을 통해 북한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야 함

다. 단계별 실행방안

● 1단계: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추진체계 구축(역량 강화)

+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차원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

-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남북교류 협력기금 조성 등 본 사업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예산지원 방식이 포함되어야 함
- 이는 서해 연안 접경 지역을 비롯하여 남한과 북한의 해양 관련 협력과 교류가 일회성 또는 단기성 사업에 그치는 것을 막고, 점진적 지속적으로 협력관리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제도적 기반 확보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의 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국내법에 이 지역의 보호 필요성에 근거한 제도정비과정에서도 실현되어야 함

+ 전담부서 설치 여부 및 규모, 전담인력 구성 등 실질적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이 필요함

- 실무교육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킴으로써 접경 지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전담 할 인력을 확충하고 체계적 교육 등을 통해 접경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함

+ 민·관·산·학·연 협력, 토론회를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사업 추진 방안 마련

● 2단계: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한 신뢰형성 촉진 단계(인도적 지원, 학술공동조사 등)

- 생태계보호, 평화정착,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서해, 동해 연안 접경 지역 남북협력 관리체제의 구축은 상호신뢰와 이해를 전제로 추진해야함³²⁾
- 사회·문화·역사적 접근, 양묘장 사업, 북한 영유아 및 취약 계층 지원, 방역, 의료품 지원 등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내 해당 지역과의 신뢰를 형성해 나감
- 서해 연안 접경 지역의 환경과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의 축적은 아주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남북학술공동조사를 통해 기초 자료를 축적해나가는 한편 해당 지역과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음
 - 또한, 학술공동조사를 통해 앞으로 서해 연안 육지부의 개발을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건강성

3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해연안 접경 지역 남북 협력관리 방안, 2003

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음

- 한편 인도적 지원 및 남북학술공동조사를 통한 신뢰형성은 지역의 개발과 보전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이해당사자 사이의 이해 상충을 조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환경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음

● 3단계: 남북협력사업 모색

- 강령국제녹색시범구와 연계하여 점차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감
 - 경제개발구 지원 및 관련 산업 남북교류 협력
 - 수산물가공 및 첨단 친환경농산물물류유통단지 설립
- 남북 해안지역의 생태환경 및 자원 조사(우뭇가사리)
- ‘한반도 해조류 평화 벨트 조성’을 위한 남북공동추진위원회 구성
- 남한의 전문 인력이 경제특구, 개발구 정책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통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 장기목표로는 북한의 특정 지역과 실질적인 교류 관계를 맺고, 지방간 개발지원을 통하여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임

〈표 IV-10〉 농수산물식품산업 남북교류 협력 3단계 로드맵

단계	남북교류 협력사업	세부추진 방안
1단계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추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보 ◦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구성 ◦ 북한 농수산물식품 관련 경제개발구 연계 방안 수립(강령국제녹색시범구+마합도) ◦ 평가시스템 구축
2단계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한 신뢰형성 촉진 (인도적 지원, 학술공동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 지원 및 교류를 통한 신뢰형성 ◦ 북한 산업계 및 학계와 ‘남북접경 지역 해양자원에 대한 학술공동조사’ 실시를 통한 기초자료 축적 ◦ 농수산업 협력을 위한 남북 인적교류 확대 ◦ 지식기반 강화
3단계	남북협력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지역 내(강령국제녹색시범구) 남한 접경 지역과 동일한 형태의 농수산물 가공 및 첨단 친환경농산물물류유통단지를 설립하여 농수산물 분야에서의 협력을 점차적으로 확대·발전시킴 ◦ 남북 해안지역의 생태환경 및 자원 조사(우뭇가사리) ◦ ‘한반도 해조류 평화 벨트 조성’을 위한 남북공동추진위원회 구성

라. 전망 및 기대 효과

● 해조류 산업의 경제적 효과³³⁾

- 해조류 관련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6조 원이며, 이중 우뭇가사리 한천(寒天, agar) 시장은 연 2,550억 원 규모로 연간 5.1% 이상 증가 추세
 - 특히 주생산국인 모로코에서 자원 보호를 위해 생산량 감축을 선언, 전 세계 우뭇가사리 가격이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우뭇가사리는 세포배양액 원료인 한천의 원료이자 치매 치료제와 같은 의약품, 화장품, 식품, 숯, 활성탄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선봉으로 'RED GOLD'로도 불리고 있음
-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북한 마합도 사이에 해조류 평화 벨트를 구축, 우뭇가사리를 공동 양식하여 세계 시장 수요에 대응³⁴⁾
 - 인천시 어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신 소득원 개발 및 소득 증대
- 글로벌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해양중심의 Blue Revolution에 대한 전망이 확대됨
 - 서해 5도의 해양자원 개발을 통한 해양산업 육성은 남북 경협을 넘어 장차 미래 식량자원과 바이오 자원 고갈에 대한 해결책 제시

● 한반도 육상해조류 육상양식 실현의 기반 마련

- 인천 섬 지역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해조 군집 구조가 크게 변화/ 특산종 발굴 가능성이 큼
- 섬이 많은 지역적 특성(168개)은 육상양식의 핵심기술인 신선한 해수의 공급이 용이하므로 육상양식 시설 조성에 매우 유리한 입지조건
 - 남북 최초 옹진-마합도 간 공동해역종합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 세계 최초 AI/IoT를 접목한 스마트 친환경 조류육상양식장 구축 및 육상 스마트팜 평화관광 산업 구축
- 전 세계적으로 해조류 육상양식시설 구축 전례가 거의 없음

● 해조류 산업의 남북교류 협력으로 서해지역 긴장 완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여

- 남북 간 학술교류 및 기술협력으로 경제성장 및 평화조성 가속화
- 남북평화 및 새로운 남북 공동 해양글로벌사업 모델 창출에 기여

33) 인천시, 인천시 사업 자료, 2019

34) 인천시, 인천시-젠트대학교 남북 평화 벨트 구축사업 토론회 개최 계획, 2019

- 남북이 공동으로 한반도 해양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질 개발을 통한 블루이코노미 산업의 활성화 실현
- 남북한 해양바이오산업 및 에너지·환경기술 발전
- 남북한 협력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 및 평화정착
- 서해 연안 접경 지역은 남한 인천광역시의 강화군(교동도, 우도)과 옹진군(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백령도), 북한 황해남도의 해주시, 연안, 배천, 옹진, 강령, 벽성, 청단, 권역의 경우 자연 지리적으로 연평어장 등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공동어로수역 또는 공동해조류양식 수역 등으로 평화수역의 중심지대가 될 수 있음

〈그림 IV-15〉 남북협력을 통한 해조류 산업 기대 효과



자료: 켄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한반도 공동 해양 글로벌 프로젝트, 2020.

3.3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가. 남북협력 실행가능 산업 근거

1) 북한의 제조업 정책

● 기술력 기반 제조업 성장

- 북한은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필요한 제반 기계설비를 자체제작 조달한다는 공업 전략을 표방하면서 생산설비의 핵심인 공작기계는 물론 농업용 기계, 광산 및 채취용 기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계류를 발전시켜오고 있음³⁵⁾
- 김정은 집권 이후 제조업의 역량이 강화되어 기업과 여러 단위 부문 간의 연계 활동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음

35)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대동강의 기적 실현을 위한 기업의 북한 투자 전략, 2019.10.14

- 농업, 건설, 섬유, 식품 산업용 기계 분야의 수요 증가와 성장세에 따라 기계 및 관련 산업 분야의 생산능력과 기술 역량 향상 가능성이 높음

● 국산화 정책에 따른 수요 증가 및 설비 현대화

- 2013년부터 추진된 국산화 정책에서 기계공업은 설비의 국산화 혹은 국산 설비에 의한 설비 현대화 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이와 함께 과학기술 중시정책과 연계하여 육성 인재 양성 등에 집중하고 있음
 - 과학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설비 가동률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기계공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서 추진되고 있음
- 기계공업은 발전소 건설이나 주요 설비의 건설 및 현대화 등에 설비와 기계류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있음
- 특히 발전기 등 발전소 건설을 위한 설비 공급뿐만 아니라 국산 설비에 의한 설비의 현대화 및 자동화·무인화 추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기계산업의 육성³⁶⁾

- 기계산업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에 따라 북한의 핵심적인 산업으로 육성되어 왔음
- 북한은 한때 기계설비의 자급률이 98% 달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기계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였으며, 군수공업과 관련된 부문은 양적·질적으로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 하지만 산업설비 전반의 노후화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공장과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대형 설비를 공급하는 종합기계공장과 기계공업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공작기계공장이 북한 기계공업의 핵심을 형성
 - 김정일 시대부터 추진되던 CNC 공작기계의 개발 및 보급 정책이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어 기계공장에 CNC 공작기계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기존 설비를 자동화하는 CNC화도 폭넓게 추진되고 있음
 - 이 밖에도 채취용 기계와 농업용 기계도 비교적 발전되어 있음

● 전기·전자(ICT 제조업 포함)

- 중공업 우선의 공업화 전략을 추진해 온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소, 대규모 공장 등의 건설에 필요한 중전기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오³⁷⁾

36) 산업연구원,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 2018

37) 산업연구원,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 2018

- 북한은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수·화력 발전기, 엔진 발전기, 직류기, 전동기, 변압기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발전이 있던 것으로 평가됨
- 그 결과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등은 북한의 대표적인 공장으로 발전
- 한편 전자공업은 군수공업과 관련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낙후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음
- ICT 제조업은 소득 수준 향상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IC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 부품 및 반제품의 최종 조립을 중심으로 생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자체 개발이 가능한 수준임

2) 북한의 제조업 관련 경제개발구

● 검토 지역: ① 위원공업개발구

- + 위치 및 면적: 자강도 위원군, 2.3km²
- + 주요 업종: 광물자원가공, 목재가공, 기계설비제작, 농토산물가공, 잠업 및 담수양어과학연구 등
- + 지리적 이점
 - 중국 길림성과 통해있는 위원국경통과지점과 20km, 만포국경통과지점과 80km, 중강국경통과지점과는 180km 거리에 있어 입출국통로와 수출입물자수송에 유리함
 - 위원군은 군 면적의 87%가 산림지역으로 광물자원과 홍송, 낙엽송 등 산림자원이 풍부함
- + 개발 계획
 - 풍부한 지하자원, 목재자원, 수력자원에 의한 현대적인 광물자원가공, 목재가공, 기계설비제작업, 농토산물가공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잠업 및 담수양어과학연구기지를 결합한 공업개발구를 건설할 계획임

● 검토 지역: ② 진도수출가공구

- + 위치 및 면적: 남포시 와우도구역, 개발면적 1.37km²
- + 주요 업종: 원료, 자재, 부속품을 수입하여 현대적인 기계, 전기, 전자, 경공업 및 화학제품들을 생산수출하는 보세가공무역
- + 지리적 이점
 - 서해와 대동강이 합쳐지는 서해갑문수역, 남포시의 남서부 대동강하류 지역에 위치한 와우도구역 일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통하는 대외무역항구인 남포항을 끼고 있음

- 특히 기계, 전자, 경공업부문의 오랜 공업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평양시와 남포시의 유리한 지역 이점과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수입원자재를 가공하여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여 대외수출을 진행함

+ 개발 계획

- 진도수출가공구에 있는 기업들은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원칙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가공수출공업을 장려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기술이전도 실시하여 국내공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임
-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공수출무역과 보세무역을 배합한 지대로 건설할 예정임

● 검토 지역: ③ 송림수출가공구

+ 위치 및 면적: 황해북도 송림시 일부 지역, 개발면적은 2km²임

+ 주요 업종: 수출가공업, 창고보관업, 화물운송업

+ 지리적 이점

- 서부는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남포시 대안 구역과 마주해 있으며, 북부는 평양시 강남군과 잇닿아 있는 대동강하류 연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가공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개발구 지역으로부터 7.5km 떨어진 대동강 기슭에는 송림항이 있음
- 인접한 송림시, 사리원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을 이용한 수출임가공 가능

+ 개발 계획

- 수출가공업, 창고보관업, 화물운송업을 기본으로 하는 집약형수출가공구로 만들 계획임
- 송림항, 남포항을 통하여 들어오는 수입원자재를 이용한 수출가공조립과 대규모의 종합적흑색야금기지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 나오는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 등 여러 가지 철강재 생산제품과 국내외의 기타 원료, 자대들에 대한 2차, 3차 가공과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현대적인 수출가공기업들과 그 정상가동을 위한 창고보관 및 화물운수봉사에 종사하는 보조기업들로 구성된 집약적인 수출가공구 개발 예정임

● 검토 지역: ④ 와우도 수출가공구

+ 위치 및 면적: 남포시 와우도구역(령남리 일부 지역), 개발면적은 1.5km²임

+ 주요 업종: 선진적인 개발 및 운영방식이 도입된 수출지향형 가공조립업

+ 지리적 이점

- 서해와 대동강이 합쳐지는 서해갯문수역에 위치하여 남포항과 철도, 도로를 비롯한 교통조건이 발달되어 있어 투자유치환경이 매우 좋음

+ 개발 계획

- 남포시에서는 와우도수출가공구를 선진적인 개발 및 운영방식이 도입된 수출지향형가공조립업을 기본으로 하는 집약적인 수출가공구 계획
- 자연경관을 활용한 서해갯문수역에 금융, 관광, 부동산, 식료가공업을 결합한 종합적인 경제개발구를 건설할 계획이 있음

나. 실행전략

● 첫째, 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진

- 북한 내 산업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과 밀접히 관련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새로운 디지털 기술 효과의 적용, 기술전쟁이 격화된 글로벌 체제 변동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개념설계 활동과 생산 활동이 지리적·조직적으로 분리되기보다는 통합·융합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남북교류 협력 시 제조업의 서비스화 모색을 통한 혁신산업 발굴에 집중해야 함

● 둘째, 제조업 산업정책은 생산시스템 또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 인력훈련 기관, 연구기관, 지원 공공기관 등의 유기적 관계 구축에 정책자원을 집중해야 함
- 우선 설비반출형 위탁가공 교역 등의 소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협력부터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혁신산업 발굴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디지털화와 글로벌화는 거리의 격차를 없애서 도시의 해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강화와 밀집성을 증대시킴에 따라 전통적 제조업 도시들은 라이프 사이클에 의한 쇠퇴를 겪지만, 혁신산업은 세계도시에 집중하고 있음
- 혁신·지식기반 경제에서 생산과 생산 전후 활동은 긴밀히 상호작용하고 있고, 네트워크에 의한 혁신이 중요해지면서 도시 혁신공간이 부흥하고 있음

- 이처럼 산업 혁신에서 공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혁신산업 발육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다. 단계별 실행방안

- 1단계: 접경 지역 제조기업의 남북교류 협력 추진체계 구축(역량 강화)
 - 협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보
 -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혁신제품 개발
 - 북한 제조업 관련 경제개발구와의 연계 방안 수립(진도, 송림, 와우도 수출가공구, 위원공업개발구, 강남경제개발구 등)
 - 평가시스템 구축
- 2단계: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한 설비 현대화 지원
 - 기계류 유희설비의 북한 지원
 - 북한 설비의 생산능력 확충(기계류 및 부품 공급)을 통한 위탁가공의 시범적 협력
 - 기술인력 교류
- 3단계: 남북협력 모색
 - 남북산업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남북제조업 위원회 구성

〈표 IV-11〉 제조업 남북교류 협력 3단계 로드맵

단계	남북교류 협력사업	세부추진 방안
1단계	접경 지역 제조기업의 남북교류 협력 추진체계 구축(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보 ◦ 문제점 보완 및 개선 ◦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혁신제품 개발 ◦ 북한 제조업 관련 경제개발구 연계 방안 수립(진도수출가공구, 송림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 위원공업개발구, 강남경제개발구 등) ◦ 평가시스템 구축
2단계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한 설비 현대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류 유희설비의 북한 지원 ◦ 북한 설비의 생산능력 확충(기계류 및 부품 공급)을 통한 위탁가공 시범적 협력 ◦ 기술인력 교류
3단계	남북협력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산업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남북제조업 위원회 구성

라. 전망 및 기대 효과

- 각종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의 활성화는 북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높음
 - 일반 국민의 생활향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제품의 충분한 생산 및 품질향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생산기반을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하고 있음
 - 금속 및 화학공업의 강조도 제조업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자재의 공급 및 국산화를 목적으로 함
 - 제조업 전반의 생산력을 동시다발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조업 분야의 남북교류 협력도 이와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남북교류 협력의 효과 극대화
 - 인력교육, 공동연구 진행, 기술컨설팅, 인력의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 지원을 통해서 북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남북 연계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함
- 남북제조업 협력기구 설립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
 - 남과 북의 제조업 분야의 현황을 잘 이해하고, 서로 간에 만남의 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남북제조업 협력 중심의 기구 설립이 필요함
 - 이 협력기구는 산업연계 측면에서는 최대한 북한의 산업을 이해하고, 남한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수립 및 사업을 수행함
 - 이와 더불어 남북연계의 가능성 및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기술정보 제공, 인력교류를 위한 세미나, 공동연구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해야 함

3.4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가. 남북협력 실행가능 산업 근거

1) 북한의 섬유 패션 산업 정책

- 섬유 패션 산업 정책
 - 섬유패션 산업은 식품가공 공업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경공업으로, 생필품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과거 북한의 섬유산업은 주민들에게 의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성되었지만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 확대와 함께 광업 다음의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 주민 소비품 공급 증대 정책과 더불어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등 주요 섬유공업 공장의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음
 - 기타 산업 대비 생산기반 및 기술 수준이 양호하여 기존 생산설비의 개보수 및 현대화 추진, 기술향상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높음
- 의류공장은 전국에 가장 많은 기업이 분포되어 있는데, 2017년 말 기준 섬유·의류 기업은 총 424개가 확인되었음³⁸⁾
 - 섬유산업 중에서 방직 부문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대부분의 방직 공장은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등 서해안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 의류공장은 수요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폭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평양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몰려 있음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섬유공장은 평안남도(19.8%), 평안북도(15.8%), 황해북도(13.2%), 평양시(13.7%)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소비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의류공장은 평양(25.0%), 평안남도(18.7%), 황해북도(10.8%), 함경남도(10.2%) 등
 - 화학섬유와 방직 등 소재 부문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앙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피복 공장 등 최종재 부문은 중소 규모의 지방산업 공장이 담당
 - 대규모 섬유공업은 내각의 경공업성과 화학공업성에서, 소규모 피복 공장 등은 지방행정기관의 방직 및 피복관리국에서 관장
 - 경공업성의 방직공업관리국은 방직 부문을, 은하무역총회사는 수출피복 부문을, 조선비단연합총회사는 견사 및 견직 부문을, 화학공업성은 화학섬유 부문을 관장
- 북한은 교육수준이 여타 개도국에 비해 높아 기술 습득능력이 빠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장기간 임가공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은 현재까지 장기간 임가공 생산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양질의 의류를 생산하고 있음
 - 2001~2009년에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 등의 신규 공정 설치, 봉화수출피복공장 등의 조업 등 꾸준한 투자가 진행되었음³⁹⁾
 - 2010년에서 2013년간이 가장 활발한 동향이 파악되었는데 각 섬유공장들에 유연창대직기의 설치가 본격화되었으며 섬유·의류 공장들의 설비에 대한 CNC화가 진행됨

38) 산업연구원,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 2018

39) 산업연구원,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본 산업정책 및 주요 산업·기업 변화 실태, 2015

-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데트론인견천직장 신설, 신의주방직공장에서 편직사직장 준공, 평양양말 공장의 남자양말직장 신규 건설 등 설비투자가 활발하였음
- 반면, 2014년 이후에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영변견직공장, 평양신발공장에서의 설비개건과 원료 국산화 동향 등이 확인되는 수준으로 기업 투자 및 생산 동향이 이전에 비해 감소함
- 특히 북한의 의류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하고 있음
 - 의류는 가공식품과 함께 북한 내수시장의 확대를 이끄는 핵심 상품임
 - 특히 최근에는 대도시의 중간계층 여성을 중심으로 중고급 의류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산 저가 의류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수입 원단을 사용하여 남한의 디자인을 모방한 북한산 의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섬유패션 산업 주요 입지조건⁴⁰⁾

- 섬유 패션 산업 중 상류(upstream)분야는 입지 인자 중 용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하류(downstream)분야는 노동력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노동력에 있어서는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훨씬 큼
- 섬유산업은 동종 내 산업연관 효과가 커 집적의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패션산업은 소지역시장에 인접해서 입지하는 경향이 강함
 - 이에 따라 섬유산업 중에서 화학섬유는 용수가 중요한 입지요인이 되며 합섬원료가 주로 석유화학 계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석유화학 공장에 인접하거나 임해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함
- 하지만 기반시설에 관한 북한의 물적, 인적, 제도적 수용능력은 여전히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반출형 위탁가공 교역 등의 소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협력부터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북한의 섬유 패션 산업 관련 경제개발구

● 검토 지역: ① 강남경제개발구(방직공업)

- + 위치 및 면적: 평양시 강남군(고읍리 지역), 개발면적 3km²
- + 주요 업종: 다수확우량품종육종과 사료생산, 첨단제품가공 및 임가공
- + 지리적 이점
 -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 배후도시로서 섬유 패션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40) 북한연구학회·산업연구원·LH, 북한 산업입지 전략과 경제특구 협력방안, 2019.9.6

+ 개발 계획

- 강남경제개발구 내 공업지구에는 첨단제품개발 및 생산기지, 임가공기지를 만들어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경쟁력이 높은 상품,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수출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인민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함

● 검토 지역: ② 흥남공업개발구(화학섬유)

+ 위치 및 면적: 함경남도 함흥시(덕풍동 일부 지역), 개발면적 2.2km²임

+ 주요 업종: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품생산, 기계설비제작 등

+ 지리적 이점

- 북한 최대 규모의 화학공장인 2.8비날로연합기업소 위치

+ 개발 계획

- 이 지역은 흥남항과 가깝고 북한의 오랜 화학공업 및 대규모 기계제작공업지역으로서의 특성을 이용하여 보세가공, 화학제품생산, 촉매생산, 기계설비제작, 건재 및 약품생산을 위주로 하는 공업개발구로 계획되어 있음
- 시범단계에서 개발구건설이 잘 되면 투자가의 수요에 맞게 함주쪽 방향으로 더 확장해 나갈 계획임

● 검토 지역: ③ 혜산경제개발구

+ 위치 및 면적: 양강도 혜산시, 개발면적은 1km²임

+ 주요 업종: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등

+ 지리적 이점

-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길림성 장백현과 마주하고 있으며, 양강도 혜산시 신장리 일부 지역

+ 개발 계획

- 개발구의 구릉지대에 피복, 방직, 호프가공 등 현대적인 경공업생산기지를 조성할 예정임

나. 실행전략

● 첫째, 섬유 원자재 공급능력 확충을 통한 위탁임가공 형태의 생산 추진

- 북한의 섬유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기반 및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임가공 등

대외교역을 통하여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음⁴¹⁾

- 하지만 원자재 부족, 생산설비 노후화, 에너지 및 전력난 등이 산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음
- 특히 방직 및 방직산업은 면화 및 양모 등 천연섬유원료가 생산되지 않아 원자재 부족이 심각하고, 기존 생산 공장도 설비 노후화, 전력난 등을 겪고 있음
- 이처럼 북한은 석탄화학산업이 섬유 원자재 공급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북한의 섬유산업은 수입원자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선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 원자재 부문의 협력을 통한 원부자재 공급능력이 확충되면, 생산인력이 풍부하고 생산 인프라가 일정 부분 갖추어진 평양에 중저가 의류 등 노동집약적 분야를 중심으로 위탁임가공 형태의 생산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대북 직접투자보다는 남한의 원부자재를 반출하여 북한 봉제 공장을 활용한 위탁임가공 생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남한 기업들의 구조고도화 및 북한 내 위탁임가공 생산 확대

- 남한은 워터제트직기, 염색기, 방직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범용 유희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남한의 유희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여 북한 섬유소재산업의 재건을 유도하는 동시에 남한 기업들의 구조고도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2000년대 들어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이 중저가품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잠식하면서 남한 기업들의 공급과잉이 야기되고 있는데, 남한은 유희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할 경우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자원을 혁신역량에 집중투자할 수 있어 구조고도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
- 이를 통해 북한은 남한의 유희설비를 활용해 기업들의 생산능력 확충은 물론 섬유소재산업의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음
- 남한이 자본 및 기술 집약적 공정에 특화하고, 북한이 노동집약적 공정에 특화하는 초기 단계의 분업구조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북한이 제조공정을 담당하고, 남한은 제품 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 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공정간 분업구조를 형성해야 함
- 북한에서 의류, 범용 원사 및 직물을 생산하여 남한으로 반입한 후 염색가공 등을 거쳐 제3국으로 수출 및 남한 내에 판매하는 공정간 분업 관계도 구축
- 북한 내 인프라 시설의 안정화 및 교류 협력 확대 시기에는 위탁임가공 생산을 확대하고 소규모 직접투자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임
- 남북교류 협력의 확대 정도에 따라 위탁임가공 및 직접투자는 물론 직물, 염색가공 및 화학섬

41) 산업연구원,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과 실행방안, 2016

유 등 자본집약적 분야의 대규모 직접투자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셋째, 권역별 섬유 패션 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 협력의 시너지 효과 창출
 - 노동력이 풍부한 평양에 의류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수도권(평양 인근 지역)의 직·편물 및 염색가공단지는 평양 의류단지와의 스트림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⁴²⁾
 - － 북한의 평양 및 수도권과 남한의 경기 북부지역을 연계하여 개성·해주권은 의류, 식물, 염색가공단지를 구축하고 임가공 생산 집적지로 발전시킴
 - － 북한의 함흥·원산권은 화학섬유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남한의 울산과 구미 석유화학단지와 연계를 통해 동해안 벨트 구축

다. 단계별 실행과제

- 1단계: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추진체계 구축
 - － 협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보
 - －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구성(스타트 기업 육성, 환경규제 대응 방안 모색 등)
 - － 남북 공동 패션이벤트 개최를 통한 접촉 확대 및 신뢰형성
 - － ‘섬유패션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남북공동추진위원회 구성
 - － 평가시스템 구축
- 2단계: 북한 내 협력기반 조성 지원
 - － 북한의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의 발전을 위한 지원
 - － 남한의 기획력과 기술지원,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
 - － 의류생산 설비의 개보수 및 현대화 지원
- 3단계: 남북협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시범단지 설립
 - － 고부가가치/하이테크 신소재 개발
 - － 반응생산 시스템 구축

42) 산업연구원,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과 실행방안, 2016

- 신유통 시스템 구축

〈표 IV-12〉 섬유 패션 산업 남북교류 협력 3단계 로드맵

단계	남북교류 협력사업	세부추진 방안
1단계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추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보 ◦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구성(스타트업 기업 육성, 환경규제 대응 방안 모색 등) ◦ 북한 섬유 패션 산업 관련 경제개발구 연계 방안 수립 ◦ 남북 공동 패션이벤트 개최를 통한 접촉 확대 및 신뢰형성 ◦ ‘섬유패션 산업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남북공동추진위원회 구성 ◦ 평가시스템 구축
2단계	북한 내 협력기반 조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의 발전을 위한 지원 ◦ 북한의 기획력과 기술 지원,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 ◦ 의류생산 설비의 개보수 및 현대화 지원
3단계	남북협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시범단지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하이테크 신소재 개발 ◦ 반응생산 시스템 구축 ◦ 신유통 시스템 구축

라. 전망 및 기대 효과

● 북한 섬유 패션 산업 전망

- 북한의 섬유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기술 및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임가공 등 대외교역을 통하여 주력 수출산업으로 성장이 가능함
- 북한의 경우,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의 각각의 발전단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특히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하에서 ‘신소재나 신유통’ 개발과 같은 기술혁신 분야는 남북한 동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남북한 협력을 통해 기존 의류생산 설비의 개보수, 현대화 추진 및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이 북한에서 섬유 패션 산업은 여타 경공업에 비해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분야인 동시에 경공업 부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섬유 패션 산업의 발전이 향후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기획력과 기술, 교육이 북한의 생산기지에서 시장으로의 발전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신, 한국은 1억 인구 규모의 시장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음

● 세계적인 ‘made in Korea’ 패션브랜드의 탄생

- 남한의 섬유패션 벤더 업체는 세계 시장에서 최상위 그룹에 속해있으며, 한류열풍으로 인해 패션, 뷰티 트렌드는 이미 세계 선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한국 소비자의 섬유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수준은 해외 유명브랜드의 테스트 마켓으로서 매력적인 시장임
 -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 마케터, 이벤트 전문가 등은 해외시장 진출 활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패션브랜드가 탄생하지 못하는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국내 내수시장이 5천만 규모라는 한계라는 점임
 - 남북교류를 통해 인구 1억 규모의 내수시장 확보와 러시아, 중국, 유럽으로의 진출로 확보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를 탄생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남한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회복을 통한 수출증대 가능
- 남한의 자본, 섬유소재·부자재 및 기획·디자인력과 북한의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천연원료(누에고치, 대마 등)를 결합해 북한에 생산 공장을 건설할 경우 북한의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남한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회복을 통한 지속적인 수출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과거 홍콩기업들이 중국 심천에서 대규모 의류생산을 함으로써 홍콩 섬유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 심천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은 좋은 벤치마킹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남한 섬유산업은 세계 무역·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제조비용 절감을 통한 글로벌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투자 확대 등을 통한 글로벌 최적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반면, 북한은 낮은 인건비, 풍부한 노동력 등 생산여건이 여타 아시아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고 북한과 남한은 같은 언어 사용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물류비용이 적게 들며, 납기 단축이 가능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남한 내수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의 대북한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북한 제품의 남한 내수 시장으로의 반입은 물론 남한은 북한이 추진해야 할 수출 지향적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대외무역 창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임
 - 남한 섬유산업은 1960년대부터 수출산업으로 육성되면서 수출마케팅 역량이 높은 업체들이 많음
 - 특히, 한세실업, 세아상역, 한솔섬유, 영원무역과 같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생산은 물론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해 높은 성장을 한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함
 - 이를 토대로 섬유 패션 산업 분야의 남북교류 협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음

3.5 미래관광 산업

가. 남북협력 실행가능 산업 근거

1) 북한의 관광 산업 정책

● 관광 산업의 확대

-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소위 ‘마식령속도’를 강조하며 관광 산업부문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옴
- 최근 북한은 국내유휴자금 회수 및 외자유치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내외 관광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함
 - 대북제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평양관광대학 등 각 도별 사범대학에 관광 관련학과(관광학부, 안내학과 등) 신설, ‘등산 관광, 조선말배우기 관광, 노동생활체험 관광’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⁴³⁾
 - 관광개발구 발전의 중요성, 관광시장의 구조·기능 분류 중 ‘시장의 외부환경에서 상품, 화폐를 받아들여 그 교환을 실현하는 경제기술적 구조’ 중요성 연구, 관광광고의 필요성 연구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한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남
-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설정하고 관광분야의 경제개발구 활성화를 강조함
 - 내각총리 박봉주는 최고인민회의의 13기 4차회의에서 “나라의 투자환경과 조건을 개선하여 합영, 합작과 경제개발구사업을 활성화하며 세계관광발전추세에 맞게 관광대상과 지역을 늘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관광을 활발히 조직”할 것을 강조⁴⁴⁾
- 한편, 2016년 9월 27일 ‘2016 세계관광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관광설명회와 사진소개 시행, ‘조선관광’ 시청 등을 진행하였음. 해당 행사에서 매년 국내외 관광객 수 증가 등 관광 산업 분야의 성과를 발표⁴⁵⁾
- 주요 개발지역으로는 마식령 스키장, 원산갈마지구 등에 집중하고 있음
 - 실제로 관광과 관련된 특구·개발구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포함해 무봉, 청수, 온성섬, 신평 관광개발구 등 5개로 전체에서 21.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관광부문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⁴⁶⁾

43)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관광 산업, 전력산업, 환경보호 산업발전방식, 지적재산 분야, 2019

44) 『로동신문』, 2016년 6월 30일.

45) 『로동신문』, 2016년 9월 27일.

46) 통일연구원,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 방향, 2019

-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해양관광을 포함한 관광 분야가 가장 유망하고, 현실적으로도 큰 자본 투자 없이 단시간 내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분석됨

● 북한의 관광 산업에서의 '생태관광' 추진⁴⁷⁾

- 생태관광은 발전역사가 비교적 짧지만,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추세임
 - '생태관광'이란 환경보호와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관광봉사 형태임
 - 국제적으로 과거의 단순한 '참관'방식에서 이제는 환경보호 의식을 높여주는 '교육'적 관광으로 변화하는 추세임
 - 자본주의 국가의 관광은 이기적 목적만 추구하여 환경오염이 심해졌다면, 북한의 생태관광은 자연환경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보호 위주의 관광임

●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⁴⁸⁾

- 캐나다, 북미 최초 북한 전문여행사(프로투어)의 재외동포 대상 관광 상품 출시
 - 조선국제여행사와의 협약, 캐나다 현지에서 북한 단체관광 상품 판매(18년 8월 1일 설립)
 - 2018년 10월 11일~19일, 평양-금강산-마식령스키장-판문점 관광 진행(캐나다 한인 12명 참가)
 - 명산관광, 상품전람회, 교회/사찰 방문, 겨울 관광 상품 등 계획

● 북한, 금강산 관광 상품 홍보

- 2019년 7월~11월 상품 판매 홍보
- 3박 4일 일정
- 등산, 낚시, 온천, 치료 상품
- 만물상, 구룡연, 삼일포, 해금강 등

● 중국, 접경 지역 중심 관광 교류 활발

- 중국 지린성 지안 도로통상구에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지안-만포 간 대교 개통함
- 훈춘에서 보트로 두만강을 건너 두만강 전통마을, 승천대, 서번포 호수 등을 관광하는 상품

47)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관광 산업, 전력산업, 환경보호 산업발전방식, 지적재산 분야, 2019

48)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대동강의 기적 실현을 위한 기업의 북한 투자 전략, 2019.10.14

을 홍보하고 있음

- 또한,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는 '2020 평양 마라톤' 패키지 상품을 소개함
- 심양 철도국제여행사 그룹은 북한 관광을 위한 8개 노선을 신설함
- 중국 보아히페리그룹과 남포시와 연태-남포, 다렌-남포 간 해상항로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함
- 다렌, 마카오~평양 고려항공 직항 개설하는 한편 평양~선양 노선을 증편(4회)함

2) 북한의 관광 산업 관련 경제개발구

● 검토 지역: ①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 +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일부 지역, 440km²
- + 주요 업종: 생태환경이 보장되는 국제적 휴양 및 치료관광, 역사유적 관광 등
- + 지리적 이점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는 북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러시아의 하바롭스크와 울라지보 스톡, 중국의 베이징, 상해, 심양 등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되는 40여 개의 도시들로부터 비행기로 3시간 이내 인접
- + 개발 계획
 - 이 지대는 원산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 올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통천지구, 금강산지구 로 나누어 개발함
 - 원산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휴양문화시설들과 생태환경조건이 조화롭게 결합된 국제관광지 구로 개발
 - 금강산지구, 통천지구, 석왕사지구를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역사유적 관광지구로, 휴양 및 치료관광지구로 개발하며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계획
- + 지구별 개발 계획
 - 원산시 도시 중심부 개발 계획은 도시중심축건설, 살림집지구건설, 산업지구건설, 녹지조성 및 관광시설건설, 숙박시설현대화 등에 목적을 둠
 - 마식령스키장 지구에는 2,200여ha에 달하는 면적에 10여 개의 슬로프와 야외스케이트장을 갖춘 종합적인 스키장지구와 주변 풍경에 잘 어울리게 지어진 마식령호텔이 있음
 - 올림폭포지구에는 1,000여ha에 달하는 면적에 높이가 75m인 올림폭포가 있음
 - 석왕사 지구에는 고려(918년-1392년) 말기부터 조선 시기에 건설된 유명한 절간들인 조계 문, 응진전을 비롯한 50여 채의 크고 작은 역사유적들이 있으며 등산길, 여러 개의 약수터와

치료 및 관광시설들과 숙박시설들이 구성되어 있음

- 석왕사지구 총 개발영역은 1,500ha이며, 석왕사로부터 보문암 앞까지의 등산길을 새로 건설하고 현재 있는 숙박시설 1,000여동과 주변 관광시설들을 개보수 및 현대화 함
- 통천지구개발은 강원도 통천군의 해안가 지역들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개발영역은 9,000여ha임
- 통천지구에는 충석정, 자연호수인 동정호, 시중호가 있으며, 바닷가에는 시중호해수욕장이 있음
- 시중호구역에는 건강 및 치료시설들을 형성하여 호텔과 건강시설, 운동시설을 갖춘 관광지로 건설하고 동정호구역에는 숙박 시설과 관광 및 봉사시설을 건설하며 충석정구역에는 해수욕장, 뱃놀이장, 여객부두를 비롯한 관광보장시설을 건설함
- 한편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을 위한 총 계획과 원산시 건물배치계획을 완성하고 70개 대상에 대한 투자 대상 안내서를 제안하였으며, 여러 나라 투자가들과 10여 개 우선권 대상에 대한 투자유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검토 지역: ② 금강산국제관광특구

+ 위치 및 면적: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 225km²

+ 주요 업종: 금강산관광

+ 지리적 이점

- 금강산은 산악미, 계곡미, 호수경치, 바다와 해안경치, 다양한 생물상이 분포되어 있는 명승지

+ 개발 계획

- 온천과 감탕자원을 이용한 휴식치료관광지, 문화재들을 이용한 역사·문화 관광지, 스키 관광지, 해안경관 자원에 기초한 해양관광지개발과 관광서비스를 위한 농업, 어업, 녹색산업이 포함되어 있음
- 1단계 개발 계획은 온정리 지역과 고성항 지역에 실내외 해양체육시설, 체육촌, 건강 증진 서비스시설과 물놀이장 등을 건설함
- 2단계 개발 계획은 삼일포-해금강 지역, 내금강 지역 등이며, 삼일포-해금강 지역에는 호텔, 호화별장촌을 건설하고 공원과 해수욕장, 골프장, 급양봉사시설 등과 상업 거리를 건설함
- 내금강 지역에는 현재의 숙박시설들을 재건하고 문화유적과 관광코스 개발, 상업 및 문화시설들을 새롭게 건설함

● 검토 지역: ③ 온성섬관광개발구

- + 위치 및 면적: 함경북도 온성군, 1.69km²
- + 주요 업종: 골프장, 수영장, 경마장, 관광서비스
- + 지리적 이점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천자와 인접해 있으며, 두만강상에 있는 섬으로서 북한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국경통과지점이 개설되면 개발과 관광휴양에 필요한 인원 및 물자의 출입이 유리함
- + 개발 계획
 - 숙박시설과 휴식 장소, 골프장을 비롯한 오락시설들을 갖춘 관광휴양지구로 건설됨
 - 중국과의 연결 다리를 건설하고 세관, 통행검사, 검역 등 신속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들을 배치할 예정임
 - 약 9천만 달러의 투자액 유치를 목표로 온성섬관광개발구를 숙박소, 골프장, 오락시설 등을 구비한 관광지역으로 육성시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함

● 검토 지역: ④ 무봉국제관광특구

- + 위치 및 면적: 양강도 삼지연군, 20km²
- + 주요 업종: 백두산지구 관광, 관광상품생산
- + 지리적 이점
 - 삼지연군에는 백두산과 정일봉을 비롯하여 삼지연, 리명수, 무포 등 명승지들과 백두산 밀영, 청봉, 5호물동 등 혁명전적지들이 많음
- + 개발 계획
 - 백두산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 등을 건설하고 석을천(무봉호) 지역에 물놀이장, 승마탑승구역, 민속촌, 체육 및 오락시설, 실내사격장, 민속음식거리 등을 건설할 계획

● 검토 지역: ⑤ 청수관광개발구

- + 위치 및 면적: 평안북도 삭주군, 20km²
- + 주요 업종: 압록강 유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을 이용한 관광서비스업
- + 지리적 이점
 -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료녕성 단둥시의 일부 지역과 마주하고 있음
- + 개발 계획
 - 조선민속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관광서비스시설들이 구비된 관광개발구를 계획하

- 고 있으며,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 과수원화 된 관광지역으로 개발 예정임
- 관광객들을 위한 특산물 가공, 축산, 과수, 양어기지 등을 건설하며, 문화오락구역, 조선민속촌, 종합봉사구역, 민속여관, 샘물공장, 과일 및 산나물가공공장, 김치가공공장 등을 계획하고 있음

● 검토 지역: ⑥ 신평관광개발구

- + 위치 및 면적: 황해남도 신평군, 8.1km²
- + 주요 업종: 명승지 관광, 휴양, 체육, 오락 등 다양한 관광서비스 제공
- + 지리적 이점
 - 평양-원산관광도로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함
- + 개발 계획
 - 신평금강으로 불리우는 절승경계의 명승지 유람, 각종 체육, 문화, 오락, 숙박 시설의 종합적 기능을 갖춘 현대적인 산관광광지구로 개발할 예정임
 - 약 1억 4천만 달러의 투자액 유치를 목표로 하면서 휴양, 체육, 문화, 오락, 숙박, 서비스 등 종합적 기능을 구비한 관광지구를 조성하여 평양과 원산에 오는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함

나. 실행전략

● 첫째, '생태관광'을 연계한 관광 사업 개발

- 북한은 지리적·자연적으로 생태관광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에 유리한바, '생태관광'과 연계한 관광 산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명산, 명승지가 많으며 자연보호구, 식물보호구 등이 있어 생태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임
 - 생태관광은 기존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시설 집중식·도시형 개발 방식 관광업이 아닌 소규모 투자와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일반 관광 상품 보다 적은 투자로 높은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함
 - 동해관광벨트 조성과 동시에 서해관광벨트 조성

● 둘째, 거버넌스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지속성과 안정화 전략 구축

- 민간을 포함한 다각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함

-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자치단체, NGO와 민간기업까지 확장시키며 국제관광 기구, 제3국 및 국제기업, 환경전문가들까지도 남북관광 사업 거버넌스에 참여시킴
- 국제적으로 확장된 거버넌스 참여는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신인도를 제고시킬 수 있음
-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한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 남북 간 합의를 국민의 지지와 동의 속에서 법제화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남북 관광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함
 - 남북 간 기본합의 법제화 추진과 함께 ‘공동관리기구’ 설립 등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시킴
- 셋째, 관광 산업 분야의 남북교류 협력에서 생태·레저·휴양·역사문화 등을 결합한 융복합 복합관광 추진
 - 접경 지역에 있는 보호구역이 생태계와 생물종다양성을 보존하고, 국가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며 상호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남북교류 협력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
 - 남북한 연계·협력 관광을 위해서는 기존 북한에서 운영하는 관광프로그램과 현재 및 향후 접경 지역 지자체가 추진하는 생태·해양관광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임
 -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판문점, 설악산 등을 방문하는 관광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남측 지역을 방문하고 귀환하는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하고, 반대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과 함께 개성, 금강산 등 북측지역을 방문하고 귀환하는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다. 단계별 실행방안

- 1단계: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기존사업 검토
 - 북한과의 협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 구성
 - 환경·해양 전문가를 포함하는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지역 연계형)
 - 북한과의 관광 재개를 위한 비공식적 대화 추진(중단된 개성관광, 금강산관광 재개, 북한 역점

- 지역(원산~마식령) 관광 사업 및 남북관광 연계(철원~금강산) 등의 중장기 계획 등 협의)
- 금강산 육로관광 연결 루트 다양화 및 순환코스 개발(국도 31호선 복원/양구군~금강군, 내·외 금강 도로 연결 등)

● 2단계: 생태·해양 관광 산업의 남북관광자원 공동조사를 위한 ‘남북관광 공동관리 위원회’ 구성

- 남북관광 공동관리 위원회 구성
- 남북 간 추진협력체계 구축(남북관광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추진체계 정비)
- 관련 기업의 시설점검 방문 허용
- 남북협력 생태관광 거점 개발
- 남북관광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 공동관리 시범지역 지정

● 3단계: 동해안 남북관광벨트 조성(남북 정상합의 기반)

- 북한과 금강산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 및 동해안 남북관광벨트 조성 방안 등 중장기 협력방안 협의
- 크루즈 연계를 통한 백두산 관광
- 관광 콘텐츠 공동개발
- 강원도(남북) 국제생태평화공원 조성

〈표 IV-13〉 생태·해양 관광 산업의 남북교류 협력 3단계 로드맵

단계	남북교류 협력사업	세부추진 방안
1단계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기존사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의 협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구성 ◦ 환경·해양 전문가를 포함하는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지역 연계형) ◦ 북한의 관광특구 및 개발구와의 연계방안 수립 ◦ 북한과의 관광재개를 위한 비공식적 대화 추진(중단된 금강산 재개나 북한 역점 지역(원산~마식령) 관광 사업 및 남북관광 연계(철원~금강산) 등의 중장기 계획 등 협의) ◦ 금강산 육로관광 연결 루트 다양화 및 순환코스 개발

단계	남북교류 협력사업	세부추진 방안
2단계	생태·해양 관광 산업의 남북관광자원 공동조사를 위한 ‘남북관광 공동관리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광 공동관리 위원회 구성 ◦ 남북 간 추진협력체계 구축(남북관광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추진체계 정비) ◦ 관련 기업의 시설점검 방문 허용 ◦ 남북협력 생태관광 거점 개발 ◦ 남북관광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 공동관리 시범지역 지정
3단계	동해안 남북관광벨트 조성 (남북 정상합의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 금강산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 및 동해안 남북관광벨트 조성방안 등 중장기 협력방안 협의 ◦ 크루즈 연계를 통한 백두산 관광 ◦ 관광콘텐츠 공동개발 ◦ 강원도(남북) 국제생태평화공원 조성

라. 전망 및 기대 효과

- 산업 분야에서 북한과의 남북교류 협력 우선순위는 관광 분야가 가장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음
- 큰 자본 투자 없이 단시간 내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실제로도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중에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와 북·중·러 접경 지역인 온성 섬 관광 개발구 등 5개의 관광 관련 특구가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같은 북한 관광 산업과 관련한 계획 및 정책은 강원도가 제시한 ‘속초-원산 및 설악산-금강산 국제 관광지대 조성’, 제주의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 교차 관광’ 사업과도 접점을 이루는 부분이 많음
 -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북한이 관광자원 발굴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은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대동강 수질오염,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홍수, 산사태 문제 등 북한의 자연환경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됨
 - 산업발전 과정에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 당국도 지속적 산업발전 및 주민 생활향상을 위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향후 개발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할 여지가 있음
 - 이처럼 북한의 관광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환경보호는 관광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로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북한이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금강산, 백두산, DMZ 지역 등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북한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점은 남북관광교류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가 북한 해양관광 개발사업에 나설 경우, 지리적으로 가깝고, 북한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사업 중 원산 갈마 해양관광 사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라선 경제특구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해 요트 부두 개발, 비파도 해양 레저 단지 개발 참여 및 이 사업을 온성 섬 관광 사업과 북·중·러 접경지대 연계 관광 사업으로 확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협력사업임⁴⁹⁾

● 설악산·금강산 관광연계사업

- 설악산·금강산 관광연계사업은 설악산·금강산 연계 관광을 허브로 구축하고, 주변 지역 중 자연환경 및 생태 자원이 뛰어난 지역을 활용한 지역적 스포크를 구축하여 ‘허브 앤 스포크(hub&spoke)’ 개발체계 구축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⁵⁰⁾
 - 남쪽의 허브 지역은 기반시설이 뛰어난 설악, 속초로 지정하여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스포크는 인제, 양양 등 생태탐방, 삼척-원산 간 연결 도로를 조성하여 휴양·레저기능이 융합된 형태로 개발함
 - 한편 북측의 허브 지역은 금강산 주변 지역 중 기반시설이 양호한 고성지역을 중추 지역으로 육성하여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주변의 금강, 통천, 원산지역을 연결하는 스포크를 연계하는 형태로 개발함

4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 협력 필요, 2018.5

5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북한 해양 접경 지역 공동 활용방안, 2009

V

접경 지역 법·제도 규제 개선방안

1. 접경 지역 규제현황
2. 특화 산업별 예상 규제
3. 접경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V

접경 지역 법·제도 규제 개선방안

1 접경 지역 규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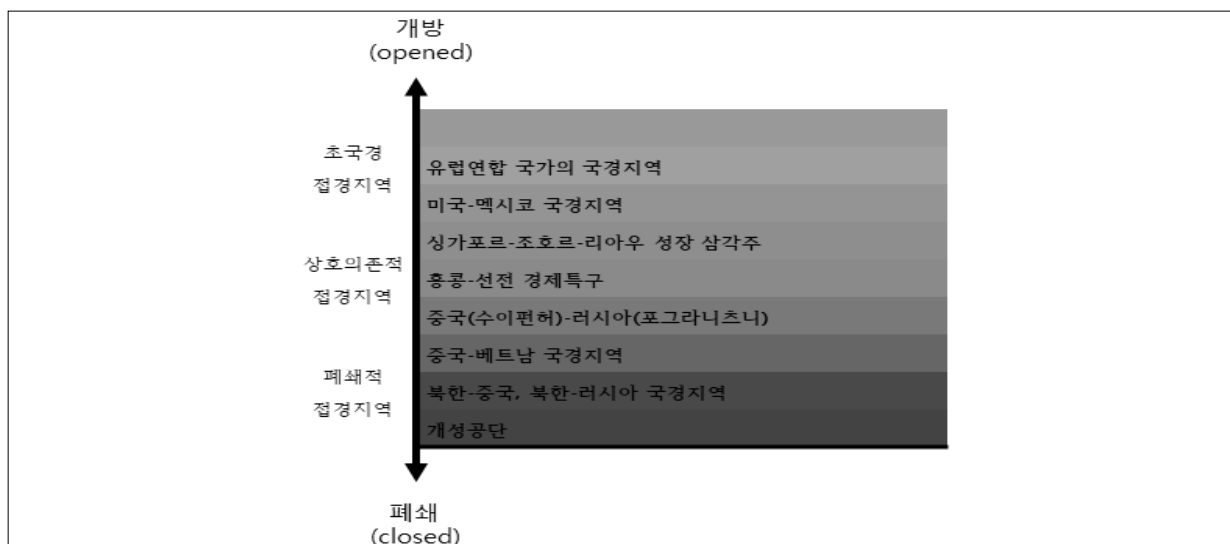
1.1 개요

가. 접경 지역 현황 및 정의

● 현황

- 타국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정치·외교적인 영향으로 인해 국경선에 인접한 많은 변경지역이 타국과의 교역을 제약받고, 이로 인해 고립되면서 성장이 정체되거나 낙후되고, 지역이 소멸되는 경험을 하게 됨
- 특히 일부 국경 지역은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해 인접국 국경 지역과 언어, 습관 등이 유사한 문화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의 장벽에 의해 교역이 단절되거나 제약을 받으면서 빈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¹⁾

〈그림 V-1〉 접경 지역과 국경 개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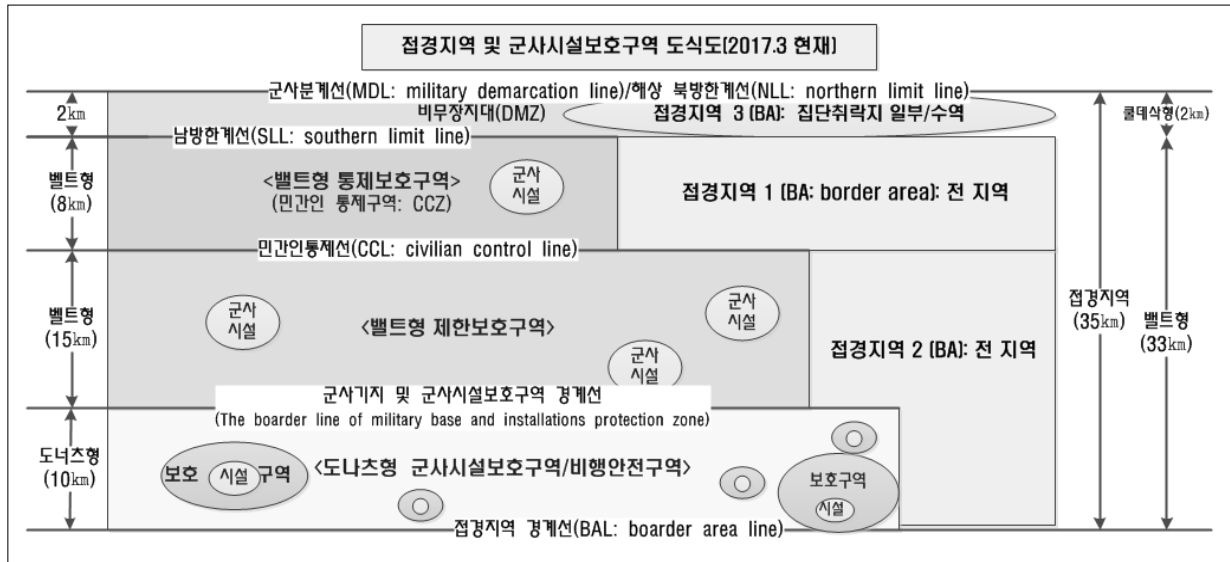
자료: 이옥희, 북중접경 지역: 전환기 북중 접경 지역의 도시네트워크, 2011

1) 경기연구원, 중국 변경무역제도 연구, 2019

● 국방부에서 규정한 접경 지역의 정의²⁾

- 접경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시·군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부터 거리·지리적 여건·개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임
 - 민간인통제선 이남으로부터 10km 이내의 시·군에 속한 읍·면·동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함

〈그림 V-2〉 접경 지역, 민간인통제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법정 도식도



자료: 신광식, 통일을 대비한 접경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5

●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접경 지역법)」에 근거한 접경 지역의 범위³⁾

- 접경 지역의 범위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방 35km 구간에 해당하며, 이 지역에는 3개 형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존재함
 - 첫째,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민통선에 이르는 구간의 ‘벨트형 통제보호구역’
 - 둘째,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방으로 25km에 이르는 구간 중 민통선 이북지역을 제외한 ‘벨트형 제한보호구역’
 - 셋째, ‘전방지역’을 제외한 후방지역의 군사시설 외곽에 설정하는 ‘도너츠형 군사시설보호구역(통제 및 제한보호구역)’
- 접경 지역은 동서로는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괄하며, 남북으로는 군사분계선에서부터 인제군의 남단까지 포함됨

2) 신광식, 통일을 대비한 접경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5

3) 강한구, 접경 지역 관련 「군사시설보호법」의 이해와 토지이용방안, 2017

나. 접경 지역 토지이용규제

● 접경 지역 토지이용규제의 목적

- 토지이용규제란 토지이용계획의 공적 수단으로써 법적·행정적 조치에 근거하여 토지이용행위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임
- 첫째, 토지이용에 있어서 부의 외부효과를 통제하는 것임
- 둘째, 토지의 용도 그리고 밀도의 적정화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임
- 셋째, 국가경쟁력의 강화 및 국토 공간의 효율성 확대, 그리고 국토의 친환경적인 보존기능을 강화하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달성하는 것임

● 접경 지역 토지이용규제의 특징

- 첫째, 접경 지역의 산지와 농지, 군사시설에서 대부분의 규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산지규제(행정구역 면적 대비 79.0%) > 군사규제(행정구역 면적 대비 62.8%)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4,315km²) > 보전산지(3,875.3km²) > 준보전산지(612.4km²) > 농업진흥구역(584.7km²)
 - 이러한 산지, 농지 및 군사 중심의 대규모 토지이용규제는 평야 지대 및 생태 지역,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임
 - 즉, 접경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산지와 농지 및 군사 관련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접경 지역에 과도한 중복규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접경 지역에 지정된 토지이용규제 면적은 행정구역의 171.2%이고, 중복규제면적은 행정구역면적의 53.0%로 총 규제면적의 30.9%임
 - 경기도 접경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의 58.9%(968.4km²)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있음
- 셋째,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접경 지역의 토지이용규제의 특성이 달리 나타남
 - 세 지역 모두 산지, 군사시설의 토지이용규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인천광역시 접경 지역은 교육 및 문화규제, 경기도 접경 지역은 농지규제, 강원도 접경 지역은 환경규제가 각각 나타나고 있음
 - 즉, 행정구역을 불문하고 전체 접경 지역에서 산지, 군사시설의 토지이용규제가 공통적으로 해소되어야하며, 각 지역별 규제 특성을 고려한 완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해야 함
 - 현재 접경 지역에 관한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제 및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률의 주관부처가 다르고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응부서도 각기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⁴⁾

〈표 V-1〉 접경 지역 토지이용 용도별 규제현황

(단위: km², %)

구분	행정구역 면적	규제지역 면적	규제비율	산지	군사시설	농림지역	개발제한 구역
전체	9,632	20,296	210.7	6,638	4,923	5,197	213
인천	583	1,248	214.0	300	275	257	-
경기	3,125	6,188	197.9	1,676	2,017	1,279	213
강원	5,923	12,859	217.0	4,661	2,629	3,660	-

자료: 행정자치부, 접경 지역 발전종합계획 연구 용역, 2017; 국토연구원,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1, 2018

다.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 접경 지역법의 목적 및 한계

-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 낙후되어온 접경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지원하고, 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궁극적으로는 접경 지역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2000년 12월 기준 「접경 지역지원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접경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하였음⁵⁾
 - 「국토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은 「접경 지역법」에 의해 상위법으로 분류되어 접경 지역 지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즉 「접경 지역법」에 의하면 경기 북부지역과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지역은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낙후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준수해야함
 - 또한, 접경 지역의 대부분이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및 지원 역시 군사적 토지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 이와 같이 군사적 통제 및 법률에 의한 제약과 제한적인 규제 완화 및 지원으로 인하여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은 여전히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각종 상위법에 의한 과도한 중복규제는 접경 지역의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⁶⁾

4) 강원연구원, 강원도 핵심규제 진단과 전략적 추진과제, 2016

5) 김종래, 경기 북부 접경 지역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2005

6) 경기연구원, 접경 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접경 지역 지원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2013

- 접경 지역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또는 DMZ 인접 지역과 같이 예외적인 지역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이 요구됨

라. 접경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 접경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⁷⁾ 실태

- 군사분계선을 기준하여 일정 거리의 구역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획일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접경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의 행정구역 면적 중 53.1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강원도 접경 지역은 행정구역 면적 중 45.48%(2,676km²),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행정구역 면적 중 65.60%(2,051km²), 52.01%(304km²)에 군사 관련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접경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53.3%가 강원도에, 41.3%가 경기도에, 5.4%가 인천광역시에 지정되어 있음
 - 철원군은 접경 지역 15개 시 군 중 최대의 군사 관련 규제면적인 889.47km²(행정구역 면적 대비 100%)로 가장 군사규제가 심한 지역임
 - 또한, 강원도의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경기도의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인천광역시의 옹진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비율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함
- 즉 군의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작전환경을 보장하며 거주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접경 지역의 상당부분이 경제 활동의 통제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며, 경기도와 강원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3%가 집중되어 있음
-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① 국토개발 제한문제, ② 지역 경제 낙후문제, ③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음

●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유형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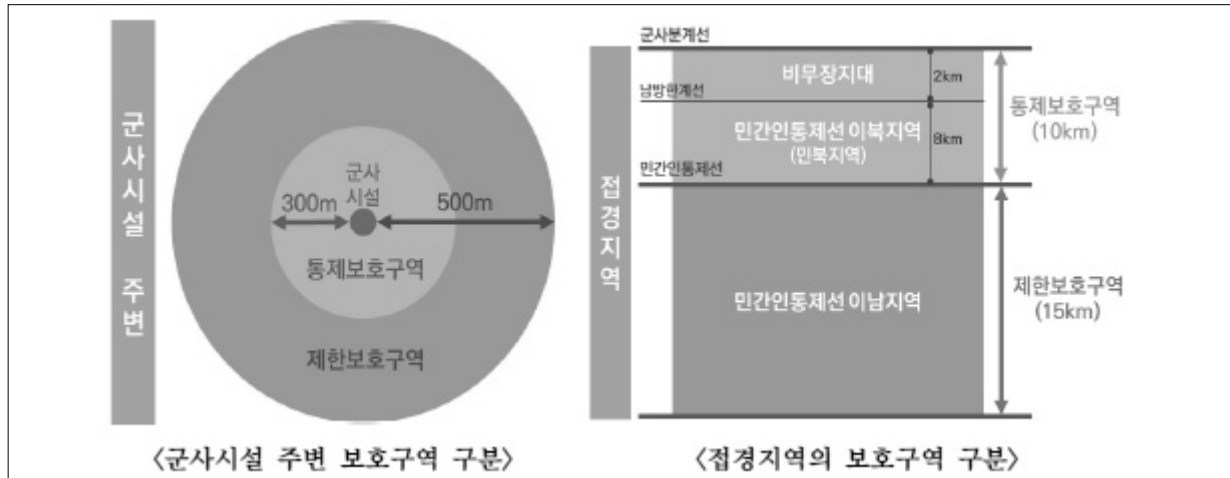
-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됨
 - 통제보호구역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 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임
 - 제한보호구역이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임

7) 강원연구원, 최근 군사시설 규제완화 조치와 강원도, 2019

8) 강원연구원, 최근 군사시설 규제완화 조치와 강원도, 2019

- 군사시설 주변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최외곽경계선에서 반경 300m 이내, 제한보호구역은 500m 이내로 제한적으로 지정범위를 설정함
- 반면 접경 지역에서의 통제보호구역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으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지역 전체를 의미하며,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5km 이내 지역으로 지정함

〈그림 V-3〉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구분



자료: 강원연구원, 최근 군사시설 규제완화 조치와 강원도, 2019

+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유형별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접경 지역 시·군들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유형별 지정비율을 살펴보면, 접경 지역 전체적으로는 통제보호구역이 32.45%, 제한보호구역이 67.55%를 차지하고 있음
 - 강원도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은 42.8%, 제한보호구역은 57.2%로 경기도(21.4%: 78.6%)와 인천광역시(11.0%: 89.0%)에 비해 규제가 강한 통제보호구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접경 지역 전체 통제보호구역 중 70.8%가 강원도에 지정되어 있으며, 27.1%가 경기도에 지정되어 있음

마. 접경 지역 규제 주요 이슈

●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토지이용규제⁹⁾

- 전국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경기도 지역에 51%, 그 외 지역에서 23%를 차지하고 있음

9)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2019.9.17

-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총 51개소로 전국 공여구역의 87%를 차지함
 - 한편 경기도 지역에서 반환되는 공여구역은 총 34개소·5,218만 평이나, 34개소 중 12개소는 군이 사용하는 지역이거나 산악지역으로 활용이 불가함

〈표 V-2〉 전국 주한미군 공여구역 현황

시도	소재지	기지명	주한미군 공여구역					
			계(㎡)	계(평)	반환(㎡)	반환(평)	지속공여(㎡)	지속공여(평)
전국	전국계	93개소	242,070,306	73,225,939	179,543,560	54,311,684	62,526,746	18,914,255
	경기도	51개소	210,611,366	63,709,652	172,523,180	52,188,028	38,088,186	11,521,624
	경기제외	42개소	31,458,940	9,516,287	7,020,380	2,123,656	24,438,560	7,392,631

자료: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2019.9.17.

-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설정으로 경기도 내 해당 지역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에 의해 낙후되어 왔음
 -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특법)」을 제정함
 -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공특법」 제1조)
 - 그러나 특별법상의 행정구역 설정 기준이 모호하여 공여구역 주변 지역과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범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또한, 미군에 공여구역을 제공함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의 논의가 배제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특별법을 입법했음에도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지역 개발지원 계획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공여지 반환지연, 예산 부족,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계획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던 것에 영향을 받음
 - 국비 지원대상과 지원 규모 등이 다른 공여지 개발지원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함
 - 접경 지역에 대한 지원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손실보상의 차원이 아닌, 저개발된 지역으로 상정하고 한반도 전체의 균형 발전관점에서 접근하는 문제점이 존재함
- 국방개혁 2.0과 토지이용규제
- 국방부는 2018년 7월 27일,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의 정신과 기초를 계승한 ‘국방개혁 2.0’ 발표

- 국방개혁 2.0의 3대 목표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임
 - 현재 우리 군은 전환기적 안보상황에 직면해있으며, 다변화된 군사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정책이 필요한 상태임
 - 향후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군사위협 대응에 적합한 군 구조로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국방개혁 2.0은 군의 하드파워인 군 구조와 방위사업 부문과 소프트파워인 국방운영과 병영문화 부문에서의 개혁안을 16가지의 대과제로 제시하였음

〈표 V-3〉 국방개혁 2.0 추진과제 현황

구 분	대과제(16개)	소과제(42개)
군구조 (12)	① 북핵 대응을 위한 미래합동작전 개념 정립	1. 핵·WMD 대응 3축체계 개념 발전
		2. 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
	②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부대구조 개편	3. 입체기동부대 창설
		4. 각군 부대구조 개편
		5. 국직/합동부대 개편
	③ 개념과 소요에 기반한 전력구조 개편	6. 미래합동작전개념 소요전력 확보
		7.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④ 한국군 주도의 연합·합동지휘구조 개편	8. 합참 개편 및 연합군사령부 편성
		9. 전략사령부 창설 검토
		10. 전작권 환수와 연계한 미래 지휘구조 발전
국방운영 (11)	⑤ 병역자원 및 부대구조를 고려한 병력 구조 개편	11. 상비병력 50만 명으로 감축
		12.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⑥ 문민통제 확립	13. 국방부 문민화 실질적 추진
		14.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15. 병 복무기간 단축
	⑦ 군구조 개편과 연계한 국방인력운영 체계 개선	16.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17. 장군 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
		18. 합동성 강화 및 군 전문 인력 양성·운영여건 보장
		19. 예비전력 내실화
	⑧ 전쟁수행 기반능력의 체계적 발전	20. 첨단 ICT 기반의 군사력 운용능력 및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21. 국방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군수개혁
	⑨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청렴한 국방운영	22.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 운영
		23.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구 분	대과제(16개)	소과제(42개)
병영문화 (9)	⑩ 장병 인권보호 강화	24. 軍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25. 軍 사법제도 개혁
		26. 인권존중의 군 문화 조성
	⑪ 장병 복지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	27.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28.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29. 직업군인 주거지원제도 발전
		30.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
		31. 군 의료시스템 개편
		32. 장병 사역임무 대체 근무지원 확대
방위사업 (10)	⑫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33. 軍·産 유착 근절 및 비리예방대책 고도화
		34. 방위사업비리 제재 실효성 강화 및 상·벌의 균형
	⑬ 효율적 국방획득체계로 개선	35. 총수명주기와 신속획득을 고려한 소요·계획·예산 관리
		36. 합리적 의사결정 및 협업체계 구축
	⑭ 전문역량 강화와 사업관리 유연성 확보	37. 국방획득 전문역량 강화
		38. 사업관리 유연성 확보
	⑮ 국방 R&D 역량 강화	39. 국방 R&D 기획 및 수행체계 개선
		40. 국가 R&D 역량의 국방분야 활용 확대
	⑯ 방산 경쟁력 확보 및 산업구조 전환	41. 기술·품질 중심의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42.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자료: 국방부, 국방개혁 2.0 기본방향 수립, 2018

-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은 전방부대의 재배치와 병력 감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군구조의 개편과 관련성이 큼¹⁰⁾
 - 이러한 군구조의 개편으로 인해 군사시설이 집적된 지자체는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현실적인 과제로 부상되고 있음
- 특히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 감축에 따른 군부대 이전 문제는 국유재산 관리 차원과 더불어 지자체의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에 매우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군부대 이전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접경 지역 내 지자체 간의 갈등 양상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 하에서, 접경 지역 내 토지이용을 둘러싼 군부대와의 갈등 해결, 지역현안사업 추진의 한계극복, 이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과제임
- 국방부는 2018년 11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 해제 의결¹¹⁾

10) 강원연구원, 강원도 접경 지역 유휴 군용지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 철원군을 중심으로, 2012

11) 강원연구원, 최근 군사시설 규제완화 조치와 강원도, 2019

- 국방부는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고 밝혔음
-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강원도에서는 21,202만㎡(전체 해제면적의 63%)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었고, 경기도는 11,264만㎡(33%), 인천광역시 1,137만㎡(4%)가 해제됨
- 또한, 2018년 12월 5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 계획에 따라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음
- 규제완화 조치에는 ① 제한보호구역 해제, ②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③ 비행안전구역 해제, ④ 일부 필요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의 추가 지정 ⑤ 비행안전구역 추가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한편 최근 강원도 내 6066만㎡ 규모의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됨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9일 국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당정협의’를 갖고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만 6121㎡를 해제하기로 결정함
-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접경 지역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철원군 근남면, 화천군 화천읍·상서면, 인제군 인제읍·북면·서화면, 양구군 양구읍·남면, 원주시 가현동·우산동·태장동 등이 포함됨
- 이와 함께 보호구역 내 건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던 협의위탁 구역인 철원·양구·인제·고성 4개 군 22.1㎢도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도 사라지게 됨
- 이에 따라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을 할 때 군과 협의 없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함
- 한편 국방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 내 주요 관광지의 출입절차 개선과 민통선 복상 등은 작전상 민감한 사항임을 고려해 지속해서 지자체 등과 추가 협의한다는 입장으로 관광 산업 분야의 규제가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 군부대 이전지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은 국가차원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군부대가 이전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접경 지역으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지자체가 군유휴지를 매입하기에는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
- 뿐만 아니라, 활용가치가 낮은 토지(국유지, 보전산지 등) 보다는 향후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보다 활용도가 높은 토지들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어야 함

1.2 접경 지역 규제 관련 상위 법령 검토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역할 및 한계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이런 이유로 동법은 수도권 안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기타 토지이용계획, 개발 계획에 우선하는 상위법으로 자리 잡음
 - 수도권정비계획은 이미 개발된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을 같이 규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기 북부와 같은 저개발지역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발생
-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은 정책대상 지역의 공간적 범역을 지나치게 넓게 잡아 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검토¹²⁾

+ 제한행위(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3조)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신설 및 증설
- 연면적 500m² 이상 공장의 신설 및 증설
- 연면적 1,000m² 이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법인사무소(연구소와 연수 시설 포함),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 연면적이 25,000m²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 15,000m² 이상 판매용 건축물, 연면적이 25,000m² 이상 복합 건축물
- 연면적이 30,000m² 이상이 연수 시설

+ 허가행위

- 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벤처기업집적시설, 국제 전문회의시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연구 시설

+ 행위제한의 완화

- 공장지역: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 내에서 허용

12) 고양시, 고양시 접경 지역 발전전략, 2014

- 학교: 총량규제범위내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신설, 총량규제범위내 입학정원의 증원, 학교이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원을 설치하기 위한 입학 정원의 증원, 간호전문대학을 간호대학으로 신설,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폐합에 의한 대학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

+ 관련 조문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

〈표 V-4〉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내용

구 분	내 용		
권역구분	과밀억제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지역 제외), 하남시, 수원시 등 총 16개시 	
과밀억제 권역행위 제한	행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증설 ◦ 공업지역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로 공업용도 면적 3만㎡ 이상인 것 	
	행위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공공청사의 신설·증설 ◦ 기존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과밀억제 권역행위 제한완화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신설(총량규제범위 내) ◦ 입학정원의 증원(총량규제범위 내) ◦ 학교 이전(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원을 설치하기 위한 입학 정원의 증원 ◦ 간호전문대학을 간호대학으로 신설(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폐합에 의한 대학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중앙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청 제외): 신축, 증축, 용도변경 ◦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청사: 증축, 용도변경 ◦ 공공법인의 사무소(문화, 군사, 무역 등과 관련된 업무): 증축, 용도변경
	공공청사	수도권 관할 기관, 공공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 포함) 중관할구역이 수도권 및 인근 도 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거친 것
		수도권 및 인근 도지역 관할기관, 공공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필요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협의 	

구분	내 용			
대규모 개발사업 종류	택지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내의 주택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 이상<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협의·승인	
	공업용지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개발 및 특수지역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공장용지조성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만㎡ 이상<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협의·승인	
	관광지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단지조성, 관광시설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유원지설치사업: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온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만㎡ 이상<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협의·승인	
	도시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개발사업: 10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 100만㎡ 미만이면서 30만㎡ 이상 공업지역 포함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 이상<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협의·승인	
	지역종합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종합개발사업: 100만㎡ 이상◦ 지역종합개발사업: 100만㎡ 미만이면서 30만㎡ 이상 공업지역 또는 10만㎡ 이상 관광단지 포함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 이상<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협의·승인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경기도 규제 현황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면적은 11,856km²(전국 11.8%) [경기 10,188km²(수도권 86%), 서울 605.2km²(5%), 인천 1,063.1km²(9%)]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적용지역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전체임
 - 경기도는 서울시 면적의 17배 규모, 7개 시·군이 서울시 면적보다 크며 양평군은 서울시의 1.45배, 가평군과 포천시 각각 서울시의 1.4배, 연천군은 1.2배 규모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주요 규제내용: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등의 제한
- 경기 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집중관리 되어 각 개별법에 의해 규제를 중첩으로 받고 있음

〈표 V-5〉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별 규제 현황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인구 (1,307.7만 명)	685.8만 명(52.4%)	500.4만 명(38.3%)	121.5만 명(9.3%)
면적 (10,187.8km ²)	1,167.95km ² (11.5%)	5,189.84km ² (50.9%)	3,830.0km ² (37.6%)
해당 시·군	14개 시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제외)	14개 시·군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시흥(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안성(일부)	8개 시·군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공업지역(산단) 지정	금지 (대체지정시 심의 후 허용) ※ 산업단지 30만m ² 이상 추가 심의 후 허용	가능 (30만m ² 이상 심의 후 허용) ※ 산업단지의 경우 물량배정(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	가능 (3만~6만m ² 이하 심의 후 허용) ※ 별도 물량배정 없이 산업단지 지정(6만m ² 이하)
인구 집중유발시설	공장기준	500m ² 이상 공장 신·증설은 공장총량제 물량배정(단, 사무실·창고 제외)	
	대학	금지 ※ 산업대학·전문대학(서울제외), 대학원대학 신설 ※ 간호전문대학(3년제, 신설10년 이후)을 간호대학으로 신설(심의)	금지 ※ 산업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 ※ 소규모대학(50인 이하) 신설(심의) ※ 신설 8년 미만 소규모대학 증원(심의)
		가능 과밀→과밀 ※ 단, “과밀(경기)→서울” 금지	가능 수도권→성장
		가능 과밀→과밀 ※ 단, “과밀(경기)→서울” 금지	금지 ※ 전문·대학원대학, 소규모대학(50인 이하)에 한하여 권역 내 이전 가능
	중원	매년 총량으로 규제	
	대형건축물	(건축연면적 기준) 판매용 15천m ² , 업무용 25천m ² , 복합용 25천m ² 이상의 규모일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 (인천·경기 제외)	-
	연수시설 (연면적 3만m ² 이상)	금지	심의 후 허용 (이전·기존 20% 내 증축 가능)
	공공청사	금지	심의 후 허용 (기존시설 10% 내 증축 가능)
	공공청사	◦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임대)시 심의 - 중앙행정기관의 행사(청을 제외) ◦ 증축 또는 용도변경(임대)시 심의 -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 공공법인 사무소	

〈표 V-6〉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 관련)

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공업지역	가. 대기업의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나.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지역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신설 또는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 마.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 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 국토계획법의 검토

+ 허가행위

- 개발행위의 허가(제5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함.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음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58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함

-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58조): ③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용도 구분에 따라 허가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
 -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물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 개발제한구역법의 검토

+ 제한행위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12조):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을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불합,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음

+ 허가행위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12조): ① 개발제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음
 -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

는 토지의 형질변경

- 1)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 2) 도로, 철도 등의 선형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 3)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4)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垓)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정의¹³⁾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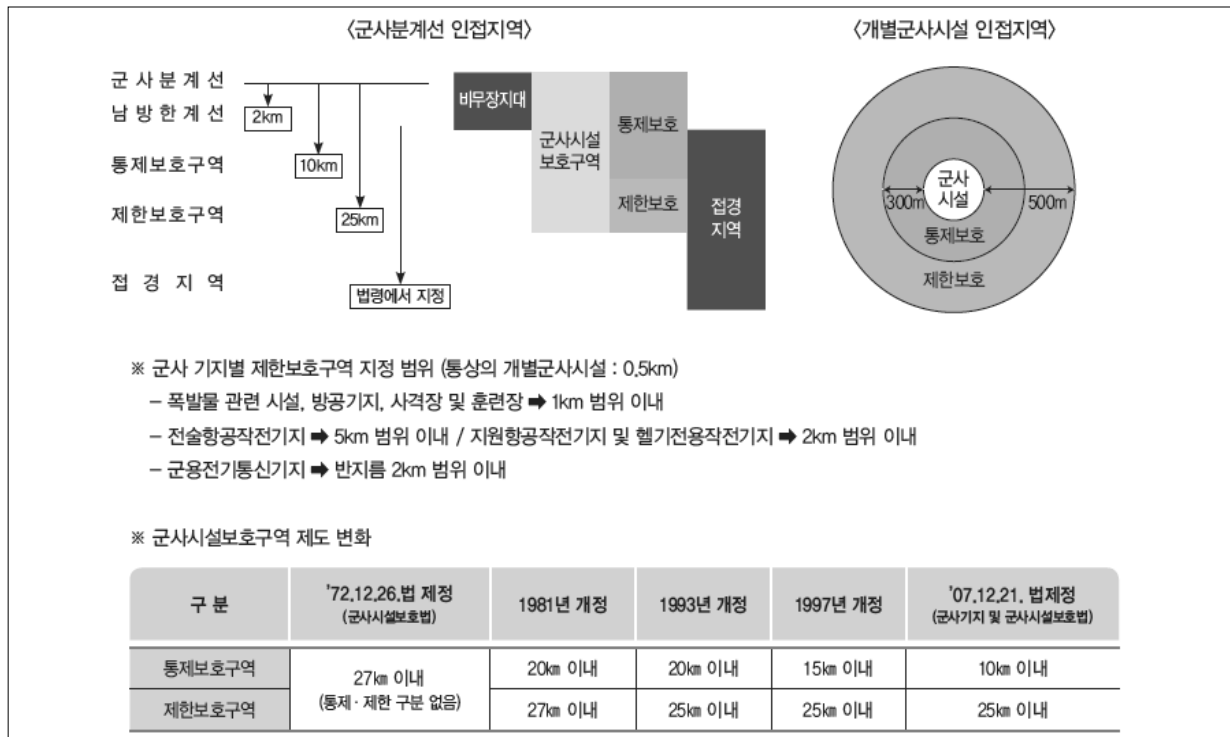
13) 경기도, 경기도 규제지도, 2019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 통제보호구역: 군사분계선의 인접 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 요구 구역
- 제한보호구역: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 군사기지법 제2조 제6호의 법적 근거에 의거함

〈그림 V-4〉 군사규제 지정 범위



자료: 경기도, 경기도 규제지도, 2019

+ 군사기지법은 일반인의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인 전투공간을 확보하여 수도권 방어를 완수하고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고자 제정된 법률

- 접경 지역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서 군사시설보호법을 상위법으로 인정함으로써 지역 개발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과 비인접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인접 지역은 군사분계선 남방 25km 범위 안에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
-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방 15km 이내에서 설정되는 민통선이북지역에 설치,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방 25km 선으로부터 민통선 이남지역에 설정

● 군사기지법의 검토

+ 제한행위

-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행위(제9조):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함
 - 통제보호구역,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표석·부표·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 군함의 항로 방해
 -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
 -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의 착륙
 -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제10조):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제외)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함
 -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 허가행위(제9조, 제10조)

-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은 허가함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를 허가함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의 수평 확장, 이설 등으로 도로구역이 제1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는 경우에 그 중첩되는 부분 중 도로 및 그 부속물의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그 제1구역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민간항공기 포함)의 이륙·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되는 도로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허가함
-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음
-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에 식물 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함
-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금지함

마.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의 검토

+ 관련 조문

-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제30조): ①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진동·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해야 함
- 영향권별 환경관리(제39조):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지역, 수질오염의 수계별 지역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해야 함

-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시행령 제14조):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中圈域) 및 대권역(大圈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시행령 제15조):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7조에 따른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함 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함 ③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함 ④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되거나 대권역관리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해야 함

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 한강수계법의 검토

+ 제한행위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제5조):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할 수 없음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 제외)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허가행위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제5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를 허가함
 -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 ③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사. 「수도법」

● 수도법의 검토

+ 제한행위

-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제7조의2):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함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음,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함

+ 관련 조문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제7조):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아. 「농지법」

● 농지법의 검토

+ 허가행위

-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32조):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허가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제한행위

-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32조):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③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④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제37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포함)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 관련 조문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제3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해야 함

-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제34조):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 산업집적법의 검토

+ 제한행위

-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제20조):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 포함)·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허가행위

-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제20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 포함)·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허가함

〈표 V-7〉 수도권 공장입지 행위 제한 현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구분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성장 관리 권역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신·증설 제한 없음		◦ 지식산업센터의 신·증설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유치 위한 지식산업센터,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받은 지식산업센터			
			◦ 기존공장 부지내 증설	◦ 공장 신·증설	◦ 기존공장 3천 m ² 내 증설 ◦ 기존공장 부지 내 증설	◦ 공장 신·증설
			◦ 첨단업종기존공장 증설	-	◦ 첨단업종기존공장 200% 내 증설	-
			◦ 현지근린공장 및 건축 자재업종공장 신·증설 (최종 5천 m ² 내)	-	◦ 현지근린공장 및 건축 자재업종공장 신·증설 (최종 5천 m ² 내)	-

자료: 경기도, 경기도 규제지도, 2019

차. 「지방세법」

● 지방세법의 검토

+ 규제 내용¹⁴⁾

-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기업에 대한 지방세를 중과함

14) 고양시, 고양시 접경 지역 발전전략, 2014

- 건물 신·증축시 취득세 3배 부과함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등록세 3배를 부과함
- 공장 신·증설시 취·등록세 3배, 재산세 5년간 5배를 부과함
- 각종 개발부담금 차등 적용함
- 수도권은 부과, 비수도권은 전액 면제함

+ 관련 조문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3조):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함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함,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함,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함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특화 산업별 예상 규제

+ 접경 지역 특화 산업별 예상 규제는 아래 표와 같음

〈표 V-8〉 접경 지역 특화 산업별 예상 규제 종합

스마트 6차산업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미래관광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조류 사업 ◦ 다시마 종묘/ 생산 시설 ◦ 꽃게 종자 연구/ 생산 시설 ◦ 스마트팜 혁신단지 ◦ 첨단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 ◦ 라이스(Rice)밸리 조성 ◦ 곤충산업 테마파크 ◦ 가축 종자/질병 연구소 ◦ 첨단농기계(드론) 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뷰티 테크노파크 건립 사업 ◦ 강화교동평화산업 단지 ◦ 상용전자자동차 클러스터 ◦ ICT 융복합 로봇·공장 자동화산업 클러스터 ◦ 방송영상콘텐츠 클러스터 ◦ AI 산업 클러스터 ◦ 만화애니메이션 클러스터 ◦ 가구산업 디자인/마케팅지원센터 ◦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 해양바이오 벤처창업 보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 패션 산업 혁신클러스터조성 ◦ 봉제혁신공장(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조성 ◦ 신소재개발/연구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양·생태레저 클러스터 조성 ◦ 도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정비계획법 (성장관리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 공장 총량제 ◦ 접경 지역 내 각종 부담금 ◦ 도로점용료 규제 ◦ 군사시설보호구역 ◦ 환경 규제(특정유해물질 배출기업 제한) ◦ 접경 지역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정비계획법 (성장관리권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공여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팔당특별대책지역) ◦ 한강수계법(수변구역) ◦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 바이어의 환경경영 요구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공여구역)

2.1 스마트 6차산업 예상 규제

●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규제에 따른 문제점 및 현황¹⁵⁾

- 농축수산물식품분야의 특화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수정법으로 예상됨
-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북한 마합도 사이에 해조류 평화 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우뚝가사리를 공동 양식하여 수출 산업화에 목적을 두고 있음
 - 남북 해양바이오 협력기술기반의 한반도 해조류 평화 벨트 사업으로 남북 최초 옹진-마합도 간 공동해역종합연구센터를 설립하고 AI/IoT 접목한 스마트 친환경 조류육상양식장 구축 및 육상 스마트팜 평화관광 산업 구축 계획
- 하지만 옹진군은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어렵고, 각종 중첩규제로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되어 이전기능을 수용하고 자족기반을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성장관리권역은 4년제 대학이 원천적으로 신설될 수 없고, 공장 총량이 규제되며 택지·공업용지·관광지 지정은 일정한 규모 이상일 경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함

● 블루이코노미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옹진군 중첩규제 현황

- 강화군 및 옹진군의 경우 공통적으로 군사, 농지, 산지, 학교보전, 도로, 습지, 및 문화재규제 등을 받고 있으며, 블루이코노미 산업의 핵심 지역인 옹진군은 수정법에 의해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
- 옹진군은 중앙정부의 경제지원 및 관심의 주변 지역이었으며, 특히 접경 지역이라는 안보적 현실로 인해 해상통제 및 토지 이용규제 등 중복규제를 받고 있음
 - 이처럼 토지이용의 중복규제는 결국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으로 이어짐에 따라 건물 신·증축 등이 원활치 않음
 - 지역 전체적으로는 지역발전 및 경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주 여건을 위한 인프라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경제적으로 낙후지역으로 전락
- 또한, 수도권 내륙과 비교하여 상이한 지리적·문화적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있기에 수정법에 의한 규제로 인해 비수도권과의 역차별 또한, 동시에 받고 있음

15) 정진원 외, 인천광역시 접경 지역역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2016

- 수정법,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호법, 환경관련법 등의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거주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경제 활동 위축 등의 악순환으로 지역 성장이 저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아래 표와 같이 웅진군의 경우, 2개 규제 중첩 및 3개 이상의 중첩규제 현황 및 해당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음

〈표 V-9〉 웅진군 중첩규제 현황

구분	군사 규제	산지 규제	농지 규제	환경 규제	교육 문화 규제	지역 개발 규제	면적 및 비중				주요 중첩규제 지역
							면적(km ²)	2개,3개 이상 중	중첩규 제 중	규제지 정 중	
2개 중첩	○	○	-	-	-	-	9.49	0.1%	0.1%	0.0%	진촌리, 대청리, 소청리
	○	-	○	-	-	-	4308.16	41.9%	39.8%	4.6%	진촌리, 남포리, 북포리
	○	-	-	-	○	-	2975.78	28.9%	27.5%	3.2%	남포리, 진촌리, 소청리
	○	-	-	-	-	○	1669.97	16.2%	15.4%	1.8%	진촌리, 남포리, 대청리
	-	○	-	-	○	-	21.02	0.2%	0.2%	0.0%	신도리
	-	○	-	-	-	○	3.29	0.0%	0.0%	0.0%	장봉리, 서포리, 신도리
	-	-	○	-	○	-	217.53	2.1%	2.0%	0.2%	장봉리, 내리, 신도리
	-	-	○	-	-	○	73.76	0.7%	0.7%	0.1%	모도리, 내리, 장봉리
	-	-	-	-	○	○	63.85	0.6%	0.6%	0.1%	내리, 진리, 신도리
3개 중첩	○	○	-	-	○	-	358.23	65.3%	3.3%	0.4%	연화리, 소청리, 남포리
	○	○	-	-	-	○	14.77	2.7%	0.1%	0.0%	가율리, 진촌리, 연평리
	○	-	○	-	○	-	3.11	0.6%	0.0%	0.0%	북포리, 남포리, 가율리
	○	-	○	-	-	○	122.94	22.4%	1.1%	0.1%	진촌리, 남포리, 가율리
	○	-	-	-	○	○	36.85	6.7%	0.3%	0.0%	북포리, 대청리, 진촌리
	-	-	○	-	○	○	13.02	2.4%	0.1%	0.0%	내리, 장봉리, 신도리

자료: 정진원 외, 인천광역시 접경 지역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2016

- 이에 중앙정부는 2000년 접경 지역지원법 제정을 시작으로 2003년 접경 지역종합계획(2003~2012년) 수립, 2019년 접경 지역법 시행, 접경 지역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이 수립 등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고 접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리를 위한 정책을 준비한 바 있음
- 하지만 상위법령으로 지정된 군사기지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가 가로막고 있어 접경 지역법 등을 근거로 한 접경 지역 지원이 무의미하거나 실효성 여부에 한계가 있음
- 이처럼 군사규제 및 수도권 규제로 인한 산업추진의 제약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와 같은 웅진군 지역의 중첩규제 및 접경 지역법의 한계로 인해 우뚝가사리를 양식화하기 위한 블루이코노미 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예상됨

〈표 V-10〉 옹진군 규제 현황

근거법률	규제 용도구역	규제지역(면적, 천 km ²)	대상지역
농지법	농지/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7.1)	옹진
		농업보호구역(0.3)	
산림보호법	산림보호/산림보호	산림보호구역(-)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보전준보전산지	보전산지(11.2)	
		준보전산지(-)	
도로법	도로/용도구역	도로구역(2.5)	
		접도구역(1.4)	
습지보전법	습지보전/습지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옹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76.4)	
		비행안전구역(37.3)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문화재보호	문화재보호구역(0.8)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0.9)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4.1)	
해상통제	-	옹진군 섬	옹진

자료: 정진원 외, 인천광역시 접경 지역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2016,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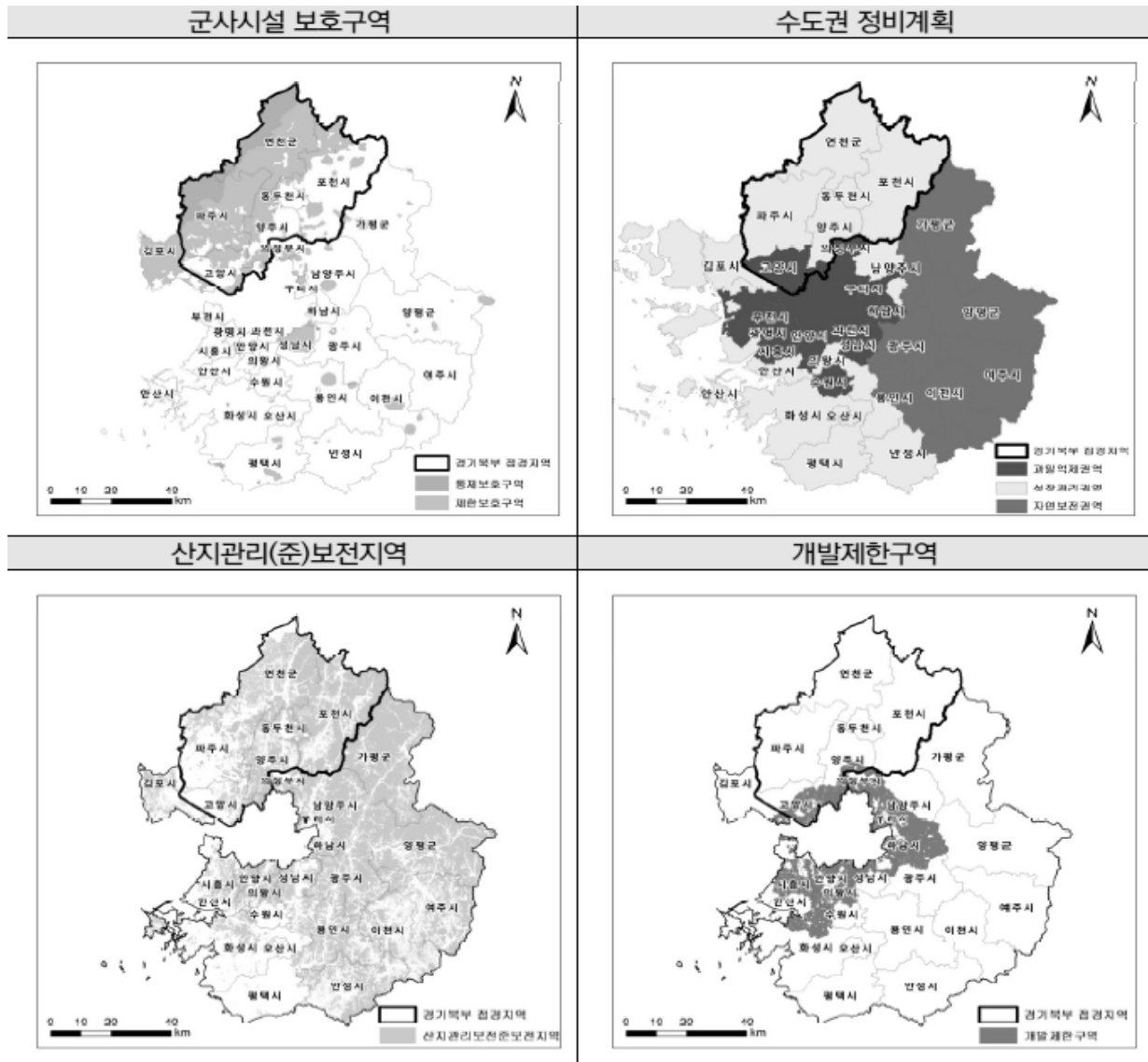
2.2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예상 규제

● 다양한 규제들의 중첩

- 제조업 분야 특화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들이 중첩되어 있음
- 이와 같은 다양한 규제들은 4차산업 & 미래산업, 첨단소재·부품산업, 콘텐츠산업, 프리미엄 소비재 산업, 가구산업, 군수산업 등의 제조업 분야 특화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분야의 특화 산업 지역이 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 중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며, 중첩하여 약 80% 해당하는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되고 있음
 -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파주시, 양주시는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제한 등이 있음
- 뿐만 아니라, 환경법 및 토지이용법에 따라 팔당상수원의 직·간접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제들이 중첩되어 있음
- 이중 「산업집적법」에 의한 공장건축연면적 규제나 「국토계획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는 자연보전권역 내 규모 이상의 공장입지를 제한하여 소규모 공장의 입지만이 허용되고 있음

-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지침」에 의한 공장용지면적 규제와 비도시지역 연접개발 규제는 규모 있는 계획입지 조성과 산업의 집단화를 어렵게 하고, 오히려 소규모 공장들이 분산 배치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그림 V-5〉 제조업 특화 산업 주요 대상 지역의 규제 적용 현황



자료: 행정자치부, 접경 지역 발전종합계획 연구 용역, 2017; 국토연구원,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1, 2018

● 제조업 특화 산업 지역의 토지규제 현황

- 제조업 분야의 특화 산업은 주로 경기 북부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산지, 군사, 환경, 농지, 교육 및 문화, 도로 및 교통 등의 분야 등의 토지이용규제를 행정구역 면적 대비 비중으로 종합해 보면 총 규제면적은 6,188.32km²로 규제비율은 197.97%에 해당함

- 분야별로는 군사(64.6%), 산지(54.2%), 농지(52.0%), 환경(15.1%), 도로 및 교통(7.7%), 교육 및 문화(4.5%) 순이며, 지역별로는 연천군(225.7%), 파주시(202.7%), 포천시(200.5%), 김포시(193.0%), 양주시(179.8%), 동두천시(154.4%), 고양시(150.0%) 순임

〈표 V-11〉 제조업 특화 산업 접경 지역 시·군의 토지구제현황

(단위: km²)

구분	행정구역 면적	규제합계	규제비율 (%)	산지 관리법	산림 보호법	백두대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공립 공원	상수원 보호구역	습지보호 지역
경기북부 접경지역	2849.32	5654.46	198.45	1608.97	14.8	-	1793.85	280.81	7.97	-
동두천	95.66	147.74	154.44	64.25	-	-	23.64	15.81	-	-
고양시	268.05	402.04	149.99	86.9	-	-	122.60	-	-	-
파주시	672.78	1363.79	202.71	306.87	-	-	610.70	-	4.81	-
양주시	310.28	557.88	179.80	178.12	14.8	-	166.81	-	-	-
연천군	675.87	1525.52	225.71	413.14	-	-	661.39	-	2.83	-
포천시	826.68	1657.49	200.50	559.69	-	-	208.71	265.00	0.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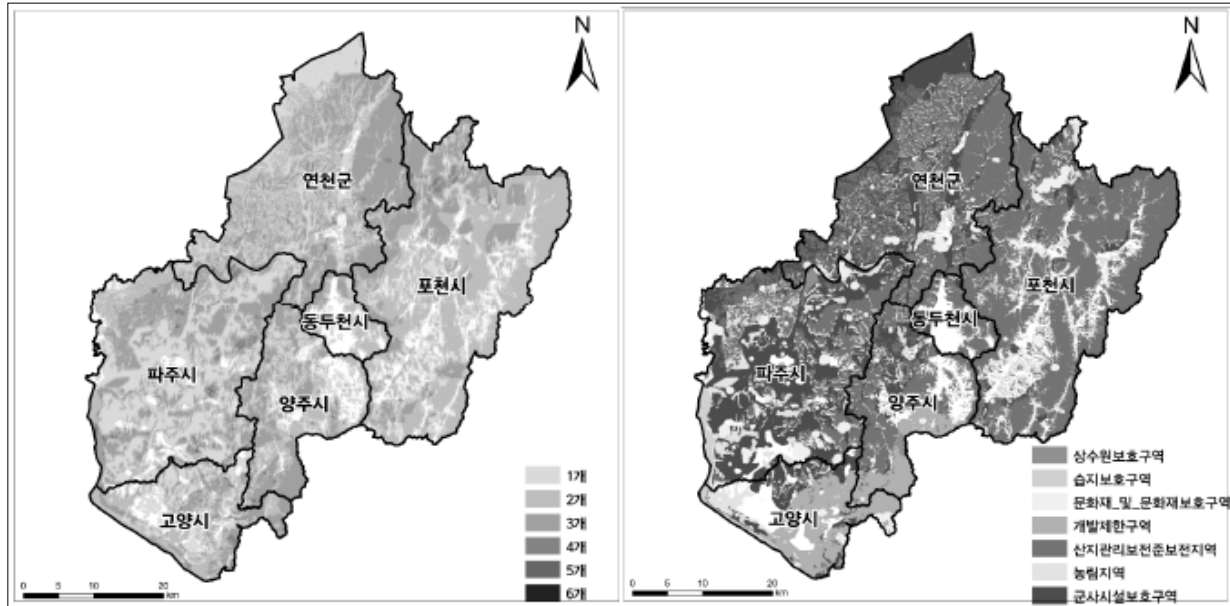
구분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농업진흥 지역	농림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대상허가 대상구역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개발제한 구역	도로구역	접도구역
경기북부 접경지역	12.84	143.70	277.23	1196.35	13.80	54.30	32.40	196.54	17.50	3.40
동두천	3.12	-	0.48	40.44	-	-	-	-	-	-
고양시	1.39	-	38.24	33.54	-	-	-	119.37	-	-
파주시	3.45	-	109.10	231.46	12.60	44.20	26.60	-	12.10	1.90
양주시	0.95	-	28.15	91.88	-	-	-	77.17	-	-
연천군	-	143.70	44.24	236.22	1.20	10.10	5.80	-	5.40	1.50
포천시	3.93	-	57.02	562.81	-	-	-	-	-	-

자료: 행정자치부, 접경 지역 발전종합계획 연구 용역, 2017; 국토연구원,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1, 2018

● 제조업 특화 산업 지역의 중복 규제

- 국토발전에서 소외되고 과다한 중복 규제는 기반시설 부족과 인구 감소, 경제 상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음
- 또한, 접경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인 접경 지역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에서의 실제적인 변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데 한계점이 존재함

〈그림 V-6〉 제조업 특화 산업 접경 지역 중복규제 현황



자료: 국토연구원,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1, 2018

2.3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예상 규제

● 패션섬유산업에서 클러스터 조성을 가로막는 규제¹⁶⁾

- 과도한 중첩규제로 대규모 지역개발 및 도시기반 시설 설치 한계
- 다양한 중복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이 어렵고 수도권규제로 인해 6만 m^2 미만 영세규모의 산업단지 조성만 가능한 상황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정비권역, 「군사기지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공여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팔당 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등 다수의 규제적용
- 패션섬유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 북부의 군사 관련 규제지역은 2,076 km^2 로 「군사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 경기도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0.1%임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출입 및 건축물 신·증축 등이 제한됨
- 경기 북부의 개발제한구역은 501.7 km^2 로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42.6%임
 - 건축물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등이 제한됨
-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경우 경기 북부 행정구역 면적의 9%(386 km^2)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의 18.4%(2,096 km^2)임
 - 공장(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골프장 및 연습장, 채석 및 채굴 등의 제한

16)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패키지사업 '20년 표준사업 계획서, 2019.

- 기타 경기 북부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및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규모 개발 제한
 - 수도권정비권역은 4,266km²로 대학 신·증설 금지,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공장 총량 등 공업입지 제한

● 환경규제

- (바이어의 환경경영 요구 증가) 현재 글로벌 환경규제는 정부주도의 법적규제를 넘어 바이어, NGO 주도로 넘어가는 추세이며, '20년 이후 섬유, 의류제품의 환경규제는 본격화 예정
- 완제품 단계에서 유해물질을 시험하는 단계를 넘어, 全 supply chain(원료/생산공정) 및 사용·폐기과정까지 유해성/친환경성을 평가, 나아가서는 생산공장의 노동자 인권 보호/근로 환경까지 평가하기 시작(품질 → 환경 → 인권)
- 아디다스, 겐, H&M, 타겟, 팀버랜드 등 59개 글로벌 유명 패션의류 기업들은 이미 친환경 운동을 실현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를 최소 25%까지 사용할 것을 주문¹⁷⁾

2.4 미래 관광 산업 예상 규제

●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법은 점경지원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서 군사시설보호법을 상위계획으로 인정하듯이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절대적인 규제임
-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입지해 있는 점경 지역들은 각종 규제와 제한 때문에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한 저발전의 문제에 봉착해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로, 기반시설 등 사회간접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를 끌어오기 어려움
 - 이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는 점경 지역과 비 점경 지역 간 지역불균형 유발의 가장 큰 원인임
- 점경 지역 민원의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로 발생함에 따라 이는 지역 경제의 침체와 낙후를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17) 국제섬유신문, 리사이클섬유에 사활 걸렸다, 2019.11.18

- 주민들의 요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임
- 특히 시대 상황의 변화 및 현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과다하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개발이나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비행장이나 탄약고 등의 군사시설 주변은 토지이용규제 상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데 건물의 증·개축은 물론 산업시설의 입주도 어려워 접경 지역이 더욱 낙후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주택가격 하락 등의 피해로 인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 밖에도 접경 지역 내에 밀집하여 입지 한 군사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부담을 초래함¹⁸⁾
 - 군사시설이 점유한 국유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군사시설이 입지하지 않았더라면 그곳에 건축되었을 민간시설에 부과할 수 있을 재산세 수입을 얻지 못하는 기회의 상실이라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임
- 접경 지역 15개 시군의 군사 관련 규제 지정 현황
 - 접경 지역 시군은 행정구역 면적 중 53.14%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
 - 총량적으로는 접경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53.3%가 강원도에, 41.3%가 경기도에, 5.4%가 인천광역시에 지정되어 있음

18) 강원연구원, DMZ 60년의 기회비용: 군사시설보호규제를 중심으로, 2013

〈표 V-12〉 접경 지역 15개 시·군 군사 관련 규제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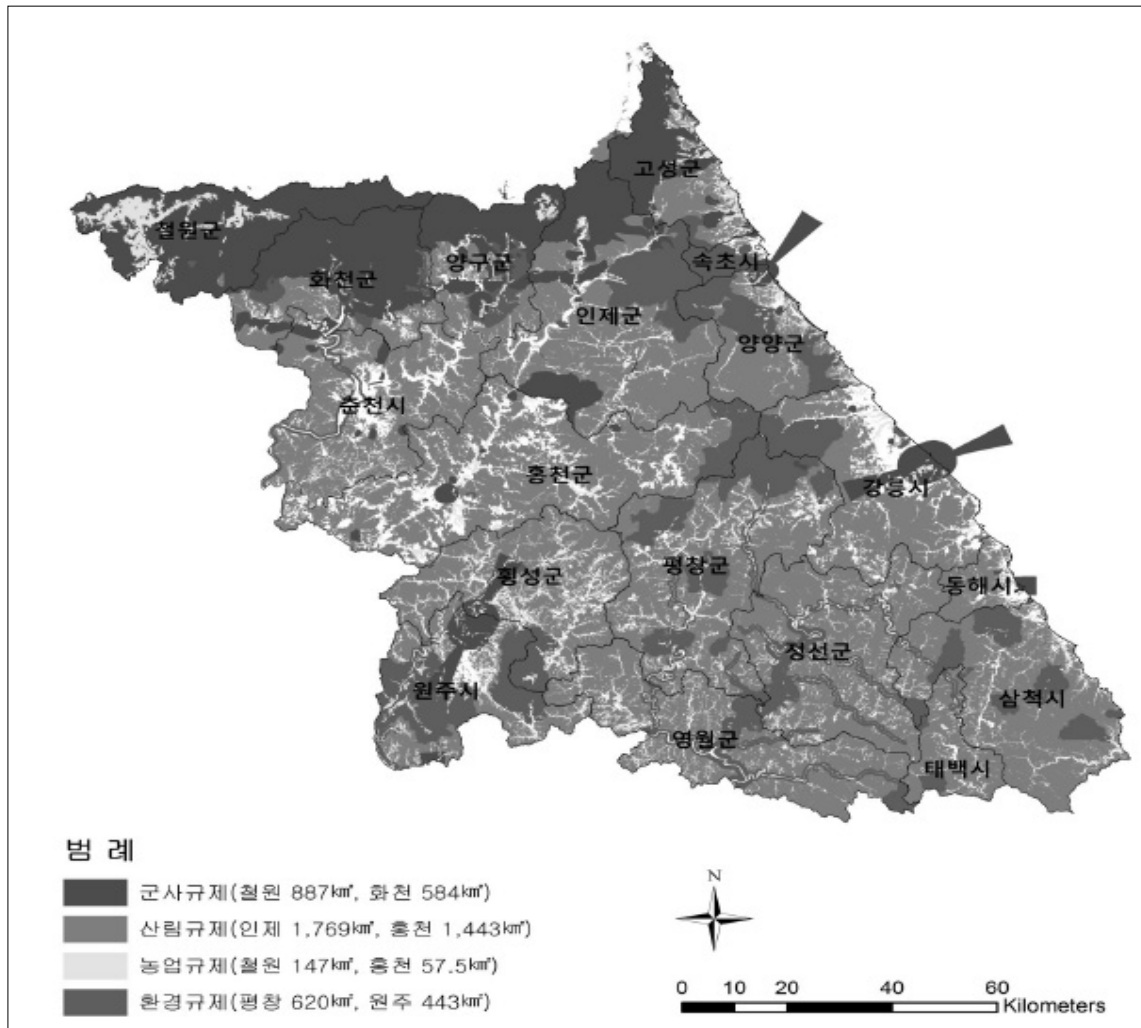
(단위: km², %)

구분		행정구역 면적							계	비율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 보호구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9,492.01	4,977.36	1,615.06	32.45	3,362.30	67.55	67.1	5,044.46	53.14
강원도	소계	5,883.60	2,648.53	1,134.46	42.83	1,514.07	57.17	27.3	2,675.83	45.48
	춘천	1,116.40	28.29	1.71	6.04	26.58	93.96	N/A	28.29	2.53
	철원	889.47	888.07	452.35	50.94	435.72	49.06	1.4	889.47	100.00
	화천	908.92	581.66	119.48	20.54	462.18	79.46	2.5	584.16	64.27
	양구	661.81	365.50	217.02	59.38	148.48	40.62	22.0	387.50	58.55
	인제	1,646.17	370.66	99.73	26.91	270.93	73.09	1.4	372.06	22.60
	고성	660.825	414.35	244.17	58.93	170.18	41.07	－	414.35	62.70
경기도	소계	3,126.67	2,048.50	438.09	21.39	1,610.41	78.61	2.5	2,051.00	65.60
	고양	268.05	134.41	0	0.00	134.41	100.00	N/A	134.41	50.14
	파주	673.11	612.05	159.27	26.02	452.78	73.98	1.2	613.25	91.11
	김포	276.60	221.84	39.60	17.85	182.24	82.15	1.3	223.14	80.67
	양주	310.31	166.48	1.74	1.05	164.74	98.95	N/A	166.48	53.65
	포천	826.64	224.95	0.84	0.37	224.11	99.63	N/A	224.95	27.21
	동두천	95.65	23.68	0	0.00	23.68	100.00	N/A	23.68	24.76
	연천	676.31	665.09	236.64	35.58	428.45	64.42	－	665.09	98.34
인천 광역시	소계	584.32	266.61	29.27	10.98	237.34	89.02	37.3	303.91	52.01
	강화	411.44	190.45	27.74	14.57	162.71	85.43	－	190.45	46.29
	옹진	172.88	76.16	1.53	2.01	74.63	97.99	37.3	113.46	65.63

자료: 강원연구원, 남북한 평화체제 추진에 따른 규제 갈등에 관한 연구, 2018; 강원연구원, 최근 군사시설 규제완화 조치와 강원도, 2019

-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이 32.45%, 제한보호구역이 67.55%를 차지
 - 강원도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은 42.8%, 제한보호구역은 57.2%로 경기도(21.4%: 78.6%)와 인천광역시(11.0%: 89.0%)에 비해 규제가 강한 통제보호구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철원군은 접경 지역 15개 시군 중 최대의 군사 관련 규제면적인 889.47km²(행정구역 면적 대비 100%)로 가장 군사규제가 심한 지역임
- 이처럼 접경 지역 전 지역에 해당되는 군사기지법은 관광 산업 분야의 특화 산업인 생태관광 산업, 해양관광 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큼

〈그림 V-7〉 관광 분야 특화 산업 규제 관련 토지이용규제 현황



자료: 강원도, 강원도 핵심규제 합리적인 개선방안, 2015; 강원연구원, 강원도 핵심규제 진단과 전략적 추진과제, 2016

〈표 V-13〉 관광 분야 특화 산업 주요 규제 분야별 규제내용

규제분야	규제면적 (km ²)	규제내용
군사	3,061.3 (18.2%)	<p>[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개발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음. 제한보호구역내에서 개발 행위 진행을 위해서는 관할부대와 사전협의(사실상 동의)하여 동의 얻는 것 필요 <p>[주요 규제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보호구역(금지) (제9조1의2) : 주택신축 ■ 제한보호구역(협의) (제13조의1) : 주택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광물·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산림	15,557.7 (92.5%)	<p>[산지관리법 제10조] 보전산지 행위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 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음 <p>[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보호구역(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완충구역)에서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농업	486.0 (2.9%)	<p>[농지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 행위,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환경	3,459.5 (20.6%)	<p>[자연공원법 자연공원의 보전 : 제23조(행위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p>[수도법 제7조의2 :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음

자료: 강원도, 강원도 핵심규제 합리적인 개선방안, 2015; 강원연구원, 강원도 핵심규제 진단과 전략적 추진과제, 2016

3 접경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3.1 필요성

- 접경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사, 농지, 산지, 문화재규제 및 수정법 완화가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낙후지역의 성장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가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모색하는 가운데 규제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토지이용계획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는 각 접경 지역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내생적 성장을 위한 지역개발을 모색하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임
- 그러나 국토계획법과 군사기지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유관법제의 영향으로 접경 지역 주민의 경제적, 문화적 불이익을 크게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음¹⁹⁾
- 특히 각종 규제 중첩, 접경 지역이 가진 평화통일과 국토 공간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 부족, 추진체계 한계 및 관련 사업의 지원을 저조 등 법·계획체계 등에서의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접경 지역의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는 가운데 여기서는 특화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표 예상 규제사항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환경규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3.2 기본 방향

- 정부주도의 규제 완화 및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
 - 기존 지역 균형 발전정책은 지역육성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하면서 단순히 수도권 억제를 통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정책의 효과와 합리성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또한, 국가 간 그리고 대도시권 간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무한경쟁 시대에서는 기존 우리의 수도권 정책이 갖는 의미는 더욱 퇴색되고 있음
 - 이제는 형평성에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도권규제 중심의 지역 정책에서 대도시의 자립 능력 확충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특성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상황

19) 김갑삼·최민섭, 통일대비 남북 접경 지역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2019

적 평준화를 추구하는 정책이 요구됨

- 지역 불균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하지만 수도권 규제 일변도의 획일적인 지역 균형 발전 추구는 수도권의 잠재력과 특성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여 전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게 됨
 -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격차의 완화와 수도권의 잠재력 극대화를 동시에 추구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정책의 변화

- 수도권 지역의 억제를 통한 비수도권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비효율적인 간접정책보다는 지역의 특화 산업을 지원·육성하는 직접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공공재원은 우선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확충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수도권의 경우는 시장기제의 원칙에 의거한 민자 유치를 통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며, 지역의 자율적 개발능력 확대를 위해 재정 및 도시계획에 대한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하여야 함
- 아울러 정부의 수도권 분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 및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함
- 수도권규제의 폐지를 통한 수도권 산업경제발전의 과실이 각 지역에도 균등하게 배분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세수증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수도권 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중복 규제 철폐 및 규제의 차등적 적용

- 특화 산업의 추진을 통한 접경 지역의 균형적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의 기본 방향은 먼저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임
- 접경 지역의 특화 산업들을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이중·삼중의 규제를 중첩시키고 경제 주체들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의 과잉과 직접 관련이 있음²⁰⁾
 - 경제적·사회적 여건, 지역적 특성, 규제 대상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수준이 설정

20) 경기연구원, 자연보전권역 환경규제 개선방안 연구, 2010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음

- 더욱이 과도한 중첩규제는 규제의 투명성을 해쳐 순응 비용이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규제 간 비일관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지자체별 지리적 여건과 정부 정책 그리고 시·군 역할 등에 따라 접경 지역 내에서도 발전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차별적인 규제 적용 및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
- 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과도한 중복규제를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함

● 기존 접경 지역 관련 법제의 개선²¹⁾

- 남북교류 협력을 통한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기존의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접경 지역법)」 개선이 필요함
- 접경 지역법은 접경 지역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접경 지역법의 적용 범위가 상위법인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우선 적용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함
 - 특히 특화 산업 대부분이 예상 규제로 500m²를 초과하는 공장설립이나 인구집중을 초래하는 인구집중시설의 입지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이처럼 수도권 규제가 접경 지역 특화 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이하 국가 균형 발전법)」의 접경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접경 지역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 협력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접경 지역은 수정법 포함, 군사시설 주변 지역, 환경보호 등 규제 대상인 경우가 다수로, 낙후시설 개선 등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국가 균형 발전법」 제2조제7호에서는 접경 지역에 대하여 “특수상황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 균형 발전특별회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편성사업을 지원하는 지역 자율계정의 세출목록에 특수상황 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제34조제2항제1호)
 -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특별회계 중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예산에 해당하는 지역 지원계정의 세출목록에는 특수상황 지역에 대한 규정이 없어 중앙정부 차원의 접경 지역 개발을 위한 예산사업의 지원근거가 부족함
 - 따라서 정부가 특수상황 지역에 대한 예산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35조제2항제8호 신설해야함

21) 국토연구원,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1, 2018

현 행 법	개 정 안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생 략)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신 설〉 8. ~ 16. (생 략)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7. (현행과 같음) 8. 특수상황지역의 발전 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9. ~ 17. (현행 제8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3.3 특화 산업 적용 핵심규제 개선방안

가. 규제 샌드박스 개념의 특화 산업 도입을 통한 규제의 부분적·일시적 허용

● 규제 샌드박스 개념과 유형

-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정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혁신의 저해가 예상되는 신기술, 서비스 제품 등 특정 기술 및 제품, 산업에 대해 규제를 부분적·일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임
 - 이를 통해 다양한 융합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함
 - 즉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정해진 조건’의 ‘안전한 환경’에서 규제 없이 실험·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며,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없이 사업을 테스트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의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부분적·일시적으로 허용된 공간(혹은 기간)을 의미함
 - 현재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인한 혁신 신기술 및 신서비스 산업의 시장진출 범위를 확대시키며,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시스템적인 접근인 동시에 법·제도의 개선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규제 샌드박스의 유형은 ‘신속 확인’,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로 구분되며 실증규모와 안전성 확보 여부에 따라 구분²²⁾
 - ‘신속 확인’은 신기술·서비스·신제품 등에 대한 관련 규제가 모호한 경우에 법령 적용 여부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30일 이내 회신하는 제도임
 - ‘실증 규제 특례’는 법령 공백, 규제 적용 부적합, 금지·불허사업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허용 구역 및 기간(2년 이내, 1회 연장), 규모 등에서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임
 - ‘임시허가’는 신기술·서비스·신제품 등과 관련한 현행 규제를 찾을 수 없거나 규제적용이

22) 경기연구원,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2019

불가한 사업에 대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2년 이내, 1회 연장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임

〈그림 V-8〉 규제 샌드박스 유형별 내용과 절차

	신속확인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목적	실증과 테스트 목적 (구역·기간·규모 제한)		시장출시 목적 (구역·규모 제한 정도가 낮거나 없음)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서비스·제품의 규제가 모호한 경우 법령 적용 여부와 규제존재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30일 이내 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기술·서비스·제품이 법령공백, 규제 적용 부적합, 금지 및 불허인 경우 제한된 구역·기간(2년 이내 1회 연장)·규모 내에서 규제 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기술·서비스·제품의 법령공백, 규제 적용 부적합인 경우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2년 이내 1회 연장)	
절차	<div>과제신청 과제접수</div> <div>소관부처 회신 (30일 이내)</div> <div>사전검토위원회 심의위원회</div> <div>과제시행·운영 (2+2년)</div> <div>결과보고서 법제도 정비</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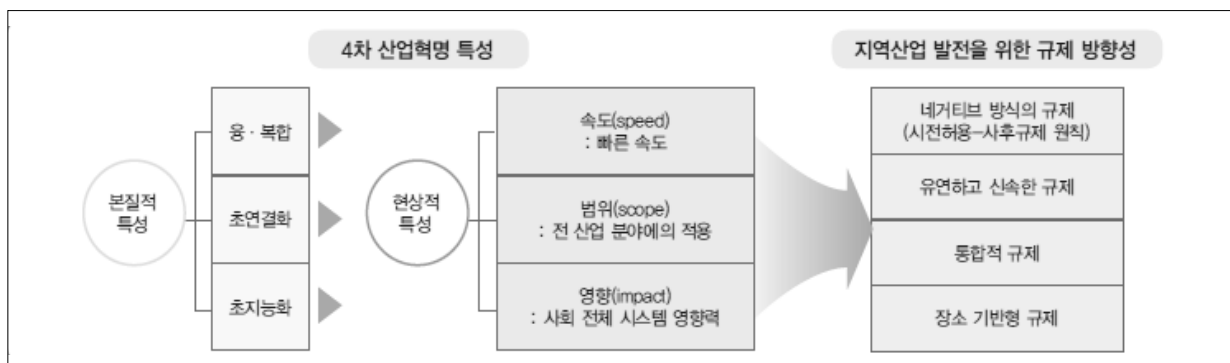
자료: 경기연구원,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2019

● 특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개념 도입의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저성장 등 메가트렌드와 결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은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와 함께 지역 격차 심화 등의 위기를 동시에 가짐
-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초융합성·초연결성·초지능화’에 대응해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 필요
 -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전통을 가진 포지티브(positive) 규제시스템(사전규제-사후허용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의 융·복합적 특성과 빠른 변화 등에 대응하기 어려움
 - 공급자 위주의 규제, 중앙정부의 획일적·경직적 규제는 새로운 산업이나 신기술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기술 혁신이 가져올 융·복합적인 사회현상과 미래가치를 현재의 단일 부처 중심의 획일적인 사전 열거식의 규제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
 - 기존 규제방식과 절차의 변화를 포함하는 규제개혁, 기술 혁신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장을 열어주는 정책 도입 노력 필요
- 특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역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함
 - 관련 규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힘들다면 일부 규제들의 완화 효과를 추정하여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행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
- 접경 지역 내 특화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들을 완화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 샌드박스적 접근을 통해 중복규제의 합리적 예외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²³⁾

- 예를 들어 수도권의 중복규제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적 접근은 접경 지역의 특화 산업과 관련된 산업에 한정시켜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특별한 목적으로만 규제개혁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타 지역과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지역의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²⁴⁾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법 규정의 유연한 해석과 포지티브(positive) 규제시스템(사전규제-사후허용 방식)의 네거티브(negative) 방식(사전허용-사후규제)으로의 전환을 통한 규제 완화 방안 마련
 -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 신기술의 창출과 신산업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유연하고 신속해야 함
 - (통합적 규제) 시스템적 관점에 입각한 예측가능성과 통합성을 가지는 규제여야 함
 - (장소 기반형 규제) 지역의 산업여건이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가 돼야 하며, 신기술과 신산업의 성과가 지역의 경쟁력 강화, 삶의 질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함

〈그림 V-9〉 4차 산업혁명의 특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방향성



자료: 국토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 전략, 2019

- ‘지역특구법’의 규제자유특구에 접경 지역 지자체를 포함하도록 개정 추진
 - 2019년 4월 시행된 ‘지역특구법’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국가 균형 발전취지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하지만 혁신자원과 성장의 집중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현재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 혁신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 모태인 ‘국가전략특구’는 도쿄권(국제비즈니스), 간사이권(국제의료이노베이션), 지바시(드론), 아이치현(자동차주행 로봇) 등 대도시를 전략 특구로 지정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한 사례임²⁵⁾

23) 경기연구원, 수도권 균형 발전과 난개발 정비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피해지역 지원방안 연구, 2018

24) 국토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 전략, 2019

- 하지만 한국의 경우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바, 수도권 남부 지역(경기도 남부, 인천 등)을 배후도시로 지정하여 접경 지역의 특화 산업을 후방 지원하는 한편 규제자유특구에 접경 지역을 포함시켜 추가적인 특례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 혁신기술과 스타트업, 인프라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인천, 경기도 남부지역을 배후도시로 하고 접경 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규제자유특구 추진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낙후된 접경 지역의 입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역의 혁신자원(인력, 인프라, 예산, 기관)을 활용하여 지역수요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를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권한 위임 필요
- 한편 일본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프로젝트형과 지역 한정형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지역한정형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국가전략특구법에 따라 특구별로 담당 장관, 지자체장,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국가전략특별구역회의(지역회의)를 설치하여 지역한정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나. 수도권 규제

- 지역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요구
 - 수도권 규제는 행정적 경계에 근거하여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획일적 규제임
 - 현실적으로 접경 지역의 낙후성은 행정적 경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연유함
 -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에 근거한 정책이 아니라, 낙후성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우선 지원을 위한 지역 선정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개념의 도입이 필요함
 - 특정한 지자체 내의 지역 격차는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에서 거두어 중앙정부가 임의적으로 활용하는 부담금을 지방이 스스로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25) 경기연구원,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2019

● 규제 개선방안

- 수도권정비계획제도의 개정 및 폐지가 요구됨
 - 수도권 정책 전환의 기본 방향은 우선적으로는 규제권역의 조정에 초점을 두고 향후에 수도권정비계획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즉 단기적으로는 현행 수도권 정책의 공간적 범역을 단순한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정책효과를 감안한 실질적인 공간 범위로 재설정하며, 총량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은 공장 규모를 5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200㎡ 이상을 공장으로 규정하며, 매년 총량 범위 내에서 공장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 따라서 규모별 규제에서 업종별 규제로 전환되는 논리에 부응하여 사실상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행 공장건축 총량제도를 폐지해야 함
- 특히 접경 지역을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함
 - 접경 지역 대부분이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와 SOC 투자 미흡으로 산업·경제, 재정,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제반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수도권 내 타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불합리한 정책임
 - 용진군은 행정구역상 인천시 내에 있어 수도권으로 포함되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고 경기북부의 경우, 성장관리권역에 묶여 있어 경제적 낙후성에도 불구하고 수정법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 따라서 접경 및 도서 지역 등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거나 조정해야 함

다. 군사시설보호규제

- 접경 지역 군사규제에 대한 정밀한 대응과 전향적인 조치 필요
 - 첫째, 범정부 차원의 접경 지역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접경 지역의 공간적·법제적 특성상 여러 정부 부처가 연관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공간 이용과 관련한 개발전략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남북 및 국제관계, 공간적 특성, 미래 안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접경 지역 규제 정책도 일방적인 규제나 완화 조치보다는 남북관계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큰 틀에서 단계별 시행되어야 함
 - 둘째, 남북한 간 군비통제의 진행 수준 및 남북관계 개선 등을 고려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선택적·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 접경 지역에 대한 규제는 군사작전 수행과 개발전략 간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한 가운데 시행되어야 하며, 민통선은 지자체 및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민통선 조정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셋째, 접경 지역에 대한 민-군 갈등을 항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현재 국방부의 접경 지역 갈등관리는 지역별 민-군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운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화체제 구축 과정과 연계하여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됨

●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의 현실적 재조정

- 국토의 균형 발전과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군사시설의 입지와 보호구역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국토통일과 개방화 시대에 알맞게 현실적으로 재조정해 나가야 함²⁶⁾
 - 이를 위해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차원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규제의 완화를 정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는 끊임없이 검토해야 함
-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정밀한 현장실사를 통해 군사작전 수행이나 안보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야 함
 - 군사작전 상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유지하고 이외의 지역은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과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
 - 과도하게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도시 내 군사시설의 이전 추진을 통해 도시의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이뤄져야 함

● 군사시설보호구역제도의 완화 및 개선

-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정·관리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정주 생활환경 불편, 재산권 행사 제한, 지역발전의 장애 요인 등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인천광역시, 경기 북부지역,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개별군사시설의 이전에 대하여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음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시설 관리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6) 경기연구원,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분석과 대안제시, 2007

● 침체된 지역 내 생산과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지원 법·제도적 지원 절차의 마련

-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국방부의 예산 부족으로 이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군사시설 이전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또한, 민통선 출입 및 정착 여건을 개선하여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치로 인해 침체된 지역 내 생산과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치되어있는 지역이나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 지역은 군사시설의 입지로 인한 환경 및 생산, 경제 활동상의 피해에 대해서 지원 및 보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장기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함
 - － 동시에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과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피해방지 대책 수립과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함
- 외국의 경우처럼 군용지나 군사시설을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존치함으로써 보존되고 보호되게 하는 동시에 군사시설을 이전하게 될 때에는 대체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민·군 협조체계 구축

- 군사시설 이전 계획 등의 검토 및 수립 과정에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지역 단위별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한 지역사회, 즉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임
 - － 이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재산권 행사 제한의 완화 및 손실보상²⁷⁾

- 보호구역의 재검토·해제로 재산권 제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함
 - － 대부분의 접경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가 아주 큰 지역이며, 국가안보 논리에 의해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진행되어 옴
 - － 그러나 최근의 지방분권화, 민주화 추세에 따라 민·관의 지역개발 논리가 이슈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 논리와 지역개발의 논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함

27) 신광식·김형조, 통일을 대비한 접경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5

- 따라서 현재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면적이 방대하므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게 설정된 보호구역의 해제 또는 통제보호구역의 제한보호구역으로 등급조정이 요구됨
 -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의 예외범위 확대로 현행법은 보호구역 내의 각종 금지 및 제한사항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협의 개선은 신속성 보장으로 협의 업무 처리 기간의 준수 강제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분석제의 확대·강화해야 함
 -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행정청의 의무로 규정할 뿐 당해 국민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함
- 보호구역의 설정이 종래 토지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재산권 행사가 전혀 불가능하여 보상 없이는 그 제한을 수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함²⁸⁾
- 미군 공여지 및 군부대 이전지 활용을 위한 국가주도의 개발 방안 마련
 - 현재 미군 공여지 및 군부대 이전지 활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로부터 반환 공여지와 군부대 유휴지를 매입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정 및 인력 수준으로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군 공여지 및 군부대 이전지 활용을 위한 국가주도의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뿐만 아니라, 미군 공여지 및 군대부 이전지 활용에 있어 균형 발전논리가 아닌 손실보상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군 공여지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 국가주도개발의 근거 도입 필요(관련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 우선 중앙정부 산하에 반환공여지개발청 및 반환공여지개발공사 설립 등 미군 반환공여지개발 전담조직 설립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정부는 국무조정실, 행안부, 국방부 등 조직이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개발 방안 마련이 어려움
 - 관련 예산확보와 사업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에 특별회계 설치 운영
 - 미군 공여지 매입을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회계를 조성해야 함(정부 현금출자, 금융기관 차입, 일부 공여지 민간투자 매각 등)
 - 신탁·위탁개발 및 장기 임대 형태의 다양한 토지매각방식을 허용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함
 - 장기분할 상환 대상자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고 특별회계 종료로 명시된 조문을 삭제하여 장기적 관점으로

28) 이원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피해구제 방안, 2002; 신광식·김행조, 통일을 대비한 접경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5

토지를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현 행 법	개 정 안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① (생 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3.31., 2011.4.14.> 1. ~ 3. (생 략) 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 회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④ (생 략)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생 략)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 (신설) 5.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동업 시행령 제 10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하 삭제) ③~④ (생 략)

－ 주한미군 공여지 관련법 간 형평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필요

▸ 정부의 「미군공여구역법」 국비 보조율 확대

〈표 V-14〉 반환 공여구역 지원 관련 특별법 비교

구분	「용산법」	「평택법」	「공특법」	
			현행	개정안
목적	국가 책임 하에 공원 등을 조성 및 관리하고 주변 지역 체계적 정비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낙후된 주변 지역의 경제를 진흥해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현행과 같음
국비 보조율	토지: 무상제공 공원 조성비 100%	발전계획: 80% 지방 산단: 10% (기반시설)	공여구역 국유지 토지매입: 60~80% (도로, 공원, 하천)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50% 「공특법」 14조	국유지 토지매입 최소규정의 상향조정: 70~80% 및 주변 지역 지원 수준의 상향조정: 70~80%
혜택	지방지 부담 없음	낮은 지방비 부담 비율(20%)	-	-
폐해	-	-	제한된 국비보조금 높은 지방비 부담	-

자료: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2019.09.17. 재구성.

+ 군부대 이전지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 국가주도개발의 근거 도입 필요(‘국방개혁 2.0’)
-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접경 지역 군부대의 군구조 개편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변화시키는 중차대한 문제임
 - 병력 감축에 따른 군부대 이전 문제는 국유재산 관리와 더불어 지자체의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에 매우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특히 군부대 이전지 문제의 중심지인 강원도 내 지자체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지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국가주도개발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토지매각방식을 허용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함
- 군부대 이전지 활용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대응조직 구성) 해당 접경 지역 지자체 차원의 ‘군부대 이전지 활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구성하여 접경 지역 내 유휴지 현황 파악을 진행하며, 국방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감
 - (정부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군부대 이전지 활용을 위한 특별법 도입’을 통해 매각 비용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정부와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야 함
 - (규제 완화)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들이 추가적으로 완화되어야 함
 -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군부대 이전지와 유휴지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 군부대 이전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유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금까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국가주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다양한 지역발전 요인과 연계하여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라. 환경규제

●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²⁹⁾

-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산업단지, 공업지역, 그리고 비도시지역 등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의 면적 제한(6만 m² 이하)을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규모 있는 산업 용지를 조성함으로써 개별입지공장의 집단지화(또는 신규)를 유도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적절히 확보함
 - 산업단지조성사업 50만 m², 공업지역 내 공장용지조성사업 30만 m², 준계획입지 내 공장용

29) 경기도, 경기도 규제지도, 2019

지조성사업 10만 m²로 확대하되, 기타지역 안에서는 현행 규정 유지

- 준계획입지: 개발진흥지구, 공장입지유도지구, 준산업단지,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 계획입지 또는 준계획입지로 집단화된 공장을 대상으로 현행 공장건축연면적 규모 제한(1천~3천m²)을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완화하고, 건축 제한(업종 등)을 일부 완화함
-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의 신·증설 규모는 업종 및 규모에 관계 없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허용, 공업지역 및 준계획입지의 경우 각각 차등하여 완화, 기타지역은 현행 입지규제 유지
-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준계획입지를 지정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연접개발제한(인접한 2개 이상 사업장의 용지면적을 합산하여 규제) 적용을 배제함
- 규제 개선에 따른 공장 신·증설은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따른 할당부하량 및 공장총량제에 따른 공장건축연면적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여 총량범위 외 추가적인 산업시설의 증가를 제한할 것임
- 팔당상수원 및 상류 지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별대책 지역에 대해서는 폐수를 배출하는 일부 업종 공장 등의 경우 비도시지역에서 신규 개별입지를 억제하며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 공동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만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개별입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입지를 유도할 수 있음

●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입지규제 개선

-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개선의 추진 방향은 무엇보다도 자연보전권역 공장의 개별입지를 최대한 지양하고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자치단체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것임³⁰⁾
- 이를 위해 상수원 지역에서는 환경기준을 여타 지역에 비해 강화하면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자연보전권역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개별공장을 단지화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함
- 즉 개별입지를 단지로 유인시켜 수질관리 부하량 관리, 위해성 관리 측면에서 철저하게 접근하는 대신 면적규제는 폐지해야 함
-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자연보전권역 기존공장의 경우 성장관리권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에서는 업종 및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입지규제를 철폐하고, 공업지역 내에서는 기존부지 내에서 첨단업종은 200%, 비첨단업종은 100%까지 증설을 허용해야 함
- 특히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규모를 50만 m²로 확대해야 함

30) 경기연구원, 자연보전권역 환경규제 개선방안 연구, 2010

● 중복 규제의 폐지

- 자연보전권역의 근본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연보전권역을 지정해 놓고 있는 수정법을 폐지해야 함
 - 그러나 수도권 규제 자체가 효율성이나 합리성에 근거하여 도입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해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감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논리에 근거한 정치적 성격이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폐지는 쉽지 않음
 -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수정법의 폐지를 통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임시 규제를 다소라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산집법 개정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함
- 대신 산집법 제20조에 근거한 수도권 내 공장건축면적 500 m² 이상 공장의 신·증설 등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에서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야 함
- 이 밖에도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나 녹색기술 기업들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나 업종 변경을 전면 허용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비용편익분석에 근거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할 것임

3.4 특화 산업별 규제 개선 방안³¹⁾

가. 스마트 6차산업

1)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

● 현황 및 문제점

- 용진군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농경지 비율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임
- 북한과 대치한 최전방 접경 지역(특수상황지역)으로 수도권으로 묶어서는 안 되는 불합리한 지역임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서울 중심에서 거리로 범위를 정함(1982년)
-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가 어려워 일자리 부족, 인구 감소(젊은층 도시지역 이주), 지역 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지역낙후도지수가 수도권 지자체 중 최하위(전체 지

31) 인천시·경기도·강원도, 접경 지역 규제 개선 건의 사항, 2019

자체 244개 대상)

– 인천 郡지역: 강화군 116위, 옹진군 76위

– 경기 동북부: 양평군 101위, 연천군 107위

- 수도권 규제로 기업 유치지원, 개발부담금, 지원금, 세제 감면 등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방과 차별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장총량제 등 공업입지 제한, 대학 신·증설 제한, 기업 유치지원금·개발 부담금·세제 감면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수도권 규제 이외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농림지역 등 중첩규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개선 방안

- 낙후된 접경 지역(특수상황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

〈법령 개정 비교표〉

현 행 법	개 정 안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다만,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市, 郡지역은 제외한다.

2) 수도권 소득세 시행령 지역 편입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 조세관련 수도권 범위

법 령	지역 명칭 및 범위	법조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서울+경기+인천(옹진군, 강화군 포함))	법 제2조
접경 지역지원특별법	접경 지역(옹진, 강화, 연천 등 15개 자치단체)	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 제외지역(옹진, 연천)	시행령 제99조의4

- 옹진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4(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에서는 수도권 예외지역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나목에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지 않음(수도권에 속한 지역은 비과

세 배제)

- 용진군은 인구 규모 및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나 수도권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규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같은 양도세 관련 법규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예외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서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현실적으로도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군의 경우 뱃길로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이 많아 수도권으로 보는 것은 비합리적인 면이 많음

● 개선 방안

- 소득세법제155조 7항 수도권 범위에서 단서조항을 두어서 용진군을 수도권 예외지역으로 개정하여, 용진군 주민들이 같은 생활여건의 전국 여타 농어촌지역과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

3) 남북경협 거점 첨단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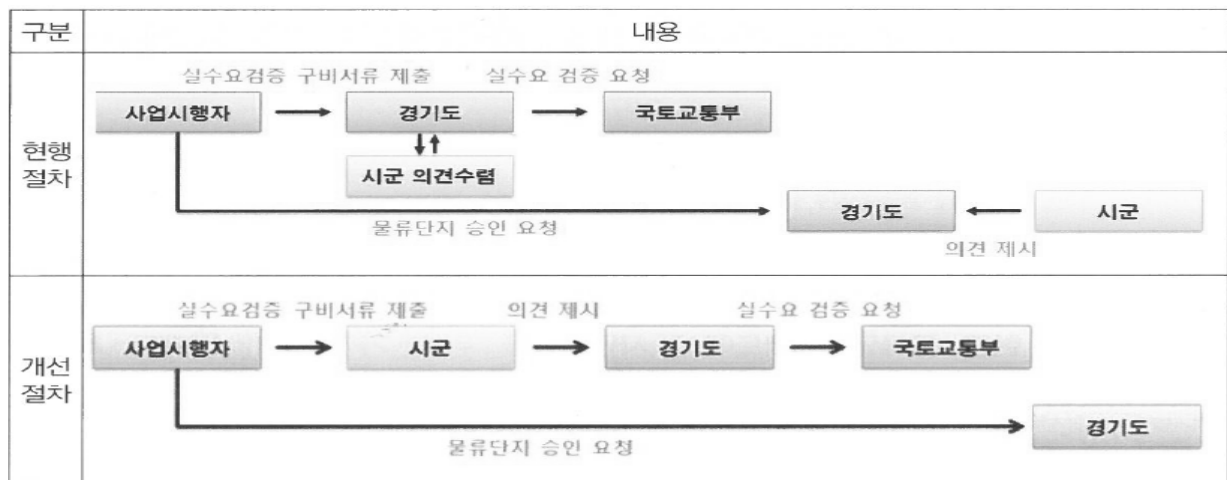
- 남북평화시대에 따른 남북경협 거점 도시 도약을 위한 첨단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 조성 필요
- 전자상거래 확산 및 4차 산업혁명에 기반 한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급속한 스마트화로의 변화하는 물류 트렌드 반영
- 「물류시설법」에 의거한 물류단지 또는 내륙 물류기지는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물류시설 개발 종합 계획’에 따라 지정 및 추진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 또한,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는 투기적 개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 이후 지정 가능하므로 사전 입주 수요 파악 및 물류 기업 유치 필요
- 현행 제도상으로는 시·군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절차임
 - 현재 실수요 검증 및 물류단지 승인신청절차는 사업자 → 도 → 국토부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 실제 사업부지인 시군의 현지상황 반영이 미흡한 상황임
- 인허가 초기 단계가 아닌 마지막 단계에서 시군의 의견이 수렴되는 현행제도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현행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에서 실수요 검증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물류단지 지정은 경기도가 담당하고 있는 이원화된 구조로 물류단지가 입지하게 되는 시군의 역할은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승인을 할 수 있는 구조임

● 개선 방안

- 사업초기 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절차가 개선되어야 함
-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에 시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개선 필요
- 구비 서류 제출의 시작을 해당 시군 경유 및 시군 의견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 반영(경기도 사례 반영)

사업초기 시군역할 강화 방안



나.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1)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 성장관리 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접경 지역은 국가안보 등 국가 공익을 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자족기능 저하 및 낙후지역으로 전락
- 특히 성장관리 권역의 행위제한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에 의거 인구집중을 초래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임
 - 제한 시설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임
- 또한, 접경 지역은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각종 개별법에 따른 중첩 규제를 받고 있음

- 대학 신설·이전 제한, 각종 부담금·세제의 면제·감면 배제
- 산업단지 물량제한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한 등
- 특정 지역을 규제하여도 경제성장이 분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수도권 내에서도 낙후지역과 발전지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모든 수도권의 지역을 일괄적으로 묶어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 따라서 수도권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탈피하여 지역별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 필요

● 개선 방안

- 수도권 내 균형 발전을 위한 접경 지역 내 낙후지역의 수도권을 제외시킴
- 이를 통해 접경 지역 내 낙후 지역이 정비발전 지구로 지정되면 발전된 지역의 인프라와 연계가 가능해짐

〈법령 개정 비교표〉

현 행 법	개 정 안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 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실설 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 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 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실설 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낙후된 지역일 경우 완화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 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접경 지역 산업단지 조성 시 각종 부담금 감면

● 현황 및 문제점

- 「접경 지역법」 제19조(부담금의 감면 등)에 산업단지 조성 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개별법에는 감면 근거가 없거나 한시적 운영 등으로 지속성 결여
- 접경 지역은 산업 및 생활기반 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어 투자를 기피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하천점용료·하천수 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접경 지역 사업으로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어 기업 투자유치에 어려움
- 「접경 지역법」상 부담금 등의 감면 조항이 임의적 규정(감면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어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하천점용료·하천수 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은 사실상 감면이 불가

구 분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법)	대체초지 조성비 (초지법)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공유수면관리법)	하천점용료· 하천수사용료 (하천법)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법)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法상 감면여부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	○	○	○	○	× (법적 감면 근거가 없음)
실제 감면여부 (개별법상)	○ (*일부 지역)	×	×	×	×	×

- 당초 접경 지역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음
 - (농지보전부담금)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18.12.31까지 농지전용허가 신청 신고 시 농업진흥지역 밖은 100% 감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18.6.30까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 등 신청 시 100% 감면
 -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하천수 사용료: 감면 없음
 - 개발 부담금: 수도권 시행 개발사업 50% 감면

● 개선 방안

- 접경 지역 산업단지 조성의 각종 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하천점용료·하천수 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규정을 타법에서 규정하기보다는 특별법 지위에 맞게 이 법에서 부담금의 감면, 면제 규정을 명문화
 - 접경 지역 사업을 위해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도록 확대
 - 접경 지역 중 민통선지역의 읍·면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부담금 등이 면제하도록 개선
- 군사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역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접경 지역의 민간개발 촉진 및 투자환경 제고

〈법령 개정 비교표〉

현 행 법	개 정 안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 -----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
1.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1.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1.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부담금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부담금
	1.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지원조성비(신설)
	다만, 접경 지역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위 각호의 부담금 등을 면제한다.

3) 산업단지 공장설립 활성화를 위한 도로점용료 규제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단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용지, 도로, 공원, 주차장, 폐수처리시설 등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받은 입주기업은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아 착공할 수 있음
- 기업체가 분양받은 토지는 진입도로 개설비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허가 시 진·출입 부분에 대해 도로법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매년 납부하는 실정임
- 산업단지는 도로개설이 완료된 상태이며, 진·출입(보도구간 등) 부분만 점용하는 형태이므로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로점용이 선행되어야 함
- 기업체는 산업단지에 대해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조성되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것을 큰 장점으로 생각하여 입주를 계획하나, 산업단지 내 공장허가 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허가 과정에서 안내받고 생각하지 못했던 도로점용허가 기간 및 비용 부담을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 같은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 전에 입주하는 대규모 공장의 경우 진·출입 경로를 미리 확보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받지 않음
- 또한, 도로점용료 부과도 하지 않고 있고 도로개설 후 들어오는 공장들은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대상에 포함되어 단지 내 기업체들 간 차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개선 방안

-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 공장신축을 위해 진·출입이 우선 확보되어야만 공장착공이 가능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다른 인허가에 우선하여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함
 - 분양받은 기업체만 도로점용받기 때문에 신속한 검토 가능함
-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조성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산업단지에 대해 입주기업 공장허가 시 도로법에 따라 적용되는 진·출입부분의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함
- 기업체가 분양받은 토지는 진입도로 개설비가 포함되었음에도 도로점용료를 별도로 납부하며 진·출입로를 이용해야 하는 기업애로를 감안하여, 개정 시 시행일로부터 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감면이 필요함
- 산업단지 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매년 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체의 불만이 해소되고, 공장 신축에 따른 시간과 비용 감소로 기업투자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산업단지 내 기업체 진·출입로 개설 및 사용 편의 증가로 산업단지로의 기업체 유치를 돕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음

〈법령 개정 비교표〉

현 행 법	개 정 안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8조(현행과 같음)----- ----- -----.
1. ~ 9. (생략)	1. ~ 9. (생략)
10. (신 설)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 공장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4) 군사시설보호구역 의무 해제

● 현황 및 문제점

- 미군공여구역법 제13조 제1항에는 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

나, 미개발 반환공여지 대부분이 해제되지 않았음

-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경기 북부 대다수의 반환공여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되고 있어 국방부의 토지매각 위촉과 민간사업 투자유치 저해되고 있음
- 캠프에드워즈 내 폴리텍 대학이 유치되어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군 협의를 해야 하며 높이에 대한 규제가 있음

● 개선 방안

- 미군공여구역법 제13조제1항 개정 건의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에 대한 국방부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국방부의 토지매각과 민간사업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법령 개정 비교표〉

현 행 법	개 정 안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①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①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반환이 완료된 공여구역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1) 공여구역 등의 반환 시 지상물 철거 규정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미군공여구역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면 기존의 지상물 등을 철거하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하나 민간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음
- 반환공여구역의 기존 시설물 등은 그 상태가 양호하여 계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시설물 존치 사용의 편익이 철거비용보다 큰 경우가 많음
 - 접경 지역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주요지역인 동두천시는 반환구역 내 대학교 건립 시 민간사업자는 기존건축물 재사용을 금하도록 정하고 있어 철거비 및 사업기간의 장기화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재사용 가능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냄. 앞으로 반환 공여지의 민간 재사용을 위해서 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절차 및 시간문제 해결 할 수 있음

● 개선 방안

- (행정안전부) 민간사업자도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시설물 철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자 기존의 시설물 등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기존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줌
- 이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 촉진, 시간과 비용의 절약 등 경제적 효과 제고시킬 수 있으며, 민간 사업자의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낙후된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음

〈법령 개정 비교표〉

현 행 법	개 정 안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⑤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u>사업시행자</u> (제5호의 사업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⑤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u>사업시행자</u> 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2) 특정유해물질 배출기업 제한 대상시설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부 고시(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지정)로 인해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기업은 동두천일반산업 단지 이외에는 동두천시에 입주할 수 없음
- 특정유해물질 배출 기업들이 시 전역에 입주할 수 없어 기업이전 및 유치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추후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확대 조성(약 20만 평) 시 입주업종 선택에 많은 규제로 작용하여 입주업종 선택 및 기업 유치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동두천시는 섬유특화지역임에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섬유 업종의 일부 기업이

입주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사례) 현재 추진 중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1단계 조성에 있어 특정유해물질 배출하는 기업을 제한해야 함에 따라 1단계(약 10만 평) 분양 시 섬유, 의복, 화학업종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업종은 제한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입주 가능한 기업의 폭 제한될 우려가 있음

● 개선 방안

- (완화규정) 환경부 고시(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에서 동두천국가산업단지를 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 (현장애로) 입주 가능한 기업의 폭 제한을 완화함
- 이를 통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2단계(660,000m²) 확대 조성 시 입주업종 및 기업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법령 개정 비교표〉

현 행 법	개 정 안
제3조(제한대상시설)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주시 검준일반산업단지, 포천시 양문일반산업단지, 동두천시 동두천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09년도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배정받은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지역에 대하여 2011년 3월 5일 이전에 지정되는 일반산업단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3조(제한대상시설)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주시 검준일반산업단지, 포천시 양문일반산업단지, 동두천시 <u>동두천일반산업단지와 동두천국가산업단</u> 지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09년도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배정받은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지역에 대하여 2011년 3월 5일 이전에 지정되는 일반산업단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접경 지역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배정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에서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으로 관리(3년 단위)
- '18년~'20년 산업단지 공급물량: 경기도 6,167천 m³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경기도 접경시군(6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 현재 국토부에서 경기도로 공급된 물량은 경기도 전체 공급물량으로 접경 지역과 관계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14개 시군으로 배정되고 있으므로, 실제 접경 지역에 대한 혜택이 없는 실정임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경기도 시군(14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 시흥시 등
- 또한,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외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제외지역(2개): 경제자유구역, 반환공여구역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 개선 방안

- 패션섬유산업 특화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접경 지역 시군 7개 중 고양시를 제외한 6개 시군지역도 제외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5조를 개정함

라. 미래관광 산업

1)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완화) 및 해제

● 현황 및 문제점

- 과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 저해
 - 양구 종합 개발 계획 및 관광지 개발 등 추진 시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의 행위 제한으로 어려움 초래
- 지역주민의 생계활동과 관련된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 걸림돌 작용으로 인구유출 지속 → 지역 경기 침체 가속화
- 민통선 관광시설 방문 및 영농 출입을 위한 승인 불편 → 관광객 불편으로 인한 관광분위기 침체, 지역주민 영농 불편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48%인 339.13km²

〈표 V-15〉 양구군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단위: km²)

구 분	행정구역 면 적	합 계	군사시설보호구역('19. 1. 1. 기준)			비행안전 구 역	협의업무 위탁구역
			소 계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양구군	706.57	361.11	339.13 (48.0%)	178.18	160.95	21.98	39.88

● 개선 방안

- 과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 조정
-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으로 합리적인 완화 추진
- 민통선 내 관광시설 및 영농 출입 승인절차의 간소화

2) 민통선 내 안보관광지 접근도로 통행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구간: 38.7km(평화의담~안동철교~오작교~수상령~백암산특구~칠성전망대)
- 민통선 내 안보관광지 조성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출입절차로 인해 관광객 수가 저조한 상황임
 -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 화천~평화의 담~금강산 수로 관광루트 개발(유람선 운행)
 - 동서녹색평화도로,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
 - 안동철교, 양의 대습지, 오작교 생태관광
 - 칠성전망대 안보견학(전망대 리모델링, 259GP 역사관 등 조성계획)
- 출입방법에 있어 별도 신분확인이 필요하며, 서약서 작성의 절차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부 구간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음
- 따라서 안보관광지 접근도로망 민통선 해제를 통해 칠성전망대~안동철교 구간 중 일부구간 민간인 출입 제한으로 인해 관광객 및 주민의 민통선 출입 여건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 개선 방안

- 국방부, 7사단, 21사단과 협의하여 안보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쿨데삭 방식(도로 및 관광지 인근 민통선 부분 해제)을 통해 접근도로 통행을 허용함

3) 인제군 가전리 DMZ 상시 출입 승인

● 현황 및 문제점

- 인제군은 각종 군사시설 및 관련법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안보교육관광지’도 전무함
- 따라서 안보 및 생태에 대한 교육관광을 통한 지역소득향상 추진 필요
- 최근 국민들의 생태관광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등을 활용한 안보

및 생태관광지 조성이 필요함

- 경쟁력 있는 평화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군부대 의존도를 분산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사업명: 서화면 가전리 비무장지대(DMZ) 평화생태탐방
- 운영기간: 2020년(예정) ~ 지속
- 사업 내용: 서화면 가전리 일원(DMZ 일원) 생태탐방 및 안보교육
 - 제한탐방 실시: 사전허가, 제한인원, 관리자·해설사 동반

● 개선 방안

- 인제군 가전리 지역을 ‘DMZ 평화생태탐방’을 위한 상시 출입이 가능하도록 승인함

4) 농업진흥지역 조정 및 해제

● 현황 및 문제점

- 철원군은 경지면적 대비 농업진흥지역이 97.06%로 광범위한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음
 - 경지면적: 13,250ha(논 10,901ha, 밭 2,349ha)
 - 농업진흥지역면적: 12,861ha(경지면적대비 97.06%)
- 수도권과의 지리적 접근성, DMZ, 한탄강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개발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진흥구역 설정 규제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음
- 지난 70년간 접경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중복 규제로 각종 경제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낙후 지역임
 - 뿐만 아니라, 저출산 노령화와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지역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개선 방안

- 경지면적 대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재조정이 필요함

VI

접경 지역 시·군별 특화 산업

1. 개요
2. 시·군별 특화 산업 역점
추진사업(안)

VI 접경 지역 시·군별 특화 산업

1 개요

1.1 접경 지역 특화 산업의 분야별 세부추진사업

- 제Ⅲ장에서 STEEP PLUS 모형과 혁신역량평가 모형을 사용하여 도출한 접경 지역의 특화 산업에서 세부추진사업으로 총 35개 사업을 도출함
 - 접경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세부추진사업의 분야별 분포는 스마트 6차산업과 첨단 미래기술 융합산업이 각각 11개 사업,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이 3개 사업, 미래관광 산업이 10개 사업 이 도출되었음
 - 산업구조 및 경쟁우위요소 관점에서 접경 지역 특화 산업을 먼저 도출하고, 도출된 특화 산업 의 구체적인 실행사업으로 세부추진사업 아래 표와 같이 도출하였음
- 도출된 접경 지역 특화 산업의 시·군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별 특화 산업의 명 확한 제시 필요
 - 앞의 제Ⅲ장에서 도출된 접경 지역 특화 산업은 접경 지역 개별 지자체에 특화된 산업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 특화 산업 사 업계획 수립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각 시·군별 특정 특화 산업 제시를 통해서 각 지자체별 신규 예산사업계획수립을 용이 하게 할 목적으로 세부추진사업을 제시하고자 함

〈표 VI-1〉 분야별 특화 산업의 세부추진사업

분야	특화사업		특화사업 추진 지자체	선정근거
스마트 6차산업	첨단 친환경 농산물 물류유통단지		김포	156-209쪽 참조
	첨단농기계(드론) 클러스터		고성, 포천	
	스마트팜 혁신 단지		강화	
	농촌 융복합산업 테마공원		연천	
	라이스밸리 조성		강화	
	곤충산업 테마파크 및 연구단지		인제	
	가족 종자/질병 공동연구소		춘천	
	해조류 사업		웅진	
	꽃게 종자연구 및 생산 시설 조성		웅진	
	강화-개성 고려인삼 남북교류 협력사업		강화	
	반려동물 6차산업 클러스터		파주	
첨단 미래기술 융합 산업	콘텐츠산업	방송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고양	218-336쪽 참조
		만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파주	
	4차 산업 & 미래 산업	상용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김포	
		ICT 융복합 로봇산업 클러스터	김포	
		AI 산업 클러스터	고양	
		드론 클러스터	포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융복합클러스터	춘천	
		남북호시무역산업단지 조성	강화	
	프리미엄 소비재산업	K-뷰티 테크노파크 건립사업	양주	
	가구산업	가구 온라인마케팅센터, 가구 디자인 개발센터	포천	
	군수산업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동두천, 연천, 화천, 철원, 양구	
섬유패션 지식 융합산업	섬유패션 혁신 클러스터		양주, 포천, 동두천	375-402쪽 참조
	스마트팩토리 혁신단지 조성사업(봉제)		양주	
	섬유패션 신소재 연구/개발지원		포천, 동두천	
미래관광 산업	도서 관광 활성화 사업		웅진, 강화	436-496쪽 참조
	도서 관광 생활 SOC 구축 사업		웅진	
	도서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강화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사업		김포, 춘천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지오 투어리즘 육성		연천, 철원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동·식물 생태관광 육성		화천, 양구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산악 휴양생태 레저 관광 육성		인제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해안 휴양생태 레저 관광 육성		고성	
	MICE 인프라 구축 사업 - 산업형 Unique Vanue 개발 사업		고양, 파주	
	MICE 인프라 구축 사업 - 섬유 패션 유니크 베뉴 개발 사업		양주, 동두천	

1.2 접경 지역 특화 산업의 시·군별 세부추진사업

- 스마트 6차산업,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미래관광 산업 등 분야별 특화 산업의 세부추진사업을 각 시·군별로 3개 내외 선정하였음
- 접경 지역 시·군별 세부추진사업 선정기준은 접경 지역 시·군의 산업정책과 산업기반을 우선 고려하였으며, 기타 남북교류 협력, 산업환경변화,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였음
- 시군별 세부추진사업 제안은 접경 지역 산업활성화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이며, 본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실행계획수립 절차가 필요함

〈표 VI-2〉 접경 지역 시·군별 특화 산업

접경 지역 지자체		시·군별 특화 산업
인천	옹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조류 사업 1: Red Gold(우뭇가사리) 연구/양식장 조성사업 ◦ 해조류 사업 2: 다시마 종묘/생산 시설 조성사업 ◦ 꽃게 종자 연구/생산 시설 조성사업 ◦ 도서 관광 생활 SOC 구축 사업 - 접경 지역 도서 뉴딜 사업 ◦ 도서 관광 활성화 사업 - 접경 지역 도서 블루 투어 지원 사업
	강화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개성 인삼 협력사업 ◦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인삼, 토마토, 고추 등) ◦ 라이스밸리(강화쌀) 조성사업 ◦ 남북호시무역산업단지 조성사업 ◦ 도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 해안 누리길 조성 ◦ 도서 관광 활성화 사업 - 국제 슬로시티 육성
경기	김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물류유통단지(쌀, 배, 포도 등) ◦ 상용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 ◦ ICT 융복합 로봇·공장자동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사업
	고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 AI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 MICE 인프라 구축 사업 - 산업형 Unique Vanue 개발 사업
	파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 반려동물 6차산업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 MICE 인프라 구축 사업 - 산업형 Unique Vanue 개발 사업
	양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 섬유패션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양포동 공동사업) ◦ 스마트팩토리 혁신단지 조성사업(봉제) ◦ K-뷰티 테크노파크 건립사업(화장품, 미용기기) ◦ MICE 인프라 구축 사업 - 섬유 패션 유니크 베뉴 개발 사업
	포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패션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양포동 공동사업) ◦ 섬유패션 신소재 연구/개발지원

접경 지역 지자체		시·군별 특화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클러스터 조성사업 ◦ 드론 농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드론 클러스터 연계) ◦ 가구산업 디자인/ 마케팅지원센터 건립사업 ◦ 휴양·생태레저 클러스터 조성- 지오 투어리즘 육성
	동두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패션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양포동 공동사업) ◦ 섬유패션 신소재 연구/개발지원 ◦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류, 신발) ◦ MICE 인프라 구축 사업 - 섬유 패션 유니크 베뉴 개발 사업
	연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융·복합산업 테마파크(농촌체험) ◦ 전력지원체계산업클러스터(식품, 생활용품) ◦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지오 투어리즘 육성
강원	춘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종자/질병 연구소 건립사업 ◦ 수열 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사업
	화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 전력지원체계산업클러스터(식품, 생활용품) ◦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동·식물 생태관광 육성
	철원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스밸리 조성사업 ◦ 전력지원체계산업클러스터(식품, 생활용품) ◦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지오 투어리즘 육성
	인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충산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 농생명소재연구소 건립사업 ◦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산악 휴양생태 레저 관광 육성
	양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 ◦ 전력지원체계산업클러스터(농산물 연계) ◦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동·식물 생태관광 육성
	고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농기계(드론) 클러스터 조성사업 ◦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해안 휴양생태 레저 관광 육성 ◦ 해양바이오 벤처창업보육센터

2 시·군별 특화 산업 역점 추진사업(안)

2.1 용진군

가. 해조류 사업 1: Red Gold(우뭇가사리) 연구/양식장 조성사업

● 선정 근거

● 특화사업 선정 근거

- 남북 해양바이오 협력기술기반의 한반도 해조류 평화 벨트 사업으로 남북 최초 용진-마합도 간 공동해양융합연구센터를 설립하고 AI/IoT 접목한 스마트 친환경 조류육상양식장 구축 및 육상 스마트팜 평화관광 산업 구축
- 해양소재산업 기반으로 다양한 가공산업 연계 확산 가능성
- 남북협력사업(남의 기술 및 인적 자원, 북의 소재 자원)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가능
- 다국적(14개국) 협력체제로 연구개발 준비 진행 중이며 글로벌 관심으로 인적 자원 지원

● 지역 선정 근거

- 용진군이 우뭇가사리 사업에 최적지이며, 북한의 마합도와 유사한 환경 보유
- 용진군, 겐트대학 등 현재 글로벌 차원으로 사업추진 중

● 사업추진 필요성

- 모로코의 자국자원보호 차원으로 우뭇가사리 생산량 감축에 의한 전세계 우뭇가사리 가격급등 현상
- 남한 용진군과 북한 마합도 사이에 해조류 평화 벨트 구축하여 우뭇가사리 공동 양식으로 세계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 14개국 연구진 구성 및 MOU 체결하고 남북공동 학술조사 제안하는 등 민간차원의 남북협력 추진 중
- 접경 지역 취약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육성으로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가능한 사업
- 우뭇가사리, 한천의 중요성으로 건강기능식품, 미생물배양 원료, 치매치료제, 화장품, 숯 활성탄 등 독점적 위치 확보 가능한 영역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5년(2020~2024)
- 사업예산: 400억 원
 - 우뚝가사리 양식장 구축
 - 글로벌 연구개발 및 교류
 - 우뚝가사리 소재 1차 가공공장 단지 조성

● 기대 효과

- 지역 경제 및 산업 활성화
 - 접경 지역 어민들의 신소득사업 개발 및 소득증대
 - 지역적 환경을 활용한 글로벌 비교우위 산업화
 -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 남북교류 협력 촉진
 - 남북 공동 해양자원 활용한 블루이코노미 실현
 - 관련사업 세계 시장 주도를 통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
 - 남북협력의 시너지 효과, 가시적 효과 및 파급효과 기대
 -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남북한 교류 및 평화 분위기 구축
- 타 산업, 타 지역 파급효과
 - 원천소재 확보 및 개발로 건강식품, 화장품 등 연관 산업 파급효과
 - 우뚝가사리 가공부문에서 국내외 타 지역 확산 효과
 - 민산관학연의 혁신역량 결집을 통한 혁신적 개발사업화 가능성 제고

나. 해조류 사업 2: 다시마 종묘/생산 시설 조성사업

● 선정 근거

- 특화사업 선정 근거
 - 남북 해양바이오 협력기술기반의 한반도 해조류 평화 벨트 사업으로 종묘 보급 및 AI/IoT 접목한 스마트 친환경 양식장 구축
 - 웅진군의 특산물로 품질 좋은 다시마는 한반도 유일하게 2년산 다시마가 수확되는 특성이 있음

- 효능이 월등한 슈퍼 다시마의 종묘 연구 및 양식장 조성으로 국제적 경쟁력 강화 가능성
- 북한의 해산물 양식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기반으로 볼 때,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서 북한의 수용성이 높은 분야

● 사업추진 필요성

- 인천 백령도 부근이 냉수대(Cold Pool)로서 냉수성 해조류인 다시마 서식에 적합한 지역
- 국내 유일의 2년산 다시마(슈퍼 다시마) 생산(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및 전국에 다시마 종묘 공급으로 해조류 기술기반 제고 및 어업부문 소득 증가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3년(2020-2022)
- 사업예산: 150억 원
- 주요 사업
 - 다시마 종묘 연구 및 보급
 - 남북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 다시마 스마트 양식장 조성사업

● 기대 효과

- 해양 환경변화에 대비한 해조류 분야의 과학적 체계 구축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가격 안정화에 필요
- 남북교류 협력의 촉매 역할
- 타 산업, 타 지역으로 파급효과
 - 암치료제로서의 효능 검증을 통해 의료산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

다. 꽃게 종자 연구/생산 시설 조성사업

● 사업선정 근거

- 꽃게 주산지인 웅진군에서 꽃게 종자생산 시설 기본조사용역 발주 및 2021년까지 30억 원 규모의 꽃게 종자생산 시설 건립계획
- 꽃게 종자연구 및 양식시설을 조성하고 종자 보급체계 강화를 통한 꽃게 자원 회복 노력이

절실

- 사업추진 필요성
- 최근 불안정적인 어획량으로 어민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어족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주민소득 확보 필요
- 수산업 분야의 종자연구로 남북교류 협력에 일조 가능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3년(2021~2023)
- 사업예산: 150억 원
 - 꽃게연구소 설치 및 연구기능(전문 인력 확보) 확충
 - 꽃게 종자연구, 생산 시설 조성 및 꽃게 양식체계 확산

● 기대 효과

- 서해안 꽃게 자원회복에 따른 접경 지역 어업인 소득증대
- 남북공동 해양자원 활용한 블루이코노미 실현

라. 도서 관광 생활 SOC 구축사업 - 접경 지역 도서 뉴딜 사업

● 사업선정 근거

- 해양·해상 관광 산업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관광 산업 분야임
- 도서(섬) 관광 역시 관광 산업 분야에서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19년 2월에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섬 관광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성화 대책 수립에 나섰으며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지역 관내 대부분이 도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상당수의 무인도까지 포함되어 있어 대규모의 도서 개발 지원사업의 혜택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임
- 풍부한 접경 지역 섬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옹진군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관광 여건을 극대화하여 해양·해상 관광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 사업추진 필요성

- 옹진 지역이 포함된 서해안 지역에는 다량의 도서가 위치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여객선 등 통행 선박들의 접안시설 설치 위주로 대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에서 해양레저를 즐기고자 하는 관련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접안시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음
- 향후 급증하는 해양레포츠 인구들을 유입하고 이들을 체류형 관광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레저선박 접안의 기반시설 마련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 추진내용의 추가 정립이 필요함
- 현재 대표적 레저 선박인 요트 이용객들이 다수 방문하는 경기도 전곡항 등에서 해상 레포츠를 즐기는 인구들이 섬 지역을 방문하여도 수상 레저 선박의 접안시설이 부족해 단순히 거처가는 형태로만 방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방법

- 현재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생활 SOC 구축 지원사업은 특별히 시행되는 것이 없으며 가장 유사한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201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어촌 뉴딜 300’ 사업임
- 해당 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현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지원 대상지 선정과정에 접경 지역 배려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접경 지역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지원사업에 비해 작은 규모의 지원 대상지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어촌 뉴딜 300’ ver.2.0로 ‘접경 지역 도서 뉴딜 사업’ 등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예산

- 현재 ‘어촌 뉴딜 300’ 사업의 경우는 선정 희망 지역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예산이 지원되며 전체 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지원됨
- 충청남도의 경우 1개 선정 지역 평균 8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신청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는 약 105억 원 정도를 신청함
- 소규모 ‘어촌 뉴딜 300’ ver. 2.0의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요트 등 레저 선박의 계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10척을 기준으로 약 15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 기대 효과

- 섬 관광 활성화의 기반 구축
 - 수려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도서 지역의 접근성 향상으로 해상 레저 관광 지역 자원으로서의 가치 증대
 - 체류형 관광 증대로 관광 부가가치 상승효과 기대
-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 소규모 해안 접안 시설 확대로 낙후된 도서 지역 발전 혜택 전파
 - 주거지 인접 시설 현대화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가능

마. 도서 관광 활성화 사업 - 접경 지역 도서 블루 투어 지원 사업

● 사업선정 근거

- 우리나라는 약 3,300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4위의 도서 강국임
- 도서 관광은 향후 해양·해상 관광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분야로 평가되고 있음
- 국내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청정 자원을 활용한 미래 신 성장 동력 확보 정책의 일환으로 관광 분야에서는 블루 투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의 경우 인접한 지역인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과 협력하여 총 29개 시군의 역사, 문화자원까지를 연계하는 해양 관광 산업을 기획하고 있음
- 접경 지역 가운데 도서 지역으로 구성된 옹진군의 경우 인접 시군과의 협력 차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소규모의 도서 블루 투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판단됨

● 사업추진 필요성

- 옹진군의 도서들은 그동안 접경 지역에 위치하여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유하고 있어 단순한 자연경관 관광 이상의 콘텐츠가 구비되어 있음
- 단순한 관광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의 연관 산업은 물론 다양한 여행 상품들의 개발이 뒤따르게 된다면 현재의 섬 관광자원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또한, 기존의 블루 투어 지원사업에서는 섬 지역 내부의 훼손된 숲의 생태적 복원에 필요한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관광자원의 정비를 추진할 수 있음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방법

- 블루 투어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블루 이코노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남해안 신 성장 관광벨트’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되어 해양 관광 산업 개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 사업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 이외에 휴양 마을 조성, 국가 지정문화재 복원 및 개보수 등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벤치마킹 사업들을 바탕으로 웅진군을 포함한 인접 지역 도서들을 연계하는 접경 지역 도서 블루 투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섬 관광 스토리텔링 구성, 섬 관광 해설사 교육 및 양성기관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고려할 수 있음

● 사업예산

- 접역지역 청정도서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의 지원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역시 유사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가고 싶은 섬’ 지원사업의 예산 지원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연간 10억 원씩 총 5년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초에 있던 30인 이하 거주민 섬과 읍면 소재지 섬의 지원 제한도 폐지하여 시행하고 있음
- 주로 관광 사업 전개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도서 지역 내의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기대 효과

● 도서 지역 관광 가치 상승

- 청정관광 자원의 보존과 보수를 통한 도서 지역의 관광 가치 증대
- 스토리텔링 확대로 관광 콘텐츠 및 관광 상품 확장

●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 소규모 도서의 생활 인프라 및 관광 상품 확대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기대
- 인접 지역과의 협력 사업 체계 구축 가능

2.2 강화군

가. 강화-개성 인삼 협력사업

● 사업선정 근거

-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강화-개성 고려인삼이 강화군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음
- 선제적이며 주도적인 남북교류 협력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북교류 협력 창구를 마련하는 등 체계를 갖추
- 강화-개성인삼협력사업은 대내외적 상징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필요함

● 사업추진 필요성

- 국가 차원에서 지자체 주도의 개성-강화 고려인삼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은 남북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고려인삼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마케팅 판로 지원이 필요한 시점
- 개성고려인삼은 타 지자체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화를 중심으로 시도간 협력체계구축 및 공동브랜드화도 바람직함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3년(2020~2022)
- 사업예산: 100억 원
 - 남북 공동 연구 개발
 - 공동브랜드 및 협력사업 지원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구축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기대 효과

- 강화개성고려인삼의 이미지 제고
-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자체 주도의 남북교류 협력 촉진 강화-개성인삼협력사업

나.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 사업선정 근거

- 강화군 GRDP 중 농어업 비중 13.5%(약 1,330억 원)
- 인력 문제로 시설농업 접목 및 확대 필요
- 시설재배에 적합한 다양한 특산물 보유

● 사업추진 필요성

- 강화군의 다양한 농특산물 보유(16종)
- 스마트팜 적합품목
 - 토마토, 고추, 오이, 고구마, 인삼, 백도라지, 순무 등

〈그림 VI-1〉 강화군 지역특산물 16종

	강화장준감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강화섬백도라지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강화새우젓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강화섬포도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강화고추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강화오이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강화속노랑고구마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강화섬배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강화섬수박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강화섬토마토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강화인삼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강화섬쌀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강화갯벌장어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강화섬한우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강화순무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강화사자발약쑥 인천광역시 > 강화군

자료: 농사로 농업기술포털(www.nongsaro.go.kr) 참조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4년(2020~2023)
- 사업예산: 300억 원
 - 스마트팜 단지 기반 조성
 - 보육/교육: 교육형 실습농장, 경영형 실습농장
 - 생산유통: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 APC
 - 기술혁신: 공공실증구역, 자율실증구역, 전시체험센터 등

● 기대 효과

- 사회적 편익 추구
-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인구 유입 효과

다. 라이스밸리 조성사업

● 사업선정 근거

- 강화군은 토지이용현황 중 농경지 비중이 39.2%(접경 지역 중 1위)
- 강화섬쌀의 브랜드 이미지 확보
- 지역내 다양한 농업자원 연계 가능

● 사업추진 필요성

- 쌀식품가공제조업, 쌀가공연구소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쌀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단지 조성으로 부가가치 제고
- 쌀에 대한 수요창출 및 소비 진작으로 초과공급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새로운 수요창출에 집중화할 필요 있음
- 쌀 가공품의 다양화 필요(음료, 과자, 국수, 라면, 전통주, 스낵, 씨리얼, 즉석밥, 쌀 죽, 냉동밥 등)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4년(2020~2023)
- 사업예산: 300억 원
 - 쌀 중심의 융복합산업화
 - 웰빙쌀 가공식품의 명품화(전통식품의 현대화, 쌀 가공식품의 다양화)
 -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강화섬쌀 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기대 효과

- 쌀 수요 창출로 수급 균형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지역 농민 소득증진에 기여

- 첨단기법 도입을 통한 쌀 생산성 향상 및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 향상
-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라. 남북호시무역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선정 근거

- 한반도신경제지도의 3대 경제벨트 중 하나인 ‘환서해권 경제벨트’ 구축의 핵심지역으로 남북 호시무역산업단지 개발 포함 추진

〈그림 VI-2〉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 경제벨트



자료: 통일부

- 서해평화고속도로 건설로 남북호시무역산업단지 구상 실현 가능성 가시화
 - 서해평화고속도로는 영종도에서 신도와 강화를 거쳐 북측 개성과 해주를 잇는 ‘Y’자 형태의 고속도로이며, 1단계 영종도~강화·교동도 18.04km, 2단계 강화~개성공단 45.7km, 3단계 강화~해주 16.7km 등 총 80.44km 길이로, 총사업비는 2조4322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
 - '19년 1월, 서해평화도로 구간 중 영종~신도 3.5km 구간 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음

〈그림 VI-3〉 서해평화고속도로 구상도



자료: 인천광역시

- 인천시와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남북경협 사업 추진 의지
 - 인천시는 교동평화산단을 남북공동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 중
 - 1단계로 산단이 조성되면 남측 기업이 입주하고, 유엔 대북제재가 풀리면 제2 개성공단 같은 남북경협 추진을 목표
 - 인천지역 기업의 40%가 남북경협 사업 참여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출처: VOA 뉴스 2014.3.14. 인천대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조사결과)
- 산단 조성시 업체 입주 수요 충분한 것으로 예상

- '18년7월 준공된 강화일반산업단지(92만㎡) 100% 분양 완료
- 남북경협 추진 전진기지로서의 가치가 큼
 - 북한 해주경제특구와 트윈시티 경제 협력모델 추진을 통한 새로운 남북경협모델 창출 기대
 - 강화교동산업단지는 정부의 환서해경제벨트의 핵심 지역이며, 북한과 가장 인접한 산업단지로 남북이 뜻을 같이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남북 경협의 새로운 촉매 역할을 할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음
 - 교동평화산단은 남북교통물류 거점 기능과 첨단부품제조, 스마트공장 등 첨단 미래기술융합 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산업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음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5년
- 사업 예산: 9,552억 원
 - 산업단지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력 등 기본 인프라시설은 국비와 지방비 지원으로 건설
 - 나머지 산업단지 조성 토목공사 및 분양은 민간투자로 진행(인천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표 VI-3〉 남북호시무역산업단지 사업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국고	지방비	민자	합계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100	100	-	200
산업단지 부지 조성	-	-	9,352	9,352
소 계	100	100	9,352	9,552

주: 정확한 예산추정은 더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경제 협력단지
- 인천·강화·개성·해주·국제산업벨트 연결 물류의 중계지 역할
-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수출제한 해소와 기술집약적 제품 생산 기지
- 북한 해주경제특구와 트윈시티 개념으로 발전 가능

마. 도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 해안 누리길 조성

● 사업선정 근거

- 해양·해상 관광은 최근 관광 산업에서 가장 각광 받고 있는 분야임
- 특히 도서 관광은 휴양, 힐링 등의 관광 트렌드가 반영되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주목 받고 있음
- 관광지 방문 형태의 단순 여행에서 탈피하여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즐기고자 하는 생태 관광이 널리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아름답고 조용한 각종 도보길이 인기 관광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음
-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도보 여행에 적합한 각종 길 조성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해안가에도 도보길 가운데 하나인 해안 누리길 조성이 관광객 유치에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사업추진 필요성

- 대부분이 섬 지역이지만 육지와 인접해 있거나 연결 다리가 조성되어 육지와 다름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강화 지역은 기존 관광 사업이 여러 분야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곳임
- 접경 지역 관광 산업의 비교 우위 요소인 생태 관광 요소와 섬 관광 활성화라는 2가지 요인을 고려하고 최근의 도보 여행길 인기를 반영할 때 해안가를 걷는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인 ‘해안 누리길’ 조성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해안 누리길 조성 사업의 경우 58개 길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제주도와 전라남도 해안지역이며 강화도의 경우 강화읍 갑곶리에서 초지리까지 17km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 호국돈대길이 유일한 상황임
- 따라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해안 길 가운데 추가로 해안누리길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곳을 발굴하여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방법

- 해양수산부에서는 한국해양재단과 함께 매년 신규 해안누리길 지정과 올해의 해안누리길 선정을 진행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간접적으로는 선정에 따른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마케팅 효과는 물론 안내 체계 구축 사업, 현장 체험 학습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선정된 지역에서는 관련 축제 기획, 팸 투어 개최 등으로 선정 이후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적으로는 동해안의 해파랑길, 남해안길, 서해안길 그리고 DMZ 평화누리 길까지 연결하는 코리아 둘레길 조성도 계획되고 있어 해안 누리길 지정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 사업예산

- 해안 누리길 지정 사업의 경우는 지정 이후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해당 길의 보수 관련 예산 확보가 가능하며 이후 해안 누리길 안내 체계 구축 사업이 공모 형태로 뒤따르게 되어 약 5,000만 원 정도의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향후 접경 지역에 조성 예정인 DMZ 생태·도보 여행길 조성 사업과 연계한 중장기 사업으로의 예산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대 효과

- 최신 관광 트렌드 반영 가능
 - 급증하고 있는 도보 여행 관광객들과 해양·해상 관광객들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인프라 보유
 - 생태 관광으로 지역 자원 활용 극대화
- 지역 지원 사업의 효과 극대화
 - 도서 지역 해안지역 정비로 어촌 뉴딜 300 등 지원 사업과의 시너지 기대
 - 문화 관광 중심의 지역 관광 상품의 다양화 가능

바. 도서 관광 활성화 사업 - 국제 슬로시티 육성

- 사업선정 근거

- 생산력 위주의 현대사회에서 그 반대되는 개념인 느림의 기술(Slow-ware)을 조화롭게 추구함으로서 삶의 깊이와 품위를 찾고자 하는 운동으로 슬로시티 운동이 1999년 10월,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됨
- 단순히 '느리게 먹기(Slow food)'와 '느리게 살기(slow movement)'와 관련된 활동 이외에 '농촌과 도시', '글로벌과 글로컬',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로운 삶을 겨냥하는 운동임
- 국제 슬로시티 연맹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 슬로시티' 지정 제도는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며 지역과 최대한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점에서 '섬'이라는 관광 자원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게 해 주는 '섬 관광'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음

- 현재 국내에서는 가장 최근인 2019년 6월에 인증을 받은 전라남도 목포를 비롯하여 총 16개 기초 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에는 다도해의 많은 섬들을 보유한新安郡, 완도군, 목포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사업추진 필요성

- 국제 슬로시티 인증은 생태 환경의 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 역사 문화유산 및 슬로 푸드 보존 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관광 브랜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임
- 또한, 해양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부응하여 섬 관광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아울러 각종 해양 관광 지원제도와의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는 복합적 장점이 있음
- 인천광역시 강화 지역은 인천이라는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도시와 농촌, 섬 지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슬로시티 지정 경향이 마을에서 도시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도 잘 부합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음
- 특정 관광지에 갑자기 관광객들이 밀려들어 해당 지역 원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오버 투어리즘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최근 현상들을 감안할 때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슬로 시티 지정은 섬 관광 자원의 생태 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됨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방법

- 해당 인증은 한국 슬로시티 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 및 현장 실사를 거치게 되면 이후 국제 슬로시티 연맹에서 최종 국제 실사를 거쳐 확정됨
-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7개 대항목에 걸쳐 72개의 소항목별 평가를 거치게 되는데 주요 항목은 ‘에너지 및 환경 정책’, ‘도시 삶의 질 정책’, ‘농업과 관광 및 전통 예술 보호 정책’ 등이 이에 포함됨
- 또한, 일정 지역을 선택하여 선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향후 해당 지자체 전 지역을 추가로 인증 받기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경상남도 하동군과 전라남도 담양군이 지역 전체로 인증이 확장된 사례임
- 현재 강화군에서는 접경 지역의 상징적 지역 가운데 하나인 교동도 지역의 슬로시티 지정을

-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정 이후 지역 전체로의 확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지정 이후에는 실질적인 관광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각종 관광 콘텐츠는 물론 슬로라이프 디자이너나 슬로 투어리즘 전문가 등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등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사업예산

- 현재 슬로 시티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해당 지역의 세계적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간접적 마케팅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있으나 직접적 지원은 뚜렷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이에 국회에서도 지정받는 지자체 단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슬로시티 포럼’을 구성하여 지원에 관한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 슬로시티 인증을 획득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공동체에 게 200만~500만 원 정도의 사업체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직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중임
- 따라서 지자체 추진 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정 이후 관광객 유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구축 관련 예산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슬로시티 지정 이후 방문자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3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음.

- 기대 효과

- 국내 섬 관광의 국제 브랜드 파워 확보
 - 도서 지역이 중심인 지자체 최초의 인증 획득으로 국내 섬 관광의 국제적 마케팅 파워 확보 가능
 - 연관 관광 자원을 활용한 국제적 명성 획득 기대
- 생태 자원의 효율적 보존 방안 마련
 - 강화지역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의 실질적 보존과 전수 가능
 - 접경 지역 생태 자원과의 조화로운 개발 가능

2.3 김포시

가. 농산물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 사업선정 근거

- 김포시 농어업 GRDP는 전체 GRDP의 2.1%에 불과하나, 금액으로는 약 1,650억 원으로 접경지 시군 중 상위권에 속함
- 특히, 농특산물로 쌀, 배, 포도, 인삼 등이 유명함
- 김포는 북한교류 협력 연계에 지리적으로 유리하며, 향후, 한강하구 호시무역단지가 조성될 경우, 물류유통의 경로로 활용될 수 있음
- 이에 착안하여 일반농산물 물류유통단지 조성이 바람직함

● 사업추진 필요성

- 김포지역에 농산물 첨단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농특산물의 물류유통비용절감 및 대단위 저장시설 구축을 통한 수급조절로 시장가격 안정화 필요
- 농산물 유통혁신을 이루는 동시에, 향후, 북한과의 호시무역의 대상지로 전망되어, 남북간 농산물 물류유통의 거점역할을 담당하기에 적합함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4년(2020~2023)
- 사업예산: 300억 원
 - 물류창고 및 연계 시스템 구축(집배송장, 저온저장고, 소분포장, 안전성검사, 전처리실, 공판장 등)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 북한과의 농산물 교류를 대비하는 물류유통 거점화
 - 군대 및 학교 등 대량급식소에 안전하고 규격화된 식자재 공급시스템 구축

● 기대 효과

- 농산물 물류유통 구조개선 및 첨단 인프라 기반 구축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
- 지역 소득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 향후, 농산물 남북교류의 유통거점화 및 물류유통시스템의 북한 전수 기회

나. 상용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

● 사업선정 근거

- 김포시의 5대 대표산업에 전기자동차 포함
 - 전기자동차는 미래신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첨단소재부품/지능형기계/스마트물류/관광 레저 등을 포함하여 4대 대표산업을 선정함(출처: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9)
- 김포시의 상용전기자동차 산업기반 견실
 - 김포시의 제조업체 수는 8,768개로 전체 사업체의 30.5%, 전체 종사자 수의 46.4% 비중을 차지
 - 김포시 전기자동차 관련 업종 사업체 수는 총 1,121개, 종사자는 8,615명
 - 김포시 인근지역인 마곡지구와 연계하여 첨단산업(SW) 집적 및 고급인력 유치 추진
 - 서울, 인천 등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므로 지식기반사업단지 유치, 첨단산업 육성 도모하는 한편, 제조업 지원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 발전 가속화 유도
- 정부의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
 - 정부의 5대 신산업 및 12대 신산업에 전기차 포함(출처: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2017.12), 4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2016))
 - 중견기업 육성 및 혁신성장 추진 주요 산업으로 전기차 포함(출처: 중견기업 비전 2280)

● 사업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은 김포시의 상용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및 상용전기차 생태계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 기존 주력산업인 소재부품, 기계산업을 기반으로 차세대 신성장산업 육성이 시급함
 - 전기자동차는 핵심 미래신성장산업으로 평가됨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대구, 경북, 울산, 영광, 광주, 강원, 군산 등 지자체에서 전기자동차, 초소형전기차, 퍼스널 e-모빌리티, 농업용전기차 등을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김포시는 기존산업 고도화와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신산업으로 전기자동차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급증하여 2040년 신차 판매량의 54%, 전 세계 자동차의 3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전기차시장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 성장추세에 발맞추어 성장할 전망이다

- 김포시의 소재부품, 기계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미래성장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김포시에서 타겟으로 하는 상용전기차는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품목과 차별화되며, 수도권의 시내버스, 청소차, 트럭 등 친환경차 도입정책 수요 시장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시내버스/마을버스는 총 약 19,000대에 이르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친환경정책에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먼저 전기차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서울시는 전기버스 보급률을 2030년까지 45.4%, 2036년까지 98.4% 달성을 목표로 수립하고 있음(출처: 서울연구원, 2017)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5년
- 사업 예산: 800억 원

〈표 VI-4〉 김포시 상용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국고	지방비	민자	합계
상용전기차 R&D 센터 구축	350	150	-	500
상용전기차 핵심부품기술개발	105	-	45	150
상용전기차 R&D 기업지원사업	105	-	45	150
소 계	560	150	90	800

주: 정확한 예산추정은 더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 김포시 상용전기차 클러스터 및 기술개발 핵심 플랫폼이 될 상용전기차 R&D 센터 건립으로 관련 기업 연구소의 입주 및 장비 공동이용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상용전기차 파워트레인, 제동/조향/현가/차체, 친환경부품, 자율주행, 안전 등 핵심기술개발 필요
- 현재 소재부품, 기계 등 상용전기차 연관기업의 신제품개발 지원사업 필요
 - 상용전기차 산업단지 조성은 김포시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함

● 기대 효과

- 김포시 제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 김포시의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나, 대부분 중소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 기업 자력으로 미래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 상용전기차 R&D 센터 건립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김포시의 전기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19년 국내 전기차 판매가 10만대를 돌파하였으며, 향후 본격적인 판매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포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후발 주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절실함
- 접경 지역 미래신산업을 견인하는 효과 기대
 - 김포시는 경기남부 산업지대와 접경 지역 산업지대를 잇는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용전기차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은 경기 북부 접경 지역 제조업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됨
- 미래성장산업의 남북교류 협력 기반 구축
 - 향후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시 김포시 상용전기차 클러스터는 미래첨단성장산업 남북교류 협력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용전기차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인하여 승용전기차에 비해 노동력 투입이 더 많이 소요되므로 남북교류 협력에 적합한 품목임

다.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사업

- 사업선정 근거
 - 해양·해상을 활용한 관광 산업은 최근 가장 주목 받는 관광 산업 분야임
 - 국민 경제 수준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인하여 요트, 모터보트, 윈드서핑 등 다양한 레포츠가 폭넓게 보급되고 그 이용객들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이러한 산업 확장과 함께 수상 레저 선박의 생산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크루즈 등 해외 관광객 수요 역시 증가 추세에 있음
 - 일반 마리나는 레저용 선박의 계류를 위한 시설로, 넓은 의미에서는 주차장, 호텔, 놀이시설 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관련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1.5배 고용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新 용·복합 개념의 산업임
 - 그러나 일반 마리나는 외곽 방파제 구축 등에 건설비가 많이 들고 공사 기간도 길기 때문에 내륙의 강이나 호수를 기반으로 하는 내수면 마리나 육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2018년부터 선정된 12곳의 내수면 마리나는 기존에 2곳(서울, 김포)밖에 없었던 내수면 마리나 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음
 - 김포 지역의 기존의 내수면 마리나 이외에도 추가 조성을 통하여 전체 수상 레저 선박 가운데

1/3이 분포하고 있는 수도권 내수면 지역의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직접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 필요성

- 기존 마리나 육성 사업은 마리나의 대중화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크루즈산업 도약,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일반 마리나의 경우 조성하는 데에만 1곳 당 적게는 300억 원에서 많게는 5,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
- 내수면 마리나는 해수면에 비해 수면이 잔잔하여 수상레저 초보자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외곽 방파제를 갖출 필요가 없으며, 공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경제적 면에도 이점이 있음
- 특히 한강 하구 지역인 김포 지역은 소규모 레저 선박 접안 시설이 부족함은 물론 이 때문에 초보자들이 즐기는 데에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방법

- ‘제2차(2020~2029년)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 내수면 마리나 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 예정
- 2019년,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등 12개 지역을 내수면 마리나 조성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향후 확대 예정이므로 선정 과정에 접경 지역 배려 필요
- 내수면 마리나 조성 대상지는 필요 수심이 확보되어야 하며 도서 지역은 잔교, 부잔교가 있어도 어선 접안이 많아 해당 어촌계와 협력해 관련 시설을 활용한 레저사업 진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
- 현재 기존에 선정된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들이 대부분의 비용을 민자 100%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적 개선 역시 요구되고 있으며 인근 관광자원과의 종합적 고려를 통한 사업 추진 역시 필요한 상황임

● 사업예산

- 현재 선정된 내수면 마리나 대상 지역 중 전원 휴양형인 경우 조성비용으로 마리나에 300억 원, 리조트에 1,500억 원 등 총 1,800억 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인접 시설 등에는 100% 민간 투자 사업 형태로 진행 예정인 경우가 다수임
- 최근 선정된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의 경우 내륙 지역의 호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탐승장

(2,000m²), 계류장(2,000m²), 클럽하우스, 요트 30척 규모의 기반 시설 등을 기준으로 총 400억 원(국비 200억 원, 도비 2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 따라서 최소한의 기반 시설 조성에는 총 사업비 300억~400억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시설 조성에는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하여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판단됨

● 기대 효과

- 내수면 관광 가치 상승
 - 도심지에서 가까이 위치한 하천 및 호수 등을 기반으로 레저 스포츠 기반이 마련되어 관광객 접근성 향상 가능
 - 체류형 관광 증대로 관광 부가가치 상승효과 기대
- 소규모 선박 산업 발전 및 해양 레저 스포츠 보급 확대
 - 조선업 위기의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소규모 선박 제조 여건 조성
 - 주거 인접 지역에서의 레포츠 시설 확충으로 관광 산업 저변 확대 가능

라. ICT 융복합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 사업선정 근거

- 김포시 지역은 미래성장산업인 로봇, 자동화기기 관련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 동 사업과 관련된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기계장비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가 각각 김포시 제조업 전체의 46.1%(4,040개 업체), 45.0%(31,948명)을 차지하고 있음(출처: 통계청)
 - 김포시 인근 지역인 인천/부천 등이 개발되면서 김포로 이전하는 공장자동화 관련 기업이 증가
 - 로봇, 스마트공장 관련 산업은 정부의 미래신성장전략산업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음
 - 김포지역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수요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관련 전문 인력 수급에도 유리함
 - 김포시 제조업 분포를 보면, ‘금속 열처리, 도금/기타 금속가공’, ‘구조용 금속’, ‘플라스틱’ 제품 등 전통적인 뿌리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김포시 제조업의 첨단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지원이 필요함

〈표 VI-5〉 김포시 제조업 상위 10개 주력업종

KSIC	산업분류 명칭	집적도		특화도
		사업체수	도내 종사자	LQ
C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697	6.6%	2.1
C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606	13.8%	4.5
C3202	목재가구 제조업	443	13.6%	4.4
C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59	5.0%	1.6
C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256	9.8%	3.2
C22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9	8.3%	2.7
C22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6	7.9%	2.6
C259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26	12.1%	3.9
C2591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196	8.6%	2.8
C2913	펌프 및 압축기(펌프, 밸브 및 유사장치 포함)	189	14.3%	4.6

자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포시 대표사업 발굴을 위한 산업 현황 조사분석·연구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5년
- 사업 예산: 500억 원
 - 김포시 ICT 융복합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로봇 테크노파크(기업입주시설, R&D 지원센터 등)를 건립하고,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의 R&D 지원사업을 추진

〈표 VI-6〉 김포시 ICT 융복합 로봇·공장자동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국고	지방비	민자	합계
로봇 테크노파크 건립	280	120	-	400
로봇, 공장자동화 핵심부품기술개발	70	-	30	100
소 계	350	120	30	500

주: 정확한 예산추정은 더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2.4 고양시

가. 방송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 사업선정 근거

- 고양시의 영상문화단지 조성 추진 등 방송영상산업을 고양시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 (1단계) 고양 아쿠아스튜디오는 '19년 말 완공
 - (2단계) 영상문화단지 건립 계획 수립(현재 기본계획 수립 진행 중이며, '23년 완공 목표)
- 고양시 방송영상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되어 있음
 - 방송사가 밀집해 있는 고양시는 2017년 기준으로 영상/방송/광고 사업체 수 285개, 매출액 5,108억 원, 종사자 수 2,417명(출처: 2018 경기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 고양시에는 고양영상문화단지 외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방송영상밸리, 고양영상 미디어센터, K-컬처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연계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음
 -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고양시 장항동과 대화동 일원에 방송제작센터(약 17만㎡)를 포함하여 총 70만2030㎡(약 21만 평) 부지를 개발해 조성되는 방송·영상·문화시설 특화단지이며, 경기도시공사가 100% 지분을 투자하여 개발하고 추정사업비는 총 6738억 원임으로 2022년까지 부지 조성 완료 목표
 -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예 축구장 46개(30만2,153㎡) 규모로 테마파크(23만 7,401㎡)를 비롯해 상업시설(4만 1,724㎡), 공연장·호텔(2만 3,028㎡) 등을 조성하는 사업
- K-컬처 확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진출 등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 가능성 큼
- 방송영상 콘텐츠 수출 지역이 중국 중심에서 스페인, 북미, 프랑스, 벨기에, 남미 등으로 확장
 -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영상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업에도 뛰어 들고 있어 향후 방송영상산업 성장전망이 밝음
- 방송/영상 콘텐츠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며, K-Pop 한류문화 확산에 힘입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 동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벤처창업이 활발한 분야이며,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지식산업 분야
-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시 만화/애니메이션의 남북교류 협력 추진 가능

● 사업추진 목적 및 필요성

- 본 사업은 방송영상 콘텐츠 중소기업 지원 및 벤처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입주 공간 및 공동 활용 장비 제공을 통한 관련 기업 유치 및 벤처창업 활성화 촉진

-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규제로 인하여 제조업 확장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방송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방송영상산업단지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3년
- 사업예산: 1,600억 원
 - 종합 스튜디오, 의상 및 소품보관 전시실, 세트 제작실 및 보관실, 영상·영화 촬영거리, 영상 테마 공원 및 전시관, 수련관, 위락·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종합촬영단지 조성

〈표 VI-7〉 방송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국고	지방비	민자	합계
영상 촬영 스튜디오	210	90	-	300
방송영상 콘텐츠기업 입주센터	210	90	-	300
방송영상 테마파크 조성	250	250	500	1,000
소 계	670	430	500	1,600

주: 정확한 예산추정은 더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영상제작기반 구축으로 관련 기업 유치 및 벤처창업 활성화
 - 입주센터, 스튜디오, 특수촬영장비 등 구축으로 방송영상 생태계 구축 및 기업 유치 촉진
 - 체험형 방송영상 테마파크는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 방문객 유치 가능
- 남북 콘텐츠 교류 협력 기반 구축으로 남북 영상 콘텐츠 공동제작센터 건립, 남북 영상전문 인력 교육 및 교류 활성화 등 기대

나. AI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 사업선정 근거

-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범용 핵심기술(Cross-cutting Technology) A·B·C·D 중에서도, AI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임

〈4차 산업혁명의 A·B·C·D 기술〉

A : AI (인공지능)	B : Block chain (블록체인)
C : Cloud (클라우드 컴퓨팅)	D : Data (데이터)

- AI는 국내외 제약, 미디어,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내 공정, 개발, 운송 등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AI를 이미 상품개발(53%)이나 고객센터(51%), 사내업무개선(40%) 등에 적용 중이며 절반 정도는 AI 관련 조직 및 추진체를 보유하고 있음
 - 신약, 소재 배합 등에서의 최적 조합 알고리즘, 공정 내 불량 및 오동작 탐지를 위한 머신비전 등에서 딥러닝이 활용되며 운송, 에너지 등으로 도입 확대
- 향후 AI는 범용화 수준까지 진전되며 S/W, H/W 등의 영역에서 시장 규모를 키울 전망
 - AI 기술은 인지-학습-추론(예측)-자율(능동)행동의 발전단계를 거치는데 아직까지는 학습-추론 단계 수준이나 범용적 수준까지 발전할 것으로 예상
 - 가트너는 2020년 AI 어널리틱스를 주요 트렌드로 보고 있으며 자율주행, IoT와 연계된 가상 비서, 컴퓨터 비전 등이 조만간 확산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
- 디지털화의 핵심 분야인 AI를 신성장 분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전략적 투자와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AI 헤게모니 경쟁 심화
 - AI 선도국 이외에 싱가포르, 스위스, 인도 등도 AI를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 및 인재 확충, 연구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차별화된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최근 2년간 다수의 정책을 발표하며 AI 산업을 핵심 성장 분야로 천명했으며 인력 양성과 함께 관련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
- 서울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AI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경기도도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AI산업 투자 확대 계획
 - 정부는 AI산업 육성을 위하여 '20년도 데이터·AI 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50% 늘어난 1조 7천억 원 배정
 -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 회장은 대통령 면담에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대통령은 “AI 정부 되겠다”는 국가 전략산업 육성 선언
 - 경기도는 AI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34억 원을 투입해 ‘AI 기반 지역 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

- 서울시는 AI산업 육성을 위하여 280억 원을 투입하여 서울 양재 R&D 혁신지구에 연면적 1만 220㎡(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AI 앵커시설 건립 예정
- 고양시는 서울과 인접하기 때문에 AI 관련 기업과 전문 인력 유치에 최적지
 - 고양시가 추진중인 고양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AI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필요
 - 첨단지식산업인 AI산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서도 자유로운 업종이며,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고양시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적합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3년
- 사업예산: 400억 원
 - AI 관련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 입주 및 R&D 지원 앵커시설인 ‘경기 북부 AI 테크노파크’ 건립
 - AI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및 경기 북부 접경 지역 소재 AI 관련 기업의 R&D 지원사업 추진

〈표 VI-8〉 AI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국고	지방비	민자	합계
AI 테크노파크 건립	210	90	-	300
AI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70	-	30	100
소 계	280	90	30	400

주: 정확한 예산추정은 더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다. MICE 인프라 구축 사업 - 산업형 Unique Vanue 개발 사업

● 사업선정 근거

- MICE 산업은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4가지 분야를 통칭하는 관광 서비스 산업 개념으로 일반 관광 산업에 비해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관련 참석자들의 대규모성, 높은 소비 금액은 물론 Opinion Leader 그룹들이라는 점에서 마케팅 효과 또한, 높게 인식되고 있음
- 경기 북부지역 가운데 산업시설 발전 정도가 높고 지역 문화재까지 다양한 성격의 장소를 갖춘 지역들은 MICE 산업의 새로운 추세인 Unique Vanue를 기반으로 한 사업 전개에 효

과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이러한 추세로 인해 기존의 대형 전시장 위주로 진행되던 MICE 산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Unique Vanue MICE로 확장 추세에 있음
- 고양시는 이미 KITEEX라는 MICE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들까지 Unique Vanue spot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관광 시너지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 필요성

- 지금까지 MICE 산업은 대규모 컨벤션 위주로 이루어지며 해당 인근 지역 정도로 소비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로 인해 MICE 산업으로 인한 산업 파생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아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짐
- 최근 KINTEX에서 개최된 World Summit에 참석했던 필리핀 부통령이 평소 관심이 많았던 K-뷰티 산업의 현장을 관람하고 싶다는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뷰티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뷰티·헬스 케어 전문회사를 방문하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경우가 있음
-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품 쇼룸과 생산 공정은 Opinion Leader 방문객들에게 좋은 홍보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관광 MICE Unique Vanue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 일산 신도시 등 현대적 산업 및 문화 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고양시의 경우 이와 같은 최신 트렌드의 MICE 산업 활성화가 접경 지역 특화 산업으로 충분한 실현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방법

- 현재 Unique Vanue 관련 지원 사업으로는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주로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선정 및 지정과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선정하는 Korea Unique Vanue 지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해당 지정 사업에 선정된 곳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의 및 행사 장소로 세계 각국에 소개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 행사를 통한 파생 관광 산업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음
- 향후 'Korea Unique Vanue' 지정 사업에 접경 지역들의 적극적 참여와 선정 과정에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사업예산

- 현재 Unique Vanue 선정에 따른 지원은 직접적 예산 지원보다는 해당 지점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이 Unique Vanue를 이용하는 행사 참여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인센티브 지원은 국제기구 행사의 경우 3개국 외국인 100명 포함 250명 이상의 인력이 2일 이상 참여해야 하며 내국인들의 행사인 경우 100명 이상 참석자가 2일 이상 진행되는 행사이면 2,000만 원 한도의 인센티브가 해당 주최 기관에 제공되고 있음
- 광역 자치단체들을 통하여 지원되는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는 점차 그 한도가 상향되는 추세로 향후 지자체들이 제공할 수 있는 예산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향후 접경 지역에서 선정되는 Unique Vanue 행사장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이 인센티브의 상한선을 적용하는 방법이나 해당 상한선을 높게 책정하는 방안, Unique Vanue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반 시설 등의 보완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MICE 행사 유치를 통한 외부고객 유입 확대
 - 기존의 대형 시설 위주의 MICE 관광객을 지역 단위로 흡수 가능 환경 마련
 - 행사 참여자로 인해 발생하는 파생 관광 수요 확보 가능
-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의 숨어 있는 장소들을 널리 알리고 지역 내 각종 업체 이용 확대
 - Opinion Leader 그룹을 통한 지역 정보 확산

2.5 파주시

가. 반려동물 6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 사업선정 근거

- 미래유망산업으로 발전 지속하는 반려동물산업
 - '18년 농림축산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7%이며, 월평균 양육비는 8만 6천 원으로 조사됨

-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12년 9천억 원에서 '15년 1조 9천억 원 규모로 2배 성장했고, '20년에는 5조 8천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출처: KIET 산업경제 2017년 7월호)
- 반려동물 용품·서비스 개발 및 인력양성, ICT 융복합 스마트 기기 및 콘텐츠 개발, 반려동물 장례업, 반려동물 질병·의약품 연구기반 구축, 프리미엄 사료 수요 증가, 반려동물 박람회 등 반려동물산업의 미래성장잠재력이 매우 큼
- 지자체의 반려동물산업 투자 확대
 - 전국 최초의 본격적인 반려동물 관련 산업 투자는 강원도 영월 펫힐링 달빛동물원으로 '19년 개장하였음
 - ▶ 5만 1,984㎡ 부지에 총사업비 약 68억 원 투자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다양한 애완동물과 염소, 당나귀 등 가축이 있으며,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음
 - 여주시는 총사업비 558억 원을 투자하여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 중이며, '22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 VI-4〉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감도



자료: 중부일보, 2019.1.13.

- 경기도는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 미용·패션, 가구, IT 등 ‘반려동물산업 창업 지원사업’과 ‘반려동물용품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3년

- 사업예산: 500억 원

- 반려동물 테크노파크는 반려동물 체험 관람 자원, 동물치유센터, 동물병원, 도그런/도그쇼/도그박람회, 장례식장/묘지 등을 건설하여 반려동물 애호인의 수요를 충족
 - ▶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재단 설립 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민간위탁 운영하고, 기업지원센터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안 가능함
 - ▶ 애견산업 육성 및 연관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견종별 우수혈통을 선발하는 도그쇼가 활성화되어야 함. 미국의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도그쇼, 영국의 크러프츠(Crufts) 도그쇼 등 세계적 권위의 도그쇼는 각국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고 있음. 미국 컨넬클럽이 주최하는 도그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15억 7,5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 반려동물 기업지원센터는 반려동물 관련 기업 및 창업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여 반려동물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반려동물 관련 제품 및 콘텐츠 R&D 지원사업은 반려동물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반려동물 제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 지원을 통한 국내외 시장 개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표 VI-9〉 반려동물 6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국고	지방비	민자	합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	100	100	-	200
반려동물 기업지원센터 건립	140	60	-	200
반려동물 관련 제품 및 콘텐츠 R&D 지원사업	70	-	30	100
소 계	310	160	30	500

주: 정확한 예산추정은 더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나. 만화/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 사업선정 근거

- 높은 성장률 기대되는 만화/애니메이션 산업
 - 전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은 2016년 8억 1,200만 달러에서 2021년에는 13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2021년까지 연평균 9.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출처: 2018 만화산업백서)
 - '17~'22년 기간 중 글로벌 애니메이션 산업은 연평균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국내 만화/애니메이션산업 역량 및 성장잠재력 충분
 - 2017년 만화산업의 사업체 수는 7,172개이며, 종사자 수는 1만 397명임. 매출액은 1조 822억 원이며, 부가가치액은 4,327억 원, 부가가치율은 40.0%임. 수출액은 3,526만 달러, 수입액은 657만 달러임

- 2017년 애니메이션산업의 사업체 수는 492개, 종사자 수는 5,161명이며, 매출액은 6,655억 원, 부가가치액은 2,231억 원, 부가가치율은 33.5%. 수출액은 1억 4,487만 달러, 수입액은 760만 달러
- 파주시의 견실한 만화산업기반
 - 파주시에는 국내 유일의 국가출판문화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사업체 수는 107개, 매출액은 8,496억 원, 종사자 수는 1,808명에 이르고 있음
 - 2017년 만화산업의 지역별 사업체 현황을 보면, 서울의 사업체 수가 1,805개로 전체의 25.2%를 차지했고, 경기도의 사업체 수가 1,450개로 전체의 20.2%를 차지해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애니메이션산업의 지역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 서울이 3,865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74.9%를 차지하며, 경기도가 전체의 12.1%인 622명, 광주광역시 233명, 부산광역시 183명
 - 파주시의 출판인쇄업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통신업 종사자 수는 총 4,139명으로 접경 지역 전체의 34.6% 차지(경기도 전체 정보통신업 종사자 수의 3.8% 비중 점유)
-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은 4차산업 융합기술 개발로 미래 유망성장산업
 - 애니메이션 산업은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기술, 혼합현실(XR)과 홀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실감형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와 인공지능기술 간 융합을 핵심으로 하는 ‘지능형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
 - ‘AI 기반 3D 캐릭터 생성기술’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동작표정 등을 딥러닝으로 학습해 스스로 캐릭터를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의 카메라 워크를 자동으로 구현하는 ‘애니메이션 카메라 워크 추적 기술’ 등이 AI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것으로 예상
- 사업추진 목적 및 필요성
 - 본 사업은 만화/애니메이션 콘텐츠 중소기업의 R&D 지원 및 벤처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입주공간 및 공동활용장비 제공을 통한 관련 기업 유치 및 벤처창업 활성화 촉진
 - 파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규제에 인하여 제조업 확장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위해서 만화/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3년
- 사업예산: 500억 원
 - 만화/애니메이션 창작센터는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AR/VR, 3D/4D 애니메이션 등 첨단 장비를 구축하여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함
 - ▶ 만화/애니메이션 창작센터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분원 형태로 운영은 통해서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만화/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 발전 전략 추진 검토
 -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사업은 고양, 파주 지역의 만화/애니메이션 중소·벤처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 남북교류지원사업은 북한과 만화/애니메이션 사업 교류 협력에 필요한 신기술 교육, 콘텐츠 창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

〈표 VI-10〉 만화/애니메이션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단위: 억 원)

구분	국고	지방비	민자	합계
만화/애니메이션 창작 센터	200	100	-	300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사업	70	-	30	100
남북교류지원사업	70	-	30	100
소 계	340	100	60	500

주: 정확한 예산추정은 더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만화/애니메이션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으로 관련 기업 유치 및 벤처창업 활성화
 - 만화/애니메이션 창작센터, 중소벤처기업 입주공간, 첨단 창작 도구 및 장비 구축 등으로 만화/애니메이션 생태계 구축 및 기업 유치 촉진
 - 만화/애니메이션 남북교류지원사업을 통해 남북교류 활성화 기대
 - ▶ 현재 북한의 만화/애니메이션 기술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어 만화/애니메이션 산업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가장 적합한 아이템으로 예상됨

다. MICE 인프라 구축 사업 - 산업형 Unique Vanue 개발 사업

● 사업선정 근거

- MICE 산업은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4가지 분야를 통칭하는 관광

- 서비스 산업 개념으로 일반 관광 산업에 비해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관련 참석자들의 대규모성, 높은 소비 금액은 물론 Opinion Leader 그룹들이라는 점에서 마케팅 효과 또한, 높게 인식되고 있음
- 경기 북부지역 가운데 산업시설 발전 정도가 높고 지역 문화재까지 다양한 성격의 장소를 갖춘 지역들은 MICE 산업의 새로운 추세인 Unique Vanue를 기반으로 한 사업 전개에 효과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이러한 추세로 인해 기존의 대형 전시장 위주로 진행되던 MICE 산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Unique Vanue MICE로 확장 추세에 있음
- 파주시는 이미 대기업 생산 시설과 운정 신도시 등 다양한 시설들까지 Unique Vanue spot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관광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 필요성

- 지금까지 MICE 산업은 대규모 컨벤션 위주로 이루어지며 해당 인근 지역 정도로 소비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로 인해 MICE 산업으로 인한 산업 파생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아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짐
- 최근 KINTEX에서 개최된 World Summit에 참석했던 필리핀 부통령이 평소 관심이 많았던 K-뷰티 산업의 현장을 관람하고 싶다는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뷰티 디바이스를 생산 뷰티·헬스 케어 전문회사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한 경우가 있음
-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품 쇼룸과 생산 공정은 Opinion Leader 방문객들에게 좋은 홍보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관광 MICE Unique Vanue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 운정 신도시 등 현대적 산업 및 문화 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파주시의 경우 이와 같은 최신 트렌드의 MICE 산업 활성화가 접경 지역 특화 산업으로 충분한 실현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방법

- 현재 Unique Vanue 관련 사업은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주로 광역 자치단체 중심의 선정 및 지정과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선정하는 Korea Unique Vanue 지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해당 지정 사업에 선정된 곳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의 및 행사 장소로 세계 각국에 소개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 행사를 통한 파생 관광 산업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음

- 향후 'Korea Unique Vanue' 지정 사업에 접경 지역들의 적극적 참여와 선정 과정에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사업예산

- 현재 Unique Vanue 선정에 따른 지원은 직접적 예산 지원보다는 해당 지점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이 Unique Vanue를 이용하는 행사 참여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인센티브 지원은 국제기구 행사의 경우 3개국 외국인 100명 포함 250명 이상의 인력이 2일 이상 참여해야 하며 내국인들의 행사인 경우 100명 이상 참석자가 2일 이상 진행되는 행사이면 2,000만 원 한도의 인센티브가 해당 주최 기관에 제공되고 있음
- 향후 접경 지역에서 선정되는 Unique Vanue 행사장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이 인센티브의 상한선을 적용하는 방법이나 해당 상한선을 높게 책정하는 방안, Unique Vanue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반 시설 등의 보완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MICE 행사 유치로 통한 외부고객 유치 확대
 - 기존의 대형 시설 위주의 MICE 관광객을 지역 단위로 흡수 가능 환경 마련
 - 행사 참여자로 인해 발생하는 파생 관광 수요 확보 가능
-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2.6 양주시

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 사업선정 근거

- 전통적인 농업에 ICT, BT, CT, GT 등과 과학기술 융합한 스마트화를 통해 생산, 유통, 소비 등 농업범위 확장과 부가가치를 제고함
- 양주는 농어업 GRDP가 전체 GRDP의 5.3%를 차지하며, 2,576억 원에 이룸

- 특히 44종의 다양한 농특산물이 특화작물로 그중 시설농작물에 적합한 토마토, 딸기, 인삼, 방울토마토, 시설채소 등이 있음

● 사업추진 필요성

- 농업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 보급이 시급한 바, 경기도 접경지의 역점사업으로 양주시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이 필요함
-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며, 양주시에는 다양한 특화작물이 재배되고 있어 시설재배 연계 및 스마트팜 조성에 대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그림 VI-5〉 양주시의 농특산물 44종

	참새벽딸기 경기도 > 양주시		유가공제품 경기도 > 양주시		인삼 경기도 > 양주시		여주 경기도 > 양주시
	배즙 경기도 > 양주시		배 경기도 > 양주시		꿀 경기도 > 양주시		블루베리 경기도 > 양주시
	쌀 경기도 > 양주시		천년초 경기도 > 양주시		애호박 경기도 > 양주시		오이 경기도 > 양주시
	아름담 경기도 > 양주시		아로니아 경기도 > 양주시		방울토마토 경기도 > 양주시		토마토 경기도 > 양주시
	전통장 경기도 > 양주시		떡 경기도 > 양주시		양주 콩 경기도 > 양주시		양주골 배 경기도 > 양주시
	헬빙 양주 전통장 경기도 > 양주시		허브차 경기도 > 양주시		양주골딸기 경기도 > 양주시		양주벌꿀 경기도 > 양주시
	계란 경기도 > 양주시		양주골 한우 경기도 > 양주시		화훼 경기도 > 양주시		버섯 경기도 > 양주시
	마늘 경기도 > 양주시		양주골 찰 토마토 경기도 > 양주시		양주인삼 경기도 > 양주시		시설채소 경기도 > 양주시
	재래부추 경기도 > 양주시		영양부추 경기도 > 양주시		유기농 행복배즙 경기도 > 양주시		손바닥선인장 경기도 > 양주시
	양주골눈부신했쌀 경기도 > 양주시		양주골쌀 경기도 > 양주시		양주골약도라지진액 경기도 > 양주시		썬앤코골마늘잼 경기도 > 양주시
	양주 영양부추 경기도 > 양주시		양주골참새벽딸기 경기도 > 양주시				
	한우풍경 경기도 > 양주시		청산버섯 경기도 > 양주시				

자료: 농사로 농업기술포털(www.nongsaro.go.kr) 참조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4년(2020~2023)
- 사업예산: 300억 원
 - 기반 조성(용수 전기 공급시설 등), 청년보육, 생산유통, 기술혁신, 관광기능 확충
 - 국책지원사업 활용
 - 스마트팜 혁신단지 운영 조직 및 인력 확보
 - 연구소 설립 및 연계 기술혁신, 재배, 온·오프라인 판로 기반 조성

● 기대 효과

- 시설농업 첨단 인프라 기반 구축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
- 주변지역 확산 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북한 농업과의 연계사업 추진 준비

나.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 이 사업은 양주, 동두천 지역 공동 사업임

● 사업선정근거

- (산업역량) 양포동은 한국섬유 패션 산업 중 니트, 염색가공 산업의 대표산업집적지역이고, 가죽산업은 안산, 대구 지역과 함께 대표적 생산집적지역(국내 한우피80%취급, 세계5위)으로 이미 국내외적 경쟁력 및 시장을 既확보하고 있고 향후 니트 및 가죽, 염색 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산업임
- (정책역량)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은 경기 북부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특히 양포동은,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및 사업 추진 중이나 비예산사업의 한계로 추진동력 약화됨
- (지역역량) 패션소비시장 및 패션산업중심지인 서울과 인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시 대도시 서울-평양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임

● 사업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양포동의 섬유산업은 접경 지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양포동)의 주요산업이자 니트 원단의 국내 최대 생산지로 세계적인 니트 패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력 보유

- 또한, 양포동지역의 섬유산업은 최적의 남북경협 대안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를 조기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동력으로 기대되며, 경기 남부의 섬유 중심의 융·복합 역량과의 결합 시에는 세계 최대의 첨단 섬유·패션 거점으로 성장이 가능
- 이의 실현을 위해 기 형성된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기업 간의 동업종·이업종 간의 협업을 활성화 시키고 혁신성장 역량(친환경, 디지털, R&D) 강화 추진 필요

● 사업 내용

-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혁신 클러스터 기반 조성
-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혁신 클러스터 역량강화(산업별 미니클러스터)
- 미니혁신클러스터 지정 후 섬유패션기업의 집중적 지원*을 통해 집적화·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지자체 추진 단위사업

- (양주시) 챌린지센터 구축
 - 사업기간: 2021~2024
 - 사업비: 450억 원(국 150, 도 150, 시 150) 산업부 산업융합 실증지원사업 연계 계획
 - 제품 개발 및 판매 활성화에 초점을 둔 구성으로 재구성 필요
 - 원단벤더/컨버터/프로모션 업체유치 ⇒ 기획/판매/마케팅 강화
 - 청년창업/스타트업기업 지원 사업

다. 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조성사업(봉제)

● 사업선정 근거

- (Speed/QRS) 섬유 패션 산업의 생명인 ‘짧은 리드타임’과 ‘생산비용 제고’와 수요자 맞춤형제품생산(다품종소량생산) 시스템 구축 실현
- (노동집약산업한계) 자동화(반자동화) 생산시스템을 통해 노동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 해결
- (On-shoring) 긴 운송기간 및 비용, 환율변동심화, 무역협정 영향력 축소 등의 이유로 해외투자기업의 U턴화 ⇒ 스마트공장 추진 시·도
- (지역량) 섬유 패션 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혁신성장을 추진 중인 양주, 포천, 동두천(이하 양포동) 지역 중 양주시는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가 많고, 지역인프라 구축이 되어있음
- (근접성) 다운스트림 영역인 봉제분야는 패션 브랜드 및 업체와 소비시장과의 근접성이 중요

함. 따라서 양주시의 경우,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지역임

- (시정책연계) 양주시가 추진 중인 ‘양주테크노밸리’ 사업 혹은 챌린지센터 사업 연계 시 실현 가능성 높음

● 사업추진 목적 및 필요성

- 다운스트림 산업(봉제) 유치/강화를 통해 미들스트림(니트/피혁/염색/신소재) 산업에 편중/정체된 양포동 지역특화 산업 역량강화
-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지식(기술)집약 산업’으로 전환이 절실함
 -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봉제부분에서의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재(니트/가죽)와 염색부분에서의 적용 견인
 - 서울시 스마트 앵커 프로젝트와의 협업모델 개발 가능 ⇒ 시장확보/효율성 ↑
- 북측의 섬유패션 산업과의 연계 및 공동사업 전개 역시 지식(기술)집약 산업으로의 접근이 필수적임.
 - 북측의 자원(노동, 투자, 기술 등) 활용 시 효과 극대화
 - 서울-평양의 중간에 위치한 양포동은 대도시의 시장확보에 경쟁력우위 가짐

● 사업 내용

- (1단계) 양주시 內 스마트팩토리 사업선정 및 부지(공간)마련
 - 양주시 추진사업(테크노밸리/챌린지센터) 연계 가능
 - 지역법률현안 검토/제안
 - 수도권정비법(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 점경 지역/특수상황지역 적용 추진/제안
 - 정부기관의 지원 정책 및 사업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ICT융합스마트팩토리보급·확산지원사업/클라우드형스마트팩토리보급사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 산업통상자원부(산업혁신운동)
- (2단계) 선도기업 및 스타트업(벤처)기업 유치
 - 점경 지역/특수상황지역 적용 및 제안(세금 및 부담금 감면 혜택)
 - 봉제(제조)업체 이외에도 스튜디오, 재단센터, 샘플실, 유틸리티, 물류시설, 편의시설 구성(원스탑 주문제작납품 가능)
- (3단계) 스마트 팩토리 체계구축
 - 디자인, 재단, 봉제, 유통의 전공정이 시스템으로 연결된 스마트팩토리 체계구축

- 염색(디지털 염색 설비·솔루션 연구개발) 및 니트/가죽 산업으로 확대적용
- 서울시 스마트 앵커 프로젝트 연계-협업
 - 한국의 섬유 패션 산업 중 다운스트림(봉제)산업의 중심은 서울시임. 따라서 구축 과정에서의 자원(기술, 투자, 정보 등)의 교류뿐 아니라 기획-생산-유통-마케팅 전과정에서의 협업 필요
- 스마트팩토리 성공요건-표준화, 스마트화, 디지털화, 협업화
- 스마트 팩토리 활성화 지원 사업추진
 - 스마트팩토리 관련 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공동연구
 - 대학 및 교육기관에 전문과정 개설(학점연동, 취업연계, 공동연구)
- 기대 효과
 - 지역 경제활성화
 - 경기 북부 특화 산업인 섬유 패션 산업을 수요자 맞춤형제품생산(다품종소량생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짧은 리드타임’과 ‘비용 절감 및 생산성확대’를 실현하여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 매출증대, 생산구조 효율화 뿐 아니라 작업환경 현대화·지능화로 청년층 신규 인력유입 및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한국의 섬유 패션 산업 활성화 및 발전에 선도적 기여
 - 남북교류 협력
 - 지식(기술)집약 산업의 형태로 북측의 섬유 패션 산업과 연계
 - 개성공단 재개시 단기적으로는 북측의 노동자원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활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생산 시스템 적용이 필수불가결함
 - 서울-평양 대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은 패션소비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성장 가능함

라. K-뷰티 테크노파크 건립사업(화장품, 미용기기)

- 사업선정 근거
 -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핵심 축인 K-뷰티 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관계부처합동, 2019.12.5.)
 - 연구개발: 현장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던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을 확대 추진

- 규제혁신: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맞춤형화장품 제도 신설 및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강화 등 스마트 규제를 통한 기업활동 제고하고, 개인별 피부 진단을 통해 고객 맞춤형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세계 최초로 신설·시행('20.3월)
- 브랜드 제고: 신남방 신흥국가 진출지원을 강화하여 화장품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K-뷰티 홍보관과 대규모 박람회를 신설하여 K-뷰티 상품가치(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계획
- K-뷰티 클러스터 구축: 화장품 생산, 신기술 연구개발, 뷰티서비스를 포함한 전문교육, 중소기업 홍보(컨설팅)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K-뷰티 산업육성을 위한 대표 거점을 마련할 계획. 클러스터에서는 K-뷰티 글로벌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연간 2,000여 명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며, 화장품산업 전시관을 통해 수출 유망국 해외바이어 및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산업 소개 및 홍보를 진행
- 접경 지역 제조업 특화 산업 후보로 선정한 프리미엄 소비재산업의 구체적인 실행사업으로 K-뷰티 테크노파크 건립을 통해 K-뷰티 산업을 양주시의 대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화장품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의 1단계 사업으로 K-뷰티 테크노파크 건립 추진
 - K-뷰티 테크노파크에서는 세계적인 화장품 생산 및 수출국가로 발돋움한 국내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하여 화장품 개발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 마케팅 플랫폼 구축, 전문 인력 교육, 체험형 K-뷰티 전시장, 화장품 기업 유치 및 벤처창업 활성화 등 화장품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이 필요
- 한국의 K뷰티 트렌드는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으며, K 뷰티로 인한 관광객증가, 뷰티 제품의 해외 수출 등 K뷰티 시장 가치는 1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출처: 뷰티경제)
 - 2018년 국내 화장품수출액은 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5%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2020년까지 화장품 수출액이 91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가 2018년 약 4,100억달러에서 2021년 약 4,90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출처: 매일경제신문)
- 정부는 K-뷰티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발표(보건복지부, 2019.12)
 - 화장품산업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R&D) 확대 추진으로 세계 기술수준 대비 '18년 86.8% → '22년 90% → '30년 95% 달성
 - 생산(공장), 연구개발(연구소·R&D), 전문 인재양성 및 전시관 운영
 - 신남방 진출지원, 국내 K-뷰티 홍보관 및 대규모 박람회 신설 등
 -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맞춤형화장품 신설 및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강화

● 사업추진 목적 및 필요성

- K-뷰티 테크노파크는 뷰티 서비스, 제조업 및 뷰티 연관 산업 전반을 총괄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뷰티산업 생태계 기반의 허브 역할 수행
 - 뷰티산업 트렌드를 선도 보급하여 국내 뷰티산업의 구심점 및 산업 발전의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
- 뷰티산업 기술개발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및 융복합 사업을 통해 기술력 축적,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분야 및 종사자에 보급
 - 뷰티산업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연구 정보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 뷰티산업 선도 기업과 스타기업을 육성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3년
- 사업예산: 370억 원
 - K-뷰티 테크노파크는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입주공간, 교육센터, 공동활용 첨단 장비, 체험형 홍보관 등을 구축
 -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사업은 화장품 중소·벤처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 남북교류지원사업은 북한과 화장품 공동개발 및 생산, 기술이전 교육 등 남북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

〈표 VI-11〉 K-뷰티 테크노파크 건립사업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국고	지방비	민자	합계
K-뷰티 테크노파크 건립	200	100	-	300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사업	35	-	15	50
남북교류지원사업	14	-	6	20
소 계	249	100	21	370

주: 정확한 예산추정은 더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접경 지역 화장품 산업은 오송 바이오단지, 인천남동공단 등 화장품 산업 밀집 지역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으나, 전국 최초로 K-뷰티 테크노파크를 건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산업육성전략을 추진한다면, 수도권과 근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향후 K-뷰티산업의 핵심전략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K-뷰티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생태계 기반 조성으로 관련 기업 유치, 신기술개발 및 교육, 소비자 중심의 체험형 홍보관 운영, K-뷰티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된 미래형 K-뷰티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마. MICE 인프라 구축 사업 - 섬유 패션 유니크 베뉴 개발 사업

· 이 사업은 양주, 동두천 지역 공동 사업임

● 사업선정 근거

- MICE 산업은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4가지 분야를 통칭하는 관광 서비스 산업 개념으로 일반 관광 산업에 비해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관련 참석자들의 대규모성, 높은 소비 금액은 물론 Opinion Leader 그룹들이라는 점에서 마케팅 효과 또한, 높게 인식되고 있음
- 경기 북부지역 가운데 산업시설 발전 정도가 높고 지역 문화재까지 다양한 성격의 장소를 갖춘 지역들은 MICE 산업의 새로운 추세인 Unique Vanue를 기반으로 한 사업 전개에 효과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이러한 추세로 인해 기존의 대형 전시장 위주로 진행되던 MICE 산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Unique Vanue MICE로 확장 추세에 있음
- 양주, 동두천 지역은 섬유 패션 산업 특구로서 특히 산업 관광 MICE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섬유 종합 지원센터 등 해당 지원시설들도 Unique Vanue spot으로 활용할 수 있어 관광 시너지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 필요성

- 지금까지 MICE 산업은 대규모 컨벤션 위주로 이루어지며 해당 인근 지역 정도로 소비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로 인해 MICE 산업으로 인한 산업 파생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아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짐
- 최근 KINTEX에서 개최된 World Summit에 참석했던 필리핀 부통령이 평소 관심이 많았던 K-뷰티 산업의 현장을 관람하고 싶다는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뷰티 디바이스를 생산 뷰티·

헬스 케어 전문회사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한 경우가 있음

-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품 쇼룸과 생산 공정은 Opinion Leader 방문객들에게 좋은 홍보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관광 MICE Unique Vanue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 섬유·가죽·패션 산업 특구 지정 이후 의류, 섬유 패션 산업 관련 시설을 다수 보유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주, 동두천 지역의 경우 이와 같은 최신 트렌드의 MICE 산업 활성화가 접경 지역 특화 산업으로 충분한 실현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방법

- 현재 Unique Vanue 관련 사업은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주로 광역 자치단체 중심의 선정 및 지정과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선정하는 Korea Unique Vanue 지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해당 지정 사업에 선정된 곳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의 및 행사 장소로 세계 각국에 소개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 행사를 통한 파생 관광 산업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음
- 향후 'Korea Unique Vanue' 지정 사업에 접경 지역들의 적극적 참여와 선정 과정에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사업예산

- 현재 Unique Vanue 선정에 따른 지원은 직접적 예산 지원보다는 해당 지점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이 Unique Vanue를 이용하는 행사 참여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인센티브 지원은 국제기구 행사의 경우 3개국 외국인 100명 포함 250명 이상의 인력이 2일 이상 참여해야 하며 내국인들의 행사인 경우 100명 이상 참석자가 2일 이상 진행되는 행사이면 2,000만 원 한도의 인센티브가 해당 주최 기관에 제공되고 있음
- 향후 접경 지역에서 선정되는 Unique Vanue 행사장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이 인센티브의 상한선을 적용하는 방법이나 해당 상한선을 높게 책정하는 방안, Unique Vanue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반 시설 등의 보완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MICE 행사 유치를 통한 외부고객 유입 확대
 - 기존의 대형 시설 위주의 MICE 관광객을 지역 단위로 흡수 가능 환경 마련
 - 행사 참여자로 인해 발생하는 파생 관광 수요 확보 가능
-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2.7 포천시

가.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 이 사업은 양주, 동두천 지역 공동 사업으로 내용은 양주시와 동일

나. 新(고기능, 고감도, 친환경)소재 개발·연구 지원사업

● 사업선정 근거

- 포천시에서 미래산업 핵심가치인 ‘지속 가능성’ 사업의 대표로 거론되는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소재 개발·연구 사업 추진
- 패션기업들의 재생섬유 사용 비중 확대 방침에 따라 향후 재생섬유 원사단가 및 공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경쟁력 제고할 수 있는 사업
- 접경 지역의 ‘친환경’사업 활성화는 상징적 의미

● 사업추진 목적 및 필요성

- (혁신성장 동력)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집약적, 미래지향적,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력 필요
 - 한국을 대표하는 양포동의 니트산업은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 네크래커 상황에 직면함 따라서 지속 가능한 재생섬유 원사 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미래성장산업기반) 지속 가능성은 미래산업의 핵심가치임 따라서 친환경 소재로 대표되는 리사이클 소재 연구·개발 필요
- (남북교류) 과학기술 및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북측과 신소재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섬유패션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음

● 사업 내용

- 지역추진사업지원
 - 지자체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소재 개발·연구 추진사업 지원
- 사업활성화
 - 신소재(고기능/고감도/친환경) 제품 및 공정 개발·연구
 - 니트, 피혁, 염색가공 산업의 기술혁신 및 생산공정의 혁신을 위한 개발·연구 프로젝트 지원
 - 타지역 /타업종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 한반도 미래성장산업 기반
 - 남북교류시 남북한 공동 투자/연구/개발/보급 사업 추진
 - 한반도-동북아시아-유럽으로 시장확대

● 기대 효과

- 지역 경제활성화
 - 지역특화 산업이자 한국의 대표 니트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확보
 -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확대를 통해 국내외 환경문제 해결 및 쓰레기 처리비용 감소 및 효과적인 자원순환
 - 리사이클 소재 사업을 시작으로 고부가가치의 신소재(고기능, 고감도, 친환경)사업으로 확대 가능
- 남북교류 협력
 - 신소재 공동 개발·연구 사업을 통해 섬유 패션 산업 강국으로 도약
 - 지속 가능한 산업 즉 친환경소재의 연구개발은 접경 지역역 특화 산업으로 상징적의미가 있음 ⇒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확보
- (포천시 추진/제안사업)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재활용 센터
 - 사업위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장자경제로 95-4, 장자일반산업단지
 - 사업기간: 2020. 01. 01 - 2022. 12. 31.
 - 사업주체: 경기도/포천시/경기 북부환경공업협동조합
 - 사업규모: 리사이클 폴리에스터(rPET) 재활용센터 1개동
- (포천시 추진/제안사업) 니트산업(환편기) 글로벌 경쟁시스템 개발
 - 사업목적 및 효과: 니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사업 내용: 환편기 실 자동 연결장치 개발 및 회전속도 증대 연구개발
- 사업기간: 3년
- 사업비: 20억 원

다. 드론 클러스터 조성사업

● 사업선정 근거

- 포천시는 접경 지역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지만(사업체 기준으로 32.8%, 종사자 기준으로 47.4%), 주력산업이 주로 가구, 섬유 등 전통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래신성장산업의 도입 필요성이 큼
- 포천은 가구/섬유 이외에 금속가공, 기계장비, 전기장비, 비금속광물 산업 등 드론산업 연계 산업 사업체도 다수 분포하고 있어 드론산업 육성전략 추진시 참여 가능기업이 충분할 것으로 분석됨
- 드론산업은 정부의 12대 신산업에 포함되며, 드론 관련 기술발전에 따라서 활용도가 커지고 있어 향후 성장전망이 밝은 산업임
 - 전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은 2017년 전체 약 20억 달러 규모 → 2019년 44억 달러 → 2026년 약 13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됨
 - 현재 방대한 국내시장 및 낮은 생산원가를 바탕으로 전세계 민간용 드론시장의 약 70%를 중국업체 DJI가 점유하고 있으나, 드론은 상업적 용도 이외에 군사용 등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각국이 경쟁적으로 드론 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은 중국산 드론의 해킹 가능성을 우려하여 중국산 드론의 정부기관 구입을 제한할 방침임
- 국내 드론 시장은 기존 항공기 관련 제조업체의 군수완제기 중심으로 시장 형성되어 2020년까지 군 수요 기반의 군수 시장이 시장의 중심을 점유할 것으로 추정
 - 국내 드론시장 규모는 2019년 2,198억 원에서 2022년에는 4,158억 원으로 확대 전망(출처: 국토교통부, 2017)
 - 잠재력이 큰 민수시장은 영세 중소기업 중심으로 여전히 미비한 성장세지만 IT, 전자, 통신 업체, 완구용 비행로봇 생산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드론 시장에 진출하면서 타 산업 부문의 시장도 점차 확대될 전망
 - 3D 프린터 등 제조혁신 기술 발전과 우리나라의 ICT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국내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현재로서는 중국 기업들의 드론 완성품/기본 부품 제조 부문에서의 경쟁 우위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DJI 등 중국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나 크게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은 분야(레이싱 드론, 벌론형 드론 등)의 드론을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포천시의 드론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계획

- 4차산업 아이템인 드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포천 드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창업지원, 기업 유치,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 계획 수립
- 주요 사업 내용은 벤처 창업지원센터 설립, 기업입주센터, 기업지원센터 및 생활 인프라 구축 등

- 사업추진 목적 및 필요성

- 드론 관련 제조업체, 기술연구소, 체험형 테마파크 등 드론 생태계 기반 조성을 통한 드론 산업 집적화를 위한 드론 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함
- 드론 시장이 제품 라이프사이클상 초기 단계를 지나 성장기에 놓여 있는 시점에 있으나, 드론 전용 산업단지가 없고, 드론 관련 업체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관련 기업의 상호 기술교류 등을 통한 산업발전 기회가 적은 것이 현실임
 - 따라서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드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드론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접경 지역 산업 고도화 및 균형 발전 필요
 - 경기 북부지역 산업규모 및 수준 낙후로 인한 좋은 일자리 창출 부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신성장산업 육성 필요
 - 포천 육군 드론군단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근거리에 위치하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도입 산업으로 적합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3년
- 사업예산: 400억 원
 - 드론 테크노파크는 중소제조업체 및 연구소 입주공간, 벤처창업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공동활용장비 구축 등이며, 군부대 이전 유휴지를 활용하여 조성
 -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사업은 드론 중소·벤처기업 및 관련 대학/연구소의 R&D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

- ▶ 드론 R&D사업은 고양시 소재 항공대학과 연계하여 추진 필요
- 드론 체험센터는 일반인의 드론체험 및 드론 교육 등 드론산업 저변 확대 역할과 드론 개발 생산업체의 신제품 실증 공간으로 활용
- ▶ 중국 DJI社(글로벌 1위 드론업체)가 운영하는 중국 심천 플래그쉽 스토어는 일평균 3,500명이 방문하며 심천지역 대표관광지로 부상
- ▶ DJI사가 해외에 최초로 설립한 서울 홍대 인근 매장의 경우에도 일평균 150명이 방문하고 있음

〈표 VI-12〉 드론 클러스터 조성 사업

(단위: 억 원)

구분	국고	지방비	민자	합계
드론 테크노파크 건립	210	90	-	300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사업	35	-	15	50
드론 체험센터 건립	25	10	15	50
소 계	270	100	30	400

주: 정확한 예산추정은 더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드론 생태계 기반 조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드론산업이 미래 성장성을 보고 영세 중소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드론 기술개발 및 제품 생산업체, 교육, 체험 등 드론 생태계 전반적인 요소들이 한 곳에 집적됨으로써 제품개발에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됨
- 접경 지역 산업 고도화 및 균형 발전
 - 미래성장산업인 드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드론 생태계 기반 구축은 포천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 접경 지역 드론 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고양, 파주, 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 및 서울 소재 드론 업체 및 대학/연구기관과 연계 추진
 - 신규 기업 유치 및 신성장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드론 농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 사업선정 근거

- 농업부문에 드론 접목으로 드론농업클러스터 조성

- 포천시는 GR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5%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으며, 지역생산금액도 4,463억 원에 달해 접경지 15개 시·군 중 가장 큼
- 특히, 본보고서 제조업 분야에서 포천시가 드론 클러스터 조성지로 제안되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사업추진 필요성

- 인구감소 및 노동력 감소의 대안으로 농업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용 드론활용(토양관리, 방제 등)이 점증하고 있음
- 한국형 혹은 지역맞춤형 농업용 드론의 개발 및 농업에의 활용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기계 산업 활성화 필요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4년(2020~2023)
- 사업예산: 300억 원
 - 접경 지역 맞춤형 농업용 드론 중심의 농업생산 장비 생산기지 조성 및 수출 산업화
 - 농업용 드론 장기 대여 시스템 구축
 - 농업용 드론 활용 전문 인력 양성, 농업 드론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 기대 효과

- 농기계 관련 연구 및 활용 인력양성으로 경쟁력 강화
- 농업용 드론 분야의 세계 경쟁력 강화 및 농업분야 생산성 향상
- 향후, 기술전수에 따른 북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식량문제 해결에 일조

마. 가구산업 디자인/ 마케팅지원센터 건립사업

● 사업선정 근거

- 가구산업은 포천, 파주, 김포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경기도 전체 대비 경기도 접경 지역의 업종별 집적도를 보면 가구산업 사업체와 가구산업 종사자의 집적도가 각각 1.7, 2.1로 나타남(출처: 통계청, 2017년 기준)
- 접경 지역 가구업체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열악한 편임

- 가구디자이너, 온라인마케팅 전문 인력이 지리적 및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제조업체 현장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관련 인력의 채용 및 운영에 애로사항이 큼
- 따라서 가구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채용 및 장기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구 제조업체에 필수적인 가구 디자인 및 온라인 마케팅 공동 사무실 구축의 필요성이 큼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3년
- 사업예산: 200억 원
 - 가구디자인센터는 교통 여건이 양호한 포천시내 인근 지역에 건립하고, 참여업체의 디자인 부서가 입주하며, 센터에서 디자인기술개발,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추진
 - 가구 디자인 R&D 지원사업은 가구디자인센터 입주기업 및 접경 지역 소재 가구업체를 대상으로 가구 디자인 개발사업을 지원
 - 가구 온라인마케팅센터 건립사업은 교통 여건이 양호한 포천시내 인근 지역에 가구온라인마케팅센터 공동사무실을 확보하고, 참여업체의 온라인마케팅부서가 입주하며, 센터에서는 입주업체의 온라인마케팅 지원 및 인력양성사업을 추진

〈표 VI-13〉 가구 디자인/마케팅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국고	지방비	민자	합계
가구 디자인센터 건립 사업	70	30	-	100
가구 온라인마케팅센터 건립 사업	35	-	15	50
가구 디자인 R&D 지원사업	35	-	15	50
소 계	140	30	30	200

주: 정확한 예산추정은 더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바. 휴양·생태레저 클러스터 조성 - 지오 투어리즘 육성

- 이 사업은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공동 사업임

● 사업선정 근거

- 접경 지역은 가운데 포천, 연천, 철원 지역은 DMZ와 임진강 주상절리 등 국내 최대의 생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2020년 4월 지정을 목표로 포천, 연천, 철원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조성은 이 지역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관광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생태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접경 지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하천, 산림 자원, 해안 등을 활용한 휴양 관광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Outdoor 레저 스포츠 관련 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이후 웬만한 수도권에서는 1시간 반 정도면 이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업추진 필요성

- 최근 청정 생태 관광과 힐링, 휴양 등을 연계하고 예방 의학과 대체 의학 영역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웰니스(Well-being과 Happiness, fitness를 포함하는 개념) 관광이 큰 관심을 끌고 있음
- 생태 자원의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접경 지역 환경을 배경으로 휴양, 생태, 레저 스포츠 산업까지를 접목한 관광 클러스터 조성은 지역 산업 발전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DMZ을 보유한 강원도 접경 지역 관광은 여름과 겨울철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별로도 해안을 보유한 고성군에 60% 이상 집중되고 있어 관광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매력적 테마가 필요한 상황임
- 2011년 제정된 ‘지질공원법’을 기반으로 현재 국제 지질공원 인증의 제반 여건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여행 상품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시설 43곳을 선정하여 기반 구축 작업을 실시 중이며 지역의 특색 있는 웰니스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지원 사업도 2018년도부터 실시 중임
- 2018년에는 경상남도, 2019년에는 충청북도가 각각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한 곳의 지자체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복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경상남도는 산청, 함양, 합천, 거창, 통영, 거제, 고성 등이며 충청북도는 충주, 제천) 접경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본 제안 사업에 가장 적합한 실행 모델로 판단됨
- 접경 지역 가운데에는 북한강 수계에 인접해 있으며 산림자원이 풍부한 연천, 포천, 철원, 양구, 화천, 인제, 고성 지역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가운데 특히 연천, 포천, 철원

지역은 지오 투어리즘을 테마로 하여 해당 분야 특화형 휴양·생태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함

- 사업예산

- 현재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총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본 제안 사업은 기존 웰니스 관광 내용에 역동적인 산악, 익스트림 스포츠 관광 분야가 추가 되고 초기 기반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만큼 약 10~12억 원 정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며 이 가운데 40~50% 정도의 국비 편성이 필요할 것임
- 이 밖에도 열악한 숙박업소 현황의 개선, 휴양을 위한 의료 시설 유치, ‘(가칭) 생태 레저산업 진흥재단’ 설립 등도 검토 대상임

2.8 동두천시

가.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 이 사업은 양주, 동두천 지역 공동 사업으로 내용은 양주시와 동일

나. 新(고기능, 고감도, 친환경)소재 연구·개발 지원 사업

- 사업 내용은 포천시의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 사업’과 동일

- 지자체 추진단위 사업

- (동두천 추진/제안사업) 가죽상품화지원센터
 - 사업목적: 가죽시장개척 및 기술경쟁력 제고
 - 사업 내용: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부지 내 3층 복층구조 건물
 - 역할: 센터 및 공동장비 구축 운영 및 한우가죽브랜드화 연구 개발
 - 사업비: 60억 원

다.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류, 신발)

● 사업선정 근거

- 피복, 식품, 비품 등 비무기 군수지원물자를 의미하는 전력지원체계산업은 '18년 기준으로 약 7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정됨
- 접경 지역은 전력지원체계산업의 수요처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
- 접경 지역은 국방2.0 개혁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 유희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 경제 침체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
- 전력지원체계산업은 민간업체가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와 기업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장 접근 필요성이 큼
 - 또한, 주로 영세 중소기업 중심인 접경 지역 제조업의 투자여력 부족으로 인한 제품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이 시급함
- 동두천시에서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에 전력지원체계산업 기업 입주센터 건립 및 R&D 장비 구축을 통하여 관련 기업 유치와 생태계 기반 조성을 통한 전력지원체계산업 경쟁력 확보 가능
- 정부의 국방벤처기업 육성정책
 - 우수국방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대 및 고수준 기술개발사업 신설을 추진 중
 - 국방벤처지원사업 예산(18년 43.5억 원 → 20년 55.5억 원 → 22년 67.5억 원)
 - 국방벤처센터 수를 현재(8개)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과 국방비즈 클럽 회원사를 대폭 확대 추진
 - 국방비즈클럽의 회원사 확대와 함께 '국방중소벤처협회(가칭)'의 회원사로 등록, 중소기업 관련 대정부 정책건의 및 소통, 세미나, 전시회, 공청회 추진, 기타 방위산업 및 수출 정보공유의 창구로 활용

● 사업추진 필요성

- 동두천시에서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또는 군부대 이전 부지에 중소벤처기업 입주센터, R&D 및 마케팅 지원센터 등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 영세중소기업은 전력지원체계산업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신규 진입이 매우 제한적이며, 조달 과정의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하기에 역부족
 -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요구하는 품질 기준 제품 개발 역량 확보가 선결과제
 - 따라서 전력지원체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제품개발에서 판매까지 종합적인 지원 조직 필요
- 수요처와 근접한 접경 지역의 유리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전력지원체계산업 육성 필요

- 즉, 접경 지역에는 피복, 전투화, 식품 등 주요 전력지원체계 품목 관련 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동두천, 화천, 연천, 포천 지역의 군부대 이전 후 유휴 부지를 활용한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함
- 또한, 인접 지역에 수요처인 군부대가 입지하고 있어 물류의 유리한 점과 제품개발과 실증시험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 자격 획득 및 선정의 폐쇄성과 까다로운 관련 절차를 일반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 지역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관 거버넌스 조직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3년
- 사업예산: 220억 원
 - 기업입주센터는 전력지원체계 관련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연구소 입주 공간 제공, 공동 활용 연구개발 장비 구축, 교육 등 지원
 - 전력지원체계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사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신제품개발 지원
 - 신제품의 개념 설계에서 시제품 생산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을 높임

〈표 VI-14〉 동두천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국고	지방비	민자	합계
전력지원체계 기업입주센터 건립	140	60	-	200
전력지원체계 중소벤처기업 R&D 및 마케팅 지원 사업	14	2	4	20
소 계	154	62	4	220

주: 정확한 예산추정은 더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라. MICE 인프라 구축 사업 - 섬유 패션 유니크 메뉴 개발 사업

- 이 사업은 양주, 동두천 공동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동일함

2.9 연천군

가. 농촌 융·복합산업 테마파크(농촌체험)

● 사업선정 근거

- 생산지(텃밭 임대), 식품가공, 건강기능식품, 체험, 관광 등 농업 관련 융복합적인 테마공원(6차산업화 단지) 조성하고자 함

● 사업추진 필요성

- 농업농촌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6차산업화 등 다양한 영역의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집중과 선택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 귀촌인구 수용을 위한 귀농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활용 가능
- 경기도 연천군은 농촌체험 관련 테마가 풍부하며 추진 체계를 잘 갖추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음
- 연천군의 농특산물 25종

〈그림 VI-6〉 연천군의 농특산물 25종

 콩 경기도 > 연천군	 울무 경기도 > 연천군	 민통선고사리 경기도 > 연천군	 연천토종꿀 경기도 > 연천군
 남소북수알 경기도 > 연천군	 병배 경기도 > 연천군	 고궁한과 경기도 > 연천군	 연천포도 경기도 > 연천군
 병포도 경기도 > 연천군	 팩호박 경기도 > 연천군	 울무막걸리 경기도 > 연천군	 연천쌀 경기도 > 연천군
 오색현미 경기도 > 연천군	 맑은연천병포도 경기도 > 연천군	 아회와 경기도 > 연천군	 아회랑 경기도 > 연천군
 선한이웃 경기도 > 연천군	 유환유정란 경기도 > 연천군	 맑은연천병배 경기도 > 연천군	
 가람가온김치 경기도 > 연천군	 황진이 경기도 > 연천군		
 개성홍삼 경기도 > 연천군	 깜밥누룽지 경기도 > 연천군		
 오색소반 경기도 > 연천군	 연천버섯 경기도 > 연천군		

자료: 농사로 농업기술포털(www.nongsaro.go.kr) 참조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4년(2020~2023)
- 사업예산: 300억 원
 - 농특산물생산 및 식품 1차 가공 기반 구축
 - 농촌 및 농업 테마공간 및 융복합귀농단지 조성
 - 농업농촌 주제의 힐링 관광 단지 조성

● 기대 효과

- 부가가치 제고의 농업농촌 소득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 접경 지역 농업의 체험관광 자원화

나.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식품, 생활용품)

● 사업선정 근거

- 피복, 식품, 비품 등 비무기 군수지원물자를 의미하는 전력지원체계산업은 '18년 기준으로 약 7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정됨
- 접경 지역은 전력지원체계산업의 수요처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
- 접경 지역은 국방2.0 개혁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 경제 침체 가능성을 최소화가 필요
- 전력지원체계산업은 민간업체가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와 기업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시장 접근 필요성이 큼
 - 군납제품은 시중품과 단가 차이는 크지 않으나, 복잡한 사양으로 인해 다수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품질기준이 까다로움
 - 또한, 주로 영세 중소기업 중심인 접경 지역 제조업의 투자여력 부족으로 인한 제품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 해결이 필요함

〈표 VI-15〉 군 구매요구서와 시중품 사양서 비교

구 분		군 구매요구서 내용	시중품 사양서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사양, 가공법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 세부내용으로 인해 조달원 한정, 신규 업체 진입장벽으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규격만 명시하고 그 외 사양은 업체 자율 ◦ 최신 트렌드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품질로 경쟁
사례	꼬리곰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골추출액 5.5%(나트륨 12% 이하 사용할 수 있음) ◦ 쇠고기추출물 0.12%, 효모추출물분말 0.02%, 양파분말 0.01%, 포도당 0.2% ◦ L-글루타민산나트륨 0.02% ◦ 야채농축액 0.02%, 마늘분말 0.01% 등 ◦ 쇠고기추출물은 70Brix 이상 농축 사용 ◦ 야채농축액은 60Brix 이상 농축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제수, 소꼬리 15%(뉴질랜드산) ◦ 사골엑기스(뉴질랜드산) ◦ 마늘엑기스(중국산), 양념 등
	즉석쌀국수(사골맛스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성 크림: 18% 이상 ◦ 복합조미식품, 포도당, 사골파우더, 정제소금, 우골엑기스분: 각 10% 이상 ◦ L-글루탐산나트륨: 7%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골분말 2.2% ◦ 쇠고기농축분말 5.3% ◦ 정제소금(국내산), 포도당 ◦ 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 등

- 정부의 국방벤처기업 육성정책

- 우수국방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대 및 고수준 기술개발사업 신설을 추진 중
- 국방벤처지원사업 예산(18년 43.5억 원 → 20년 55.5억 원 → 22년 67.5억 원)
- 국방벤처센터 수를 현재(8개)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과 국방비즈클럽 회원사를 대폭 확대 추진
- 국방비즈클럽의 회원사 확대와 함께 ‘국방중소벤처협회(가칭)’의 회원사로 등록, 중소기업 관련 대정부 정책건의 및 소통, 세미나, 전시회, 공청회 추진, 기타 방위산업 및 수출 정보공유의 창구로 활용

- 사업추진 필요성

- 연천군 지역의 군부대 이전 부지에 식품 및 기타 생활용품 관련 중소벤처기업 입주센터, R&D 및 마케팅 지원센터 등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 수요처와 근접한 접경 지역의 유리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전력지원체계산업 육성 필요
 - 즉, 접경 지역에는 피복, 전투화, 식품 등 주요 전력지원체계 품목 관련 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동두천, 화천, 연천, 포천 지역의 군부대 이전 후 유휴 부지를 활용한 클러스터 조성

이 가능함

- 또한, 인접 지역에 수요처인 군부대가 입지하고 있어 물류의 유리한 점과 제품개발과 실증시험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 자격 획득 및 선정의 폐쇄성과 까다로운 관련 절차를 일반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 지역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관 거버넌스 조직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3년
- 사업예산: 110억 원
 - 기업입주센터는 전력지원체계 관련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연구소 입주 공간 제공, 공동 활용 연구개발 장비 구축, 교육 등 지원
 - 전력지원체계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사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신제품의 개념 설계에서 시제품 생산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을 높임
-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지자체 연계 공동 또는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권고
 - 본 사업은 사업환경과 보유자원이 유사한 연천, 철원, 화천, 양구 등 4개 군 공동사업 또는 독립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며, 아래 표 예산계획은 단독사업 기준임
 - 군납 사업의 특성에 따른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연계 공동사업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지자체 연계공동사업으로 하더라도, 각 지자체별로 다른 품목을 생산함으로써 지자체별 독립성 유지가 가능하며, 예산확보, 납품 관련 대응 절차 등 공동대처가 필요한 분야에서 연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표 VI-16〉 연천-철원-화천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국고	지방비	민자	합계
전력지원체계 기업입주센터 건립	70	30	-	100
전력지원체계 중소벤처기업 R&D 및 마케팅 지원 사업	7	1	2	10
소 계	77	31	2	110

주: 정확한 예산추정은 더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접경 지역 전력지원체계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 전력지원체계 전주기 지원사업을 통하여 조기에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 관련 기업, 연구소 및 기타 지원기관 유치
 - 기업, 대학의 산학협동사업 추진을 통한 기술개발 추진
- 접경 지역 경제활성화 및 균형 발전
 - 비교적 안정적인 산업분야인 전력지원체계산업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신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다.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지오 투어리즘 육성

▸ 이 사업은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지역 공동 사업임

● 사업선정 근거

- 접경 지역은 가운데 포천, 연천, 철원 지역은 DMZ와 임진강 주상절리 등 국내 최대의 생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2020년 4월 지정을 목표로 포천, 연천, 철원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조성은 이 지역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관광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생태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접경 지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하천, 산림 자원, 해안 등을 활용한 휴양 관광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Outdoor 레저 스포츠 관련 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이후 웬만한 수도권에서는 1시간 반 정도면 이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업추진 필요성

- 최근 청정 생태 관광과 힐링, 휴양 등을 연계하고 예방 의학과 대체 의학 영역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웰니스(Well-being과 Happiness, fitness를 포함하는 개념) 관광이 큰 관심을 끌고 있음
- 생태 자원의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접경 지역 환경을 배경으로 휴양, 생태, 레저 스포츠 산업까지를 접목한 관광 클러스터 조성은 지역 산업 발전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DMZ을 보유한 강원도 접경 지역 관광은 여름과 겨울철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별로도

해안을 보유한 고성군에 60% 이상 집중되고 있어 관광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매력적 테마가 필요한 상황임

- 2011년 제정된 ‘지질공원법’을 기반으로 현재 국제 지질공원 인증의 제반 여건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여행 상품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시설 43곳을 선정하여 기반 구축 작업을 실시 중이며 지역의 특색 있는 웰니스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지원 사업도 2018년도부터 실시 중임
- 2018년에는 경상남도, 2019년에는 충청북도가 각각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한 곳의 지자체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복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경상남도는 산청, 함양, 합천, 거창, 통영, 거제, 고성 등이며 충청북도는 충주, 제천) 접경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본 제안 사업에 가장 적합한 실행 모델로 판단됨
- 접경 지역 가운데에는 북한강 수계에 인접해 있으며 산림자원이 풍부한 연천, 포천, 철원, 양구, 화천, 인제, 고성 지역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가운데 특히 연천, 포천, 철원 지역은 지오 투어리즘을 테마로 하여 해당 분야 특화형 휴양·생태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함

● 사업예산

- 현재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총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본 제안 사업은 기존 웰니스 관광 내용에 역동적인 산악, 익스트림 스포츠 관광 분야가 추가되고 초기 기반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만큼 약 10억~12억 원 정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며 이 가운데 40~50% 정도의 국비 편성이 필요할 것임
- 이 밖에도 열악한 숙박업소 현황의 개선, 휴양을 위한 의료 시설 유치, ‘(가칭) 생태 레저산업 진흥재단’ 설립 등도 검토 대상임

2.10 춘천시

가. 가축 종자/질병 연구소 건립사업

● 사업선정 근거

- 사업 내용 선정 근거
 - 매년 발생하는 가축 질병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축종자에 대한 종자개량 및 다양성 확보
 - 가축질병 연구사업 및 질병에 관한 남북 공동연구 및 교류 사업과 가축 종자개량 및 우수종자 지속보존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가축품종개량 연구로 우세한 종자 확보 및 국내 종자 주권 확보
- 지역 선정 근거
 - 가축연구소는 산학연 연구인력 공급입지가 중요한 요인
 - 강원도 접경 지역 시·군 중 대학 수 6개 중에 5개가 춘천시에 위치함
 - 기업부설연구소도 193개로 으뜸으로 연구인력 조달 절대적으로 유리함

● 사업추진 필요성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과 확산에서 남북 간 협력에 의한 공동 대응이 절실히 필요함
- 기후 등 환경에 따른 가축 종자개량에서 남북한 공동연구가 필요함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3년(2021~2023)
- 사업예산: 300억 원
- 주요 사업 내용
 - 가축품종개량 및 다양한 종자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한 공동대응 사업 추진

● 기대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 남북접경 지역 축산농가들의 신소득사업 개발 및 소득 증대
- 가축질병으로부터의 손실 감소 및 최소화
- 남북교류 협력
 - 관련사업 세계 시장 주도를 통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
 -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남북한 교류 및 평화분위기 구축
- 축산농가의 불안요소 저감
- 남북공동 대응으로 인한 협력 관계 강화

나. 수열 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 사업선정 근거

- 수열 에너지는 경제성이 우수한 친환경에너지자원이며, 소양강댐은 국내 최대의 수열 에너지 자원임
- 인터넷 및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며('24년까지 연평균 27% 증가), 수열 에너지 기반 클라우드 센터는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 센터 유치 전망이 밝음
- 2019.10월 관련법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하천수도 수열 에너지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해졌음

● 사업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자원인 소양강댐 냉수를 적극 활용, IT기업 유치 및 첨단농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미래 新 산업으로 육성
 - 소양강댐의 저온냉수(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데이터 센터 집적단지 조성
 - DC에서 사용 후 승온된 용수는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에 난방용으로 재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미래농업단지 조성
 - 물기업 특화산단은 친환경 데이터 센터 집적단지 및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연관기업 유치
 - 수열원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 최적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입주기업의 정주 여건(주거+상업) 개선
- 소양강댐 수열 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시 기대 효과
 - 냉방전력 절감: 123,240Mwh/년 / 16,021백만 원/년
 - 총 절감량은 춘천시 약 26,520가구가 소비하는 연간 전력량과 동일수준

- CO₂ 감소량: 57,461tCO₂eq/년 / 1,178백만 원/년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5년
- 사업예산: 3,027억 원(국비 253억 원, 지방비 109억 원, 민자 2,665억 원)
 - 수열 에너지 기반 클라우드 비즈니스 플랫폼 융합단지
 - 수열 에너지 기반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 수열 에너지 기반 물기업 특화단지
 - 에너지자립형 스마트 생태주거단지

다. 내수면 마리아 활성화 사업

● 사업선정 근거

- 해양·해상을 활용한 관광 산업은 최근 가장 주목 받는 관광 산업 분야임
- 국민 경제 수준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인하여 요트, 모터보트, 윈드서핑 등 다양한 레포츠가 폭넓게 보급되고 그 이용객들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이러한 산업 확장과 함께 수상 레저 선박의 생산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크루즈 등 해외 관광객 수요 역시 증가 추세에 있음
- 일반 마리아는 레저용 선박의 계류를 위한 시설로, 넓은 의미에서는 주차장, 호텔, 놀이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관련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1.5배 고용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新 융·복합 개념의 산업임
- 그러나 일반 마리아는 외곽 방파제 구축 등에 건설비가 많이 들고 공사 기간도 길기 때문에 내륙의 강이나 호수를 기반으로 하는 내수면 마리아 육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2018년부터 선정된 12곳의 내수면 마리아는 기존에 2곳(서울, 김포) 밖에 없었던 내수면 마리아 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음
- 춘천 지역의 내수면 마리아로 이미 선정된 의암호를 비롯하여 많은 호수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내수면 마리아 추가 선정 등으로 지역 개발 및 지역 내에 조성 예정인 레고랜드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 관광 산업 활성화에 직접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 필요성

- 기존 마리아 육성 사업은 마리아의 대중화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크루즈산업 도약,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일반 마리아나의 경우 조성하는 데에만 1곳 당 적게는 300억 원에서 많게는 5,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
- 내수면 마리아나는 해수면에 비해 수면이 잔잔하여 수상레저 초보자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외곽 방파제를 갖출 필요가 없으며, 공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경제적 면에도 이점이 있음
- 특히 춘천지역은 고성군을 제외하고 해양·해상 관광 산업 활성화가 쉽지 않은 강원도 접경 지역 여건에서 관련 산업 발전에 훌륭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평가됨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방법

- ‘제2차(2020~2029년) 마리아나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 내수면 마리아나 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 예정
- 2019년,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등 12개 지역을 내수면 마리아나 조성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향후 확대 예정이므로 선정 과정에 접경 지역 배려 필요
- 내수면 마리아나 조성 대상지는 필요 수심이 확보되어야 하며 도서 지역은 잔교, 부잔교가 있어 도 어선 접안이 많아 해당 어촌계와 협력해 관련 시설을 활용한 레저사업 진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
- 현재 기존에 선정된 내수면 마리아나 후보지들이 대부분의 비용을 민자 100%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적 개선 역시 요구되고 있으며 인근 관광자원과의 종합적 고려를 통한 사업 추진 역시 필요한 상황임

● 사업예산

- 현재 선정된 내수면 마리아나 대상 지역 중 전원 휴양형인 경우 조성비용으로 마리아나에 300억 원, 리조트에 1,500억 원 등 총 1,800억 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인접 시설 등에는 100% 민간 투자 사업 형태로 진행 예정인 경우가 다수임
- 최근 선정된 내수면 마리아나 후보지의 경우 내륙 지역의 호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탐승장(2,000㎡), 계류장(2,000㎡), 클럽하우스, 요트 30척 규모의 기반 시설 등을 기준으로 총 400억 원(국비 200억 원, 도비 2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 따라서 최소한의 기반 시설 조성에는 총 사업비 300~400억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시설 조성에는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하여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판단됨

● 기대 효과

- 내수면 관광 가치 상승
 - 도심지에서 가까이 위치한 하천 및 호수 등을 기반으로 레저 스포츠 기반이 마련되어 관광객 접근성 향상 가능
 - 체류형 관광 증대로 관광 부가가치 상승효과 기대
- 소규모 선박 산업 발전 및 해양 레저 스포츠 보급 확대
 - 조선업 위기의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소규모 선박 제조 여건 조성
 - 주거 인접 지역에서의 레포츠 시설 확충으로 관광 산업 저변 확대 가능

2.11 화천군

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 선정 근거

- 사업선정 근거
 - 첨단농업의 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여 농업인, 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업부문의 혁신성장을 이루고자 함
- 지역 선정 근거
 - 고령화, 농업생산성 저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설농업 접목 필요
 - 신산업 차원에서 27사단 철수지역에 스마트팜 조성하는 방법 고려
 - 27사단 주둔지역인 사내면은 토마토 주 생산 지역으로 스마트팜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스마트팜의 경우 토마토, 파프리카 등이 생산의 주를 이루고 있음

● 사업추진 필요성

-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의 보급이 시급함
- 국책공모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도전으로 기반 조성, 청년보육, 생산유통, 기술혁신 및 정주 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4년(2021~2014)

- 사업예산: 300억 원
- 주요 사업 내용
 - 기반 조성: 용수·전기 공급시설, 오폐수·폐식물 처리시설, 부지정지, 도로 등
 - 청년보육: 교육형 실습농장, 경영형 실습농장 등
 - 생산유통: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APC, 냉난방 시설, 기존 노후시설 스마트화
 - 기술혁신: 공공실증구역, 자율실증구역, 전시·체험센터, 지원센터 등

● 기대 효과

- 농생명산업의 수출주도 산업화
- 지역 경제 활성화
 - 농업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 경제 발전 효과
- 주변 지역 확산 효과
- 남북교류의 기반 확충 및 북한 시설농업과의 연계사업 추진

나.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식품, 생활용품)

● 사업선정 근거

- 피복, 식품, 비품 등 비무기 군수지원물자를 의미하는 전력지원체계산업은 '18년 기준으로 약 7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정됨
- 접경 지역은 전력지원체계산업의 수요처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
- 접경 지역은 국방2.0 개혁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 경제 침체 가능성을 최소화 필요
- 전력지원체계산업은 민간업체가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와 기업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시장 접근 필요성이 큼
 - 군납제품은 시중품과 단가 차이는 크지 않으나, 복잡한 사양으로 인해 다수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품질기준이 까다로움
 - 또한, 주로 영세 중소기업 중심인 접경 지역 제조업의 투자여력 부족으로 인한 제품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 해결이 필요함

〈표 VI-17〉 군 구매요구서와 시중품 사양서 비교

구분		군 구매요구서 내용	시중품 사양서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사양, 가공법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 세부내용으로 인해 조달원 한정, 신규 업체 진입장벽으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규격만 명시하고 그 외 사양은 업체 자율 ◦ 최신 트렌드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품질로 경쟁
사례	꼬리곰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골추출액 5.5%(나트륨 12% 이하 사용할 수 있음) ◦ 쇠고기추출물 0.12%, 효모추출물분말 0.02%, 양파분말 0.01%, 포도당 0.2% ◦ L-글루타민산나트륨 0.02% ◦ 야채농축액 0.02%, 마늘분말 0.01% 등 ◦ 쇠고기추출물은 70Brix 이상 농축 사용 ◦ 야채농축액은 60Brix 이상 농축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제수, 소꼬리 15%(뉴질랜드산) ◦ 사골엑기스(뉴질랜드산) ◦ 마늘엑기스(중국산), 양념 등
	즉석쌀국수(사골맛스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성 크림: 18% 이상 ◦ 복합조미식품, 포도당, 사골파우더, 정제소금, 우골 ◦ 엑기스분: 각 10% 이상 ◦ L-글루탐산나트륨: 7%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골분말 2.2% ◦ 쇠고기농축분말 5.3% ◦ 정제소금(국내산), 포도당 ◦ L-글루타민산나트륨(항미증진제) 등

- 정부의 국방벤처기업 육성정책

- 우수국방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대 및 고수준 기술개발사업 신설을 추진 중
- 국방벤처지원사업 예산(18년 43.5억 원 → 20년 55.5억 원 → 22년 67.5억 원)
- 국방벤처센터 수를 현재(8개)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과 국방비즈클럽 회원사를 대폭 확대 추진
- 국방비즈클럽의 회원사 확대와 함께 ‘국방중소벤처협회(가칭)’의 회원사로 등록, 중소기업 관련 대정부 정책건의 및 소통, 세미나, 전시회, 공청회 추진, 기타 방위산업 및 수출 정보공유의 창구로 활용

- 사업추진 필요성

- 화천군 지역의 군부대 이전 부지에 식품 및 기타 생활용품 관련 중소벤처기업 입주센터, R&D 및 마케팅 지원센터 등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 수요처와 근접한 접경 지역의 유리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전력지원체계산업 육성 필요
 - 즉, 접경 지역에는 피복, 전투화, 식품 등 주요 전력지원체계 품목 관련 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동두천, 화천, 연천, 포천 지역의 군부대 이전 후 유휴 부지를 활용한 클러스터 조성 이 가능함

- 또한, 인접 지역에 수요처인 군부대가 입지하고 있어 물류의 유리한 점과 제품개발과 실증시험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 자격 획득 및 선정의 폐쇄성과 까다로운 관련 절차를 일반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 지역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관 거버넌스 조직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3년
- 사업예산: 110억 원
 - 기업입주센터는 전력지원체계 관련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연구소 입주 공간 제공, 공동 활용 연구개발 장비 구축, 교육 등 지원
 - 전력지원체계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사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신제품의 개념 설계에서 시제품 생산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을 높임
-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지자체 연계 공동 또는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권고
 - 본 사업은 사업환경과 보유자원이 유사한 연천, 철원, 화천, 양구 등 4개 군 공동사업 또는 독립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며, 아래 표 예산계획은 단독사업 기준임
 - 군납 사업의 특성에 따른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연계 공동사업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지자체 연계공동사업으로 하더라도, 각 지자체별로 다른 품목을 생산함으로써 지자체별 독립성 유지가 가능하며, 예산확보, 납품 관련 대응 절차 등 공동대처가 필요한 분야에서 연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표 VI-18〉 연천-철원-화천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국고	지방비	민자	합계
전력지원체계 기업입주센터 건립	70	30	-	100
전력지원체계 중소벤처기업 R&D 및 마케팅 지원 사업	7	1	2	10
소 계	77	31	2	110

주: 정확한 예산추정은 더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다.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동·식물 생태관광 육성

· 이 사업은 화천군, 양구군 공동 사업임

● 사업선정 근거

- 접경 지역 가운데 화천, 양구 지역은 DMZ과 함께 백두대간 등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 여건을 갖고 있어 희귀 동·식물 등 국내 최대의 생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화천 지역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동원하여 국내 최대 축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은 산천어 축제를 비롯하여 연꽃단지, 약초 마을, 토속 어류 생태 체험관, 수달 연구센터 등의 동·식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구 지역은 야생동물 생태관, 생태식물원, DMZ 자생 식물원 및 천문대 등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생태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접경 지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하천, 산림 자원, 해안 등을 활용한 휴양 관광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Outdoor 레저 스포츠 관련 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이후 웬만한 수도권에서는 1시간 반 정도면 이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업추진 필요성

- 최근 청정 생태 관광과 힐링, 휴양 등을 연계하고 예방 의학과 대체 의학 영역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웰니스(Well-being과 Happiness, fitness를 포함하는 개념) 관광이 큰 관심을 끌고 있음
- 생태 자원의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접경 지역 환경을 배경으로 휴양, 생태, 레저 스포츠 산업까지를 접목한 관광 클러스터 조성은 지역 산업 발전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강원도 접경 지역의 보존 가치가 높은 동·식물을 기반으로 한 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 테마관광 육성 사업' 공모에 지원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육성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됨
- 생태 테마관광 육성 사업은 2016년부터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전환되어 인문학 스토리가 접목된 관광 상품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시설 43곳을 선정하여 기반 구축 작업을 실시 중이며 지역의 특색 있는 웰니스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지원 사업도 2018년도부터 실시 중임
- 2018년에는 경상남도, 2019년에는 충청북도가 각각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한 곳의 지자체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복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경상남도는 산청, 함양, 합천, 거창, 통영, 거제, 고성 등이며 충청북도는 충주, 제천) 접경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본 제안 사업에 가장 적합한 실행 모델로 판단됨
- 접경 지역 가운데에 천연 동·식물 자원이 풍부한 양구, 화천 지역은 클러스터 가운데에서도 동·식물 생태관광을 주요 테마로 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외부 공모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하여 대표적 생태 관광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예산

- 현재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총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본 제안 사업은 기존 웰니스 관광 내용에 역동적인 산악, 익스트림 스포츠 관광 분야가 추가되고 초기 기반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만큼 약 10억~12억 원 정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며 이 가운데 40~50% 정도의 국비 편성이 필요할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 테마 관광 육성 사업’의 경우는 공모 과정을 거쳐 국비와 지자체 비용 포함하여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며 컨설팅, 마케팅 지원이 함께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형태임
- 이 밖에도 열악한 숙박업소 현황의 개선, 휴양을 위한 의료 시설 유치, ‘(가칭) 생태 레저산업 진흥재단’ 설립 등도 검토 대상임

2.12 철원군

가. 라이스밸리 조성

● 선정 근거

● 사업선정 근거

- 오대쌀로 인지도가 높은 쌀 생산 중심으로 연관 산업을 집중하여 밸리를 조성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지역 선정 근거

- 강원도 쌀 하면 오대쌀이 대표 이미지이며, 철원이 주 생산지
- 철원은 오대쌀 이외에 새로운 브랜드 육성 중

- 사업추진 필요성

- 지역브랜드(예: 오대쌀)에 대한 수요창출 및 소비 진작으로 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새로운 수요창출로 집중화할 필요 있음
- 쌀 농업 관련 전후방위 산업의 활성화 및 상호 연계성을 제고하여 관련 분야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 있음
- 쌀 가공품의 다양화(쌀 음료, 쌀 과자, 쌀국수, 쌀라면, 전통주, 누룽지, 쌀 스낵, 쌀 씨리얼, 즉석 밥, 냉동 밥, 쌀죽 등)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4년(2021~2024)
- 사업예산: 300억 원
- 주요 사업 내용
 - 쌀 중심 농촌융복합산업화: 쌀 생산, 가공, 연구, 체험, 관광 복합적인 단지 조성
 - 웰빙쌀가공식품의 명품화: 전통식품의 현대화, 쌀 가공식품의 다양화
 -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오대쌀 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기대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 쌀 문화중심지의 이미지 제고
 - 쌀 생산 및 가공의 메카로 조성하여 지역 농민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첨단기법 도입을 통한 쌀 생산성 향상 및 쌀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 향상
- 남북교류 협력
 - 남북교류의 기반 구축
- 접경 지역 농업의 체험관광 자원화

나.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식품, 생활용품)

● 사업선정 근거

- 피복, 식품, 비품 등 비무기 군수지원물자를 의미하는 전력지원체계산업은 '18년 기준으로 약 7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정됨
- 접경 지역은 전력지원체계산업의 수요처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
- 접경 지역은 국방2.0 개혁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 경제 침체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
- 전력지원체계산업은 민간업체가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와 기업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시장 접근 필요성이 큼
 - 군납제품은 시중품과 단가 차이는 크지 않으나, 복잡한 사양으로 인해 다수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품질기준이 까다로움
 - 또한, 주로 영세 중소기업 중심인 접경 지역 제조업의 투자여력 부족으로 인한 제품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 해결이 필요함

〈표 VI-19〉 군 구매요구서와 시중품 사양서 비교

구분	군 구매요구서 내용	시중품 사양서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사양, 가공법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 세부내용으로 인해 조달원 한정, 신규 업체 진입장벽으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규격만 명시하고 그 외 사양은 업체 자율 ◦ 최신 트렌드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품질로 경쟁
사례	꼬리곰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골추출액 5.5%(나트륨 12% 이하 사용할 수 있음) ◦ 쇠고기추출물 0.12%, 효모추출물분말 0.02%, 양파분말 0.01%, 포도당 0.2% ◦ L-글루타민산나트륨 0.02% ◦ 야채농축액 0.02%, 마늘분말 0.01% 등 ◦ 쇠고기추출물은 70Brix 이상 농축 사용 ◦ 야채농축액은 60Brix 이상 농축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제수, 소꼬리 15%(뉴질랜드산) ◦ 사골엑기스(뉴질랜드산) ◦ 마늘엑기스(중국산), 양념 등
	즉석쌀국수(사골맛스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성 크림: 18% 이상 ◦ 복합조미식품, 포도당, 사골파우더, 정제소금, 우골 ◦ 엑기스분: 각 10% 이상 ◦ L-글루탐산나트륨: 7%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골분말 2.2% ◦ 쇠고기농축분말 5.3% ◦ 정제소금(국내산), 포도당 ◦ L-글루타민산나트륨(항미증진제) 등

- 정부의 국방벤처기업 육성정책
 - 우수국방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대 및 고수준 기술개발사업 신설을 추진 중
 - 국방벤처지원사업 예산(18년 43.5억 원 → 20년 55.5억 원 → 22년 67.5억 원)
 - 국방벤처센터 수를 현재(8개)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과 국방비즈 클럽 회원사를 대폭 확대 추진
 - 국방비즈클럽의 회원사 확대와 함께 ‘국방중소벤처협회(가칭)’의 회원사로 등록, 중소기업 관련 대정부 정책건의 및 소통, 세미나, 전시회, 공청회 추진, 기타 방위산업 및 수출 정보공유의 창구로 활용
- 사업추진 필요성
 - 철원군 지역의 군부대 이전 부지에 식품 및 기타 생활용품 관련 중소벤처기업 입주센터, R&D 및 마케팅 지원센터 등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 수요처와 근접한 접경 지역의 유리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전력지원체계산업 육성 필요
 - 즉, 접경 지역에는 피복, 전투화, 식품 등 주요 전력지원체계 품목 관련 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동두천, 화천, 연천, 포천 지역의 군부대 이전 후 유휴 부지를 활용한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함
 - 또한, 인접 지역에 수요처인 군부대가 입지하고 있어 물류의 유리한 점과 제품개발과 실증시험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 자격 획득 및 선정의 폐쇄성과 까다로운 관련 절차를 일반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 지역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관 거버넌스 조직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3년
 - 사업예산: 110억 원
 - 기업입주센터는 전력지원체계 관련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연구소 입주 공간 제공, 공동 활용 연구개발 장비 구축, 교육 등 지원
 - 전력지원체계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사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신제품의 개념 설계에서 시제품 생산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을 높임
 -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지자체 연계 공동 또는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권고

- 본 사업은 사업환경과 보유자원이 유사한 연천, 철원, 화천, 양구 등 4개 군 공동사업 또는 독립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며, 아래 표 예산계획은 단독사업 기준임
- 군납 사업의 특성에 따른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연계 공동사업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지자체 연계공동사업으로 하더라도, 각 지자체별로 다른 품목을 생산함으로써 지자체별 독립성 유지가 가능하며, 예산확보, 납품 관련 대응 절차 등 공동대처가 필요한 분야에서 연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표 VI-20〉 연천-철원-화천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국고	지방비	민자	합계
전력지원체계 기업입주센터 건립	70	30	-	100
전력지원체계 중소벤처기업 R&D 및 마케팅 지원 사업	7	1	2	10
소 계	77	31	2	110

주: 정확한 예산추정은 더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다.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지오 투어리즘 육성

· 이 사업은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지역 공동 사업임

2.13 인제군

가. 곤충산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 선정 근거

- 사업선정 근거
 - 다양한 곤충을 테마로 한 곤충체험 테마파크 조성으로 곤충에 대한 인식 제고
 - 도시민에게 차별화된 ‘탈 일상의 공간’과 테마화 된 가족 단위의 ‘쾌적한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 곤충연구를 기반으로 곤충 사육 및 체험관광 접목의 6차산업화 기반 조성
- 지역 선정 근거
 - 인제군은 산림특화지역으로 육성 중이며, 산림과 관련 다양한 사업 구상 중
 - 이에 곤충산업 연계는 바람직함

● 사업추진 필요성

- 식용곤충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람 먹거리 일반화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반려동물용 사료 생산 체계 구축 및 테마단지 조성이 필요함
- 곤충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교육적 측면의 체험의 장 마련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3년(2022~2024)
- 사업예산: 100억 원
- 주요 사업 내용
 - 곤충생태체험관, 본관(박물관, 전시관)
 - 곤충 활용 상품 전시실(유리온실)
 - 체험쿠킹 스튜디오
 - 곤충농장, 캠핑장, 영상실

● 기대 효과

- 곤충 관광의 미래, 곤충을 이용한 교육 및 체험, 쉼터 등의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 곤충 테마파크의 메카화로 지역발전에 기여
- 신규 고용창출 및 관광객 수 증가
- 지역 경제 파급효과

나. 농생명신소재연구소 건립사업

● 선정 근거

- 사업선정 근거
 -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식용곤충에 대한 집약적인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미래 신성장 모델 확보
 - 집약화된 반려동물 곤충사료 생산 단지 조성으로 미래 산업 선점화
 - 미래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소재로 활용되는 곤충에 대한 연구기능 및 산업화 기반 구축이 절실함
- 지역 선정 근거

- 곤충산업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강원도 인제군에 농생명신소재 연구소 조성이 바람직함
- 이에 인제의 입지적 여건을 감안하여 임업 연계 곤충 사육에 대한 연구도 바람직함

● 사업추진 필요성

- 국내 사료시장 10조 원, 곤충사료시장 1천억 원(2018년)으로 양 시장은 급성장 하고 있으며, 미래의 먹거리 및 다양한 영양과 기능을 갖춘 식용곤충의 양육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발굴 필요
- 곤충의 풍부한 영양학적 가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고른 영양소, 비타민과 무기질 다량 함유한 고급영양
- 경제성: 10kg 사료 투입당 산출량은 소 1kg, 돼지 3kg, 닭 5kg, 곤충 9kg 건조한 가루 단위당 단백질 양: 곤충 19~22%, 생선 18.1%, 소 14.97%, 돼지 15.03%
- 국내 사료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수입대체 산업화
- 곤충산업의 경제적 가치(2019년 1,570억 원, 2025년 2,980억 원 추정, 한국농촌경제연구소)의 밝은 전망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3년(2020~2022)
- 사업예산: 200억 원
- 주요 사업 내용
 -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연계 개발(현재 식용곤충은 7종류, 향후 증가 전망)
 - 곤충을 활용한 기능성 프리미엄 국산사료 개발로 농업 5대 융복합프로젝트인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기여
 - 농업 5대 융복합프로젝트인 곤충 이용 식품 및 의약소재 개발 추진

● 기대 효과

- 신성장 동력 산업분야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 곤충 생산 및 가공의 메카로 조성하여 농민소득 증진에 기여

다.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산악 휴양생태 레저 관광 육성

● 사업선정 근거

- 접경 지역 가운데 인제 지역은 전체 접경 지역 가운데 가장 산림 비율이 높은 곳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천연 생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인제 지역은 연간 2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 관광자원인 자작나무 숲을 비롯하여 산촌 민속 박물관 등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쥔 트랙, 산악 번지, 래프팅 등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다수 방문하는 곳임
- 인제군에서는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촌 체험마을, 약초산업, 도시 조경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악 레포츠 또한, 다양하게 진행되고 개최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여건을 기반으로 휴양·생태 레저 클러스터의 테마로 산악 휴양 생태레저 관광 육성 사업 추진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 필요성

- 최근 청정 생태 관광과 힐링, 휴양 등을 연계하고 예방 의학과 대체 의학 영역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웰니스(Well-being과 Happiness, fitness를 포함하는 개념) 관광이 큰 관심을 끌고 있음
- 생태 자원의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접경 지역 환경을 배경으로 휴양, 생태, 레저 스포츠 산업까지를 접목한 관광 클러스터 조성은 지역 산업 발전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강원도 접경 지역의 보존 가치 높은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한 휴양 및 레저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 테마관광 육성 사업’ 공모에 지원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육성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됨
- 생태 테마관광 육성 사업은 2016년부터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전환되어 인문학 스토리가 접목된 관광 상품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시설 43곳을 선정하여 기반 구축 작업을 실시 중이며 지역의 특색 있는 웰니스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지원 사업도 2018년도부터 실시 중임
- 2018년에는 경상남도, 2019년에는 충청북도가 각각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한 곳의 지자체

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복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경상남도는 산청, 함양, 함천, 거창, 통영, 거제, 고성 등이며 충청북도는 충주, 제천) 접경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본 제안 사업에 가장 적합한 실행 모델로 판단됨

- 접경 지역 가운데에 산악 자원이 가장 풍부한 인제 지역은 클러스터 가운데에서도 산악 휴양·생태관광을 주요 테마로 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외부 공모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하여 대표적 생태 관광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예산

- 현재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총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본 제안 사업은 기존 웰니스 관광 내용에 역동적인 산악, 익스트림 스포츠 관광 분야가 추가되고 초기 기반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만큼 약 10억~12억 원 정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며 이 가운데 40~50% 정도의 국비 편성이 필요할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 테마 관광 육성 사업’의 경우는 공모 과정을 거쳐 국비와 지자체 비용 포함하여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며 컨설팅, 마케팅 지원이 함께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형태임
- 이 밖에도 열악한 숙박업소 현황의 개선, 휴양을 위한 의료 시설 유치, ‘(가칭) 생태 레저산업 진흥재단’ 설립 등도 검토 대상임

2.14 양구군

가. 첨단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

● 선정 근거

● 사업선정 근거

- 접경 지역에 친환경 농특산물 물류유통단지 조성 및 친환경농특산물 수급 연계로 접경 지역 중심시장 역할 필요
- 군납, 학교급식 등 대량 수요처 발굴/판매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요함

● 지역 선정 근거

- 양구군은 주요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친환경농업 대상 5년 연속 수상)
- 지자체 차원에서 물류유통단지 검토 중
- 해체 예정인 2사단 부지 활용으로 실현성 제고 및 지역 경제 침체 극복

- 향후, 개설 예정인 동서 고속철도와의 연계로 물류체계 향상 기대

● 사업추진 필요성

- 접경 지역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친환경농산물 선호도 급증에 맞춰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산에 기여
- 친환경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하여 시장가격 변동에 대응하며 친환경 농가 소득 안정화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4년(2021~2024)
- 사업예산: 300억 원
- 주요 사업 내용
 - 물류창고 및 연계 시스템(집배송장, 저온저장고, 선별포장, 업무 시설 등) 구축
 - 친환경 농산물공판장 조성 및 상시 거래 체계 구축
 - 지역권 및 수도권 배송 물류기지 역할
 - 군대, 학교 등 단체 대량급식소 식자재 공급 체계 조성
 - 농특산물 홍보 및 고객 편의 제공 공간 조성

● 기대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 친환경농산물 물류 유통 중심지화로 인한 생산 증대 효과
 - 친환경농산물 가격 안정화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안정화
 -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센터 직접 및 간접 고용 창출 효과
- 남북교류 협력
 - 친환경농산물 관련 남북 교류의 거점화

나.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농산물 연계)

● 사업선정 근거

- 피복, 식품, 비품 등 비무기 군수지원물자를 의미하는 전력지원체계산업은 '18년 기준으로 약 7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정됨

- 접경 지역은 전력지원체계산업의 수요처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
- 접경 지역은 국방2.0 개혁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 유희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 경제 침체 가능성을 최소화가 필요
- 전력지원체계산업은 민간 업체가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와 기업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시장 접근 필요성이 큼
 - 군납제품은 시중품과 단가 차이는 크지 않으나, 복잡한 사양으로 인해 다수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품질기준이 까다로움
 - 또한, 주로 영세 중소기업 중심인 접경 지역 제조업의 투자여력 부족으로 인한 제품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 해결이 필요함

〈표 VI-21〉 군 구매요구서와 시중품 사양서 비교

구 분		군 구매요구서 내용	시중품 사양서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사양, 가공법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 세부내용으로 인해 조달원 한정, 신규 업체 진입장벽으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규격만 명시하고 그 외 사양은 업체 자율 ◦ 최신 트렌드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품질로 경쟁
사례	꼬리곰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골추출액 5.5%(나트륨 12% 이하 사용할 수 있음) ◦ 쇠고기추출물 0.12%, 효모추출물분말 0.02%, 양파분말 0.01%, 포도당 0.2% ◦ L-글루타민산나트륨 0.02% ◦ 야채농축액 0.02%, 마늘분말 0.01% 등 ◦ 쇠고기추출물은 70Brix 이상 농축 사용 ◦ 야채농축액은 60Brix 이상 농축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제수, 소꼬리 15%(뉴질랜드산) ◦ 사골엑기스(뉴질랜드산) ◦ 마늘엑기스(중국산), 양념 등
	즉석쌀국수(사골맛스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성 크림: 18% 이상 ◦ 복합조미식품, 포도당, 사골파우더, 정제소금, 우골엑기스분: 각 10% 이상 ◦ L-글루탐산나트륨: 7%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골분말 2.2% ◦ 쇠고기농축분말 5.3% ◦ 정제소금(국내산), 포도당 ◦ 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 등

- 정부의 국방벤처기업 육성정책
 - 우수국방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대 및 고수준 기술개발사업 신설을 추진 중
 - 국방벤처지원사업 예산('18년 43.5억 원 → '20년 55.5억 원 → '22년 67.5억 원)
 - 국방벤처센터 수를 현재(8개)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과 국방비즈클럽 회원사를 대폭 확대 추진
 - 국방비즈클럽의 회원사 확대와 함께 '국방중소벤처협회(가칭)'의 회원사로 등록, 중소기업

관련 대정부 정책건의 및 소통, 세미나, 전시회, 공청회 추진, 기타 방위산업 및 수출 정보공유의 창구로 활용

● 사업추진 필요성

- 양구군 지역의 군부대 이전 부지에 식품 및 기타 생활용품 관련 중소벤처기업 입주센터, R&D 및 마케팅 지원센터 등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 수요처와 근접한 접경 지역의 유리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전력지원체계산업 육성 필요
 - 즉, 접경 지역에는 피복, 전투화, 식품 등 주요 전력지원체계 품목 관련 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동두천, 화천, 연천, 포천 지역의 군부대 이전 후 유휴 부지를 활용한 클러스터 조성 이 가능함
 - 또한, 인접 지역에 수요처인 군부대가 입지하고 있어 물류의 유리한 점과 제품개발과 실증시험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 자격 획득 및 선정의 폐쇄성과 까다로운 관련 절차를 일반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 지역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관 거버넌스 조직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3년
- 사업예산: 110억 원
 - 기업입주센터는 전력지원체계 관련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연구소 입주 공간 제공, 공동 활용 연구개발 장비 구축, 교육 등 지원
 - 전력지원체계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사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신제품의 개념 설계에서 시제품 생산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을 높임
-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지자체 연계 공동 또는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권고
 - 본 사업은 사업환경과 보유자원이 유사한 연천, 철원, 화천, 양구 등 4개 군 공동사업 또는 독립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며, 아래 표 예산계획은 단독사업 기준임

〈표 VI-22〉 양구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국고	지방비	민자	합계
전력지원체계 기업입주센터 건립	70	30	-	100
전력지원체계 중소벤처기업 R&D 및 마케팅 지원 사업	7	1	2	10
소 계	77	31	2	110

주: 정확한 예산추정은 더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다.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동·식물 생태관광 육성

▸ 이 사업은 화천군, 양구군 공동 사업으로 내용이 동일함

● 사업선정 근거

- 접경 지역 가운데 화천, 양구 지역은 DMZ과 함께 백두대간 등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 여건을 갖고 있어 희귀 동·식물 등 국내 최대의 생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화천 지역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동원하여 국내 최대 축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은 산천어 축제를 비롯하여 연꽃단지, 약초 마을, 토속 어류 생태 체험관, 수달 연구센터 등의 동·식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구 지역은 야생동물 생태관, 생태식물원, DMZ 자생 식물원 및 천문대 등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생태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접경 지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하천, 산림 자원, 해안 등을 활용한 휴양 관광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Outdoor 레저 스포츠 관련 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이후 웬만한 수도권에서는 1시간 반 정도면 이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업추진 필요성

- 최근 청정 생태 관광과 힐링, 휴양 등을 연계하고 예방 의학과 대체 의학 영역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웰니스(Well-being과 Happiness, fitness를 포함하는 개념) 관광이 큰 관심을 끌고 있음
- 생태 자원의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접경 지역 환경을 배경으로 휴양, 생태, 레저 스포츠 산업까지를 접목한 관광 클러스터 조성은 지역 산업 발전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강원도 접경 지역의 보존 가치가 높은 동·식물을 기반으로 한 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 테마관광 육성 사업’ 공모에 지원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육성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됨

- 생태 테마관광 육성 사업은 2016년부터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전환되어 인문학 스토리가 접목된 관광 상품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시설 43곳을 선정하여 기반 구축 작업을 실시 중이며 지역의 특색 있는 웰니스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지원 사업도 2018년도부터 실시 중임
- 2018년에는 경상남도, 2019년에는 충청북도가 각각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한 곳의 지자체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복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경상남도는 산청, 함양, 합천, 거창, 통영, 거제, 고성 등이며 충청북도는 충주, 제천) 접경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본 제안 사업에 가장 적합한 실행 모델로 판단됨
- 접경 지역 가운데에 천연 동·식물 자원이 풍부한 양구, 화천 지역은 클러스터 가운데에서도 동·식물 생태관광을 주요 테마로 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외부 공모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하여 대표적 생태 관광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예산

- 현재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총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본 제안 사업은 기존 웰니스 관광 내용에 역동적인 산악, 익스트림 스포츠 관광 분야가 추가되고 초기 기반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만큼 약 10~12억 원 정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며 이 가운데 40~50% 정도의 국비 편성이 필요할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 테마 관광 육성 사업’의 경우는 공모 과정을 거쳐 국비와 지자체 비용 포함하여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며 컨설팅, 마케팅 지원이 함께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형태임
- 이 밖에도 열악한 숙박업소 현황의 개선, 휴양을 위한 의료 시설 유치, ‘(가칭) 생태 레저산업 진흥재단’ 설립 등도 검토 대상임

2.15 고성군

가. 첨단농기계(드론) 클러스터 조성사업

● 선정 근거

- 사업선정 근거
 - 첨단농업 클러스터는 농업인력 감소로 인한 지원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및 첨단 농업장비 개발 및 활용 집적지를 통하여 농업생산력 제고 및 경쟁력 제고
 - 지역형(특산물, 지형 맞춤형) 드론 응용 및 활용(IT, AI 접목)에 중점을 둠
 - 농기계 개발/생산의 경쟁력 제고로 농기계산업을 활성화하며, 농업부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농기계산업 글로벌 4강 목표로 수출 산업화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지역선정 근거
 - 고성은 쌀 생산면적 등 노지농업 대상 지역으로 접경 지역 타 지역보다 우세
 - 접경 지역 중 고도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어 드론 적용에 유리함
 - 분산배치로 예정된 22사단 부지 활용이 가능함

● 사업추진 필요성

- 노지농업 평야를 중심으로 인구 감소 대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용 드론(토양 및 농경지 조사, 파종, 살포, 작물 모니터링, 관개, 작물 생육평가, 정찰 드론 등)에 3D, IT 및 AI 접목 등 첨단 장비 지원이 절실함
- 4차산업혁명 대응으로 드론농업(특산물 및 지형 맞춤형 드론 개발)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직, 교육 체계 및 설비가 필요함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4년(2021~2014)
- 사업예산: 300억 원
- 주요 사업 내용
 - 농업용 드론 및 각종 농업생산 장비 생산기지 조성
 - 첨단 농업기계 장기대여 시스템 구축
 - 농기계 활용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 농기계 수출 산업화

● 기대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 연구단지 내 농기계 관련 연구 및 활용 전문 인력 양성
 - 농업기계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농업분야 생산성 향상에 기여
- 남북교류 협력
 - 북한 농업부문 경쟁력 향상을 통한 식량 문제 해결

나.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해안 휴양생태 레저 관광 육성

● 사업선정 근거

- 접경 지역 가운데 고성 지역은 강원도 접경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해안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최북단 인접 지역을 보유하고 있음
- 고성 지역에서는 현재 보유 중인 해안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해중 경관지구 지정 등의 많은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 이외에 현재 보유 중인 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해안 레저 스포츠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면 종합적 관광 콘텐츠로 충분한 관광객 유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고성군에서는 이미 거진읍 현내면 죽왕리 해안을 중심으로 바다 카약, 스노클링, 서핑, 스킨 스쿠버 등의 다양한 생태 레저 이용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어 이러한 여건을 기반으로 휴양·생태 레저 클러스터의 테마로 해안 생태레저 관광 육성 사업 추진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 필요성

- 최근 청정 생태 관광과 힐링, 휴양 등을 연계하고 예방 의학과 대체 의학 영역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웰니스(Well-being과 Happiness, fitness를 포함하는 개념) 관광이 큰 관심을 끌고 있음
- 생태 자원의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접경 지역 환경을 배경으로 휴양, 생태, 레저 스포츠 산업까지를 접목한 관광 클러스터 조성은 지역 산업 발전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강원도 접경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보유한 해안자원을 기반으로 휴양 및 레저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 테마관광 육성 사업’ 공모에 지원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육성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됨
- 생태 테마관광 육성 사업은 2016년부터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전환되어 인문학 스토리가 접목된 관광 상품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시설 43곳을 선정하여 기반 구축 작업을 실시 중이며 지역의 특색 있는 웰니스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지원 사업도 2018년도부터 실시 중임
- 2018년에는 경상남도, 2019년에는 충청북도가 각각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한 곳의 지자체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복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경상남도는 산청, 함양, 합천, 거창, 통영, 거제, 고성 등이며 충청북도는 충주, 제천) 접경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본 제안 사업에 가장 적합한 실행 모델로 판단됨
- 강원도 접경 지역 가운데에 유일하게 해안 관광 자원을 보유한 고성 지역은 클러스터 가운데에서도 해안 휴양·생태관광을 주요 테마로 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외부 공모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하여 대표적 생태 관광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예산

- 현재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총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본 제안 사업은 기존 웰니스 관광 내용에 역동적인 산악, 익스트림 스포츠 관광 분야가 추가되고 초기 기반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만큼 약 10~12억 원 정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며 이 가운데 40~50% 정도의 국비 편성이 필요할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 테마 관광 육성 사업’의 경우는 공모 과정을 거쳐 국비와 지자체 비용 포함하여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며 컨설팅, 마케팅 지원이 함께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형태임
- 이 밖에도 열악한 숙박업소 현황의 개선, 휴양을 위한 의료 시설 유치, ‘(가칭) 생태 레저산업 진흥재단’ 설립 등도 검토 대상임

다. 해양바이오 벤처창업보육센터

● 사업선정 근거

-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적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이 매년 4~1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해양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기준 약 64~69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 전 세계 해양바이오산업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6년 기준 미국이 35.8%로 가장 높고, 이어 유럽(25.3%), 일본(13.6%), 한국(6.5%) 순
- 해수부, 해양바이오산업 적극 육성 방침
 - 체계적 자원 확보 기반 구축, 자원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등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2%, 선진국 대비 80% 기술수준 달성을 목표하고 있음
 - 해양바이오 기술의 사업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
 - 해양바이오산업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고성군 지역에 관련 업체 유치를 추진

● 사업 내용

- 사업추진기간: 3년
- 사업예산: 180억 원
 - 해양바이오 벤처창업보육센터는 해양바이오 관련 벤처창업 및 중소기업 입주 공간을 확보하고, 공동연구 및 시제품 생산 시설을 구축
 - 해양바이오 상용화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은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상용화기술개발 및 마케팅지원 사업이며, 향후 미래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초기 진입기업의 성공적 사업화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큼
 - 고성 해양바이오산업은 청정 동해바다 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 기능성 식품 생산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북한 건강식품연구개발기관과 남북경협 추진의 거점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음

〈표 VI-23〉 고성 해양바이오 벤처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국고	지방비	민자	합계
해양바이오 벤처창업보육센터 건립	105	45	-	150
해양바이오 상용화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21	-	9	30
소 계	126	45	9	180

주: 정확한 예산추정은 더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VII

결론

1. 연구결과
2. 연구결과 제언
3. 연구의 한계

VII 결론

1 연구결과

● (연구결과 1) 접경 지역 4대 대표산업 선정

+ 4대 대표 산업분야 선정 근거

- 접경 지역 산업 환경 및 기반을 STEEP PLUS 모형으로 분석, 농수산 분야(1차 산업)와 미래관광 산업분야(3차 산업), 접경 지역에 전국규모로 집적화된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첨단 미래 기술융합산업(2차 산업) 등 4개 대표 분야를 선정함
 - STEEP PLUS 분석: 거시적 차원의 다방면 대외 환경 분석에 유리하며, 합리적 사업타당성 분석 기반 구축이 가능한 강점을 보유한 분석 틀임. PLUS는 기본 STEEP에 실현 가능성, 지속성, 파급효과 등 요소를 추가하여 남·북한 교류 특성을 세부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장치임

평가항목	분석 내용			
	스마트 6차산업	첨단 미래기술 융합산업	섬유패션지식 융합산업	미래관광 산업
사회 (Society)	인도적 사회적 이슈: 식량 문제	인적 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기여	인적 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기여	상징성: 세계 평화 상징
기술 (Technology)	종자개량 첨단시스템	미래 신 성장 동력 산업화(4차 산업혁명 등)	지식(기술)기반산업으로 전환	융·복합 및 확장성 (미래기술 접목)
경제 (Economy)	북한: 비교우위 식재료 연구 로 한반도 농업발전 기여	미래 성장 가능성 보유 (산업라이프사이클 참고)	지역 경제발전 및 국가 균형 발전 도모 (지역특화 역량강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경 제적 파급력
환경 (Environment)	자연 친환경 생태의 활용	기술, 제품, 생산과정 등 사업 의 친환경성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 필요	천혜의 자연환경 보유
정치/정책 (Policy)	식량문제 해결로 정치적 긴장 완화	중앙정부/지자체산업육성, 남북교류 협력정책	지역특화 산업/남북협력 선 도산업 지위의 정책지원필요	가장 접근 가능한 교류 협력 분야
실현 가능성 (Feasibility)	북한 니즈 강한 분야	사업성과 창출 유리	북) 경제부흥동력 남) 시장/자원 확보로 Win-Win	생태 보존 원칙
지속성 (Sustainability)	협력 증진 후, 다시 후퇴하기 어려운 여건	사업실행 및 추진 효과의 지 속 가능성, 기업체감효과	생필품산업이자 최첨단 미래 지향적 산업	꾸준한 수요유입 생태보존 유지
파급효과 (Spread Effect)	남북교류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	접경 지역 특화 산업육성 및 남북교류 협력 파급효과	Made in Korea 글로벌 브랜드로 국가발전도모	상징성, 파급효과 연관 산업 동반성장 기대

● (연구결과 2) 접경 지역 특화 산업 선정

+ 접경 지역 4대 권역별 특화 산업

- 접경 지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구분
 - 1) 해양바이오산업벨트: 강화, 옹진, 김포
 - 2) 제조/지식산업벨트: 경기 북부 접경 지역, 강원 춘천
 - 3) 농축산임업벨트: 강원 접경 지역, 경기 연천

〈그림 Ⅶ-1〉 접경 지역 권역별 특화 산업



+ 접경 지역 15개 시·군별 특화 산업

- 접경 지역 특화 산업은 접경 지역 15개 시·군에 대한 심층적인 인터뷰, 자료 분석, 현장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STEEP PLUS, 지역혁신역량, 북한의 수용성 분석을 통한 추진 전략 도출
- 도출된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방안 수립
 - ① 접경 지역 특화 산업 발굴, 선정 및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
 - ② 접경 지역 특화 산업 연계 남·북한교류 협력사업 추진 방안
- 접경 지역 시·군별 특화 산업 및 육성방안 수립
 - 접경 지역 4대 대표 산업분야의 20개 특화 산업 및 남북교류 협력 사업 도출
 - 접경 지역 특화 산업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장기적으로 한반도 경제통합과 평화통일

Map of Gangwon-do showing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major industries. Callouts inclu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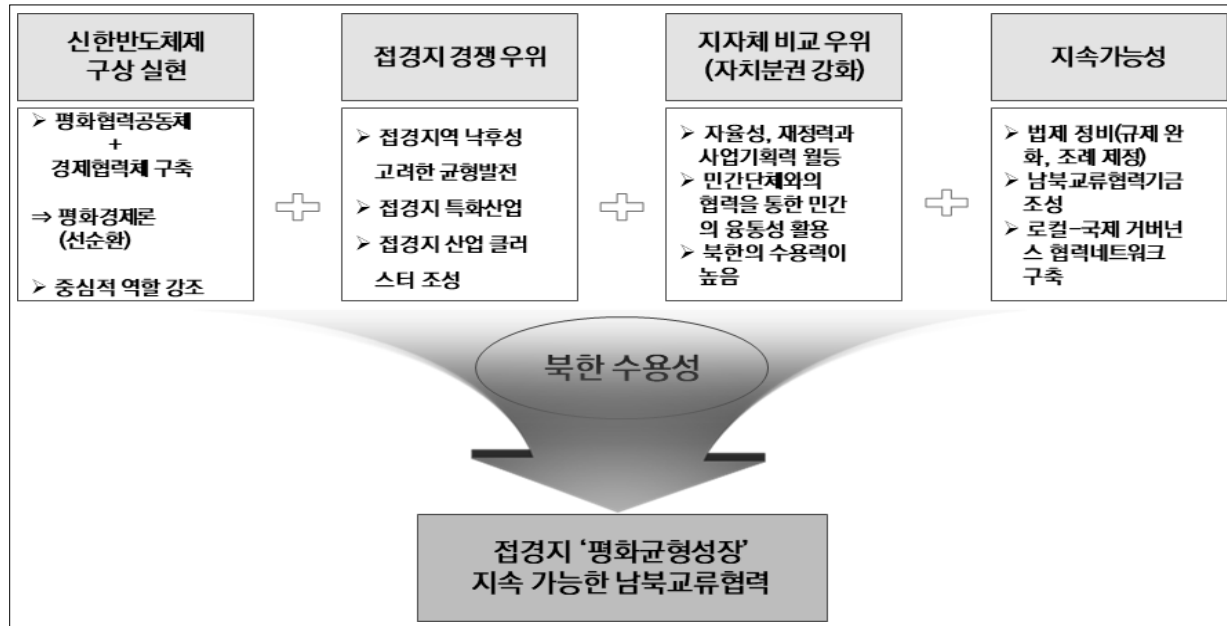
- 연천군 휴양레저관광 클러스터
- 양주시 K-뷰티테크노파크
- 파주시 만화애니메이션
- 김포시 상용전자자동차
- 강화군 스마트팜 단지
- 고양시 방송영상콘텐츠
- 옹진군 해조류사업
- 포천시 섬유신소재 클러스터(니트)
- 동두천시 섬유신소재 (피혁)
- 철원군 라이스밸리 조성
- 화천군 스마트팜 혁신단지
- 고성군 첨단농기계 클러스터
- 양구군 친환경농산물물류유통단지
- 인제군 곤충산업 테마파크
- 춘천시 수열에너지융복합 클러스터
- 강릉시
- 강원도

구분		분야별 특화사업			
		스마트 6차산업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섬유패션지식 융합산업	미래관광 산업
인천시	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d Gold (우뭇가사리 연구/양식장) 다시마 종묘/생산 시설 꽃게 종자 연구/생산 시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 관광 생활 SOC 구축 사업 - 접경 지역 도서 뉴딜 사업 도서 관광 활성화 사업 - 접경 지역 도서 블루 투어 지원 사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화-개성 인삼 협력사업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인삼, 토마토, 고추 등) 라이스밸리(강화쌀) 	남북호시무역산업단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 해안 누리길 조성 도서 관광 활성화 사업 - 국제 슬로시티 육성
경기도	김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물류유통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용전기자동차 클러스터 ICT 융복합 로봇·공장자동화산업 클러스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사업
	고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AI 산업 클러스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CE 인프라 구축 사업 - 산업형 Unique Venue 개발 사업
	파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 6차산업 클러스터 MICE 인프라 구축 사업

구분		분야별 특화사업				
		스마트 6차산업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섬유패션지식 융합산업		미래관광 산업
						- 산업형 Unique Vanue 개발
	양주	◦ 스마트팜 혁신단지	◦ K-뷰티 테크노파크 건립	섬유 패션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 스마트팩토리 시범 단지	◦ MICE 인프라 구축 사업 - 섬유 패션 유니크 메뉴 개발 사업
	포천	◦ 드론농업 클러스터	◦ 드론 클러스터 ◦ 가구산업 디자인/ 마케팅 지원센터		◦ 신소재개발/연구 지원	◦ 휴양·생태레저 클러스터 조성- 지오 투어리즘 육성
	동두천	-	◦ 전력지원체계산업클러스터(의류, 신발)			◦ MICE 인프라 구축 사업 - 섬유 패션 유니크 메뉴 개발 사업
	연천	◦ 농촌융복합산업테마파크 (농촌체험관광)	◦ 전력지원체계산업클러스터(식품, 생활용품)	-		◦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지오 투어리즘 육성
강원도	춘천	◦ 가족 종자/질병 연구소	◦ 수열 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		◦ 내수면 마리아 활성화 사업
	화천	◦ 스마트팜 혁신단지	◦ 전력지원체계산업클러스터(식품, 생활용품)	-		◦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동·식물 생태관광 육성
	철원	◦ 라이스(Rice)밸리 조성	◦ 전력지원체계산업클러스터(식품, 생활용품)	-		◦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지오 투어리즘 육성
	인제	◦ 곤충산업 테마파크 ◦ 농생명소재연구소	-	-		◦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산악 휴양생태 레저 관광 육성
	양구	◦ 첨단 친환경 농산물 물류·유통단지	◦ 전력지원체계산업클러스터(농산물 연계)	-		◦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동·식물 생태관광 육성
	고성	◦ 첨단농기계(드론) 클러스터	◦ 해양바이오 벤처창업보육센터	-		◦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해안 휴양생태 레저 관광 육성

● (연구결과 3) 남북교류 협력방안

+ 접경 지역 특화 산업의 남북교류 협력 연계 방안



+ 접경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북한 수용성 및 남북교류 협력방안

분야	접경 지역 특화 산업	북한 산업 정책	남북교류 협력방안
스마트 6차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D GOLD 사업 (우뭇가사리) 스마트팜 혁신단지 첨단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업은 식량난 해결과 외화획득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 담당 김정은 시대 수산생산 증산정책 표방 주민들의 영양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 강조 어선 건조사업, 양식장 개발이 중점 협력 아이템 해양산업(예, 우뭇가사리) 농업, 해양 종자산업 관심 농업생산인프라 구축 필요, 스마트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조직 구성, 전문성 및 역량 제고 법제 정비(국회 계류 법안 통과)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확대 조성과 재원의 다각화 남북관계 및 북한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단계적·점진적 협력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관계 경색 및 대북제재 상황 고려한 규모와 속도 조절
첨단 미래기술 융합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산업 & 미래산업 첨단소재부품산업 콘텐츠산업 프리미엄 소비재산업 가구산업 군수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제조업 생산 및 투자가 확대되어 원부자재, 산업용 기계 등의 수요 발생 (ICT 제조업) 김정은 집권 이후 제조업 역량 강화 국산화 정책, 과학기술중시정책에 따른 수용증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한 두 트랙(two-track)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을 통한 신뢰 형성(국제기구 및 제3국과의 협력) 대북제재 면제 사업의 발굴 및 우선 추진 남북교류 협력의 지속성 확보 및 근거 마련을 위한 기존 남북한 합의 사업들의 재검토 및 사업의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강하구 공동활용(예, 예성강~김포/강화 호시무역), 서해평화협력지대조성 등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특구, 도로, 철도 연결
섬유패션 지식융합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유패션 지식융합 산업 혁신클러스터 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신소재개발/연구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은 식품가공업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 경공업(의류공장 424개, 2017년 기준) 개성공업지구 연계 및 활용 김정은 시기 패션의류산업 장려 	

분야	접경 지역 특화 산업	북한 산업 정책	남북교류 협력방안
미래관광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 관광 산업 ◦ 해양 관광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원산갈마, 삼지연 등) ◦ 대북제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 ◦ 9.19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사항으로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 ◦ 북한 당국의 생태관광 중요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관광 및 금강산 관광 재개(개별관광 방안 마련) ◦ 로컬 거버넌스 중심의 협력네트워크 구축(협의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담보로 한 '접경 지역 남북교류 광역협의체 구성' - 국제기구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 북한의 수요 반영 및 수용 가능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 협력의 가능성과 효율성 제고 - 북한 내 협력기반 조성 지원 - 북한 주민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주민 생활 개선위주의 교류 협력방안 모색 - 중국 변경무역제도 검토

● (연구결과 4) 접경 지역 법·제도 규제 개선방안

+ 역점 특화 산업별 예상규제

스마트 6차산업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섬유판선 지식융합산업	미래관광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Gold(우뭇가사리)사업 ◦ 다시마 종묘/ 생산 시설 ◦ 꽃게 종자 연구/ 생산 시설 ◦ 스마트팜 혁신단지 ◦ 첨단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 ◦ 라이스(Rice)밸리 조성 ◦ 곤충산업 테마파크 ◦ 가축 종자/질병 연구소 ◦ 첨단농기계(드론) 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뷰티 테크노파크 건립 사업 ◦ 강화교동평화산업 단지 ◦ 상용전기자동차 클러스터 ◦ ICT 융복합 로봇·공장 자동화산업 클러스터 ◦ 방송영상콘텐츠 클러스터 ◦ AI 산업 클러스터 ◦ 만화애니메이션 클러스터 ◦ 가구산업 디자인/ 마케팅지원센터 ◦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 해양바이오 벤처창업 보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 패션 산업 혁신클러스터조성 ◦ 봉제혁신공장(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조성 ◦ 신소재 개발/연구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양·생태레저 클러스터 조성 ◦ 도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정비계획법(성장관리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 공장 총량제 ◦ 접경 지역 내 각종 부담금 ◦ 도로점용료 규제 ◦ 군사시설보호구역 ◦ 환경 규제(특정유해물질 배출기업 제한) ◦ 접경 지역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정비계획법(성장관리권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공여구역) ◦ 환경정책기본법(팔당 특별대책지역) ◦ 한강수계법(수변구역) ◦ 수도법(상수원 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 바이어의 환경경영 요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공여구역)

+ 접경 지역 법·제도 규제 개선방안

- 스마트 6차산업 분야: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으로 낙후된 접경 지역 수도권에서 제외
-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분야: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 산업단지 공장설립 활성화를 위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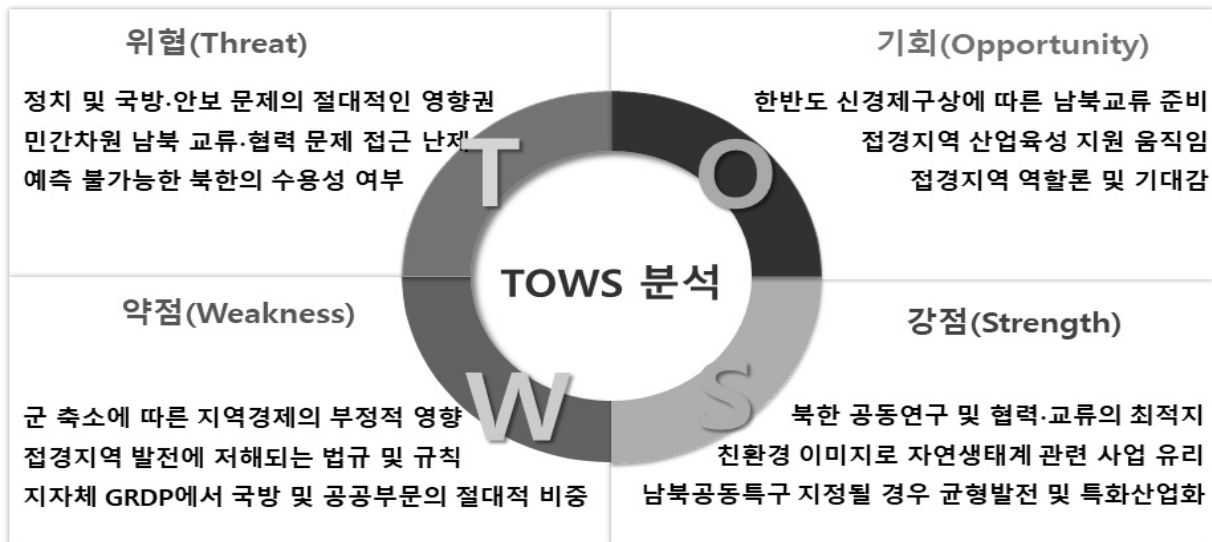
로점용료 규제 개선, 군사시설보호구역 의무 해제

- 신소재섬유패션융합분야: 공여구역 등의 반환 시 지상물 철거 규정 완화, 특정유해물질 배출 기업 제한대상시설 완화, 접경 지역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 배정
- 미래관광 산업분야: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및 해제, 민통선 내 안보관광지 접근도로 통행 완화, 인제군 가전리 DMZ 상시 출입 승인
- 농업진흥지역 조정 및 해제: 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재조정
- 접경 지역 특화 산업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규제의 부분적·일시적 허용 추진
-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사전규제)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사후규제)으로의 전환 추진

2 연구결과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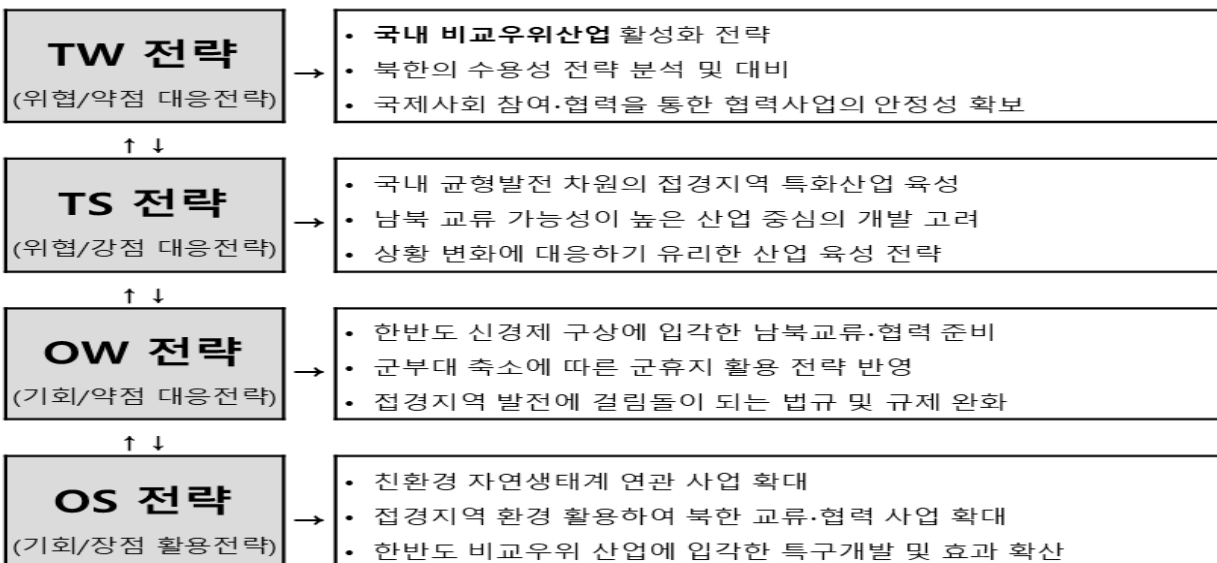
2.1 TOWS 분석

- 접경 지역 산업육성 및 남북교류 분석에는 내부 요인보다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이 훨씬 크므로 SWOT 분석보다 외부 요인을 강조하는 TOWS 분석이 적합함
- 외부 요인인 위협(T)과 기회(O)를 먼저 분석하고, 내부 요인인 약점(W)과 강점(S)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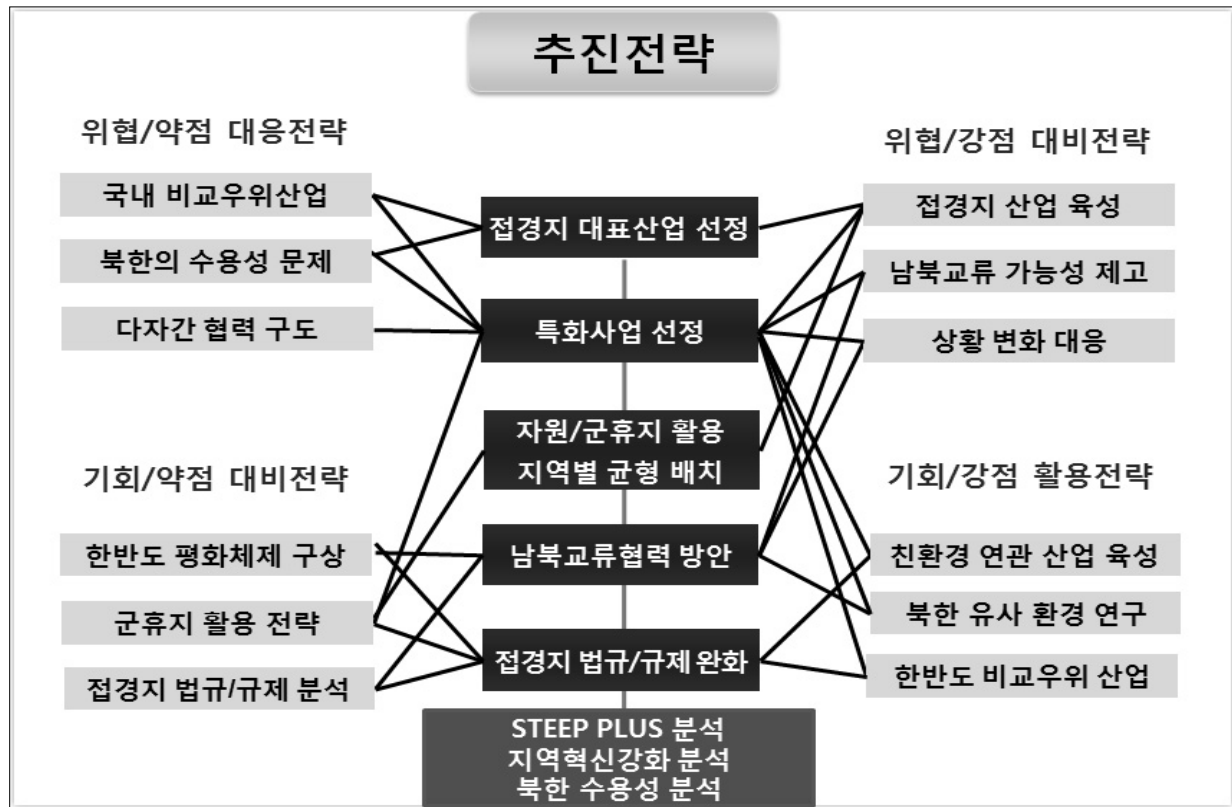
2.2 TOWS 분석 기반 대응 전략

- TOWS 분석에 따른 대응전략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2.3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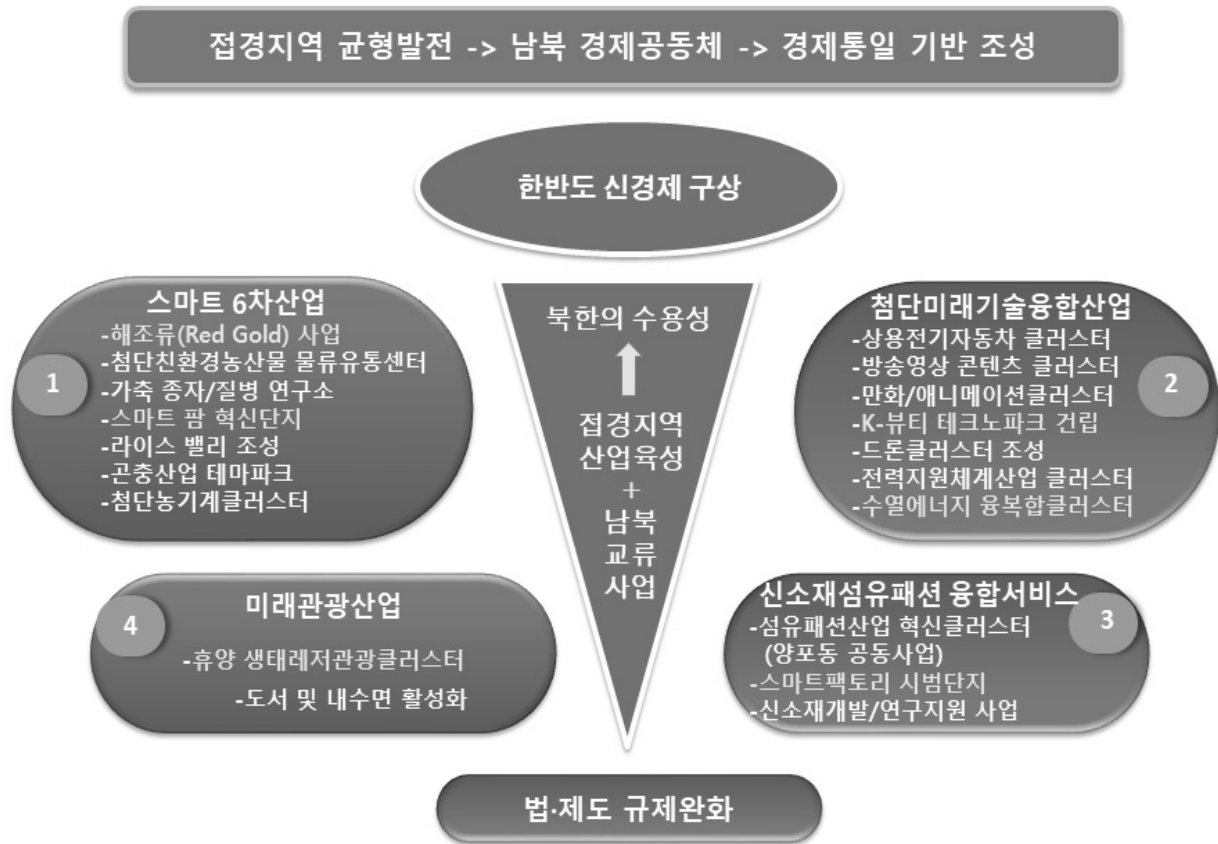
- 대응전략을 5개의 추진 전략으로 정리함



- 4개 부문의 대응전략을 정리하여 STEEP PLUS(거시분석), 지역혁신역량강화(미시분석), 북한 수용성(실현성) 등 3개 분석 틀을 기반으로 접경 지역 산업육성 및 남북교류를 위한 5개 추진 전략을 개발하고 본 보고서에서 적용함
- 접경 지역 대표산업을 농축수산업식품 분야,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분야, 섬유패션 분야, 미래관광분야 등 4개 특화 산업분야를 선정함
- 4개 대표산업분야에서 특화사업을 선정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함
- 접경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고 군 축소(2개 군단 6개 사단 규모)에 따른 군 휴지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특화 산업 육성의 기회로 국내 및 한반도 비교우위 기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특화사업의 지역별, 시·군별 균형배치 및 육성으로 접경 지역 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남북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함
- 접경 지역으로써 제한된 법규와 규제를 분석하고, 이의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시장 경제에 입각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함

2.4 비전 설정

〈그림 Ⅷ-3〉 접경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균형 발전 장기 비전 체계도



● 접경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남북교류 협력 기반 구축의 장기비전 설정

- 4개의 접경 지역 대표산업분야 육성으로 국내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동시에 접경 지역 중심의 남북교류 협력 나비효과로 한반도 경제 공동체 조성하고, 나아가 남북 경제통일 기반 조성을 달성하고자 함
 - 추진 전략 및 3개 분석 틀(STEEP PLUS, 지역혁신역량, 북한의 수용성)을 기반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표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산하에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법규/규제 완화의 생태 조성 및 정책지원을 추진력으로 접경 지역 산업육성 및 남북협력교류 사업에 선택/집중하여 북한의 수용을 유인함으로써 남북 경제 공동체 조성으로 미래의 한반도 경제통일 기반 조성을 구현하고자 함
 - 접경 지역 법규/규제 완화의 추진력으로 스마트 6차산업,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섬유패션 및 미래관광 산업의 20개 특화사업 추진 및 남북교류를 통해 나비효과로 타 분야로 파급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이바지하며, 나아가 한반도 경제통합 체제 조성을 통해 미래 한반도 평화통일의 연착륙을 구현하는 미션을 실현함

-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 경제수준과 4차산업혁명시대의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접경 지역 특화 산업 육성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음
- 접경 지역 균형 발전은 남북경제 공동체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중요하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접경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투자지원 확대가 필요함

2.5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

● 스마트 6차산업분야

- 식량부문(스마트 6차산업분야)은 남북교류 협력의 근간이 될 수 있으며, 남북 연계의 바람직한 테마가 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집중이 요구됨
- 식량부문은 한국이 우위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교류에서 리드해나갈 수 있으므로 정부 및 접경 지역 지자체의 장기적인 플랜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식량부문에서 한반도 비교우위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향후 인구감소 및 기후변화에 대한 남북공동연구와 산업측면의 첨단화 노력이 절실함

●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분야

-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분야는 전국적으로 산업생태가 유사한 경향이 있음
- 예를 들면 기업이 영세기업으로 출발해서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술 혁신, 첨단고부가가치화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
- 따라서 기업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위한 R&D, 제조혁신 부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함
- 안산 시화공단, 구미공단, 오성바이오단지 등 특화 산업단지 조성이 생태조성에 바람직하므로 산단 조성 및 그에 따른 기업 유치에 집중함이 바람직함

●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분야

- 양주·포천·동두천지역은 국내 섬유 패션 산업의 주요 생산·집적지이며 경기 북부의 지역 특화 산업일뿐 아니라 최적의 남북경협 대안으로 전망되고 있음
- 따라서 혁신클러스터조성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공장시스템 구축 및 신소재 개발을 통해 혁신성장의 동력 및 미래지향 산업의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신평화체제 하에서 선도적 산업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미래관광 산업분야

- 기존 관광 산업이 잘 짜여 있어,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스팟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관광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대부분의 지역관광 및 축제가 한 단위의 지자체 기반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데, 접경 지역에서는 인접 지자체 연계 합동 축제 혹은 합동 관광 사업 확산이 바람직함
- 본문에서는 기존 생태보존 유지를 기반으로 사업제안을 해 왔으며, 이러한 기초는 계속 유지되어야 함. 예를 들면, 산악자원을 활용한 스포츠시설 구축 등

2.6 접경 지역 6대 핵심추진 특화사업 제언

- 본 연구는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 및 남북교류기반 구축 관점에서 접경 지역 특화 산업을 발굴하고 추진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도출된 특화 산업을 접경 지역 15개 시군별 특화 산업을 제안하고 있음
- 접경 지역 시군별 특화 산업은 시군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접경 지역 전체의 균형 발전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6대 역점 추진 특화사업을 제안함
 - 접경 지역 5대 핵심추진 특화사업은 본 연구에서 발굴한 사업 중에서 사업추진 파급효과가 높고 지속가능성 및 실현 가능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업을 선정한 것이며, 나머지 사업들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접경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밝혀둠

〈표 Ⅶ-2〉 접경 지역 6대 핵심추진 특화사업

산업 분야	사업명	사업 내용
해양산업	① Red Gold(우뭇가사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을 포함한 14개국 전문가 중심의 R&D 지원 ◦ 웅진군-마라도 간 공동해양융합연구센터 설립 ◦ 우뭇가사리 육상양식장 및 가공산업단지 조성
농식품산업	②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단지 기반 조성 ◦ 보육/교육: 교육형 실습농장, 경영형 실습농장 ◦ 생산유통: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 APC ◦ 기술혁신: 공공실증구역, 자율실증구역, 전시체험센터 등
첨단 미래기술융합 산업	③ K-뷰티 테크노파크 건립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관련 기업 입주공간 건립 ◦ 화장품 신기술 R&D, 마케팅, 인력양성 지원 및 체험형 K-뷰티 전시장 건립·운영 ◦ 지원대상 범위를 양주시 등 경기 북부지역 및 춘천지역 관련 업체까지 포함하는 사업으로 추진
	④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열 에너지 기반 클라우드 비즈니스 플랫폼 융합단지 ◦ 수열 에너지 기반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 수열기반 물기업 특화단지 조성 ◦ 에너지자립형 스마트 생태주거단지

산업 분야	사업명	사업 내용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⑤ ‘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제산업 스마트팩토리 ◦ 빠른 리드타임, 다품종소량생산 실현 ◦ 양포동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원가/품질 경쟁력 강화
미래관광 산업	⑥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 러스터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지역을 대상 ◦ 기존 사업과 연계 또는 신규사업으로 추진: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광두레 지원 사업, 어촌 뉴딜 300 지원 사업, ‘내수면 마리나 조성 지원 사업, 해안 누리길 선정 사업 등 ◦ 휴양·생태 레저 관광 진흥재단’의 설립

1) Red Gold(우뭇가사리) 사업

+ 사업제안내용

- 스마트 6차산업 분야에서 접경 지역 핵심 특화 산업은 해양산업이며, ‘Red Gold(우뭇가사리)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접경 지역 핵심 특화사업으로 제안함
- 이는 본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스마트 6차산업 분야 9개의 특화사업 후보군에서 최종 2개 특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현장전문가 평가 결과(STEEP PLUS 분석, 본문 162쪽)와 혁신역량 분석(본문 165~166쪽)에서 9개의 특화사업 후보군 중에서 각각 1위로 평가되어 핵심 특화 산업(해양산업) 및 특화사업(Red Gold 사업)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됨
- Red Gold 사업은 모로코 생산량 감축에 의한 전세계 우뭇가사리 가격 급등 현상에 Red Gold라는 닉네임이 붙여진 우뭇가사리 관련 사업으로, 인천시 옹진군의 접경 지역 균형 발전 산업육성 및 남북교류 협력방안으로 제안되었음
- 민간차원의 산업기술교류를 통한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접경 지역 신산업 발굴 및 육성, 그리고 지역 소득 증대 방안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
- Red Gold 사업의 평가
 - Red Gold 사업은 한반도의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해양소재산업 기반으로 다양한 가공산업 연계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글로벌 비교우위 강화 및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핵심 사업임
 - 남북협력사업의 관점에서도 인천시 옹진군 및 민산관학연 중심의 R&D와 양식 기술에 북한 마합도의 우수한 소재의 결합으로 남북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에 다국적(14개국) 협력 체계로 연구개발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 북한의 수용성이 확보된 상황임

+ Red Gold 사업의 지원 방안

- 현재 준비 중인 남북공동 해양 글로벌프로젝트의 지원으로 남북한을 포함한 14개국 전문가 중심의 R&D 과제의 수행 지원
- 웅진군-마합도간 공동해역종합연구센터 설립 지원
- 혁신적 기술플랫폼 구축 지원으로 우뚝가사리의 양식화 연구 지원
- 우뚝가사리의 공급조절 및 국제시장의 수급 균형을 꾀하고자 육상 공동 양식장 조성 지원
- 우뚝가사리와 연계된 한천, Agar, Agar Rose, 치매개선제, 화장품, 식품, 숯, 활성탄 등 다양한 가공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가공산업단지 조성 지원
- Red Gold를 중심으로 한반도 해조류 평화 벨트 구축하여 남북교류 협력의 확산 및 성공적 정착 지원

〈핵심 추진사업 선정 이유〉

핵심 특화사업	선정이유	역량 보유 현황
Red Gold 사업 (우뚝가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소재산업 기반 다양한 가공산업 확산 가능(OSMU) ◦ 남북협력사업으로 글로벌 비교우위 및 국제경쟁력 확보 ◦ 다국적(14개국) 협력체제로 북한의 수용성 확보 및 연구 개발 준비 완료 ◦ 민산관학연의 혁신적 합동 개발사업화 가능 및 산업규모 확산 ◦ 가시적 효과 가능성 매우 높음 ◦ 해조류산업 등전반적인 파급효과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 인적 자원 역량 보유 ◦ 북: 우수한 원천소재 및 자원 보유 ◦ 남북협력의 시너지 효과 ◦ 글로벌 관심/인적 자원 지원 ◦ 민산관학연 혁신역량 결집

2)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 사업제안내용

- 스마트 6차산업 분야에서 접경 지역 핵심 특화 산업으로 농식품산업을 들 수 있으며, 강화군의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을 접경 지역 역점 추진 특화사업으로 제안함

+ 지원방안

- 스마트팜 단지 기반 조성
- 보육/교육: 교육형 실습농장, 경영형 실습농장
- 생산유통: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 APC
- 기술혁신: 공공실증구역, 자율실증구역, 전시체험센터 등

〈핵심 추진사업 선정 이유〉

핵심 특화사업	선정이유	역량 보유 현황
스마트팜 혁신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화군 GRDP 중 농어업 비중 13.5% (약 1,330억 원) 인력 문제로 시설농업 접목 및 확대 필요 시설재배에 적합한 다양한 특산물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화군의 다양한 농특산물 보유(16종) 스마트팜 적합품목: 토마토, 고추, 오이, 고구마, 인삼, 백도라지, 순무 등

3) K-뷰티 테크노파크 건립 사업

+ 사업제안내용

- 접경지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분야 역점 특화사업은 ‘K-뷰티 테크노파크 건립 사업’을 제안함
 - K-뷰티 산업은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12대 신산업분야 중 하나인 프리미엄소비재산업으로써 미래성장산업이며, 한류문화의 글로벌화에 힘입어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지역에서 수요시장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관련 중소기업 및 신규 창업기업의 진입 수요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 화장품산업 국내시장규모는 약 120억 달러이며, 수출은 연간 63억 달러로 세계 4위('18년 기준)
 - 국내 화장품산업 종사자는 약 23만 5천명('18년 추정)이며, 제조업체 수는 2,244개에 달하나 매출액 50억 원 미만이 전체의 97%
 - K-뷰티 테크노파크 건립은 기존 K-뷰티 관련 기업의 역량 강화와 신규 벤처창업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접경 지역 산업구조를 미래성장산업으로 혁신할 것으로 기대됨
 - K-뷰티를 포함하는 프리미엄 소비재산업은 제조업 중에서 투자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임
 - 투자 10억 원당 취업유발효과 프리미엄소비재산업 10,128명, 바이오헬스 9,304명, 전기자율차 7,860명, 항공드론 7,035명, 첨단신소재 5,626명 순(출처: 국회예산정책처)
- K-뷰티 테크노파크는 뷰티 서비스, 제조업 및 뷰티 연관 산업 전반을 총괄하여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뷰티산업 생태계 기반의 허브 역할 수행함
 - 뷰티산업 트렌드를 선도 보급하여 국내 뷰티산업의 구심점 및 산업 발전의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
 - 뷰티산업 기술개발기반을 확보하고, 다양한 연구 정보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 뷰티산업 선도기업과 스타기업을 육성

+ 지원방안

- K-뷰티 테크노파크 건립 후보지로 본문에서는 교통 여건과 배후도시 등 연구인력 확보와 관련 기업 유치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양주시를 추천하고 있으나, 경기 북부 접경 지역 및 춘천도 후보지로 가능함
 - 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주테크노밸리 내 또는 양주 26사단 이전지역에 건립
 - 경기도 접경 지역의 화장품 생산업체는 김포(49개), 파주(46개), 고양(45개), 포천(14개), 양주(10개), 연천(2개), 동두천(1개) 등(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 장기적으로는 산업 범위를 좀 더 확장하여 소형전기용품, 어린이용품 등 생활소비재까지 포함하여 프리미엄소비재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비전을 수립하여 접경 지역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 핵심 품목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음
- K-뷰티 테크노파크는 관련 중소기업 입주공간, R&D 지원,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체험형 K-뷰티 전시장 건립 등 추진

4)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 사업제안내용

- 접경지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분야 역점 특화사업으로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제안함
-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소양강댐 저온냉수 수열 에너지를 활용하여 데이터 센터, 스마트팜, 주택 등에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임
- 인터넷 및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며(’24년까지 연평균 27% 증가), 수열 에너지 기반 클라우드 센터는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 센터 유치 전망이 밝음
- 소양강댐 수열 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시 기대 효과
 - 냉방전력 절감: 123,240mwh/년 / 16,021백만 원/년
 - 총 절감량은 춘천시 약 26,520가구가 소비하는 연간 전력량과 동일수준
 - CO₂ 감소량: 57,461tCO₂eq/년 / 1,178백만 원/년

+ 지원방안

-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후보지로는 소양강댐과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춘천시를 추천함
-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시, 데이터 센터, 스마트팜 등 연관산업 유치

활성화 및 수열 에너지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주요 투자시설로는 수열 에너지 기반 클라우드 비즈니스 플랫폼 융합단지, 수열 에너지 기반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에너지자립형 스마트 생태주거단지 등

5) ‘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조성사업

+ 사업제안내용

- 섬유패션 분야에서 ‘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역점 추진사업으로 제안함
- 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노동력에만 의존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인력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또한, 패션소비자의 소비행동의 변화(개성화, 개인화 등)에 따른 ‘빠른 리드타임’, ‘다품종소량생산’을 실현해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양포동 지역에 발전한 니트, 염색가공 부문에서 스마트팩토리가 실현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봉제부문에서 가장 활발하고 앞선 기술이 접목·시도되고 있고, 양포동 지역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의 ‘다운스트림 강화’의 차원에서도 ‘봉제 스마트팩토리’가 선제적으로 시도되는 것이 현실적임
- 봉제 스마트팩토리는 봉제산업이 집중·발전되어있는 **서울시와의 연계**하여 협업 및 분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체 섬유 패션 산업 발전에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시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형태(**개성공단 스마트팩토리 공동개발 및 남한연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존 섬유 패션 산업 지원 정책 활용을 통한 특화 사업 추진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섬유 패션 산업 발전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Premium! Top 5’는 대구 지역으로 편중 및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있음
- 염색, 봉제, 신발 제조 공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봉제’ 분야는 국내 최대 집적지이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곳은 서울·동대문’임. 특히, 봉제산업과 같은 다운스트림 산업은 ‘짧은 리드타임’이 최고의 경쟁력임. 따라서 최대의 패션 소비지역인 대도시(서울)와의 인접성, 그리고 기획력을 갖춘 패션(제조/유통/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인프라가 중요시됨. 따라서 대구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에 지원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임.
- 양포동은 서울에 집중되는 개발 및 발전의 방향을 우회하면서도 소비지역과 인프라의 강점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일 뿐 아니라 남북 교류시 평양(북한 최대의 패션소비지역)과의 근접성 및 서울-평양의 중간지점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 따라서 양포동 지

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경기 남부의 IT 스마트 클러스터뿐 아니라, 추진 중인 경기 북부의 양주 ‘테크노밸리’와의 연계성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사업은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즉, 낙후된 접경 지역의 활성화, 경기지역 그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 나아가 한반도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지원 사업 검토를 통한 특화 사업 활성화

- 현재 기술적 차원의 검토 및 전문 인력의 확보·양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한 R&D 지원 사업과 전문 인력(섬유패션분야의 생산관리 및 디지털 기술 부문) 양성에 대한 민관차원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지원이 시급함
- 섬유패션 교육기관의 ‘생산관리 부문의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이고 생산부분 전문 인력(봉제/패턴/피팅등)에 대한 프로그램은 줄어드는 실정임. 따라서 교육기관들의 마케팅 및 산업 부문이 보완된 현실적인 생산·제조·기획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강력하게 권고되어야 함
- 전문 인력 유치를 통한 전문 연구소 마련,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제품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된 지원정책 시급함

6)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 사업제안내용

- 접경 지역 특화 산업은 관광 산업 분야에서 생태 관광 산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이를 추진하는 구체적 사업으로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제안함
- 관광 산업 분야에서 제안하는 4대 특화 사업(DMZ 생태·평화 도보 여행길 조성사업,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 도서 및 내수면 활성화 사업) 모두 휴양·생태 레저 관광 관점에서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으며 이를 생태 관광벨트 개념으로 종합할 수 있음
-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은 생태 관광자원이 가장 풍부한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지역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관광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재구성 및 종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활용하여 접경 지역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레저 관광 개념이 추가되었으므로 신규 사업으로 발굴도 가능함

- 또한, 핵심 특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휴양·생태 레저 관광 진흥재단’의 설립 검토를 제안하며 해당 기관의 소재지는 언급된 7개 대상 지역 가운데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존 관광 산업 지원 정책 활용을 통한 특화 사업 추진

- 접경 지역 전반의 생태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 지원 정책 가운데 접경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야 함
- 해당 지원 정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두레 지원 사업’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 중인 ‘어촌 뉴딜 300 지원 사업’ 및 ‘내수면 마리나 조성 지원 사업’과 ‘해안 누리길 선정 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관광두레 지원 사업’은 ‘DMZ 생태·평화 도보 여행길 조성사업’에서 해당 지역의 지역 사업체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며 ‘어촌 뉴딜 300 지원 사업’ 및 ‘내수면 마리나 조성 지원 사업’과 ‘해안 누리길 선정 사업’은 ‘도서 및 내수면 활성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평가됨
- 이들 사업은 여러 지자체와 해당 지역들을 선정하여 이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 접경 지역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의 방식으로 우선 배려하는 방법을 제안함

+ 신규 지원 사업 검토를 통한 특화 사업 활성화

- 현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분야 가운데 적극 검토가 필요한 분야로는 ‘국제 슬로시티 지정’에 대한 지원이 있음
- 해당 사업은 지자체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 확보 등 높은 산업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국회에서도 ‘슬로시티 포럼’을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저 출산 추세로 인해 지자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국제 슬로시티’ 지정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됨

✦ 미래관광 산업 분야 핵심 추진 과제 요약

관광 산업 분야			
핵심 특화 산업	생태 관광 산업		
핵심 특화 사업	휴양·생태 레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세부 추진 방법	대상 지역	협업 부처
관광 클러스터 조성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업 활용 또는 신규 지원 사업 검토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기관설립	휴양·생태 레저 관광 진흥재단 설립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中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기존 지원 사업 활용	관광두레 선정	웅진, 김포,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화천, 고성	문화체육관광부
	어촌 뉴딜 300 선정	강화, 웅진, 김포, 고성	해양수산부
	내수면 마리나 선정	강화, 웅진, 김포, 춘천 등 내수면 보유 지자체	해양수산부
	해안누리길 선정	강화, 웅진 등 해안 도보길 보유 지자체	해양수산부
신규 지원 사업 검토	국제 슬로시티 지정 지원	강화군 등 해당 지정 추진 지자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공동 협의

2.7 특화 산업 연계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 실행 가능성 검토

- 북한의 경제 및 산업 현황, 경제개발구 개발 정도 등을 고려한 수용력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접경 지역 특화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됨
-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 정도와 경제개발구 정책을 활용한 남북교류 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북한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함
- 현재까지는 북한 접경 지역의 산업협력기반 조성 미비로 인해 관련 산업 지역 및 대도시 지역에 우선해야 하며, 북한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소규모 남북협력 거점 개발전략이 바람직함
- 남북관계 경색 및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른 대북제재 면제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우선적 추진이 필요함

● 북한의 산업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분야	접경 지역 특화 산업	북한 산업 정책	북한 경제 개발구
스마트 6차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d Gold(우뭇가사리) 사업 스마트팜 혁신단지 꽃게 종자 연구/생산 시설 첨단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 라이스(Rice)밸리 조성 곤충산업 테마파크 가축 종자/질병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업은 식량난 해결과 외화획득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 담당 김정은 시대 수산생산 증산정책 표방 주민들의 영양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 강조 어선 건조사업, 양식장 개발이 중점 협력 아이템 해양산업(예, 우뭇가사리) 농업, 해양 종자산업 관심 농업생산인프라 구축 필요, 스마트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어랑농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웅진군 마합도(우뭇가사리)
첨단 미래기술 융합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K-뷰티 테크노파크 건립 사업 강화교동평화산업 단지 상용전기자동차 클러스터 ICT 융복합 로봇·공장자동화산업 클러스터 만화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가구산업 디자인/ 마케팅지원센터 해양바이오 벤처창업보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제조업 생산 및 투자가 확대되어 원부자재, 산업용 기계 등의 수요 발생(ICT 제조업) 김정은 집권 이후 제조업 역량 강화 국산화 정책, 과학기술중시정책에 따른 수용증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공업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송림수출가공구 와오도수출가공구
섬유패션 지식융합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유 패션 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조성 신소재개발/연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유 패션 산업은 식품가공업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 경공업(의류공장 424개, 2017년 기준) 개성공업지구 연계 및 활용 김정은 시기 패션의류산업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남경제개발구(방직) 흥남공업개발구(화학섬유) 해산경제개발구(방직)
미래관광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양·생태레저 클러스터 조성 도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내수면 마리아나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원산갈마, 삼지연 등) 대북제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 ‘9·19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사항으로 ‘동해관 광공동특구’ 조성 북한 당국의 생태관광 중요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온성섬관광개발구 무봉국제관광특구 청수관광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

- 변화한 북한 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수요에 대한 제고
 - 대부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들이 북한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시됨
 - 남북관계 경색 및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중단되었던 약 10여 년의 기간에도 북한의 경제 및 산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 김정은 시기 변화한 북한의 경제 및 산업, 북한 수요 능력을 고려하여 특화 산업과 연계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북한의 농수산물식품 산업은 식량난 해결과 외화획득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며 따라 수산 분야의 ‘RED GOLD 사업’, 농업 분야의 ‘첨단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 설립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고 북한의 농수산물식품 산업 기반 조성에 주요한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북한은 2015년에 대규모 시설원예를 위한 장천남새(채소) 전문 협동농장을 건설하고

지역별 협동농장에서 시설원예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스마트팜은 북한에서도 수용성이 큰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북한의 제조업 생산 및 투자가 확대되어 원부자재, 산업용 기계 등의 부문에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건설자재, 건설기계, 엔지니어링 등 건설과 관련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망과 상업금융과 관련된 서비스업 관련 수요가 존재함
- 섬유 패션 산업은 주민 소비품 공급 증대 정책과 더불어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등 주요 섬유공업 공장의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기타 산업 대비 생산기반 및 기술 수준이 양호하여 기존 생산설비의 개보수 및 현대화 추진, 기술향상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은 대북제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관광 산업을 외화획득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생태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생태와 해양을 접목한 관광 산업 분야의 남북교류 협력 확대가 예상됨
- 따라서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포함하여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계획들은 추후 북한의 수용 능력과 협의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함

● 첫째, 지자체 전담조직의 구성,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남북관계 경색 및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남북교류 협력 재개를 대비한 여건 조성 및 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함
- 각 지자체별로 남북교류 협력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지자체 내 담당 공무원의 잦은 부서 이동은 담당 인력의 추진업무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경력 단절로 인한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등 불안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전담인력의 임기보장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함

● 둘째, 북한의 수용력 분석 및 수용력 제고 방안 마련을 통한 협력 가능성과 효율성 증대

- 과거와 같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신뢰를 만들어나가는 한편 수용력 확대를 위한 북한 내 기반 조성지원 사업의 우선 추진, 시장화 촉진 지원 위주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예성강-김포/강화 호시무역’을 제안함
- 남북 간 호시무역은 남북관계 경색 및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접경 지역의 허가된 제한적인 범위(금액, 품목 등) 내에서 접경 지역 주민 간 거래행위를 의미함

-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호시무역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점차적으로 남북 주민 간 접촉면을 확대해 나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육상 지역에 군사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해상 접경 지역의 접근성이 용이한 측면이 있음
 - 현재 북한 접경 지역의 경우 특별한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지원 및 협력 차원에서 생활필수 품목에 대한 중국의 호시무역과 같은 변경무역 추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예성강-김포/강화 호시무역’은 기존 남북이 합의했던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접경 지역 간 남북교류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남북 주민 간 잦은 접촉을 통해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음
- 셋째, 대북제재 면제 가능한 사업의 검토 및 발굴을 통한 점진적·단계적 접근
-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 협력의 대안적 추진방식, 기획 중인 사업의 새로운 경로 발굴이 필요함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당 분야, 품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북제재 면제 승인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남북교류 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대북 투자 리스크를 고려해 규모와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북한이 ‘방역 및 보건 의료분야 협력’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 밖에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한 ‘산림협력’, ‘도로연결’, ‘관광 협력’ 등도 우선적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임

2.8 접경 지역 법·제도 규제 개선방안

-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특화 산업 도입을 통한 규제의 부분적·일시적 허용 추진
- 접경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수도권규제, 군사규제, 환경규제 등의 완화가 가능하다면 규제 해소를 위한 최상의 개선방안이 되겠지만, 실제로 접경 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3대 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은 법률상 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
 - 그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와 다양한 법적 논의와 절차를 거치는 동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특화 산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 지자체별 중복규제를 축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접

경 지역 특화 산업 추진을 가로막는 3대 규제 완화에 대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접경 지역 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을 통해 특화 산업에 한정된 산업 단지, 클러스터 조성 등이 허용될 수 있도록 부분적·일시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매우 시급함

- 수도권외의 중복규제, 접경 지역 전반에 시행되고 있는 군사 및 환경규제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적 접근은 접경 지역의 특화 산업과 관련된 특정 산업에 한정 시켜 진행하고, 접경 지역 내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특별한 목적으로만 규제개혁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타 지역과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또한, 포지티브(positive) 규제시스템(사전규제-사후허용 방식)의 네거티브(negative) 방식(사전허용-사후규제)으로의 전환을 통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접경 지역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및 역할 강화

- 접경 지역 지원 사업을 평가하는 ‘접경 지역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접경 지역 지원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접경 지역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및 역할 강화를 통해 부처별로 진행되는 예산집행 및 규제 관련 논의를 위원회로 이관하여 체계적인 사업구상을 계획하는 한편 관리·감독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해당 규제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함
-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중복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을 위한 창구의 역할 모색이 가능하며 행정부처와의 종합적 논의가 용이함
- 이런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10대 규제개선 TF’ 조직은 접경 지역 특화 산업의 규제를 해소 및 완화할 수 조치로써 긍정적으로 평가됨
- 따라서 범정부 ‘10대 규제개선 TF’ 내 접경 지역 특화 산업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 차원의 ‘접경 지역 특화 산업 규제 위원회(가칭)’의 설립을 추진해야 함
- 이를 통해 접경 지역 특화 산업의 규제 샌드박스 우선 상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TF 내 접경 지역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가주도의 개발 방안 마련

-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접경 지역 주민들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나설 때임
- 미군 공여지 활용, 군부대이전지 활용 등 개발 방안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에 둘러싸여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지자체의 경우 재정 및 인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주도의 개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따라서 정부 내 산하기관으로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자원 마련, 개발 방안 마련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

3 연구의 한계

- 남북교류 협력 상황의 가변성, 접경 지역의 규제 및 제약에 따라 특화사업과 남북교류 협력 사업 발굴에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논리적이며 타당성에 입각하여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제안을 모두 다 수용하기는 불가능하였음
- 또한, 기존 유사한 연구보고서가 부재한 관계로 보고서 간 상호 비교나 벤치마킹 없이,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정보수집 등을 통해 새롭게 논리를 개발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완성도가 다소 미흡할 수 있으나, 이는 후속 연구에 의해 채워지기를 기대함
-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접경 지역 지자체의 모든 산업육성과 남북교류 협력을 다 대변할 수 없음을 인지 바라며, 여러 측면에서 지자체 단독사업으로 혹은 타 부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들과 병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거나, 본 연구보고서상의 특화사업이 타 분야의 발전을 자극하여 파급효과로 확산되길 기대함
- 접경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자체별 특화 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관광 분야를 제외하고는 2개 이상의 지자체 간 연계된 클러스터나 합동 교류 협력 사업에 방점을 두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지역별 그룹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을 향후 과제로 남겨둠
- 본 연구보고서의 목적과 방향에 충실함에 따라, 철도, 도로, 항만 등 접경 지역 기반산업에 대하여 발전전략이나 상세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할 주제로 남겨둠
- 접경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브랜드화, 접경 지역 인식과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 등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연구도 후속 과제로 필요함
- 접경 지역 특화 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본 연구에서 특화에 집중함으로써 스마트 6차산업 분야에서 경기도가 다소 소외되고,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분야에서 인천시와 강원도가 다소 소외되는 듯한 현상이 야기되나,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성과 시너지효과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군별 역점 특화 산업에서 지자체별 특화사업을 집중 열거 및 정리하였음

<참고문헌>

기초조사 분야

- 강원도, 민선7기 강원비전 및 발전전략, 2018
- 강원연구원, 강원 비전 2040, 2017
- 강원연구원, 강원도 R&D 역량 혁신적 제고 방안, 2019
- 강원연구원, 강원도 남북교류의 성찰과 새로운 모색, 2018
- 경기개발연구원, 2012~2020 경기도종합계획, 2012
- 경기개발연구원, 접경 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접경 지역 지원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2013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 북동부 과학기술기반 신성장 동력산업 선정 및 육성전략, 2015.12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9 경기도 과학기술통계집, 2019.6
- 경기연구원, 경기도 남북교류 기본구상과 전략, 2019.8
- 경기연구원,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015
- 경기연구원, 민선7기 경기 북부 발전 방향, 2018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국내외 지역 공공연구 조직 분포 및 현황 조사연구, 2015.12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 균형 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2019 균형 발전지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반도평화포럼, 남북지역상생을 통한 한반도 균형 발전 방안 토론회, 한반도 균형 발전과 남북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2018.5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 평화협력 시대 균형 발전을 위한 접경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2019.5
-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사, 2019
- 국토연구원,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I, 2018
- 국토연구원, 접경 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6
- 국토연구원,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4차산업혁명시대의 국토종합계획, 2018.3
- 국토연구원, 통일대비 남북 접경 지역 국토이용 구상, 2017
- 국토연구원, 통일대비 남북접경 지역 국토이용 구상: 남북협력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2017
- 김재한, 강원도 접경 지역 발전방안 연구, 2014
- 김포시, 2020년 김포도시기본계획 변경, 2015.6
- 대한민국정부,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8
- 대한민국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19
- 동북지방통계청, CEO 및 지역정책 결정자를 위한 강원지역의 주요 통계지표, 2017.7
- 산업연구원, 저성장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과 혁신을 통한 혁신주도 지역성장 전략, 2018
- 산업연구원,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과 실행방안, 2016.12
- 서울행정학회, DMZ 일원의 환경친화적 관리방안, 2008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제4차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 2018.11
- 인천광역시,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15
- 인천광역시,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 2018
- 인천연구원,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지방정부의 과제, 2019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0차 저출산·고령화포럼 자료집, 2019
- 지역발전위원회, 문재인정부 국가 균형 발전 비전과 전략, 2018.2
- 통계청, 2018년 하반기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019.4
- 통계청,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2019.8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통일부, 접경 지역 현황, 2013
- 통일연구원, DMZ 총람 -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2011

통일연구원,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2018
 통일연구원,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 방향, 201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2018.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지역발전지수, 2018.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8년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 201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맞춤형 통계현황
 한국은행강원본부, 강원도의 성장촉진형 산업구조와 효율적 투자시스템 구축 방안, 2013
 한국은행강원본부·경기본부, 접경 지역의 특성별 유형 구분과 경기도와 강원도의 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 20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접경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DMZ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운영방안, 20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개발 제한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2016
 한반도발전연구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 및 국가지원방안 연구, 2013.10
 행정안전부, 접경 지역 관련 통계, 2013
 행정안전부, 접경 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2019
 행정안전부, 접경 지역 발전종합계획, 2011
 환경부, DMZ 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09

스마트 6차산업 분야

강원도, 2019년 친환경농업과 도비지원사업, 2019
 강원도, 강원도 수열 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2017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 미래산업, 2013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 식물자원의 보전 및 활용 전략, 2012
 강원연구원,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 2019
 강원연구원, 강원도 종자산업 육성방안, 2014
 강원연구원, 2019 강원도 통계핸드북, 2019
 강원연구원, 평화지역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2019
 겐트대학교, 한반도 공동 해양 글로벌 프로젝트, 2020
 경기개발연구원, 5대 서비스산업의 경기도 신성장 동력화 방안, 2012
 경기연구원,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 기본구상과 전략 연구, 2018
 국제입법조사처, 북한의 식량·에너지 수급 현황과 시사점
 대한민국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
 이일영, 개성공단 폐쇄 이후의 한반도 경제, 2016
 통계청, 2019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2019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도의 성장촉진 산업구조와 효율적 투자시스템 구축 방안, 2013

첨단 미래기술융합산업 분야

BNEF, Electric Vehicle Outlook 2017
 Kotra, 2020 드론 주요시장 보고서, 2019
 Kotra, 글로벌 화장품산업백서, 2018
 강원도 종합계획(2012~2020)
 강원연구원,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 이모빌리티산업, 추진성과와 차별화전략, 2019
 경기도, 뷰티산업진흥센터 기구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201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포시 대표사업 발굴을 위한 산업 현황 조사·분석 연구, 2019.8
 경기연구원, 경기도 뷰티산업육성방안 연구, 2017

고양시, 고양영상문화단지 기본복합 및 타당성 검토, 2019.8.8.
 고양시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방안 수립연구, 2018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드론 기술 및 시장동향 보고서, 2019.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017.9
 관계부처합동, K-뷰티 미래화장품산업 육성방안, 2019.12.5
 관계부처합동,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2019.8.5
 관계부처합동,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안), 2017.12
 관계부처합동,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2019.5.22.
 관계부처합동, 혁신성장 동력 추진 계획(안), 2017.12.22.
 관계부처합동, 혁신형 중견기업 비전 2280, 2018.2.5.
 국방기술품질원, 국방 비무기체계 종합발전방안 연구, 2011.9
 김성필, 드론산업동향 및 ICT융합이 여는 미래, 2019.11.6.
 산업연구원, 산업경제, 2017.5
 산업연구원, 산업경제, 2019.11
 산업연구원, 산업경제, 2019.5
 산업연구원, 신용합 시대 유망 신산업의 국내 성장역량 분석과 과제, 2018.12.7
 산업연구원, 한국제조업의 4차산업혁명 대응실태 특징과 시사점, 2017.12
 산업통상자원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2017.12.18.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소비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성 수립, 2018.5
 산업통상자원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2019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별 바이오헬스산업 특화 육성전략과 정책제언, 2018.3.30
 서울연구원, 친환경차 보급동향과 서울시 정책방향, 2017.12
 신산업 민관협의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2016. 12.21
 춘천시, 춘천시 에너지 기본계획, 2019.1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2016년 22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화장품 수출경쟁력 분석 및 K-Beauty 시사점, 2019.3.2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 리포트, 2019.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화장품산업분석보고서, 2019.11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스마트공장구축활성화방안, 201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세계 바이오의약품 산업동향 및 전망, 2019.7.22
 한국에너지공단, 2040년 전기자동차 시장 전망, 2017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만화산업백서, 2019.6.28.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방송영상산업백서, 2019.4.30.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애니메이션산업백서, 2019.6.28.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 동력, 어떻게 찾을 것인가, 2018.10.12.

섬유패션 지식융합산업 분야

McKinsey Apparel · Fashion & Luxury Group, The apparel sourcing caravan's next stop: Digitization, 2017
 MK패션산업발전협회, 동대문 Made in Korea 패션 해외 유통체계 기반 구축사업, 지식경제부2010년 지역연구산업육성사업, 2010.04.12.
 강원연구원, 평화지역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정책메모 784호, 2019.10
 경기개발연구원, 개성공단과 경기 북부지역 연계발전방안 연구, 2007.9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경기 북부 섬유 패션 산업 발전계획, 2019.10.16.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글로벌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계획, 2018.08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지속 가능한 고용생태계조성, 2020.01
 경기도인적 자원개발위원회, 2017년 경기도지역 정기간력 및 훈련 수급조사 보고서, 2017
 경기연구원, 통일경제특구, 경기도조성방안은?, 2018.08.29.
 고용노동부, 2019년 섬유제조·패션산업의 인력현황보고서, 2019.12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9 섬유제조·패션산업 인력현황보고서, 2019.1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반도 평화협력 시대 균형 발전을 위한 접경 지역 활성화 방안연구, 2019
 국토연구원, 경기 북부-접경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발전구상과 실천방안, 2018.12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경협 활성화와 UN의 대북제재 문제점 해소방안, 2019.10
 산업자원부, 2015 섬유·의류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2015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산업 재도약 발전전략, 2017.08.11.
 산업통상자원부, 섬유 패션 산업 활력제고방안, 2019.06.26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마켓트렌드2019하반기, 2019.12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 스마트 앵커프로젝트의 봉제산업 스마트 협업모델 개발, 2018.12
 서울시립대학교, 2019 한반도 미래도시협력네트워크포럼, 2019.05.16.
 손양국·오성진, 합성섬유의 리사이클, 섬유기술과 산업12(3), 2008
 유성훈·전용완·이종혁·심지현·박성민, 섬유·패션산업의 재활용제품 기술동향, 섬유기술과 산업23(3),
 이일영, 개성공단 패쇄 이후의 한반도 경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0호, 2016
 패션네트워크융합연구원, 패션봉제미래전략 워킹그룹-제조프로세스 재편방향 및 정책과제, 2019.12
 패션비즈, 11월호
 포천시, 니트산업글로벌 경쟁시스템개발(안), 2019.09
 포천시, 섬유산업리사이클폴리에스터(rPET) 재활용센터 구축/운영 기획안, 2019.1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역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최근 동향 및 이슈, 2012.1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패션·IT융합기술의 현황 및 확산 발전 전략, PD ISSUE REPORT MARCH, 2012
 한국섬유마케팅센터, 미주시장동향과 유럽섬유패션시장 동향, 특화섬유정보 530호, 2019.11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산업에 부는 리사이클 바람, 2019.12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패션기업의 새로운 필수요소: 지속 가능한 소싱, 2020.01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섬유패션 챌린지센터 구축사업, 2019.10.1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의류업의 4차산업 혁명, 2017

미래관광 산업분야

(사)접경 지역미래발전연구소, 평화접경 지역 100년 심포지엄, 2019.07.26
 KDI, KDI북한 경제리뷰, 2018
 강민조,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2018
 강원대학교(황수환), 강원지역 'DMZ 평화의 길'에 대한 평화학적 의미, 2019.06.29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 DMZ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2006.12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 산업 첨단화의 연결고리, 플라즈마, 2011
 강원연구원, 양구군 자연치유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2019
 경기개발연구원,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관광 개발을 위한 연구, 2008.09
 경기개발연구원, 파주시 중장기발전계획, 2014
 경기도,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 계획, 2016
 경기연구원, 고양시 지역발전전략 연구, 2018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 산업 현황분석, 2018.12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 평화협력 시대 균형 발전을 위한 접경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2019
 국립수목원, 평화와 생명의 DMZ, 2017.07.27.

국토연구,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의 관점을 통해 본 DMZ 접경 지역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 2018.09
 국토연구원, 동서독 접경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 지역의 협력과제, 2019.06.24
 김포시, 김포북부권 종합발전계획, 2018.3
 김홍배·박종필·이미주, 접경 지역의 특성별 유형 구분과 경기도와 강원도의 협력을 통한 경제활성화 전략, 2015
 동두천시, 동두천시 중장기발전계획, 2018
 백석대학교(이응규), DMZ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2018.12.28
 백석대학교(이응규), DMZ의 지속 가능한 평화발전 이용과 발전방안, 2019.06.29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글로벌 웹툰 창작 센터 구축을 통한 만화도시 기본 계획 수립, 2016.12
 이견직·김성은, 강원도 스마트 헬스케어 추진 전략 연구, 2018.07
 이응규·장현중, 접경 지역 치유관광콘텐츠로서의 도보 여행길 개발방안, 2019
 철원군, 2030 철원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17.5
 통계청, 2019년 2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2019
 한국관광공사, 미래지향 신규 융복합 관광 산업 발굴 및 사회화 방안 수립 연구, 2014.11
 한국관광연구학회, 한국관광의 협력과 공생의 초협력을 위한 접경 지역의 역할 연구, 2018.0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16.12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 2018.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DMZ 통일을 여는길」 거점센터 운영방안, 2017.11
 한반도발전연구원(김영봉),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방안, 2019.06.29.
 한양대 산학협력단, 고양시 접경 지역 발전전략, 2013

남북교류 협력 분야

고양시, 2020 고양 평화통일특별시 추진 구체화 방안 연구, 2012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 평화협력 시대 균형 발전을 위한 접경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2019
 국회예산정책처, 북한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2019
 국토연구원, 통일대비 남북 접경 지역 국토이용 연구 구상: 남북협력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2017
 국토연구원,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2018
 경기도, 경기도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지원 사업, 2018
 경기도, 내부자료, 2018
 경기연구원, 중국 변경무역제도 연구, 2019
 경기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의 현황과 과제, 2018.9.4.
 경기연구원,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 기본구상과 전략 연구, 2018
 경기연구원,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2018
 경기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방안, 2011
 남북물류포럼, 새 남북협력 패러다임으로 여는 한반도 경제 공동체, 2019.10.14.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대동강의 기적 실현을 위한 기업의 북한 투자 전략, 2019.10.14.
 리기성, 지식경제 시대와 새 세기 산업혁명, 2019
 로동신문
 민주연구원,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 추진 방향, 2018.10
 북한연구학회·산업연구원·LH, 북한 산업입지 전략과 경제특구 협력방안, 2019.9.6.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경협 활성화와 UN의 대북제재 문제점 해소방안, 2019.10.29.
 산업연구원,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 2018
 산업연구원,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과 실행방안, 2016
 산업연구원,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본 산업정책 및 주요 산업·기업 변화 실태, 2015
 인천시, 인천시-갯마을대학교 남북 평화 벨트 구축사업 토론회 개최 계획, 20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문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2018
 통일연구원,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 방향, 2019
 통계청, 2019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9
 평화도시연구소, 고양시와 북한 내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연구, 20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 협력 필요, 2018.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북한 해양 접경 지역 공동 활용방안, 20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해연안 접경 지역 남북 협력관리 방안, 2003
 한반도 미래도시협력네트워크포럼, Peace, Planning, and Person, 2019
 켄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한반도 공동 해양 글로벌 프로젝트, 2020.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관광 산업, 전력산업, 환경보호 산업발전방식, 지적재산 분야, 2019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김정은 집권 이후 농업정책 및 농업생산기반 변화, 2019
 KDB산업은행, 북한 경제개발구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19
 KDB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2015

규제 분야

고양시, 고양시 접경 지역 발전전략, 2014
 국방부, 국방개혁 2.0 기본방향 수립, 2018
 국토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 전략, 2019
 국토연구원,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1, 2018
 국제섬유신문, 리사이클섬유에 사할 걸렸다, 2019.11.18.
 강원도, 강원도 핵심규제 합리적인 개선방안, 2015
 강원연구원, 최근 군사시설 규제완화 조치와 강원도, 2019
 강원연구원, 남북한 평화체제 추진에 따른 규제 갈등에 관한 연구, 2018
 강원연구원, 강원도 핵심규제 진단과 전략적 추진과제, 2016
 강원연구원, 강원도 접경 지역 유류 군용지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 철원군을 중심으로, 2012
 강한구, 접경 지역 관련 「군사시설보호법」의 이해와 토지이용방안, 2017
 김갑삼·최민섭, 통일대비 남북 접경 지역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2019
 김종래, 경기 북부 접경 지역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2005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2019.9.17.
 경기도, 경기도 규제지도, 2019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패키지사업 '20년 표준사업 계획서, 2019.
 경기연구원,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2019
 경기연구원, 수도권 균형 발전과 난개발 정비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피해지역 지원방안 연구, 2018
 경기연구원, 접경 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접경 지역 지원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2013
 경기연구원, 자연보전권역 환경규제 개선방안 연구, 2010
 경기연구원,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분석과 대안제시, 2007
 신광식·김행조, 통일을 대비한 접경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5
 이옥희, 북중접경 지역: 전환기 북중 접경 지역의 도시네트워크, 2011
 인천시·경기도·강원도, 접경 지역 규제 개선 건의 사항, 2019
 정진원 외, 인천광역시 접경 지역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2016
 행정자치부, 접경 지역 발전종합계획 연구 용역, 2017

접경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육성 및
남북교류 협력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발행일 2020. 2

발행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주관연구기관

한국생산성본부